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사회학박사학위논문

# 전환기 성인 이행 경로의 변화

## - 1970-1984년 코호트의 교육·노동·가족이력 -

2020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이 상 직

# 전환기 성인 이행 경로의 변화

## - 1970-1984년 코호트의 교육·노동·가족이력 -

지도교수 권 현 지

이 논문을 사회학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이 상 직

이상직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7월

위 원 장 _____박 경 숙_____(인)
부위원장 _____김 홍 중_____(인)
위 원 _____장 지 연_____(인)
위 원 _____최 율_____(인)
위 원 _____권 현 지_____(인)

이 논문을 쓰면서 서울대학교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문초록>

# 전환기 성인 이행 경로의 변화
## – 1970-1984년 코호트의 교육·노동·가족이력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이 상 직

2000년대에 한국 사회에서 주목받은 집단이 '청년'이다. 관점과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관련 논의의 문제의식을 종합하면 성인으로 이행하는 시점이 지체되고 그 과정이 흔들린다는 인식으로 수렴된다. 이에 대한 진단으로 세대론과 계층론이 제안되었다. 88만원 세대론으로 대표되는 세대론에서는 출생 시점이 강조된다. 경제위기 국면에 사회에 나와 과거와 같이 순조롭게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수저론'으로 대표되는 계층론에서는 출생 시점에 따른 '세대 간 차이'보다 계층 지위에 따른 '세대 내 차이'가 강조된다. 청년 모두가 열악한 처지에 있지는 않다는 점을, 기성세대 모두가 우위에 있지는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계층 지위가 더욱 공고해지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관점은 이행의 지체 현상을 간명하게 설명한다. 그러나 두 시각 모두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계층론에서 말하듯이 모두가 어려워진 것은 아니며, 세대론에서 말하듯 계층 지위가 어떠하든 출생 시점에 따른 차이는 분명히 있다. 중요한 것은 '계층 지위의 영향력이 출생 시점에 따라 어떻게 달랐는가', 또는 '출생 시점의 영향력이 계층 지위에 따라 어떻게 달랐는가' 등 출생 시점의 차이와 계층 지위의 차이가 상호작용하는 맥락을 규명하는 일이다. 또 성별에 따른 이행 경로의 차이가 출생 시점에 따라, 계층 지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규명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이 연구는 성인기 이행을 규정하는 성별과 계층 지위가 출생 시점에 따라 어떻게 맞물리는지 분석한다.

연구 질문은 세 가지다. 첫째, 성인 이행을 구성하는 교육·노동·가족이력의 측면에 주된 변화가 나타난 시점이 어디인가. 출생 시점의 규정력을 밝히는 작업이다. 둘째, 성별이나 계층과 같은 성인 이행 경로를 규정하는 주요 차원의 영향력은 어떻게 변했는가? 이력 변화의 성격을 확인하기 위해 젠더와 계층에 따른 이력 분화 양상을 확인한다. 셋째, 마지막으로 각 지점의 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관통하는 변화의 성

격은 무엇인가?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성인기 이행을 규정하는 제도적 맥락(학교-노동시장 연계, 가족 제도)과 역사적 배경(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과 관련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코호트별 차이와 코호트 내 차이를 동시에 확인하는 전략을 취했다. 코호트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 대상을 1970-1984년생으로 설정했다. 이들이 성인기로 이행한 시기가 한국 사회가 가장 급격하게 변화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또한 신뢰할만한 자료로 성인 이행 경로의 주요 분화 양상을 볼 수 있는 코호트이기 때문이다. 그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1970-1984년생을 3년 단위 하위 코호트(1970-1972년, 1973-1975년, 1976-1978년, 1979-1981년, 1982-1984년)로 구분해 비교했다. 기준은 교육제도를 떠나고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시점이고, 준거는 1997년 경제위기다. 변화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설정한 축이 젠더와 가족배경으로 측정한 계층이다. 세 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 라이프코스 연구 시각과 성인기 이행 국면이다. 성인기 이행이라는 개념을 차용해 이 국면을 규정하는 주요 지점들에서의 이행 양상을 확인하고, 그 성격을 확인한다. 구체적으로는 1970-1984년생이 20-30대 초중반(1990-2010년대 중반)에 밟은 성인 이행 이력이다. 이행 이력은 학교를 졸업한 이래 84개월간 밟은 '노동이력'과 만 28-33세에 밟은 '가족이력'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1-20차)를 활용했다. 직업력 자료로 노동이력을 구성했고, 가구자료로 가족이력을 구성했다. 노동이력을 졸업 후 7년(84개월)으로 구성한 것이나 가족이력을 28-33세로 구성한 것은, 상당 부분 자료의 제약에 따른 것으로, 1970-84년생을 일관된 시점에서 비교할 수 있는 최대 길이이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70-1984년생이 교육제도 측면에서 겪은 경험은 고학력화와 학교를 떠나는 시점의 연장으로 요약된다. 1970-1972년생은 고졸자 비중이 50%였지만, 1982-1984년생은 대졸자 비중이 50%가 되었다. 이런 변화에서 주된 변곡점이 되는 집단은 1970년대 중후반생 여성이었다. 변화 결과 남녀의 경험이 유사해졌다. 가족배경에 따른 교육기회 차이는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남녀 차이가 드러나는 지점도 있다. 학교를 떠나는 시점 또한 연장은 남성이 주도했고, 이는 주로 저학력자 남성의 교육 경험의 불안성에 기인한다. 계층 효과 면에서도 남녀 차이가 있다. 고등학교 졸업 여부에서는 남녀 모두 가족배경 효과가 약해졌으나 전문대졸 이상에서는 차이가 나타난다. 대학 진학에서 남성은 가족배경 효과가 약해지는 추이가, 여성은 효과가 강해지는 추이가 나타난다. 특히 전문대졸 여성의 지위 하락이 가장 뚜렷한 변화로 나타난다. 졸업 시점의 경우 경제위기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한 1979-1981년생부터 가족배경 효과가 졸업 지연과 관계를 맺고 있다.

둘째, 노동시장 제도 측면에서는 이 시기 중요한 현상은 임금노동이력의 증가와 함께 중소기업 비정규직 이력의 증가다. 여기에서도 주된 변화는 1976-1978년생에서부터 나타난다. 이 변화는 여러 하위 변화로 구성되어 있다. 남성은 자영업 이력 감소가, 여성은 퇴장 이력 감소가 주된 변화다. 주된 것은 여성 저학력자의 퇴장 이력 감소와 고학력자의 '비취업 지속형' 이력 감소다. 대신 늘어난 것은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형'의 증가와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속형'의 증가다. 전자는 남성 고학력자에게서 나타나고, 후자는 여성 저학력자에게서 나타났다. 교육 수준별 차이는 커졌고 성별 차이는 줄어들었다. 그 결과 과거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서나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에 속할 가능성에서 나타났던 남녀 차이가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형'에 속할 가능성에서의 차이로 이동했다. 교육 수준의 차이도 지점이 이동했을 뿐 일정 부분 유지되고 있다. 가족배경의 영향력은 전반적으로 커졌다. 1970-1972년생만 해도 가족배경의 영향력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최근 코호트에서는 가족배경이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속형'에 속할 가능성은 낮춘다. 여성은 다소 다르다. 가족배경은 '비취업 지속형'에 속할 가능성을 낮추고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형에 속할 가능성을 높인다.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가족배경은 대기업 이력에 속할 가능성을 낮춘다.

셋째, 가족이행 국면에서는 20대 후반-30대 초반에 배우자/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이력 비중이 줄었다. 남성의 변화 정도가 커서 남녀 차이는 전반적으로 줄었다. 그러면서 남녀 차이가 나타나는 지점이 이동했다. 1970년대 초반생의 경우 남성은 여성보다 부모와 함께 지내거나 혼자 지낼 가능성이 높고 '배우자+자녀'와 함께 지낼 가능성은 낮았다. 그러나 1982-1984년생의 경우 남성은 여성과 비교했을 때 결혼으로 이행할 가능성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측면에서는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게 되었다. 남성은 교육 수준별 차이가 줄었다. 여성은 저학력자가 일찍 결혼하고 고학력자가 늦게 결혼하는 교육 수준별 차이가 유지된다. 노동이력에서는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으로 대표되는 상층과 나머지 층의 차이가 커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여성도 이른 이행 이력에서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지만 늦은 이행 이력에서는 일관된 패턴이 나타나지 않는다. 가족배경의 영향력에서는 남녀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남성은 이 시기에 혼인 이력에 속할 가능성에서 가족배경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반면 여성은 모든 이력 유형에서 가족배경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들 결과를 종합해 내린, 연구 질문 세 가지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 노동, 가족이행 국면에서 나타난 변화의 시점은 1970년대 중반생이다. 이들 집단을 기점으로 그 전과 후로 구분된다. 졸업이 늦어졌고, 노동시장 지위가 불안정해졌으며, 결혼을 늦게 하게 되었다. 다만, 1976-1978년생 자체의 구별되는 위치성도

있고, 그런 점에서 변화의 성격은 단선적이지도, 단절적이지도 않다. 둘째, 변화 양상은 대체로 젠더 차원에서의 수렴 현상과 계층 차원에서의 지속·강화 현상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계층 효과의 변화는 불평등의 약화·강화 차원으로가 아니라 지점 이동 차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셋째, 각 이행 국면에서 나타난 변화의 시점과 양상은 교육과 노동, 가족 제도의 연계가 약한 상황에서 경제위기의 충격이 그 약한 고리를 끊어버린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급격한 교육 팽창에 따른 형식적 기회 평등화가 노동시장의 위계화 추이와 만나면서 생긴 결과가 성인 이행기의 연장과 분화다. 늦은 졸업과 불안정한 노동지위가 결혼 시점의 지연과 계층화를 낳았다. 그러나 이것을 꼭 계층화 현상으로만 볼 수는 없다. 특히 여기서 가족배경의 영향력이 커진 것이 남성에 한정되는 이유는 성역할 규범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가족이행 경로에서의 변화는 여성의 계층화를 억제하는 측면과 남성의 계층화를 촉진하는 측면이 모두 있다.

연구의 함의는 세 가지이다.

첫째, 동일 집단이 각각 교육, 노동, 결혼 영역에서 밟은 이력을 기술함으로써 각 영역에 한정된 기존 연구의 관심을 각 영역의 제도적 연계로 돌리게 한다. 이 연구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 수준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라는 질문보다는 '교육 기회 불평등 수준의 변화가 노동시장 진입 기회의 불평등 추이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주목한다. 이런 맥락에서 세대론적 시각과 계층론적 시각을 좀 더 구체화했다. 출생시점에 따른 차이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모든 요인을 압도하는 것은 아니다. 모두의 불안정화로 요약하기에는 복잡한 변화가 진행되었다. 젠더 차이가 약해지고, 계층 차이가 뚜렷해졌다. 동시에 젠더와 계층의 맞물리는 지점이 계속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청년의 위치를 세대론이나 계층론으로 이분화해서 보기보다는 둘의 맞물림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인기 이행에 관한 규범을 재고하게 한다. 오늘날 청년을 보는 시각을 규정하는 성인기 이행 규범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 이행의 본질이 '독립'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성립하기 어렵다. 그것은 사회적 지위 재생산을 뜻할 뿐 독립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종속된 재생산 전략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전략을 택하지 못하는 이들은 일찌감치 '독립'하거나 취직이나 결혼을 미룬 채 '미분리'된 채 살아간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패러사이트 싱글'보다는 '패러사이트 커플'이 오늘날의 이행 관계를 더 적절하게 표현한다. 몇 가지 사건의 비경험을 이행의 유예로 보는 시각도 유지되기 어렵다. 한편, '이행=독립'이라는 전제에서 한국에서도 성인 이행 경로의 변화를 탈표준화 경향으로 기술하고는 한다. 그러나 이행의 지연은 성인 이행 경로가 더욱 표준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경쟁의 범위

확대와 경쟁의 차원 획일화를 뜻하고 이런 점에서 성인 이행 과정에서 가족배경이 영향을 미칠 여지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성별과 계층의 맞물림이 향후 어떤 긴장을 낳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 사회 불평등의 성격을 진단하고 해법을 도출하는 관점을 재고하게 한다. 최근 불평등 이슈에 대한 관심이 크다.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삶의 기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에도 기존 연구들은 여전히 특정 영역으로, 특정 측면으로 한정해 형식적 기회 평등의 수준(변화)만을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는 특정 영역에서의 형식적 기회 평등이 특정 영역에서의 불평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불평등 성격의 변화를 평균적인 수준 변화로 보지 않고 기회구조의 배열로 보면 다양한 '병목'(bottleneck) 간의 관계에 주목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불평등 문제를 '불평등의 심화냐 완화냐'라는 일차원적인 평가에서 나아가 제도 간 연계로 바라보게 한다.

주제어: 라이프코스, 성인기 이행, 교육이력, 노동이력, 가족이력, 세대, 계층, 젠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배열 분석
학번: 2013-30045

# 목 차

**제1장 서론 ····· 1**

1. 한국 사회에서 '청년' 문제 ····· 1
2. 세대와 계층, 그리고 생애 ····· 4
   1) 세대론 ····· 5
   2) 계층론 ····· 7
3. 연구의 목적과 의의 ····· 10
4. 논문 구성 ····· 13

**제2장 연구의 시각과 방법 ····· 15**

1. 라이프코스 연구의 시각 ····· 15
   1) 개인의 시간과 사회의 시간 ····· 15
   2) 성인기 이행 경로의 변화 ····· 19
   3) 불평등의 성격 변화 ····· 22
   4) 국가 단위의 맥락, 그리고 한국 사례 ····· 25
2. 연구 대상과 분석틀 ····· 30
   1) 1970-1984년생의 자리 ····· 30
   2) 교육·노동·가족이력으로 본 성인 이행 경로 ····· 32
3. 자료와 분석 방법 ····· 38
   1)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20차 ····· 38
   2) 분석 방법: 코호트 분석 ····· 39
   3) 분석 기법: 배열 분석 ····· 48
4. 소결 ····· 54

**제3장 교육이행 국면의 연장과 탈성별화 ····· 57**

1. 교육 경험의 변화: 고등교육 보편화와 졸업 시점 지연 ····· 57
   1) 교육제도 변화: 고등교육 팽창과 중등교육의 일반교육화 ····· 57
   2) 1970-1984년생의 경험 1: 고학력화 ····· 65
   3) 1970-1984년생의 경험 2: 졸업 시점 지연과 다양화 ····· 69
2. 고등교육 보편화의 맥락 ····· 76

1) 구조적 조건: 비계급사회와 보편적 교육 열망 ····· 77
2) 공급 측면: '조립형 공업화' 전략과 분배 정책으로서의 교육 ····· 78
3) 수요 측면: 근대 가족의 형성과 경제위기라는 맥락 ····· 83
3. 계층화 양상과 경쟁 성격의 변화 ····· 89
1) 형식적 평등화와 실질적 위계화 ····· 89
2) 지위 상승 경쟁에서 지위 하락 방지 경쟁으로 ····· 94
3) 1970-1984년생의 경험 ····· 96
4. 소결 ····· 105

**제4장 노동이행 국면의 표준화와 위계화 ····· 107**

1. 노동시장의 구조 변동 ····· 107
1) 1987년 이전 고용체제: 노동시장 분절의 형성 ····· 109
2) 1987년 고용체제: 노동시장 분절의 전면화 ····· 110
3) 경제위기와 고용체제의 변화: 신자유주의적 분절 구조 ····· 113
2. 성인 이행기 노동이력의 변화 ····· 116
1) 근대적 노동시장의 미발달과 불분명한 이행 경계 ····· 119
2) 근대적 노동시장의 발달과 '성인 이행기'의 형성 ····· 122
3) 근대적 노동시장의 전환과 '성인 이행기'의 변화 ····· 126
3. 1970-1984년생의 노동이력 ····· 129
1) 노동이력 구성 ····· 130
2) 노동이력의 변화 ····· 141
3) 가족배경 영향력 변화로 본 계층화의 양상 ····· 160
4. 소결 ····· 163

**제5장 가족이행 국면의 시장화와 이중화 ····· 166**

1. 가족이행 패턴의 역사적 변화 ····· 166
1) 1960-1970년대 중반: 분가와 결혼의 결합 ····· 168
2) 197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분가와 결혼 관계의 다양화 ····· 169
3) 1990년대 중반-2010년대: 분가와 결혼의 분리 ····· 172
2. 1970-1984년생의 가족이력 ····· 175
1) 가족이력 구성 ····· 175

2) 가족이력 변화 ····· 180
3) 가족이력 유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193
3. 가족이력 변화의 맥락 ····· 199
1) 성별 효과 ····· 199
2) 교육 수준 효과 ····· 201
3) 노동이력 유형 효과 ····· 204
4) 가족배경 효과 ····· 207
4. 소결 ····· 211

**제6장 결론 ····· 214**

1. 요약 ····· 215
1) 성별화된 보편 이행에서 탈성별화된 특수 이행으로 ····· 215
2) 급격한 형식적 기회 균등화의 결과 ····· 218
2. 함의 ····· 222
1) 라이프코스 연구 시각의 필요성 ····· 222
2) 성인 이행 규범 재고의 필요성 ····· 223
3) 사회 불평등에 대한 관점 전환의 필요성 ····· 224

<부록 1> 가족배경 변수 구성 절차 ····· 228
<부록 2> 노동지위 변수 구성 절차 ····· 234
<부록 3> 직업력 데이터셋을 활용한 시퀀스 자료 조직 절차 ····· 254
<부록 4> 가족지위 변수 구성 절차 ····· 258

**참고문헌 ····· 265**

**Abstract ····· 290**

# 표 차례

<표 2-1> 출생 코호트별 제도적 시간표 ····· 42
<표 2-2> 분석 사례 수 ····· 44
<표 2-3> 분석 변수의 분포 ····· 46
<표 2-4> 배열 간 거리 계산 작업 비용 체제 ····· 51
<표 2-5> 본문에서 활용한 회귀분석 모형 개요 ····· 52

<표 3-1> 각 교육 수준에 대한 선형확률모형 결과(성별*코호트) ····· 67
<표 3-2> 졸업 연령에 대한 회귀분석(OLS) 결과(성별*코호트) ····· 72
<표 3-3> 각 교육 수준에 대한 선형확률모형 결과(성별, 코호트*가족배경) ····· 97
<표 3-4> 졸업 연령에 대한 회귀분석(OLS) 결과(성별*가족배경) ····· 101
<표 3-5> 졸업 연령에 대한 회귀분석(OLS) 결과(성별, 코호트*가족배경) ····· 103

<표 4-1> 노동지위 부여 결과 ····· 130
<표 4-2> 노동이력 유형별 비중(성별) ····· 135
<표 4-3> 노동이력 유형별 노동지위 분포(단위: 개월) ····· 139
<표 4-4> 각 노동이력 유형에 대한 선형확률모형 결과(성별*코호트) ····· 153
<표 4-5> 각 노동이력 유형에 대한 선형확률모형 결과(남성, 교육수준*코호트) ··· 156
<표 4-6> 각 노동이력 유형에 대한 선형확률모형 결과(여성, 교육수준*코호트) ··· 157
<표 4-7> 각 노동이력 유형에 대한 선형확률모형 결과(성별, 코호트*가족배경) ··· 161

<표 5-1> 가족지위 구성 틀 ····· 176
<표 5-2> 연령별 가족지위 분포 ····· 176
<표 5-3> 가족이력 유형별 비중(성별) ····· 179
<표 5-4> 가족이력 유형에 대한 선형확률모형 결과(남성) ····· 195
<표 5-5> 가족이력 유형에 대한 선형확률모형 결과(여성) ····· 197
<표 5-6> 각 가족이력 유형에 대한 선형확률모형 결과(성별*코호트) ····· 200
<표 5-7> 각 가족이력 유형에 대한 선형확률모형 결과(성별, 교육수준*코호트) ··· 202
<표 5-8> 각 가족이력 유형에 대한 선형확률모형(성별, 노동이력유형*코호트) ····· 205
<표 5-9> 각 가족이력 유형에 대한 선형확률모형(성별, 가족배경*코호트) ····· 208

# 그림 차례

<그림 2-1> 분석틀: 성인 이행 경로의 구조와 가족배경 영향력 ····· 33
<그림 2-2> 분석 개요 ····· 47

<그림 3-1> 학교급별 취학률(1980-2015) ····· 58
<그림 3-2> 대학 유형별 성별 진학률(1970-2015) ····· 60
<그림 3-3> 전문대학생 비중, 실업계 고등학생 비중(단위: %) ····· 61
<그림 3-4> 고등학교 유형별 대학 진학률(성별, 1980-2015) ····· 63
<그림 3-5> 학교급별 졸업자 수(1952-2014)(단위: 천명) ····· 64
<그림 3-6> 1970-84년생의 교육 수준 분포(성별) ····· 66
<그림 3-7> 각 교육 수준에 속할 기대 확률 변화(성별) ····· 68
<그림 3-8> 교육 수준별 평균 졸업 연령 변화(성별) ····· 70
<그림 3-9> 졸업 연령 기댓값 변화(성별) ····· 73
<그림 3-10> 졸업 연령 기댓값 변화(교육 수준별) ····· 74
<그림 3-11> 각 교육 수준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가족배경 한계 효과 ····· 98
<그림 3-12> 각 교육 수준에 속할 기대 확률 변화(가족배경별) ····· 100
<그림 3-13> 가족배경 수준에 따른 기대 졸업 연령(성별) ····· 102
<그림 3-14> 기대 졸업 연령 변화(가족배경별) ····· 104

<그림 4-1> 학력별, 성별 임금 수준(1980-2017) ····· 110
<그림 4-2> 사업체 규모별 상용노동자 임금 수준(1980-2017) ····· 112
<그림 4-3> 임금노동자 내 비정규직 비중(2001-2018) ····· 113
<그림 4-4> 사업체 규모별 노동자 비중(1993-2005) ····· 114
<그림 4-5> 지니계수와 상대 빈곤율(1990-2016) ····· 116
<그림 4-6> 남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1980-2014) ····· 118
<그림 4-7>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1980-2014) ····· 118
<그림 4-8> 산업별 취업자 비중(1963-2008) ····· 120
<그림 4-9> 종사상지위별 비중(1963-2019) ····· 124
<그림 4-10> 고용형태별 비중(1989-2019) ····· 126
<그림 4-11>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1960-1980년대 코호트) ····· 128
<그림 4-12> 노동이력 구성 예 ····· 132

<그림 4-13> 노동이력의 연령대(성별·교육 수준별) ····· 133
<그림 4-14> 노동이력(성별) ····· 134
<그림 4-15> 노동이력 유형별 특징(이력 단위) ····· 137
<그림 4-16> 노동이력 유형별 특징(지위 단위) ····· 140
<그림 4-17> 노동지위 분포 변화(성별) ····· 141
<그림 4-18> 노동이력 유형별 비중 변화(성별) ····· 143
<그림 4-19> 노동지위별 비중 변화(성별·교육 수준별) ····· 146
<그림 4-20> 노동이력 유형 비중 변화(성별·교육 수준별) ····· 150
<그림 4-21> 각 노동이력 유형에 속할 기대 확률 변화(성별) ····· 155
<그림 4-22> 각 노동이력 유형에 속할 기대 확률 변화(교육 수준별) ····· 159
<그림 4-23> 각 노동이력 유형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가족배경 한계 효과 ····· 162

<그림 5-1> 코호트별 결혼이행 패턴(1921-1985) ····· 167
<그림 5-2> 연령대별 부모 비동거자 비중 추이(1980-2005) ····· 172
<그림 5-3> 가족이력(성별) ····· 178
<그림 5-4> 가족이력 유형별 특징(이력 단위) ····· 179
<그림 5-5> 가족지위별 비중 변화(성별) ····· 181
<그림 5-6> 가족이력 유형별 비중 변화(성별) ····· 183
<그림 5-7> 가족지위별 비중 변화(성별·교육 수준별) ····· 185
<그림 5-8> 가족이력 유형별 비중 변화(성별·교육 수준별) ····· 187
<그림 5-9> 노동이력 유형과 가족이력 유형의 관계(성별) ····· 189
<그림 5-10> 노동이력 유형별 결혼 이력 비중 변화(성별) ····· 192
<그림 5-11> 각 가족이력 유형에 속할 기대 확률(성별) ····· 201
<그림 5-12> 각 가족이력 유형에 속할 기대 확률(교육 수준별) ····· 203
<그림 5-13> 각 가족이력 유형에 속할 기대 확률(노동이력 유형별) ····· 206
<그림 5-14> 각 가족이력 유형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가족배경 한계 효과 ····· 209

# 제1장 서론

> 서서히 좁아지는 가치 체계가 존재해서 사람들을 가치 등급 질서에 편입시킬 수 있을 때만 능력주의가 온전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
> - 영(2020[1994]: 20)

## 1. 한국 사회에서 '청년' 문제

2000년대 이래 한국 사회에서 단연 주목받은 집단은 '청년'이다. 청년에 대한 관심은 이들이 성인으로 이행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배경으로 한다. 졸업, 취업, 결혼으로 이어지는 성인 이행 과정을 순탄하게 밟지 못한다는 인식이 커졌고, 이행하더라도 시점이 많이 늦추어졌다는 우려가 커졌다. 학교를 졸업하는 시점이 늦어지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점이 늦어졌으며, 결혼 시점이 늦어졌다는 것이다. 이행 지연의 징후는 대략 2000년대부터 나타났고, 이행 지연이 사회적인 주목을 받게 된 때는 2000년대 후반이었다.

이러한 경향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두 가지가 있다. 세대 간 불평등(세대 차이)에 주목하는 입장(우석훈·박권일, 2007; 이철승, 2019)과 세대 내 불평등(계층 차이)에 주목하는 입장이다(신광영, 2013). 세대론은 오늘날 청년이 과거 청년이 살던 세상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청년이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은 사회 구조적인 변화 때문이지만 일정 부분은 기성세대의 착취 때문이다. 계층론적 시각에서는 과거나 현재나 청년의 삶을 규정하는 것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이고 그 영향력이 최근에 커졌다고 주장한다. 나는 두 입장이 오늘날 청년의 위치와 그 함의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두 관점 모두 생애를 단위로 개인의 위치를 보지 않는다. 개인의 위치는 생애이력을 단위로 볼 때에 분명하게 파악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청년이 성인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형성된 생애 이력으로 청년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함의를 고찰한다. 1970-80년대에 태어난 한국인이 20-30대에 겪은 교육, 노동, 가족 경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청년의 성인 이행 경로의 변화 양상을 규명한다.

청년의 성인 이행 경로 변화라는 시각에서 해명되어야 할 것은 변화 시점이다. 세대론에서 말하는 청년은 포스트 '386세대'다. 2000년대 후반에 "88만원 세대"로 부각 되었던 이들은 1980년대생이었다. 386세대의 우위를 강조하면서 세대 불평등을 주장하는 세대론에서는 1970년대생까지 포함된다. 386세대와 이후 세대를 가르는 것

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할 시점에서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되고, 이 상황을 구별하는 계기는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다. 계층론에서도 경제위기가 강조된다. 경제위기 이후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계층의 규정력이 더욱 커졌고 그에 따라 낮은 계층의 청년이 이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세대론과 계층론 모두 변화의 시점에 대한 입장이 모호하다. 경제위기 전후가 질적으로 다른 것인지, 어느 정도 점진적인 변화인지 모호하다. 또한 경제위기 이후는 질적으로 같은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모호하다.

다음으로는 변화 내용이다. 두 관점 모두 평균적인 수준에서 변화를 기술한다. 세대론적 용어인 '삼포 세대'와 같은 말은 모두가 동일 경로의 어느 지점에 멈춰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러나 세대적 동질성의 실체가 모호하다. 계층론에서는 양극화를 말하는데 그것이 중간계층의 상층과 하층으로의 분화를 뜻하는 것인지, 중간계층의 전반적인 지위 하락을 뜻하는 것인지 모호하다. 담론 수준에서는 양극화를 강조하면서 소수의 상층을 제외한 다수의 동질성이 강조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즉 계층의 경계가 어디인지 모호하다. 미시적 실증 분석에서 계층 차이는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되어 탈역사적인 맥락에서 해석된다. 이러한 경향은 집합적 자료를 횡단면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로 강화되었다. 그것이 세대이든 계층이든 하위 집단 간의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변화의 함의에 대한 고찰이 약하다. 세대론은 출생 시점에 따른 구조적 위치 차이를 강조하면서도 결론에서는 기성세대의 양보나 청년 세대의 동원을 강조한다. 이런 세대 간 대립 구도 설정은 이미 많은 논자들에 의해 비판받았다(전상진, 2018; 김선기, 2019). 계층론에서 제시하는 함의도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는 원론적인 제언으로 그친다. 청년의 생애 변화가 한국 사회의 어떤 구조적, 제도적 특징과 연결되어 있으며, 하위 집단별로 생애 이력이 어떻게 분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는 기존 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특징에 따른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는 어떤 규범성을 전제한다. 오늘날 청년이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생산자이자 재생산자로서의 '성인'이 되지 못한다고 전제하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취직시키고, 결혼시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춘다. 현상 자체를 설명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논의는 적다. 방법론적 한계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주로 담론에 주목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세대론에서 나타나는 경향이다. 문화론적 접근의 대상은 사회경제적 위치가 아니라 언어로 표현되는 상징과 정체성이다. 정체성은 또래 관계로 구성된 동질적일 것일 가능성이 높다. 동년배의 "90%"(우석훈·박권일, 2007)이고, 동년배의 "99%"(최태섭, 2013)인 이들의 사회경제적 위치는 주목받지 않는다. 세대론

의 동질성 가정을 비판하는 논의에서도 이 지점은 철저하게 규명되지 않는다. 둘째, 20대에 주목한다는 것이다. 생애 궤적이 다르더라도 20대의 특정 시점에서 단면으로 끊어 보면, 동년배의 60-70%가 대학생인 상황에서, 위치의 다름을 포착하기 쉽지 않다. 셋째, 특정 생애 영역에서의 단일 시점에 주목한다는 것이다. 주로 계층론에서 발견되는 경향으로, 종속변수는 단일 사건의 이행 유무로 측정된다. 분석 시점은 특정 연도로 정해져 있다. 변수 간 관계의 역사적·제도적 맥락까지 고려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 연구는 주로 담론 수준에서 언급되는 청년 세대의 삶을 구체적인 이력으로 재구성해 그것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초점은 30대 중반까지를 포괄하는 성인기 이행 국면이다. 교육·노동·가족이력으로 구성되는 성인기 이행 국면은 한 사회의 사회제도가 짜이는 방식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다. 경제위기의 충격 이후 변화된 제도적·경제적 환경에서 단절성이 포착되더라도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생애 궤적은 연속적이다(이상직·김이선·권현지, 2018). 경제위기가 개인에게 미친 영향력은 이 시기를 서로 다른 시간적 맥락에서 관통한 사람들의 생애 이력에서 누적되고 조정되는 것으로 포착되고 이해될 필요가 있다.

연구 질문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어떤 변화가 언제부터 나타나는가? 성인 이행을 구성하는 교육, 노동, 가족 측면에서 주된 행태 변화가 나타난 시점(코호트)이 어디인가? 둘째, 성별이나 계층과 같은 성인 이행 경로를 규정하는 주요 차원의 영향력은 어떻게 변했는가? 셋째, 각 지점의 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관통하는 변화의 성격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연구는 1970-1984년 출생코호트(이하 '1970-84년생')의 성인 이행 이력에 주목한다. 이행 과정을 교육, 노동, 가족 등 특정 영역별로 보기보다 각 영역이 연결되는 맥락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교육, 노동, 가족이력이 종합적으로 구성하는 성인 이행 경로라는 맥락에서 불평등의 성격 변화를 해석하고자 한다.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이 연구는 1970-84년생을 3년 단위의 5개 출생코호트(1970-72년, 1973-75년, 1976-78년, 1979-81년, 1982-84년)로 구분해 비교한다. 또한 변화를 성별과 계층으로 구분해 살펴본다. 성별은 '속성' 차이를 드러내지만 더 중요하게는 각 코호트가 사회 변동과 만나는 타이밍을 구체화한다. 계층은 본인의 교육 수준과 출신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로 측정된다. 성인 이행 경로의 변화는 성인기 이행을 규정하는 제도적 맥락(교육, 노동, 가족 제도)과 역사적 배경(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에 비추어 해석한다.

이 연구는 한국의 청년이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이 길고, 또 그 과정에서 계층에 따른 차이가 부각되는 현상이 한국 사회가 형식적 평등을 급격하게 이룬 결과라

고 주장한다. 이행의 지연과 계층화는 절대적 의미에서의 물질적 조건의 악화나 게임에 참여하는 기회의 축소 등과 같은 불평등 심화의 결과가 아니다. 기회의 확대로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기회의 가치 체계가 단일한 것으로 수렴되면서 경쟁이 격화된 것이 이행의 지연과 계층화를 낳은 맥락이다. 영(2010[1994])의 표현을 빌리면, 그것은 한국 사회가 점차 능력주의 사회가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한국의 특수성이 있다면, 고등교육 보편화 추이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그 전환이 너무도 급격하게, 너무도 철저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사회적 맥락을 '학력사회'라는 프레임으로 규명한다.

이하에서는 기존 연구를 두 갈래 경향으로 개괄하고 각각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 연구의 위치를 자리매김한다.

## 2. 세대와 계층, 그리고 생애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후 '청년'은 대중적으로는 줄곧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것을 "신경제"(라이시, 2001[2000]: 14)라고 부르건, "유연한 자본주의"(세넷, 2001[1998]: 8)라고 부르건, "신자유주의"(하비, 2007[2006]; 장석준, 2011; 지주형, 2011)라고 부르건, 뭔가 크게 바뀐 것 같지만 그 내용과 함의가 뚜렷하지는 않은 사회 변동의 양상을 이들의 삶이 드러낸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심을 크게 촉발한 책이 『88만원 세대』(우석훈·박권일, 2007)였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2007년 당시 10대와 20대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제시하고, 그것을 불평등한 세대 관계로 설명했다.[1] 결론은 10-20대가 40-50대와의 관계에서 불

1) 그 전에도 1980년대생을 '세대'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수는 문화 측면에서의 규정(예: N세대, IP세대 등)이었고, 논조는 긍정적이었다(최샛별, 2018). 이러한 규정은 전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못했다.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이 집단에 속하는 이들도 그러한 규정을 의미 있는 범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최샛별, 2018). 최샛별의 연구에서 이 연령대가 가장 공감하는 범주 명칭은 '88만원 세대'였다. 논의의 등장 시점도 주목할 만하다. 청년 실업은 IMF 경제위기 직후부터 문제였다. 그러나 관심의 초점은 중장년 남성 가부장에게 맞추어졌다. 구조조정에 따른 남성 가부장의 실직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었기 때문이다(송제숙, 2016[2009]: 3-4장; 조순경, 1998). 경제위기에 따른 단기적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IMF 체제로부터 '졸업'했다고 선언한 2000년대 초(2000년 12월 4일에 김대중 대통령이 공식 발표했다)에 와서야 청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이들의 어려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88만원 세대』는 청년 세대의 위치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명료하게 자리 매겼다.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청년이 사회에 등장했다. 그 '청년'이 1980년대생이다. 1980년대생은 경제위기 이후의 세대론이 주목한 첫 번째 집단이었다.

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이었다. 이 책은 2000년대 중반 당시 20대였던 1980년대생의 사회적 위치를 경제적 측면에서 명료하게 제시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특수성을 드러내려고 했다.

이후 크게 두 갈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이 연구에서 세대론적 시각이라고 이름 붙인 연구들이다. 주로 문화적 측면에서 청년 세대에 고유한 특징을 포착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계층론적 시각이라고 이름붙인 연구들이다. '지위획득모형'을 차용해 주로 학교-노동시장 이행과 관련된 변수를 규명하는 작업들이 주를 이룬다. 청년 연구 지형에서 각 흐름은 '문화론'과 '이행론'으로 불리기도 한다(Furlong, Woodman and Wyn, 2011; MacDonald, 2011).

### 1) 세대론

세대론적 접근에서 강조하는 것은 과거와의 단절과 그로 인한 세대 간 긴장이다. 20대가 사회구조적 피해자, 세대 불균형의 피해자로 자리 매겨진 이래 이들의 피해자 위치는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88만원 세대"론과 "3포 세대"론[2]이 대표적이다. 이후 다양한 관점에서 청년을 규정하려는 작업이 이어졌다.[3]

이런 저런 글들이 새로운 모습을 더하면서 청년 집단의 다면성을 부각했지만, 청년 집단 내 하위 집단의 분포를 보여준 것은 아니었다. 『88만원 세대』 출간 시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개된 청년 담론의 양상을 검토한 이광석과 윤자형(2018)의 표현처럼, "인터넷상의 잉여이자 차별의 가해자인 청년들은, 따지고 보면 앞서 ≪88만원세대≫에서 이야기한 비정규직 노동자나 ≪아프니까 청춘이다≫에서 위로받던 청춘들과 전혀 다른 이들이 아니다. 그들은 어쩌면 동일자로서, 취업준비생이자 알바노동자이고 인터넷 잉여이고 열심히 자기계발을 하면서 자기보다 스펙이 딸리는 사

2) 「경향신문」 2011년 특집기사에서 나온 말이다("[복지국가를 말한다](1부)② 과부하 걸린 한국의 가족", 2011년 5월 11일자).

3) 곧이어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하나의 흐름을 형성한 자기계발서 출간의 연장선상에서 20대를 겨냥한 '위로'와 '치유' 논조의 책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김난도, 2010). 곧 이어 청년 당사자성을 내세워 기존의 '훈계'와 '위로' 담론 모두에 반박하는 글들이 나왔다(한윤형·최태섭·김정근, 2011). 당사자성을 강조하면서, 구조를 강조하면서도 변화의 책임은 청년 당사자에게 지우려는 세대론이든 열정으로 노력하라는 청년 낭만화론이든 사회 기득권 세력의 책임을 흐린다고 비판했다. '평범한' 이들의 구체적인 삶의 스토리를 드러냄으로써 '저항'도 '노력'도 할 수 없는 현실을 그려내거나, 그러한 현실에 대한 퇴행적, 보수적 반응을 문화 현상으로 읽어내는 시도도 등장했다(최태섭, 2013; 오찬호, 2013). 문제 설정의 틀을 '청년 세대론'에서 '한국 사회론'으로 확장한 시도도 지류를 형성했다(최태섭, 2013; 엄기호, 2014).

람을 무시하고 차이 짓는 같은 청년들일지도 모른다.”(p. 107)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측면에서의 단일성에 대한 가정, 즉 90%가 88만원이라는 전제에는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4)]

결국 청년세대론에서 청년은 매우 동질적인 집단으로 전제되지만, 그 동질성의 의미는 텅 빈 범주로 남겨져 있다(김선기, 2016: 55). 수많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매우 추상적인 존재이다. 이와 같은 규정은 일정 부분 문화론적 접근이 갖는 한계에서 비롯된다. 문화론적 접근의 대상은 사회경제적 위치가 아니라 언어로 표현되는 상징과 정체성이다. 정체성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데, 각자의 관계망은 또래 관계로 구성된 동질적일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기성세대와의 대당 관계로 정체성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자신과 다른 삶을 사는 또래의 모습은 실생활에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주류 담론 또한 ‘세대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일조한다. 이것이 말로 표현되고, 그러한 말들이 “세대 프레임”(전상진, 2018: 299)을 강화해 다시금 청년 내부에서, 또 사회 일반에서 세대 정체성을 강화한다. 그렇게 강화된 정체성이 ‘청년세대론’으로 제시된다. 동년배의 “90%”(우석훈·박권일, 2007)이고, 동년배의 “99%”(최태섭, 2013)인 이들의 사회경제적 위치는 글의 서두에서 배경으로만 제시된다. 세대론의 동질성 가정을 비판하는 논의에서도 이 지점은 철저하게 규명되지 않는다.[5)] 청년 세대는 다양한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할 뿐이다. 수도권-지방, 대학생-고졸자 정도의 구분만 제시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경향은 『88만원 세대』가 구축한 강력한 시각 규정력에 기인하지만, 청년세대론의 대상이 늘 ‘당시’ 20대로 한정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생애 궤적이 다르더

---

4) 최근에는 청년 세대 내 이질성에 주목하는 논의가 나온다. ‘지방대’ 출신 청년의 정서를 기술한 “‘복학왕’의 사회학”(최종렬, 2017)이 대표적이다. 최종렬은 수도권과 지방은 다르다면서, 신자유주의적 자기계발 담론이 지방대생에게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차이는 사회경제적 위치와 연결되지 않고 스타일로 연결된다. 그것은 “지방대생의 독특한 집단 스타일”(p. 286) 때문이다. “지방대생은 자기계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다보니 자기계발 담론을 공적 상징체계로서 잘 사용하지 않는다. 설사 사용한다 해도, 지방대에서 작동하고 있는 적당주의 집단 스타일이 자기계발이라는 집합표상을 걸러낸다. 자기계발은 수도권 대학생들이 하는 것이며, 설사 자기계발에 나선다 해도 적당하게 관여해야 하며, 그리고 자신이 자기계발하고 있는 사실을 남에게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면 안 된다. 이렇게 걸러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대생은 경쟁 밖에 자신을 위치 지운다. 둘째, 설사 경쟁에 뛰어든다 해도 느슨하게 한다. 셋째, 성찰적 겸연쩍음으로 경쟁 과정과 결과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는다.”(p. 288)

5) 사실 문화론적 시각에서는 사회경제적 위치를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 위치가 어떠하든 동일한 세대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설명해야 할 문화적 현상이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과제가 되기 때문이다.

라도 20대의 특정 시점에서 단면으로 끊어 보면, 동년배의 60-70%가 대학생인 상황에서, 위치의 다름을 포착하기 쉽지 않다. 이들의 라이프코스는 아직 분화되기 이전이다. 따라서 얼마나 같고 다른지를 확인하려면 라이프코스가 분화되는 30대 중후반까지 추적해야 한다. 하지만 청년 담론은 당시의 20대에만 주목한다.[6] 2010년 후반으로 오면서 1990년대생이 20대로 접어듦에 따라 논의의 관심도 1980년대생에서 1990년대생으로 옮겨갔다.[7] 1980년대생은 30대 중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세대론 밖으로 밀려났다. 청년이라고 부르기가 애매해졌다. 어떤 식으로든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그에 따라 사회적 위치도 분화하면서, 하나의 문제 집단으로서의 가시성도 약화되었다. 그에 따라 1980년대생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약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1990년대 생에 대한 논의가 이전 20대였던 1980년대 생에 대한 논의와 달라진 것도 아니다. 1990년대 생에 관한 이야기의 스토리라인 또한 '88만원 세대'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20대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바뀐 채 세대론이 반복되고 있다.

요약하면, 『88만원 세대』에서 촉발되어 지금까지 진화해 온 (청년)세대 담론에서 세대 간 관계와 세대 내 관계의 연결 고리는 모호하다. 이 고리를 규명하려면 '88만원 세대'의 사회경제적 이력 상의 다양성을 밝혀야 한다. 이 작업을 하려면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들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라이프코스라는 맥락에서 살펴봐야 한다. 다음으로 라이프코스가 분화되는 시기까지 분석의 폭을 넓혀야 한다.

### 2) 계층론

『88만원 세대』출간 이후 고조된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초점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로 모였다. 많은 연구들은 노동시장 참가를 설명하

---

6) 청년의 성인기 이행 과정에 관한 학술연구에서도 주된 대상은 20대이다. 정확히 말하면 20대 대학생이다. 일례로, 정민우·이나영(2011)은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비혼자 22명을 조사했는데, 30대는 3명에 불과하다. 정수남·권영인·박건·은기수(2012)는 20대 비혼자만 조사했다. 25명 중 20대 초반이 19명, 중반이 3명, 후반이 3명이다. 김은정(2015)도 20대 19명을 조사했다. 김영·황정미(2013)가 가장 폭넓게 조사(20대 중후반 13명, 30대 초중반 7명)했지만, 여기서도 30대 중반은 2명에 불과하다.

7) '90년대생'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것은 언론이다(예: "[다시 쓰는 인구론] 태어나니 '낀 세대' 1992년생을 구하라." 「경향신문」(2019년 1월 9일자)). 보통은 이들의 사회경제적 위치도 88만원 세대의 것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설정된다. 간혹 더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는 이들로 묘사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이들을 주인공으로 삼은 책이 출간되어 주목받았다(임홍택, 2018). 이 책 『90년생이 온다』에서 저자는 1990년대생을 '9급 공무원 세대'로 이름 붙였다.

는 전통적인 두 시각인 인적자본론과 노동시장 구조론의 연장선에서 이 문제에 접근했다. 왜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에 취직하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에 전자는 그 이유를 청년의 인적자본에서 찾고, 후자는 노동시장 구조에서 찾지만 상대적으로 청년 집단 내의 차이, 더 정확히 말하자면, 위계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먼저 개인의 인적 속성 및 경험 차이와 노동시장 진입 여부 및 과정, 지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피는 연구들이 첫 번째 흐름을 이룬다(김기헌, 2003; 길혜지·최윤미, 2014; 박미희·홍백의, 2014; 김진주·조민효, 2016). 이들 연구는 사회학에서의 '지위획득모형'(Blau and Duncan, 1967)이나 경제학에서의 '인적자본'(Becker, 1962)론의 관점에 서 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자리에) 취직하는가'가 주된 질문이고, 이 질문에서 '어떤'에 해당하는, 즉 "대졸자 노동시장 성과 결정 요인"(박환보·김성식, 2011; 길혜지·최윤미, 2014)이라고 불리는 변수를 찾는 작업이 주된 목표이다. 성과는 보통 취직여부, (첫 일자리의) 고용지위, 임금으로 측정된다.[8] 자료로는 주로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나 「청년패널조사」가 활용된다. 결혼이나 출산 등 다른 이행에 대한 관심도 커졌지만, 이행 여부를 분석하는 모형의 기본 얼개는 앞의 것과 다르지 않다.

이들 연구는 담론 연구가 제시하는 집합표상으로 포착되기 어려운 청년 세대 내의 이질성을 드러낸다. 모형 자체가 계층 범주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질성은 매우 추상적인 형태로 제시된다(Bertaux and Thompson, 1997: 10). 예컨대, "대졸자의 직업지위와 임금수준은 남성일수록, 집안이 부유할수록, 대학 성적이 좋을수록, 그리고 서울 4년제 대학일수록 높"(박환보·김성식, 2011: 77)다는 식이다.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상식적이다. 이런 식의 진술이 추상적인 이유는 단일 시점 연구이기 때문이다. 개인 수준에서 볼 때 종속변수는 '첫 일자리'가 되었건 결혼이 되었건 단일 사건의 이행 유무로 측정(Abbott, 2016)된다. 시점이 고정되어 있다. 사례 전체로 볼 때도 시점이 특정 연도로 정해져 있다. 변수 간 관계의 역사적, 제도적 맥락까지 고려한 연구는 많지 않다(Kertzer, 1983: 143-144; 이를 고려한 예외 사례로는 김기헌, 2003; 장상수, 2008; 정이환·김영미·권현지, 2012 참조).[9] 한편, 특정 생애

---

8) 성과 결정 요인, 즉 독립변수는 크게 개인 요인과 학교 요인으로 구분해 측정한다. 개인 수준에서 검토하는 변수는 성별, 연령, 부모 소득, 부모 학력, 재수여부, 편입여부, 자격취득, 학자금대출여부, 전공(계열), 어학연수, 학점, 졸업 전 노동경험(인턴), 구직 경로, 취업준비 노력(취업 사교육) 등이다. 학교 수준에서 검토하는 변수는 (대졸자로 한정하면) 국공립 여부, 대학 서열, 명성, 소재지, 규모, 취업지원서비스 유무 등이다.

9) 인적자본론을 한 단계 발전시킨 모델이 지위획득모형이다. 요인들 간 인과관계를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다. 그러나 인적자본이 사회구성원 전체에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현상과 그 효과는 제도적 맥락 내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변수 간 관계

영역(측면)에서의 단일 이행만을 보다보니 일방향적인 변수 관계가 설정된다. 정규직 지위가 결혼 유무에 미치는 영향이나 결혼 유무가 노동시장 퇴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하는 모형이 전형적이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두 측면의 이행이 영향을 주고받기 마련(계봉오·김영미, 2014; Aisenbrey and Fasang, 2017; Sirniö, Kauppinen, and Martikainen., 2017)이고, 개인은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하기 마련이다.

노동시장의 구조에 주목하는 연구의 질문은 정규직/비정규직으로 구분한 노동시장의 구조가 어떠하며, 특히 청년층 노동시장의 경우 구조론적 특징이 어떠한가로 요약된다. 고용형태, 직종, 기업규모 등의 범주별로 속성 평균값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를 살피는 식으로 이들 문제를 기술한다(김영미·한준, 2008; 류기락, 2009; 정이환, 2007, 2013b). 그러나 이쪽 연구 또한 장기간의 추이를 검토하는 경우가 드물고, 무엇보다 개인이 노동시장 구조에서 어떠한 이력을 밟는지, 그 결과 체험하는 불평등의 양상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말해 주는 바가 많지 않다.

『88만원 세대』가 청년 세대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선명하게 부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연구들은 청년 세대의 사회경제적 위치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확인하고 그것을 세대 관계로 분석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기보다 담론 분석 기반의 세대론으로 향했다. 청년세대에 대한 특정 이미지를 긍정하든 부정하든 세대론의 맥락에서 논의가 계속되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청년=실업, 비정규직' 도식을 전제로 "노동시장 성과 결정 요인"을 탐색하는 계량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다. 청년의 90%가 88만원이라는 대전제는 분석 대상이 되지 못했다.

종합하면, 두 갈래 연구 모두에서 공통된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둘 다 정태적이고 무맥락적이라는 것이다. 문화론에 기반한 청년 세대론은 청년의 여러 특징을 담론분석을 통해 구성했지만 청년 내부의 이질성 자체(김석호·주윤정·성연주·김지애·김은지·이상규·김홍중, 2017)에 주목하지는 않았다. 사회경제적 위치가 아닌 담론을 분석했기 때문이다. 청년 집단의 동질성에 주목하면서 단절을 강조해 (세대를 거쳐) 지속되는 이질성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 결과 원래 드러내려고 했던 세대적 특징 또한 적절하게 규명하지 못했다. 계층론적 접근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청년 집단 내 차

---

의 맥락을 제도적, 구조적 환경의 맥락에서 보려는 시각이 나왔다. 사회 불평등(이동) 연구의 맥락에서 '신구조주의'로 불리는 시각이다(Kerckhoff, 1995; 장상수, 2001). 송호근은 '노동시장 사회학'의 형성 배경을 "새로운 구조주의"(1990: 7) 조류의 등장 맥락에서 소개하면서 그 특징을 네 가지로 요약한 바 있다. ① 인적자본의 불균등 배분 현상 자체를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②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시장의 운동 법칙에 영향을 미치는 다기화된 제반 구조에 주목한다. ③ 구조적 요인의 결과적 측면보다 '과정적 작용양상'에 집중한다. ④ 거시-미시 연계와 인접학문간 통합을 지향한다.

이를 드러냈지만 그 차이는 탈역사적이다. 이행론은 '인적자본'과 '노동시장 성과'의 관계를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그것을 변수 간 추상적 관계 이상으로 해석하지는 못했다. 주요 생애 사건을 따로 떼어 내 분석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변수 간 관계를 해석할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두 흐름 모두 지속되는 가운데 변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림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가 라이프코스적인 관점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짧게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부터, 길게는 1990년대 초반부터 그 전과는 다른 사회가 되었다는 인식이 한국 사회에서 이제는 통념으로 자리 잡았고, 학계에서도 관련 연구는 무수히 많다. 그렇지만 관련 연구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체제론적 연구를 제외하면, 정작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한 그림은 제대로 제시된 것이 없다. 그 이유 하나는 이른바 세대 차이와 세대 간 차이를 통합적으로 규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개인의 생애를 단위로 한 코호트 비교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필요한 것은 추상화된 문화론과 구조론을 이어 줄 "사회경제적 원천"에 대한 역사적이고, 동태적인 분석(권현지, 2018)이다. 이 연구는 1970-80년대생으로 구획할 수 있는 전환기적 코호트의 성인기 이행 이력을 프리즘 삼아 세대론과 계층론이라는 지난 30년의 한국인의 라이프코스 변동을 규정하는 두 가지 거대 대립 서사를 종합하려 한다. 이 작업은 『88만원 세대』에서 처음 부각된, 경제위기 이후에 성인으로 이행한 청년층의 이행 이력 분화 양상을 현재 시점에서 규명하고, 이에 근거해 이들 집단의 사회적 의미를, 1997년 경제위기 이래 지난 20년의 한국 사회 변동의 성격을 규명해보려는 시도다.

## 3. 연구의 목적과 의의

세대론과 계층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 연구는 성인 이행 국면에서 형성된 생애이력을 구성하고 비교한다. 성인기 이행 이력이다. 여기서 '성인기 이행'은 기술적(記述的) 개념으로, 이 연구는 특정 이행을 '성인기' 진입의 전제로 보거나 특정 이력을 '이행'의 전형으로 보지 않는다. 어떤 단계를 어떤 식으로 거쳐야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성인기로 전환했다고 말할 수 없고, 이행 과정의 구체적인 모습과 의미도 시공간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이다(Wyn and White, 1997: 95). '이행'이라는 단어로 이 연구가 가정하는 최소한의 규범성이나 전형성은 이 시기 이력을 포착하기 위한 틀의 의미(이병희·장지연·윤자영·성재민·안선영, 2010)만 갖는다.

개인의 생애 관점에서 20-30대 초중반[10]을 아우르는 이 시기는 삶의 궤적이 정립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이자 원가족에서 나오는 시기로, 인생의 그 어느 시기보다 역할 변화가 자주, 결정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맥락에서 더 중요한 의미는 이 시기가 사회 변동을 가장 잘 포착할 수 있는 "전략적 지점"(Buchmann, 1989: 1)이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 시기가 열려 있기 때문에 사회 변동의 충격이 더욱 직접적으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그렇고, 그러한 충격에 그 어느 생애 국면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왜냐하면 생애 여러 영역에서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생애의 '궤적'이 형성되는 "문턱"(Buchmann, 1989: 1)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성인기 이행 국면은 개인 단위로도 이후 생애를 규정하는 결정적 국면이 되며, 사회 단위로도 사회 변동의 성격을 규정하는 결정적 국면이 된다. 세대나 코호트 연구가 청년기에 주목하는 것도 이 시기가 가진 이중적 규정력 때문이다(만하임, 2013[1928]; Ryder, 1965: 848).

구체적으로 성인 이행 국면의 이력은 20-30대에 생산영역과 재생산영역에서 어떤 지위에 있었는가의 역할 배열로 구성된다.[11]

이력의 차이는 태어난 시점(코호트)과 태어났을 당시의 사회적 위치(성별, 가족배경)의 조합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청년' 집단 자체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청년의 '이행' 경로에 주목한다. 연구 대상은 현재의 20대인 1990년대생이 아니라 과거의 20대인 1970-80년대생이다. 이들의 성인 이행 이력이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배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 연구는 네 가지 측면에서 청년에 대한 기존의 일반적인 접근법과 다르다. 첫

---

10) 이 시기를 20대-30대 초중반으로 설정한 것은 한국의 맥락을 반영한 것이다. 서구에서는 성인기 이행 국면이라고 할 때 10대 후반-20대 중반을 보는 경우도 많다. 미국 맥락에서 18-25세 구간을 "성인 모색기"(emerging adulthood)로 설정한 Arnett(2000)의 논의가 대표적이다.

11) 통념에서 청년에서 성인으로의 이행은 크게 세 단계를 거치면서 완결된다(Hogan, 1981: 1; 안선영·김희진, 2012: 85, 90-91). 첫째, 공식 교육 이수다. 둘째, 취직이다. 셋째, 결혼이다(출산을 포함할 수도 있다). 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은 성인이 될 공식적인 교육을 마쳤다는 것을 뜻한다. 처음으로 정규 일자리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생산적인,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사회의 성원이 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결혼했다는 것은 기존의 가족에서부터 새로운 생식가족을 형성했다는, 재생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성원으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세 가지 이행이 맞물려 한 사람(상당 기간 남자로 여겨지기는 했지만)이 청년에서 성인으로, 다시 말해 가족과 사회에 의존하는 사람에서 사회의 생산과 재생산 기능을 수행하는 어른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근대적 라이프코스를 조직하는 핵심 제도는 가족과 노동시장이다.

째, 취업이나 결혼, 출산과 같이 특정 단일 시점에서 측정되는 단일 사건 이행이 아니라 다시점에 걸쳐 전개되는 상태 이력을 분석 단위로 삼는다. 둘째, 노동이력과 가족이력을 함께 본다. 많은 연구들이 노동사회학과 가족사회학이라는 분과 영역의 경계에 따라 노동이력과 가족이력을 따로 분석한다. 서로를 참조할 때에도 정규직 여부나 결혼 여부와 같이 변수 하나로 측정된 정보를 고려할 뿐이다. 셋째, 이 연구 또한 많은 연구들과 같이 분석 수준이 개인이기는 하지만 부모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넷째, 후기 근대의 현대 사회와 IMF 경제위기 이후의 한국 사회라는 시공간에 주목해 생애이력이 형성되는 사회적·역사적 맥락을 고민한다.

요약하면, '라이프코스 연구'의 시각이다. 역사와 제도의 맥락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의 관계의 맥락에서, 개인이 나이 들면서 겪게 되는 사건이나 경험에서 발견되는 패턴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시도다. 특정한 삶의 방식과 인식을 생애라는 궤적상에서 해석하고, 그가 맺은 관계에서 해석하고, 그가 속한 시공간에서 해석하려는 시각이다. 사람들은 여러 겹의 시간이 중첩된 맥락에서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한 선택들이 모여 삶의 국면을 이루고, 삶의 경로를 형성한다. 그것이 다시 선택의 맥락이 된다. 역사의 시간, 사회의 시간, 가족의 시간의 중첩 속에서 각자 자신의 시간을 만들어 간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 1970-8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의 시간을 성인 이행기라는 개념으로 포착하고, 그 구조를 드러내며, 이를 여러 겹의 시간에서 해석한다.

이 작업은 크게 세 가지 의의가 있다. 첫째, 이 작업은 생산영역과 재생산영역의 변동 맥락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의 성격을 해명하는 작업으로 의미가 있다.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후 몇 년의 간격을 두고 생산영역(노동시장), 재생산영역(가족)에서 심대한 변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이 커졌다. 그러나 각 영역에서 전개된 변화가 사람들의 생애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분명한 그림이 없다. 이 연구는 이행 국면의 변동을 계층적 맥락에서 해석하려는 연구의 관점을 받아들이되 변화의 양상을 최근 코호트로까지 확장해 검토한다. 대표성 있는 자료로 계층 차이가 코호트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과 그 과정에서 젠더 관계가 재편되는 양상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 성인기 이행 이력 변동에서 드러나는 남녀 차이를 일관된 틀로 분석한다.

둘째, 이 연구는 세대론에서 주목받지 못한 1970-80년대생을 조명한다는 의미도 있다. 대략 10년 주기로 각 출생 코호트가 20대가 될 무렵 한국 사회는 사회로 진입하는 새로운 집단을 나름대로 규정해보려 했다. 이 논의에서 1970년대생과 1980년대생은 각각 비정치적 의미로 이름이 붙은 첫 번째 코호트다. 1970년대생이 20대였을 무렵인 1990년대 초중반에 이들은 '신세대'나 'X세대'로 불렸다(박재흥, 2005). 1980년대생이 20대였을 2000년대 후반에 이들은 '88만원 세대'(우석훈·박권일, 2007)나 '삼포 세대'로 불렸다. 각각 문화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으로 이름 붙여진 것이다. 그

러나 당시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면 이들을 한 '세대'로 보고, 그 성격을 해명하는 작업은 거의 없었다. 최근 세대론이 다시 주목받는 상황에서도 이들은 1960년대생과 1990년대생 사이에 끼어 있는 주변적 위치로 언급된다(김정훈·심나리·김항기, 2019; 이철승, 2019). 1960년대생에 착취당하는 힘없는 집단으로, 새롭게 사회에 진입하는 1990년대생이 가진 '개성'을 갖추지 못한 집단으로 그려진다. 이 연구는 1970-80년대생의 "낀 세대"로서의 위치성이 한국 사회 변동의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창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거꾸로 사회변동의 성격을 통해서 이들의 정체성을 구성해 볼 수도 있다. 그 위치성이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보고, 그 위치성이 이들 집단을 한 '세대'로 형성할 가능성을 살피는 작업은 기존 세대론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앞의 두 가지 의미의 결합으로 이 연구는 비교사회론적 시각에서 지난 30년의 한국 사회 변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해명하는 작업으로서의 의미도 있다. 근대 사회가 전환기에 있다는 인식은 1980년대 초반부터 서구 학계를 시작으로 꾸준히 나왔다. 신자유주의, 후기 근대, 성찰적 근대, 위험사회 등의 표현들이 대표적인 진단이다. 전환기에 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된 집단이 청년이었다. 근대 사회에서 청년은 늘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이번의 관심은 새로웠다. '상품 생산과 인간 재생산이라는, 산업사회를 지탱하는 두 기능을 청년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전제했기 때문이다. 서구의 경험 연구에서도 보통 1970년대 출생자가 이러한 변화를 드러내는 집단으로 언급된다. 정규교육을 마치고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결혼하고 출산하는 이른바 표준적 이행 시나리오가 해체된다는 인식을 경험 자료로 확인하는 작업들이다. 이들 연구를 참고하면, 청년 문제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님을 알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청년을 사회 문제가 아닌 사회학적 문제로 본다. 사회 위기의 징후를 드러내는 집단이 아니라 한 사회가 조직되는 방식의 변동을 관찰할 수 있는 집단으로 본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면, 청년이 결혼을 못하는 것도, 안하는 것도 아니다. 다르게 (안)하는 것이다. 전자가 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규범을 전제로 한 닫힌 진단이라면, 후자는 변화 그 자체에 주목하고 그 함의를 고민하는 열린 진단이다.

## 4. 논문 구성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연구의 시각과 대상, 분석 자료와 방법을 소개한다. 먼저, 라이프코스

연구의 시각을 소개하고, 성인 이행 경로의 변화를 규명한 국내외 주요 연구를 리뷰해 연구의 기본 틀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연구의 분석 대상인 1970-1984년 코호트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들의 성인 이행 경로를 규명할 분석틀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소개하고 주요 변수를 정의한다. 배열 분석 기법을 포함한 주요 분석 기법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1970-84년생의 성인기 이행 국면을 규정한 핵심 제도인 교육제도의 변화를 검토한다. 1970-84년생이 겪은 교육제도 변화 양상을 검토해 이들의 교육이행 패턴을 확인할 것이다. 다음으로, 고등교육 팽창의 요인과 맥락을 검토하면서 교육기회의 확대가 교육 경쟁의 성격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수준과 졸업 연령 두 측면에서 가족배경 효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남녀로 구분해 확인한다.

4장에서는 경제위기가 학교-노동시장 연계와 노동시장 구조에 미친 영향을 배경으로 1970-84년생의 노동이력을 비교한다. 노동이력 유형별 비중이 코호트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해 학교-노동시장 이행 국면의 성격 변화를 검토한다. 이어서 각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교육 수준별로, 또 가족배경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해 학교-노동시장 이행 경로에서의 계층화 양상을 확인한다.

5장에서는 성인기 이행 국면을 규정하는 또 다른 차원인 가족이력의 변화를 확인한다. 고학력화와 재학기간 연장으로 학교에 머무르는 기간이 연장되고 임금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가운데 노동이력이 불안정해지는 추이가 가족이행 경로의 성격 변화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1970-84년생이 28-33세에 밟은 가족이력을 확인한다. 남녀 차이의 평균과 코호트별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교육수순별 차이의 평균과 코호트별 변화 양상을 확인한다. 이어서 노동이력 유형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가족배경의 영향력을 확인한다.

결론인 6장에서는 3-5장의 분석 결과에 기초해 교육-노동시장-가족제도가 연계되는 방식의 변화와 그와 연동해 성인기 이행 경로가 변화한 방식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함의를 도출한다.

# 제2장 연구의 시각과 방법

이 장에서는 연구의 시각과 대상,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한다. 1절에서는 라이프코스 연구의 시각을 소개하고, 성인 이행 경로의 변화를 규명한 국내외 주요 연구를 검토해 연구의 기본 틀을 도출한다. 주요 연구들은 1970년대생부터를 변화를 담지한 코호트로 본다. 변화의 성격에 대해서는 '탈표준화', '개인화' 등의 전망이 제시되었으나 경험 연구 결과는 한 마디로 요약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하다. 최근에는 변화를 기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변화가 초래한 불평등의 양상을 규명하는 작업으로 초점이 확대되고 있다. 즉 변화의 평균적 추이를 기술하는 것에서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생애 영역별로, 하위 집단별로 구별해 확인하는 것으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 주요 축은 젠더와 계층이다. 최근에는 변화 추이에서의 하위집단별 차이가 한 국가의 역사적, 제도적 맥락과 어떻게 관련 있는지를 규명하는 제도적 연구도 활발하다. 이들 연구에 비추면 한국 사례의 특성은 변화의 압축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2절에서는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인 1970-84년생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들의 성인 이행 경로를 규명할 분석틀을 제시한다. 교육·노동·가족이행 영역에서 이행의 패턴이 하위 코호트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보는 것이 기본틀이다. 이어서 변화에 대한 가설도 제시한다. 3절에서는 이 연구의 주된 자료인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소개해고, 주요 변수를 정의한다. 다음으로 이력을 분석하는 기법인 배열 분석 기법을 포함해 분석의 주요 기법을 소개한다.

## 1. 라이프코스 연구의 시각

### 1) 개인의 시간과 사회의 시간

1장에서 제시한 네 가지 분석 전략은 '라이프코스 연구'의 시각에 따른 것이다. 라이프코스 연구란, 역사와 제도의 맥락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의 관계의 맥락에서, 개인이 나이 들면서 겪게 되는 사건이나 경험에서 발견되는 패턴을 기술하고 설명하려는 시도를 지칭한다. 이 시각은 개인적 시간과 (가족적 시간과) 역사적 시간이 교차하는 과정에 주목한다(Hareven, 1975; Bertaux, 1981; Demos, 1986).[12] 여기

12) 개인의 시간은 1차적으로는 그가 속한 가족(구성원)의 시간에, 2차적으로는 그가 속한 사회의 시간에 배태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가족의 시간'은 개인의 시간을 규정하는 사회적 힘으로도, 더 큰 역사적 힘에 규정당하는 개별 단위로도 자리한다. 즉 가족의 시간은 개인

서 '라이프코스'[13]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특정 시대적 맥락 내에서 나이에 따라 겪는 사건이나 경험으로 구성된, 또는 수행하는 역할로 구성된 생애 이력에서 드러나는 공통된 패턴을 뜻한다(Elder, 1985; 1998).[14]

라이프코스 연구 시각을 정립하는 데 공헌한 Elder(1994; 1998)는 라이프코스를 연구 패러다임으로 보면서, 이 시각을 구성하는 핵심 명제를 다섯 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

① 인간 발달과 나이 듦은 평생에 걸친 과정이다.
② 개인의 생애는 그가 평생에 걸쳐 경험하는 역사적 시간과 장소에 배태되어 있다.
③ 생애 이행과 사건의 조건과 결과는 그 이행/사건이 생애 어느 시점에서 일어났는가에 따라, 즉 타이밍에 따라 달라진다.
④ 삶은 상호의존적으로 전개되고, 사회역사적 영향력은 이러한 관계망을 통해 표현된다.
⑤ 사람들은 역사적·사회적 환경이 부과하는 기회와 제약 속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함으로써 자신만의 라이프코스를 만들어간다.

---

의 시간과 사회(역사)의 시간을 매개한다.

13) 국내에서는 보통 "생애과정"을 이에 대한 번역어로 쓴다. 처음에는 "생활주기"라고 번역되었다가, "life course"라고 원어 그대로 썼다가, "생애과정"이라는 번역어로 수렴되었다. 이 연구의 맥락에서 적절한 번역어는 '생애 이력'(life career), '생애 궤적'(life trajectory), '생애 경로'(life path) 등이다. "생애과정"에서 '과정'은 구조화된 패턴을 의미하기보다는 모든 것에 열려있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이런 점에서 생애과정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그렇다고 생애 이력, 생애 경로 등으로 표현하기에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어를 그대로 음역("라이프코스")하기로 한다.

14) 라이프코스 패턴을 기술하고 이를 역사적·제도적 변화와 연결해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비교적 일찍 제시되었음에도, 경험 연구는 2000년대에 활발해졌다(Abbott, 1995). 라이프코스 연구가 21세기에 들어 주로 미국과 유럽에서 주된 연구 경향으로 등장하게 된 맥락으로 Elder와 Johnson, Crosnoe(2003: 5-7)는 20세기에 걸쳐 진행된 주된 변화를 다섯 가지로 꼽는다. 첫째, 20세기 초반에 수행된 아동표본조사 대상자들의 성장, 둘째, 급격한 사회 변화, 셋째, 미국 및 주요 국가들의 인구 구성 변화, 넷째, 연령 구조 변화, 다섯째, 종단 연구의 혁명적인 성장이다. 종단연구 성장에는 자료와 방법론 모두가 포함된다. 1970년대에 와서 센서스 자료나 패널 자료 등 시간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쓸 수 있게 되고, 인구학 방법론에 더해 경로 분석, 사건사 분석, 로그-리니어 분석 등 종단 범주형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통계 모형들을 손쉽게 쓸 수 있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라이프코스 연구가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주로 미국 연구의 동향을 소개하는 것에 치중했으나 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초반에 관련 연구가 나왔다. 한경혜의 연구(1993)가 선구적이다. 이후 패널 자료가 쌓이기 시작한 2010년대 초반에 와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명제는, 특정 생애 국면에서의 위치는 그 사람의 전 생애의 맥락 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명제는 전 생애의 맥락 가운데 사회적·역사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네 번째는 사람들의 생애가 독립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의존적인 관계망 내에서, 다시 말해 관계 맺고 있는 주위 사람들의 생애와 맞물려 전개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마지막 명제는, 위의 네 가지 명제로 강조한 구조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선택과 실천이 생애의 전개 양상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개인의 생애는 그 사람의 전 생애에 걸친 경험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그 맥락은 역사적·사회적 사건이 특정 타이밍에서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생애 경험과 맞물리는 방식으로 구체화된다. 그러한 기회와 제약에서 개인은 나름의 생애를 만들어 간다.

그러나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구체적인 이야기의 틀로 전환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앞에서 소개한 명제 다섯 개를 특히 개인 수준에서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가 라이프코스 연구의 주요 과제다(Buchmann, 1989; Shanahan, 2000). 이것은 라이프코스의 변화뿐만 아니라 교육·노동·가족 등 구체적인 개별 이행의 패턴을 설명하려 할 때에도 부딪히는 문제다.

언제 졸업하고, 언제 취업하고, 언제 결혼하느냐는 '물질적 자원을 획득'하려는 합리적 선택(베커, 1994[1981])의 일환으로 설명될 수 있다. 나름대로 부여한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 내린 결정일 수도 있다. 성인기 이행 국면의 변화를 설명하는 시각도 같다. 한 시각은 경제적 측면(interest)을 강조한다. 다른 한 시각은 문화적 측면(identity)을 강조한다.

대상을 가족이행으로 국한하면 각각은 불안정성론과 '제2의 인구변천론'으로 나뉜다.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시각에서는 결혼과 출산, 가구 성별 분업 방식 등 라이프코스를 구성하는 주요 생애 사건 경험은 비용-편익 계산에 따른 합리적 선택의 결과다(베커, 1994[1981]).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판단하면 결혼하고 출산한다는 것이다. 결혼 이후에는 부부 단위로 그 가구의 편익을 최대화하는 (최대화한다고 믿는) 방식으로 분업한다. 결혼하거나 출산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는 결혼이나 출산의 편익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결혼이나 출산의 편익이 비용보다 큰 조건에 있는 사람 수가 줄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제2의 인구변천론은 1960년대 이후 유럽에서 전개된 결혼 및 가족제도의 변화, 그로 인한 출산 가치, 태도, 행위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이론이다(Lesthaeghe, 2014). 이 시각은 경제적 편익 계산보다는 가치의 영향력을 더 큰 요인으로 본다. 자율성과 자기실현, 탈물질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등의 가치체계 변동이 특히 여성들로 하여금 기존의 성별분업 체제를 (설령 그것이 그 사회의 조건에서는 경제적으로는 이익이더라도) 수용하지 않게 한다

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엄밀히 두 시각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둘은 서로를 규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합리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제2의 인구전환 이론에서 말하는 가치 기반 행위도 합리적 선택으로 볼 수 있고, 가치 선택에 비용-편익 계산이 개입되기도 한다. 사회제도가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나 규범이 구체화되는 시공간적 맥락이 되기 때문이다(Mayer, 2004; 2005). 사회의 맥락에 따라 계층 재생산의 구체적인 전략이 다를 수 있다. 개인의 사회적 위치도 맥락을 부여하는 한 요인이다. 따라서 역사적·제도적 맥락의 변화와 이행 패턴의 변화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이행 패턴의 사회집단별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 서면 물질적 조건이나 규범적 조건 각각의 변화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작업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적 조건과 규범적 조건이 서로 다른 속도와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생긴 제도적 조건 간 조응 관계 변화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개인의 시간과 사회의 시간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는 않는다. 다만, 생애이력의 변화와 분화를 전적으로 사회구조적인 것으로 환원해 설명한다거나 반대로 전적으로 주체의 선택으로 설명하는 식의 방향은 지양한다. 직접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개인의 생애이력의 집합에서 드러나는 패턴을 드러내고 그것을 주요 사회학적 요인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구조와 주체의 상호작용을 끊임없이 상기하고 상상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1980년대 중반부터 서유럽과 영미권 국가를 중심으로 시작되고, 2000년대부터 그 밖의 주요 산업사회에서도 본격화된 '성인기 이행 연구'의 흐름에 있다.[15] 성인기 이행 연구는 근대적 라이프코스의 틀이 흔들리고 있다는 인식에서 활

15) 서구의 주요 산업사회를 놓고 볼 때, 1950-60년대에는 청년과 이들의 성인기 이행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다. 당시 청년 문화론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연구로 좁혀져 있었고, 사회이동론도 탈역사적인 맥락에서 사회이동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정교하게 탐색하는 방향으로 좁혀져 있었다. 라이프스타일론과 사회이동론은 성인 이행을 전제했다. 대안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관심도 있었지만, 사회 일반의 삶의 방식으로 논의된 것은 아니었다. 계층 재생산을 논했던 것도 계층화된 이행을 전제로 한 논의였지 이행 자체를 의문시하지는 않았다. 청년에 대한 관심이 사회변혁의 주체에 대한 관심과 사회이동의 성격에 대한 관심에서 이행 가능성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된 때는 1980년대였다. 변화의 계기는 1973년과 1979년의 석유파동으로 상징되는, 197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한 경기하강 국면으로의 전환이었다. 전후 사회 질서의 전제였던 경제성장이 지속되지 않자 그것을 전제로 짜였던 사회조직 전반이 흔들렸고, 이에 대한 다양한 진단이 내려졌다. 초기에는 1970년대 후반에 주요 산업국가에서 경험한 청년 실업에 대한 관심의 일환으로 1980년대부터 학교-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연구가 나왔지만, 연구 관심은 곧 사람들의 삶의 방식 자체의 변화로 확대되었다(George, 2003). 1970년대 중반 이래 진행된 사회변동은 라이프코스 틀 자체의 변화에 대한 관심을 촉발했다.

발해졌다. 따라서 근대적 라이프코스를 규명하는 작업과 그것의 변화 양상을 해명하는 작업을 포괄한다.[16]

관련 연구는 크게 세 질문에 대한 탐구로 분류해볼 수 있다. 첫째, 졸업, 취업, 결혼 이행 패턴은 언제, 어떻게 변화했는가? 둘째, 성별, 계층별 차이는 어떠한가? 그 양상은 각 나라의 역사적, 제도적 맥락과 어떻게 관련 있는가? 각 질문을 중심으로 이 연구가 다룰 주요 쟁점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 2) 성인기 이행 경로의 변화

여러 경험 연구를 종합하면, 근대적 라이프코스의 맥락에서 성인 이행 경로의 특징은 표준화된 보편 이행으로 요약된다. 아동사망율 감소로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출산아 수와 출산 간격 압축으로 비 양육기간이 늘어났다(Anderson, 1985). 동시에 생산체제의 변화에 따라 생애가 생산 역할을 수행하는 성인기를 중심으로 유년기와 노년기로 구획되었다. 각 단계는 교육제도와 노동시장제도, 복지제도로 뒷받침되었다(Ariès, 2003[1960/1973]; Myles, 1992[1984]). 성인기 이행 경로라는 개념 자체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Modell, Furstenberg, and Hershberg는 지난 100년간 더 많은 미국 사람들이 “좀 더 촘촘하게 규정된 스케줄에 따라”(1976: 29) 학교를 떠나고 취직하고 분가하고 결혼했다고 보고한다. 그러면서 미국 사회가 계급이나 인종 등의 경계가 희미해진 동질화된 사회로 이행했다고 해석한다. 1920-75년의 결혼 이행 패턴과 그와 결부된 규범 변화를 추적한 Modell(1989)도 1940-50년생이 이른바 표준화된 형태의 ‘보편혼’을 경험했음을 제시했다. Hogan(1981)은 1907년에서 1952년에 태어난 미국인들이 성인기로 이행하는 패턴을 분석해 졸업, 취업, 결혼까지의 이행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었

16) 초기에는 라이프코스의 성격과 형성 과정에 대한 탐구(Anderson, 1985; Kohli, 2009[1986]; Modell, 1989)가 주된 연구였다. 근대적 라이프코스가 흔들린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흔들리기 이전 모습을 파악할 필요(Hogan, 1981)가 있었기 때문이다. 변화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시각으로 ‘역사적 관점’이 주목받았다(Elder, 1998[1974]; Hogan, 1981). 역사적 관점 자체는 새롭지 않았지만, 자료의 축적과 방법론의 발달로 그러한 관점을 실제 연구로 구체화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역사적 관점이 주목받으면서 그동안 가족, 노동, 문화, 분과학문 단위로 관찰되고 연구되던 삶의 여러 측면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졌다(Hogan and Astone, 1986). ‘성인기 이행’이란 개념, 또는 분석 단위가 정립(Modell, Furstenberg, and Hershberg, 1976)되었다. 졸업, 취업, 결혼, 출산 등 주요 이행 사건 경험을 따로 봐 왔던 기존 연구 경향과 달리 성인기 이행 개념은 이들 사건들의 경험 유무와 타이밍으로 형성되는 ‘궤적’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런 개념적 발전과 분석 기법의 발전은 성인기 이행 국면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근대적 라이프코스의 형성과 변동에 관한 연구를 촉발했다.

다고 보고한다. 교육 기간이 연장되면서 평균 졸업 시점값과 분산값이 모두 커졌고, 그 연장선상에서 평균 취업 시점값과 분산값 또한 모두 커졌다. 결혼과 출산에서는 평균 시점값과 분산값이 모두 작아졌다. 이렇게 보면 성인기 이행 과정이 '표준화' 되었다고 할 때 그 시점은 대략 1940-50년대 생을 뜻하며, 그 내용의 핵심은 졸업으로 시작해 결혼으로 완료되는 성인기 이행 경로의 표준화와 이행 기간의 단축이다.

근대적 라이프코스의 특징을 규명하려는 작업은 곧 그것의 변화 양상을 규명하는 작업으로 확장되었다. 많은 연구들은 사회변동에 따른 라이프코스의 변화 방향으로 '탈표준화'를 예상했다. 변화의 시점은 대략 경기 침체의 시작 시기인 1980년대 이래 성인으로 이행한 코호트, 즉 길게 보면 1960년대 코호트부터 1970년대 코호트를 기준으로 논의된다.[17] 캐나다와 호주의 1970년대생의 성인기 이행 국면을 비교한 Andres and Wyn(2010: 227)의 연구가 한 사례다.

경험 연구로 한정하면, 초기에는 벡 등이 제안한 라이프코스의 '개인화' 경향을 실증하려는 연구들이 다수였다. Buchmann(1989)은 1960년과 1980년에 각각 고등학교를 졸업한 미국 백인 800여명의 졸업 후 4년 이력을 비교해 1980년에 졸업한 이들이 1960년 졸업생보다 졸업, 취업, 결혼을 늦게 했고, 다양한 방식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1960년 졸업 코호트의 23.4%가 고등학교 졸업 후 4년 내에 취업하고 결혼해 '이행을 완료'한 반면, 1980년 졸업 코호트는 11.0%만이 이행을 완료했다는 것이다(p. 181). Buchmann은 차이를 낳은 요인으로 고등교육의 확장으로 요약되는 교육시스템의 변화와 신기술 도입에 따른 고용 구조 및 직업 커리어 변화, 가구 구조의 다양화로 요약되는 가족시스템의 변화를 꼽았다. 즉 이행 시점의 지연과 이행 경로의 다양화가 변화의 핵심이다.

변화를 담지한 세대의 특징을 규명하려는 연구도 있었다. Andres and Wyn(2010: 227)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저자들은 캐나다와 호주의 1970년대생의 특징을 다섯 가지로 정리한다. '주저하는 체인지 메이커', '교육 세대', '새로운 가족생활 패턴 창조자', '일과 생활 균형을 추구하는 세대', '다양한 세대'가 그것이다. '주저하는 체인지 메이커'라는 표현은 1970년대생이 그 전 세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삶을 영위하면서도 꿈은 소박하다는 의미다. '교육 세대'는 이들이 고등교육 보편화를 추동한, 그리하여 교육이 이들의 생애를 규정한 핵심 요인이 되는 세대라는 뜻이다. '새로운 가

17) 연구 초기에는 대략 1950년대생까지를 변화 이전 코호트로, 1960년대 초중반 이후 출생자를 변화를 담지한 코호트로 봤다(Buchmann, 1989; Hill and Yeung, 1999; Liefbroer, 2009[1999]; Corcoran and Matsudaria, 2005). 그러나 최근에는 1970년대 초중반생에 주목하는 연구가 다수 나왔고(Schoon, Ross, and Martin, 2009; Andres and Wyn, 2010; Tremmel, 2010), 1980년대 중후반생을 별도 대상으로 삼은 연구(Smith, 2011)도 있다.

족생활 패턴 창조자'는 부모와 더 오래 지내면서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을 시작한, 결혼이나 출산을 늦게 하거나 하지 않기 시작한 세대라는 뜻이다. '일과 생활 균형을 추구하는 세대'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기를 원하거나 강요받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집단이라는 뜻이다. '다양한 세대'는 이들이 생애 이력이 다양하다는 뜻이다. 낮은 지위의 가정에서 자라 고등교육까지 받지 못한 저학력자들이 가장 열악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누가 가장 나은지는 말하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된다.

성인기 이행 국면의 탈표준화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다수 있지만 최근에는 이 쟁점 자체에 대한 관심이 크지는 않다. 다양한 경험 연구의 결과가 그리 일관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변화의 성격을 규정하고 평가할 개념적 기준을 분명하게 설정하기 어렵고 국가별·사회집단별 맥락 차이가 커서 일관되면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Brückner and Mayer, 2005; Macmillan, 2005). 이행 구조로만 보면 여전히 큰 틀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Schoon, Ross, and Martin, 2009)도 있었다. '개인화' 논의가 불평등에 대한 관심을 희석한다는 비판(Woodman, 2009; 2010)도 있었다.

최근에는 종합 결론을 내리기보다 생애 영역별로, 또는 주요 사회적 집단별로, 또는 국가별로 드러나는 차이에 주목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변화는 주로 결혼 이행 경로에서 나타나고 교육-노동시장 이행 경로에서는 원래의 기본 틀이 유지되고 있다는 보고(Brückner and Mayer, 2005)나 탈표준화 경향이 전반적으로 나타나지만 상층 여성에게서는 '노동이력의 지속'이라는 표준화 경향이 나타난다는 보고(Berger, Steinmuller, and Sopp, 1993), 젠더 차원으로 보면 남성과 여성의 이력이 생산 영역에서는 수렴(표준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보고(Brückner and Mayer, 2005), 코호트 간 차이보다는 코호트 내 (인종·계층) 차이가 더 크다는 보고(Hill and Yeung, 1999; Corcoran and Matsudaria, 2005) 등이 주요 사례다.

한국에서의 '근대적 이행 국면'의 형성 시점과 성격을 파악하려는 최근 연구들은 대략 1950-60년대생의 표준화 경향과 1960년대 후반-1970년대생의 탈표준화 경향으로 성인기 이행 경로의 변화를 요약한다. 문혜진(2010)은 1930-79년 출생자들을 10년 단위로 비교한 후, 1960년대생까지는 최근으로 올수록 교육 종료 시점과 노동시장 진입 시점, 결혼·출산 시점이 뒤로 당겨진 것과 함께, "대부분의 구성원이 압축된 연령 구간에서 이행을 완료하는 생애과정의 표준화가 이루어졌"(p. 372)다고 결론 내린다. 이러한 경향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욱 분명하고 일관되게 나타난다. 문혜진은 1970년대 코호트의 경우 이전과 다른 이행 패턴을 보이나 우측 절단에 따른 편향을 확인할 수 없어 변화의 방향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남춘호와 남궁명희

(2012)도 1970-80년대를 “뚜렷한 집중화와 약한 압축 현상이 발생하는 표준화의 시기”로, 1990년대를 “집중화와 탈압축화가 뒤섞여 있는 시기”로, 2000년 이후를 “탈집중화와 탈압축현상이 나타나는 탈표준화의 시기”로 해석한다. 결혼 이행을 기준으로 이행 평균 연령을 26-27세로 보면, 1970-80년대에 이행한 이들은 1940년대 후반-1960년대 초중반생이 된다. 그렇다면 1960년대 후반생이 변화의 시작을, 1970년대 중반생이 본격적인 변화를 드러내는 집단이 된다. 남춘호와 남궁명희는 표준화 경향이 바뀌는 시점을 문혜진보다 5-10년 앞으로 보지만 보고하는 기본 추이는 문혜진의 보고와 유사하다. 결혼 이행으로 한정하면, 최선영(2020)은 남성의 결혼 이행 패턴을 역사적으로 비교해 크게 세 국면이 있다고 보고한다. 1920-30년생과 1940년대-1950년대 중반생, 1950년대 후반생-1960년대생(1970년대생 이후)다. 이 가운데 1940-50년대 중반생이 결혼한 1960년대 초반-1980년대 초반까지를 이른바 ‘표준화와 압축화’가 나타난 시기로, 1980년대 중후반부터를 결혼 시점의 지연과 분산 증가 추이가 나타나는 시점으로 본다. 이렇게 보면 변화의 시작 시점을 가장 빠르게 보는 편이다. 그러나 최선영의 연구에서도 ‘탈보편혼’ 추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코호트는 1970년대생부터다.[18)]

기존 연구를 종합하면, 변화를 드러내는 코호트는 대략 1970년대생이다. 변화의 형식과 관련해서는 초기에는 표준화-탈표준화 논의가 일정한 의미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의미가 상당 부분 퇴색되었다. 적어도 경험 연구 수준에서는 평균적인 추이를 말하는 것이 그리 생산적이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맥락은 탈표준화 논의가 최근 심화되는 불평등의 양상을 포착하고 해석하는 틀로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다(Woodman, 2009).

### 3) 불평등의 성격 변화

최근에 주목받는 쟁점은 라이프코스의 변화와 불평등 수준의 변화가 맺는 관계다. 라이프코스의 탈표준화를 전망한 개인화론에서도 불평등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은

18) 그러나 모든 연구가 대략 1960년대생까지의 표준화 경향을 보고하는 것은 아니다. 1955-74년생의 성인기 이행 패턴을 남녀 차이에 주목해 비교한 이순미(2014)는 남성은 특별한 변화가 없었으며 학력에 따른 차이도 크지 않은 반면, 여성은 전반적으로 이행에서의 학력별 이질성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고했다(pp. 99-100).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이질성 증대는 앞서 문혜진이 보고한, 표준화 경향이 여성에게서 더욱 또렷하게 나타난다고 한 것과는 다소 상반된 결과이다. 남성의 지속과 여성의 변화가 결합되어 남춘호·남궁명희(2012)가 도출한 탈표준화 경향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런 차이는 이 연구의 비교 시점이 짧아서 나타난 것일 수 있다. 최선영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55년생이면 이미 변화가 어느 정도 시작된 시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다. 개인화론에서는 특히 여성의 개인화를 강조하는데, 이것은 곧 성별 차이의 감소와 젠더 관계의 재편을 함축한다(Buchmann, 1989). 그러나 개인화론에서는 결과적으로 불평등 단위를 계층이나 젠더와 같은 고정된 집합 범주가 아닌 개인으로 본다. 그러면서 각자의 위치 차이 자체보다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성찰성·재귀성을 강조한다(벡, 1999[1999]; 벡-게른스하임, 2005[2001]); Beck and Beck-Gernsheim, 2002). 이런 맥락에서 보면, 탈표준화 현상은 계층화를 심화하는 것으로도, 계층화를 약화시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인화가 '다양화'로 인식되는 가운데, 개인화와 계층화의 관계는 라이프코스 연구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다(DiPrete, 2002; Mayer, 2005).

둘의 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은 라이프코스의 구조 및 과정과 삶의 기회의 불평등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개념화하고, 측정할지의 문제와 관련 있다. Mayer(2005: 49)는 이를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나"와 "누가 얼마나 갖나"의 관계로 표현한다. 이 관계를 규명하려면 결국 특정 경로 유형에 속할 가능성과 관련 있는 요인(세대, 젠더, 계층 등)을 찾고, 그들 간 상호작용의 동학을 밝혀야 한다. 개인화의 불평등적 양상은 경험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사안(Furstenberg, 2003; Furstenberg, Rumbaut, and Settersten, 2005)이다.

이러한 과제는 근대적 라이프코스의 구조가 흔들리는 오늘날 더욱 중요하다. 성과 계층의 맞물림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면서 역사적으로 새로운 긴장 관계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벡-게른스하임, 2005[2001]: 23). 이것은 젠더 불평등이 다른 여러 차원과 맞물려 복잡한 양상으로 드러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계층이 한 차원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자녀의 교육 수준이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는 상당히 진행되었다. 주로 질적 연구들이다. 빈곤계층 청년은 가족-학교-노동시장-결혼으로 이어지는 단선적 이행 경로를 경험하지 못한다. 이행은 훨씬 압축적인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미완결된, 불안정한 형태를 띤다. 많은 이들이 가족해체나 부모의 폭력과 알코올 중독 등을 이른 시기에 경험하면서 일찍 독립하려는 의지를 갖는다(정수남 외, 2012). 이들은 일찍이 가족 관계를 중재하거나 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등 "성인화된 청년"(정수남 외, 2012: 51)기를 보냈다. 이러한 결핍은 빈곤계층 청년들이 오히려 규범적인 가족관을 갖게 되는 맥락이지만, 스스로 그러한 규범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는 어렵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정체성을 쉽사리 확립하지 못하고, 노동시장에서도 노동자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다. 학교와 노동시장 모두에서 자신의 역할을 정립하지 못해 결혼할 가능성도 낮다.[19] 중간

19) "청년들은 부모-자녀 관계에서 준(準)성인에 가까운 역할을 반(半)강제적으로 부여받고

계층 청년은 부모 자원을 기반으로 생계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나 뚜렷한 목표의식 없이 “소모적인 방황기”를 겪으면서 삶의 전망에 대해 냉소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정수남·김정환, 2017).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사례 연구들은 개인화의 의미를 ‘다양화’나 ‘주체화’로 보기보다 ‘위계화’나 ‘정체’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김영·황정미, 2013).

젠더 차이에 주목한 연구는 학교생활이나 취업 준비 과정에서도, 결혼 선택에서도 성별화된 전략이 추구된다고 보고한다. 취업과 결혼에서 여성이 특히 나이를 의식한다(장미혜·정해숙·마경희·김여진, 2011; 정민우·이나영, 2011). 남성은 결혼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직업 경력 추구의 보완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성은 직업 경력 추구와 대립하는 것으로 결혼은 크게 부담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장미혜 외, 2011; Cook, 2018: 김은지·송효진·배호중·선보영·최진희·황정미, 2019).

이처럼 성과 계층 각각에 주목하는 연구는 있지만 성별과 계층의 맞물림에 주목하는 연구(배은경, 2009)는 많지 않다. 둘의 맞물림을 보는 시각으로 최근에 제시된 모델 중 하나가 에스핑 앤더슨의 “다중균형 모델”(Esping-Andersen, 2014[2009])이다. 1인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로 대표된 성과 계층 맞물림의 균형 상태가 깨진 이후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 여러 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이 모델은 국가 단위의 평균적인 ‘모델’을 비교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개인 단위의 불평등을 규명하는 틀로는 적절하지 않다. 개인 수준에서는 ‘계층적 성별화’(김이선·박경숙, 2019)라는 개념이 제시된 바 있는데, 다소 원론적인 표현으로 계층에 따른 성별화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은 아니다.[20]

---

있으며, 학교에서는 일반적인 학생의 표상에서 벗어난 ‘학생’으로 취급받으며, 이른 나이부터 노동시장에 참여하지만 경제적 독립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불안정한 노동자의 위치에 놓여 있다. 이 과정에서 빈곤계층 청년들은 주관적인 차원에서는 성인기 이행이 빨리 진행되지만(예를 들어, 애어른), 객관적인 차원에서는 성인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는 ‘비동시성’을 경험한다. 그 결과 이들은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의지는 강하지만, 불안정한 독립에 머물 수밖에 없고, 일상생활에서는 성인 역할이 기대되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주체로서 살아가고 있다.”(정수남 외, 2012: 91)

20) 김이선과 박경숙(2019)은 여성의 라이프코스가 계층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며, 그에 따라 여성이 겪는 긴장과 갈등의 양상도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들은 구조적 조건의 규정력을 더욱 크게 본다. 그럼에도 이것이 라이프코스를 결정한다는 식의, 다시 말해 상층은 이러한 라이프코스를 갖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구조적 조건과 규범적 조건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의 맥락에서 의미를 부여한다. 구조적 조건에서 사정이 좋은 사람은 규범적 조건과의 조응을 보다 손쉽게 이룰 수 있고, 선택의 폭이 넓다. 그 정도의 이점이 있을 뿐 그들 또한 성별화된 구조와 규범 속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피할 수는 없다. 이를 저자들은 “갈등적 성별화”의 계층적 차이

무엇보다 지금까지 개괄한 연구는 현 상황에서의 주요 행위자들의 전략과 해석을 복원하고 있을 뿐 이들의 위치를 사회변동의 맥락에 두지는 못한다. 역사적·제도적 맥락이 드러나지 않는다.

### 4) 국가 단위의 맥락, 그리고 한국 사례

성인 이행 경로의 변화가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해도 구체적인 모습은 각국의 구조적·제도적 맥락에 따라 다르다(Corijn and Klijzing, 2001; Buchmann and Kriesi, 2011; Eurofound, 2014). 근대화 이전 사회 제도가 다르고, 근대화의 방식과 속도도 각기 달랐기 때문이다. 그 맥락에서 교육, 노동시장, 가족, 복지제도 등 주요 제도가 연계되는 방식도 달랐기 때문이다. 성인기 이행에 대한 관심이 커진 시점과 맥락부터가 나라별로 다르다.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호주나 일본에서는 1990년대부터 이른바 청년의 '성인으로의 이행'(transition to adulthood)에 관한 연구물들이 나왔다. 한국인 스스로가 자신이 전환기에 있다고 느낀 계기는 1997년 경제위기였다. 이때부터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비혼, 저출산 등의 말들이 등장했다. 청년에 대한 시각 변화가 시작된 계기도 이때부터였다. 초점도 다르다. 미국에서는 이행 시나리오가 계층별로 나뉘어 있다는 점이 부각(Aisenbery and Fasang, 2017)되는 반면 평균적인 추이 변화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다. 서유럽 주요 국가나 일본은 계층화 양상보다는 라이프코스 구조 변동의 일반 추이에 더 관심이 있다(Tremmel, 2010; Brinton, 2010). 그리고 그 경향을 젠더 관계의 변동이라는 시각으로 해석하는 편이다. 한국은 이행의 지체 현상과 계층화 현상 모두에 대한 관심이 있어 보이지만, 둘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는 많지 않다.

젠더와 계층의 맞물림은 각국의 교육, 노동시장, 가족제도라는 맥락 내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 김영미(2010; 2012)는 젠더와 계층의 맞물림이 각국 사회제도의 맥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본주의 다양성론의 관점에서 남녀 임금 격차 감소 경향의 국가별 차이를 설명하면서 그녀는 영국과 미국과 같은 자유시장경제에서는 계층 축이 젠더 축보다 강한 반면, 노르웨이나 스웨덴과 같은 조정시장경제에서는 젠더 축이 계층 축보다 강하다고 주장한다.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저임금 노동시장이 팽창하면서 계층 위계의 아래쪽에서부터 젠더 경계가 무너지는 반면, 조정시장경제에서는 강력한 노조와 단체협약으로 저임금 노동시장의 팽창은 억제되었지만 성별직종분리 체제는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독과 일본과 같은 보

---

로 설명하려고 한다.

수주의형 조정시장경제에서 젠더 축이 가장 강하다(김영미, 2010: 85). 같은 시각에서 독일인과 미국인의 라이프코스 구조의 성별·계층별 차이를 비교한 Aisenbrey와 Fasang(2017)은 독일인은 젠더 차이가, 미국인은 계층 차이가 더 또렷하다고 보고한다.

가구 단위의 성별 분업 체제에서 나타나는 젠더와 계층의 맞물림도 각국의 가족구조와 노동시장 등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김영미, 2012). 대만, 일본과 비교해 한국의 가구 유지 모델은 남성 1인 생계부양자 모델에 가깝다. 반면 대만은 성평등한 노동시장과 가족구조 덕분에 전일제 맞벌이형이 지배적인 형태이고, 일본은 여성 파트타임 고용의 제도화로 남성-전일제, 여성-시간제로 이루어진 남성생계부양자형 혼합이 주된 형태다. 가구구조나 돌봄 네트워크의 특성(정이환·김영미·권현지, 2012; 이재경·나성은·조인경, 2012),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수준(정이환·김영미·권현지, 2012; Nishimura and Kwon, 2016), 생산 시장에서의 기업 간 관계(Cho and Choi, 2017) 등에 따라 젠더와 계층이 다양한 방식으로 맞물리고 그에 따라 라이프코스 구조도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다.

성인 이행 경로의 특징을 국가 단위에서 비교·해석하는 틀로 유용한 것이 성인 이행 체제 개념이다(Walther, 2006; Raffe, 2008). "성인 이행 체제"(regimes of youth transitions)는 한 사회의 성원이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패턴과 그러한 패턴이 형성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배열을 아울러 지칭한다(Walther, 2006).

이행 체제는 크게 교육, 노동시장, 복지제도 영역으로 구성된다(Breen and Buchmann, 2002; Mayer, 2005; Walther, 2006; Buchmann and Kriesi, 2011: 492). 세 제도 영역은 서로 맞물려 있다. 교육제도의 층화 수준[21]이 낮으면 기업 내부노동시장과 자유시장으로 구분되는 이중 노동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이들은 내부노동시장으로 진입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이 자유시장으로 유입된다. 전자에서는 직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입사해 입사 이후에 직무 관련 훈련을 받는다. 직종 내에서도 기업에 따라 지위 차이가 클 가능

21) 층화 수준은 특정 코호트가 다양한 교육 수준에 어떤 식으로 배치·분류되는지로 평가할 수 있다(Allmendinger, 1989). 보통 특정 코호트 중 최대 년수의 교육을 받은 이들의 비중이나 교육 수준별 진학률 등으로 측정한다. 그러나 엄격하게는 교육 수준별 진학률이나 이수률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또 층화 수준은 층화 성격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100명 중 100명 모두가 초등학교만 졸업하는 나라가 있을 수 있고, 100명 중 100명 모두가 대학교를 졸업하는 나라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층화 수준은 같다. 즉, 층화 수준은 기회의 양적 분포를 나타낼 뿐 기회의 질을 나타내지 않는다. 층화 수준이 가장 높은 경우는 교육 수준이 (그러니까 층이) 여러 겹이고, 각 겹에 사람들이 골고루 배치되는 경우다.

성이 높다. 반면 교육제도의 층화 수준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문직 노동시장과 연고 노동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공식적인 직업 안정성은 없지만 직종 단위의 노동시장에서 개인 단위로 이력이 형성될 수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직종 단위의 차이가 클 가능성이 높다. 영미권 국가들이 첫 번째 유형의 사례라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등 대륙 유럽 국가들이 두 번째 유형의 사례다. 북유럽 국가는 이 사이에 있다. 전자는 자유주의 복지체제와 관련 있고, 후자는 보수주의 복지체제와 관련 있다.

이것이 사회 전체의 이행 타이밍 및 층화 수준에 함의하는 바는 양가적이다. 개방성과 유연성 면에서는 전자 시스템이 우세하다. 그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수준이 높다. 그러나 교육-직업의 불일치 가능성은 전자 시스템에서 더 크다. 이행 시점은 후자 시스템이 이를 가능성이 높다. 청년의 직업 열망과 기술 습득이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직업적 사회화"(Hamilton, 1990) 과정이 좀 더 이른 시기에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행 체제와 이행 패턴의 관계를 이념형으로 도식화하면 네 유형으로 구분된다(Breen and Buchmann, 2002; Walther, 2006; Buchmann and Kries, 2011). 사민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가족주의 유형이다.[22] 사민주의 유형에는 북유럽 국가들이, 보수주의 유형에는 대륙유럽 국가들이, 자유주의적 국가에는 영국과 미국이, 가족주의적 유형에는 남유럽 국가들이 사례로 꼽힌다.

사민주의 유형에서는 교육체제가 비선별적이고, 전국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다. 그에 따라 고등교육 진학자 비율이 높다. 그러면서도 시장의 구체적인 수요나 개별적 학습 요구에도 반응하는 유연함도 갖추고 있다. 보편 시민권 지위에 따라 복지에 관한 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어 개인의 지위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비교적 무관하다. 18세 이상이면 같은 혜택을 누린다. 고용체제에서 가장 큰 특징은 공공 부문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높다. 요약하면, 사민주의 유형은 개인을 단위로 보편 권리를 보장해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에 따라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이 상대적으로 강조된다. 상대적으로 집을 일찍 떠나며 이른 분가는 이른 동거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것이 결혼과 출산이 늦고 그 시기도 넓게 퍼져 있는 경향의 배경이다. 가족 규범의 제약이 낮은 배경이기도 하다. 평생 교육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어 비교적 일찍, 쉽게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어 가

22) Walther(2006: 124-125)는 보편주의적, 자유주의적, 고용중심적, 준보호적(sub-protective) 이행 체제로, Buchmann과 Kriesi(2011: 492)는 사민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남유럽형으로 이름 붙였다. 그러나 내용 차이는 없다. 이 글에서는 차원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와 같이 이름 붙일 것이다.

족에 크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자유주의 유형에서는 교육, 노동시장, 복지체제가 기본적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 짜여 있다. 권리는 개인 단위로 부여된다. 교육은 16세까지의 의무 교육 이후에는 다양한 형태로 분화된다. 그러나 이는 직업 특수 교육이 아닌 일반 교육에 가깝다. 그러한 틀에서 개인의 선택과 책임 논리가 강조된다. 복지는 매우 한정된 취약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낮은 수준으로 제공된다. 노동시장은 시장 원리가 관철되어 매우 유동적인 구조를 띠며, 특정 직업과 자격 조건의 연계가 분명하지 않다. 노동시장이 다수에게 개방되어 있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높지만, 전반적인 노동조건은 불안정하다. 상대적으로 일찍 교육을 마치지만 노동시장 진입 과정은 불안정하다. 영국의 경우 졸업, 취업, 분가가 비교적 일찍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결혼과 출산 또한 이르다. 가족 규범의 제약은 그리 높지 않다.

보수주의 유형에서는 교육, 노동시장, 복지체제의 목표가 가족, 특히 남성 가장의 지위 보존이다. 교육은 선별적으로 조직되어 있어서 청년들은 직업 전망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분할된 경로를 밟는다. 일례로 독일은 1/3이 초등교육을, 1/3이 중등교육을, 1/3이 고등교육을 받는다. 각각의 과정은 표준화되어 있고, 그에 상응하는 노동시장 영역과 연계되어 있다. 그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는 고도로 규율되고 보호받는 영역과 그렇지 못한 영역으로 분절되어 있다. 사회보험을 근간으로 하는 복지제도 또한 직업 지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노동시장과 복지제도가 남성 가장의 지위를 보호하는 데에 맞추어져 있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높지 않다. 학교-노동시장 이행은 비교적 일찍, 순조롭게 이루어지지만 분가는 상대적으로 늦으며, 동거보다는 결혼 비중이 크다. 가족 규범이 보수적이다.

가족주의 유형에서는 가족이 교육-노동-복지체제를 규율하는 기본 단위다. 교육은 일반 교육 위주이고, 직업 교육은 발달해 있지 않다. 국가의 복지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지만, 가장을 실업에서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표여서 연금 제도가 상대적으로 관대하다. 그에 따라 졸업에서부터 노동시장 진입 사이의 유예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이 시기에 지원은 없어서 불안정한 일을 전전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시장은 고도로 분절되어 있고 직업 훈련 체계는 발달되어 있지 않아 청년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수준이 낮다. 여성은 보육 지원 제도 미비로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상황에서 고등교육이 노동시장 이행의 필요조건으로 여겨지면서 교육 수준이 단기간에 높아졌지만 학력 상승에 조응하는 일자리는 부족해 교육-직업 불일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 유형에서 전형적인 성인기 이행 패턴은 교육 종료, 취업, 결혼, 출산의 전반적인 지연이다. 내부노동시장 보호 수준이 높은 반면 교육 훈련의 기회는 없어 청년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다. 한편, 결혼의

전제 조건으로 경제적 자립을 기대하고 출산과 결혼을 묶어서 생각하는 문화에 따라 분가와 결혼, 출산이 전반적으로 지연된다. 이런 점에서 노동시장의 지위가 매우 중요하다. 안정적인 노동시장 지위에 진입하는 등 한번 궤도에 오르면 분가, 결혼, 출산이 단기간에 이루어진다. 이행의 양극화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가족 단위로 성인기로 이행하고 그 가족에 대한 사회 제도의 뒷받침은 약하다(장경섭, 2009).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앞에서 소개한 네 유형 중에는 '가족주의'에 가장 가깝다. 교육은 일반 교육 위주이고, 직업 교육은 발달해 있지 않다. 이와 연관되어 교육 수준의 층화 수준이 낮다. 학교-노동시장 이행을 연결하는 직접적인 고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교육제도와 노동시장 제도의 연계수준이 낮다. 노동시장은 기업 단위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으로 분절되어 있다. 따라서 청년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다. 한편 결혼해야 한다는 규범이 강하고 결혼의 전제 조건으로 경제적 자립을 기대한다. 결혼과 출산을 연계해서 생각하는 경향도 강하다. 국가의 복지 수준은 높지 않다. 그러나 복지국가 유형론에서 한국 사례가 다뤄지는 방식을 검토하면,[23] 성인기 이행 체제론에서도 한국은 어느 한 유형에 배타적으로 귀속되기 어려운 사례일 것이라 예상한다. 실제 높은 교육 수준 등 남유럽 국가들의 특징과 다른 점도 많다.

서구 연구들에서 후기 근대적 라이프코스로의 변동을 추동한 제도적 변화로 꼽는 것들은 한국에서도 대부분 확인된다. 한국에서도 지난 20-30년간 고등교육이 팽창했고,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었으며, 가족구조도 다양해졌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과 구별되는 특징도 있다. 교육제도 측면에서 한국은 고등교육의 급속한 팽창이란 특징을 지닌다. 속도도 매우 빨랐고, 팽창의 수준도 매우 높았다. 노동시장은 매우 성별화된, 분절 노동시장 구조를 띠고 있다. 변화는 특히 19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급격하게, 충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소수의 내부노동시장과 다수의 외부노동시장

23)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에 대한 입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독자적인 '동아시아(유교주의) 유형'에 속한다는 입장(Jones, 1993)과 기존 세 유형(자유주의, 사민주의, 보수주의) 중 보수주의 유형에 속한다는 입장(에스핑-안데르센, 2007[1999]),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혼합형으로 보는 입장이다. 독자 유형으로 보는 첫 번째 입장은 소수다. 기존 유형론 내에서 한국의 자리를 매기려는 입장이 우세하다. 국내 학계에서는 한국 사례를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혼합형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세부적으로는 자유주의 유형에 속한다는 입장(조영훈, 2001)과 보수주의 유형에 속한다는 입장(에스핑-안데르센, 2007[1999]; 남찬섭, 2002)으로 나뉜다. 이런 논쟁이 산업화 시대에 기초한 복지국가 유형론에 기초하고 있어 후기산업사회의 제도적 틀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양재진, 2003). 특정 유형을 미(저)발달 단계의 증상으로 보는지 다른 유형의 특징으로 보는지에 따라 입장이 갈린다. 시장 비중이 큰 것을 자유주의 논리 관철의 결과로 보는지, 가족주의 논리 관철의 결과로 보는지의 차이다.

간의 격차가 매우 크다. 가족제도에서는 가족주의로 상징되는 강한 결혼 규범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 동거나 혼외 출생은 여전히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가족이행 과정에서 부모가 미치는 영향이 강하다. 복지제도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혼합적 특성을 갖는다. 이런 제도적 특징이 결합해 한국 사회 특유의 성인기 이행 패턴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를 검토하면서 던졌던 질문 세 가지로 돌아가 보자. 이행 양상은 언제, 어떻게 변했는가? 성별·계층별 불평등의 양상은 어떻게 변했는가? 변화 양상은 각 나라의 역사적·제도적 맥락과 어떻게 관련 있는가? 이 질문은 개별적으로 접근해서는 답하기 어렵다.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된 질문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역사적, 제도적 맥락의 변화와 주요 이행 패턴의 변화를 함께 검토하면서, 또 이행 패턴의 사회집단별 차이에 주목하면서, 한국의 성인 이행 경로 변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 2. 연구 대상과 분석틀

### 1) 1970-1984년생의 자리

이 연구의 대상은 1970-1984년에 출생한 한국인(이하 '1970-84년생'으로 약칭)이다.

이들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의 생애가 한국 사회의 전환기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20대-30대 중반을 성인 이행기로 보면, 1970-84년생이 성인 이행기로 접어든 때는 1990년에서 2010년대 중반이다. 이 시기는 한국 사회가 전후에 가졌던 안정기가 깨지고 전환기로 접어들었던 시기와 조응한다. 인구 변동 추이와 가족·교육·노동시장 제도 변화 측면에서 한국 사회가 첫 번째 안정기에 있었던 시기는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중반이다.[24] 노동시장과 가족제도가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되었고,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일찍, 특정 시기에 몰려, 다수가 결혼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 아이를 2-3명 낳았다. 가정중심성이 강조되었고 남녀 역할 분리 규범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었다. 1970-84년생은 근대 가족 형성기에 태어나고 자랐다.

이러한 성장 환경은 교육 기간의 연장으로 이어졌다. 이들의 학교 경험은 근대 교육이 보편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보편화가 멈춘 시점에 걸쳐 있다. 근

24) 안정기란 외부 충격이 없으면 자체적인 변화의 동력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일종의 균형 상태를 의미한다. 이 상태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무렵이었지만 안정이 깨진 계기는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였다.

대 교육제도의 이상이 실현된 과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것의 한계를 보여주는 집단이다. 노동시장에서의 변화도 심대했다. 노동시장 사정이 비교적 좋았던 때부터 가장 좋지 않았던 때에 걸쳐 있다. 한국 경제가 가장 호황이었을 때 태어나 가장 불황이었을 때 노동시장에 진입했다. 한국 사회가 가장 평등한 수준이었을 때 유년기를 보냈으나 가장 불평등할 때 청장년기를 보내게 되었다. 사회적 조건과 규범의 괴리에 따른 불확실성 속에서 자의든 타의든 결혼과 출산, 분가 등 근대 가족을 구성하는 핵심 사건을 새롭게 경험(김혜경, 2013; 이민아, 2013; 장경섭, 2018)하는 코호트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성인기 이행 국면을 재편한 코호트이자 한국 사회 변동의 흔적을 자신의 생애로 드러낸 코호트다. 한마디로 "라이프코스에서 혁신"(Giele, 1998: 231)이 시작된 코호트다.

전환기를 드러내는 코호트로 이들 집단이 갖는 특징은 한국 맥락에 국한되지 않는다. 앞에서 확인했듯이 다수의 서구 사회 경험 연구도 근대적 라이프코스의 변화를 논의할 때 1970년대생을 주된 기준점으로 삼는다(Schoon, Ross, and Martin, 2009; Andres and Wyn, 2010; Tremmel, 2010).[25] 이런 맥락에서 1970-84년생의 성인기 이행 국면을 탐구하는 작업은 한국 사례의 특수성을 규명하는 작업이 되면서 동시에 비교사회연구의 사전 작업이 된다.

두 번째 이유는 성인 이행기를 관찰할 수 있을 만한 시간대를 신뢰할만한 자료로 포착할 수 있는 집단이 이들이기 때문이다. 변화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려면 더 많은 출생 코호트를 아우르는 틀을 짜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성인 이행기를 신뢰성 있는 자료로 포착할 수 있을 코호트의 범위는 넓지 않다. 성인 이행기를 포착하려면 적어도 30대 중반까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 1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다수의 청년 세대론에서처럼 관찰 범위를 20대로 한정하면, 동년배의 60-70%가 대학생인 상황에서 라이프코스상의 위치 차이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 분석 대상의 끝 지점을 1984년생으로 삼은 이유다. 1984년생이면 KLIPS 자료로 만 33세까지 관찰할 수 있다. 한

25) 라이프코스 연구에 국한되지 않는 서구의 세대론에서 전후 세대는 적게는 3개로, 많게는 5개로 구분된다. 베이비붐세대(1946-1965년생), X세대(1966-1976년생), Y세대(1977년생 이후)다. 베이비붐세대와 Y세대는 각각 전기와 후기로 구분될 수 있다(Andres and Wyn, 2010: 33). X세대는 베이비버스터세대(1967-1979년생)로도, Y세대는 밀레니얼세대(1982년생 이후)나 에코세대(1980-1995년생)로도 불린다. 일본은 대략 6개로 구분한다(사사노 미사에, 2017). 단카이 세대(1947-49년), 시라케 세대(1950-64년), 버블 세대(1965-69년), 단카이 주니어 세대(1971-74년), 잃어버린 세대(1975-82년), 유토리·사토리 세대(1987-2003년)다. 서구와 일본의 세대 구획 경계와 한국의 세대 구획 경계를 비교하면, X세대의 출생 시점이 서구의 경우 한국보다 4-5세 빠르다. 일본과 비교하면 '잃어버린 세대'가 한국의 '88만원 세대'와 대응하는데, 여기에서도 일본이 대략 5년 빠르다. 이것은 경기나 사회변동의 국가별 시차를 일정 부분 반영한다.

편 분석 대상의 시작 지점을 1970년생으로 삼은 이유도 비슷하다. 1970년생 이전 코호트까지 분석 대상을 넓히기에는 이들의 노동이력 정보와 가족이력 정보가 많지 않다.

### 2) 교육·노동·가족이력으로 본 성인 이행 경로

이 연구의 목표는 1970-84년생의 성인 이행 경로를 규명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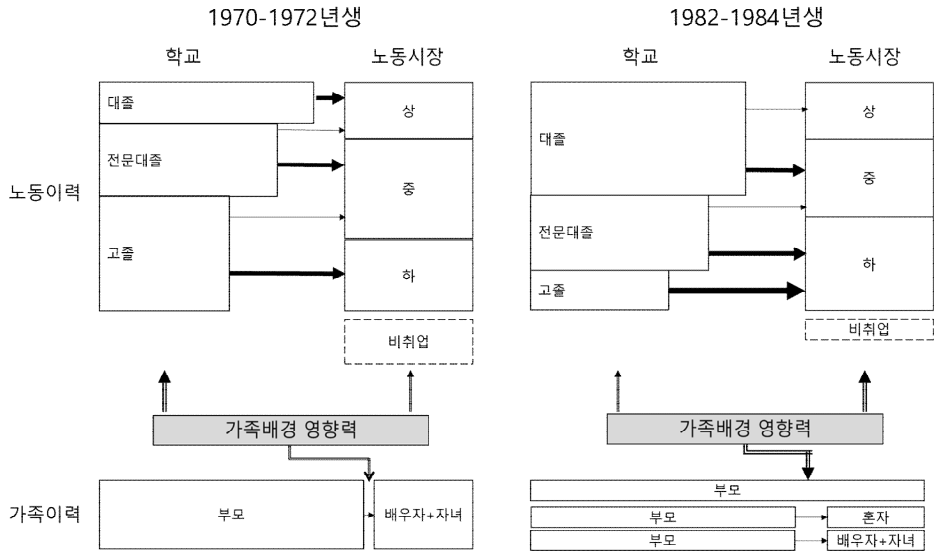
라이프코스는 한 사회에서 부여하는 생산 영역과 재생산 영역에서의 역할 연쇄로 구성된다. 이 역할을 언제 어떤 식으로 수행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이 구조적 조건이다. 그 중에서 성인 이행 경로는 사회의 한 구성원이 생산 영역과 재생산 영역에서 주된 역할(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의미에서 청년이 성인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행 경로의 구체적인 모습은 한 사회의 제도적 조건과 규범적 조건에 따라 다르다. 교육, 노동, 복지, 가족제도가 주요 제도적 조건이다. 각 제도에서 수행되길 기대하는 역할에 대한 규범이 규범적 조건이다. 연령 규범이 대표적인 규범이다. 제도적 조건과 규범적 조건은 맞물려 있다. 이 두 조건이 사회구성원의 역할 이행의 과정을 규정한다. 이에 따라 집합적 이행 패턴이 형성된다. 이런 조건에서 개인은 가족을 단위로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한다. 각자가 가진 자원과 규범, 전략에 따라 다양한 이행 경로가 형성된다. 때에 따라서는 개인의 선택 변화가 모여 집합적 라이프코스 패턴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 기존의 제도적 배열과 규범이 달라질 수도 있다(Giele, 1998).

이 연구에서 제도 배열과 역할 규범 등의 구조적 조건은 배경이 된다. 각 이력을 다루는 장에서는 해당 이력과 관련 있는 교육, 노동, 가족제도의 변화 양상을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가족 전략도 직접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가족배경 변수의 효과가 주요 국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것이 코호트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가족의 영향력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성인 이행 국면으로 한정하면, 이행 경로를 규정하는 것은 교육, 노동, 가족제도 및 관련 규범이다. 먼저 교육이행 경로의 변화는 교육제도의 층화 수준 변화로 포착할 수 있다(Allmendinger, 1989). 근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가장 먼저 교육제도에 편입된다. 이 제도를 거치면서 생산(재생산) 영역에 배치된다. 노동이행 경로에서의 변화는 노동시장 제도의 변화와 그 맥락에서 나타나는 노동이력의 변화로 포착할 수 있다. 학교-노동시장 연계의 성격 변화는 교육 수준과 주요 노동이력의 갈래가 관계 맺는 양상에서 드러난다(Müller and Shavit, 1998). 가족이행 경로의 변화는 동일한

연령 구간에 누구와 함께 거주하느냐의 배열로 포착할 수 있다. 그 배열은 분가와 결혼·출산의 시점 및 순서에 따라 달리 구성된다. <그림 2-1>은 성인 이행 경로 변화의 모습을 주요 제도적 틀의 변화와 가족배경 영향력의 변화로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2-1> 분석틀: 성인 이행 경로의 구조와 가족배경 영향력




교육이행 경로에서의 변화는 비교적 쉽게 짐작할 수 있다. 1970-84년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시기에 대학 진학률이 급격히 높아졌다. 더 많은 이들이 대학까지 다녔다. 학교를 떠나는 시점이 전반적으로 늦추어졌다. 그러나 교육 수준 상승으로 인한 졸업 지연 추이가 1970-84년생이 교육제도를 경험했던 15년간 일관되었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1998년의 경제위기 충격이 대학 진학률 증가 추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영향이 성별과 계층에 따라 어떻게 달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등교육이 보편화되고 고등교육 또한 보편화되면서 교육기회의 남녀 격차가 줄었을 것이다. 그러나 가족배경에 따른 차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견해는 일관되지 않다. 대학진학 가능성에 있어서 가족배경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는 입장도 있고, 지속된다는 입장도 있다. 가족배경의 영향력이 남녀별로 어떻게 다른지도 중요한 문제다. 일반적으로 여성에게서 가족배경의 영향력이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남녀 차이가 최근 코호트에 와서도 유지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성인 이행 경로라는 관점에서 교육 이행에서 확인해야 할 또 다른 지점은 재학기간의 변화다. 많은 이들이 재학기간의 연장을 예상했다. 경제위기 이후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졸업을 늦추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어학연수나 인턴 활동 등을 하기 위해 휴학을 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언급되었다. 등록금 부담과 가구 경제 형편 악화로 생계노동을 위해 휴학을 하는 경향도 언급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재학기간의 단축을 예상해볼 수도 있다. 남성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이 단축되어 휴학 기간이 단축될 여지가 커졌다. 경제위기가 꼭 재학기간을 늦출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가구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졸업해서 취직하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07년부터 조사하기 시작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대를 포함한 전체 대학생의 평균 대학졸업소요기간은 2007년 3년 10.2개월에서 2016년 4년 2.6개월로 늘어났다. 남성은 군복무기간 단축 효과로 2012-2015년에는 전년 대비 기간이 약간 감소했으나 2016년에는 5년 3.4개월로 최고치를 갱신했다(이필남, 2016: 225-226). 휴학 경험자 또한 늘어나는 추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들 수치는 2007년부터 집계한 것으로 대학졸업소요기간 증가 경향이 언제부터 나타났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별과 계층 효과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재학기간과 관련해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대학 중퇴자다. 일례로 교육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기준 전국 4년제 대학생의 7.41%가 중퇴자로 집계된 바 있다.[26] 중퇴 이후 대학에 다시 들어가지 않은 이상 이들은 보통 사회조사에서 '고졸'로 분류된다. 적어도 학교를 떠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이들의 위치를 고졸자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몇 년간 학교를 더 다녔기 때문이다. 실제 노동패널조사에서도 이들 중퇴자는 졸업 연령을 중퇴 시점으로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이 점을 고려해 이 연구는 '고졸자'의 졸업 연령에서 나타나는 변화 추이에도 관심을 갖는다. 만일 졸업 연령이 늘어났다면 이는 중퇴자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노동이행 경로다. 경제위기를 계기로 한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내부노동시장이 유지·약화되는 가운데 외부노동시장의 노동조건이 더욱 열악해졌다는 것이 많은 연구의 결론이다. 대기업 고용 비중이 줄어들고 신입사원 공채 규모가 축소되면서 청년들이 안정적인 노동지위로 진입하는 데에 어려움이 커졌다는 인식이 크다.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 규모가 커졌다는 것도 주지하는 바다.

26) 이는 방송통신대학교를 포함한 수치로, 방송통신대학교를 제외하면 4.8%이다(「베리타스 알파」 2016년 10월 4일자).

그에 따라 고용형태와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 및 노동조건의 격차가 커졌다. 그렇다면 1970-84년생의 노동이력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각인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쉽게 생각하면 중소기업 비정규직 이력 비중의 증가와 비취업 이력의 증가를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졸자 비중이 이 시기에 크게 늘어났고 특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도 늘어났다. 따라서 전체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의 추이와 청년 노동시장의 변화 추이는 다를 수 있다. 대기업 이력이 크게 줄지 않았을 수 있고 비취업 이력은 오히려 줄어들었을 수도 있다. 비정규직 증가 추이에서도 경제위기 이후 변화가 있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던 비정규직 비중은 2000년대 후반부터는 감소세로 전환된다. 이러한 변화 또한 이들의 노동이력에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

노동이행 국면에서도 성별과 가족배경에 따라 이력이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19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상당수가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았고 진입했더라도 결혼과 출산을 계기로 퇴장했다. 이런 경향이 경제위기 이후 더욱 강화되었을 수도 있다. 경제위기 직후 생계 부양자로서의 남성의 지위를 보호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분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남성의 노동시장 지위가 불안정해지면서 여성 스스로가 독립적인 생계부양자가 되려는 경향이 강해졌을 수도 있다. 특히 교육 수준의 상승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려는 욕구가 커졌을 것이다. 이러한 상반된 압력 속에서 각자는 노동이력을 형성해갔을 것이다.

가족배경의 1차 효과는 교육 수준 차이로 나타난다. 교육 수준 상승 추이와 노동시장 유연화 추이가 결합되면 학교-노동시장의 연계가 약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교육 수준 상승을 절대적인 의미로 본다면 어쨌든 더 높은 인적자본을 가진 이들의 비중이 커졌다는 말이 되고, 교육 수준의 전반적 상승은 노동시장 지위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어떤 경우이든 상대적으로 고졸자의 지위는 하락했을 가능성이 높다. 가족배경의 2차적인 효과는 교육 수준을 통제한 상황에서 부모 지위가 노동이력에 미치는 영향력이다. 이러한 2차 효과에 대한 전망도 어느 한 쪽을 가리키지 않는다. 경제위기 이후 중산층 몰락론에 비추어 본다면 가족배경 효과는 약해졌을 수 있다. 다수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락하면서 가구 간 지위 차이가 줄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 수준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2차 효과가 나타날 여지 자체가 줄어들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양극화론에 비추어 본다면 중상층과 중하층의 지위 격차 증대로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 효과가 커졌을 수 있다. 대학교육의 급격한 팽창 또한 노동이력 차이에 미치는 가족배경 효과를 키웠을 수 있다. 대졸자가 많아지면서 대졸자 내부에서도 위계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이 시기에 대졸자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동일 교육 수준 내에서도 노

동이력의 차이가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정리해보자. 1970-84년생의 경험은 교육제도에서는 층화 수준이 낮아지고, 노동시장에서는 층화 수준이 높아지는 변화의 국면에 걸쳐 있다. 점차 많은 이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까지 받았다는 의미에서 층화 수준이 낮아졌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래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유연화되는 가운데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층화 수준이 심화되었다. <그림 2-1>의 학교, 노동시장 영역의 사각형의 크기 변화는 이 점을 나타낸다. 차이를 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1970-72년생의 이행 조건과 1982-84년생의 이행 조건을 염두에 두었다. 같은 맥락에서 남녀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가설적으로 말하면, 1970-72년생의 경우 대졸자는 동일 코호트의 20%에 불과했다. 30%는 전문대졸자였고, 50%는 고졸자였다. 1982-84년생으로 오면 50%가 대졸자이고, 고졸자는 20%에 불과하다. 그만큼 학교를 떠나는 시점은 늦추어졌다. 같은 시기에 노동시장은 위계화가 심화되었다. 비취업자가 줄어들면서 노동시장 참여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아졌지만 이른바 좋은 일자리의 규모는 줄어들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상층의 일자리 규모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중간층의 일자리가 하층으로 이동했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학교-노동시장 이행 경로를 표시한 것이 화살표이다.

1970-72년생의 경우 교육제도와 노동시장 제도는 비교적 효과적으로 연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졸자는 대부분 노동시장의 상층으로, 전문대졸자는 다수가 노동시장의 중간층으로, 소수자 노동시장의 상층으로 이동했다. 고졸자는 다수가 노동시장 하층으로 이동했지만, 중간층으로 이동한 규모도 꽤 되었다. 이 시기의 특징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거나 금방 퇴장한 이력의 비중이 상당했다는 것이다. 1982-84년생의 경우 교육제도와 노동시장 제도의 연계가 약화되었다. 대졸자라도 상당수가 노동시장 중간층으로 진입했으며, 고졸자의 경우 노동시장 중간층에 진입하는 이력이 더욱 희소해졌다. 학교-노동시장 이행 경로에서의 변화는 가족이행 경로의 변화와도 연결되어 있다. 보통 교육은 가족의 지원을 받아 받기 마련이다. 교육 기간이 늘어나면 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기도 그만큼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교육이행 양상은 분가 시점이나 결혼 시점에도 영향을 미친다. 노동시장 경험도 분가 시점이나 결혼 시점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노동시장의 층화 수준이 높아지면 노동이력이 가족이행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러한 변화 국면에서 남녀의 이행 경로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1970-72년생의 조건에서 확인되는 비취업 이력의 상당 부분은 여성의 것이었다. 그에 따라 교육-노동시장 제도의 성별 연계가 비교적 단순했다. 그러나 최근으로 오면서 노동시장의 참여 수준에서 남녀 차이가 줄었을 것이다. 이것은 동시에 교육-노동시장 제도의 성별

연계를 복잡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특정 지점에서는 성별 차이가 좁혀지고, 특정 지점에서는 남녀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며, 특정 지점에서는 성별 차이가 새롭게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 교육제도와 노동시장 제도에서 층화 구조가 변화하면 가족배경 영향력의 지점과 수준도 달라질 수 있다. 교육제도가 팽창함에 따라 교육제도 내에서는 가족배경의 영향력이 약해질 수 있다. 그러나 교육-노동시장 연계가 약해지면 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국면에 가족배경의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다. 교육기회와 노동이력 측면에서는 여성에게서 가족배경의 영향력이 크고, 최근으로 오면서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학교-노동시장 이행 경로의 변화는 가족이행 경로의 변화를 수반한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가 가족이행 경로에서의 남녀 차이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족이행의 분화를 혼인 여부와 시점으로 보면, 남녀 차이가 분명할 것으로 예상한다. 교육-노동시장 이행 경로에서의 가족배경 영향력의 변화가 가족이행 경로에서의 가족배경 영향력 변화와는 어떻게 관련 있을까? 이 연구는 가족이행 경로에서도 가족배경 영향력이 커졌을 것으로 예상한다. 전반적으로 노동이력 지위가 낮아지는 가운데 (결혼이 늦어지면서, 또 주거비 상승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해) 결혼 비용이 높아졌다면, 이 이행 국면에서도 가족배경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성별에 따라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서구 국가와는 달리 한국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여성도 대부분 결혼한다. 오히려 지위가 높은 여성이 결혼하지 않거나 늦게 한다. 따라서 가족배경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여지가 작다. 반대로 남성의 경우, 한국 사회에서 기대되는 남성 역할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와 혼인 가능성이 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노동시장 지위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수준도 높아지면서 남성은 가족배경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림 2-1>에서 '부모'에서 '배우자+자녀'로 전환하는 국면을 가리키고 있는 굵은 화살표는 남성에게만 해당될 것이다.

지금까지 기술한 가설적 시나리오를 확인하기 위해 이 연구는 1970-84년생을 3년 단위 하위 코호트 5개(1970-72년생, 1973-75년생, 1976-78년생, 1979-81년생, 1982-84년생)로 구획해 비교한다. 이 5개 코호트가 드러나는 생애 이력의 패턴을 비교함으로써 변화의 성격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3년 단위로 구분한 것은 이 하위 집단이 한국 사회의 교육, 노동, 가족제도의 변화상의 주요 국면과 대략 조응하기 때문이다.

3장에서는 학교이행 경로를 검토한다. '학교를 어느 수준에서 언제 떠났는지'로 구성되는 경로다. 이 경로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할 것이다. 여기에 가족배경에 따른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확인할 것이다. 4장에서는 졸업하고 노동시

장에 어떤 식으로 진입해 이력을 밟는지 살펴볼 것이다. 노동이력이 어떻게 유형화되는지 각 유형의 비중이 어떤지를 확인해 노동시장 층화 수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후 각 유형에 속할 가능성에서 계층 차이가 얼마나 큰지 살펴볼 것이다. 5장에서는 가족이행 경로의 변화 양상을 검토한다. 학교-노동시장 이행 경로와 가족이행 경로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가족이행 경로에서 가족배경 영향력의 변화 양상도 확인한다. 지금까지 서술한 모든 관계에서 성별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제도의 층화 수준이 변화하는 양상과 그에 따라 두 제도가 연결되는 방식에 성별 변수가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연구 질문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자. 첫째, 성인 이행을 구성하는 교육, 노동, 가족 측면에서 주된 행태 변화가 나타난 시점(코호트)이 어디인가? 변화의 시점은 대략 1970년대 중반생을 전후로 나타나리라 예상한다. 차이를 낳은 결정적인 요인은 경제위기를 경험한 타이밍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4년 내에 경제위기를 겪은 1976-78년생에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그다음 코호트부터 변화가 분명해질 것이다. 둘째, 성별이나 계층과 같은 경로를 규정하는 주요 차원의 영향력은 어떻게 변했는가? 기본적으로 성별 차이는 줄어들고 계층 차이는 지속되거나 영역에 따라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리라 예상한다. 계층화의 수준 변화보다는 계층화 지점의 이동이 더 주목할 부분이라는 것이 이 연구의 가설이다. 과거에는 특정 수준의 교육이나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부에서 차이가 나타났다면 최근에는 교육이나 노동시장에서 어떤 지위를 갖는가를 두고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셋째, 각 지점의 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관통하는 변화의 추이와 성격은 무엇인가? 각 이행 국면에서의 변화를 종합하면 성인 이행 경로의 연장과 계층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가설에 따르면 그것은 교육-노동시장의 제도적 연계가 기본적으로 약한 맥락에서 경제위기의 충격이 연계를 깨버린 결과다. 즉 급격한 교육 팽창에 따른 형식적 기회 평등화가 노동시장의 위계화 추이와 만나면서 생긴 결과가 성인 이행기의 연장과 분화다.

## 3. 자료와 분석 방법

### 1)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20차

분석 자료는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다. 노동패널조사는 국내 유일의 노동 관련 가구패널조사다. 1998년 당시 도시에 거주하는 5,000가구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 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

는 15세 이상 가구원 13,321명)을 대상으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조사했고, 2009년부터는 원표본에 농촌 지역을 포함한 일반가구 1,415개를 추가하여 조사한다(한국노동연구원, 2019a).[27] 이 연구에서는 1998-2017년의 개인자료(1~20차)와 2017년도 직업력 자료를 활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도농 전체의 대표성을 확보한 통합표본을 선택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직업력 자료다. 이 자료는 회고적 일자리를 포함해 개인이 15세 이래 경험한 모든 일자리 정보를 기업형태 및 규모, 고용형태, 취업시점 및 퇴직시점, 업종과 직종, 종사상지위, 근로시간 형태, 임금 및 소득 등으로 구분해 담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19a). 그 외 가구 및 개인자료에는 분가 시점이나 결혼 시점, 출산 시점 등이 담겨 있다.

청년의 성인 이행 이력을 구성할 수 있는 패널 조사에는 노동패널조사 외에도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하는 '청년패널조사'(2001~)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06~),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하는 '한국교육고용패널'(2004~)등이 있다(이희길, 2008: 23). 이들 자료는 조사 기간이 짧거나 조사항목에 가족 정보가 적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 2) 분석 방법: 코호트 분석

이 연구는 코호트 분석 전략을 취한다. 코호트 분석은 일반적으로 코호트 간 차이를 비교하는 방식을 지칭한다. 그러나 코호트 간 차이를 깊게 비교하려면, 코호트 내 차이, 정확히 말하면 코호트의 성격을 규정하는 구성 변수들의 분포 변화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Ryder, 1965: 847). 시간의 맥락에 따른 차이라는 코호트 연구의 근본 전제에 비추어 볼 때 출생 시점이라는 근본적인 맥락의 성격은 구체적인 발달 과정에서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출생 코호트 내의 하위 구성 집단이 만들어 내는 이력을 확인하는 작업은 코호트 차이의 성격과 동학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된다. 이 점이 전형적인 문화론적 세대 연구와 계층론적 이행 연구가 간과하는 지점이다. 코호트 간 비교와 코호트 내 비교는 서로의 성격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계층과 젠더 축이 맞물리는 방식의 변화로 코호트 차이를 설명하는 것과 동시에 코호트 차이로 계층과 젠더 변수의 의미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

27) 2020년 6월 기준 1차(1998년)-21차 조사(2018년) 자료가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li.re.kr/klips/index.do)와 사회과학자료원(KOSSDA) 홈페이지(김유빈. 한국노동패널조사, 1998-2018 [1-21차] [데이터 세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20-03-30, A1-CUM-0033, V1.0, http://hdl.handle.net/20.500.12236/23781)에 공개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1-20차 자료(2017년)를 활용했다.

### (1) 종속 변수: 성인기 이행 이력

성인기 이행 경로는 교육이력, 노동이력, 가족이력으로 구분해 파악한다.

교육이력은 졸업 학교급과 졸업 시점으로 측정한다. 졸업 학교급은 노동이력과 가족이력을 종속변수로 둔 모형에서 통제변수로도 활용되기에 측정 방식은 이후에 설명한다. 여기서는 졸업 시점을 설명한다. 졸업 시점은 학교를 떠날 당시 연령으로 측정된다. 졸업 연령이 만 15세 이하(14개 사례)이거나 만 34세 이상인 경우(169개 사례) 삭제했다. 노동이력을 졸업시점을 기준으로 구성하기에 학교급에 따른 졸업시점의 폭을 어느 정도는 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변수의 값이 늘 '졸업한 해'의 나이는 아니라는 것이다. 중퇴자의 경우 중퇴한 해의 나이를 기입한 경우가 있다. 특히 고졸자나 전문대졸자의 경우 일부 사례는 전문대학을 중퇴한 경우이거나 대학을 중퇴한 경우다. 이 점은 졸업 연령에 대한 분석을 기술한 3장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노동이력은 1970-84년생이 학교를 졸업한 후 7년(84개월)간 밟은 이력이다. 노동이력을 구성하는 '노동지위'는 임금노동여부, 고용형태, 기업규모를 고려해 7개 범주로 구성했다. 7년의 이력을 분석 단위로 삼으면 노동시장 진입과 퇴장을 함께 고려한 노동이동 패턴을 알 수 있다.

가족이력은 1970-84년생이 만 28-33세에 형성한 동거가족의 배열로 구성된다. 노동이력과 가족이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면 성인기 이행 경로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다.

교육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1970-84년생이 노동시장에 나온 시기는 1990-2000년대를 아우른다. 경제위기 전후 10년이다. 따라서 이들의 노동이력을 규명하는 작업은 경제위기 전후 청년 노동시장의 변화를 규명하는 작업이 된다(이상직·김이선·권현지, 2018; 김이선·이상직·권현지, 2019). 마찬가지로 이 시기는 '저출산'으로 상징되는 가족이행 패턴에서의 변화가 급격했던 때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의 가족이력을 규명하는 작업 또한 재생산 영역에서의 전환기를 규명하는 작업이 된다.

이 연구가 포착하는 생애의 시간 범위와 이력을 단위로 한 분석 방식에 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관찰 범위가 좁다고 볼 수 있고, 이력이 아니라 주요 생애 사건의 이행 시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생애에서 결정적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짧은 기간이 아니다. 먼저 이 시기에 주된 역할 전환이 일어난다. 이 시기의 국면이 향후 중년과 노년의 삶의 이력도 상당 부분 결정한다. 두 번째 의문에 대한 답도 이 시기가 결정적 국면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짧은 기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단위 시간(여기서 나이)당 변화

가 크다는 뜻이다. 따라서 7년이나 5년과 같은 짧은 구간이라도 내부 차이가 클 수 있고, 따라서 특정 시점이나 특정 이행만 보면 상당한 정보를 생략할 위험이 있다.[28] 따라서 이 국면 자체를 분석 단위로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분석 전략이 갖는 의의는 특정 생애 영역·국면의 변화를 통합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Furlong, Woodman, and Wyn, 2011). 통합이란 과거와 현재를 연계한다는 뜻이면서, 생애 영역(생산-재생산, 공적-사적 영역)을 연계한다는 뜻이다. 1990년대에 들어와 서구 주요 나라에서 여성의 교육 참여 수준이 두드러지게 증가(Andres and Wyn, 2010; Furlong and Cartmel, 2008[1997]: 57)하면서 이를 '탈젠더화' 현상으로 평가하는 연구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 시기 고등교육을 받은 이들의 노동·가족 경험에 주목한 연구들은 교육 제도에서의 '혁명적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사회 전반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완"(Esping-Anderesn, 2014[2009]; Gerson, 2010)의 혁명이라고 평가했다. 소수의 '성공한' 여성 사례를 강조하는 것이 다수의 열악한 지위에 있는 여성의 경험을 가린다는 비판(나임윤경, 2005: 164)이나, 그런 강조가 교육·고용·소비 영역에서 여성의 적극적인 역할을 독려하려는 통치 전략이라는 비판(McRobbie, 2007: 723)도 있다. 이런 평가는 생애를 단위로 현상을 분석했기에 내릴 수 있는 것이었다. 특정 행위를 생애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은 삶의 주요 영역 간 연계가 점차 약화되는 오늘날 더욱 필요하다. 이 연구는 교육·노동·가족 제도와 생애가 만나는 지점을 특정 코호트의 생애 이력으로 포착함으로써 이행의 의미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 (2) 독립변수

#### ① 코호트 간 차이: 5개 하위 코호트

코호트 간 차이는 3년을 구획한 5개 하위 코호트 비교로 확인한다. <표 2-1>은 15년 출생집단을 3년 단위 코호트로 구분하고 각 코호트가 각급 학교에 진학하고 졸

28) 연령이 실질적으로 의미를 가질 때는 그것이 사회조직과 제도 속에 한 개인의 위치와 역할을 표식할 때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5-20세의 15년과 20-35세의 15년, 35-60세의 15년은 의미가 다르다. 사회적 위치의 표식으로서의 연령의 의미를 연결망의 구조로 확인한 연구(김이선·한신갑, 2014: 14)에서 한국인의 연령 구간은 7개로 나뉘는데, 구간 폭이 가장 좁은 것이 27-30세이고, 가장 넓은 것이 40-67세이다. 첫 번째 연령 구간이 좁은 이유는 이 기간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는 등 사회에서 성인으로 자리 잡아가는 급변기이기 때문이다. 반면 사회적 안정을 이룬 40세 이후는 은퇴 연령인 65세 무렵까지 거의 변화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앞의 3년은 뒤의 27년과 같은 구조적 의미를 갖는다. 7개 구간은 다음과 같다. 18-26세, 27-30세, 31-39세, 40-67세, 68-76세, 77-93세다.

업한 시점의 연도를 표시했다.[29] 더불어 4장과 5장에서 분석할 노동이력과 가족이력의 위치도 연도를 기준으로 표시했다.

3년으로 구분한 것은 이 하위 집단이 한국 사회의 교육, 노동, 가족제도의 변화상의 주요 국면과 대략 조응하기 때문이다.

<표 2-1> 출생 코호트별 제도적 시간표

| 출생코호트 | | | 70-72년 | 73-75년 | 76-78년 | 79-81년 | 82-84년 |
|---|---|---|---|---|---|---|---|
| 초등학교 입학(7세) | | | 77-79년 | 80-82년 | 83-85년 | 86-87년 | 89-91년 |
| 중학교 입학(13세) | | | 83-85년 | 86-88년 | 89-91년 | 92-94년 | 95-97년 |
| 고등학교 입학(16세) | | | 86-88년 | 89-91년 | 92-93년 | 95-97년 | 98-00년 |
| 고등학교 졸업/대학교 입학(19세) | | | 89-91년 | 92-94년 | 95-97년 | 98-00년 | 01-03년 |
| 전문대학 졸업 | 여(22세) | | 92-94년 | 95-97년 | 98-00년 | 01-03년 | 04-06년 |
| | 남(24세) | | 94-96년 | 97-99년 | 00-02년 | 03-05년 | 06-08년 |
| 대학 졸업 | 여(24세) | | 94-96년 | 97-99년 | 00-02년 | 03-05년 | 06-08년 |
| | 남(26세) | | 96-98년 | 99-01년 | 02-04년 | 05-07년 | 08-10년 |
| 노동이력 (졸업 후 7년) | 고졸 | 여(26세) | 96-98년 | 99-01년 | 02-04년 | 05-07년 | 08-10년 |
| | | 남(26세) | 96-98년 | 99-01년 | 02-04년 | 05-07년 | 08-10년 |
| | 전문대졸 | 여(29세) | 99-01년 | 02-04년 | 05-07년 | 08-10년 | 11-13년 |
| | | 남(31세) | 01-03년 | 04-06년 | 07-09년 | 10-12년 | 13-15년 |
| | 대졸 | 여(31세) | 01-03년 | 04-06년 | 07-09년 | 10-12년 | 13-15년 |
| | | 남(33세) | 03-05년 | 06-08년 | 09-11년 | 12-14년 | 15-17년 |
| 가족이력 | 28세 | | 98-00년 | 01-03년 | 04-06년 | 07-09년 | 10-12년 |
| | 33세 | | 03-05년 | 06-08년 | 09-11년 | 12-14년 | 15-17년 |

5개 코호트의 위치는 1차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시점으로 파악할 수 있다. 1970-84년생 대다수가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이다. 이 집단의 성인기 이행 국면을 규정한 핵심 사건이었을 경제위기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1970-72년생만이 1990년대 중반 한국 사회의 성격이 전반적으로 변화하기 전에 졸업했다. 1973-75년생과 1976-78년생은 1990년대 중반 사회 변화가 시작될 무렵에 졸업한 코호트다. 1979-81년생은 경제위기 직후에 졸업했고, 1982-84년생은 경제위기 직후의 파장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시기에 졸업했다. 이렇게 보면 각 하위 코호트는 변화 이전, 변화 시작, 위기 직후, 위기 이후 국면을 드러내는 집단으로 자리 매겨진다. 이 위치의 차이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선택(취업, 진학)과 생애 경로를 규정하는 1차 맥락이 된다.

고등학교 졸업 후 상급학교 진학을 가정하면 출생 시점에 따른 위치는 교육 수준

29) 전문대학 및 대학 졸업 연령은 자료에서 확인한 평균 값에 따라 설정했다. 고등학교 졸업 연령에 비해 전문대학 졸업 연령은 여성이 약 3세, 남성이 약 5세 많고, 대학 졸업 연령은 여성이 약 5세, 남성이 약 7세 많다. 상세 내용은 3장을 참조.

과 성별에 따라 세분화된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여성의 졸업 시점이 가장 이를 것이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남성의 졸업 시점이 가장 늦을 것이다. 남성은 대개 대학교 졸업 이전에 군복무를 마치기 때문이다. 전문대졸 여성과 4년제대졸 남성의 졸업 시점 차이는 약 4년이다. 성별과 학력에 따른 졸업 시점 차이는 노동이력이 전개된 시대적 맥락 차이로 이어진다. 이 연구에서 노동이력은 졸업 시점으로 측정되기 때문이다. <표 2-1>을 기준으로 말하면 1973-75년생 고졸 여성은 경제위기 이전인 1992-94년에 졸업했지만, 1973-75년생 대졸 남성은 경제위기 직후인 1999-2001년에 졸업했다. 고졸 여성 노동이력의 시간 범위는 1992-94년에서 1999-2001년이다. 대졸 남성 노동이력의 시간 범위는 1999-2001년에서 2006-08년이다. 고졸 여성은 7년 노동이력의 후반기에 경제위기를 접했으며, 대졸 남성은 노동이력 시작 시점에서 경제위기를 접했다. 이 맥락 차이가 갖는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가족이력의 관측 시간대를 연로도 보면, 1970-72년생은 1998-2000년에서 2003-05년에 걸쳐 있고, 1982-84년생은 2010-12년에서 2015-17년에 걸쳐 있다. 그러나 연령으로 보면 관측 시간대가 모두 만 28-33세로, 성별·교육 수준별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노동이력과 가족이력을 결합해서 보려는 이 연구의 맥락에서는 노동이력의 시간적 맥락 차이가 가족이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결국 출생 코호트라는 위치가 갖는 의미는 성별과 교육 수준으로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

<표 2-2> 분석 사례 수

| | 남성 | | | 여성 | | | 합계 |
|---|---|---|---|---|---|---|---|
| | 고졸 이하 | 전문대졸 | 대졸 이상 | 고졸 이하 | 전문대졸 | 대졸 이상 | |
| 70-72년 | 175 | 75 | 140 | 241 | 70 | 81 | 782 |
| | 22.4 | 9.6 | 17.9 | 30.8 | 8.9 | 10.4 | 100.0 |
| 73-75년 | 117 | 92 | 160 | 149 | 80 | 118 | 715 |
| | 16.3 | 12.8 | 22.4 | 20.8 | 11.1 | 16.6 | 100.0 |
| 76-78년 | 100 | 78 | 159 | 90 | 94 | 141 | 663 |
| | 15.1 | 11.7 | 24.1 | 13.5 | 14.3 | 21.3 | 100.0 |
| 79-81년 | 92 | 115 | 175 | 114 | 133 | 186 | 815 |
| | 11.3 | 14.1 | 21.5 | 13.9 | 16.3 | 22.8 | 100.0 |
| 82-84년 | 100 | 111 | 191 | 75 | 85 | 169 | 731 |
| | 13.6 | 15.2 | 26.1 | 10.3 | 11.7 | 23.1 | 100.0 |
| 합계 | 584 | 470 | 825 | 668 | 462 | 696 | 3,705 |
| | 15.8 | 12.7 | 22.3 | 18.0 | 12.5 | 18.8 | 100.0 |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표 2-2>는 성별과 교육수준별, 그리고 코호트별 분석 사례 수를 나타낸다.[30] 세 차원의 조합으로 구성한 범주별 사례 수를 확인하면, 최소값이 70(70-72년 코호트의 전문대졸 여성)이고, 최대값이 241(70-72년 코호트의 고졸이하 여성)이다.

### ② 코호트 내 차이: 성별과 가족배경

코호트 내 차이는 성별과 교육 수준을 기준으로 파악할 것이다. 두 요인이 라이프코스를 규정하는 젠더와 계층의 결합 양상을 파악하는 축이 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계층 차이를 보려면 교육 수준과 함께 가족배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족배경 효과는 자녀의 교육 수준으로 환원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성별 변수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고, 교육 수준 변수는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으로 구분된다. 결측 사례는 1개로 '중졸이하'로 분류했다. 다음으로, '중졸이하'와 '고졸'을 '고졸이하'로 묶고 '대졸'과 '석사이상'을 '대졸이상'으로 묶었다.

가족배경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변수는 부모의 학력과 직업지위, 소득수준이다(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12). 이 셋을 묶어 사회경제적 지위(Social Economic Status, SES)로 통칭하기도 한다. KLIPS에서도 해당 문항들이 있다. 부모의 학력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구분해 묻고 있고, 직업지위의 경우 응답자

30) 이하에서 제시하는 모든 (교차) 빈도표는 20차 조사자료의 횡단면 개인가중치(통합표본)를 적용한 값이다. 따라서 합계 숫자가 맞지 않을 수 있다.

가 14세 무렵의 부모의 종사상지위로 묻고 있다. 소득수준의 경우 직접 측정하지는 않는다. 가구 소득을 측정하기는 하지만 1970-84년생 부모의 소득을 파악할 수는 없다. 대신 응답자가 14세 무렵의 가정경제형편을 주관적으로 답하는 문항이 있다.

이 연구는 이들 변수를 별개로 활용하기보다는 이들 네 개 변수를 통합한 '가족배경' 변수를 활용한다. 이들 변수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방식은 위 네 변수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네 개 중 한 변수를 사용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아버지 교육 수준이다(변금선, 2018). 마지막으로는 이 연구에서 택한 것과 같이 네 변수의 정보를 모두 고려한 일종의 통합 변수(composite variable)를 만들어 활용하는 것이다.

아버지 교육 수준과 같이 단일 변수를 활용할 때의 장점은 결과를 해석하기 쉽다는 것이다. 반면 가족 배경의 복합적인 영향력을 고려하지는 못한다. 같은 맥락에서 특정 변수를 사용하는 이론적, 방법론적 근거가 뚜렷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 수준과 같은 범주(서열) 변수의 경우 척도가 촘촘하지 않아 분석기법이 제약된다는 한계도 있다. 네 변수 모두를 활용하면 이러한 한계가 대부분 사라지지만, 표본이 충분히 크지 않으면 네 변수 각각의 고유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표본이 크다고 하더라고 네 변수의 관계를 분명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계적으로 투입할 경우 다중공선성 등의 문제로 변수의 효과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

통합 변수를 사용하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물론 통합 변수의 경우 여러 성격의 변수가 결합되어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에 정확한 의미를 읽어내기 쉽지 않다. 그러나 가족배경의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분석 결과를 간명하게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여러 변수를 결합함으로써 변수의 척도를 좀 더 촘촘하게 만들 수 있다. 이 경우 다양한 분석을 해볼 여지가 커진다. 이런 이유로 특히 사회경제적지위(SES)를 통합 변수로 측정하는 연구가 상당수 있다(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12).

통합 변수는 이 네 변수의 분산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을 추출하는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PCA) 기법으로 도출했다. 이 기법은 이른바 사회경제적지위 지수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쓰인다. 종합하면, 이 연구에서 가족배경은 아버지 교육 수준과 어머니 교육수준, 주로 아버지의 종사상지위, 그리고 가정의 경제형편을 통합한 자원에 접근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단일 변수로 측정된다. 통합 변수 도출해 활용된 변수의 정보와 통합 변수 도출 절차는 <부록 1>을 참조하라.

<표 2-3> 분석 변수의 분포

| 변수 | 범주 | 남 (n: 1,681) | | 여 (n: 1,844) | | 합계 (N: 3,705) | |
|---|---|---|---|---|---|---|---|
| | | 빈도 | % | 빈도 | % | 빈도 | % |
| 코호트 | 70-72년생 | 386 | 20.8 | 396 | 21.5 | 782 | 21.1 |
| | 73-75년생 | 364 | 19.6 | 350 | 19.0 | 715 | 19.3 |
| | 76-78년생 | 334 | 18.0 | 328 | 17.8 | 662 | 17.9 |
| | 79-81년생 | 379 | 20.4 | 437 | 23.7 | 816 | 22.0 |
| | 82-84년생 | 398 | 21.4 | 333 | 18.0 | 730 | 19.7 |
| 가족배경(-2.6~2.7) | | -0.02† | (1.01) | 0.13† | (1.01) | 0.05† | (1.01) |
| 교육 수준 | 고졸이하 | 578 | 31.1 | 675 | 36.6 | 1,253 | 33.8 |
| | 전문대졸 | 466 | 25.0 | 466 | 25.3 | 932 | 25.2 |
| | 대졸이상 | 817 | 43.9 | 702 | 38.1 | 1,520 | 41.0 |
| 졸업연령(18~33세) | | 23.65† | (3.80) | 21.99† | (3.22) | 22.82† | (3.62) |
| 노동 이력 유형 |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 | 303 | 16.3 | 147 | 8 | 450 | 12.2 |
| | 대기업 비정규직 지속형 | 116 | 6.2 | 108 | 5.9 | 224 | 6.1 |
| |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형 | 257 | 13.8 | 208 | 11.3 | 465 | 12.5 |
| | 혼합형 | 134 | 7.2 | 310 | 16.8 | 445 | 12 |
| |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속형 | 347 | 18.6 | 339 | 18.4 | 686 | 18.5 |
| | 중소기업 비정규직 늦은 진입형 | 374 | 20.1 | 191 | 10.3 | 564 | 15.2 |
| | 비취업 지속형 | 331 | 17.8 | 540 | 29.3 | 871 | 23.5 |
| 가족 이력 유형 | 부모 | 496 | 26.7 | 260 | 14.1 | 757 | 20.4 |
| | 혼자 | 330 | 17.7 | 137 | 7.4 | 466 | 12.6 |
| | 배우자+자녀 | 451 | 24.2 | 842 | 45.7 | 1,292 | 34.9 |
| | 배우자+(자녀) 이행 | 585 | 31.4 | 605 | 32.8 | 1,189 | 32.1 |

†: 평균(표준편차),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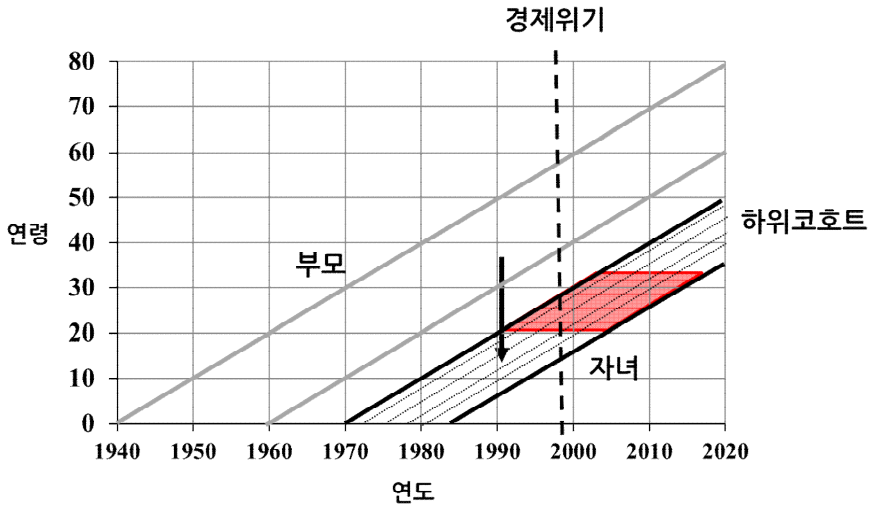
<표 2-3>은 이 연구에서 활용된 변수의 기본 정보를 남녀로 구분해 제시한다. 분석 사례 수는 3,705명이다. 코호트 변수는 총 5개 범주로 구성된 명목변수다. 각 코호트의 크기는 662명에서 816명까지 다양하다. 그 규모는 1970-72년생이 크고 1973-75년생, 1976-78년생으로 오면서 줄다가 1979-81년생에서 늘어나고, 1982-84년생에서 다시 줄어든다. 남녀 비중은 50.2%와 49.8%로 거의 같다. 교육 수준 평균은 남성이 높다. 이들 분포는 다른 집계 자료로 확인한 분포와 유사하다.

가족배경 변수는 일종의 지수 변수로 −2.6에서 2.7까지의 값을 갖는 연속 변수다. 교육 수준 변수는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으로 구분했다. 졸업 연령은 만 18-33세의 범주를 갖는 연속변수다.

### (3) 분석 개요

분석 개요를 요약한 것이 <그림 2-2>이다. 1970-84년생의 성인 이행 이력은 1차적으로 출생 시점으로 규정된다고 가정한다. 출생 시점의 효과는 3년 단위 하위코호트를 구성해 확인한다. 이 그림에서 대각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행 이력은 1970-84년생이 20-30대 중반에 걸쳐 형성한 노동이력과 가족이력으로 구분해 확인한다. 이 그림에서 사각형으로 표시한 구간에 형성된 이력이다. 이 이력을 <표 2-2>에서 제시한 것처럼 남녀로, 교육 수준별로 구분해 확인한다.

<그림 2-2> 분석 개요




가족배경 변수를 구성할 때 고려한 변수들은 부모가 대략 40대 전후였을 무렵의 지위를 나타낸다. 이 지위가 자녀 이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가정한다. <그림 2-2>에서 화살표로 표시한 효과다.

이 연구에서 말하는 코호트 효과의 1차적 의미는 성별이나 교육 수준, 가족배경 변수와 특정 노동이력 유형이나 가족이력 유형에 속할 가능성 간 관계의 성격이다. 첫 번째 코호트에서는 성별 변수의 효과가 컸는데 마지막 코호트에서는 그것이 크지 않다면, 이러한 맥락에서 첫 번째 코호트와 마지막 코호트는 다른 것이다. 코호트 효과의 2차적 의미는 성별, 교육 수준, 가족배경 변수의 분포 변화로 설명될 수 없는 코호트 간 차이다. 그것은 1차적으로는 기회구조의 차이(이철승, 2019)를 뜻하고, 2차적으로는 그에 대한 집단적 대응의 결과로 형성된 행위 패턴(이철승, 2019)이

나 의식 패턴(이왕원·김문조·최율, 2016)을 뜻한다.

### 3) 분석 기법: 배열 분석

#### (1) 배열 분석

이 연구는 노동이력, 가족이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된 이력을 분석한다. 이때 활용되는 기법이 배열 분석이다.[31][32] 배열 분석은 크게 배열을 구성하고, 배열을 유형화하고, 유형을 독립변수나 종속변수로 삼아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사례별로 이력을 구성하면 각 이력을 비교해 유사한 것들끼리 묶어 이력군의 패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별 이력 단위로 비교하기에는 이력 구성의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배열 비교는 배열들끼리의 거리를 측정하는 단계와 각 배열 짝의 거리에 기초해 유사한 배열들끼리 집단으로 묶는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 널리 활용되는 방법은 Abbott이 제안한 최적일치법(optimal matching methods)이다(Abbott, 1995; Abbott and Forrest, 1986; Abbott and Hrycak, 1990; Abbott and Tsay, 2000; 한준·장지연, 2000; 장지연·이혜정, 2008; 양종민, 2017). 서로 다른 두 배열을 똑같은 배열로 만드는 여러 방식 중 비용이 가장 적은 방식을 찾는 방법이다.

배열 ABC와 배열 AC의 거리를 구한다고 해보자.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식은 두 가지다. 첫 번째 배열에서 가운데에 있는 B를 삭제하거나 두 번째 배열에서 A와 C 사이에 B를 삽입한다. 이처럼 삽입(insertion)/삭제(deletion) 작업을 보통 분자 생물학의 용어를 빌려 '가감'(indels)이라고 부른다. 다음 예로 ABC 배열과 BBC 배열을 서로 같게 만들어야 한다고 해보자. 여기서도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 번째 배열에서 A를 B로 교체하거나 두 번째 배열에서 첫 번째 B를 A로 교체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보통 '대체'(substitutions)라고 부른다. 모든 배열은 가감 작업과 대체 작업으

---

31) 시퀀스 분석(Social Sequence Analysis)이라고도 불리는 배열 분석은 △△의 ○○력을 분석하는 기법 중 하나다. 여러 시퀀스를 구성하고, 거기서 패턴을 찾고, 그 패턴을 비교하고 분류하는 절차와 기법을 통칭해 '분석'이라고 부른다(Cornwell, 2015). 생물학에서 염기서열을 분석하기 위해 발달한 기법을 빌려와 1990년대부터 미국과 유럽의 사회과학계에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패널 자료가 쌓이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이 기법을 활용한 연구가 나오고 있다(한준·장지연, 2000).

32) 이 외에도 집단 단위 궤적 모형(Group-based trajectory model)과 같은 기법이 있다(Doherty, Laub and Sampson, 2009; 박미희·홍백의, 2014; 변금선, 2018). 이력을 구성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여러 기법의 특징을 비교한 연구로 Raudenbush(2001)와 Warren, Luo, Halpern-Manners, Raymo and Palloni(2015) 참조.

로 서로 같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두 배열을 같게 만들기 위해 수행한 가감 작업과 대체 작업의 수로 두 배열의 거리가 구해진다. 작업 횟수가 적을수록 두 배열은 그만큼 가깝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두 배열이 같아질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 즉 두 배열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이 최적일치법이다.

문제는 각 작업의 비용을 설정하는 일이다. 각 작업에 부여된 비용에 따라 두 배열을 같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비용 최소값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각 작업에 서로 다른 비용을 부여하면 두 배열을 같게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각 작업의 비중도 달라진다.

가장 단순하게 비용을 설정하는 방법은 가감 작업과 대체 작업에 동일한 값, 즉 1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두 배열을 같게 만들기 위해 한 작업의 총 횟수가 거리가 된다. 이 거리를 러시아의 과학자 블라디미르 르벤슈타인(Vladimir Levenshtein)의 이름을 따라 '르벤슈타인 거리'라고 부른다(Cornwell, 2015: 115). 최적일치법을 사용해 거리를 계산한다고 할 때 계산되는 거리가 르벤슈타인 거리다.

그러나 가감 비용과 대체 비용이 같다고 볼 근거는 없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타이밍'과 '순서' 중 어느 것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비용 부여 방식이 나뉜다. 배열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어떤 시점에 있는지를, 즉 타이밍을 중시하면 가감 비용을 대체 비용보다 높게 책정한다.[33] 가감 비용을 극단적으로 높게 책정하면 대체 작업만 고려되는 해밍 거리가 계산된다. 반면 각 요소의 위치보다 요소들의 배열, 즉 흐름을 더 중시하면, 대체 비용을 높게 책정한다. 대체 비용을 극단적으로 높게 책정하면 가감 작업만 고려되는 '르벤슈타인 Ⅱ 거리'가 계산된다(Cornwell, 2015: 117-118; Lensard, 2010: 396-397).[34]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일부 연구자들은 배열의 길이가 같으면 가감 비용에 높은 값을 부여하고, 배열의 길이가 다르면 대체 비용에 높은 값을 부여한다.[35]

---

33)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대체'보다는 '삽입/삭제'에 더 큰 값을 부여한다. 대체 작업으로는 전체 배열의 길이나 대체한 상태 이외 상태들의 순서가 바뀌지 않지만, 삽입/삭제 작업으로는 둘 모두 바뀌기 때문이다. 삽입과 삭제는 대칭적이어서 많은 연구자가 기본 값으로 1을 부여한다(한준, 2001).

34) 보통 기존의 대체 작업에 부여한 값의 두 배를 부여한다. 대체 작업이 삭제 한 차례, 삽입 한 차례 총 두 차례 작업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된 거리를 '르벤슈타인 Ⅱ 거리'라고 부른다(Cornwell, 2015: 116). 이와는 반대로 대체 작업만을 사용해 계산된 거리를 미국의 수학자 리처드 해밍(Richard Hamming)의 이름을 따 '해밍 거리'라고 부른다. 대체 작업만으로 두 배열을 같게 만든다는 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방법은 길이가 같은 배열을 비교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Cornwell, 2015: 116).

35) 배열의 길이가 다를 경우 대체로 배열 길이를 표준화해준다(Cornwell, 2015: 124-125).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한 쌍의 배열에서 계산된 거리를 둘 중 긴 배열의 길이로 나누어

더 큰 문제는 삽입/삭제이건 대체이건 같은 성격의 작업이면 비용이 같다고 가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Wu, 2000). 같은 대체라도 A→B와 B→A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정규직→비정규직'과 '비정규직→정규직'의 가능성이, 또는 '비혼→기혼'과 '기혼→비혼(이혼/사별)'의 가능성이 다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 걸음 더 나가면 교체 위치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Wu, 2000). 비취업/취업 전환이 활발한 20대에 비취업에서 취업으로 전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40대에 비취업에서 취업으로 전환하는 것의 의미는 다를 수 있다. 이 경우 교체 시점까지 고려해야 한다.

최근에 발전된 분석 기법은 이처럼 크게 세 측면에서 제기된 비판에 대해 연구자들이 내놓은 답이다(Aisenbrey and Fasang, 2010). 핵심은 분석 자료에서 확인된 상태 간 이행 확률에 따라 교체 비용 값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두 상태 간 이행 확률이 클수록 두 상태의 교체 값이 낮게 부여된다.

1차적인 방식은 두 상태 간 이행을 상호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확률의 평균값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A를 B로 교체하는 경우나 B를 A로 교체하는 경우의 확률 차이를 고려하기는 하지만 그 차이를 직접 반영하지는 않는다. 두 확률의 평균값을 두 경우 모두에 부여한다.

앞의 방식이 무엇과 무엇을 바꾸는가를 고려하는 것이라면, 다음으로 소개할 방식은 무엇과 무엇을 언제 바꾸는가를 고려하기 위해 고안된 방식이다. 이 방식의 기본 원리는 구간(spell)[36]이라고 불리는 맥락을 고려해, 구간 자체를 바꾸지 않는 교체의 비용은 그렇지 않은 교체 비용보다 낮게 책정한다. 이는 배열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순서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개발된 알고리즘으로는 '지속기간을 고려한 최적일치법'(Duration-Adjusted OM, OMv)(Halpin, 2010)와 '맥락화한 최적일치법'(Localized OM, LOM)(Hollister, 2009), '시간왜곡을 최소화하는 최적일치법'(Time Warp Edit Distance, TWED)(Marteau, 2009) 등이 있다.

시점을 고려한 또 다른 계산법으로 최근에 많이 활용되는 알고리즘은 다이나믹 해밍 거리다(Lesnard, 2010). 이 방법은 A에서 B로 전환될 확률을 전환 시점, 즉 배열에서의 위치별로 계산해 대체 비용을 위치별로 부여하는 것이다.

---

주는 것이다(Abbott and Hrycak, 1990). 둘째, 랜덤 샘플을 추출하는 것과 같이 긴 배열의 요소들을 무작위로 추출해 짧은 배열의 길이와 같은 배열을 만들어 거리를 재는 것이다(Dijkstra and Taris, 1995).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방식으로, 각 배열들을 전제 없이 무조건 비교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유의미한 준거 배열을 구성해 이것과 실제 배열들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McVicar and Anyadike-Danes, 2002)도 있다.

36) 배열 SSUAAASSS는 총 네 구간(spell)—SS, U, AAA, SSS—으로 구성된다.

<표 2-4> 배열 간 거리 계산 작업 비용 체제

| 작업 비용 체제 | 작업 | | 강조점 |
|---|---|---|---|
| | 교체 | 삽입/삭제 | |
| Levenshtein | Yes (cost = 1) | Yes (cost = 1) | 타이밍과 순서 |
| Levenshtein II | No (cost = ∞) | Yes (cost = 1) | 순서 |
| Hamming | Yes (cost = 1) | No (cost = ∞) | 타이밍 |
| Duration-Adjusted OM<br>Localized OM<br>Time Warp Edit Distance | 맥락(spell)을 고려한 전환 확률에 따라 비용 부여 | | 지속기간 고려 |
| Dynamic Hamming | 맥락(timing)을 고려한 전환 확률에 따라 비용 부여 | | 시점별 전환 확률 고려 |

출처: Cornwell(2015: 118)의 <표 5-1>을 보완

지금까지 개괄한 여러 거리계산법은 <표 2-4>로 정리했듯이 각기 나름의 강조점이 있다. 따라서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자료의 맥락과 이론적 관점에 비추어 연구자가 판단해야 할 문제다.[37]

이 연구에서 선택한 방법은 다이나믹 해밍 계산법이다. 모든 배열의 길이가 동일하기에 교체 작업만으로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고, 요소 간 교체 확률을 고려하되, 시점별 교체 확률 차이까지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배열 쌍의 거리가 계산되면 이 값을 상이성 지수로 삼아 두 번째 단계인 군집분석을 할 수 있다. 군집분석의 절차는 다른 연구들에서도 자주 활용되는 분석 절차와 동일하다(Aldenderfer and Blashfield, 1984; Bartholomew et al, 2008: Chap. 2). 이 연구에서는 군집분석 상에서 각 요소의 거리를 측정하는 4가지 방법(근점연결법 single linkage, 원점연결법complete linkage, 평균연결법average linkage, 와드연결법 ward's linkage) 중 자주 활용되는 두 가지 방법(평균, 와드)으로 집단을 도출한 뒤, 좀 더 적절하게 구분되었다고 판단한 결과를 채택했다.[38] 군집의 수는 PBC(Point Biserial Correlation)나 ASW(Average Silhouette Width), HGSD(Hubert's Somers D)와 같은 군집 분석 결과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39]와 더불어 해석적 의미와 사례 수, 덴드

37) 최적일치법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거리측정법의 원리, 또 이를 둘러싼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이 궁금하다면, Abbott and Tsay(2000)와 Cornwell(2015: 5장), 한준(2001)을, 비용 부과 방식을 둘러싼 최근 논쟁이 궁금하다면 Aisenbrey and Fasang(2010)과 Brzinsky-Fay and Kohler(2010)를 참조.

38) 배열을 군집으로 묶는 방법 가운데 와드연결법은 다른 방법들에 비해 군집의 규모를 비슷하게 묶어준다(Aisenbrey and Fasang, 2010).

39) 정확한 군집 수를 결정해 줄 통계기법은 없지만, 군집화 결과의 질을 사후에 평가하는

로그램 등을 고려해 정했다.

지금까지 요약한 분석의 절차, 즉 배열 간 거리를 비교해 유사한 배열끼리 집단으로 묶어내는 작업은 STATA의 SQ package(Brzinsky-Fay, Kohler and Luniak, 2006)와 SADI package(Halpin, 2017)로 수행했다. 두 패키지 모두 배열 형태로 조직된 자료를 분석해 배열 간 거리를 계산하고 이 거리에 따라 군집 분석을 할 수 있는 명령어들을 모아 둔 것이다. 위 작업 외에도 이 패키지로 배열의 특징을 숫자로 기술하거나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

### (2) 회귀 분석

다음 단계의 분석으로, 여러 방식으로 측정한 이력을 유형화한 '이력 유형'을 종속변수로 두고 앞서 언급한 성별, 교육 수준, 가족배경을 독립변수로 둔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 LPM)을 구성해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

선형확률모형은 종속변수의 1값에 속할 확률이 설명변수 x에 따라 선형적으로 변한다는 가정의 모형이다. 범주가 여러 개인 명목 변수를 종속변수로 둘 때에 보통 활용하는 모형은 다항로짓모형이다. 그러나 이 모형은 결과를 해석하기 어렵다. 이항 로짓분석을 여러 차례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선형확률모형의 경우 서로 다른 표본들의 추정치를 비교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상호작용효과를 해석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용되는 것이 선형확률모형이다(최성수·이수빈, 2018; Breen, Karlson, and Holm, 2018).

이 연구의 관심사는 교육, 노동, 가족 영역에서 특정 이력에 속할 가능성이 코호트별로 달라졌는가를 보는 것이다. 성인기 이행 경로의 변화를 보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변화를 보는 기본 축이 성별과 계층이다. 따라서 모든 분석에서 성별*코호트*가족배경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 과제다.

먼저 코호트 효과의 남녀 차이를 볼 때에는 통합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했고, 그 외 변수(교육 수준, 가족배경, 노동이력 유형 등) 효과의 남녀 차이를 볼 때에는 남녀로 표본을 나누어 동일한 분석을 시행했다. 남녀로 표본을 나누어 분석하면 가족배경을 통제한 상황에서 성별 효과의 코호트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고, 거꾸로 성별 효과를 통제한 (그러니까 남녀를 구분한) 상황에서 가족배경 효과의 코호트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분석으로 특정 이력에 속할 가능성에 성별과 가족배경이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와 그것의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

척도는 있다(Studer, 2013).

<표 2-5> 본문에서 활용한 회귀분석 모형 개요

| | 표본 | 독립변수 | 상호작용항 | 종속변수 | | 종속변수 종류 | 분석 모형 |
|---|---|---|---|---|---|---|---|
| 3장 | 남성 | 코호트, 가족배경 | 코호트*가족배경 | 교육 수준 | 고졸<br>전문대졸<br>대졸이상 | 이항 | LPM |
| | 여성 | 코호트, 가족배경 | 코호트*가족배경 | 교육 수준 | 고졸<br>전문대졸<br>대졸이상 | 이항 | LPM |
| | 전체 | 성별, 코호트, 교육수준, 가족배경 | 성별*코호트, 교육수준*코호트, 성별*교육수준*코호트 | 졸업연령 | | 연속 | OLS |
| 4장 | 남성 | 코호트, 교육수준, 가족배경 | 교육수준*코호트, 가족배경*코호트 | 노동 이력 유형 | 대_정규직 지속형<br>대_비정규직 지속형<br>중소_정규직 지속형<br>혼합형<br>중소_비정규직 지속형<br>중소_비정규직 늦은 진입형<br>비취업 지속형 | 이항 | LPM |
| | 여성 | 코호트, 교육수준, 가족배경 | 교육수준*코호트, 가족배경*코호트 | 노동 이력 유형 | 대_정규직 지속형<br>대_비정규직 지속형<br>중소_정규직 지속형<br>혼합형<br>중소_비정규직 지속형<br>중소_비정규직 늦은 진입형<br>비취업 지속형 | 이항 | LPM |
| 5장 | 남성 | 코호트, 교육수준, 노동이력, 가족배경 | 교육수준*코호트, 노동이력*코호트, 가족배경*코호트 | 가족 이력 유형 | 부모형<br>혼자형<br>배우자+자녀형<br>배우자+(자녀) 이행형 | 이항 | LPM |
| | 여성 | 코호트, 교육수준, 노동이력, 가족배경 | 교육수준*코호트, 노동이력*코호트, 가족배경*코호트 | 가족 이력 유형 | 부모형<br>혼자형<br>배우자+자녀형<br>배우자+(자녀) 이행형 | 이항 | LPM |

장별로 수행한 회귀모형을 정리하면 <표 2-5>와 같다. 졸업 연령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을 제외하면, 남녀로 표본을 구분해 같은 방식으로 분석한다. 종속변수는 교육 수준, 노동이력 유형, 가족이력 유형으로 분류된다. 각 항목을 구성하는 범주가 각각 종속변수가 된다. 예를 들어 교육 수준에 대한 분석은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을 각각 종속변수로 둔 3개 모형으로 구성된다. 회귀모형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각

장에서 별도로 할 것이다.

## 4. 소결

이 연구의 목표는 한국에서 2000년대 후반 이래 논의되는 ‘청년’ 문제, 또는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후 본격화된 ‘비정규직’, ‘비혼’, ‘저출산’으로 요약되는 성인기 이행 국면 변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해명하는 것이다. 이 과제를 수행하려면 졸업, 취업, 분가, 결혼 등의 주요 생애 사건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이를 위해 도입한 것이 라이프코스 연구의 시각이고, ‘성인기 이행’이라는 분석 단위다.

라이프코스 연구란 역사와 제도의 맥락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의 관계의 맥락에서, 개인이 나이 들면서 겪게 되는 사건이나 경험에서 발견되는 패턴을 기술하고 설명하려는 시도를 지칭한다. 이 연구에서 개인의 생애사와 집단의 집합적 라이프코스 패턴, 그리고 그 패턴을 규정한 역사적·제도적 맥락을 직접 연결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세 수준의 시간의 흐름을 의식하면서 개인의 생애이력이 모여 드러내는 라이프코스 패턴을 확인하고 그것을 주요 사회학적 요인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구조와 주체의 상호작용을 끊임없이 상기하고 상상하고자 한다.

성인 이행 경로에 관한 주요 연구들은 1970년대생부터를 성인 이행 경로에서 변화를 드러내는 코호트로 본다. 변화 성격에 대해 연구 초기에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졸업, 취업, 결혼·출산의 순서로 이행하는 표준화된 경로가 해체된다는 전망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의 경험 연구 결과는 ‘탈표준화’로 요약하기 어려울 만큼 집단(성별·계층별)에 따라 다양한 변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최근에는 성인 이행 경로의 변화를 기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성인 이행 경로의 변화가 초래한 불평등의 양상을 규명하는 작업에 관심이 모인다. 주요 축은 젠더와 계층이다. 한편 하위집단별 차이가 한 국가의 역사적, 제도적 맥락과 어떻게 관련 있는지를 규명하는 제도적 연구도 활발하다.

이들 연구에 비추면 한국 사례의 특성은 젠더에 따른 차이가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가운데 그 속도와 양상이 계층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한 변화의 제도적, 역사적 맥락은 압축적 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 노동, 가족제도의 연계 약화와 그에 따른 라이프코스의 긴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은 가족 단위로 성인기로 이행하고 그 가족에 대한 사회 제도의 뒷받침은 약하다. 교육은 일반교육 위주이고 직업교육은 발달해 있지 않다. 노동시장은 기업 단위 내부노동시장과 외부 노동시장으로 분절화되어 있다. 교육제도와 노동시장 제도의 연

계 수준이 낮다. 따라서 청년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다. 한편 결혼해야한다는 규범이 강하고 결혼의 전제 조건으로 경제적 자립을 기대한다. 결혼과 출산을 연계해서 생각하는 경향도 강하다.

서구 연구들에서 후기 근대적 라이프코스로의 변동을 추동한 제도적 변화로 꼽는 것들은 한국에서도 대부분 확인된다. 한국에서도 지난 20-30년간 고등교육이 팽창했고,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었으며, 가족구조도 다양해졌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과 구별되는 특징도 있다. 한국은 고등교육이 급속하게 팽창했다. 노동시장은 매우 성별화된, 분절 노동시장 구조를 띠고 있다. 변화는 특히 19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가족주의로 상징되는 강한 결혼 규범은 여전히 강하다. 동거나 혼외 출생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며, 결혼·출산 과정에서 부모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동한다. 복지제도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혼합적 특성을 갖는다. 이런 제도적 특징이 결합해 한국 사회 특유의 성인기 이행 패턴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70-1984년 코호트의 성인 이행 이력에 대한 연구는 앞에서 전망한 한국의 성인 이행 경로의 특징과 그 변화 양상을 드러낼 수 있다. 20대-30대 중반을 성인 이행기로 보면, 1970-84년생이 성인 이행기로 접어든 때는 1990년에서 2010년대 중반이다. 이 시기는 교육, 노동, 가족제도와 관련 행위에서 한국 사회가 전후에 가졌던 안정기가 깨지고 전환기로 접어들었던 시기와 조응한다. 이들의 학교 경험은 근대 교육이 보편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보편화가 멈춘 시점에 걸쳐 있다. 이들의 노동시장 경험은 노동시장 사정이 비교적 좋았던 때부터 가장 좋지 않았던 때에 걸쳐 있다. 한국 사회가 가장 평등한 수준이었을 때 유년기를 보냈으나 가장 불평등할 때 청장년기를 보내게 되었다. 사회적 조건과 규범의 괴리에 따른 불확실성 속에서 자의든 타의든 결혼과 출산, 분가 등 근대 가족을 구성하는 핵심 사건을 새롭게 경험했다.

변화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해석하기 위해 이 연구는 코호트 분석 기법을 차용한다. 연구의 종속변수인 성인기 이행 경로는 교육이력, 노동이력, 가족이력으로 구분해 파악한다. 교육이력은 졸업 학교급과 졸업 시점으로 측정한다. 노동이력은 1970-84년생이 학교를 졸업한 후 84개월(7년)간 밟은 이력이다. 가족이력은 1970-84년생이 만 28-33세에 형성한 동거가족의 배열로 구성된다. 노동이력과 가족이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면 성인기 이행 경로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다. 이 연구의 1차 목표는 이 이력이 출생시점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밝히는 것이다. 코호트 간 차이는 3년 단위로 구획한 5개 하위 코호트 비교로 확인한다. 변화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설정한 축이 성별과 계층이다. 먼저 성별과 교육 수준으로 구분해 이력의 패턴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이들이 밟았던 이력 유형과 각자의 가족배경이 연결되

는 방식의 변화를 확인한다. 궁극적인 목표는 이 두 가지 분석 결과를 한국 사회에서 성인기 이행을 규정하는 제도적 맥락(학교-노동시장 연계, 가족 제도)과 역사적 배경(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이 연구는 길게는 지난 40년의, 짧게는 지난 20년의 한국 사회 변동의 성격을 성인기 이행 구조 변화라는 차원에서 포착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보려는 시도다. 분석 과제는 1970-84년에 태어난 한국인이 20-30대 초중반(1990-2010년대 중반)에 밟은 생애 이력을 규명하는 것이다.

# 제3장 교육이행 국면의 연장과 탈성별화

이 장에서는 1970-84년생의 성인기 이행 경로를 규정한 핵심 국면인 교육이행 경험의 변화를 검토한다. 1970-84년생이 겪은 교육제도가 변화한 양상을 검토해 1970-84년생 교육 경험의 특징을 확인할 것이다. 이 시기 교육제도의 변화는 고등교육의 팽창과 중등교육의 일반교육 체제로의 재편으로 요약되고, 그에 따른 교육 경험의 변화는 고등교육의 보편화와 학교를 떠나는 시점의 지연으로 요약된다. 이것의 함의는 경쟁의 전면화와 일원화다.

1절에서는 교육 팽창 추이를 개괄한다. 2절에서는 교육 팽창에 따른 형식적 교육 기회의 확대가 교육 경쟁의 성격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확인한다. 3절에서는 교육 기회 획득에서 가족배경의 영향력이 최근 코호트로 오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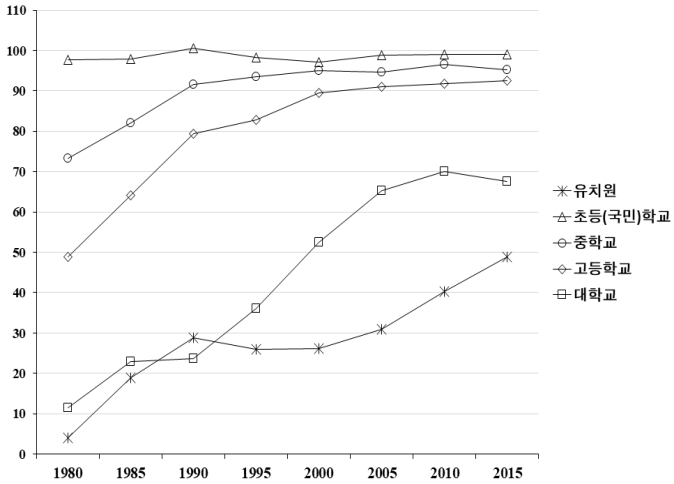
형식적 교육 기회 획득이라는 측면에서 가족배경의 영향력은 최근으로 오면서 약해졌다. 이런 변화로 여성과 낮은 계층의 이들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추이에 근거해 말하면 한국 사회는 이 시기에 성과에 기반한 사회로 변화해왔다. 학력이라는 표준화된 평가체제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편입되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같은 경쟁 체제에 편입되면서 체감 경쟁의 수준이 높아졌고(김석호, 2018), 경쟁의 결과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졌다. 경쟁 격화는 교육(기회)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키웠고 졸업 시점을 늦추었다. 이것은 새로운 의미의 계층화를 시사한다.

## 1. 교육 경험의 변화: 고등교육 보편화와 졸업 시점 지연

### 1) 교육제도 변화: 고등교육 팽창과 중등교육의 일반교육화

1970-84년생이 중고등학교를 거쳐 간 시점은 1983-2000년이다. 1970년생이 중학교에 입학한 때가 1983년이고, 1984년생이 고등학교를 입학한 때가 2000년이다. 1970-84년생이 대학교에 입학한 시점은 1990-2003년이다. 이들은 1980-90년대에 중등교육을 경험했고, 1990-2000년대 중반에 고등교육을 경험했다. 이 시기는 중등교육이 보편화된 것에서 시작해 고등교육이 보편화된 것에서 끝난다. 1970년대 초반생부터 동일 코호트 대다수가 중등교육을 받았고, 1980년대 중반생부터 동일 코호트 다수가 고등교육까지 받게 되었다.

<그림 3-1> 학교급별 취학률(1980-2015)




주: 순취학률(net enrollment ratio)을 뜻함[(해당연령에 속하는 재적학생 수/취학적령인구) × 100]. 취학적령인구: 유치원(만 3세~5세), 초등학교(만 6～11세), 중학교(만 12～14세), 고등학교(만 15～17세), 고등교육기관(만 18～21세)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보」,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이런 변화 추이는 학급별 취학률로 확인할 수 있다(<그림 3-1>).[40] 초등학교 취학률이 95%에 가까운 수준을 보인 것이 1970년(95.9%)이다. 1960년대생부터 동년생 대다수가 초등학교에 다녔다. 1970년 중학교 취학률은 35.3%였다. 취학률 80%를 기준으로 중학교 교육이 보편화된 시점은 1985년(82%)이다. 1970년대 초반생부터는 동년생 대다수가 중학교에 다녔다. 같은 기준으로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된 시점은 1995년(82.9%)이다. 1980년대 초반생부터 동년생 대다수가 고등학교를 다녔다. 1970-84년생의 중고등학교 취학 시기는 중학교 취학이 보편화된 시점부터 고등학교 취학이 보편화된 시점에 걸쳐 있다.

40) 이하에서 언급하는 취학률은 별도 언급이 없는 한 순취학률이다. 취학률은 총취학률(gross enrolment ratio)과 순취학률(net enrolment ratio)로 구분한다. 두 지표는 분모값(취학적령인구)이 같지만 분자값이 다르다. 총취학률의 분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해당 과정에 등록한 학생 수이고, 순취학률의 분자는 해당 과정에 등록한 취학적령학생 수이다. 따라서 총취학률이 순취학률보다 언제나 높다. 평균 10%p 차이가 난다. 일례로 1980년의 중학교 취학률은 95.1%(총취학률)와 73.3%(순취학률)이다. 1980년에만 해도 학생 상당수가 '늦게' 중학교를 다녔다는 것을 보여준다. 많은 글에서 이런 구분을 언급하지 않는데, 이 둘을 구별해야 한다. 이 연구는 동일 연령대가 공통의 학교 경험을 한다고 전제하기에 이를 더 적절하게 나타내는 순취학률을 사용한다.

고등교육 팽창 수준을 국제 비교하기 위해 설정한 기준(Trow, 1974)에 따르면,[41] 고등교육이 '대중화' 국면으로 진입한 시점은 1982년(17%)이고, '보편화' 국면으로 진입한 시점은 2000년(52.5%)이다. 이 구분으로 보면 1970-84년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무렵은 대학 진학률이 급격히 상승하던 대중화 국면 후반기와 보편화 국면 초반기에 걸쳐 있다. 1982년과 1991년의 대학교 취학률 차이는 6.7%p인 반면, 1992년과 2001년의 차이는 30.2%p다.

대학교 취학률이 50%를 넘어섰다는 것은 이전 학교급에서 졸업한 이들 대다수가 다음 학교급에 진학했다는 것을 뜻한다. 1985년이 되면, 초등학교-중학교 진학률은 100%에, 중학교-고등학교 진학률은 90%에 이른다. 고등학교-대학교 진학률은 중학교-고등학교 진학률이 100%에 가까워진 1990년대 초반부터 급격히 상승했다. 1990년 30% 초반에서 1980년대 중반생이 대학에 진학한 2005년 약 80%로 15년 만에 50%p 이상 증가했다. 동연령대 절반 이상이 대학생이 된 첫해가 2000년(52.5%)이다. 1981년생이 대학에 입학한 시점이다. 대학교 진학률 증가세는 2000년대 후반까지 이어진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42]

주목할 점은 대학교 진학률 증가를 추동한 것이 4년제 대학 진학이라는 것이다. <그림 3-2>는 대학 유형별 진학률을 나타낸다. 1970-90년의 대학 진학률 상승은 주로 전문대학 진학이 추동했다. 이 시기에는 대학 진학률 상승 폭이 크지 않았다. 진학률은 1990년대 중반부터 급증하는데 이 시기 증가를 추동한 것이 4년제 대학 진학이었다. 2000년까지는 전문대학 진학률도 상승 추이를 보이지만 그 후로는 증가하지 않는다. 2000년대 대학 진학률 상승은 4년제 대학 진학률 상승으로 온전히 설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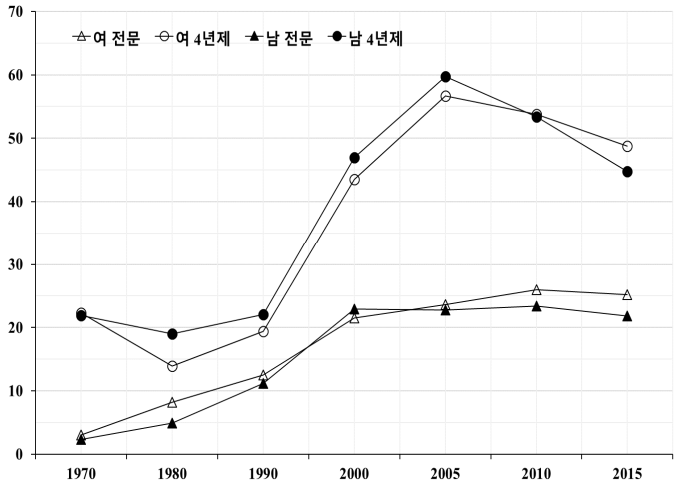
4년제 대학 진학률 상승의 맥락은 다음 절에서 상세히 언급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4년제 대학 진학을 중심으로 한 대학 진학률 상승이 갖는 의미만 짚어두고자 한다. 그것은 4년제 대학 입학을 목표로 한 초중등교육 체제의 표준화를, 초중등교육 커리큘럼의 일반교육화를 시사한다.

---

41) Trow(1974)는 순취학률이 15%을 넘어서면 대중화 국면이 시작된 것으로, 50%를 넘어서면 보편화 국면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 순취학률 15% 미만은 엘리트 교육 국면이다. 각 국면에 따라 교육기관의 기능과 교육과정, 학생선발방식, 교육내용 등이 달라진다.

42) 진학률이 83.9%로 정점에 이른 때는 2008년이었다. 이 해 대학 취학률은 70.5%였다. 이후 진학률은 감소해 2013년에는 70.7%를 기록한다.

<그림 3-2> 대학 유형별 성별 진학률(1970-2015)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보」,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고등교육의 보편화가 함의하는 바는 교육 경험의 성별 격차 감소다(박병영·김미란·김기헌·류기락, 2011: 75). 동년배 다수가 학교에 다니게 된다는 것은 곧 교육 기회의 남녀 차이가 줄어든다는 것을 뜻한다(통계청, 2017b: 206). 중학교 교육이 보편화된 시점인 1985년의 남녀 중학생 비율은 남학생 100명당 여학생 93명이었다. 남학생보다 여학생 수가 여전히 적지만, 10년 전(73명)과 비교하면 차이가 큰 폭으로 줄었다.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된 시점인 1995년의 남녀 고등학생 비율은 100 대 92명이다. 여기에서도 여학생 수가 적지만, 10년 전(85명)에 비하면 상당히 늘어난 것이다.

눈에 띄는 변화는 대학생 남녀 비율 추이다. 1971년생이 대학에 진학했을 1990년에는 남대생 100명당 여대생이 60명이었다. 이 차이 또한 빠르게 좁혀져 1981년생이 대학에 진학한 2000년에는 남학생 100명당 여학생 수가 85-86명으로 늘어난다.[43)]

43) 인구주택총조사 자료(1970-2015년, 2015년을 제외하면 10년 단위)를 활용해 해당 조사년도 기준 30-39세 남녀의 교육 수준을 비교한 연구(신윤정·박신아, 2018: 442)에 따르면, 35세를 기준으로 중학교 졸업에서 남녀 격차가 사라진 것은 2000년도(1965년 출생 코호트)이고, 고등학교 졸업에서 남녀 격차가 사라진 것은 2010년도(1975년 출생 코호트)이다. 4년제 대학 졸업에서 남녀 격차가 거의 사라진 것은 2015년도(1980년 출생 코호트)이다(남성: 45.7%, 여성: 41.7%). 1965년 출생 코호트의 경우 4년제 대졸자는 남성 32.0%, 여성 18.8%로 그 격차가 심했다. 2015년도에 35세(1980년 출생 코호트)에서 석박사 학위자 비중은 남성 6.5%, 여성 6.2%로 거의 같다.

<그림 3-2>에서 확인했듯이 대학을 전문대와 4년제로 구분해도 성별 차이는 좁혀진다. 1980-1990년대 초중반에 여학생은 전문대학에, 남학생은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2000년대에 오면 그런 경향도 약해진다. 2010년대에는 전문대와 4년제 모두에서 여학생 진학률이 남학생 진학률보다 높다. 1970년대 중반생부터는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중등교육 수준에서 남녀 차이가 거의 줄어든 시기에 학교를 다녔다. 고등교육 수준에서 차이는 여전했지만, 이 격차 또한 1980년대 초중반생으로 오면 거의 좁혀졌다.

대학 진학률 급증은 중등교육의 목적이 '취업'에서 '진학'으로 변했음을, 중등교육 제도의 성격이 직업교육에서 일반교육으로 변했음을 나타낸다.[44] 이 변화는 직업교육과정에 속한 학생의 비중 변화와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률 변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3>은 실업계 고등학생 비중과 전문대학생 비중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다.

<그림 3-3> 전문대학생 비중, 실업계 고등학생 비중(단위: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보」,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전체 고등학생 중 실업계 고등학생 비중은 1965년 50%에서 2010년 20%대 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197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잠시 반등했지만,[45] 1990년대

44) 해방 이래 한국 교육정책의 초점은 줄곧 직업교육이 아닌 일반교육이었다. '중심 이동'은 상대적 변화를 뜻한다.

45) 두 차례 반등은 정부의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 육성 정책의 일시적 효과에 따른 것이었다(김영화, 2015: 158-174; 최규남, 2003: 8장과 10장). 1970년대 후반의 반등은 1970년대 초

후반 경제위기 이후부터는 급감 추이를 나타낸다. 1990년대까지의 실업계 고등학생 비중 감소 추이는 일반(인문)계 고등학생 수가 더 빨리 증가하면서 나타난 것이다. 2000년대부터의 감소 추이는 실업계 고등학생 수가 더 빨리 감소하면서 나타난 결과다.[46] 고등학교 유형별 학생 수 변화 추이는 대입 정원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전문대학생 비중은 1965년 이래 1980년까지 일정하게 증가하다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하락했고,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까지 크게 증가했다. 2000년을 정점으로 2015년까지 가파르게 줄어들었다. 2000년 이전의 등락 추이는 4년제 대학 진학 추이와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 기조와 관련 있다. 1980년대 초반의 전문대학생 비중 감소는 4년제 대학생의 갑작스러운 증가세를 반영하고(김영화, 2015: 208), 1990년대 중반 이래 전문대학생 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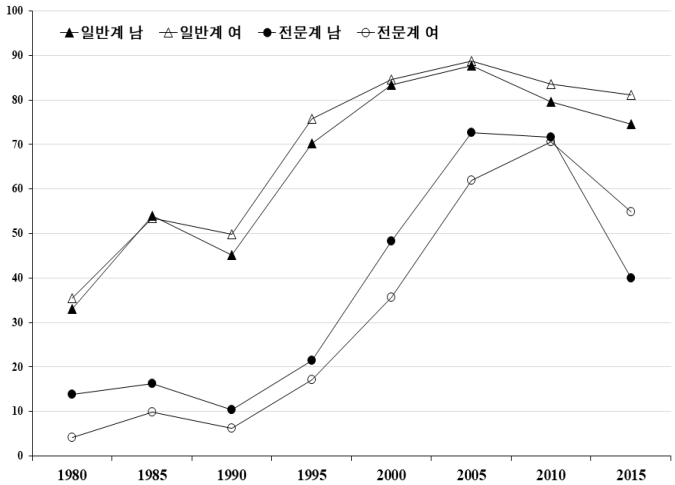
중반에 시행되었던 실업계 교육 육성 정책에 따른 것이었다. 정부는 1950년대부터 실업계 교육을 강조했지만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은 1970년대였다. 실업교육에 대한 인식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가 낙후되어 취업 기회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 오면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 기조에 맞추어 여러 정책이 시행된다. 1973년에는 「산업교육진흥법」을 개정해 재학기간 중 사업체 현장실습을 하도록 했다. 1974-78년에는 전국 공업계 고등학교 일부를 4개 유형으로 분류해 집중 투자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64개 공고와 15개 공업전문대학이 '특성화'되었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동계대학진학 우대 방안도 추진했다. 대학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실업계 고졸자로 선발하는 방안이었다. 1977년에는 대입예비고사에 실업계열을 신설해 실업계 고졸자의 대학 진학 기회를 크게 넓혔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세 번째 조치다. 대학 진학 기회 확대를 직업교육 육성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삼은 것은 대입을 목표로 한 일반교육 중심의 한국 교육체제의 성격을 드러낸다. 1990년대 초반의 반등 또한 실업계 교육 육성 정책에 따른 것이었다. 1980년대에는 대학 진학 기회 확대로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 선호도가 높아져 실업계 교육이 위축되었다. 그런 가운데 1980년대 후반에 건설업 경기가 과열되면서 미숙련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었다. 반면 대졸 인력은 과잉 공급되어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했다. 일반계 고교생 급증 추이를 대학 입학 정원 증가 추이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1990년대 내내 약 50만명이 재수생으로 남아 있는 현상이 지속되었다. 1980년대 말부터 다시 추진되었던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 정책은 이런 현상을 배경으로 한다. 1990년 5월에 발표된 '고등학교 교육 체제 개혁안' 및 '산업 인력 수급 대책안'을 살펴보면,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일부를 진로 교육체제로 전환하고 공업 고등학교를 신·증설하며, 일반계 고등학교를 공업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정부는 이 계획으로 1995년까지 실업계 고등학생 비중을 50%로, 여기에 일반계 고등학교의 직업과정 학생까지 포함해 취업 준비 과정 학생 비중을 67.5%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정책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와 학생 수가 늘어나기는 했으나 <그림 3-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예산 부족도 한 요인이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실업계 전환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부족과 계열 전환 예정 학교의 동창과 학부모의 반대였다. 1990년대 초반 약간 상승했던 실업계 고등학생 비중은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를 계기로 급감했다.

46) 일반고 학생 수는 2000년 약 130만 명을 정점으로 완만하게 감소했고, 실업고 학생 수는 1995년 약 91만 명을 정점으로 가파르게 감소했다(강성국·이광현·박현정·김기석, 2005: 57).

중 증가는 1980년대 후반 이래 중간 수준의 기능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전문대학 확대 정책을 편 것과 관련 있다(김영화, 2015: 220). 2000년 이래 전문대학생 비중 하락은 이 시기 4년제 대학 진학률이 전문대학 진학률보다 월등하게 높았던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그림 3-2>).[47]

요약하면 실업계 고등학생 비중은 두 차례의 잠깐의 반등을 제외하면 줄곧 감소했다. 2000년까지는 증가세를 보였던 전문대학생 비중도 대학 취학률이 50%를 넘어선 2000년을 기점으로 줄곧 하락했다. 이 두 추이는 결국 4년제 대학 진학을 목표로 중고등교육 체제가 재편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앞의 두 추이와 함께 이런 경향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는 지표가 실업계 고졸자의 대학 진학률이다(<그림 3-4>).

<그림 3-4> 고등학교 유형별 대학 진학률(성별, 198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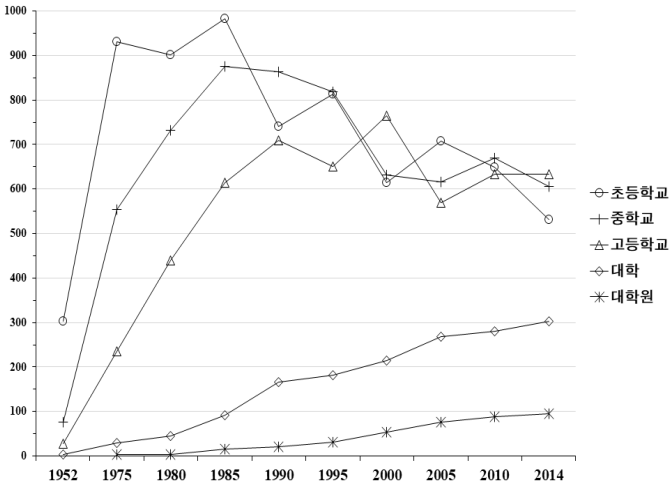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보」,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1990년에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50%였고,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10%였다. 2005년에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83%였고, 실업계 졸업자 진학률은 66%였다. 2010년에는 일반계 80%, 실업계 70%로 둘의 격차가 더 좁혀진다. 1990년대 이래 대학 진학률 상승 추이는 실업계 고졸자가 일반계 고졸자보다 가팔랐다. 이러한 추이는 이 시기 고등학교 교육의 무게중심이 '취업'에서 '진학'으로 급격히 이동했다는 점을 드러낸다.

47) 전문대학생 수는 2004년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2007년까지는 가파르게, 이후부터는 완만하게 줄었다(박동열·이무근·마상진, 2016: 105).

<그림 3-5> 학교급별 졸업자 수(1952-2014)(단위: 천명)




출처: 통계청(2017b: 205)

대학취학률 증가, 성별 대학 진학률 격차 감소, 실업계 고등학생 비중 감소, 중등교육의 일반교육화, 전문대학생 비중 감소 등 여러 변화 추이가 공통되게 가리키는 것은 4년제 대학생의 급증이다.

1971년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때는 1990년이고, 1981년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때는 2000년이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1990년에 71만 명이었고, 2000년에 76만 5천 명이었다. 이 10년간 고등학교 졸업자 수 규모는 전후 최대 수준이었다. 전후 내내 급증하던 고등학생 규모는 1990-2000년에 최대로 커지고 2000년대 초반부터 감소한다. 2000년대 초반은 출생아 수 증가 효과와 취학률 증가 효과가 가장 극대화된 방식으로 맞물린 시기였다. 이들 고졸자의 상당수가 대학에 진학했다. 이 추이를 반영해 대학교 졸업자 수는 1995년에 18만 명, 2000년에 21만 명에서 2005년 27만 명으로 증가했다. 10년 만에 약 10만 명이 늘어났다. 2000년과 2005년 사이에는 6만 명이 증가했다. 1995년에서 2005년은 1970-84년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한 시기다.

정리해보자. 1970-84년생이 교육제도를 거쳐 간 시기는 중고등교육 보편화가 가속화되어 정점에 이른 시기였다. 1970년대 초반생은 중학교 진학이 보편화될 무렵에 중학교에 진학했고, 1980년대 초반생은 고등학교 진학이 보편화될 무렵에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이들이 졸업한 시기에 중고등학교 졸업생이 최대 규모로 커졌다. 이들 졸업생의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던 경향이 '진학'

으로 전환된 것도 이 코호트에서였다. 실업계 고등학교 비중이 줄었을뿐더러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다수가 대학에 진학했다. 1990년대에만 해도 늘어난 대학생의 일정 비중은 전문대학생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로 오면 늘어난 대학생의 대부분이 4년제 대학생이었다. 1980년대 중반생이 대학을 졸업할 무렵인 2000년대 후반부터는 연 30만 명의 대학생이 노동시장에 나왔다. 2000년대 초반은 같은 해에 태어난 10명 중 거의 7명이 대졸자인, 청년은 곧 대학생이라는 인식이 통념으로 자리 잡은 시기의 시작이었다.

### 2) 1970-1984년생의 경험 1: 고학력화

앞에서 개괄한 교육제도의 변화가 실제 자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보자. <그림 3-6>은 코호트와 성으로 구분한 1970-84년생의 교육 수준 분포를 3년 단위 하위 코호트별로 나타낸다. 1970-72년생은 고졸자, 전문대졸자, 대졸자 비율이 대략 5:3:2다. 1982-84년생은 그 비율이 대략 2:3:5이다. 대졸자가 늘어나 약 15년 만에 고졸자 비중과 대졸자 비중이 바뀌었다. 전문대졸자를 포함하면, 고등교육 이수자 비중은 10년 만에 약 50%에서 80%로 늘어났다.[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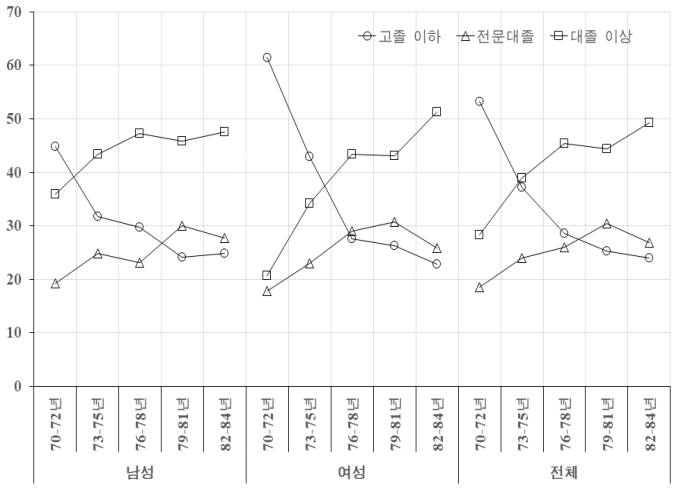
고학력화를 추동한 집단은 1973-75년생과 1976-78년생이었다. 이들이 대학에 진학한 때는 1990년대 중후반이다. 남성도 여성도 이 무렵까지 대학진학자가 빠르게 늘었다. 그러나 그 속도와 양상은 남녀가 조금 달랐다. 남성은 대학진학자 증가세가 완만했고 전문대학 진학 추이와 4년제 대학 진학 추이가 다르지 않았던 반면, 여성은 대학진학자 증가세가 가팔랐고 4년제 대학 진학 추이 증가세가 뚜렷했다. 1970년대 중반 이래 태어난 여성의 4년제 대학 진학이 1990년대 후반 이래 고학력화를 추동했다.

1970-72년생 여성은 10명 중 4명만 대학을 졸업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는 2명에 불과했다. 1976-78년생 여성은 10명 중 7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4명이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 불과 6년 만에 일어난 변화다. 1979-81년생으로 오면 대졸자 증가세는 완화된다. 그러나 이 무렵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난다. 고학력화 경향에서 4년

48) 2019년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이수율은 49.0%이고, 청년층(25-34세)(1985-1994년생)은 69.9%다(교육부 보도자료, 2019년 9월 9일자). 고등교육기관 순취학률은 2008년에 70.5%로 정점을 찍었다. 이에 비하면 노동패널 표본의 교육 수준(1982-84년생의 76.1%)이 다소 높다. 여기에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상당한 기간이 흐른 후에 대학에 진학한 이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노동패널 자료의 교육 수준이 다소 높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최효미(2005: 92)는 그 원인으로 응답자가 자신이나 가족의 학력을 높게 응답하는 경향을 들었다.

제 대학 진학 경향이 또렷해진 것이다. 1979-81년생은 고졸자가 26%, 전문대졸자가 31%, 대졸자가 43%였다. 1982-84년생은 고졸자가 23%, 전문대졸자가 26%, 대졸자가 51%다. 처음으로 이전 코호트보다 전문대졸업자 비중이 줄었다. 같은 시기에 남성도 전문대 진학자가 줄었지만, 4년제 대학 진학자가 늘지는 않았다. 즉, 2000년대 초중반의 대학 진학률 증가는 여성이 추동했다.

<그림 3-6> 1970-84년생의 교육 수준 분포(성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고학력화 추이와 관련해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경제위기의 영향이다. 경제위기 직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들은 1979-81년생이다. 이들과 1976-78년생을 비교하면 남녀 모두 4년제대 졸업자 비중이 조금 줄고, 전문대 졸업자 비중이 늘었다. 1976-78년생을 기점으로 고학력화 속도가 둔화된 배경은 경제위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 직후의 충격이 다소 완화되었던 2001-03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1982-84년생의 경우, 남성은 일부가 전문대가 아닌 대학으로 진학해 대학졸업자가 다시 약간 늘었다. 그러나 그 비중은 1976-78년생과 거의 같다. 전문대졸업자는 줄었다. 대신 고졸자 비중이 약간이지만 늘었다. 여성은 양상이 다르다. 전문대 졸업자 비중이 더 큰 폭으로 줄었지만, 4년제대 졸업자 비중이 큰 폭으로 늘었다. 1982-84년생으로 오면 처음으로 여성 대졸자 비중이 남성을 앞질렀다. 경제위기 직후 충격에 대한 반응은 남녀가 비슷했지만, 2000년대 초반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들의 교육 궤적에서는 남녀가 서로 달랐다. 경제위기 이후 남성은 학력추구 경향이 멈춘 반

면, 여성은 학력추구 경향이 되살아났다. 그 결과 남녀의 평균 교육 경험이 비슷해졌다.[49)]

<표 3-1>은 각 교육 수준에 대한 선형확률모형의 결과를 나타낸다. 각 교육 수준에 속할 확률을 종속변수로 둔 선형모형이다. 독립변수는 성별, 코호트, 가족배경이다[모형 (1), (3), (5)]. 여기에 성별과 코호트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형을 추가했다[모형 (2), (4), (6)].

먼저 기본 모형의 결과부터 살펴보자. 남성에 비해 여성이 고졸로 남을 가능성이 높고, 대졸로 남을 가능성이 낮다. 1970-72년 코호트에 비해 이후 코호트들이 고졸로 남을 가능성이 낮고 전문대졸이나 대졸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가족배경은 고졸로 남을 가능성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졸로 남을 가능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표 3-1> 각 교육 수준에 대한 선형확률모형 결과(성별*코호트)

| 변수 | 범주 | (1) | (2) | (3) | (4) | (5) | (6) |
|---|---|---|---|---|---|---|---|
| | | 고졸 | | 전문대졸 | | 대졸 | |
| 성별 | 여성 | 0.08*** | 0.17*** | 0.00 | -0.01 | -0.08*** | -0.15*** |
| 코호트 | (70-72년) | | | | | | |
| | 73-75년 | -0.12*** | -0.09** | 0.06** | 0.06* | 0.06** | 0.03 |
| | 76-78년 | -0.18*** | -0.10** | 0.08*** | 0.04 | 0.10*** | 0.06 |
| | 79-81년 | -0.21*** | -0.17*** | 0.12*** | 0.11*** | 0.09*** | 0.06 |
| | 82-84년 | -0.17*** | -0.09** | 0.09*** | 0.09** | 0.08** | 0.01 |
| 가족배경 | | -0.16*** | -0.16*** | -0.01 | -0.01 | 0.16*** | 0.16*** |
| 성별*코호트 | 여성#73-75년 | | -0.05 | | -0.00 | | 0.05 |
| | 여성#76-78년 | | -0.16*** | | 0.08 | | 0.09 |
| | 여성#79-81년 | | -0.09* | | 0.02 | | 0.06 |
| | 여성#82-84년 | | -0.16*** | | -0.00 | | 0.16*** |
| Constant | | 0.44*** | 0.40*** | 0.18*** | 0.19*** | 0.38*** | 0.41*** |
| N | | 3,705 | 3,705 | 3,705 | 3,705 | 3,705 | 3,705 |
| R-squared | | 0.16 | 0.17 | 0.01 | 0.01 | 0.13 | 0.13 |

*** p<0.01, ** p<0.05,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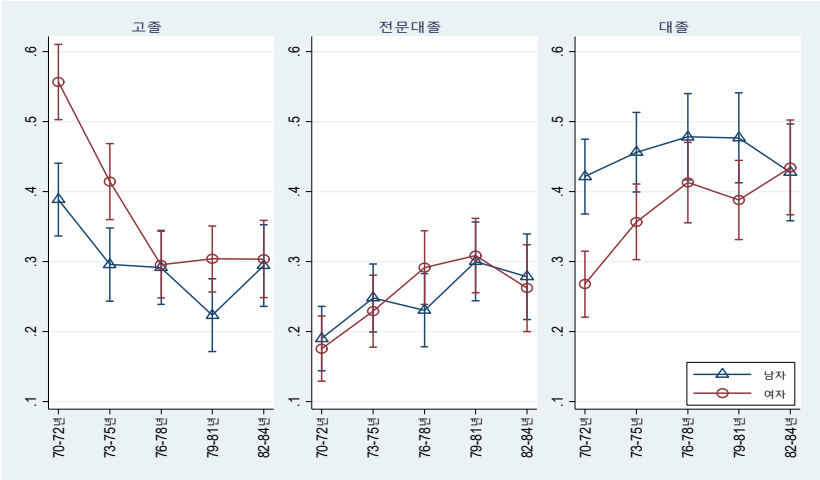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그림 3-7>은 가족배경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의 성별, 코호트별로 각 교육 수준에 속할 기대확률을 나타낸다. <표 3-1>의 분석 결과[모형 (2), (4), (6)]에 따른 것이

49) 대학 진학 성별 격차 추이를 검토하는 연구도 전문대학 대비 일반대학 진학 가능성의 성별 격차가 이 시기에 뚜렷하게 감소했다고 보고한다(김기헌·방하남, 2005: 144).

다. 남녀 모두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고졸'로 학업을 마칠 가능성이 줄었다[모형 (2)]. 각 범주별 기대확률의 95% 신뢰구간을 기준으로 보면, 남성은 1970-72년생과 나머지 코호트로 구분되고, 여성은 1970-72년생, 1973-75년생, 그리고 나머지 세 코호트로 구분된다. 남녀 차이는 1976-78년생부터 사라진다. 1970년대 중반생까지는 여성이 고졸로 학업을 마칠 가능성이 남성보다 컸으나 이후부터는 그 차이가 사라진다.

<그림 3-7> 각 교육 수준에 속할 기대 확률 변화(성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전문대졸'로 학업을 마칠 가능성은 남녀 모두 1979-81년생까지 증가하고, 이후에 감소한다[모형 (4)]. 코호트별 차이가 유의미한지 확인해보면, 남성은 1970-72년생과 1979-81년생이 다르고, 여성은 1970-72년생과 1976-78년생, 1979-81년생이 다르다. 모든 코호트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남녀 차이는 없다. 1976-78년생에서 남성의 가능성이 하락해 남녀 차이가 생겼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교육 경험에서의 남녀 차이는 '고졸'로 교육을 마칠 가능성 대비 '대졸'로 교육을 마칠 가능성에서 나타났다.

'대학졸업' 이상으로 학업을 마칠 가능성은 남녀 모두 증가했다. 그러나 증가 추이에서는 남녀 차이가 또렷하다[모형 (6)]. 남성은 1976-78년생까지 가능성이 증가했으나 이후 가능성이 완만하게 감소했다. 증가세와 감소세 모두 완만해 모든 코호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 여성의 증가세는 가팔랐다. 1970-72년생

보다는 1973-75년생이, 이 두 코호트보다는 1982-84년생이 4년제 대졸로 학업을 마칠 가능성이 높다. 증가세에서 나타난 남녀 차이는 1976-78년생 이래 남녀 차이를 줄였다. 이 코호트부터 남녀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

또 하나의 특징은 남녀 모두 1979-81년생에서 한 차례 하락 추이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러나 남녀가 조금 다르다. 이 점은 앞에서도 확인한 바 있는데, 다른 학력 수준에 대한 기대확률을 종합해 고려하면 이 시기에는 경제위기가 아니었다면 대학에 진학했을 여성 상당수가 경제위기에 따라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던 것 같다. 경제위기의 충격은 4년제 대학 진학을 더욱 억제했던 것 같다. 반면 남성은 1979-81년생에서 나타난 변화 폭이 여성보다 크지 않다. 변화 성격도 대학 진학 포기보다는 전문대학 진학으로 나타났다. 남성 일부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4년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전문대학에 진학한 결과로 보인다. 1982-84년생에서 나타난 남녀 차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종합하면,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1976-78년생부터 교육 수준 측면에서 남녀 차이가 상당 부분 사라졌다.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1982-84년생에서는 여성의 4년제 대학 졸업 기대확률이 남성의 기대확률보다 약간 높다. 이런 추이는 앞에서 확인한 교육경험의 보편화와 탈성별화 경향을 다시 한 번 드러낸다.

노동력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고학력화는 인적자본의 증가를 뜻한다. 그러나 라이프코스의 관점에서 보면 대학졸업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동일 연령대 인구가 더 오래 학교에 머물렀다는 것을, 즉 학교를 떠나는 시점이 늦추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학교를 떠나는 시점의 지연 정도는 두 요소로 구분해 파악할 수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상위 단계의 교육을 받게 되면서 생긴 지연과 동일 교육 단계에서 더 오래 학교에 머무르면서 생긴 지연이다. 각각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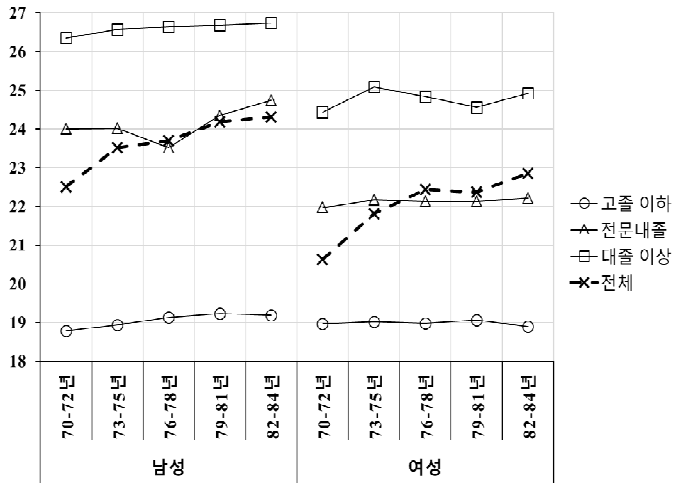
### 3) 1970-1984년생의 경험 2: 졸업 시점 지연과 다양화

<그림 3-8>은 코호트별 평균 졸업 연령을 보여준다. 입학시점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서 재학기간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 그림은 학교를 떠난 시점의 변화 추이는 보여준다. 교육 수준별 졸업 연령을 표시한 것이 실선이고, 1970-84년생 전체의 졸업 연령을 표시한 것이 점선이다.[50] 첫 번째 특징은 전반적인 졸업 연

50) 대학졸업자에는 '석사 이상'(전체의 5.24%)도 포함된다. 석사 이상 학력자는 남성 55%, 여성 45%로 남성이 조금 더 많다. 코호트로 보면,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많다(11.9%, 15.7%, 20%, 20.1%, 32.3%). 구별되는 교육 수준이지만 '석사 이상'을 '대졸 이상'으로 묶었다. 교육제도를 떠나는 시점으로 보면 대학원 진학도 일종의 졸업 유예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령 상승 추이다. 두 번째 특징은 남녀 모두 한 차례 정체 국면이 있었다는 점이다. 남성은 1976-78년생에서 그렇고, 여성은 1979-81년생에서 그렇다. 대학진학자가 줄었거나 학교를 일찍 졸업한 효과일 것이다. 1976-78년생 남성은 그 전 코호트보다 대학졸업자가 많다. 대졸자가 늘었고, 전문대졸자가 줄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재학기간 단축 효과일 가능성이 높다. 여성도 그 전 코호트보다 대학졸업자가 약간 많다. 주로 전문대졸업자들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도 재학기간 단축 효과일 것이다.

<그림 3-8> 교육 수준별 평균 졸업 연령 변화(성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남성은 1976-78년생 전문대졸업자의 평균 졸업 연령이 낮아졌다. 그 전 코호트보다 일찍 졸업했다. 1979-81년생으로 오면 졸업 연령은 다시 높아진다. 1976-78년생 전문대졸업자가 졸업할 시점은, 군복무 기간을 재학기간에 포함해 4년으로 잡으면, 1999-2001년이 된다. 경제위기 직후다. 이렇게 보면 경제위기 국면에서 빨리 노동시장에 진입하려고 했을 수 있다. 늦게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이들이 줄어서일 수도 있다.[51] 여성은 대졸자의 졸업 시점이 당겨지면서 전체 평균 졸업 연령이 낮아졌다. 이것은 1979-81년생 대졸자의 졸업 시점이 당겨져서이기도 하지만, 1973-75년생과 1976-78년생 대졸자의 졸업 시점이 늦추어져서이기도 하다. 특히 1973-75년생의 대

51) 1979-81년생부터 전문대졸업자의 졸업 연령이 높아진 것도 경제위기의 영향에 따른 것일 수 있다. 이것은 전문대학 재학기간의 연장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전문대학 입학 시점의 지연에 따른 것일 수 있다.

학졸업시점이 늦었는데, 이 코호트의 졸업 연령 상승은 이 시기 대학생 일부가 경제위기로 졸업 시점을 연기한 결과일 수 있다. 재학기간을 4년으로 잡으면 이들이 졸업한 시점은 1996-98년으로, 경제위기 직전-직후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지연 추이는 1976-78년생에게서도 나타난다.

경제위기는 졸업 시점을 전반적으로 늦춘 것으로 보인다. 지연 효과는 1979-81년생부터 나타난다. 이 코호트는 1998-2000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전문대 졸업 예상 시점은 여성이 2001-03년, 남성이 2003-05년이고, 대학 졸업 예상 시점은 여성이 2003-05년, 남성이 2005-07년이다. 전문대나 대학을 졸업한 시점이 경제위기 이후였다. 경제위기 직후인 1998-2000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179-81년생으로 오면 지연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1982-84년생에서는 그 수준이 유지된다. 1970-72년생보다 1979-81년생이 약 한 살 늦게 졸업했다.[52)]

<표 3-2>는 졸업 연령에 대한 OLS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총 네 개 모형을 구성했다. 모형 (1)은 성별, 코호트, 교육 수준, 가족배경을 독립변수로 둔 모형이고, 모형 (2)는 모형 (1)에 성별과 코호트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것이다. 모형 (3)은 모형 (1)에 성별과 교육 수준, 코호트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것이다. 교육 수준과 코호트의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하지 않아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성별과 가족배경을 통제한 상태에서 1970-72년생보다 1982-84년생의 졸업 연령이 0.25세 높다. 다른 코호트와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다. 여성이 남성보다 1.3세 일찍 졸업한다. 고졸에 비해 전문대졸자가 4.05세 늦게 졸업하고, 대졸자는 6.58세 늦게 졸업한다. 가족배경과 졸업 연령은 정적 관계를 보이지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

52) 이 연구에서 지연의 성격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주된 요인은 '휴학'일 것이다. 남재량과 김세움(2013: 19)에 따르면, 휴학생 비율은 1996년 25.8%에서 2002년 33.5%로 높아졌다. 2007년부터 조사하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대졸자 중 휴학 경험자 비중은 2008년 38%에서 2016년 45%로 점차 늘었다. 군복무를 제외하면 휴학의 주된 이유는 '학비 마련'과 '취업 준비'다. 취업 준비의 일환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나타난 현상이 해외 어학연수다. 2004년도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로 추정한 바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졸업자의 15.4%가 어학연수 경험자였다. 성별로는 여성이 약간 많았고, 계열로는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이 약간 많았다(박천수, 2009: 121). 해외 어학연수의 노동시장 성과 효과를 측정한 연구들은 적어도 2000년대에는 어학연수 경험이 취업 가능성, 좋은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 높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 구직기간 단축 가능성과 관련 있다고 보고한다(박천수, 2009; Choi, 2015).

<표 3-2> 졸업 연령에 대한 회귀분석(OLS) 결과(성별*코호트)

| | | (1) | (2) | (3) |
|---|---|---|---|---|
| 성별 | 여성 | -1.29*** | -1.65*** | -1.84*** |
| | (70-72년) | | | |
| | 73-75년 | 0.17 | 0.27 | 0.13* |
| 코호트 | 76-78년 | 0.04 | 0.26 | 0.31*** |
| | 79-81년 | 0.13 | 0.57*** | 0.43*** |
| | 82-84년 | 0.25* | 0.65*** | 0.35** |
| | (고졸) | | | |
| 교육수준 | 전문대졸 | 4.05*** | 4.06*** | 5.17*** |
| | 대졸 | 6.58*** | 6.60*** | 7.49*** |
| 가족배경 | | 0.06 | 0.07 | 0.08* |
| | 여성#70-72년 | | 0.84*** | |
| 성별*코호트 | 여성#73-75년 | | 0.63** | |
| | 여성#76-78년 | | 0.39 | |
| | 여성#79-81년 | | -0.04 | |
| | 남성#전문대졸#73-75년 | | | -0.11 |
| | 남성#전문대졸#76-78년 | | | -0.80* |
| | 남성#전문대졸#79-81년 | | | -0.08 |
| | 남성#전문대졸#82-84년 | | | 0.33 |
| | 남성#대졸#73-75년 | | | 0.09 |
| | 남성#대졸#76-78년 | | | -0.03 |
| | 남성#대졸#79-81년 | | | -0.10 |
| | 남성#대졸#82-84년 | | | -0.01 |
| | 여성#고졸#70-72년 | | | 2.01*** |
| | 여성#고졸#73-75년 | | | 1.93*** |
| 성별*교육수준*코호트 | 여성#고졸#76-78년 | | | 1.69*** |
| | 여성#고졸#79-81년 | | | 1.65*** |
| | 여성#고졸#82-84년 | | | 1.54*** |
| | 여성#전문대졸#70-72년 | | | -0.21 |
| | 여성#전문대졸#73-75년 | | | -0.14 |
| | 여성#전문대졸#76-78년 | | | -0.36 |
| | 여성#전문대졸#79-81년 | | | -0.48 |
| | 여성#전문대졸#82-84년 | | | -0.33 |
| | 여성#대졸#70-72년 | | | -0.09 |
| | 여성#대졸#73-75년 | | | 0.43 |
| | 여성#대졸#76-78년 | | | -0.02 |
| | 여성#대졸#79-81년 | | | -0.42 |
| Constant | | 19.62*** | 19.38*** | 18.85*** |
| N | | 3,705 | 3,705 | 3,705 |
| R-squared | | 0.68 | 0.68 | 0.7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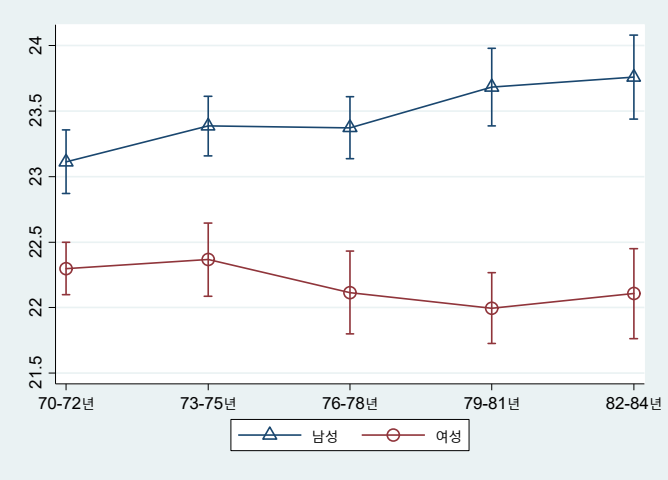
*** p<0.01, ** p<0.05, * p<0.1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성별과 코호트의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하다(모형 2). 앞에서 언급했듯이 교육 수준과 코호트의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하지 않아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성별과 교육 수준, 코호트의 상호작용항은 일부만 유의미하다(모형 3). 성별과 코호트의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3-9>로, 성별과 교육 수준, 코호트의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3-10>으로 제시했다.

<그림 3-9>는 교육 수준과 가족배경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성별, 코호트별 졸업 연령 기댓값을 표시한 것이다. 교육 수준을 통제했기에 재학기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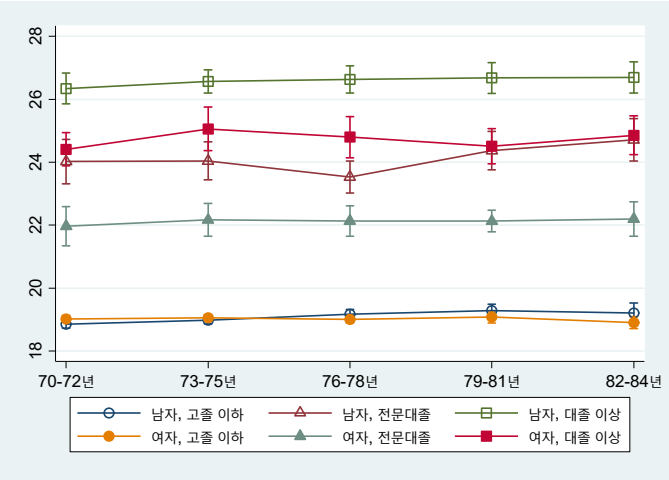
<그림 3-9> 졸업 연령 기댓값 변화(성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남성은 1973-75년생에서 한 차례, 1979-81년생에서 한 차례 졸업 연령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1970-72년생과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졸업 연령이 증가한 코호트는 1979-81년생이다(<그림 3-9>에서 두 코호트의 졸업 연령 기댓값의 신뢰구간이 서로 겹치지 않는다). 여성은 1973-75년생에서 약간 증가한 이래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아니다. 남녀 변화 추이를 종합하면 기대 졸업 연령의 성별 차이가 1976-78년생부터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차이는 남성의 졸업 연령 기댓값이 커졌기 때문이다. 남성의 군복무 기간이 이 시기에 단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를 떠난 시점의 지연 경향은 여기서 확인한 것보다 강했으리라 짐작한다.[53]

<그림 3-10> 졸업 연령 기댓값 변화(교육 수준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이 차이의 성격을 확인하기 위해 졸업 연령 기대값 변화를 교육 수준별로 구분해 본 것이 <그림 3-10>이다.[54] 이 그림을 보면 1979-81년생에서 나타난 남녀 차이가

53) 복무기간은 1953년 기준 육해공군 36개월에서 2020년 기준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로 단축되었다. 1998년에는 육군 26개월, 해군 28개월, 공군 30개월이었으며, 2017년에는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이었다. 1998년과 2017년을 비교하면, 육군 5개월, 해군 6개월, 공군 6개월이 단축되었다. 절대 기간으로 5-6개월이지만 라이프 코스의 관점에서는 약 1년 차이다. 복무기간이 2년 이하로 단축되면서 대학생 다수가 입·제대 시점을 학기 시작·끝 시점으로 조율할 수 있게 되었다.

54) 남성 전문대졸자 평균 졸업 연령은 고졸자 평균 졸업 연령보다 약 5세 많고, 대졸자의 평균 졸업 연령은 고졸자 평균 졸업 연령보다 약 7.5세 많다. 여성은 고졸자에 비해 전문대졸자가 약 3.2세 많고, 대졸자는 5.8세 많다. 이 값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로 확인한 값보다 많다. 2007년 조사에서 4년제 대학생의 졸업소요기간은 남성이 6.3년으로 여성이 4.3년으로 나타났고, 2016년 조사에서는 남성이 6.3년, 여성이 4.4년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2016년 조사 값이 약 1년이 많다. 그러나 대졸자를 대상으로 한 가장 대규모의 정기 조사인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자료에서 확인한 값과는 유사하다. 이 자료로 2008년에서 2013년 사이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들의 평균 졸업소요기간을 산출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평균 졸업소요학기는 14.3학기이고, 여성은 9.9학기다(이필남, 2016). 그럼에도 이 연구의 대상 집단 평균 졸업 연령보다 약간 높은 셈인데, 이 차이는 평균 졸업 연령과 평균 재학기간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평균 졸업 연령은 입학 시점을 고려하지 않은 값이다. 즉, 평균 졸업 연령에는 재수나 취업 등으로 유예기간을 거친 후 입학한 이들의 시간도 포함된다. 따라서 평균 졸업 연령으로 측정한 졸업 시점은 평균 재학기간으로 측정한 졸업 시점보다 늦을 수밖에 없다.

남성 고졸자와 전문대졸자의 기댓값 증가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55] 남녀 모두 4년제 대졸자의 기댓값은 코호트별로 일정하다. 여성은 전문대졸자의 기댓값도 일정하다. 변화한 집단은 여성 4년제 대졸자와 남성 전문대졸자, 남성 고졸자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지연된 경향을 보이는 범주는 남성 전문대졸와 고졸자다. 그동안 청년의 졸업유예 현상을 말할 때 주목한 집단은 4년제 대학생이었다(우선영, 2016; 김기헌, 2018; 이필남, 2019). 그러나 이 결과를 보면 이들이 학교를 떠나는 시점은 코호트별로 큰 차이 없이 일관된다. 실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서도 4년제 대학생의 졸업소요기간은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래 2010년대 후반까지 남성 6.3년, 여성 4.4년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전문대를 포함한 전체 대학생의 평균 대학졸업소요기간은 2007년 3년 10.2개월에서 2016년 4년 2.6개월로 늘어났다. 즉 졸업소요기간 증가의 상당 부분은 전문대졸업자의 소요기간 증가에 따른 것이다.

고졸자의 졸업 연령 기댓값이 최근 코호트로 오면서 높아진 것은 전문대학 중퇴 등의 사례(은기수·박건·권영인·정수남, 2011)를 반영한다.[56] 전문대학졸업자의 졸업시점이 최근 코호트에서 다양해진 것 또한 군복무, 그리고 아르바이트 등 취업 경험과 재학 시점이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은기수 외, 2011: 87-91; 김영·황정미, 2013). 정리하면 저학력 남성이 학교를 떠나는 시점이 과거에 같은 교육 수준이었을 때보다 늦추어진 것이 1970년대 후반생 이래 학교를 떠나는 시점의 지연을 낳았다고 볼 수 있다.

고학력화 추이를 배경으로 학교를 떠나는 시점이 늦추어지고 다양해지는 경향은 오히려 고졸자나 전문대졸자 등 저학력자에게 나타날 수 있다. 저학력자 남성에게서 나타나는 지연의 추이는 복무 기간의 위치와 남녀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나이 규범(정민우·이나영, 2011; 장미혜 외, 2011: 37-38; 김영·황정미, 2013; 전희경, 2013)[57]

---

55) 4년제 대학 졸업자 남성의 졸업 연령 추이가 비교적 일관된 반면, 전문대학 졸업자 남성의 추이는 1976-78년생에서 하락한 후 반등하는 패턴을 보인다. 전문대학 졸업자의 졸업 연령은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졸업 연령보다 재학기간을 덜 반영한다. 4년제 대학 졸업 연령과 비교할 때 (공식 재학기간을 2년으로 보면) 전문대학 졸업 연령은 평균값이 높고 분산도 크다(이수빈·최성수, 2020: 212).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진학하지 않고 군대를 다녀오거나 직장을 다니다가 입학하는 경우와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56) 전문대학중퇴자는 최종학력이 '고졸'로 부여된다. 이 경우 졸업년도는 고졸 시점으로 입력되어야 하지만 대부분 '중퇴' 시점으로 입력되어 있다.

57) 남성은 '군복무'라는 공식적인 단절, 유예 사건의 존재로 인해 시간 감각이 여성보다 유연하다(장미혜 외, 2011: 37-38). 군대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역할 기대는 더욱 경직된 나이 규범을 전제한다. 여성의 20대는 여전히 결혼과 출산을 전제로 한 시간으로 인식된다. 20대 후반만 되어도 결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지고, 이는 노동시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이겠지만 고학력화 추이에서 저학력자의 학교-노동시장 이행 경로가 불안정해진 것과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리해보자. 1970-84년생의 학교 경험은 중고등교육의 보편화와 탈성별화로 요약되고, 그것의 1차적인 함의는 학교를 떠나는 시점의 연장이다. 학교를 떠나는 시점의 연장은 상급학교를 다니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동일급의 학교를 떠나는 시점 자체가 늦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후자의 경우 졸업 소요기간 자체가 늘어난 것도 한 요인이겠지만 중퇴나 편입학 등 다양한 교육 이력이 등장한 것도 요인일 것이다. 특히 졸업시점 연장은 남성 저학력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이 남녀 졸업 연령 차이를 낳았다. 이것은 고학력화 추이 속에서 특히 저학력 남성의 위치가 불안정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고학력층에서는 남녀 교육 경험의 수렴 현상이, 저학력 층에서는 남녀 교육 경험의 분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2. 고등교육 보편화의 맥락

이처럼 급격한 고학력화 추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1970-84년생의 교육 경험에서 드러나는 몇 가지 추이를 이해하려면 한국 사회의 교육제도 및 실천의 일반적인 특징을 설명하는 논리와 이 시기에 국한된 현상을 설명하는 논리를 잘 조합해야 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중고등교육의 보편화라는 일반적인 추이와 함께 경제위기가 미친 국면적 영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교육팽창은 다차원적인 요인이 결합된 결과다. 이 연구는 다섯 가지 요인에 주목한다. 첫째, 비신분사회라는 사회조직, 둘째, 조립형 공업화 전략과 근대 교육체제가 도입된 시점의 특징, 셋째, 정부의 역할, 넷째, 근대 가족의 형성, 다섯째, 경제위기라는 맥락이 그것이다. 앞의 세 개가 일반적인 요인이라면 뒤의 두 요인은 1970-84년생의 경험을 특정한 요인이다. 첫 번째가 구조적 조건이라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공급 측면 요인으로,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수요 측면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장에서 불리한 점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노동시장에 더 빨리 진입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 1) 구조적 조건: 비계급사회와 보편적 교육 열망

한국 교육체제의 특징을 설명하는 키워드로 많은 이들이 높은 교육열을 든다(김영화, 2000; 김경근, 2003; Seth, 2002: 6). 그러나 교육열은 한국인의 심리적·문화적 특질이라기보다 한국 사회의 조직적 성격을 드러내는 현상에 가깝다.

한국 사회는 비계급사회다. '신분'이나 '계급'과 같은 국가와 개인을 매개하는 응집력 있는 사회경제적·정치적 조직체가 없다. 이러한 구조는 한국 사회가 지리적·인종적·문화적·언어적 동질성에 기초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오래도록 유지해온 것과 관련 있다(헨더슨, 2000[1968]). 중간 수준에서 조직화 된 집단이 권력을 매개하는 서구와 달리 한국은 중앙집권화된 권력과 원자화된 개인이 직접 대면하는 구도에서 "소용돌이"(헨더슨, 2000[1968]: 45)와 같은 일원화된 경쟁 구조를 형성했다. 이런 특징은 근대 교육체제가 기존의 사회적 균열구조를 그대로 반영해 분절적인·위계적인 구조로 성립되지 않을 수 있었던 기본 맥락이 된다. 나아가 근대 교육체제의 핵심 목표인 '기회의 보편성'이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었던 1차 조건이 된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 교육제도는 절대군주가 기존 기득권 세력인 귀족을 견제하고 국가 통치를 원활하게 할 관료를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도입했다(아마노 이쿠오, 1992[1982]). 중세에 도입된 '대학'은 동업조합의 성격을 띤 것으로, 중세 후기로 오면 "상류계급의 교양적 재생산의 장이 되고 말았다."(아마노 이쿠오, 1992[1982]: 43) 이후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대중에게도 교육이 확대되지만, 그것은 기존의 '엘리트 교육 체제'와 분리되어 성립되었다. 근대 교육체제의 근본 원리로 여겨졌던 '업적주의적 선발'은 "초등교육과 중등 이상의 교육과의 제도적인 단절을 전제로 해서 비로소 절대주의적인 지배와 양립"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이들 주요 유럽 국가에서 17-18세기에 걸쳐 성립된 "자격시험과 학교를 중심으로 한 업적본위의 경쟁적인 선발제도화는 어느 나라에서도 하층 사회계층의 상승이동을 촉진한다기보다 오히려 제약하는 역할을 하였다."(아마노 이쿠오, 1992[1982]: 69) 교육제도가 사실상 사회적 격리 장치로 작동하는 이러한 체제는 유럽 주요 국가에서 오늘날까지 유지된다(퍼롱·카트멜, 2008[1997]).

근대 교육제도가 확립된 시점이 주요 산업국가보다 늦었다는 점도 지적된다. 산업화에 따라 초등교육부터 요구되었다는 것이다. 식민지 경험과 전쟁을 겪으면서 한국 사회에서 교육체제의 실질적인 정비는 1960년대에 이루어졌다. 1960년대는 국제적으로 중등교육의 평등주의화·개방주의화 경향이 나타난 시기이기도 했다. 특히 미국의 평등주의적 중등교육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아리타 신, 2007: 79).[58]

한국의 교육 팽창은 초등교육에서부터 학교급을 높여가면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

다(김경근, 2003: 16; 김영화, 2015: 101-102; 박병영·김미란·김기헌·류기락, 2010: 67). 해방 직후 초등교육 확대에 투자를 집중한 결과 경제 개발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1960년대 중반에 초등교육 취학률이 100%에 근접했다(박병영 외, 2010: 55).[59] 고등교육 투자는 1970년대 중후반까지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초등교육 보편화가 순차적인 교육 팽창으로 이어진 형식적 고리는 "능력에 관계 없이 모든 학생들을 자동적으로 진급시키는 자동진급제도"(김영화, 2015: 285)였다. 그 결과 중도탈락율이 매우 낮았고, 적정 취학 시기를 넘긴 과령 학생도 적었다. 이 또한 유급제도를 차용한 개도국과 다른 한국의 특징이다. 이 제도는 학교 경험을 연령에 따라 표준화·동질화했다.

이런 구조에서는 필연적으로 교육열이 가열된다. 교육이 사회이동의 절대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교육을 "구성원들을 권력에 접근시키기 위한 기회주의적 수단"(헨더슨, 2000[1968]: 44)으로 자리매김했다. 사회적 지위가 매우 유동적이고 단일한 위계로 조직되어 있는 사회 구조는 한국의 교육체제를 '특수한 것'보다는 '일반적인 것'에, 교육 기능보다는 선발 기능에 특화하도록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이 대중 다수의 교육 열망을 불러일으켰다(아리타 신, 2005; 나카무라 타타야스, 2005).

개항 이후 한국의 사회 변동은 교육열을 계속해서 가열했다. 일제 식민지기에 겪었던 제한된 기회 구조와 교육 성격 제약은 사람들로 하여금 '입시' 위주의 교육에 몰입하게 만들었다(김종엽, 2003; 강준만, 2009: 34). 해방과 전쟁의 경험은 교육출세론을 더욱 강화했다. 무형의 자격증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기존의 위계 구조가 약해 교육을 통한 기회가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오욱환, 2000). 이후 전개된 급속한 산업화와 그에 따른 산업·직종 구조 변화는 학력의 가치를 더욱 높였다.

### 2) 공급 측면: '조립형 공업화' 전략과 분배 정책으로서의 교육

정부가 초등교육에 먼저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집단의 분화가 약해 반대 기

58) 이런 시점 또한 비계급사회라는 맥락에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봐야 한다. 산업화가 시작되고 근대 교육제도를 도입한 국가에서도 분절적 교육체제가 형성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인구 구성이 다양하고 계층 분화가 진행된 남미, 아프리카, 남부 아시아 국가에서도 독립 후 교육 투자는 상위 계층의 요구인 고등교육에 더 투자되었다(김영화, 2015: 115-118).

59) 해방 당시 초등학교 총취학률은 45.2%였으나 1954년부터 추진되었던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의 완성 연도인 1959년에는 총취학률이 96.4%에, 1970년에는 100.7%에 이르렀다(김영화, 2015: 101). 그러나 1960년대에도 초등학교 입학자의 10-18%는 여러 이유로 졸업 전에 퇴교해, 이수율은 80%에 머물렀다(최문한, 1974: 2-4).

득권 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김영화, 2015: 114). 근본적으로는 대중적인 교육 열망을 정부가 수용한 측면이 크다.[60]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정부는 한국의 교육체제를 결정한 핵심 주체였다. 먼저 초등교육 우선 정책은 당시 경제발전 전략에 부합했다.

핫토리 타미오(2007[2005])는 한국의 경제 발전 전략을 '조립형 공업화'라고 칭한다. "기계류나 부품을 수입한 다음 그것을 조립해 수출"하는 방식을 주된 전략으로 삼는 공업화 방식이다(p. 97). 대다수 국가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공업화를 시작한다. 원료를 수입해 싼 노동력으로 조립한 다음 수출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농촌의 과잉노동력이 소멸되어 국민경제 총체로서의 노동력이 과잉상태로부터 부족 상태로 변하는 시점"(p. 82)인 '루이스의 전환점'을 통과하면 자연스럽게 공업 고도화를 추구하게 된다. 농업 부문의 노동력이 과잉상태를 벗어나면 이들을 끌어오기 위해 '생존임금' 이상의 임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려면 생산력을 높여야 하는데 그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숙련을 높이거나 설비를 투자하는 것이다(p. 84). 한국이 선택한 방식은 두 번째였다. 즉 한국은 '성숙/조립' 방식에서, '성숙/가공' 방식을 거치지 않고, '첨단/조립' 방식으로 급격하게 전환했다.[61] 이러한 산업화 경로가 교육체제를 규정했다.

한국에서 공업화가 시작된 시기는 1960년대 전반이다(김영화, 2015: 28). 이 시기에는 중고등교육이 요구되지 않았다. 대신 초등교육이 보편화될 필요는 있었다. 표준화된 규율을 체득한 대량의 저숙련 노동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김영화, 2015: 137). 필요한 것은 숙련 자체보다는 "공업적 근면"(핫토리 타미오, 2007[2005]: 146)을 익히는 것이었고, 한국의 초등교육체제는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김영화, 2015).

저임금에 기반한 노동집약적 수출 전략이 '고도화'된 시점은 대략 1980년대 중반부터다(김영화, 2015: 33). 설비 투자 방식으로 공업 고도화를 이루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자동화 기계가 발달 되어 있어야 하고 고품질 부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어야 하며 기술이전이 가능해야 한다. 한국은 이 조건 모두가 갖추어져

60) 정부가 제한된 자원과 능력에도 초등학교 의무화 교육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크게 세 가지 덕분이었다(김종엽, 2003: 62). 첫째, 사립학교의 증설을 적극 권장했다. 둘째, 교육비의 상당 부분을 학부모 부담으로 돌렸다. 셋째, 교육의 양적 팽창을 위해 질 관리를 어느 정도 유보했다. 투자의 기본 목표는 초등교육의 단위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61) 공업화 전략은 두 차원의 기술 발달 성격을 조합해 유형화할 수 있다. 첨단기술/성숙기술이 한 차원이고, 가공기술/조립기술이 다른 차원이다. 첨단기술과 성숙기술 구분은 자원(자본과 노동)집약방식과 관련 있다. 첨단기술은 자본집약방식이고 성숙기술은 노동집약방식이다. 가공기술과 조립기술 구분은 숙련형성 방식과 관련 있다. 가공기술은 숙련수준이 높고, 조립기술은 숙련수준이 낮다(핫토리 타미오, 2007[2005]: 100-105).

있었다. 산업화가 늦게 시작된 데다가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술과 자본을 외국에서 비교적 손쉽게 도입할 수 있었다. 특히 민주화 이후 임금이 급상승하자 기업들은 고용감축 및 설비 투자 전략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이런 전략은 숙련 축적 필요성을 약화했다. 정교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정밀 부품이나 공작기계를 직접 만들거나 다루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유럽과 일본 등 일찍 공업화를 시작한 나라에서는 숙련 형성의 유인과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느렸고, 국제시장도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가용한 기술이 있었고 그것을 사 올 자본도 동원할 수 있었다. 처음부터 수출시장에 의존했기에 숙련을 형성할 여유가 없기도 했다. 국제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소재나 자본재를 처음부터 수입에 의존했기 때문이다(핫토리 타미오, 2007[2005]: 104). 숙련 절약형 공업화 전략은 소수의 전문직 수요와 다수의 저숙련직 수요를 낳았다. 중간 수준의 숙련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제한적이었다. 산업화 단계별로 숙련을 축적하기보다는 자본을 투입해 설비를 고도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산업화 전략은 교육체제를 숙련 교육보다 일반 교육에 집중하게 만들었다.

정부는 때로는 교육열에 떠밀려, 때로는 교육열을 이용해 상위 교육기회를 확대해왔다(김영화, 2015: 118: 김경근, 2003: 17). 낮은 단계에서 거의 완전 취학률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문을 두고 입시 경쟁이 치열하다. 취학률이 점차 확대되면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 병폐 현상을 보일 수준에 이르면 다음 단계의 문을 확 연다. 이를 계기로 입시 경쟁은 그 다음 단계로 이전된다. 이런 식으로 중학교 입시, 고등학교 입시, 대학교 입시 제도가 변화되었다(김종엽, 2003). 정부는 공정한 기회 보장이라는 명분으로 전국 단위의 경쟁을 관리하는 역할에 치중했다(장경섭, 2009). 그 주된 수단은 1990년대 초반까지 행사한 대학정원결정권과 오늘날까지 활용하는 입시제도 결정권이었다.

중학교 입학 기회가 확대된 때는 1968년이었다. 1960년대에 초등학교 취학률이 90%를 넘어서자 중학교 입시 경쟁이 치열해졌다. '베이비부머'가 성장하면서 취학대상자 수 자체가 늘어난 것도 경쟁을 강화했다. 특히 좁은 대입 관문의 주요 통로로 인식된 명문 중학교 입학 경쟁이 치열해 국민학생 과외가 성행했고, '재수생'도 다수 생겨났다. 사설 학원도 등장했다(강준만, 2009: 111-117). 교육을 위해 도시로 이동하는 인구 흐름도 본격화되었다. 1964년의 '무즙 파동'과 1967년의 '창칼 파동' 등 중학교 입시 문제 정답 시비 논란은 당시 중학교 입시 경쟁의 밀도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런 압력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1968년에 도입된 것이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였다(김영화, 2015: 153-154). 1969학년도부터 중학교 입학시험제도를 폐지하고 중학군을 설치하여 추첨으로 입학을 결정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었다. 그 결

과 1969년부터 중학생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고등학교 입학 기회는 1974년부터 확대되었다. 1969년에 중학교에 입학한 이들이 졸업할 무렵부터 고등학교 입시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학교별 경쟁 입학을 허용하되, 일반(인문)계 고등학교는 시·도별 연합고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학군별로 추첨해 입학하도록 했다(김영화, 2015: 155). 고등학교 입학정원을 대폭 늘려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고등학교를 평준화해 일류학교 진학을 위한 과열 경쟁을 완화하려는 취지였다. 그 결과 고교 진학률은 1973년 70%에서 1980년 85%로 증가했다. 이 시책으로 일반계 고등학교가 많이 신설되어 1970년대 후반에는 일반계 고등학교 수가 실업계 고등학교 수보다 많아졌다.

대학입학기회가 확대되기 시작한 때는 1980년이었다. 고등교육 정원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고등학생 수가 급증하자 대입 경쟁이 격화되었다. 재수생이 누적되었고 과열 과외 현상이 극도에 달했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으로 세칭 일류 명문고는 사라졌으나 학군별 추첨제에 대한 중상층의 대응으로 1970년대 후반부터 거주지역 중심의 새로운 명문고가 생겨났다. 강남이 주요 지역으로 부상한 것도 이 무렵부터다(강준만, 2009). 이런 배경에서 전두환 정부가 1980년에 발표한 것이 '7.30 교육개혁안'이었다. 핵심은 대학정원확대를 골자로 한 졸업정원제였다. 여러 부작용으로 1984년에 유명무실해졌고 1987년에 폐지되었지만,[62] 이 제도로 인한 변화는 컸다. 1981년에는 대학생 수가 32.6%p 증가했고, 연이은 3년간 각각 23.4%p, 16.9%p, 12.6%p 증가했다. 대학 진학률은 1980년 27%에서 1985년 36%로 크게 늘었다. 이 시기에는 4년제 대학생 수 증가가 전문대학생 수 증가를 압도했다.[63] 계열로는 인문·어학 계열이 입학정원 증원을 주도했다. 많은 투자 없이도 확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전까지 빠르게 확대되었던 공학 계열의 정원은 이 시기에 그리 확대되지 않았다(김영화, 1993: 41).[64]

---

62) 정치적 목적에 의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졸업정원제 도입의 명목은 교육 여건 개선으로 고급 인력 수요 증대에 부응하는 것과 고등교육 수요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목표는 재정 대부분을 학생 납입금에 의존하는 사립대학의 재정난을 일정 부분 해소해주는 것과 대학생의 정치 행위를 억제(손준종, 1995: 45)하는 것이었다. 대학교육의 질 향상에 필요한 시설, 교원 충원에는 관심을 보이지도, 투자를 하지도 않았던 것이 한 근거다(김영화, 2015).

63) 전문대학과 전문대학생 수는 1980년대에 오히려 줄었다. 전문대학 확장으로 교육 질이 저하되고 취업난이 가중되자 정부는 전문대학을 1981년 132개에서 1987년 117개로 감축했다. 그에 따라 학생 수도 1981년 29,867명에서 1988년 23,710명으로 줄었다(김영화, 1993: 36-37).

64) 광운공대, 울산공대, 아주공대 등 공학계 단과대학이 이 시기에 종합대학으로 개편되면서 인문계열을 대폭 확충한 것도 한 요인이다(김영화, 2015: 214).

그럼에도 1990년대 대학 진학률 상승 추이에 비하면 1980년대 대학 진학률 상승 추이는 가파르지도, 일관되지도 않았다. 1980년 27%에서 1985년에 36%로 증가한 대학 진학률은 1990년에 다시 31%로 낮아졌다. 1987년에 졸업정원제가 폐지되고 1988년에 입학정원제로 환원되면서 정원이 일부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대학교육 팽창은 199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다. 1990년대 초반 대학교육 팽창은 전문대학 교육 팽창이 주도했다. 이것은 일정 부분 산업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다. 1980년대 후반 중간 수준의 기능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문대학생의 취업률이 상승했다. 취업률 상승은 전문대학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일정 수준 바꾸어 놓았다. 이를 반영해 정부는 1980년대 말부터 전문대학을 육성하는 정책으로 전환한다(김영화, 2015: 220). 이 시기 전문대학생 증가는 이런 분위기를 배경으로 한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4년제 대학 교육 팽창이 본격화된다. 계기는 김영삼 정부가 1995년에 발표한 '5·31 교육개혁안'이었다. 대학설립요건과 기준을 최소화한 대학설립준칙주의에 따라 1995년 131개였던 4년제 대학이 2004년 200개에 이르렀다. 대학 정원 자율화 정책으로 정원도 늘어났다. 대학 진학률은 1990년 31%에서 2000년 68%로 늘어났다. 2000년에는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10명 중 8명이,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10명 중 5명이 대학에 진학했다. 동년배 10명 중 5명이 대학생이 되었다. 이때가 1970년대 중반생부터 1980년대 중반생이 대학에 진학했던 시기다.[65]

교육 팽창은 입학 기회의 순차적 평등화에 따른 것이었다. 정부는 아래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입학기회를 확대했다. 교육체제와 교육프로그램이 중앙집권화된 구조에서 정부 정책은 직접적인 효과를 낳았다. 1990년대 중반 대학 자율화 정책이 추진되기 전까지 정부는 각 대학의 정원을 학과 수준에서까지 결정할 수 있었다. 이런 수단을 가진 정부는 거의 없었다(아리타 신, 2007; 가와이 노리코, 2011). 이 수단으로 정부는 고등교육기회의 폭을 쉽게 넓힐 수 있었다. 그것은 정치 논리에 따라 과도하게 사용되기도 했다(손준종, 1995).

그렇지만 정부 정책을 교육체제 팽창의 핵심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66] 교육 열

65) 대학교육의 지나친 팽창에 따른 부작용으로 준칙주의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에 전면 폐지되었다.

66) 국가의 역할에 주목하는 연구도 있다(손준종, 1995). 손준종은 국가가 고등교육정책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측면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1970-80년대의 고등교육팽창 패턴을 앞의 논리들의 조합으로 설명했다. 논리는 교육, 정치, 경제의 세 차원으로 구성되고 각 차원에는 팽창/억제 지향이 공존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이 시기 정책 결정의 성격을 가장 잘 설명하는 논리의 차원은 정치이며, 구체적으로는 정치적 정당성을 추구하기 위한 팽창 지향 선택이었다. 이런 분석은 사회의 교육수요가 어떤 식으로 반영되었는지 그 동학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정부의 섣부른(과도한) 수용이 사회의 교육 수요를 더욱 확대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정책도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의 수

망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능력 상승에 따른 진학열을 상급학교 진학 기회를 5-6년의 시차로 확대하는 식으로 수용한 것이 팽창의 기본 양상이었기 때문이다.[67] 업적주의에 기초한 선발 및 분배기구로 교육체제가 적절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가열'(warm-up) 과정과 '냉각'(cool-out) 과정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아마노 이쿠오, 1992[1982]: 20-21). 분화된 사회적 지위체계에서 사람들을 적절히 배정하려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경쟁에 참여하도록 동기 부여해 주어야 하지만, 실제로 한정된 자리에 배정하려면 그 자리에 맞는 수준까지 경쟁의 범위와 수준을 낮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무 가열되면 냉각되지 않고, 너무 냉각되면 가열되지 않는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1990년대에 이루어진 고등교육 팽창 과정은 '가열' 기능이 '냉각' 기능을 압도한 결과였다.

가열이 폭발 수준에 이르면 정부는 경쟁 완화, 공평성 확보는 명분으로 기회를 좁히지 않고 넓혔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공정성을 관리하는 것에만 집중했다(장경섭, 2009). 이런 전략에 대해 일부는 권위주의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주목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한국 사회 특유의 사회구조에서 발현된 지위 경쟁의 열망을 수용한 것에 가깝다. 경제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채 분배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도 의지도 없던 정부 입장에서 '대학 입학의 기회를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한다'는 논리는 나름의 분배 논리로 받아들여졌다(아리타 신, 2007)했다. 그러나 경쟁 완화라는 명분으로 시행된 기회 확대는 경쟁을 강화했다.

### 3) 수요 측면: 근대 가족의 형성과 경제위기라는 맥락

급속한 산업화는 급격한 도시 이동을 낳았고, 이 단계에서 직업 분배는 철저히 교육 수준별로 배분되었다(장경섭, 2009). 한국은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농민층 자녀가 육체 노동자와 비육체 노동자 양방향으로 이동했고, 이런 상황에서 교육기회 획득 정도가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박병영 외, 2010: 79). 장기간에 걸쳐 완만한 속도로 산업화를 이루어 농업-제조업-서비스업의 순차적 산업 구조 변화를 겪었던 주요 유럽 국가나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확대 사이의 시간 차이가 거의 없었다.[68] 이런 변화는 "구조적 사회이동"(박병영

---

요를 수용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보였기에 교육 팽창이라는 기본 추이를 바꿀 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했다.

67) 이런 흐름을 거스르는 정책은 실패했다(Seth, 2002: 5). 1950년대에 정부는 실업교육 확충을 위해 고등학교 신설 시 실업고교와 인문고교 비율을 7:3으로 할 것을 지시하는 실업고교 우선 증설 시책을 발표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다(김영화, 2015: 159). 1961년에 군사정권이 대학정원을 대폭 감축시키려고 한 시도도 실패했다(강준만, 2009: 109-110).

외, 2010: 79)의 가능성을 키웠고, 사람들은 그 가능성을 결정하는 고리가 교육이라는 점을 체감했다.

그러나 교육열이 실제 '교육수요'(김경근, 2003: 37)로 전환된, 그리하여 교육 팽창이 급격화게 진행된 배경에는 교육 투자 주체로서의 '근대 가족'[69]의 형성이 있었다.[70] 한국의 교육체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기반했다. 이 점이 1970년대 중반까지는 일정한 제약요인으로 작동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그렇지 않았다. 급속한 경제성장에 수반해 가계소득이 늘었다. 그 상승 폭은 1970-84년생이 유년기를 보냈을 무렵에 절정에 이르렀다. 반면 자녀 수는 크게 줄어 투자할 여력은 커졌다. 이런 구조적 변화는 자녀 교육을 중심으로 한 가족이념의 강화와 맞물렸다. 이것은 전 가족의 "입시가족"(김현주, 2013)화를 촉진했다. 이것이 1990년대에 들어와 고등교육이 급격히 팽창한 수요 측면의 맥락이었다.

인구학적 지표로 확인한 가족제도 변화 맥락에서 1970-84년생의 위치는 근대 가족의 형성기에 유년을 보낸 코호트로 요약된다. 평균 가구원 수가 3-4명으로 대폭 줄었다.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자녀수가 줄었기 때문이다(권태환·박영진, 1995: 253-255). 1960년 이후, 특히 1965년 이후 출산력 저하 효과가 전사회적인 평균 자녀수 감소로 나타나기 시작한 때가 1975년이었다(권태환·박영진, 1995).[71] 대규모 이농

---

68) 아리타 신(2007: 83)은 한국에 비해 일본에서는 '교육 기회의 평등화' 의식이나 학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차이의 배경으로 일본에서는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 수준 상승과 기업 단위의 복지체제로 고졸 블루칼라 노동자의 지위가 안정적이었다는 점을 든다.

69) 가족사 연구에서 근대 가족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가족애를 기반으로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 남편은 돈을 벌고 아내는 주부로서 분업화되어 있으며, 자녀에 대해서는 강한 애정과 교육에 관심을 두는 가족"(오치아이 에미코, 2004[1994]: 12)이다.

70) 여기에서는 근대가족 형성을 교육 팽창 요인으로 다루지만, 반대 방향의 관계도 가능하다.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노동력으로서의 아동의 중요성이 낮아지고 교육 대상으로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자녀수를 줄이게 된 측면도 있다. 자녀의 가치가 '생산재'에서 '소비재'로 바뀐 것이다(오치아이 에미코, 2004[1997]: 98). 이러한 전환은 아이를 키우는 의미와 비용을 대폭 늘렸고, 출산율 감소는 그 결과로 볼 수 있다. 자녀수가 더욱 줄어들고 삶의 주요 영역이 제도화, 시장화된 후기 근대로 오면 아이는 '소비재'에서 '위험'으로 변한다. 김홍중은 후기 근대에서 아이의 의미를 "리스크-토템"(2016: 164)으로 개념화한다. 아이가 너무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그래서 역설적으로 위험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사회변동과 그에 따른 아이의 의미 변화는 오늘날 한국의 저출산을 설명할 때에도 고려되어야 할 관계다.

71) 출산율은 1960년부터 1985년까지 급감한다. 인구학에서는 이 시기를 "제1단계 출산력 변천"(전광희, 2002: 84)기로 규정한다. 그러나 1960년대 초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의 출산율 하락의 맥락과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출산율 하락의 맥락은 질적으로 달랐다. 전기의 출산율 하락은 "근대화나 산업화의 직접적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과거 인구가 새로운 사회 경제적 여건에 적응하면서 일어"(p. 85)난 것으로 "새로운 긴급 사태,

도 가구원 수를 줄였다. 1960년대 초반 인구 전체의 30% 내외였던 도시 인구는 1970년대 초반에 40%를 넘어서고 1980년대 초반에 60%를, 1980년대 후반에 70%를 넘어섰다. 1975년을 기점으로 한 평균 가구원 수 변화에는 10년 전에 시작된 급격한 도시화 효과도 반영되어 있다(권태환·박영진, 1995).

가구 구조의 변화는 가구의 물질적 조건을 규정한 산업 구조 및 직업 구조 변화와 연결되어 있었다. 한국이 실질적인 경제성장률을 보이기 시작한 때는 1960년대 중반이었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가계저축률도 낮았다. 가구소득이 실질적인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한 때는 중화학공업을 바탕으로 대량생산체제가 마련된 1970년대 중반이다. 그러나 여전히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기초한 수출에 의존했기에 노동자 대중이 소비 여력을 갖추기는 어려웠다(박재현, 2015). 소득이 크게 증가한 때는 1980년대 중반이었다(박찬임, 2008). 1980년대 중반 이래 지속된 3저 호황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상당 수준으로 유지되고 노동운동이 성과를 거두면서 임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핫토리 타미오, 2006). 노동소득분배율은 1970년대 초반의 40% 수준에서 1990년대 초반의 60%까지 꾸준히 증가했다(백욱인, 2008: 204). 직종별 임금 격차도 이 시기에 완만하게 줄었다. 1970년대에 사무직의 55% 수준이었던 생산직 임금은 1980년대 후반에 80%를 넘었다. 전문직과 비교하면, 1970년대 40% 수준에서 1990년대 초반 70% 수준으로 증가했다(백욱인, 2008: 204).

전 계층의 소득이 상승하면서 1980년대 후반으로 오면 중상층에 국한되었던 대량소비체제가 전 계층으로 파급된다(백욱인, 2008). 가구당 0.9대를 기준으로, 냉장고와 텔레비전이 1980년대 후반에 보편화되었고, 세탁기가 1990년대 초반에 보편화되었다. 전자레인지와 오디오, 비디오 등이 1990년대 중반에 70-80% 수준까지 보급되었다. 자동차 수도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에 급증했다. 물질소비가 어느 정도 끝나자 서비스비 비중이 커졌고, 특히 교육비가 서비스비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핫토리 타미오, 2006: 41; 백욱인, 2008: 209-211). 1982년 전체 지출의 6.2%를 차지했던 교육비는 2007년 12.0%로 2배 늘었다. 같은 기간에 합계출산율이 약 2.5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고 평균 가구원 수가 약 2명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1인당 교육비 지출 증가 폭은 더욱 컸다.

같은 시기에 주거 지역과 형태도 급격하게 변화했다. 1970-80년대는 도시화가 급

---

특히 사망률의 급격한 저하에 따른 과잉인구의 토지압력, 기아선상의 빈곤과 실업상태의 만연에 대한 인구학적 반응"(p. 85)이었다면, 후기의 출산율 하락기는 "1975년부터 중화학공업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근대화, 도시화, 이농향도, 경제성장의 현대사와 일치"하며 "젊은 신혼부부들이 이상자녀수, 희망자녀수, 출산규제, 자녀가치 등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출산활동에 '혁신'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시작하였다."(p. 86) "근대적인 의미의 출산활동"(p. 86)이 시작된 시기가 1970년대 중반이었다.

격하게 진행된 시기였다. 도시화율은 1980년대 초반에 60%를, 1980년대 후반에 70%에 이른다. 유출 요인이 컸던 이 전 시기와 달리 1970-80년대의 도시화는 유출 요인과 유입 요인이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특히 군 복무로 경험을 쌓고 큰 교육 기회를 가졌던 상당수의 비혼 남성이 도시 공식 노동시장으로 진입했다(장세훈, 2002: 507). 이들이 1970-84년생의 아버지였다.[72] 주거 형태의 측면에서 보면, 1970년대 중후반생부터 동일 코호트의 상당수가 아파트에서 유년기를 보내기 시작했다. 1988년 5대 신도시개발과 200만호 주택 건설 정책에 따라 서울 교외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었다(김명수, 2020: 113-114). 즉,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중반은 도시 아파트에서 유년기를 보낸 "아파트 키드"(박해천, 2015)가 등장한 시기라는 의미도 있다.[73]

구조적인 측면에서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가족이념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이른바 '가정중심성' 강화 현상이었다. 가족이념 변화는 가족의 성격이 생산조직에서 재생산(소비)조직으로 바뀌는 과정을 드러낸다. 식생활이 '서비스상품화'되고 주요 가정용품이 상품화된 것은 일정 부분 '가사노동의 외부화'를 가져왔다. 변화된 가족이념은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은 "주부역할의 전문화"(함인희, 1999)나 가정중심성 강화로 이어졌고, 가정의 중심에는 자녀 양육과 교육이 자리 잡았다(윤택림, 1996).[74] 관련 시장이 형성되면서 주부의 가사노동, 자녀 양육 및 교육 활동에 대한 사회적 역할 기대가 오히려 커졌다. 가족 이념 변화는 성별 분업 정도를 강화했다.

1970-84년생이 10대를 보냈던 시기인 1980-90년대 중반은 한국에서 소비사회가 형성된 시기이자 도시 중산층을 중심으로 라이프스타일이 표준화된 시기였다. 1960-70년대의 표준화가 모두가 가난한 상태에서 근면·성실을 일률적으로 강요받는 가운데 생긴 일종의 동질성이라면, 1980년대 중반 이래 형성된 표준화는 비교적 안정적인 물질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지위 경쟁의 일환으로 '소비'를 통해 형성된 것이었다(조원광, 2014). 이 또한 다수가 소비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진 것이

---

72) 1970-84년생은 1960-70년대에 이농해 도시에 정착 이들의 자녀다. 이런 의미에서 1970년대 중반생은 상당수가 농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첫 세대라고 할만하다. 이것이 세대 관계에 미친 영향도 상당하다. 이들과 (농촌에 머무른) 조부모의 교류는 명절이나 방학이라는 제한된 시간에만 이루어졌다(박해천, 2013: 204).

73) 오늘날 이들은 아파트를 매개로 '중산층'에 진입할 수 있었던 1960년대생까지와는 달리 같은 코호트 다수가 자력으로 집을 마련할 수 없는 첫 세대(박해천, 2013: 54)로 평가된다.

74) 이것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가족중심 가치관과는 다른 것이었다. 세대 관계를 핵가족의 지원망으로 동원하고, 부부 관계에서도 남편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여성이 가족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었다(이재경, 2003; 박경숙·김영혜, 2015).

다. 1990년대 중반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된 사회적 배경은 '중산층'의 성장과 그에 따른 고등교육수요 증대였다.

이런 상승 추이가 한풀 꺾인 계기가 1997년 경제위기였다. 특히 남성의 대학 진학률 증가세가 둔화된다. 그러나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4년제 대학 진학의 형태로 2000년대에 와서 다시 높아진다. 즉 경제위기 이후에도 교육팽창 추이가 꺾이지 않았다. 경제위기는 오히려 4년제 대학진학 열기를 높여 놓았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먼저 경제위기 이후 4년제 대학 진학을 추동한 것이 여성이라는 점에 주목해볼 수 있다. 이 점을 대학 진학률 상승 추이의 일반적 성별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읽는 것이다. 성별 차이는 낮은 교육 수준부터 순차적으로 좁혀졌다(김영화, 1995: 167-168). 정원 억제기에는 남녀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정원 팽창기에 남녀 차이가 줄어든다. 팽창기에도 대학보다는 전문대 수준에서부터 차이가 줄어든다(김영화, 1995: 167). 실제로 1990년 중반 대학교육 팽창 초기에 남성은 4년제 대학에, 여성은 전문대에 진학했다. 이런 추이의 연장선으로 보면 2000년대에 나타난 여성의 4년제 대학 진학 경향은 성별 격차를 유지할 상위 교육 수준이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성별 격차가 줄어든 추이로 이해할 수 있다.[75]

흥미로운 지점은 고등교육 기회의 성별 격차 축소가 경제위기 이후에 뚜렷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한 가지 관점은 경제위기가 큰 영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다. 경제위기 이후에 교육 팽창의 역설이라는 일반적인 경향이 더욱 강해졌다고 보는 것이다. 고등교육이 팽창하면 교육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는데, 수익률 하락에 대응하는 방법은 추가 학력 획득밖에 없다(김종엽, 2003: 59). 이 논리에서는 교육투자 수익률이 떨어질수록 교육투자가 많아진다. 경제위기는 이런 역설을 강화했을 수 있

75) 수요 측면에서 교육 기회의 성별 차이 감소 추이를 설명하는 논리는 크게 두 가지다(장상수, 2009). 한 가지는 부모가 자녀 교육을 수익을 위한 투자수단으로 본다는 논리다. 다른 하나는 자녀 교육을 교육 그 자체의 가치로 본다는 논리다. 전자라면 딸보다는 아들에게 먼저, 많이 투자할 것이다. 노동시장이 남성 위주로 조직되어 있어서 아들의 교육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구의 가용 자원이 많아지면 앞의 사항을 고려하는 정도가 낮아질 수 있다. 어느 수준 이상이면 아들의 투자 한계 수익률이 딸의 투자 한계 수익률보다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즉, 여유가 있으면 딸에게도 투자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관점에서 부모는 자녀의 교육 수익률보다 교육 자체의 가치를 고려한다. 이 논리에 따르면 아들과 딸에 대한 교육 투자 차이가 적다. 그리고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이런 논리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렇게 보면, 부모의 학력이 높아지거나 소득이 늘어날수록 자녀 교육 투자의 성별 차이가 좁혀질 것이다. 더욱이 소득 상승과 학력 상승은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두 번째 논리를 따르더라도 그럴 능력(자원)이 있어야 딸이 교육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 한국 여성의 교육 수준 상승 추이는 서구에서와는 달리 교육의 결혼시장 가치로 설명되어왔다.[76] 그런데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고등교육 수익률이 노동시장[77]과 결혼시장[78] 모두에서 낮아졌다고 보고된다. 이런 보고가 맞다면 여성의 대학 진학 증가는 대학 진학의 수익률 상승이 아니라 하락을 반영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남성에게서 이런 경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남성의 대학 진학이 한계 수준까지 높아졌기 때문이다.

교육투자 증가를 경제위기의 충격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경제위기는 가구의 자녀교육 투자 능력을 제약했겠지만 투자 의욕은 더욱 키웠을 수 있다. 불확실한 상태에서 일단 진학해야 한다는 압력이 강해졌을 수 있기 때문이다.[79] 남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불안정해지면서 여성의 교육 욕구가 더욱 커졌을 수도 있다(박경숙·김영혜·김현숙, 2005). 결과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등교육 팽창이 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 이루어졌다. 이 팽창을 가속화한 집단이 1980

---

76) 서구의 연구는 여성의 교육 수준 상승을 노동시장 참여 수익률 증가의 결과로 설명한다(Goldin, 2006). 산업화가 진전되면 서비스 산업과 화이트칼라 직업이 팽창하는데, 이것은 여성이 참여하기 좋은 조건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여성의 취업이 활발해지고 교육의 수익률도 높아진다. 교육수익률이 증가하면 여성은 예전보다 더 교육받으려 할 것이고 그 결과 성차가 감소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한국 여성의 대학 진학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먼저 산업·직업 구조가 급변했음에도 여성의 고용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적어도 1990년대 중반까지 여성의 학력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또는 여성의 학력과 여성의 화이트칼라 직업 종사 비율이 특별히 관계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되었다(Brinton and Lee, 2001). 교육 동질혼 경향이 강하고 특히 고학력에서 그런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근거로 학력은 오히려 결혼시장의 지위와 연계되어 해석되었다(박경숙, 1993; 장상수, 1999a; 박경숙·김영혜·김현숙, 2005). 한국에서 여성의 교육이 결혼시장에서 갖는 의미는 특히 자녀 교육 역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77) Sandfur and Park(2007)은 1998년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학력이 첫 직업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노동시장 진입 코호트별(1960-79년, 1980-89년, 1990-98년)로, 또 성별로 비교했다. 분석 결과 남성의 학력 효과는 코호트별로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여성의 고등교육 효과는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감소했다. 그러나 코호트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장상수, 1999b)도 있다.

78) 박현준과 김경근은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접수된 혼인 신고서를 바탕으로 1990년대부터 부부의 학력 연관성('동질혼')이 점차 감소했다고 주장한다(박현준·김경준, 2011).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한 후속연구에서도 199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부부의 학력 연관성이 약해졌다고 주장한다(박현준·김경준, 2012).

79) 이와 관련해 핫토리 타미오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그는 거품경제 붕괴 후 대졸자에 대한 회의가 커졌던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경제위기가 대학입시 경쟁을 격화했다면서 둘의 차이를 낳은 요인으로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인적 네트워크가 차지하는 역할을 꼽는다. 위기 국면에서 구직 활동을 하면서 네트워크의 힘을 새삼스럽게 확인하게 되었고, 높은 수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위해 명문대에 진학하려는 동기가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핫토리 타미오, 2007: 159-161).

년대 초중반생 여성이었다.

## 3. 계층화 양상과 경쟁 성격의 변화

중등교육 팽창에 이은 고등교육 팽창은 형식적으로는 기회의 평등화를 가져왔다.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 연구가 주목하는 측면은 경쟁의 성격 변화다. 변화의 성격은 경쟁의 일원화·전면화로 요약된다. 이것은 경쟁의 기회비용이 커진다는 것을, 상대적 결과 차이가 커진다는 것을 뜻한다(김종엽, 2003; 김두환, 2015; Kim and Choi, 2015). 이 절에서는 교육 기회 팽창이 경쟁의 성격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형식적 평등화와 실질적 위계화

고등교육 팽창의 성격과 함의를 말할 때 주된 쟁점은 그것이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증가시켰는가, 감소시켰는가이다(Shavit and Blossfeld, 1993; 장상수, 2000; 김두환, 2015; 장상수, 2015; Kim and Choi, 2015; 최성수·이수빈, 2018). 절대 척도로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셈이니 불평등 정도가 완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상대 척도로 보면 쉽사리 답하기 어려운 문제다. 실증 연구에서는 보통 교육 기회 획득에 대한 가족배경 효과의 변화로 불평등 수준 변화를 측정한다. 그러나 실증 연구가 쉽지 않고, 연구마다 조금씩 서로 다른 결과를 보고(장상수, 2015: 503)하는데[80] 이를 종합하기도 어렵다(최성수·이수빈, 2018: 82).[81]

---

80) 실증 연구에서 이 쟁점은 교육기회 획득에서 가족 배경이 미치는 영향력의 추이를 확인하는 식으로 검토된다. 그런데 이 '추이'를 확인하는 연구가 많지 않다. 장기적 변화를 볼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수의 연구가 있지만 서로 다른 결과를 보고한다. 교육년수를 종속변수로 하면 대개 가족배경의 영향력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된다(장상수, 2000; 방하남·김기헌, 2003).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1980년대생에 오면 감소세가 반등한다는 보고도 있다(박병영 외, 2011). 학력 단계별 진학확률을 종속변수로 한 연구들은 대부분 가족배경의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다(장상수, 2000; 최성수·이수빈, 2018)거나 1990년대 후반 이후로 강화되었다(방하남·김기헌, 2003; 박병영 외, 2011; 장상수, 2015; Kim and Choi, 2015)고 보고한다. 한국에서는 교육연수보다는 학교급이 중요하다고 보면, 쟁점은 불평등의 지속이냐 악화냐로 좁혀진다.

81) 그것은 자료의 비교 가능성 제약 때문이기도 하고, 이론적·개념적 비교 틀의 부재 때문이기도 하다. 최성수와 이수빈(2018: 82-83)은 그 이유를 다섯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단일 표본 자료에 의존해 자료의 조사 효과를 통제할 수 없고, 각 출생 코호트 집단의 크기가 작으며, 코호트 비교의 폭이 4-5개로 좁아 분명한 추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둘째, 최근 코호트(1990년대생)를 포함하지 않아 추이를 말하기 어렵다. 셋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1960-70년대에는 교육 팽창에 따라 가족배경이 교육기회 획득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산업화가 진전되면 관료화된 직종이 늘어나고 이 직종은 능력에 따른 분배를 요구하기 마련이기에 업적주의의 원리에 따라 인재가 배분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가족 배경 영향력의 약화다(Blau and Duncan, 1967).

그러나 1990년대 이래 나온 국내외 연구들은 가족배경의 영향력이 적어도 줄지는 않았다고 보고한다(Shavit and Blossfeld, 1993; 하라 준스케·세이야마 가즈오, 2002[1999]). 중등교육 수준에서는 평등해졌지만 고등교육 수준에서는 계층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라 준스케와 세이야마 가즈오는 이런 경향을 "풍요로워지면서 '기초재' 분포의 평등화는 진행되었지만 '상급재' 분포는 여전히 불평등한 채로 남아 있"(2002[1999]: 43)다고 표현한다.

과제는 변화 양상을 해석하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 현상을 설명하는 논리로 제시된 것이 부르디외(1995[1979])의 문화적 재생산론이다. 이 관점에서 학력은 극단적으로 말해 능력과 무관하며, 학력 달성 및 계급 달성은 여전히 출신에 의해 규정된다. 이런 점에서 업적주의화 이론과 대립된다.[82] 이를 검증 가능한 가설 형태로 조작화한 것이 이른바 '최대치로 유지되는' 불평등(maximally maintained inequality, MMI) 가설과 '효과적으로 유지되는' 불평등(effectively maintained inequality, EMI) 가설이다.

MMI 가설은 상층 지위 집단이 특정 교육 수준에 모두 취학하면 교육 팽창에 따라 교육기회 획득에 가족배경이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MMI는 (양적) 불평등이 감소하는 시(지)점에 주목한다. 그것은 상위 계층의 이점이 조금이라도 존재하지 않는 순간이다. 그때까지는 불평등이 '최대한' 유지된다(Raftery and Hout, 1993). 반면 EMI는 양적 포화상태에서 불구하고 불평등이 '효과적'으로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양적인 불평등 감소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양적 불평등이 질적 불평등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EMI는 (질적) 불평등이 유지되는 시(지)점에 주목했다(Lucas, 2001). 상층 지위 집단이 계획하는 재생산 전략을 배제 전략과 적응 전략으로 구별해 고등교육에서 계층 재생산 기제를 설명하려는 시도(Alon,

---

를 절대 위치로만 활용했다. 넷째, 대학 일반 혹은 4년제 대학 진학 및 졸업 여부를 넘어선 대학 진학 내 질적 차이를 다루지 않았다. 다섯째, 출생 코호트 간에 나타나는 부모 지위의 영향력 차이를 비선형확률모형의 추정치를 비교하는 식으로 확인하는 오류를 범했다.

82) 업적주의화 입장과 문화재생산론은 대립되지만 학력과 계층 지위의 연계성 강화를 전망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두 입장의 차이는 학력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무관한 것으로 보는지, 유관한 것으로 보는지다. 현실은 이 사이에 있을 것이다.

2009; 문정주·최율, 2019)도 같은 흐름에 속한다.

두 관점은 지위의 상대 차이의 (세대 간) 유지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같다. 즉 불평등 수준 증감을 따지기보다 불평등이 유지되는 조건과 동학을 포착하려 한다. 이런 시각은 교육기회 불평등 추이나 그것에 대한 제도 변화의 영향력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를 강조한다.

2000년대 이래 나온 연구들은 이런 관점을 검증하는 작업이었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적어도 중등교육 단계에서는, 나아가 2년제 대학 진학 가능성에서는 가족배경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추이가 나타나지만, 4년제 대학 진학, 또는 4년제 상위권 대학 진학 가능성에서는 감소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쟁점을 가장 방대한 자료로 검토한 최성수와 이수빈(2018)은 교육기회의 불평등 추이를 이렇게 정리한다.

> 더 접근 가능한 교육 선택(중학교,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기회 격차가 감소한 반면, 교육 확대 이전에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막론하고 접근 가능성이 전반적으로 낮아서 격차가 적을 수밖에 없었던 선택 부문(4년제 대학, 상위권 대학)에서 격차가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 한국의 교육 기회 불평등은 전체적으로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교육 접근성이 전 계층에 확대되는 양상으로 변화해 왔기 때문에 결코 증가 혹은 악화되어 왔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다. (최성수·이수빈, 2018: 106)

최성수와 이수빈이 내린 결론도 교육 팽창과 불평등 수준의 관계를 다차원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을 취하면 불평등 수준의 평균 변화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불평등의 지점이 어디로, 어떤 맥락에서 이동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83] 특히 이 연구의 관심사인 학교-노동시장 이행 국면의 성격 변화를 규명하는 맥락에서 교육 팽창을 바라보면, 교육기회 획득 격차의 크기뿐만 아니라 격차의 성격, 또는 경쟁의 성격 변화를 규명하는 작업이 중요해진다.

이 연구가 주목하는 지점은 교육 팽창에 따른 경쟁의 성격 변화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진행된 교육 팽창은 경쟁의 전면화를 초래했다. 입시 경쟁의 치열함은 조선 시대의 과거 시험 경쟁과 1920년대 보통학교 입학 경쟁에서, 1950년대 중학교 입학 경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강준만, 2009). 그러나 그것은 국지적 경쟁이었다. ‘장남’을 대표 선수로 삼은 가족 단위의 경쟁이 있었고, 그에 따라 경쟁의

83) 불평등 수준의 평균적 변화를 규명하기는 쉽지 않다. 관점에 따라 위에서 인용한 최성수와 이수빈의 결론을 불평등 감소로 볼 수도, 불평등 지속으로 볼 수도, 불평등 증가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범위는 결코 좁은 것이 아니었지만 경쟁에 직접 참여하는 개인은 소수였다. 낮은 가계소득 수준과 높은 교육비 부담, 많은 자녀 수와 같은 '제약요인'(김경근, 2003: 14)이 있었기 때문이다. 모두가 대학 진학을 '마땅한 것'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게 된 상황에서 경쟁은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경쟁의 결과에 따른 차이를 확대시키고, 그만큼 경쟁의 무게감을 키운다.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경쟁의 잣대는 일원화되고 표준화된다. 경쟁의 결과에 따른 참여자 위치의 위계화가 더욱 철저하게 진행된다.

어느 정도까지는 기회 평등화에 따른 경쟁 격화를 더 많은 기회로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이상 평등화할 기회가 없는 수준에 이르면 형식적 기회 평등은 실질적 기회 차이로 전환된다. 1970년대 중반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이래 유지되었던 중등교육의 '평준화' 기조가 1990년대 중반에 '자유화'로 전환(김종엽, 2009; 장수명, 2009)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타난 변화다.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990년부터 1995년까지 안동, 군산, 목포, 춘천, 원주, 이리, 천안이 평준화 정책을 폐기했다(김종엽, 2007: 195; 김두환, 2015: 120). 더 중요한 변화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등장이다(김종엽, 2007: 196). 과학고등학교는 1984년에, 외국어고등학교는 1992년에 생겼지만, 두 학교가 특권적 교육 재화로 자리 잡은 때는 1990년대 중후반이었다. 당시 학비가 연평균 500-1,000만 원이었음에도 입학 경쟁이 치열했고 실제 성적이 좋은 학생을 모집해 대학 입시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두 학교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특목고 설립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학부모단체가 설립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1984년 4개 고교로 출발한 과학고는 2006년 19개교로 늘었고, 1994년 1개교로 출발한 외고는 2006년 29개교로 늘었다. 2000년대 중반 이들 학교의 정원과 자립형 사립고 및 국제고 정원을 합하면 약 1만 명에 가까웠다(김종엽, 2007: 199).

대학체제도 1990년대 후반부터 위계화된다. 1980년대 후반 주요 대학의 '제2캠퍼스' 건립을 시작으로 대학들이 설립되고 대학설립 준칙주의 도입을 계기로 1990년대 중후반에 많은 대학이 신규 설립되면서 대학 간 서열화 수준도 높아졌다. 대학진학 기회가 확대되면서 중고등학생 모두가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두게 되자 대학 서열 인식도 높아졌다. 1993년에 수능이 도입된 이래 등장한 주요 입시학원의 '대학지원 배치기준표'는 촘촘한 대학 서열을 전국 중고등학생에게 각인시켰다. 전국의 고등학생은 매달 자신의 모의고사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학과)을 확인했다. 주요 대학들도 지위 경쟁을 시작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수준에서 각각 '수평적 계층화'가 진행되고 각 계열이 서로 연결되자 입시 경쟁은 교육 수준 전체로 확장된다. 특목고의 위상은 입시 경쟁의 시작

점을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앞당겼다. 세계화와 자유화의 가치가 강조되면서 초중등 교육에서도 자유화 바람이 불었다. 1997년에는 영어가 초등학교 교과목으로 채택되었다. 1990년대 중반의 초등학교 과외 열풍이나 1990년대 후반의 '유아과외', '조기유학' 현상(강준만, 2009: 196), 2000년대 초반의 '기러기 아빠 신드롬'이나 '원정출산 붐' 등(강준만, 2009: 214-217)은 이런 맥락을 배경으로 한다. 이런 현상의 주체가 '근대가족'이었다. 가족 단위 입시 경쟁의 보편화 현상에 대한 학술 보고가 나오기 시작한 것도 1990년대 후반이었다(이동원 외, 1996).

대입제도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된 것도 1990년대 중반부터다.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 대입제도는 비교적 단순했고, 일관되었다.[84] 경쟁의 전면화는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사회적 부담감을 과중시켰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대입제도가 복잡해졌고, 자주 바뀌었다. 계기는 1994년에 도입된 수학능력시험이었다. 표준화된 시험을 도입한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내신과 대학별 고사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다는 취지가 있었고, 이때부터 대입제도는 3-4년 단위로 계속 바뀌었다. 변화의 기조는 '수시' 비중 확대와 입학 전형의 다양화였다.[85]

입시제도 변화는 사교육 시장의 진화와 맞물려 있었다. 1980년대에 실시된 '학군제'에 따라 강남이 주목받기는 했지만 1990년 이전만 해도 사교육 시장은 활발하지 않았다. 1980년대에는 7.30 교육개혁안에 따라 과외가 금지되었다. 사교육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시점은 1990년대 초반이다. 1990년대 중반 이래 지속된 대입제도의 부침과 그에 따른 혼란은 사교육 시장을 줄곧 강화했다. 2000년대에는 대입전형이 다양해지면서 입시 컨설팅산업이 붐을 이루었고, 강남의 존재도 더욱 부각되었다.

---

84) 1945년-1980년에는 예비고사를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이 원하는 방식으로 선발하는 '대입예비고사+대학별 본고사' 체제였다. 1982-1993년은 '학력고사+내신' 체제로, 내신 성적이 일부 반영되었지만 학력고사 비중이 결정적이었다(이민경, 2020: 12).

85) 1994-96년에는 수능과 고교 내신, 대학별 고사 방식이었다. 이때는 대학별로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과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다. 1997-2001년에는 수능과 학교생활기록부, 대학별 고사(논술, 면접 등)로 수정되었다. 2002-07년에는 수능, 학생부, 대학별 고사 체제는 유지하되 선택형 수능제가 도입되었다. 1998년에 발표한 이해찬 장관의 개혁안에 따라 2002학년도부터는 수시 비중이 크게 늘었다. 2000년에는 정시:수시 비중이 96:4였던 것이 2002년부터 수시 비중이 28.8%로 급증했고 2007년에는 수시 비중이 51.5%로 과반을 넘었다(이민경, 2020: 12). 2008년부터는 2004년에 예고된 대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했다. 2013년에는 입시제도가 너무 복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수시는 입학사정관제를 개편한 학생부 종합('학종'), 교과, 논술, 실기 위해 4개 전형으로, 정시는 수능과 실기 위해 2개 전형으로 간소화했다. 2015년도부터는 공인 어학성적, 교외 수상 등 학교 외부 실적은 평가에서 배제하고 교내활동에 기반한 학생부 중심 평가로 전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이민경, 2020: 12-13). 최근에는 '수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고조되어 정시 비중을 늘리겠다는 교육부 정책이 발표된 바 있다.

과외 금지 위헌 판결(2000.4.27.)도 사교육 시장 과열의 한 요인이었다.[86)]

대학 교육의 보편화는 경쟁의 범위를 대학 입학 이후로도 확장했다. 다수가 대학생이 되자 어느 대학인지가 중요해졌다. 같은 대학에 입학했더라도 재학 중 일을 해야 할 형편인지, 해외 어학연수 등을 다녀올 수 있는 형편인지 등 여러 지점에서 가족배경에 따른 차이가 생길 여지가 커졌다(Choi, 2015; 2018). 교육 방식에서도 경쟁이 강조되었다. 2010년경부터 학생평가방식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되었다. 획일적 지표에 따라 국내외 대학평가순위가 꾸준히 발표되면서 학교 경쟁이 강화되었다(김기헌, 2018: 127). 2000년대 중후반에는 전문대학원이 설립되면서 경쟁 수준이 한 겹 더해졌다. 이 모든 것이 대학 진학 이후의 경쟁을 강화한 변화였다.

### 2) 지위 상승 경쟁에서 지위 하락 방지 경쟁으로

가와이 노리코(2011: ⅲ)는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왜 계속 상승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이렇게 비교한다. "국가가 인위적으로 경쟁을 배제시킨 한국에서 오히려 경쟁이 격화되고 국가가 입시 경쟁에 개입하지 않는 사립대학 부문이 존재하는 일본에서는 경쟁이 안정화되는 기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가와이 노리코의 이러한 관찰은 한국의 교육팽창의 성격과 그것의 결과를 고찰할 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교육열은 평등한 사회구조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교육기회의 평등이라는 관념은 한국 사회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받았다. 국가는 그러한 평등의 열망을 고등교육기회 확대로 수용했다. 그러면서 입시의 공정성을 관리하는 관리자 역할을 자처했다. 역설은 경쟁을 완화한다는 논리로 경쟁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대학교육의 확대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이후 확대는 자체 동력을 갖는다. 대학교육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대학교육을 필수재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때부터는 지위 상승의 열망이 아니라 지위 하락의 두려움이 교육 투자를 지속하는 동인

86) 입시제도의 변화는 언제나 경쟁 완화, 공정성 강화, 수월성 강화 등의 논리로 추진되었다. '사교육 완화'는 단골 명분이었다. 그러나 사교육을 완화한 입시제도는 없었다. 과거에 사교육 완화책으로 부각된 방식이 오늘날 사교육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일이 반복되었다. "새로운 입시제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능력주의의 논리로 만들어졌던 기존의 제도를 또 다시 능력주의 가치를 통해 배척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반복"(문정주·최율, 2019: 181)되고, "해보지 않은 시도가 없으니 이제는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새로운 정책이 될 것"(이민경, 2020: 12)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입시의 기능이 상대평가에 따른 '선발'에 있기 때문이고, 그런 점에서 입시제도가 입시 경쟁에서 우위에 서려는 만인의 투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대학 입시제도의 의미는 구체적인 내용에서가 아니라 그 제도에 편입된 대상의 규모에서 찾아야 한다.

이 된다.

김두환은 고등교육 팽창을 상층 엘리트 계층의 ‘우회로 만들기 과정’으로 평가한다(2015: 122). 커지는 고등교육 수요를 인적·사회적 자본이 없는 신설 대학으로 유도해 자신들의 기회를 유지하려고 한 전략의 결과였다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래 ‘자유화’라는 이름으로 고등학교와 대학교 수준에서 진행된 위계화를 추동한 집단이 이들 중산층이었음에는 분명하다(김종엽, 2007; 장수명, 2009; 김두환, 2015). 최근에는 이들의 전략이 성공했음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중산층 ‘세습사회’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나왔다(조귀동, 2020).

그러나 대학생이라는 지위의 대중화는 중간층 이상 수준에서의 경쟁도 강화했다.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예가 김현주의 서울 중산층 가족 입시 경험 연구다. 김현주가 만난 서울 중산층 부모의 자녀 교육 목표는 ‘인서울대학’(2013: 188)이였다. 그녀는 자녀의 삶의 수준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비교적 무난한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인서울대학’의 상징성을 이렇게 해석한다.

> 자녀가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대학에 진학해서 학벌 중심으로 재편된 사회적 위계 구조 속에서 지배적 지위를 획득하는 충분한 ‘자격’에는 다소 미달되더라도 부모의 추가적인 지원과 자녀의 역량이 차후에 뒷심으로 발휘될 경우 따라잡을 수 있는 기본 위상을 획득하는 것이다. (…) 적극적인 의미에서 ‘인서울대학’ 진학이 관건이 아니라 ‘인서울대학’을 진학하지 못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모면하는 것이 관건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한국의 교육열이 계층 상승의 욕구에서 추동된다기보다 계층 하향의 위험회피와 관련된 방어기제에 더 맞닿아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p. 188)

좁게는 학교-노동시장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넓게는 성인기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교육기회를 둘러싼 경쟁의 심화와 그로 인한 고등교육 팽창은 학교를 떠나는 시점을 대폭 유예함으로써 ‘청년기’를 연장했다. 동시에 경쟁 격화는 청년기의 의미를 바꾸었다. 학생 시절은 더 이상 유예기로 여겨지지 않는다. 학생 시절은 적극적으로, 생산적으로 조직해야 하는 시간으로 인식된다(서동진, 2009; Furlong et al., 2011; 오찬호, 2013).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경쟁의 치열함은 특히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고된다(오찬호, 2013). 이른바 ‘지방대생’들에서는 그러한 경쟁 강박이 덜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다(최종렬, 2017). 경쟁의 강화라는 의미에서 청년기는 오히려 축소되었다.

### 3) 1970-1984년생의 경험

1990년대 중후반 이래 교육 기회의 평등화 추이는 다양한 지점에서의 위계화를 수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복합적 변화 양상이 1970-84년생의 교육 경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 확인해보자. 고등학교나 대학 입학 시점으로 보면 5개 코호트는 대략 앞의 2개 코호트와 뒤의 3개 코호트로 구분된다. 1973-75년생은 자유화로 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1976-78년생부터는 1990년대의 변화된 분위기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다. 앞의 두 코호트는 진학률이 40% 초반 수준이고 취학률이 35% 내외 수준이었을 때 대학에 진학했다. 전문대 진학 비중이 컸다. 1980년대 중반생이 대학에 진학한 2000년대 중반으로 오면, 대학 진학률은 약 80%에, 대학취학률은 약 70%에 이른다. 동년배의 10명 중 7명이 대학생이 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교육 수준과 졸업시점에 대한 가족배경 효과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교육 팽창이 교육 경쟁의 성격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더불어 성인기 이행 국면이라는 맥락에서 학교를 떠나는 시점의 연장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교육 수준 차이

고등교육의 급격한 팽창이라는 맥락에서 교육기회에 대한 가족배경의 영향력은 어떻게 변했을까? <표 3-3>은 각 교육 수준에 대한 선형확률모형(LPM)의 결과를 제시한다. 남녀로 구분해 각각 6개 모형을 구성했다. 각 교육 수준을 종속변수(0과 1)로 두고 코호트를 통제변수로, 가족배경을 독립변수로 둔 모형을 기본으로 삼고[모형 (1), (3), (5), (7), (9), (11)], 코호트와 가족배경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형을 추가했다[모형 (2), (4), (6), (8), (10), (12)].

남성에서 가족배경 변수의 효과가 유의미한 교육 수준은 ‘고졸’과 ‘대졸’이다. 가족배경 변수 값이 높을수록 ‘고졸’에 속할 가능성은 낮아지고[모형 (1)], ‘대졸’에 속할 가능성은 높아진다[모형 (5)]. 이 점은 여성도 마찬가지다. 가족배경 변수 값이 높을수록 ‘고졸’에 속할 가능성은 낮아지고[모형 (7)], ‘대졸’에 속할 가능성은 높아진다[모형 (11)]. 효과의 크기는 여성이 약간 크다. 가족배경 효과의 코호트별 차이를 보기 위해 투입한 상호작용항은 모든 모형에서 유의미하다.

<표 3-3> 각 교육 수준에 대한 선형확률모형 결과(성별, 코호트*가족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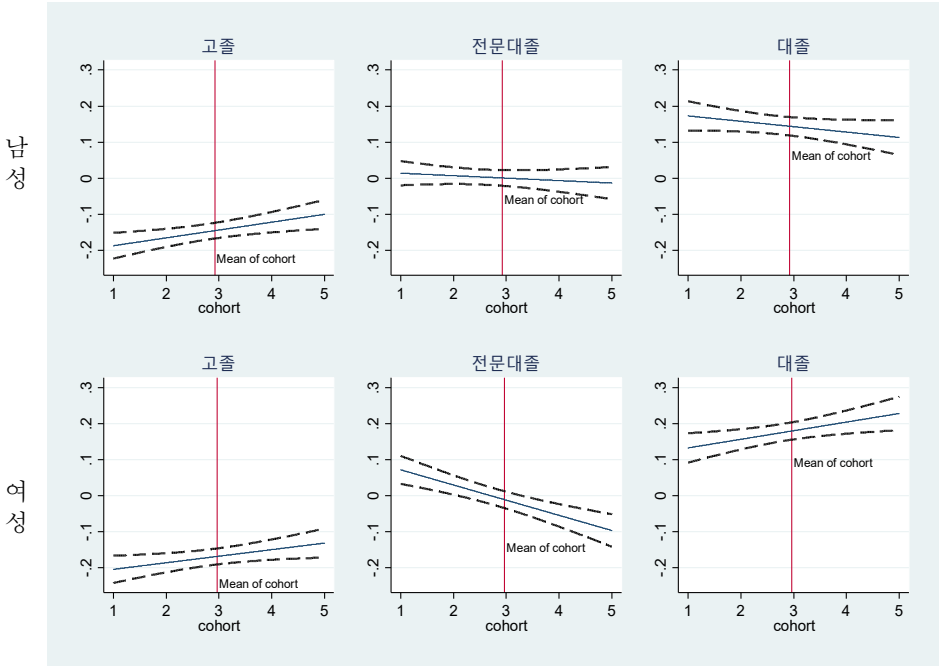
| | | 남성 | | | | | | 여성 | | | | | |
|---|---|---|---|---|---|---|---|---|---|---|---|---|---|
| | | 고졸 | | 전문대졸 | | 대졸 | | 고졸 | | 전문대졸 | | 대졸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코호트 | (70-72년) | | | | | | | | | | | | |
| | 73-75년 | -0.10** | -0.06 | 0.06* | 0.04 | 0.04 | 0.02 | -0.14*** | -0.12*** | 0.06 | 0.02 | 0.08** | 0.09** |
| | 76-78년 | -0.10*** | -0.07* | 0.04 | 0.02 | 0.06 | 0.04 | -0.25*** | -0.24*** | 0.12*** | 0.09** | 0.14*** | 0.15*** |
| | 79-81년 | -0.17*** | -0.13*** | 0.11*** | 0.09** | 0.06 | 0.04 | -0.25*** | -0.23*** | 0.14*** | 0.12*** | 0.11*** | 0.11*** |
| | 82-84년 | -0.10** | -0.07* | 0.08** | 0.07 | 0.02 | 0.00 | -0.24*** | -0.23*** | 0.09** | 0.09** | 0.15*** | 0.14*** |
| 가족배경 | | -0.14*** | -0.25*** | 0.00 | 0.05** | 0.14*** | 0.21*** | -0.17*** | -0.24*** | -0.01 | 0.09*** | 0.18*** | 0.15*** |
| 코호트 *가족 배경 | 73-75년# 가족배경 | | 0.15*** | | -0.07** | | -0.08** | | 0.08** | | -0.07* | | -0.01 |
| | 76-78년# 가족배경 | | 0.13*** | | -0.05* | | -0.08** | | 0.09*** | | -0.12*** | | 0.03 |
| | 79-81년# 가족배경 | | 0.14*** | | -0.06* | | -0.07* | | 0.08** | | -0.16*** | | 0.07** |
| | 82-84년# 가족배경 | | 0.12*** | | -0.04 | | -0.08* | | 0.09** | | -0.16*** | | 0.07* |
| Constant | | 0.40*** | 0.36*** | 0.19*** | 0.21*** | 0.41*** | 0.43*** | 0.56*** | 0.54*** | 0.17*** | 0.21*** | 0.27*** | 0.25*** |
| N | | 1,879 | 1,879 | 1,879 | 1,879 | 1,879 | 1,879 | 1,826 | 1,826 | 1,826 | 1,826 | 1,826 | 1,826 |
| R-squared | | 0.12 | 0.13 | 0.01 | 0.01 | 0.09 | 0.09 | 0.21 | 0.21 | 0.01 | 0.03 | 0.17 | 0.18 |

*** p<0.01, ** p<0.05, * p<0.1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그림 3-11>은 각 교육 수준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가족배경 효과의 코호트별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표 3-3>의 모형 (2), (4), (6), (8), (10), (12)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그림에서 가로축은 코호트를 나타낸다. 세로축은 가족배경의 한계 효과(marginal effect)를 나타내는 것으로 0이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마이너스이면 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플러스이면 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읽으면 된다. 세로축의 값은 코호트별로 가족배경 변수 값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각 교육 수준에 속할 가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나타낸다(Brambor et al., 2006).[87]

<그림 3-11> 각 교육 수준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가족배경 한계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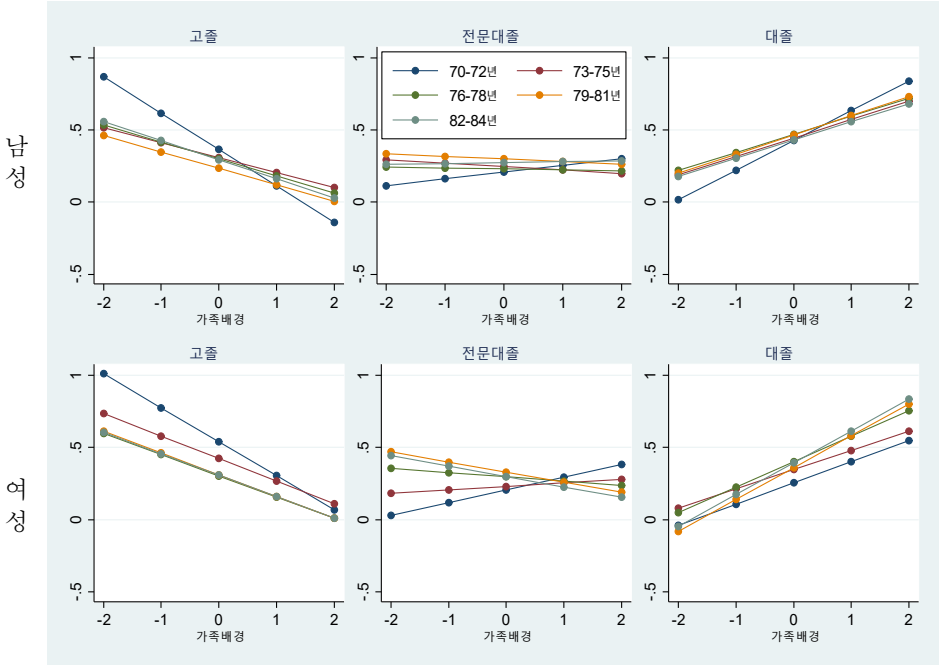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87) <표 3-3>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형에서 확인된 가족배경 변수의 회귀계수 값은 <그림 3-11>에서 코호트의 값이 0일 경우의 기댓값과 같다. 일례로 모형 (2)에서 가족배경 변수의 회귀계수 값은 -0.25다. 이 값은 <그림 3-11>의 고졸 남성 그림에서 코호트 값을 0이로 설정했을 때의 세로축 값과 같다. 물론 코호트 변수에 0의 값은 없고, 따라서 이 값은 가상의 값이다. 이 그림은 코호트 변수를 일종의 연속형 변수로 간주하고 변수 값의 변화에 따른 변화 추이를 선형으로 나타낸다. 따라서 코호트 간의 차이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약간의 굴곡이 있다. 그럼에도 이 그림은 전반적인 변화 추이를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남성부터 보자. 모든 코호트에서 가족배경이 좋을수록 고졸에 속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다. 그렇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아니지만,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가족배경의 부정적 영향력이 약해지는 추이가 나타난다. 전문대졸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가족배경의 한계 효과는 모든 코호트에서 0에 가깝다. 모든 코호트에서 가족배경이 좋을수록 대졸에 속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다. 그렇지만,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아니지만,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가족배경의 긍정적 영향력이 약해지는 추이가 나타난다. 다시 말해 가족배경이 대졸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정도가 약해졌다. 그러나 종합적으로는 교육 기회에 대한 가족배경의 영향력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은 여성이다. 고졸에 속할 가능성에서는,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가족배경의 영향력이 최근 코호트로 오면서 약해지는 추이가 나타난다. 이 점은 남성과 같다. 전문대졸에 속할 가능성에 가족배경이 영향을 미치는 양상은 최근 코호트로 오면서 크게 변했다. 1970-72년생에서는 가족배경 변수 값이 높을수록 전문대졸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 효과는 이후 코호트로 오면서 약해진다. 1979-81년생으로 오면 부적 효과로 바뀌고, 그 크기는 1982-84년생에서 더 커진다. 즉 최근 코호트에서는 가족배경 변수의 값이 높을수록 전문대졸에 속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다. 대졸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가족배경의 한계 효과는 커졌다. 여성도 전문대졸의 경우를 제외하면 코호트별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가족배경의 영향력이 커졌다다고는 볼 수 없다. 가족배경이 영향을 미치는 지점이 이동했다고는 말할 수 있다. 1970년대 초반생만 해도 가족배경은 전문대와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을 높였으나 1980년대생으로 오면 대학에 속할 가능성을 높였다.

<그림 3-12> 각 교육 수준에 속할 기대 확률 변화(가족배경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그림 3-12>는 가족배경 효과의 변화를 좀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 남성은 1970-72년생과 나머지 코호트로 구분된다. 고졸, 전문대졸, 대졸에 속할 가능성에 가족배경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1973-75년생부터 약해진다. 여성은 그런 변화가 1976-78년생부터 나타난다. 그런데 이런 차이를 추이나 경향으로 보기는 어렵다. 코호트별로 일관된 변화를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2) 졸업시점 차이

가족배경은 교육 수준뿐만 아니라 졸업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졸업시점을 종속변수로 삼아 가족배경의 영향력을 확인해보자(<표 3-4>).

졸업소요기간과 관계있는 변수들을 탐색한 연구들에 따르면, 여성보다 남성이, 서울권 학교 학생이, 인문계열 학생이 졸업 소요기간이 길다(길혜지·박성호·박미현, 2018). 기대 임금 수준이 높고 어학연수 경험이 있을 경우에도 소요기간이 길다(우선영, 2016). 학비를 스스로 조달하는 경우나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경우(이필남,

2016)에도 졸업 소요기간이 길다.

가족배경의 효과에 주목하면, 자녀의 졸업시점이 가족배경과 선형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어학연수 경험이나 높은 기대 임금 수준은 좋은 가족배경을 시사하는 것임에 반해 학비를 스스로 조달하거나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것은 좋지 않은 가족배경을 시사하기 때문이다.[88] 남녀 차이 또한 있을 수 있는데, 재학기간과 가족배경의 관계에서 성별 차이가 어떠한지에 관한 연구도 거의 없다. 가족배경은 남성에게서 더 크게, 또 긍정적인 맥락에서 재학기간을 연장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연령 규범이 강해 시간을 조정할 여지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여성에게서 좋은 가족배경은 재학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 3-4> 졸업 연령에 대한 회귀분석(OLS) 결과(성별*가족배경)

| | | (1) | (2) |
|---|---|---|---|
| 성별 | 여성 | -1.29*** | -1.27*** |
| | (70-72년) | | |
| | 73-75년 | 0.17 | 0.17 |
| 코호트 | 76-78년 | 0.04 | 0.06 |
| | 79-81년 | 0.13 | 0.16 |
| | 82-84년 | 0.25* | 0.26* |
| | (고졸이하) | | |
| 교육수준 | 전문대졸 | 4.05*** | 4.06*** |
| | 대졸이상 | 6.58*** | 6.61*** |
| 가족배경 | | 0.06 | 0.25*** |
| 성별*가족배경 | 여성*가족배경 | | -0.40*** |
| Constant | | 19.62*** | 19.60*** |
| N | | 3,705 | 3,705 |
| R-squared | | 0.68 | 0.68 |

*** p<0.01, ** p<0.05, * p<0.1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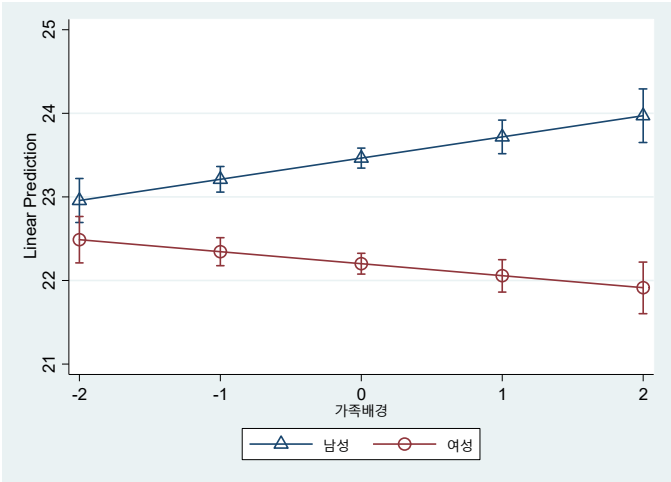
<표 3-4>는 졸업 연령에 대한 가족배경 효과를 나타낸다. 모형 (1)은 성별과 코호트를 통제변수로, 가족배경을 독립변수로 둔 기본 모형이고, 모형 (2)는 모형 (1)에

88) 졸업유예 경험자의 노동시장 성과를 탐색한 연구들이 보고하는 결과도 일관되지 않다. 일부 연구는 취업 가능성은 낮으나 취업하면 일자리 질이 좋다고 보고(이필남, 2019)하고, 일부 연구는 취업 가능성은 높지만 일자리 질은 떨어진다(김보민·조대연·최형재, 2018; 심재휘·김경근, 2015)고 보고한다. 일부 연구는 졸업유예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일자리 경험 가능성도 높고 임금도 높다고 보고한다(이전이 외, 2017). 여기서 졸업소요기간이 길다는 것과 졸업유예(제도)를 경험했다는 것은 다른 의미다.

성별과 가족배경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모형이다. 두 모형 모두 OLS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성별과 코호트에 따른 졸업 연령 차이는 1절에서 확인했다. 독립변수인 가족배경의 효과를 보면, 정적 효과를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그러나 성별과 가족배경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다.

<그림 3-13>은 성과 가족배경의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으로 보여준다. 남성은 가족배경 변수 값이 높을수록 졸업 연령 기댓값이 높은 반면, 여성은 가족배경 변수 값이 높을수록 졸업 연령 기댓값이 낮다. 즉 남성은 가족배경이 좋을수록 졸업시점이 늦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여성은 가족배경이 좋을수록 졸업시점이 당겨지는 경향을 보인다. 기존 연구들이 가족배경과 졸업시점의 관계에 대해 일관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성과 가족배경의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가족배경과 졸업시점의 관계에서 남녀가 반대 경향을 보임으로써 둘을 합쳐서 봤을 때 서로의 효과가 상쇄되어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을 수 있다.

<그림 3-13> 가족배경 수준에 따른 기대 졸업 연령(성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이런 차이의 성격을 좀 더 확인해보기 위해 가족배경 효과의 코호트별 차이를 남녀로 구분해 확인해 보았다. <표 3-5>가 분석 결과이고, 이 결과에 기초해 가족배경 효과의 코호트별 차이를 나타낸 것이 <그림 3-14>다.

<표 3-5>부터 보자. 4개 모형 모두 졸업 연령에 대한 OLS 분석으로 (1)과 (3)은 코호트와 교육 수준, 가족배경을 독립변수로 한 기본 모형이고, (2)와 (4)는 남녀 각

각 코호트와 가족배경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이다.

앞에서 확인한 코호트별 차이는 여기에서도 확인된다. 남성만 최근 코호트로 오면서 졸업 연령이 높아졌다. 여기서 주목할 변수는 가족배경 효과다. 가족배경 효과는 남성에게서만 나타난다. 가족배경이 좋을수록 졸업 연령이 높다. 그러나 가족배경 효과의 코호트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다. 반면, 여성은 기본 모형에서는 가족배경 변수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으나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하다. 그 효과의 구체적인 모습은 <그림 3-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5> 졸업 연령에 대한 회귀분석(OLS) 결과(성별, 코호트*가족배경)

| | | (1) | (2) | (3) | (4) |
|---|---|---|---|---|---|
| | | 남성 | | 여성 | |
| | (70-72년) | | | | |
| | 73-75년 | 0.14 | 0.15 | 0.24 | 0.32* |
| 코호트 | 76-78년 | 0.11 | 0.12 | 0.14 | 0.24 |
| | 79-81년 | 0.37* | 0.38* | 0.04 | 0.05 |
| | 82-84년 | 0.43** | 0.40** | 0.18 | 0.19 |
| | (고졸이하) | | | | |
| 교육수준 | 전문대졸 | 5.06*** | 5.06*** | 3.11*** | 3.15*** |
| | 대졸이상 | 7.46*** | 7.46*** | 5.73*** | 5.73*** |
| 가족배경 | | 0.11* | 0.08 | 0.04 | -0.21** |
| 코호트*가족배경 | 73-75년#가족배경 | | -0.04 | | 0.30* |
| | 76-78년#가족배경 | | -0.01 | | 0.10 |
| | 79-81년#가족배경 | | 0.07 | | 0.44** |
| | 82-84년#가족배경 | | 0.17 | | 0.37** |
| Constant | | 18.89*** | 18.88*** | 18.91*** | 18.82*** |
| N | | 1,879 | 1,879 | 1,826 | 1,826 |
| R-squared | | 0.74 | 0.74 | 0.60 | 0.6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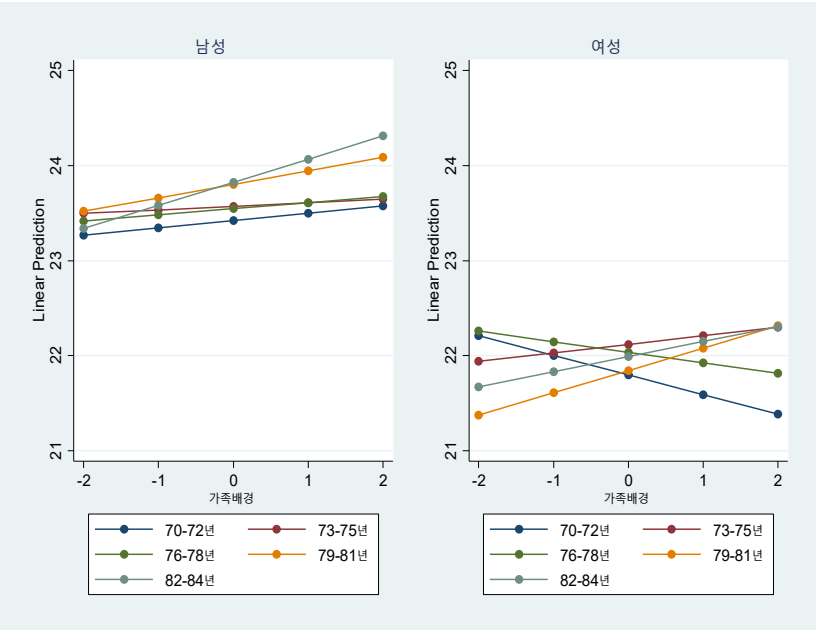
*** p<0.01, ** p<0.05, * p<0.1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그림 3-14>는 가족배경 효과의 코호트별 차이를 남녀로 구분해 나타낸다. 보기 쉽도록 신뢰구간 표시는 생략했다. 남성은 1979-81년생부터 가족배경과 졸업 연령의 정적 관계가 강해진다. 경제위기 직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코호트다. 1982-84년으로 오면 그 기울기가 더 가팔라진다. 여성은 일관된 코호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1970-72년생과 1976-78년생의 경우 가족배경이 좋을수록 졸업 연령이 낮아지는 점이 남성과 다른 점이다. 다만 최근 코호트로 오면 여성에게서도 가족배경의 졸업 연령의 관계가 정적으로 전환된다.

경제위기 국면에서 졸업 시점에 가족배경이 미치는 영향력에서 남녀가 다른 경향을 보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성별 연령규범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은 취업준비기간 확보로 얻을 수 있는 효과와 취업준비기간에 따라 졸업 시점이 늦어지면서 잃을 효과의 관계에서 후자의 무게가 클 수 있다. 남성은 전자의 무게가 클 수 있다. 즉 성별에 따라 최적의 졸업 타이밍이 다를 수 있고 가족배경은 최적의 타이밍을 맞추는 데에 역할하는 것으로 보인다.[89]

<그림 3-14> 기대 졸업 연령 변화(가족배경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종합해보자. 교육 기회 측면에서 가족배경의 영향력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다만, 남성은 영향력이 줄어드는 추이를 보이고, 여성은 늘어나는 추이를 보인다. 그런데 졸업시점으로 오면 남성은 가족배경이 정적 효과를 갖는 반면 여성은 별다른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결과는 남녀에 따라 가족배경이 영향을 미치는 지점이 다르다는 점을 함의한다.

89) 여기서 가족배경 상층 집단이 꼭 4년제 대졸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급격한 교육팽창에도 불구하고 가족배경의 영향력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세한 작동방식은 성별에 따라 다르다. 특히 여성은 여전히 대학에 들어갈 가능성에 가족배경의 영향력이 큰 반면, 졸업 시점에서는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남성은 교육기획 획득 측면에서는 가족배경 효과가 약해지는 추이를 보이지만, 졸업시점에서는 최근 코호트로 오면서 영향력이 커졌다.

## 4. 소결

1970-84년생이 겪은 교육제도 변화는 고등교육의 보편화와 중등교육의 일반교육화로 요약할 수 있다. 그에 따른 교육 경험의 변화는 고등교육의 보편화와 학교를 떠나는 시점의 지연으로 요약된다. 대학 진학을 추동한 것은 1990년대 초중반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1970년대 초중반생이었다. 그러나 성격은 남녀가 달랐다. 남성은 이 시기 대학졸업자와 전문대졸업자 증가 추이가 비슷하다. 여성은 대학졸업자 증가 추이가 단연 가파르다. 상승 추이도 다르다. 남녀 모두 경제위기 직후 대학 진학률 상승세가 꺾였는데, 경제위기 이후 추이에서 남녀가 확연히 달라진다. 남성은 이때 꺾인 수준이 유지되는 반면, 여성은 상승세가 회복된다. 그리고 이 상승세는 대졸자 증가가 추동했다. 즉 2000년대 초중반 대학 진학률 증가는 여성이 추동했다. 이처럼 같으면서도 다른 변화는 남녀의 교육 경험을 비슷하게 만들었다. 1980년대 초반생은 전후 최초로 고등교육기회 수준에서도 남녀가 비슷한 기회를 부여받은 코호트였다.

교육팽창이 교육이행 측면에서 갖는 함의는 탈성별화와 학교를 떠나는 시점의 지연이다. 1976-78년생부터는 교육 수준에 있어 남녀 차이가 대폭 줄어든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지점에서는 남녀 차이가 여전히 존재했다. 급격한 교육 팽창에도 불구하고 교육기회 측면에서 가족배경의 영향력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다만, 추이로는 남성은 영향력이 줄어드는 추이를 보이고, 여성은 늘어나는 추이를 보인다. 그런데 졸업시점에서는 남성에서 가족배경 효과가 나타나고 여성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남성은 가족배경이 좋을수록 졸업시점이 늦다. 가족배경이 교육 이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점은 성별에 따라 다르다.

한국 사회는 이 시기에 학력주의 사회로 변화했다. 그 과정에서 여성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하층인 집단의 교육 참여가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기회가 균등해진 과정으로 볼 수 있지만 경쟁이 전면화된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경쟁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경쟁의 잣대는 일원화되고 표준화된다. 경쟁의 결과에 따른 참여자 위치의 위계화가 더욱 철저하게 진행된다. 경쟁의 결과에 따른 차이가 커지고, 그만큼 경쟁

의 무게감이 커진다.

레이먼드 부동(Reymond Boudon)은 이미 1970년대에 교육 팽창이 경제적 불평등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Throw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교육 팽창의 실질적인 효과는 “사람들로 하여금 변함없는 사회적 상승을 실현하기 위하여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도록 하는 것”(부동, 1983[1977])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부르디외(2004[1984])는 오늘날의 청년 세대가 전 세대가 같은 학위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적게 얻게 되었다며, 이것은 그 세대의 “구조화된 자격 상실”(p. 168)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결과론적인 것이자 사후적인 것이다. 집합적으로 보면 학력 인플레이션이지만 개별적으로는 꿈꿀 수 있는 여지가 더욱 커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육 팽창 효과의 더욱 실질적인 함의는 열망과 기회 사리의 괴리 확대다.

이 장에서는 교육 팽창이 교육 기회의 불평등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결론은 교육 기회의 확대에 따라 교육 기회를 둘러싼 경쟁의 성격이 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 팽창의 실질적인 의미는 경제적 불평등 수준 변화의 맥락에서 확인해야 한다. 졸업 시점의 연장 추이 또한 교육 팽창의 효과이면서 노동시장 구조 변화 효과이기도 하다. 교육 팽창이 불평등 수준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하려면 노동 이행 국면을 볼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의 급격한 팽창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구조가 급변하던 시기에 일어났다. 전후 처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생이 70만 명이 넘었을 때가, 이들의 70-80%가 대학에 진학했을 때가, 경제위기가 한국 사회를 강타한 직후였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폭 늘어났다. 내부노동시장이 축소되었지만 외부노동시장이 더욱 열악해지면서 노동시장 분절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러한 구조 변화의 맥락에서 1970-84년생이 어떠한 노동이력을 밟았는지 검토하는 작업이 다음 장의 주요 과제다.

# 제4장 노동이행 국면의 표준화와 위계화

1970-84년생은 중고등교육이 보편화되는 맥락에서 학교를 다녔다. 이 장에서는 교육 이행 국면의 변화 추이가 이들의 졸업 후 노동시장 경험과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검토한다. 1970-84년생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국면을 이해하려면 이들이 노동시장에 나왔던 1990년대 초반에서 2010년대 초반의 노동시장 구조 변화 양상을 이해해야 한다.

1절에서는 1987년과 1997년을 변곡점으로 삼아 세 국면으로 구분해 한국 고용체제 변화의 성격을 개괄한다. 2절에서는 각 국면에서 형성된 노동 생애의 전형을 남녀로 구분해 확인한다. 3절에서는 1970-84년생의 졸업 후 7년 노동이력을 구성하고 그 특징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각 노동이력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교육 수준에 따라, 가족배경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한다.

이 작업은 경제위기 전후 노동시장 구조 변동이 개인의 생애에 남긴 흔적을 확인하는 것이지만, 집합적 생애에서 드러나는 구조 변화로 경제위기 전후 청년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를 규명한다는 의미도 있다(이상직·김이선·권현지, 2018; 김이선·이상직·권현지, 2019). 교육 수준에 따라 시점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1970-84년생이 노동시장에 나온 시기는 경제위기 전후 10년을 아우른다. (청년) 노동시장 변화에 관한 논의가 대개 경제위기로 인한 단절을 강조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력 단위로 변화를 보는 작업은 위기 전후 변화를 '지속 내 변화'로 포착하는 관점을 제공한다(이상직·김이선·권현지, 2018: 141).

## 1. 노동시장의 구조 변동

많은 연구자가 한국 고용체제[90]의 성격을 1987년과 1997년 두 기점을 기준으로 세 국면으로 구분해 기술한다(정이환, 2013a; 권현지, 2015). 1987년 이전과 1987-97년, 1997년 이후다. 여기에서도 이 구분을 따라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를 개괄한다.[91]

90) 여기서는 정이환의 용법을 따라 '고용체제'로 부른다. 그는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노동체제(노동정치, 노사관계, 노동과정, 노동시장을 아우르는 말)를 보되, 임금수준·임금격차·노동이동뿐만 아니라 임금체계와 같이 고용관계론이 중시하는 주제도 다루겠다는 의도(2013a: 17-18)로 '고용체제'라는 표현을 쓴다고 밝혔다.

91) 1987년 체제의 성격이 변화하는 조짐이 나타난 때는 경제위기 이전인 1990년대 중반이다. 이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이 연구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할 때에는 이 점을 명시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1990년대 중반이냐 후반이냐가 핵심은 아니다.

1987년 이전은 1970-84년생의 부모가 30-40대였을 무렵이고, 1987-97년은 1970-84년생이 유년·청년기를 보냈을 무렵이었으며, 1997년 이후는 이들이 노동시장에 나올 무렵이었다. 각 국면은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1970-84년생 가구의 물질적 조건을 규정했다. 이들의 유년기를 규정한 1987-97년의 노동시장 상황은 3장에서 일부 확인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노동시장 구조와 그와 연동되어 형성된 노동 생애의 변화를 좀 더 일관된 시각으로 개괄한다. 이 변화는 1970-84년생이 학교를 경험한 맥락과 졸업 후 노동시장을 경험한 맥락이 된다.

고용체제의 역사적 변동 양상을 국면별로 검토할 때 국면별 특징을 각 국면에 고유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정이환은 한국의 고용체제를 "신자유주의적 분절 고용체제"(2013a: 11)로 규정한다. 작동원리는 시장 중심성, 기업 중심성, 가부장주의, 기업내부노동시장 내 노사 각축이다. 정이환은 이런 특징을 체제 변동에 따른 단절적 결과로 보지 않고 한국 고용체제 고유의 특징이 1987년과 1997년을 거치면서 진화한 결과로 본다.[92] 권현지도 각 국면에 "질적으로 다르면서도 시기를 관통하는 연속성"(2015: 221)이 있다고 강조한다. 이런 시각은 연속되는 코호트의 노동이력을 비교해 노동시장의 변화를 확인하려는 이 연구의 틀과 부합한다. 여기서는 각 국면의 특징을 '지속 내 변화'로 보는 관점에서 기술할 것이다.

노동시장 구조는 경제발전 방식과 밀접하게 관계 맺고 있다. 3장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경제발전 전략은 '조립형 공업화'로 요약된다(핫토리 다미오, 2007[2005]: 100-105; 정준호, 2016). 잡화나 완구, 봉제 등 노동집약적 상품 생산으로 공업화를 시작한 때가 1960년대 전반이었다. 이후 공업 고도화는 소재나 자본재를 수입해 생산성을 높이는 식으로 추진되었다. 산업은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했고 노동시장은 국제 경쟁에 늘 노출되어 있었다. 핵심 부품이나 공작기계를 만들 수준의 숙련이 형성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 분위기에서 임금이 상승하면서 고용주들이 고용감축 및 설비투자 전략을 실천한 측면도 있다. 기술 축적을 우회한 조립형 공업화 전략은 한국의 경제체제에 지속적인 무역 수지 적자와 독과점적 산업 구조, 노동시장 분절이라는 특징을 부여했다. 한국 고용체제의 기본 성격은 이러한 공업화 전략의 특징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93]

---

92) "한국 고용체제의 주요 특징인 기업내부노동시장, 연공임금, 기업별 단체교섭 등이 생산직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노동시장 제도로 확립된 것은 1987년 이후다. 그러나 이런 제도들은 (…) 그 이전에도 고용체제의 요소로 존재했다. (…) 이것들은 1987년 이후 고용체제의 변화 방향을 상당 정도 규정했다. (…) 1987년의 선택, 또는 1997년의 신자유주의만으로 고용체제의 성격이 모두 해명될 수는 없는 것이다."(정이환, 2013a: 281)

93) 정준호(2016: 94)는 제조업에 초점을 맞추어 "조립형 산업화" 전략이 초래한 산업·고용 구조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한국경제는 대기업 주도로 첨단제품을 생산하지만

### 1) 1987년 이전 고용체제: 노동시장 분절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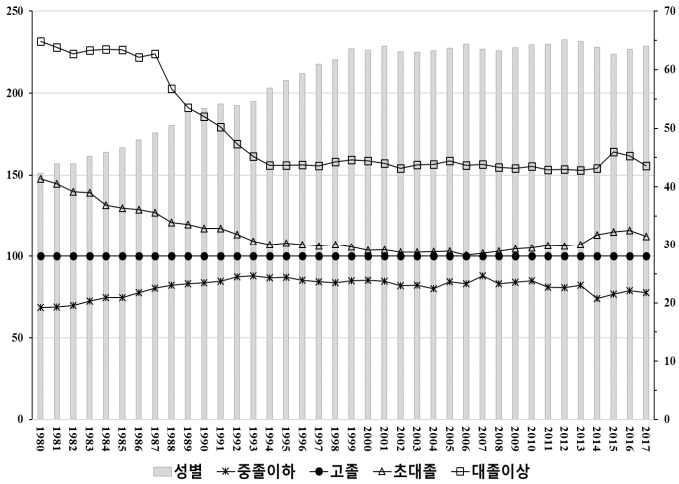
1970년대는 중화학공업이 본격화되면서 대량생산체제의 틀이 갖추어진 시기였다(김영화, 2015: 31). 대량생산체제는 엔지니어, 기술직 노동자와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안정적인 공급과 기업에 대한 헌신을 요구했다(권현지, 2015: 223). 이러한 산업 수요를 반영해 1970년대에는 사무직과 생산직을 경계로 한 기업 단위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 1960년대에 등장해 1970년대 중반 대기업 사무직에 일반화되었던 호봉승급제도가 대표 장치였다(정이환, 2013a: 263). 이들 소수의 사무·기술직은 당시 다수였던 농촌 가족의 집중 투자를 받은 장남에게 돌아갔다. 일부 중화학공업 생산직 노동자는, 기술직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 1960년대 경공업 노동자의 노동 조건보다 나은 조건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들은 기술계 고등학교와 산업인력공단 등 대규모 숙련 형성 제도를 통해 배출되었다. 상업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소수의 여성 노동자가 서비스 업무나 일반 사무 업무, 관리 보조 업무 등으로 내부노동시장에 진입했으나 대부분 결혼과 함께 퇴장했다. 여성 다수는 여전히 경공업 부문의 저임금 일자리로 취업했다가 결혼하면서 퇴장했다(권현지, 2015: 223-224).

<그림 4-1>은 1980년 이래 성별·학력별 임금격차 수준을 보여준다. 산업화 초기에는 보통 저임금 단순노동은 과잉이고 고임금 숙련 노동은 부족해 학력별 임금 차이가 크다. 이러한 상태가 1980년대 중반까지 유지되었다. 1980년에 '고졸자' 임금은 17만 7천 원이었고, '대졸자' 임금은 41만 원이었다. '중졸 이하자'는 고졸자의 68%를 받았다. 성별 임금 차이도 컸다. 1980년에 농업을 제외한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9만 9천 원으로, 남성 22만 4천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권현지, 2015: 224).

---

기술과 숙련이 분리되는 조립형 산업화에 여전히 의지하고 있다. 막대한 투자는 자동화를 수반하고, 이는 노동을 대체하여 중간숙련을 협소화시키며, 다시 막대한 고정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설비가동률 극대화와 장시간 노동시간을 요구하고, 비정규직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수량적 유연성 전략의 구사가 구조화된다."

<그림 4-1> 학력별, 성별 임금 수준(1980-2017)




출처: KLI 노동통계 2019.

## 2) 1987년 고용체제: 노동시장 분절의 전면화

1987년 고용체제의 특징은 기업내부노동시장의 전면화와 노동시장 분절 강화로 요약된다(정이환, 2013a: 284). 핵심은 내부노동시장이 생산직으로까지 확대된 것이었다(권현지, 2015: 228). 계기는 1987년 6월의 '민주화'와 뒤이은 '노동자 대투쟁'이었다(구해근, 2002[2001]: 223). 1986-88년에 노동조합이 4,000여 개 결성되었고 조합원 수는 100만 명에서 170만 명으로 증가했다(구해근, 2002[2001]: 232). 중화학공업 남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은 임금인상과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요구했다.[94] 많은 대규모 기업에서 20~30%의 임금인상과 여타 혜택을 제안했다.

"1987년은 분명 한국 고용체제의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정이환, 2013a: 262)였다. 기업내부노동시장, 연공임금, 기업별 단체 교섭 등 한국 고용체제의 주요 특징이 생산직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노동시장 제도로 확립되었다(p. 281).[95] 기업별로 노조가

94) 노동자들은 임금 및 상여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조장의 자의적인 평가 폐지,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노동자의 지위 구분 철폐, 식사 질 개선, 복장과 머리 길이 규제 철폐, 강제 아침체조 중단을 포함한 요구 목록을 제시했다(구해근, 2002[2001]: 231).

95) 정이환은 1987년 체제가 단절적 변화의 결과가 아닌 이전 시기 특성이 강화된 결과라고 주장한다. "한국에서 블루칼라 근로자들의 기업내부노동시장의 발전은 1987년을 계기로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1987년 전후 고용체제의 변화는 기업내부노동시장의 '형성'보다는 '확대', '강화', '제도화', 그리고 '성격변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확대'란

설립되고 기업별로 단체 교섭이 진행되면서 노동조합이 강한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내부노동시장이 확산되었다. 내부노동시장이 생산직에까지 확대되면서 상당수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높아지고 노동환경이 개선되었다.[96] 그에 따라 3장에서도 언급한바 사무직 및 전문직 대비 생산직의 임금 수준이 높아졌다.

1980년대 후반부터 학력별 임금 수준 격차도 완만하게 감소했다(<그림 4-1>). 1980년대 중반 이래 고도성장 국면에서 저학력·저임금 직종에서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고학력자 공급은 1980년대 초반부터 증가했다(정이환, 2013a: 289). 학력별 임금 수준 격차 감소세는 1990년대 중반에 멈춘다. 성별 임금 수준 격차도 1980년 42.3%에서 1999년 63.5%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줄었으나 2000년대부터 65% 선에서 정체된다.

대신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가 커졌다(<그림 4-2>).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 수준이 1980년대 후반부터 급증했다. 첫 번째 계기는 앞서 언급한 1987년의 '노동자 대투쟁'이었다. 1980년대 중반 이전에는 노동력의 유동성이 높았던 데에다 고도성장으로 기업규모가 계속 확대되면서 소규모 기업도 대규모 기업 수준으로 임금을 주었다(핫토리 다미오, 2007[2005]: 184). 이러한 관행은 1990년대에 중소기업에 높은 인건비 부담을 초래했다.[97] 경제위기를 계기로 이러한 한계가 폭발적으로 드러났다.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던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는 2000년대에 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수준이 급증하면서 커졌다. 그러면서 기업규모에 따른 위계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 시기 사업체 규모별 임금 격차 확대는 경제위기 전후로 본격적으로 형성된 위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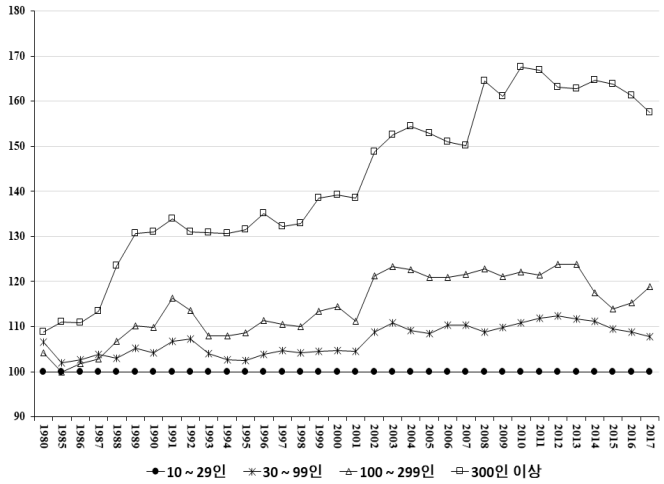
기업내부노동시장이 일부 기업이나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대부분의 대기업으로 일반화되었다는 의미다. (…) '강화'란 기업내부노동시장에서의 고용 안정성이 더 높아지고 외부노동시장에 견준 근로조건 우월함의 정도가 더 커졌다는 의미다. (…) 생산직 근로자에게 호봉 제도가 확대 적용되어 임금 체계의 연공성이 강화된 것도 기업내부노동시장 '강화'의 주요 측면이다. '제도화'란 노동조합운동을 기반으로 기업내부노동시장 규칙이 공식, 비공식 제도로 확립되었다는 의미다. (…) '성격 변화'란 기업내부노동시장의 성격이 경쟁형 기업내부노동시장에서 비경쟁형 기업내부노동시장으로 변화되었다는 의미다."(2013a: 261-262)

96) 이 외에도 1987년 노동자대투쟁은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를 촉발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정(1987년 12월 4일)과 「근로기준법」 개정(1989년 3월 29일)이 그 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으로 사업주는 결혼·출산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게 되었으며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되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이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줄었다.

97) 1990년대 초반에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가 증가세를 멈춘 것은 경기 호황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난에 따라 중소기업의 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런 추이는 1995년 이후 경기가 나빠지면서 중소기업에 큰 부담을 초래했다. 결국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임금인상 추이를 따라잡지 못했다(정이환, 2013a: 289).

적 원-하청 구조를 반영한다(조성재 외, 2004; 권현지, 2015: 235-236).

<그림 4-2> 사업체 규모별 상용노동자 임금 수준(1980-2017)




출처: KLI 노동통계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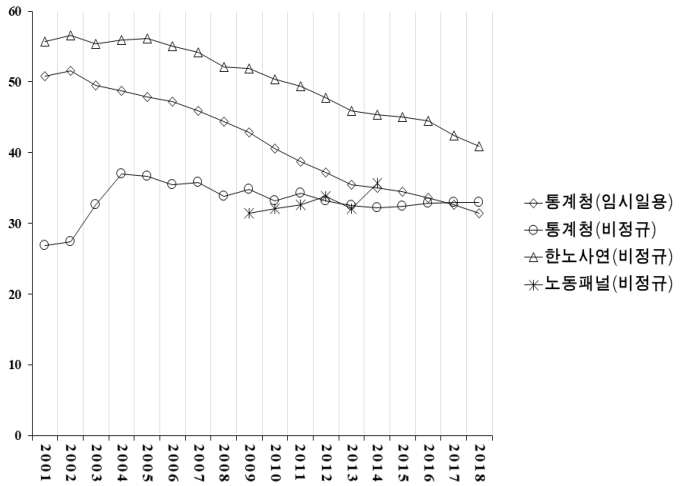
1987년 체제의 불안정성은 1990년대 중반에 이미 드러났다. 기업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기는 했으나 그곳에서도 고용 안정 수준이 높지 않았다. 기업은 이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화' 전략을 추진했다. 정규 생산직 신규 채용을 줄였다.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를 감행했다. 내부유연성을 담보할 제도적 수단도 미비했다(정이환, 2013a: 293-294). 외부노동시장이 확대되는 추이도 1990년대 초반부터 또렷하게 나타났다. 1980년대 후반 이래 줄어들던 비정규 고용이 1990년대 중반부터 늘어났다. 사내하청이나 외주화가 1990년대에 전 산업에서 증가했다(권현지, 2008; 정이환, 2013a: 302).[98)]

98) 정이환은 1987년의 정치적·사회적 힘으로 생산직 영역으로 확대된 기업내부노동시장의 효율성 감소가 변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1990년대 초반에는 경제 호황으로 버틸 수 있었지만 고숙련이 동반되지 않아 결국에는 제도를 지속할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1987년 고용체제의 안정성은 제도의 힘보다는 상당 부분 시장의 힘에 의한 것이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취약한 것이었다. (…) 1987-96년은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고도성장이 결합된 시기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고용체제의 당사자인 국가, 사용자, 노동조합이 좀 더 견고한 고용체제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 만일 민주화 이후의 고도성장이 더 오래 계속되었다면 비록 분절적 체제이더라도 고용 안정과 평등이 좀 더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고용체제가 출현했을 가능성도 있다. (…) 그렇지만 1987년 노동체제의 당사자들은 경기 하강에 대응할 수 있는 고용체제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2013a: 308)

### 3) 경제위기와 고용체제의 변화: 신자유주의적 분절 구조

1997년 경제위기는 앞에서 확인한 '자유화' 경향을 확대·심화했다(권현지, 2017). 변화는 기업별 분절 노동시장 구조 내에서 진행되었다. 내부노동시장 영역이 축소되고, 보호 수준도 낮아졌다. 고용 안정성이 약화되었고, 해고율이 높아졌으며, 성과연봉제가 확산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 화이트칼라 내부노동시장도 흔들리면서 상징적 충격이 컸다(함인희, 2012; 이제민, 2017). 외부노동시장은 더욱 자유화되었다. 비정규고용이 급증하고 외부화가 확대되었다.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협약에 따라 정리해고가 합법화되었다.

<그림 4-3> 임금노동자 내 비정규직 비중(2001-2018)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부가조사 각 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12-17차)[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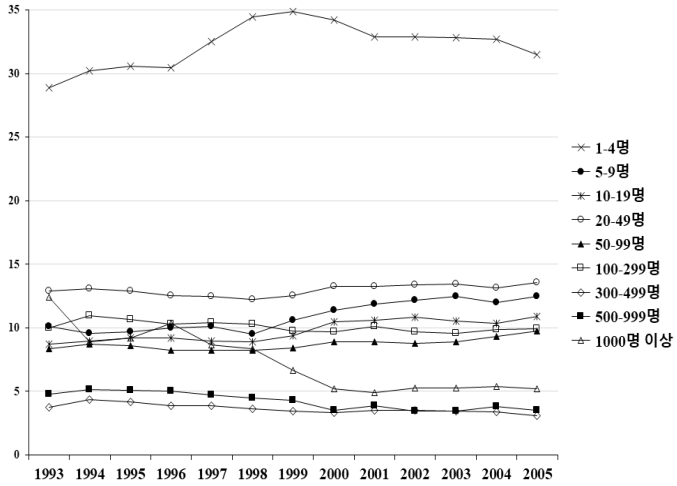
2001년부터 통계청이 집계하는 '비정규직'[100] 고용규모는 2001년에 363만 5천명으

99) 자료 출처는 다음과 같다. 통계청(임시·일용): '종사상지위별 취업자표'(국가통계포털, KOSIS). 통계청(비정규): '성/근로형태별 임금노동자 규모 및 비중(총괄)표'(국가통계포털, KOSIS). 한노사연(비정규): 김유선(2018: 2). 노동패널(비정규): 성재민(2015: 35).

100) 비정규직을 규정하고 측정하는 방식은 단일하지 않다(김유선, 2001a; 장지연, 2001; 정이환, 2003). 분류 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전통적인 방식으로 통계청 경활조사의 '종사상지위' 변수에서 임시직과 일용직으로 분류된 사례를 합쳐 부르는 경우다. 경제위기 직후 비정규직 규모 추정에 활용된 기준이다. 둘째, 첫 번째 방식에 따른 비정규직 규모 추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2001년에 발족한 노사정위원회가 2002년 7월에 권고해 2002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부터 반영한 방식으로, 한시적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비전형

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26.8%였으나 2004년에는 37.0%까지 늘었다(<그림 4-3>).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나 2017년에도 32.9%에 달한다. 비정규직을 가장 넓게 정의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추정치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중은 2000년대 중반까지 55%를 상회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완만하게 줄었지만, 2018년에도 40.9%로 규모가 크다.[101)]

<그림 4-4> 사업체 규모별 노동자 비중(1993-2005)




자료: 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대기업 노동자 비중이 줄고 영세기업 노동자가 느는 추세도 확연하다(<그림

---

일자리를 합쳐 부르는 경우다. 이 기준에 따르면 '상용직' 중에도 '비정형직'이 있을 수 있고 '임시직', '일용직' 중에서도 '정형직'이 있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범위가 가장 좁다. 2003년부터 공포하는 정부 공식 추정치는 이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셋째, 첫 번째 기준과 두 번째 기준 하나라도 만족하는 경우를 포괄하는 방식(김유선, 2001b)으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이 기준에 따라 매년 비정규직 규모를 발표한다. 비정규직 정의 및 측정 방식에 관한 상세 내용은 <부록 2>를 참조.

101) 비슷한 고용체제를 가진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 비정규직의 특징이 선명해진다(정이환, 2011; Cho and Choi, 2017). 첫째, 한국은 일본에 비해 비정규직 비중이 크다. 둘째, 한국의 비정규직 다수는 계약직이고, 일본의 비정규직 다수는 시간제 일자리다. 셋째, 한국은 비정규직의 90% 이상이 300인 미만 사업체 일자리이고, 일본은 그 비중이 약 50%다. 넷째, 한국은 비정규직의 여성 비중이 50%을 약간 넘는 수준이지만, 일본은 70%를 넘는다. 이런 차이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이중화' 현상의 국가별 맥락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Cho and Choi, 2017: 602-604). 그것은 노동시장과 복지 제도의 관계, 생산물 시장 내 기업 관계, 경제위기의 성격과 국내 정치 등의 맥락 차이와 관계 있다(Cho and Choi, 2017)

4-4>).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1000명 이상 사업체에 고용된 노동자 비중은 1993년 12.4%에서 2000년 5.2%로 급감했다. 300명 이상 사업체로 범위를 넓히면, 1993년 21.0%에서 2000년 12.0%로 감소했다. 경제위기를 계기로 감소세가 강화되었지만 감소세가 시작된 때는 1990년대 초중반이었다. 50명 미만 사업체에 고용된 노동자 비중은 1993년 60.7%에서 2000년 69.4%로 늘었다. 5-9명 사업체와 1-4명 사업체에 고용된 노동자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정규직/비정규직 구별 구조와 대기업 노동자/중소기업 노동자 구별 구조는 맞물려 있다(정이환, 2007). 비정규직은 영세기업에 밀집해 있다. 통계청이 2002년부터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13.6%다.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체는 49.7%가 비정규직이고, 종업원 5~9인 사업체는 39.5%가 비정규직이다(김복순·정현상, 2016: 29). 임금 수준에서도 두 축이 상호작용한다. 대기업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 순으로 임금이 높다. 비정규직 증가보다 대기업 노동자 비중 하락이 일자리 질 하락에 더 크게 기여했다(정이환, 2007). 자영업자도 영세기업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와 같은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기술 기반 창업 기업이기보다는 생계형 자영업자가 다수다. 이들 자영업자가 총고용의 약 25%를 차지한다(이승렬, 2011; 2018). 외환위기의 충격은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를 줄였고, 그에 따라 일자리 질의 하락을 낳았다(Lee and Kwon, 2007). 고용안정성과 임금 수준에서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의 격차가 확대되었다.[102]

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주된 결과는 분배 수준 악화다(<그림 4-5>). 지니계수[103]로 측정한 분배 수준은 1980년대 이래 개선되었으나 1992년을 기점으로 추이의 방향이 바뀌었다. 이후 지니 계수 값은 완만하게 높아졌고, 1997년을 계기로 크게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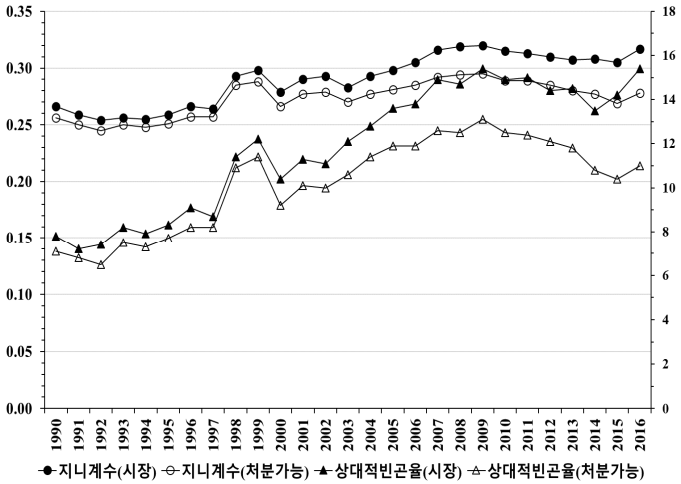
---

102) 변화 과정은 "매우 복합적"(정이환, 2013a: 324)이었다. 사용자들의 행위 양식이 희망퇴직과 같은 점잖은 방식에서 정리해고나 권고사직과 같은 노골적인 방식으로 바뀌었다. 국가는 법제도 개정, 공공 부문 개혁 등을 통한 구조조정 집행자로 시장 원리 도입 과정에서 상징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노사관계제도의 틀은 지속되었다.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법제의 기본 틀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고용체제의 신자유주의화는 단지 '신자유주의화'라고 말할 수 없는 양상을 보였다. 첫째, 고용체제의 신자유주의화는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다. (…) 둘째, 신자유주의화는 기업내부노동시장의 해체보다는 외부노동시장의 확대라는 양상을 통해 이루어졌다. (…) 그 결과 한편으로는 노동시장에서의 중심이 축소되고 다른 한편 분절이 심화되었다."(pp. 323-324)

103) 지니계수와 상대 빈곤율 모두 도시 2인 이상 노동자 가구가 표본이다. 농촌 가구나 1인 가구, 자영업 가구 등을 포함하면 불평등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구인회, 2019: 57-58). 농업종사자를 포함한 자영업자의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이고, 무직자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 추이가 2009년까지 이어진다.[104)]

<그림 4-5> 지니계수와 상대 빈곤율(1990-2016)




자료: 통계청「가계동향조사」,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주목할만한 지표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비중을 나타내는 상대 빈곤율이다. 1992년에 상대 빈곤율이 7% 이하로 저점에 이른 후 증가 추세로 반전했고, 경제위기 직후에는 12%를 넘는 수준까지 높아졌다. 2000년대 초반으로 오면 다시 하락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래 다시 증가해 시장소득 기준으로 15%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상대 빈곤율은 지니계수보다 더 가파르게 악화되었다. 이것은 경제위기 이후 하층의 소득이 더 가파르게 줄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 2. 성인 이행기 노동이력의 변화

3장에서 살펴본 교육체제의 변화와 앞 절에서 살펴본 노동시장의 변화는 개인의 노동생애를 규정한다. 현대 사회에서 노동 생애란 소득 활동을 지속적·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라는 생애에 걸친 노동참여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최선영·장경섭, 2012). 이것은 교육 및 고용기회 구조에 따라 규정되는 것과 동시에 노동력을 조직

104) 시장소득으로 계산한 값과 처분가능소득으로 계산한 값의 차이가 2003년 이래 줄곧 커지는 추이는 복지제도 확대 효과를 일부 반영한다(장지연·이병희, 2013: 78). 그럼에도 1990년대 초중반 수준과 비교하면 값이 상당히 높아졌다.

(공급)하는 가족 전략(Scott and Tilly, 2008[1987])에 따라 규정된다.

1950-2010년대의 70여 년간 한국 사회의 산업 구조와 직업 구조는 급격하게 변했다. 산업·직업 구조가 개인의 노동이력에 미친 영향은 심대했다. 그러나 집합자료에서는 변화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둘의 관계에 대한 실증 연구도 많지 않다. 노동이력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 구술 생애사 연구는 개인의 노동이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만 라이프코스 일반의 변동 양상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이 절에서는 기존의 자료와 문헌을 활용해 산업 및 직업 구조 변화와 노동이력 변화의 관계를 개괄해본다.

산업화가 시작된 196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에 이르기까지 경제활동참가율은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1963년 56.6%였던 참가율은 중화학공업화가 본격화된 1978년에 59.9%로 증가했다. 그러나 1984년에는 55.8%로 하락한다. 경제위기 직전인 1997년에는 62.5%로 증가한다. 경제위기 직후에는 다시 하락하고 2000년대 중반부터는 60%대 초반 수준에서 유지된다. 종합하면, 60년간 약 5%p 상승했지만, 전반적인 성격은 '유지'에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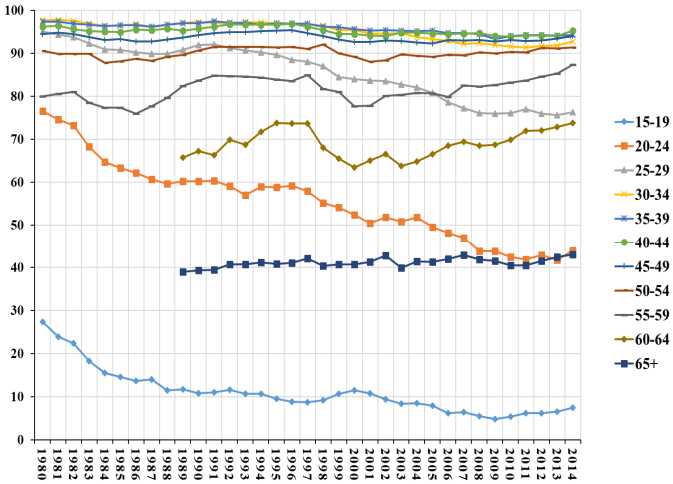
한국은 경제활동참가율의 남녀 차이가 크다. 1963년에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78.4%였던 반면, 여성은 37%였다. 2014년에는 각각 73.7%와 51.1%였다. 성별 차이가 점차 좁혀졌다. 1990년대 후반 이전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이, 이후에는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이 수렴 추이를 추동했다. 그렇지만 차이는 여전하다. 집합 지표로 보면 변화는 완만했고, 성별 차이도 지속되었다.

구체적인 변화 양상을 파악하려면 연령대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30-50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2014년에 90%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다(<그림 4-6>). 65세 이상 남성 인구의 참가율도 1990년 이래 40% 수준에서 지속된다. 변화는 장년층(50대 중후반-60대)[105]과 청년층(10대 중후반-20대)에서 나타났다. 장년층의 참가율은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중반에는 꾸준히 상승했으나 경제위기를 계기로 크게 하락했고, 2000년대 중반부터 조금씩 상승해 최근에 와서야 1990년대 중반 수준을 회복했다. 특히 55-59세와 60-64세의 하락 폭이 컸다. 조기퇴직이나 정리해고, 폐업 등에 따른 '(일시) 퇴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은 경제위기 이전부터 상당한 변화 추이를 보인다. 교육 수준 상승에 따라 20대의 참가율이 일정한 속도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들에게서도 경제위기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위기 이후로 감소세가 가팔라졌다. 대학(원) 진학, 취업준비활동 등에 따른 '입장 지연'을 반영한

105) 장년층의 참가율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상승했으나 경제위기를 계기로 하락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조금씩 상승했으나 최근에 와서야 1990년대 중반 수준을 회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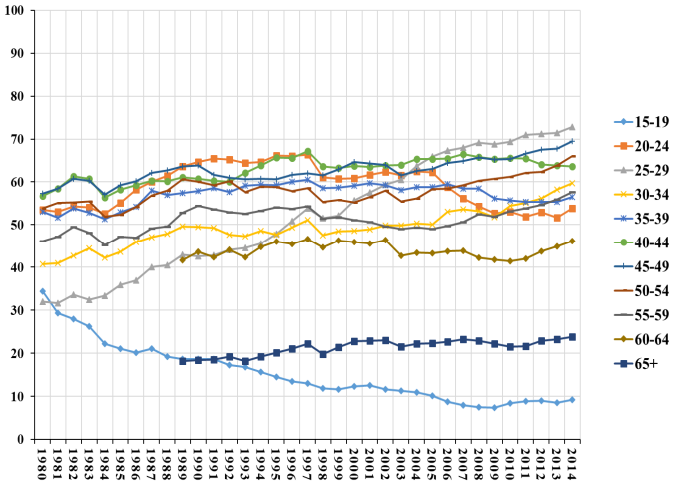
것으로 보인다.

<그림 4-6> 남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1980-2014)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그림 4-7>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1980-2014)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여성의 참가율 변화 추이는 남성보다 복잡하다. 눈에 띄는 차이는 15-19세,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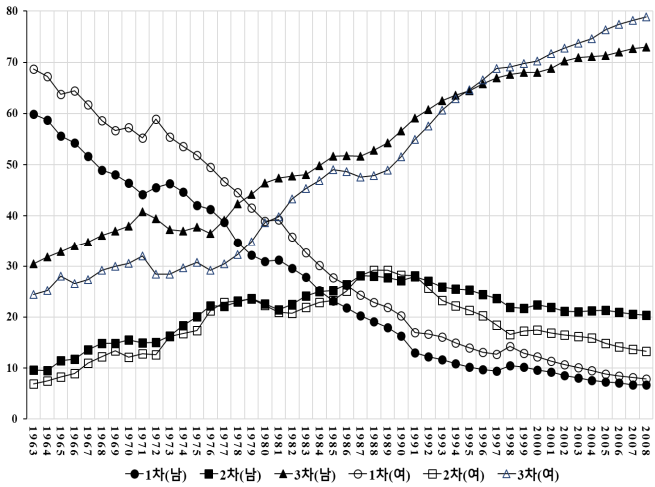
세를 제외한 전 연령 집단의 참가율 증가다(<그림 4-7>). 15-19세의 참가율은 1980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24세의 참가율은 1984년을 기점으로 199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상승했으나 경제위기를 계기로 하락했고 2005년을 기점으로 크게 하락했다. 반면 25-29세의 참가율은 경제위기 직후를 제외하면 꾸준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 30-34세 참가율도 완만하게 증가했다. 그러나 30대 중후반 참가율은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큰 변화 없이 55-60%를 유지했다. 40대 초반도 마찬가지다. 40대 중후반은 경제위기 시점에서도 참가율이 상승한 유일한 집단이다.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50대 이상 참가율은 경제위기 이후 완만하게 하락했다가 2000년대 중반부터 완만하게 상승해 2010년대에 오면 1990년대 중반 수준을 넘어선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10대 중후반-20대의 경제활동참가율 변화는 상당 부분 교육 수준 상승으로 설명 가능하다. 그러나 교육은 노동시장참가율을 설명할 뿐 노동시장 참여의 성격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이하에서는 세 시기로 구분해 노동시장 참여의 성격 변화를 살펴본다. 1960-70년대, 1980-90년대 중반, 1990년대 후반 이후다. 이들 국면은 앞에서 기술한 노동시장 구조 변화 국면과 대략 조응한다.

### 1) 근대적 노동시장의 미발달과 불분명한 이행 경계

1960-70년대에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63년 78.4%에서 1970년 77.9%, 1975년 77.4%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남성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는 1963년 1차산업 59.9%, 2차산업 9.6%, 3차산업 30.5%에서 1975년에 각각 42.1%, 20.1%, 37.0%로 변했다(<그림 4-8>). 농업 비중이 여전히 컸지만 2차산업 비중이 크게 늘었고, 3차산업 비중도 꽤 늘었다. 종사상지위 분포는 1963년에 자영업자 45%, 무급가족종사자 18%, 임금노동자 37%였고, 1970년에는 각각 42%, 13%, 45%였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다소 줄었고 임금노동자가 늘었다. 그럼에도 임금노동자는 50%미만이었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다수는 농업과 도시 영세업에 종사하는 이들이었다. 임금노동자 다수는 3차산업에 속해 있었고 제조업 생산직 비중은 크지 않았다. 장남 등 일부만 가족 단위 지원에 힘입어 도시로 이주해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았고, 졸업 후 사무직과 전문직에 진입했다.

<그림 4-8> 산업별 취업자 비중(1963-2008)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이 시기에 20대에 진입한 이들은 1940-50년대생이다. 최선영·장경섭(2012)은 1930-50년대 출생 남성의 결혼 시점부터 45세까지의 노동이력을 10년 단위 코호트로 구분해 비교한 바 있다. 1930년대생의 결혼시점(대략 20대 중반) 노동지위를 보면, 임금노동이 24.3%로 매우 적다. 이 중 상당수는 중소기업 생산직과 사무직이었고, 일부는 서비스판매직이었다. 비임금노동에서는 농업노동과 주변노동,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컸다. 주목할 점은 비취업자도 20.5%였다는 것이다(p. 215). 1940년대생은 임금노동 비중이 37%로, 1950년대생은 55%로 증가했다. 비취업자도 각각 11.5%와 8.6%로 줄었다. 이런 추이는 산업화 과정에서 남성노동인구가 공식 노동시장에 급속히 편입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여전히 임금노동자 비중이 50%가 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시기의 특징이다.[106)]

1960-70년대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63년 37.0%에서 1970년 39.3%, 1975년 40.4%로 완만하게 증가했다. 여성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1963년에 1차산업 68.7%, 2차산업 6.9%, 3차산업 24.4%에서 1975년에 각각 51.9%, 17.4%, 30.8%로 크게 변했다. 농업 부문이 여전히 과반이었으나 제조업 부문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종사상지위 분포는 1963년 자영업자 22.2%, 무급가족종사자 56.0%, 임금노동자 21.8%

106) 결혼시점 노동지위가 45세까지 유지되는 경우는 소수 관리직·전문직을 제외하면 없었다. 대개는 공식임금노동에서 자영업과 주변노동으로 이동하는 패턴을 보인다. 이런 경향은 최근에도 나타난다(장지연, 2007).

에서, 1970년에 각각 21.0%, 51.2%, 29.0%로 변했다. 무급가족종사자가 줄었고 임금노동자가 늘었다. 그럼에도 임금노동자 비중은 30% 미만이었고 다수는 가족종사자였다(강이수, 2009: 57). 농업 부문과 도시 영세자영자 가구의 여성 대부분이 무급가족종사자였다. 다만, 무급가족종사자가 임금노동자로 전환되는 변화가 이 시기에 나타났다.

이 시기 여성 노동은 미혼 노동과 기혼 노동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농업 부문 노동자는 대다수가 기혼 여성이었고, 제조업 노동자는 10대 후반-20대 초반 미혼 여성이었다. 미혼 여성은 주로 섬유·봉제 공장에서 일했다(전순옥, 2004).[107] 이들은 대부분 15-17세 무렵에 중학교를 중퇴·졸업하고 도시로 이주해 공장에 들어가서 20대 초중반에 결혼(초혼 연령은 1960년 21.6세, 1970년 23.3세였다)할 때까지 일했다. 1960년대 초반까지도 도시로 이주한 미혼 여성 다수는 '식모' 등 가사서비스 노동을 담당했다(최선영, 2020: 141). 그 외 다수는 도시 영세판매업이나 도소매상 등의 직종에서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하는 기혼 여성이었다. 1960년대 중반 이래 도시에서 고용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여성은 제조업 공장노동자나 경리 등 하위 사무직, 버스 차장 등 서비스직으로 진입했다(정찬일, 2019).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직이나 사무직으로 진입한 여성은 매우 적었다(강이수, 2009: 59). 1970년대 후반에서야 고졸 여성이 사무직에 진입한다. 이 시기 취업의식은 매우 낮았다(강이수, 2009: 59).

이 시기 여성의 학교-노동시장 이행 경로를 추론해보면, 중학교를 마치고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했거나 도시로 이주해 가내 식모나 봉제 공장 생산직으로 5-6년 일한 이력이 전형이었을 것이다. 이들 대다수는 20대 초중반에 결혼과 함께 퇴장했을 것이다. 코호트 단위로 취업 이력을 비교한 최선영·장경섭(2004: 187)의 연구에 따르면, 1950년대 중반에 10대 후반-20대 초반이었을 1930년대 중후반생 여성은 18%만이 결혼 전 취업 경험이 있었다. 다만 이들 중 50%는 결혼 후에도 노동시장에 남아 있었다. 1960년대 초반-1970년대 중반에 10대 후반-20대 초반이었을 1940-50년대 중반 코호트는 결혼 전 취업 여성 비율이 높고 (농업이 아니라) 제조업 비중이 컸다. 그만큼 결혼 전후에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소수의 전문·관리직은 결혼 후에도 취업을 유지했으나 생산직과 사무직 대다수가 결혼과 함께 비취업으로 전환했다. 생산직만 보면 결혼 전 취업자의 50% 이상이 '중졸 이하'로, 10대 중반에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여성이었다(p. 190). 그러나 이 시기의 노동시장 퇴장은 완결된 것이 아니었다. 여성은 부족한 가계수업을 보충하기 위해 다양한 부업이나 비

107) 1970년 전체 여성 제조업 노동자 절반 이상이 섬유봉제업에 종사했다. 이들이 전체 제조업 노동자의 1/4을 차지했다(최선영, 2020: 142).

공식부문 노동을 수행했다. 또 상당수는 자녀가 어느 정도 자란 시점인 40대 후반에 노동시장에 복귀했다. 이러한 '복귀'는 40대 남성 배우자의 노동시장 내 '하강 이동'과도 맞물려 있었다(최선영·장경섭, 2012: 223-225).

이 시기 이행 국면에서 공식 교육기관의 역할은 매우 적었다. 여전히 다수가 농업에 종사했고, 영세 자영업이나 서비스직 등의 비중이 컸다. 공식 교육이 숙련 형성에 직접적인 의미가 있고 교육자격이 공식적으로 요구되는 직종의 비중 은 매우 적었다. 그럼에도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면서 1970년대로 오면 남성의 교육제도 편입이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다수가 중학교를 졸업했고, 상당수는 고등학교까지 진학했다. 그에 따라 1970년대 중반으로 오면 교육-노동시장 연계가 일정 수준 형성되었다.

여성의 경우 교육의 역할은 더욱 적었다. 농업이나 식모 등 도시 영세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것과 교육은 관계가 없었다.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로 일하는 데 필요한 교육 수준도 초등교육 이상의 것이 아니었다. 그랬기에 중학교 졸업 무렵에 다수의 여성이 학교를 떠났다. 이 시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가구경제를 보조하거나 본인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일시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공식 교육은 크게 요구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기 성인기 이행은 매우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지만 교육-노동시장 연계 고리의 미발달로 이행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았다. 공식 노동시장의 미발달로 노동이력의 남녀 분화 수준은 크지 않았다. 잠깐의 출산·육아 기간을 제외하면 여성도 도시 영세자영업자 가구를 중심으로 꾸준히 일했다.

### 2) 근대적 노동시장의 발달과 '성인 이행기'의 형성

1980-90년대 중반의 청년층 노동시장 참여 패턴부터 다시 확인하자. 남성의 경우, 1980년에는 15-19세의 참가율이 27.3%, 20-24세의 참가율이 76.5%, 25-29세의 참가율이 95%였다. 20대 중후반 대다수가 경제활동에 참가했다. 15-19세 참가율은 1980년대 후반까지 가파르게 감소해 1990년에는 10.8%로 줄어든다. 20-24세 참가율은 1980년대 중반까지 가파르게 감소한 후 1990년대 후반까지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그 이후부터 가파르게 줄어든다. 1980년대 초반의 감소나 1990년대 후반 이래 감소 모두 대학생 증가를 반영한다. 대학 진학 증가는 25-29세 참가율이 비슷한 시기에 하락한 것과도 관계 있다. 청년 남성의 노동시장 진입 시기는 계속 늦추어졌다.

1980년대로 오면 중화학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생산직 노동시장이 남성 숙련노동자 중심으로 재편된다. 이 과정에서 숙련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된다. 1987년의 노동자대투쟁이 이런 경향을 확

대·강화했다는 점은 언급한 바 있다. 내부노동시장 형성은 당시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의 생활세계를 크게 바꾸어놓았다. 임금상승, 가족임금 확보, 소비 구조 고도화, 가정중심성에 기반한 가족생활 양식 확산 등이 대기업 노동자 생활세계 변화의 주된 내용이었다. 유형근(2012: 105)은 그 과정을 노동자계급의 형성과 변형('중산층화')이라는 관점에서 서술한다.

> 종합적으로 보면 1980년대 중후반부터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의 시기는 미시적인 노동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미혼의 20대의 청년기 노동자들이 3-4인 가구의 생계부양자가 되는 '가족의 시간'에 해당하였고, 거시적인 사회변동의 측면에서는 1987년을 기점으로 기존의 억압적 노사관계가 해체되고 민주노조운동이 대중화되는 '노동운동'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조선산업 및 자동차산업 대기업의 경영환경이 급속히 개선되면서 자본축적이 급속히 진행된 고도성장의 '산업의 시간'에 해당하였다. 이 세 시간대의 동시성의 조건하에서 울산의 대기업 노동자들은 단체교섭기구를 통해 급격한 임금인상과 기업복지를 충족시켜 나갔던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변화를 상당수 노동자가 경험했다. 모두가 경험한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이런 이력이 주요 삶의 경로이자 목표로 인식되기에는 충분한 변화였다.

이 시기에는 화이트칼라 노동시장도 급격히 팽창했다. 이 시장에 들어간 이들이 1980년대에 대학을 졸업한 남성이었다.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할 때 노동시장 기회가 팽창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동의한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중화학공업화가 본격화되면서 대졸 사무직 수요도 커졌다. 특히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의 호황으로 대졸자 수요가 급증했다. 이때 자리잡은 이들은 1997년 경제위기 당시에도 크게 충격받지 않았다. 구조조정 대상이 윗세대였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으로 자리가 생기면서 오히려 일찍 경력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었다(이철승, 2019; 조귀동,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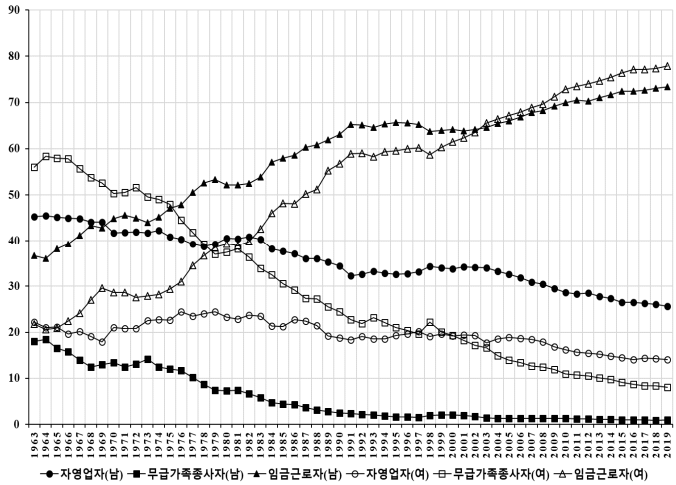
계층 분화가 이 시기에 시작된 것은 맞지만, 전반적으로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수월했다. 임금노동자로 진입하는 경로가 점차 확대되면서 근대적 학교-노동시장 이행 국면이 자리를 잡았다. 이런 맥락에서 대학 시절이 부르디외가 "사회적 우주의 외부"(Bourdieu, 2004[1984]: 160)라고 표현했던 근대적 청년기의 특징을 담지할 수 있었다.[108]

---

108) 이러한 시간이 권위주의 정권이라는 정치적 공간과 만나서 형성된 것이 "진정성"이라는 "마음의 레짐"이었다(김홍중, 2009: 7).

여성의 경우 1980년에는 15-1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34.4%, 20-24세의 참가율이 53.5%, 25-29세의 참가율이 32%였다. 남성과 달리 10대 중후반에 참가율이 높고 20대 중후반에는 참가율이 극히 낮다. 남성과 같이 15-19세 참가율은 1980년대 후반까지 가파르게 감소해 1990년에는 18.7%로 줄어든다. 20-24세 참가율은 1980년대 중후반에 증가한 후 2000년대 중반까지 유지되다가 2000년대 후반에 급감한다. 여성의 교육경험 변화도 요인이지만 결혼 이행 패턴의 변화도 요인이다. 대학진학 증가에 따른 노동시장 참가율 하락 효과와 결혼 지연에 따른 노동시장 참가율 상승 효과가 서로의 효과를 상쇄하면서 참가율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었지만, 최근으로 오면 대학진학자 증가에 따른 노동시장 참가율 감소 추이가 더욱 강해지면서 전반적인 하락세가 나타난다. 2000년대 중반 이래 감소는 1980년대 중반생이 4년제 대학에 다수 가기 시작한 것을 반영한다. 대신 25-29세의 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했다. 1980년대 중후반의 상승세가 가파르고,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의 상승세가 가파르다. 첫 번째 상승세는 결혼 연령 상승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증가를 반영한다. 두 번째 상승세는 대학졸업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난 것을 반영한다(장지연, 1998).

<그림 4-9> 종사상지위별 비중(1963-2019)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1980년대로 오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수준이 증가한다. 1980년 42.8%에서, 1985년 41.9%, 1990년 47.0%로, 1980년대 중반 한 차례 하락했지만 꾸준히 증가한다. 농업 부문 종사자가 급감하고 제조업 부문 노동자가 크게 증가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서비스 부문 노동자가 급증한다. 1980년에는 1차산업이 46.5%, 2차산업이 21.9%, 3차산업이 31.6%였으나 1990년에는 각각 20.4%, 28.0%, 51.6%였다. 농업이 급감했고, 제조업은 약간 늘었으며, 서비스업이 급증했다. 종사상지위 분포는 1980년 자영업자 23.2%, 무급가족종사자 37.3%, 임금노동자 39.4%에서 1990년 각각 18.8%, 24.6%, 56.6%로 변했다(<그림 4-9>). 무급가족종사자가 크게 줄고, 임금노동자가 크게 늘어났다(강이수, 2009: 64).

기혼여성 취업도 크게 늘어났다. 이들은 1970년대 후반부터 제조업 생산직으로 진입한다. 이 부문의 주요 노동력이었던 미혼 여성이 서비스업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1985년에는 제조업 생산직 여성노동자의 35.5%가 미혼, 54.9%가 유배우자, 9.6%가 사별·이혼이었으나 1998년에는 각각 6.9%, 77.5%, 15.6%이었다. 이 시기 서비스 부문의 주요 직종은 판매직이었으나 교원이나 사무직 노동자도 늘어나는 등 직종 분포가 다양해졌다(강이수, 2009: 64-66). 가사서비스 노동 역시 1970년대 말부터 기혼 여성으로 대체된다.

이 시기 여성의 학교-노동시장 이행 경로를 추론해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0대 후반에 판매원이나 경리 등의 서비스직·사무직으로 진입한 후 3-4년 일하다가 결혼하면서 퇴장하는 이력이 전형이었을 것이다. 이후 다수는 출산과 양육을 어느 정도 마친 후 생산직이나 서비스직으로 재취업했을 것이다. 1980-90년대에 20대에 진입했던 1960-70년대 중반생 여성의 결혼 전후 취업이력을 보면, 화이트칼라 직종 비중이 급증했음에도 결혼과 출산 후에 취업을 유지하는 경우가 드물었다(최선영·장경섭, 2012: 214-215). 생산직 여성도 결혼이나 출산을 계기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했다. 그러나 최선영과 장경섭은 이 시기의 퇴장과 그 전 시기의 퇴장에 큰 의미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 전의 퇴장이 소극적인 의미를 가졌다면, 이 시기 퇴장은 "가족이라는 '사생활'의 영역을 관리하고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근대적이고 전문적인 전업주부화라는 사회적 의미를 갖게"(p. 217)되었다는 것이다.[109] 이것은 1980년대 중후반에 내부노동시장이 남성 생산직으로 확장되면서 청년 남성들이 안정적인 노동이력을 형성할 수 있게 된 것과 맞물려 있다. 그러나 이 코호트 역시 퇴장한 여성의 약 50%가 노동시장에 재진입했다. 이전 시기와 비교했을 때 여성의 더 많은 노동시장 참여와 더 이른 복귀 및 더 많은 복귀 경향은 M자 취업이력을 더욱 선명하게 형성했다(박경숙·김영혜, 2003).

요약하면, 1980-90년대 중반은 남성과 여성의 노동이력이 공식화·표준화되는 것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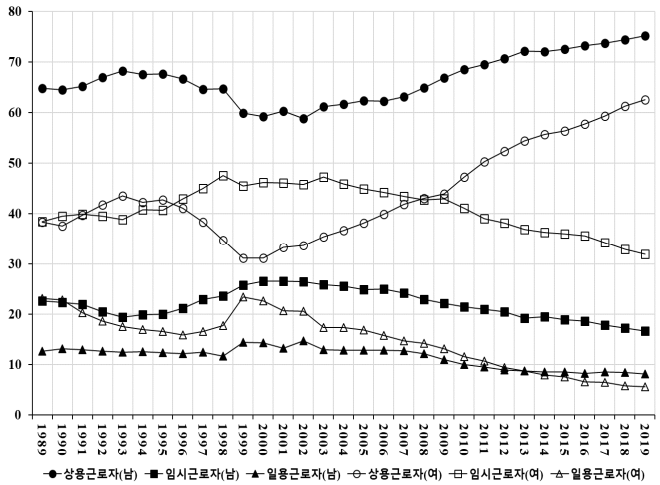
109)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여성이력 연구(이재경, 2003; 박경숙·김영혜, 2005)가 포착하는 집단이 이 시기의 여성이다.

동시에 생산·재생산 영역을 경계로 남녀 생애 이력의 분화가 진행된 시기였다. 남성의 경우 교육제도에 머무르는 기간이 대폭 늘어났고, 학교-노동시장의 연계가 공식화되면서 비교적 순조롭게 공식 노동시장으로 진입했다. 이러한 안정성을 바탕으로 다수가 비슷한 시기에 결혼할 수 있었다. 여성의 경우 학교에 머무르는 기간이 늘어나는 한편 남성의 노동지위가 안정화되면서 졸업 후에 노동시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결혼하는 이력도 등장했다. 결혼하면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경우에도 퇴장의 의미가 '해고'에서 '선택'으로 바뀌었다.

### 3) 근대적 노동시장의 전환과 '성인 이행기'의 변화

1990년대 중반 이후의 노동시장 변화는 대기업 정규직 고용 감소와 내부/외부 노동시장의 격차 심화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학교-노동시장 이행의 공식성은 강화되었다. 더 많은 이들이 교육제도에서 더 오래 있게 되었고, 졸업 이후 공식부문으로 더 많이 진입했다. 이 시기로 오면 2차산업의 비중이 줄고 3차산업 비중이 늘어난다. 이는 고졸자 노동시장의 위축을 의미한다. 동시에 경제위기를 계기로 임금노동자 중 상용노동자 비중이 줄어든다. 2000년대 초반부터 상용직 비중이 완만하게 증가하지만, 2010년대에 와서야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그림 4-10>).

<그림 4-10> 고용형태별 비중(1989-2019)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청년 노동시장으로 한정하면, 상당수 기업이 신규채용을 줄이면서 취업의 기회가 좁아졌다. 특히 대졸자가 희망하는 대기업 사무직 비중이 급격히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노동시장 이행 국면의 안정성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 시기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완만하게 감소한다(<그림 4-6>). 앞서 확인했듯이 청년층과 장년층의 참가율이 경제위기를 계기로 상당 수준 하락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중반으로 오면 일정 부분 회복되지만 남성 전체의 점진적인 하락 추이는 지속된다. 장년층은 상당수가 자영업으로 전환했으며, 청년층은 휴학 등으로 졸업을 연기하거나 졸업 이후에도 취업 준비를 하는 등 노동시장 참여를 유예했다. 1997년부터 크게 증가한 청년 니트(NEET) 인구가 이 시기 청년 노동시장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남재량·김세움, 2013: 17).

1990년대로 오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 추이를 보인다. 1995년 48.4%에서 1997년 49.8%에 이르렀으나 1998년 47.1%로 하락했고 이후 완만하게 증가해 2006년에 50.7%에 이른다. 그러나 이후 10년간 이 수준에서 정체된다. 이 시기에 제조업 부문 취업자가 크게 감소하고 서비스산업 취업자가 크게 증가해 2006년에는 전체 여성 취업자의 77.2%가 3차산업 종사자였다(강이수, 2009: 70). 임금노동자 비중은 1995년 59.1%에서 2006년 67.7%로 늘어났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 독일, 스웨덴 등의 80-90% 수준에 못 미친다. 아울러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5년 47.6%에서 2000년 48.7%, 2006년 49.5%로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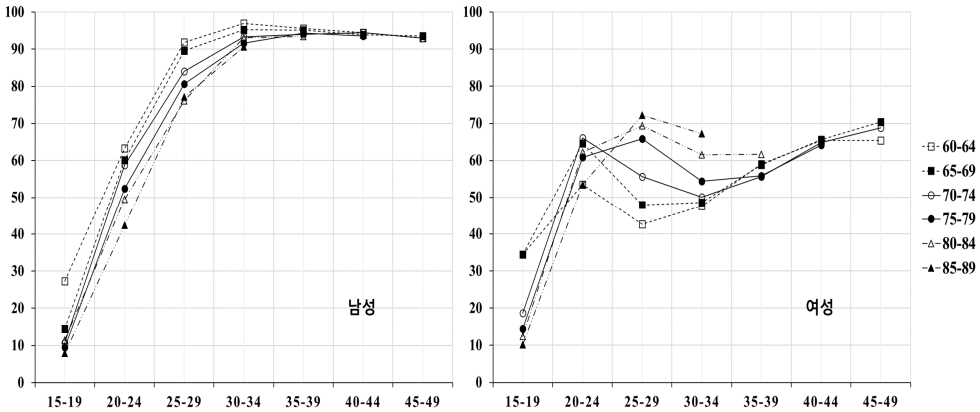
이 시기 여성노동시장의 특징은 비정규직 고용 확대다. 1980년대 후반부터 완만하게 증가한 상용직 비중은 1993년 43.6%를 정점으로 감소해 경제위기 직후인 1999년에는 31%로 급감한다. 이후 점차 회복되지만 2009년에 와서야 1993년 수준으로 회복된다. 2010년대에 들어와 상용직 비중이 커지지만 2010년대 후반에도 여전히 약 40%가 비정규 노동력이다.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후반까지 여성의 교육 수준은 급상승했다. 같은 시기에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는 불안정해졌다. 동시에 일부 고학력 여성의 상위직 진입 경로가 일정 수준으로 자리 잡았다. 그 결과 여성 노동시장이 양극화되었다(민현주, 2008).

1990년대 후반 이후의 노동시장 변화는 서비스업으로의 전환과 함께 분절 노동시장 구조 내에서 자유화가 진행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성인 이행기가 전후 처음으로 '문제화'된 맥락을 제공했다. 더 많은 이들이 더 오래 공식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았지만 그러한 경험과 기대에 걸맞은 취업기회는 확대되지 않았다. 이 전 시기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청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동연령대 남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편화'되었다는 것이다. 즉, 학교경험과 노동시장 참여 경험에서 남녀 차이가 크게 줄었다. 그러나 학교-노동시장의 연계는 점차 약해

졌고, 그에 따라 성인기 이행의 경계도 불분명해졌다.

노동생애라는 관점에서 지금까지 개괄한 변화는 '성인 이행기'의 형성 및 변화다. 그것의 한 가지 함의는 남녀 경험의 수렴이다(<그림 4-11>).

<그림 4-11>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1960-1980년대 코호트)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남성의 변화는 그 폭도 크지 않고, 변화 양상도 점진적이었다. 최근 코호트로오면서 경제활동참가수준이 하락하지만 하락 폭은 코호트별로 일정하다. 더욱이 30대 초반에서는 코호트 간 차이가 크지 않고, 30대 후반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다. 여성은 변화 폭도 크고, 양상도 단절적이었다. 여성의 이행 국면에서 주된 변화가 나타난 시점은 1990년이다. 1970년대 초반생이 1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부터다. 10대 후반 노동시장 참여가 대폭 줄고, 20대 초반의 참여는 높아졌다.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국면은 20대 중후반이다. 1960년대 초중반생보다 1980년대 중후반생의 참여수준이 30%p 높다. 특히 1970년대생이 겪은 변화의 폭이 매우 컸고, 그 결과 내부 이질성도 크다.

20대 중후반까지의 노동경험에서는 남녀 수렴 경향이 확인된다. 10대 후반에는 거의 같으며, 20대 초중반에는 여성이 높다. 20대 중후반에는 남녀가 거의 같다. 이것은 교육제도에 남녀가 비슷한 수준으로 참여하게 된 것의 결과다. 고등학교 교육에서 남녀 차이가 사라진 것이 1970년대 중반생부터였고 대학 교육에서 남녀 차이가 사라진 것이 1980년대 초반생부터였다. 그러나 이 때문만은 아니다. 교육제도를 떠난 후 노동시장과 결혼시장으로 서로 다른 길을 걸었던 남녀가 똑같이 노동시장으로 가게 된 것도 주된 변화다.

교육 수준 수렴 경향과 졸업 후 경제활동 참여 수준의 수렴 경향을 노동시장 이행 경로의 탈성별화로 볼 수 있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30대 초중반의 경제활동참여 수준 차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아니다'라고 답할 수 있다. 최근 코호트에서도 30대 초중반으로 오면 여전히 남성은 경제활동참가율이 90%에 이르는 반면, 여성은 60%대에 머무른다. 이런 점에서 여성에게 지난 30년의 학교-노동시장 이행 국면 변화의 핵심은 20대 중후반에서의 코호트별 극적 차이에서 찾을 수 있기보다 30대 중후반에서의 코호트별 극적 동질성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후자에 주목하면 여전히 여성은 성별화된 이행 경로를 밟고 있다. 그럼에도 20대 중후반까지의 남녀 경험 수렴 경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 경향이 가족이행 이력의 다양화를 추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생산 영역에서의 이행 국면의 변화는 성별화/탈성별화 구도보다 '성별화의 성격이 어떻게 변했나'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앞에서 개괄한 변화는 가족배경이나 교육 수준 등을 매개로 개인의 노동이력을 규정했을 것이다. 반대로 가족배경이나 교육 수준이 노동시장 진입 국면에서 갖는 영향력도 변했을 수 있다. 가족배경이나 교육 수준의 영향력과 그 변화를 확인하는 작업은 노동시장 이행 경로의 탈성별화 경향을 이해하는 작업과도 연결된다. 다음 절에서는 1970-84년생의 졸업 후 노동이력의 변화 양상을 확인해 이들 질문에 답해 보고자 한다.

## 3. 1970-1984년생의 노동이력

1970-84년생은 1절에서 개괄한 고용체제 국면 상 두 번째 국면에서 세 번째 국면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했다. 1970-72년생은 상당수가, 1973-75생은 일부가 경제위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나왔다. 1976-78년생, 1979-81년생, 1982-84년생은 시차는 있지만 경제위기 이후에 노동시장에 나왔다. 1982-84년생 일부는 2008년 경제위기 국면에 노동시장에 나오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이 15년에 걸친 연령 집단은 경제위기의 충격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하에서는 노동이력을 구성한 절차를 소개하고 노동이력의 패턴을 성별·코호트별로 비교한다.

## 1) 노동이력 구성

### (1) 노동지위 구성

노동이력을 구성할 노동시장 지위(이하 '노동지위'로 표현)의 범주는 7개다.[110] 노동패널 20차 직업력 자료에 등록된 일자리 사례 191,694개에 이 연구에서 구성한 노동지위를 부여한 결과가 <표 4-1>이다.

<표 4-1> 노동지위 부여 결과

| 노동지위 범주 | | 회고 | | 비회고 | | 합계 | | |
|---|---|---|---|---|---|---|---|---|
| | | 사례수 | 퍼센트(전체) | 사례수 | 퍼센트(전체) | 사례수 | 퍼센트(부문) | 퍼센트(전체) |
| 임금 | 대_정규 | 1,272 | 5.9 | 19,442 | 11.4 | 20,714 | 15.4 | 10.8 |
| | 대_비정규 | 205 | 1.0 | 11,108 | 6.5 | 11,313 | 8.4 | 5.9 |
| | 중소_정규 | 11,478 | 53.6 | 35,028 | 20.6 | 46,506 | 34.6 | 24.3 |
| | 중소_비정규 | 3,736 | 17.4 | 52,212 | 30.7 | 55,948 | 41.6 | 29.2 |
| | 합계 | 16,691 | 77.9 | 117,790 | 69.2 | 134,481 | 100.0 | 70.2 |
| 비임금 | 자영_고용원 | 0 | - | 10,626 | 6.2 | 10,626 | 18.6 | 5.5 |
| | 자영_비고용원 | 2,137 | 10.0 | 30,796 | 18.1 | 32,933 | 57.6 | 17.2 |
| | 가족종사자 | 2,594 | 12.1 | 11,060 | 6.5 | 13,654 | 23.9 | 7.1 |
| | 합계 | 4,731 | 22.1 | 52,482 | 30.8 | 57,213 | 100.0 | 29.8 |
| 총합계 | | 21,422 | 100.0 | 170,272 | 100.0 | 191,694 | | 100.0 |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합계' 기준으로, 임금노동 사례가 70.2%, 비임금노동 사례가 29.8%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1998-2018년 평균 비임금노동 비중은 30.8%다.

비정규직 비중은 임금노동으로 한정하면 부문으로는 50%(부문 퍼센트 8.4%+41.6%)이고, 전체로는 35.1%(전체 퍼센트 5.9%+29.2%)다. 비정규직 비중 50%는 가장 포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의하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집계 규모의 2001-18년 평균치인 50.3%와 거의 같다. 대기업 비중은 임금노동으로 한정하면 부문으로는 23.8%이고, 전체로는 16.7%다. '기업체'를 단위로 했을 때 300인 이상 기업 종사자

110) 이 연구에서 노동지위는 넓은 의미에서 시장 기회를 나타내는 지표로, 관계 의미를 지닌 '계급' 개념보다 위치 의미를 지닌 '계층' 개념에 가깝다(홍두승, 2005). 임금노동과 비임금노동으로 구분했고, 임금노동은 고용형태와 기업규모를 조합해 4가지(대기업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로, 비임금노동은 종업원 유무에 따라 2가지(고용주, 자영업자)로 구분했다. 여기에 비취업 범주를 추가하면 7개가 된다. 상세한 자료 조직 절차는 <부록 2>에 정리해 두었다.

비중은 임금노동으로 한정하면 부문으로는 약 23%이고(한지영, 2014), 전체로는 약 20%다(김유선, 2014a; 2014b).[111] 전체로 보면 약 3%p 적은 비중이지만,[112] 사업체를 기준으로 한 비중(2016년 전국사업체조사자료 기준 취업자 전체의 14.3%)보다는 확실히 크다.

비임금노동에서는 고용주가 19%, 자영업자가 58%, 가족종사자가 24%다. 비임금노동자에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비중은 경제활동인구조사로 볼 때 1998-2018년 평균 21.3%이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58.6%이다. 가족종사자는 20.1%이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비중은 경제활동인구조사상 비중보다 다소 적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경제활동인구조사상 비중과 거의 같다. 대신 가족종사자 비중이 약간 높다.

종합하면, 노동지위 부여 결과는 적절해 보인다. 임금노동에서 대기업 비중이 약간 작고, 비임금노동에서 가족종사자 비중이 약간 큰 것을 제외하면, 모든 지위의 비중이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와 비슷하다. 이 지위로 구성한 노동이력 역시 대표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서 구성한 노동지위의 성격을 업종, 직종, 노동시장, 임금, 노조유무,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의 정보로 확인하면, 이들 지위는 세 수준으로 구분된다. 대기업 정규직과 고용주가 상층에 속하고, 대기업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정규직이 중간층에 속하며, 중소기업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가족종사자가 하층에 속한다. 중간층으로 분류한 대기업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정규직을 비교하면, 시간당 임금과 노동조합 가입율에서는 대기업 비정규직이 우위에 있는 반면, 4대 보험 가입 수준에서는 중소기업 정규직이 우위에 있다(상세 내용은 <부록 2>를 참조).

업종과 직종 정보를 종합하면, 대기업 정규직은 주로 2차산업의 사무직이나 사회서비스업의 전문·사무직이다. 대기업 비정규직은 주로 사회서비스업이나 유통서비스업의 단순노무직이나 사무직, 판매서비스직이다. 중소기업 정규직은 2차 산업이나 유통서비스업의 사무직이나 장치관리직이다. 고용주는 주로 유통서비스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의 전문직과 판매서비스직이다. 자영업자는 유통서비스업이나 1차산업의 판매서비스직이나 단순노무직이다. 임금노동과 자영업의 중간 형태인 특수형태고용을 매개로 유통서비스업과 판매서비스직이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에서 단순

111) 이 연구는 사업체가 아닌 기업체를 단위로 기업규모를 측정하고, 이에 근거(300인 이상)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했다. 기업체와 사업체 구별의 구체적인 의미는 <부록 2>를 참조.

112) 한 요인은 1차 조사(1998년) 이전의 회고 정보로 보인다. 비회고 자료로 보면, 300인 이상 기업체 노동자 비중은 전체의 17.9%다.

노무직 비중이 큰 것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를 단순노무직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상층과 하층은 산업별로가 아닌 산업 내 직종으로 나뉜다(상세 내용은 <부록 2>를 참조).[113]

### (2) 노동이력 구성

노동이력의 측정 단위는 월이다. 연 단위로 끊으면 상당한 정보가 손실되기 때문이다. <그림 4-12>는 노동이력 구성 사례를 예시한다.

<그림 4-12> 노동이력 구성 예

| 연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7 | | | | | | | | | | | |
|---|---|---|---|---|---|---|---|---|---|---|---|---|---|---|---|---|---|---|---|---|---|---|---|---|---|---|---|---|---|---|---|---|---|---|---|---|
| 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81 | 82 | 83 | 84 |
| 사례 1 | 1 | 1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 사례 2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 사례 3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1 | 1 | 7 | 7 | 7 | 7 | 7 | 7 | 7 | 7 | 7 | 1 | 1 | 1 |
| 사례 4 | 1 | 1 | 1 | 1 | 1 | 1 | 6 | 6 | 6 | 6 | 6 | 6 | 6 | 6 | 6 | 6 | 6 | 6 | 6 | 6 | 6 | 6 | 6 | 6 | 6 | 6 | 6 | 6 | 6 | 6 | 6 | 6 | 6 | 6 | 6 | 6 |
| 사례 3719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5 | 5 | 5 | 5 | 5 | 5 | 5 | 5 | 5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주: 배열 요소 - 1. 비취업(실직, 재교육, 군복무 등); 2. 고용원 있는 자영업; 3. 고용원 없는 자영업; 4. 대기업(300인 이상) 정규직; 5. 대기업 비정규직; 6. 중소기업 정규직; 7. 중소기업 비정규직

기준은 졸업 시점(연월)이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시간 단위가 개월이기 때문이다. 연령이나 연도를 기준으로 삼으면 월 단위를 살릴 수 없다. 둘째, 이력 비교의 편의 때문이다. 연령이나 연도를 기준으로 삼으면, 노동지위 이외의 상태(학업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성격이 서로 다른 상태로 이력이 구성되어, 이력들을 같은 차원에서 비교하기 어렵다.[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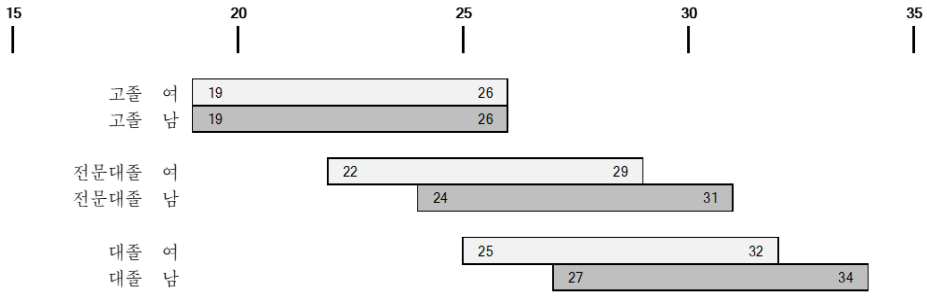
기간은 84개월(7년)이다. 길이가 길수록 좋지만 우측 절단 문제로 무한히 볼 수는

113) 이후 이력 구성 절차에서는 가족종사자를 '자영_비고용원' 범주에 포함시킨 버전을 활용할 것이다. 둘의 특징이 유사하기 때문이고,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인 젊은 층에서는 가족종사자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114) 기준을 졸업 시점으로 두는 방식도 한계는 있다. 실제의 시간 축을 준거로 하지 않는 추상화된 이력이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가령 A는 고졸자로 1998년에 졸업했고, B는 대졸자로 2008년에 졸업했다. 졸업 후 10년 이력의 실제 시간표는 A가 1998-2007년이고, B가 2008-17년이다. 성별과 교육 수준에 따라 졸업 후 ○○개월 이력이 해당하는 연령대도 각기 다르다(<그림 4-13>). 결국 시간 맥락이 다른 이력을 비교하게 된다. 그러나 이 예는 다소 극단적인 경우로, 노동이력을 교육 수준과 졸업 시점(연령) 정보와 함께 보면 시간 맥락 차이를 상당 부분 통제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졸업 시점이 이례적인 사례(만 15세 이하이거나 35세 이상인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없다. 7년은 노동패널 20차 조사 자료로 1970-84년생의 노동이력을 볼 수 있는 최대 길이다. <그림 4-13>을 보자.

<그림 4-13> 노동이력의 연령대(성별·교육 수준별)




1984년생은 2017년에 만 33세였다. 2010년에는 26세였다. 그러니까 만 26세 이하 시점에서 졸업한 이들의 이력은 포착할 수 있다.[115] 물론, 결혼이나 출산 같은 주요 가족 관련 사건의 영향력을 노동이력에 반영하려면, 다시 말해 노동이력의 분화 양상을 제대로 포착하려면, 대졸자 기준으로 대략 10년을,[116] 고졸자 기준으로는 대략 15년을 봐야 한다. 이 점을 고려하면 7년은 다소 짧다.[117] 그러나 이 연구는 만 28-33세의 가족이력을 별도로 구성해 노동이력과의 관계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이 한계를 보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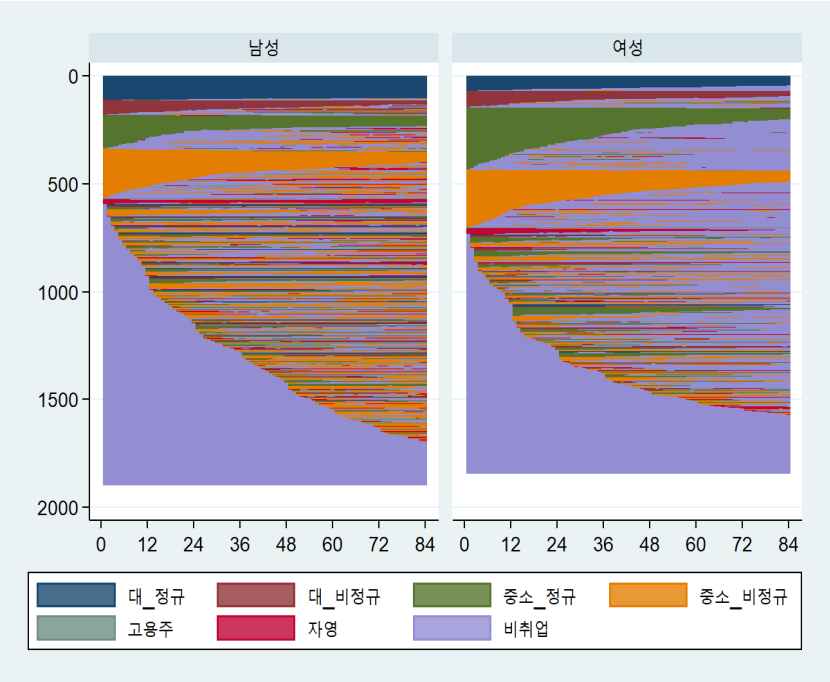
---

115) 졸업 시점이 늦어 84개월을 채우지 못한 이력의 경우(전체 사례의 3.8%), 마지막 관찰 시점의 노동지위를 84개월 시점까지 채워 넣었다. 직업력 자료로 노동이력을 구성한 절차는 <부록 3>을 참조.

116) 대학 졸업 소요기간으로 계산한 2010년 4년제 대학졸업자 평균 졸업 연령(이하 만 나이)은 남성 26.5세, 여성 24.4세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검색). 2015년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이 32.6세, 여성이 30.0세다. 평균 초산연령은 여성 전체가 32.3세, 대졸 이상 여성이 32.5세다(통계청 인구동향조사, KOSIS 검색). 대졸자를 기준으로 결혼과 출산을 경험한 여성의 경우 졸업 후 평균 5.8년에 결혼하고, 8.1년에 출산한다. 이 자료에 비추면 노동이력의 분화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4년제 대학졸업자를 기준으로 대략 졸업 후 10년을 봐야 한다(이상직·김이선·권현지, 2018: 246). 결혼과 출산 시점에서 대졸자와 고졸자 차이가 0.5세 내외로 크지 않다는 점(통계청, 2017a: 8)에서 고졸자는 4-5년을 추가해야 한다.

117) 노동시장 지위를 확인하기에 7년은 충분한 관찰 기간이다.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거나 여러 직장을 다니면서 직업을 탐색하는 기간을 고려해도 졸업 후 7년이면 한 사람의 노동시장 지위가 어느 정도 결정될 것이다. 즉 7년 이력을 분석 단위로 삼으면 노동시장 진입과 퇴장을 함께 고려한 노동이동 패턴을 알 수 있다.

<그림 4-14> 노동이력(성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그림 4-14>는 이렇게 구성한 노동이력을 남녀로 구분해 보여준다. 가로축은 개월 수를 표시한다. 세로축은 사례 수를 표시한다. 가로 선 하나하나가 개인의 노동이력이다. 가장 아래에 있는 선이 84개월 내내 비취업 상태로 있었던 이력이고, 가장 위에 있는 선이 84개월 내내 대기업 정규직 상태로 있었던 이력이다. 그 사이에 여러 종류의 이력이 자리한다. 전반적으로는 졸업 후 시간이 지나면서 비취업 상태에서 취업 상태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들 이력이 이 장의 분석 단위다.

이 그림에서 몇 가지 남녀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 수준이 여성보다 높다. 남성은 졸업 직후에는 여성보다 노동시장 참여 수준이 낮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정한 속도로 노동시장 참여 수준이 높아진다. 여성은 졸업 직후에는 남성보다 노동시장 참여 수준이 높지만 참여 수준이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3년을 기점으로 하락하거나 정체된다. 이때부터 비취업 상태로 전환하는 이력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 (3) 노동이력 유형화

<그림 4-14>에서 확인했듯이 노동지위의 배열에 따라 수많은 이력이 구성된다. 이를 비교하려면 정보를 일정 수준으로 축약해야한다. 유형화가 한 방법이다. 2장에서 소개한 다이나믹 해밍법으로 이력 간 거리를 계산했고, 이 거리에 기초해 와드(ward) 방법으로 이력을 묶었다.

<표 4-2>가 그 결과다. 각 이력은 7개 유형으로 묶인다. ①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은 졸업 직후나 2년 내에 대기업 정규직에 진입해 그 상태를 유지한 이력이 다수인 유형이다(12.2%). ② '대기업 비정규직 지속형'은 졸업 직후에 대기업 비정규직에 진입했거나 비취업 상태를 겪은 후 진입해 그 상태를 지속한 이력이 다수인 유형이다(6.1%). ③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형'은 졸업 후 바로, 또는 일정 기간의 비취업 상태를 겪은 후 중소기업 정규직에 진입한 이력이 다수인 유형이다(12.5%). ④ '혼합형'은 중소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 자영업(고용주 포함), 비취업 상태가 섞여 있는 이력이 다수인 유형이다(12.0%). ⑤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속형'은 졸업 후 바로, 또는 비교적 이르게 중소기업 비정규직에 진입해 이 상태를 유지한 이력이 다수인 유형이다(18.5%). ⑥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연 진입형'은 약 2년의 비취업 기간을 거쳐 주로 중소기업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정규직에 진입한 이력이 다수인 유형이다(15.2%). ⑦ '비취업 지속형'은 비취업 지위가 7년(84개월) 내내 지속되거나 5년 이상 지속되는 이력이 다수인 유형이다(23.5%).

<표 4-2> 노동이력 유형별 비중(성별)

| 7개 유형 | 남성 | | 여성 | | 전체 | |
|---|---|---|---|---|---|---|
| | 사례수 | 퍼센트 | 사례수 | 퍼센트 | 사례수 | 퍼센트 |
| ① 대기업 정규직 지속 | 303 | 16.3 | 147 | 8.0 | 450 | 12.2 |
| ② 대기업 비정규직 지속 | 116 | 6.2 | 108 | 5.9 | 224 | 6.1 |
| ③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 | 257 | 13.8 | 208 | 11.3 | 465 | 12.5 |
| ④ 혼합 | 134 | 7.2 | 310 | 16.8 | 445 | 12.0 |
| ⑤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속 | 347 | 18.6 | 339 | 18.4 | 686 | 18.5 |
| ⑥ 중소기업 비정규직 늦은 진입 | 374 | 20.1 | 191 | 10.3 | 564 | 15.2 |
| ⑦ 비취업 지속 | 331 | 17.8 | 540 | 29.3 | 871 | 23.5 |
| 합계 | 1,861 | 100.0 | 1,844 | 100.0 | 3,705 | 100.0 |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대기업 이력('대기업 정규직 지속형'+'대기업 비정규직 지속형') 비중은 18.3%로, 직업력 등록 일자리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기업 정규직'과 '대기업 비정규직' 지위

를 합친 16.7%(<표 4-1>)보다 약간 크다.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과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형’을 합친 정규직 이력은 24.7%로,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정규직’ 지위를 합친 35.1%보다 적다. 이 차이는 전체 노동시장과 비교했을 때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크지만 정규직 비중은 작은 청년 노동시장의 특징을 반영한다. 대기업 이력을 밟은 이는 5명 중 1명 꼴이고, 정규직 이력을 밟은 이는 4명 중 1명 꼴이다. 대기업 정규직 이력을 밟은 이는 10명 중 1명 꼴이다.

각 이력의 비중은 성별에 따라 다르다. 대기업 이력은 남성이 22.5%이고 여성은 13.9%다. 정규직 이력은 남성이 30.1%이고, 여성이 19.3%이다.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으로 한정하면 비중 차이는 남성 16.3%와 여성 8.0%로 정확히 2배다. 여성 비중이 높은 유형은 ‘혼합형’과 ‘비취업 지속형’이다. 남성보다 노동시장에 덜 들어가거나 중간에 노동시장에서 나오는 것을 반영한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관계없이 비정규직을 지속하는 이력의 비중에서는 남녀 차이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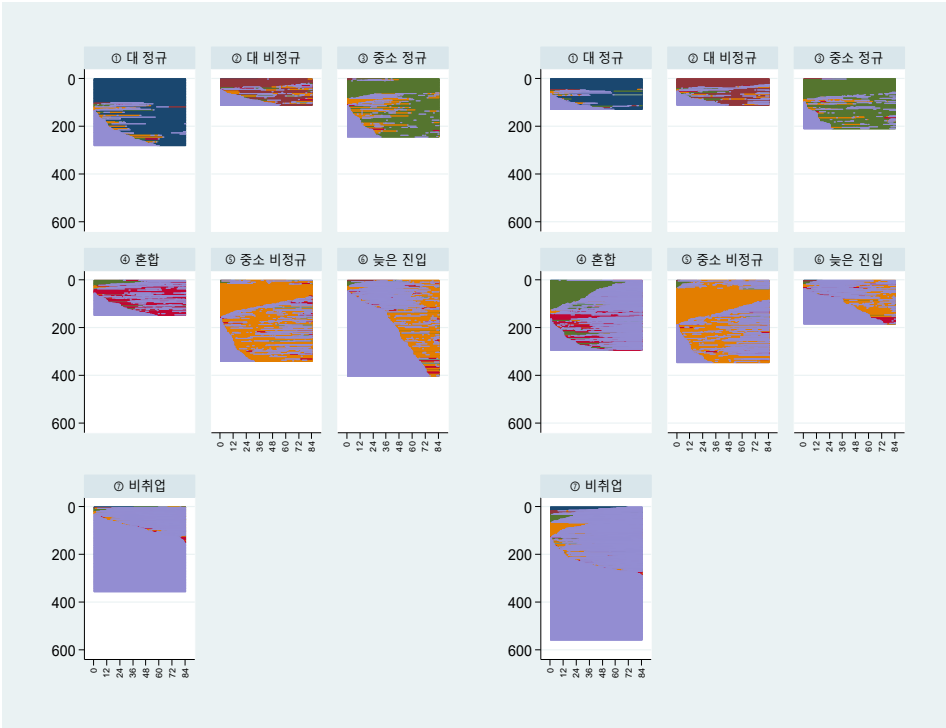
각 유형이 어떤 이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자(<그림 4-15>). 이 그림에서도 가로축은 개월 수를, 세로축은 사례 수를 나타낸다. 왼쪽 그림이 남성이고 오른쪽 그림이 여성이다.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은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 정규직에 진입한 이력과 비취업 기간을 거치고 진입한 이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유예 진입 이력의 경우, 중소기업 정규직 유예 진입 이력보다 평균 유예 기간이 길다(<표 4-3> 참조). 특히 남성에게서 그러하다. 이것은 대기업 정규직에 진입하기 위해 상당한 준비 기간을 겪는 이들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대기업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다른 지위에 있다가 전환한 이력도 소수 있다. 대기업 정규직에 진입하면 그 상태가 지속된다. 지금까지 기술한 패턴은 남녀 모두에서 나타난다.

‘대기업 비정규직 지속형’ 또한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 비정규직에 진입해 지속한 이력과 비취업 상태를 일정 기간 겪은 후 진입한 이력으로 구성된다. 진입 이후에는 대기업 비정규직 상태가 유지되지만 대기업 정규직 이력에 비하면 비취업,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다른 상태가 섞여 있는 이력도 확인된다.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형’도 바로 진입한 이력과 유예 진입한 이력으로 구분되지만, 이 유형만의 특징은 중소기업 비정규직으로 진입한 후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력이 상당수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대기업 이력에 비해 유예 기간이 짧다는 점이다. 이 점은 여성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림 4-15> 노동이력 유형별 특징(이력 단위)

남성 여성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혼합형’에는 비취업, 중소기업 정규직, 자영업, 중소기업 비정규직, 고용주 등의 상태가 섞여 있는 이력이 상당수 있다. <그림 4-15>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남녀 차이다. 남성은 자영업 이력이 다수다. 일부는 졸업과 동시에 자영업으로 진입했고, 일부는 중소기업 정규직이나 중소기업 비정규직에 있다가 자영업으로 전환했다. 일부는 일정 기간의 비취업 상태를 겪은 후 자영업으로 진입했다. 임금노동이력과는 달리 이력 중간 중간에 비취업 상태가 포함된 것도 특징이다. 즉, 남성에게 ‘혼합형’은 자영업 이력이다. 여성에게서도 자영업 이력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 이력보다 더 뚜렷한 이력은 중소기업 정규직에 있다가 비취업으로 전환한 이력,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이력이다. 나머지는 일정 기간 비취업 상태를 거친 후에 중소기업 정규직이나 자영업으로 진입한 이력이다. 이들 이력 또한 상당수는 2-3년 후에 퇴장하는 패턴을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에게 ‘혼합형’은 주로 노동시장 퇴장 이력이다. 이후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에 이 차이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속형’은 졸업 직후 중소기업 비정규직으로 진입해 그 지위를 꾸준하게 유지하는 이력과 짧은 비취업 기간을 거친 후 진입한 이력으로 구분된다. 후자 이력은 중간 중간에 비취업 상태가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 그만큼 이 이력이 불안정한 이력임을 시사한다. 남녀 차이가 뚜렷하지는 않으나 졸업 후 5년 시점부터 퇴장형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이력이 여성에게서 더 많이 발견된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늦은 진입형’은 상당히 긴 비취업 상태를 거친 후에 중소기업 비정규직으로 진입한 이력이 다수인 유형이다. <표 4-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취업 기간이 7년의 절반 이상이다. 졸업 직후 취업하지만 곧 비취업 상태로 전환하고, 1-2년의 공백기 이후 다시 중소기업 비정규직에 진입한 이력도 있다. 이 이력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확인되는데 공백 기간은 남성이 더 길다. 남성의 공백 기간은 고졸자의 군복무 기간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고, 여성의 공백 기간은 결혼·출산 기간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졸업 후 비취업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는 이력 또한 앞의 두 사건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비취업 지속형’에는 비취업 상태가 7년 내내 지속된 이력과 취업 상태가 포함된 이력이 있다. 남성은 2/3가 비취업 상태 지속 이력이고 여성은 절반 가까이가 그런 이력이다. 나머지는 졸업 후 취업했다가 곧 퇴장한 후 비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이력이다.

<표 4-3> 노동이력 유형별 노동지위 분포(단위: 개월)

| | 대 정규직 | 대 비정규 | 중소 정규 | 중소 비정규 | 고용주 | 자영업 | 비취업 | 합계 |
|---|---|---|---|---|---|---|---|---|
| ① 대기업 정규직 지속 | 68 | 1 | 1 | 1 | - | - | 13 | 84 |
| ② 대기업 비정규직 지속 | 1 | 63 | 2 | 3 | - | 1 | 15 | 84 |
| ③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 | - | 1 | 67 | 5 | - | - | 10 | 84 |
| ④ 혼합 | - | - | 27 | 5 | 5 | 16 | 30 | 84 |
| ⑤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속 | 1 | 2 | 1 | 64 | 1 | 1 | 14 | 84 |
| ⑥ 중소 비정규직 늦은 진입 | 1 | 2 | 11 | 20 | 1 | 1 | 48 | 84 |
| ⑦ 비취업 지속 | 3 | 2 | 2 | 4 | - | 1 | 72 | 84 |
| 합계 | 9 | 5 | 14 | 18 | 1 | 3 | 34 | 84 |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지금까지 소개한 노동이력 유형별 특징을 간략하게 보여주는 것이 <표 4-3>이다. 노동이력 유형별로 각 노동지위의 평균 비중을 나타낸다.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은 84개월 기간 중 대기업 정규직 상태가 68개월을, 비취업 상태가 13개월을, 대기업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 상태가 각각 1개월을 차지한다. 평균적으로 말하면 약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대기업 정규직에 진입한 후 6년을 줄곧 같은 지위에 있었다. 이처럼 지속형은 한 노동지위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은 대기업 정규직 지위 비중이 81%다.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형’은 중소기업 정규직 지위가 80%다. ‘대기업 비정규직 지속형’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속형’에서 각 지위가 차지하는 비중도 75% 내외다. 반면 ‘혼합형’은 중소기업 정규직과 자영업, 비취업이 각각 30%를 차지한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늦은 진입형’은 비취업 비중이 중소기업 비정규직 비중보다 크다.

노동지위 분포로 보면,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과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형’이 안정적이다. 단일 상태가 일관되게 유지된다는 의미에서다. ‘혼합형’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늦은 진입형’은 안정적이지 못하다. ‘대기업 비정규직 지속형’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속형’은 그 사이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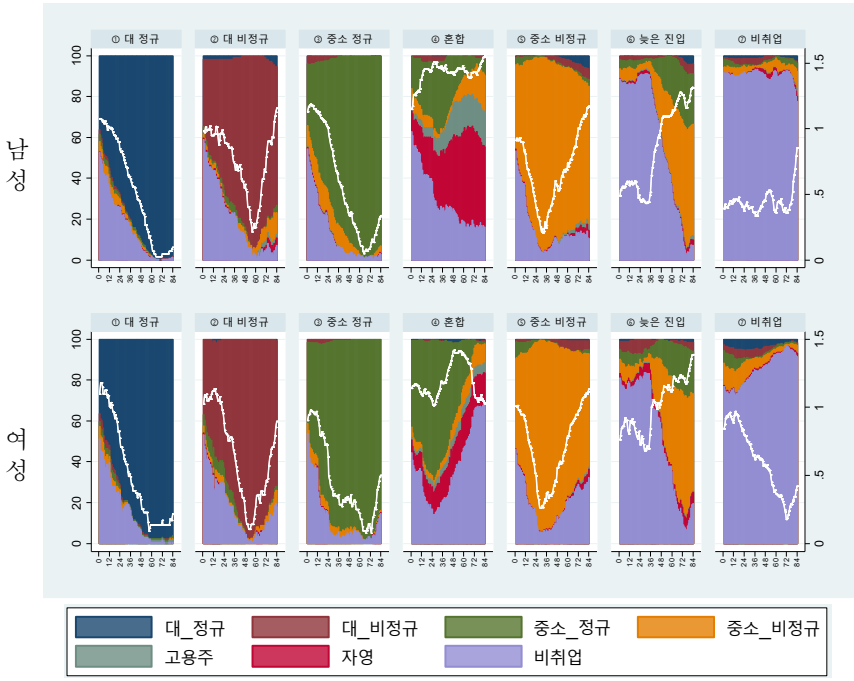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 <그림 4-16>이다. 시점별 상태 분포로 보면 가장 안정적인 유형이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과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형’이다. 선 그래프로 표시한 엔트로피 값을 보면,[118]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의 경우 졸업 후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성이 높아져 졸업 후 5년부터는 매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 ‘중

118) 엔트로피 값은 특정 시점에서의 무질서 수준을 나타내는 값으로, 값이 크면 무질서 수준이 높다. 특정 시점에서의 지위가 어떤 한 상태로 확정되지 않고 여러 상태의 혼합으로 구성되는 경우다.

소기업 정규직 지속형'도 마찬가지다. 진입 유예기간은 중소기업형이 대기업형보다 짧다.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혼합형'의 성격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 이 그림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남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영업(고용주) 상태 비중이 커진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상태 비중도 늘어난다. 중소기업 정규직 상태 비중이 줄어든다. '비취업→고용주' 이력과 '중소기업 정규직→중소기업 비정규직' 이력이 주된 이력임을 알 수 있다. 여성은 '중소기업 정규직→비취업' 이력이 주된 이력이다.

<그림 4-16> 노동이력 유형별 특징(지위 단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중소기업 비정규직 늦은 진입형'은 정규직 지속형에서 나타난 패턴과는 반대로 취업 상태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불안정성이 커지는 패턴을 보인다. 이것은 '취업 상태'가 여러 종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남녀 차이를 정리하면, 여성은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과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형'을 제외한 모든 노동이력 유형에서 이력 후반부에 비취업 상태로 전환되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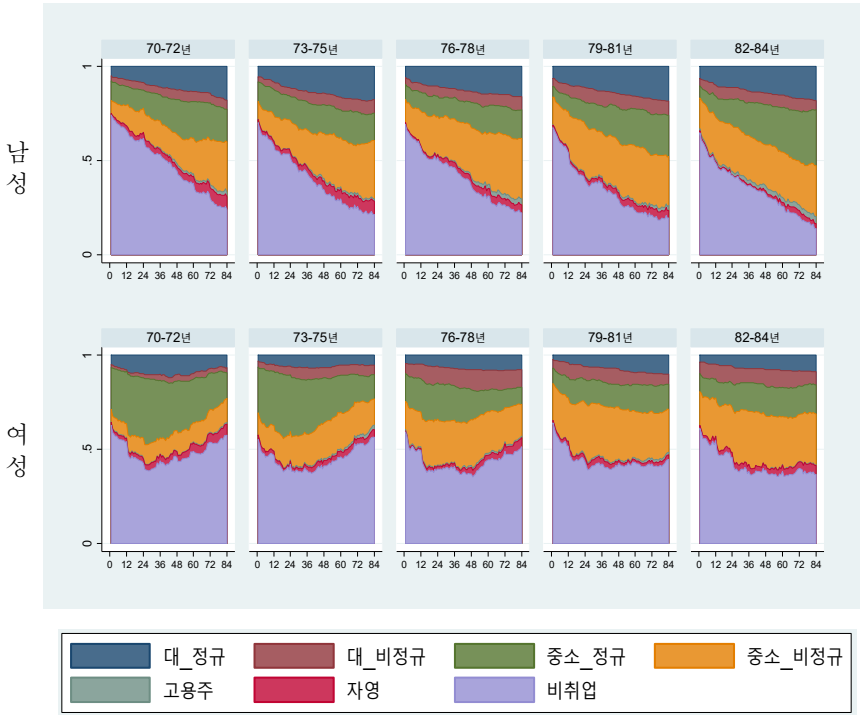
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이 경향은 '혼합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중소기업 비정규직형과 대기업 비정규직형, 비취업 지속형에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유형이 같더라도 이력 구성이 성별에 따라 일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2) 노동이력의 변화

### (1) 임금노동자화와 불안정화

이제 노동이력의 코호트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자. <그림 4-17>은 각 코호트에 속하는 이들이 졸업 후 7년간 거친 노동지위를 월별 분포로 나타낸 것이다. 졸업 시점 이후 1개월 차부터 84개월 차까지 월별로 각 코호트 중 몇 퍼센트가 특정 노동지위에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개인별 노동이력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청년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구조를 잘 보여준다(Halpin, 2017: 560-561).

<그림 4-17> 노동지위 분포 변화(성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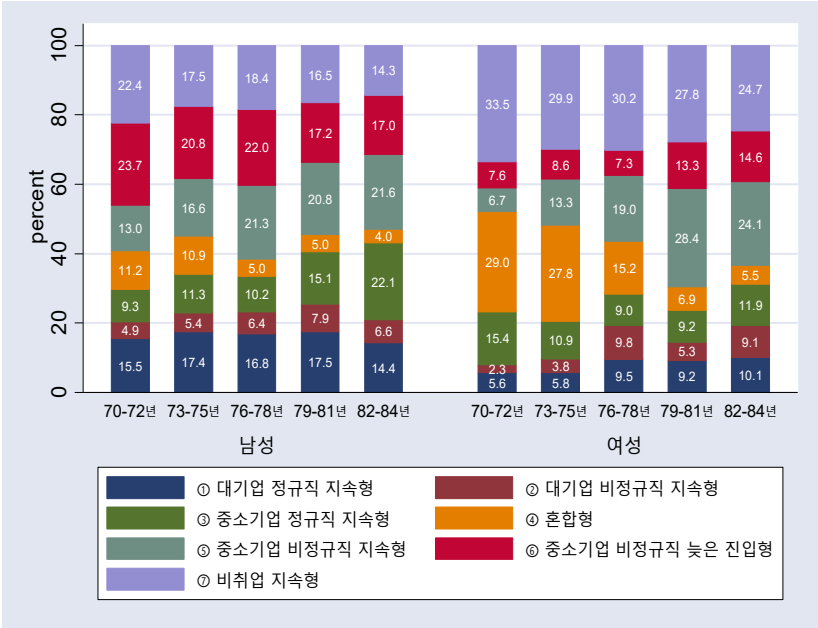
남성은 세부적으로 변했다. 졸업 후 초기의 비취업 비중이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줄었다. 주된 요인은 고졸자 감소와 군복무 기간 축소일 것이다. 고졸자는 졸업 후 곧 군복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비중은 점차 늘었다. 중소기업 정규직은 줄어들었다가 1976-78년생을 기점으로 늘어났다. 대기업 비정규직 비중은 완만하게 증가했다. 눈에 띄는 변화는 1982-84년생에게서 있었다. 비취업 비중이 크게 줄었고, 그 자리를 중소기업 정규직이 채웠다. 완만하게 늘던 대기업 비정규직 비중은 약간 낮아졌다.

여성은 졸업 직후 비취업 비중이 약간이지만 늘었다. 1976-78년생에서부터 늘어나 1979-81년생에서 가장 비중이 크다. 경제위기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호트로 오면 졸업 직후 비취업 비중이 남성과 비슷하다. 1970년대 초반생은 취업 상태 집적으로 형성된 봉우리가 이력 초기에 있었고, 봉우리의 폭이 좁고 가팔랐다. 최근 코호트로 오면 봉우리의 위치가 뒤쪽에 있고 폭도 넓고 경사도 완만하다. 1976-78년생까지 노동시장 참여 수준이 높아지면서 봉우리 규모는 커졌다. 그러나 1979-81년생으로 오면 봉우리가 사라졌다. 비취업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이 양상이 1982-84년생에게도 이어진다. 취업 상태 중에서는 비정규직 비중이 크게 늘었다. 1982-84년생의 졸업 후 7년 시점의 노동지위를 보면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23%, 중소기업 정규직이 20%, 대기업 정규직이 10%, 대기업 비정규직이 9%다. 1970-72년생과 비교하면, 임금노동 중 정규직 비중이 80.5%에서 48.8%로 크게 줄었다.

노동이력으로 보면 어떤 모습일까? <그림 4-18>는 7개 노동이력 유형의 구성비를 코호트별로, 성별로 구분해 나타낸 것이다.

남성부터 보자.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 비중은 큰 변화가 없다. 1970-72년생에서 15.5%였던 것이 1973-75년생, 1976-78년생, 1979-81년생에서는 17% 내외로 약간 증가했다가 1982-84년생으로 오면 줄어든다. '대기업 비정규직 지속형'은 1979-81년생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1982-84년생에서 약간 감소한다.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형' 비중은 꾸준히 늘었다. 특히 1979-81년생부터 증가 폭이 크다. 자영업 이력이 다수인 '혼합형' 비중은 1970-72년생의 11.2%에서 1976-78년생의 5%로 줄었고, 이후 코호트에서도 이 비중이 유지된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속형'은 1970-72년생의 13.0%에서 1976-78년생의 21.3%로 늘었고, 이후 코호트에서는 이 비중이 유지된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늦은 진입형'은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비취업 지속형' 또한 완만하게 감소했다.

<그림 4-18> 노동이력 유형별 비중 변화(성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다음은 여성이다.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은 1970-72년생의 5.0%에서 1976-78년생의 9.5%로 늘었고, 이후 코호트에서도 이 비중이 유지된다. '대기업 비정규직 지속형'의 경우 1970-72년생의 2.3%와 1973-75년생의 3.8%에서 1976-78년생의 9.8%로 크게 늘어났다. 1979-81년생에서는 5.3%로 다소 줄었으나 1982-84년생에서는 9.1%로 다시 늘어났다.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형' 비중은 1970-72년생의 15.4%에서 1976-78년의 9.0%로 다소 줄었고, 이 비중이 이후 코호트에서도 유지된다. 눈에 띄는 변화는 중소기업 정규직 퇴장형으로 볼 수 있는 '혼합형' 비중 감소와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속형'의 증가다. 1970-72년생에서 29%였던 '혼합형'은 1976-78년생에서 15.2%로, 1982-84년생에서 5.5%로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1970-72년생에서 6.7%였던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속형'은 1976-78년생에서 19.0%로, 1982-84년생에서 24.1%로 크게 늘어났다. 다른 유형의 비중 변화 폭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혼합형'의 감소와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속형'의 증가는 대응하는 추이로 보인다. 중소기업 정규직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이력이 중소기업 비정규직을 지속하는 이력으로 대체된 것이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늦은 진입형'은 최근 두 코호트에서 늘어났다. 1970-72년

생에서는 7.6%였고 1976-78년생에서는 7.3%였던 것이 1979-81년생에서 13.3%로, 1982-84년생에서 14.6%로 늘어났다. 이 유형에 짧은 공백 기간을 가진 재취업 이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유형의 증가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추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취업 지속형' 비중은 1970-72년생의 33.5%에서 1976-78년생의 30.2%, 1982-84년생의 24.7%로 완만하게 줄어들었다.

종합해보자. 남녀 모두 비취업 이력이 줄었다. 남성은 자영업 이력이 줄었다. 여성은 노동시장 퇴장 이력이 대폭 줄었다. 결국 남녀 모두 임금노동시장 참여 수준이 높아졌다.[119] 늘어난 노동시장 참여는 어떤 이력으로 전환되었을까. 여기서 남녀 차이가 생겨난다. 남성은 대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이력 비중이 일정한 가운데 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이력 비중이 커졌다. 그 중 중소기업 정규직 이력 증가 폭이 컸다. 여성은 대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이력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이력 비중이 커졌다. 대기업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이력 모두 늘어났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규직 이력 비중은 줄고, 비정규직 이력 비중이 대폭 늘어났다. 여성에게서 특징적인 점은 대기업 정규직 이력과 대기업 비정규직 이력, 중소기업 비정규직 이력 모두 1970년대 초중반생에서는 주된 이력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여성 노동시장의 분화 경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남성에 비해 노동이력 변화의 폭이 컸음을 시사한다.

### (2) 교육 수준별 차이 확대, 남녀 차이 축소

앞에서 기술한 변화의 성격을 파악하려면 변화를 교육 수준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 수준의 1차 의미는 인적자본 수준이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교육 수준의 또 다른 의미는 노동시장 진입 시점이다. 진입 시점에 따라 경제위기의 충격을 다른 방식과 수준으로 경험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4-19>는 노동지위 분포의 코호트별 차이를 고졸과 전문대졸, 대졸로 구분해 보여준다.

남성은 교육 수준별 차이가 크다. 고졸자부터 보자. 취업 상태 비중이 급증하는 시점은 졸업 후 2-3년이다[<그림 4-19>의 1-(1)]. 군복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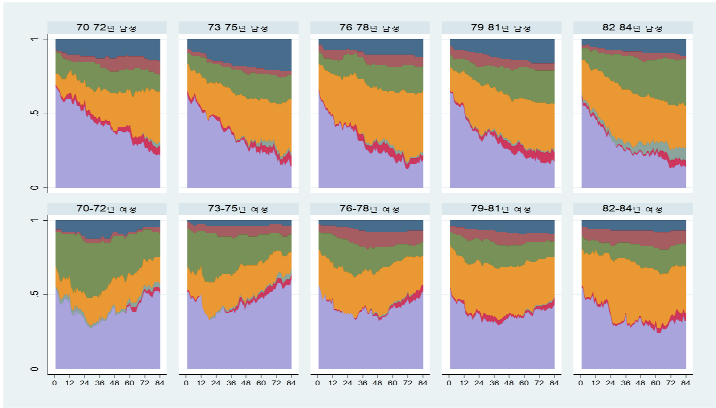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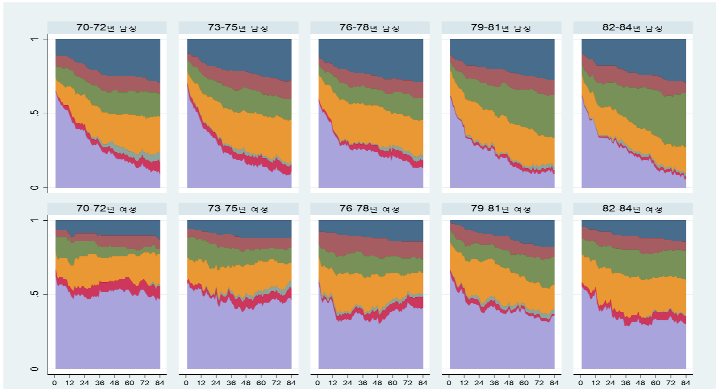
---

119) 이런 추이는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 참여 수준이 낮아졌다는 통념과 다르다. 다른 자료로도 같은 추이가 확인된 바 있다. 우해봉·윤인진(2008)은 청년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해 경제위기 이후에 졸업한 청년이 그 전에 졸업한 청년보다 첫 일자리 획득 기회가 높다고 보고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로 1965-79년 코호트의 20-31세 이력을 비교한 박성재의 연구도 코호트별 추이를 비슷하게 보고한다(박성재, 2014: 156-157). 물론 이것이 '좋은' 일자리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패널자료를 분석한 후속 연구(Woo and Yoon, 2010)에서 우해봉과 윤인진은 위기 이후 취업 가능성 상승이 고학력층에 한정된 것임을 밝혔다. 그들은 학력 차이는 남성에게서만 확인되었다는 점과 학력과 관계없이 위기 이후 일자리 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졌다는 점도 보고한다.

노동시장 참여 수준에서는 코호트별 차이가 크지 않지만, 지위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다. 경제위기 이전에 졸업한 1970-72년생과 1973-75년생은 취업 상태의 다수가 중소기업 정규직이었고, 시간이 지나서도 이 상태가 일정 수준 유지되었다. 대기업 정규직 상태도 일부 확인된다. 변화는 경제위기 직전에 졸업한 1976-78년생부터 나타난다. 졸업 후 3년째 되는 시점, 그러니까 취업 상태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점부터 늘어난 것은 중소기업 비정규직 상태다. 경제위기 이후에 졸업한 1978-81년생과 1982-84년생으로 오면 졸업 직후부터 대부분 중소기업 비정규직으로 진입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소기업 정규직과 대기업 비정규직도 등장하나 비중은 매우 작다. 1970-72년생과 1973-75년생에게서 일정 비중으로 있었던 자영업 상태 감소 또한 주요 변화다.

전문대졸자는 노동시장 참여 수준이 높아졌다[<그림 4-19>의 2-(1)]. 취업 상태의 구성은 바뀌었다. 1970-72년생의 경우 대기업 정규직 상태 비중이 꽤 있었고, 1990년대 초에 졸업한 1973-75년생에서는 그 비중이 더 늘어났다. 그러나 1976-78년생으로 오면 비중이 대폭 줄어든다. 1979-81년생에서 비중이 늘어나고 1982-84년생에서는 다시 줄어드는 등 이후의 추이는 일관되지 않다. 대기업 비정규직 비중은 일정하다. 전문대졸자의 노동시장 참여 수준 증가는 중소기업 상태의 증가로 설명된다. 1976-78년생까지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상태 증가가 주된 변화였으나 1979-81년생과 1982-84년생에서는 중소기업 정규직 상태의 증가가 눈에 띈다. 특히 1982-84년생에서 중소기업 정규직 상태 비중이 큰데, 이는 2000년대 후반 이후 비정규직 관련 법제 정비 등(도재형, 2016)으로 비정규직 규모가 줄어든 추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소기업 정규직 상태 비중 증가의 일정 부분은 대기업 정규직 상태 감소와 조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9> 노동지위별 비중 변화(성별·교육 수준별)

| | | |
|---|---|---|
| 1. 고졸 | (1) 남 | |
| | (2) 여 |  |
| 2. 전문대졸 | (1) 남 |  |
| | (2) 여 |  |
| 3. 대졸 | (1) 남 |  |
| | (2) 여 |  |
| | | 대_정규, 대_비정규, 중소_정규, 중소_비정규, 고용주, 자영, 비취업 |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대졸자는 고졸자와 전문대졸자에 비하면 안정된 양상을 보인다[<그림 4-19>의 3-(1)]. 코호트 간 차이도 크지 않다. 전반적으로 노동시장 참여 수준이 높아졌다. 대기업 정규직은 최근 두 코호트에서 약간 줄었으나 기본 규모는 유지한다. 고졸자나 전문대졸자에 비해 대기업 비정규직 상태가 일정 규모로 있다. 대졸자에게서 나타난 주된 변화는 중소기업 정규직 상태 비중 증가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상태는 줄어들었다.[120] 앞어 언급한 2000년대 후반 비정규직 규모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집단이 4년제 대졸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앞의 세 코호트에서 일정 비중으로 있던 자영업 상태 감소도 주요 변화다.

여성은 남성보다는 학력별 차이가 크지 않다(Woo and Yoon, 2010). 그럼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고졸자부터 보자. 코호트에 따른 변화가 크고 일관된다[<그림 4-19>의 1-(2)]. 1970-72년생은 대부분 정규직으로 진입했다. 상당 비중은 대기업 정규직이었다. 물론 2-3년을 기점으로 노동시장에 퇴장하는 경향으로 인해 뚜렷한 봉우리가 형성되어 있다. 1973-75년생에서도 이런 구조가 유지된다. 그러나 이 코호트에서 변화 조짐이 나타난다. 졸업 직후 시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졸업 후 4-5년이 되는 시점(1997년 경제위기 시점과 대략 일치한다)부터 대기업 정규직 상태 비중이 줄고, 대기업 비정규직 상태가 등장한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비중도 점차 증가한다.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추이도 이때부터 본격화되어 7년 시점에서는 대기업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주를 이룬다. 1976-78년생으로 오면 변화가 또렷해진다. 졸업 직후 취업 상태 비중이 다소 줄었고, 구성에서도 (대기업/중소기업) 비정규직 비중이 커졌다. 7년에 걸쳐 보면 노동시장 참여 수준이 낮아졌다. 그러면서 봉우리가 완만해졌다. 이런 추이는 1979-81년생과 1982-84년생에서도 이어진다. 1982-84년생에서는 노동시장 참여 수준이 낮은 가운데 비정규직 상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전문대졸자의 양상도 고졸자와 유사하다. 노동시장 참여 수준은 고졸자보다 전반적으로 높다[<그림 4-19>의 2-(2)]. 그러나 최근 코호트로 오면서 정규직 지위 비중이 줄고 비정규직 지위 비중이 늘었다. 1990년대 중후반에 노동시장에 나온 1973-75

120) 대졸자 내부의 차이도 감안해야 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4년제 대학정원이 급증하면서 상위권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의 사회적 지위 차이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 차이는 노동시장 성과 차이로 이어졌다. 2000년대 후반-2010년대 초중반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들을 대상으로 출신 대학 지위와 노동시장 성과를 확인한 한 연구는 상위권 대학(서울소재 4년제, KAIST, 포항공대)과 그렇지 않은 대학의 구별이 대략 대기업/중소기업 구별과 조응한다고 보고한다(이왕원·최지은·최율, 2017: 87). 나아가 같은 대기업 정규직이더라도 출신 대학의 지위에 따라 일자리의 지역(서울/지방)과 직종(사무직/생산직)이 다를 수 있다(최율·이왕원, 2015: 34).

년생부터 불안정화 경향이 나타난다. 고졸자와의 차이라면, 전문대졸자는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노동시장 참여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참여 수준 증가분은 대개 중소기업 비정규직이었다.

대졸자는 앞의 두 집단과 모습이 다르다[<그림 4-19>의 3-(2)]. 1970년대 초중반생의 경우 전반적으로 노동시장 참여 수준이 낮은 가운데 봉우리가 없었다. 봉우리는 오히려 1970년대 중후반생에 와서 생겼다. 경제위기 국면에서 노동시장에 나왔다가 퇴장한 경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이상직·김이선·권현지, 2018: 158-159). 1980년대생으로 오면 노동시장 참여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봉우리가 다시 사라진다. 대졸자에 특수한 변화는 정규직 지위가 약간 늘었다는 것이다.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정규직 모두 늘었다. 반대로 비정규직 지위 비중은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대기업 비정규직은 1976-78년생에서 가장 컸으나 이후 점차 줄었다.

정리해보자. 첫째, 교육 수준별 차이는 평균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크다. 둘째, 남녀 모두 교육 수준별 차이가 최근 코호트로 오면서 커졌다. 교육 수준별 차이가 커진 것은 남녀 모두 고졸자 지위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남녀 모두 고졸자에서는 노동시장 참여 수준 자체가 낮아지는 추이 속에서 취업 상태 내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비중이 커졌다. 전문대졸자의 경우 남녀 모두 노동시장 참여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구성 측면에서는 지위가 낮아졌다. 지위 하락의 정도는 여성에게서 더 또렷하게 나타난다. 남성은 대기업 정규직 비중이 줄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비중이 늘었지만 중소기업 정규직 비중도 일정 수준 늘었다. 여성은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정규직 비중이 줄고 대기업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늘어났다. 즉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추이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대졸자의 경우 노동시장 참여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고, 구성 측면에서도 일관된 하락 추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남성의 경우 대기업 정규직 비중이 다소 줄었지만 중소기업 비정규직 비중도 줄었고, 중소기업 정규직 비중이 늘어났다. 여성은 중소기업 비정규직 비중이 늘어난 것과 동시에 대기업 정규직 비중도 약간이나마 늘어났고 중소기업 정규직 비중도 늘어났다.

교육 수준별 차이 증가는 교육 수준별 남녀 차이를 늘리거나 줄였다. 대졸자에서는 노동시장 참여수준이나 구성에서 남녀 차이가 줄었다. 전문대졸자의 경우 노동시장 참여수준에서는 남녀 수렴 경향이 나타나나 구성에서는 차이가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졸자의 경우 노동시장 참여 수준면에서는 차이가 커졌으나 구성면에서는 차이가 커졌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까지 살펴본 변화를 노동이력 유형 단위로 확인해보자(<그림 4-20>).

고졸자에서 노동시장 참여수준 감소 경향은 여성에서만 나타난다(<그림 4-20>의

1). 남성은 자영업 이력이 주가 되는 '혼합형'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121]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속형'이 크게 늘어났다.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형'도 상당히 줄었다.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은 1976-78년생을 기점으로 반등한다. 눈에 띄는 코호트는 1976-78년생이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늦은 진입형' 비중이 유독 큰데, 경제위기 국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여성에서도 1976-78년생은 변화의 전조를 나타내는 집단이다. 이때부터 '혼합형' 비중이 크게 줄고, 비정규직 이력 비중이 늘어난다. 이런 추이가 이후 두 코호트에서 강화된다.

노동지위로 고졸자 남녀를 비교하면서 노동시장 참여수준에서는 성별 차이가 커졌으나 구성에서는 성별 차이가 커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력으로 봐도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노동이력 그림에서는 구성면에서 남녀 수렴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형과 혼합형 비중이 대폭 줄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속형 비중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늦은 진입형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그 결과 남녀의 노동이력 유형별 분포가 유사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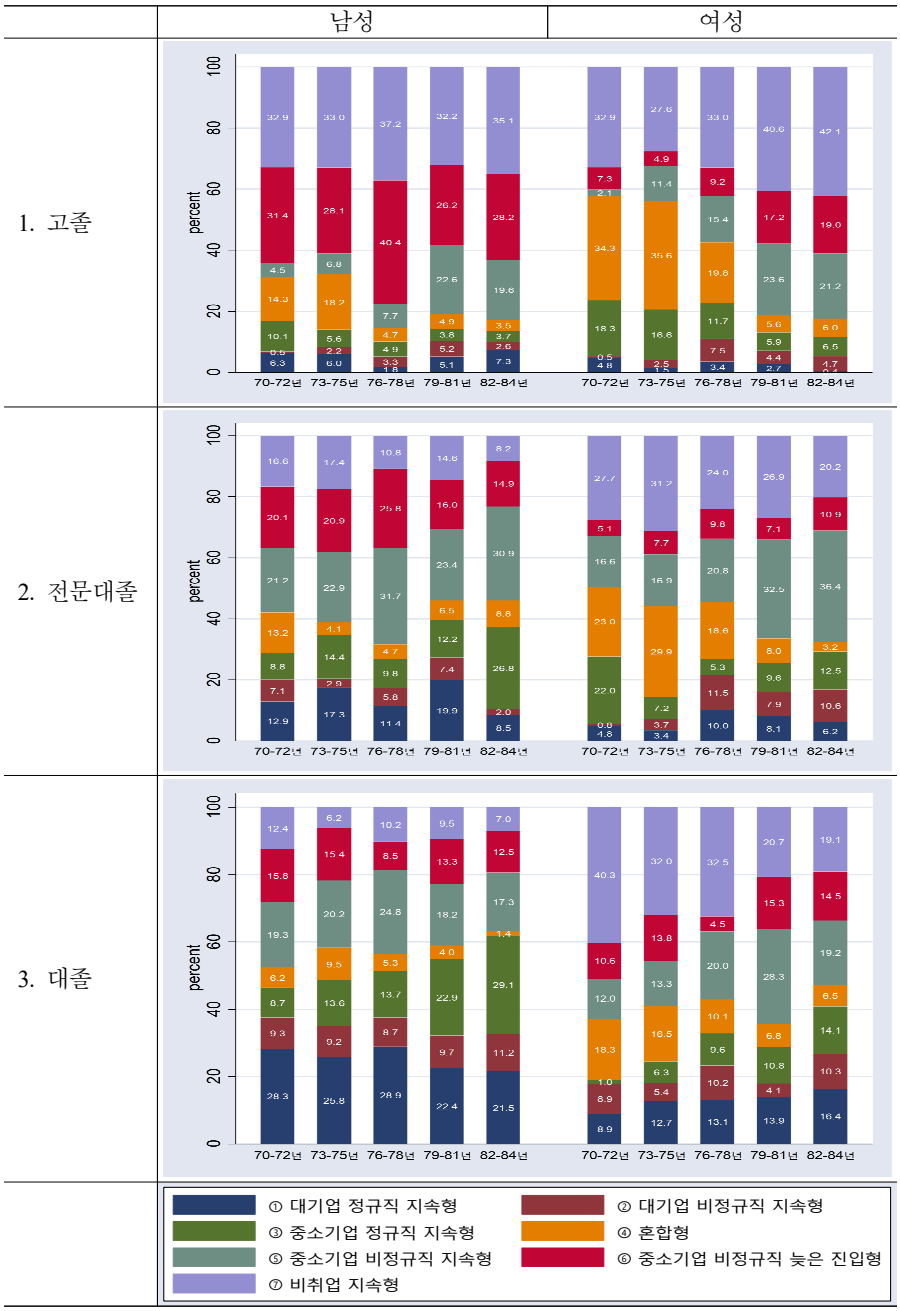
전문대졸자의 경우 노동지위 상태로 확인한 것과 같이 참여 수준의 상승 경향이 남녀 모두에서 나타난다(<그림 4-20>의 2). '혼합형' 비중 감소를 감안하면 참여 수준 상승 폭은 여성이 더 크다. 구성 측면에서 지위 하락의 경향 또한 나타난다. 남성은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 비중이 약간 줄었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속형' 비중은 상당히 늘었다.[122] 여성은 늘어난 참여의 대부분이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속형'과 '대기업 비정규직 지속형' 이력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 또한 1970년대 초중반생에 비하면 다소 늘어났다. 종합하면 지위 하락 경향이 나타나지만 가장 최근 코호트로 오면 하락세가 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121) '혼합형' 비중은 1973-75년생에서 다소 늘어난다. '혼합형' 비중 증가는 자영업 이력이나 중소기업 정규직에서 다른 상태로 전환한 이력이 증가했다는 뜻이다. 이것은 이 코호트가 졸업(1992-94년)한 후 5-6년 무렵에 경제위기를 맞은 효과를 반영한다.

122) 최근으로 오면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형' 비중이 1982-84년생에서 상당히 늘어나는 등 특정 경향이 또렷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림 4-20> 노동이력 유형 비중 변화(성별·교육 수준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마지막으로 대졸자다. 노동지위 상태로 확인한 것과 같이 노동시장 참여 수준의 상승 경향이 남녀 모두에서 나타난다. 특히 여성의 상승 폭이 크다. 여성의 상승 폭이 큰 것은 '비취업 지속형' 비중이 두드러지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노동지위 상태를 비교하면서 대졸자의 경우 취업 상태 구성면에서 지위 하락 추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이 그림도 이를 지지한다(<그림 4-20>의 3). 남성의 경우 '대기업 비정규직 지속형' 비중이 약간 줄었지만 1976-78년생을 기점으로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속형'도 줄었다. 대신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형'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대기업 이력 비중이 줄었다는 점에서 지위 악화 추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노동시장 참여수준이 높아진 가운데 비정규직 지속형 비중이 일정하다는 점에 주목하면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 여성의 경우 지위 하락 추이가 나타난다고 보기가 더 어렵다.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과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형' 비중이 상당 수준 늘어났기 때문이다. 물론 (대기업/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속형 비중 또한 늘어났으나 노동시장 참여수준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이를 악화 추이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특히 대졸자의 경우 최근 코호트로 오면서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속형' 비중이 남녀 모두 줄었다.[123] 정리하면, 적어도 1976-78년생까지는 불안정화 추이가 나타났다고도 볼 수 있으나 이후 코호트에서는 그런 추이가 멈추었거나 반등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1970-84년생의 노동이력에서 나타난 변화를 종합해보자. 고졸자는 노동시장 참여 수준이 줄었다. 특히 여성 고졸자가 그러했다. 남녀 모두 지위 하락 경향이 나타난 가운데 변화 폭 자체는 여성이 더 컸고, 남녀가 유사한 이력 구성을 보였다. 전문대졸자는 노동시장 참여 수준이 늘어났다. 특히 여성의 참여 증가 폭이 컸다. 이력 구성 변화로 보면 지위 하락 추이가 나타나고, 여기에서도 여성의 하락 추이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남녀 모두 최근 코호트로 오면 그 추이가 또렷한 하락세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서도 최근 코호트로 오면 남녀가 유사한 이력 구성을 보인다. 대졸자도 노동시장 참여 수준이 높아졌다. 여기에서도 여성의 참여 증가 폭이 컸고, 특히 비취업 이력의 감소폭이 컸다. 이력 지위 측면에서는 남성의 경우 '중소기업화' 경향이 나타났고, 여성은 대기업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이력이 동시에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것은 대졸자 여성 노동시장이 커지는 동시에 분화되는 것을 반영한다. 이런 변화를 종합하면, 교육 수준별 차이는 커진 반면, 남녀 차이는 줄어들었다.

---

123) 1979-81년생보다 1982-84년생에서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속형' 비중이 줄어든 것은 200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비정규직 규모가 줄어든 추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향은 대졸자에게서만 나타난다.

### (3) 변화의 양상: 코호트, 성별, 교육 수준

지금까지 졸업 후 7년의 노동이력이 코호트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남녀를 구분해 확인했다. 교육 수준별 차이도 확인했다. 이 절에서는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한다. 확인하려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이다. 첫째, 각 노동이력 유형에 속할 가능성의 남녀 차이가 코호트별로 다른가? 둘째, 각 노동이력 유형에 속할 가능성의 교육 수준별 차이가 코호트별로 다른가? 남녀 차이가 있는가? 셋째, 각 노동이력 유형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가족배경 효과가 코호트별로 다른가. 여기서도 남녀 차이가 있는가? 이들 질문은 성, 교육 수준, 가족배경 효과의 코호트별 차이를 보는 과제로 요약된다.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에 앞서 코호트, 교육 수준, 가족배경이 각 노동이력 유형에 속할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해보자(<표 4-4>). 남녀로 구분해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에 따른 분석을 실시했다. 종속변수는 각 노동이력 유형에 속할 확률이다.

코호트별 차이부터 확인하자. 남성의 경우 코호트별 차이가 유의미한 유형은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형'과 '혼합형',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속형'이다. 1982-84년생이 1970-72년생보다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1976-78년생과 1979-81년생, 1982-84년생은 1970-72년생보다 '혼합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속형'에 속할 가능성은 높다. 자영업 이력 비중이 일찍 줄었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이력 비중이 일찍 늘었으며, 최근에 중소기업 정규직 이력이 늘었다. 대기업 이력에 속할 가능성에서 코호트 간 차이는 없다.

<표 4-4> 각 노동이력 유형에 대한 선형확률모형 결과(성별*코호트)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
| | | 대 정규 지속형 | | 대 비정규 지속형 | | 중소 정규 지속형 | | 혼합형 | | 중소 비정규 지속형 | | 늦은 진입형 | | 비취업 지속형 | |
| 성별 | (남성) | | | | | | | | | | | | | | |
| | 여성 | -0.08*** | -0.08*** | -0.00 | -0.02 | -0.02 | 0.07** | 0.09*** | 0.17*** | 0.01 | -0.05** | -0.10*** | -0.17*** | 0.10*** | 0.08** |
| 코호트 | (70-72년) | | | | | | | | | | | | | | |
| | 73-75년 | -0.01 | 0.00 | 0.00 | -0.00 | -0.02 | 0.01 | 0.00 | 0.00 | 0.04** | 0.03 | 0.01 | -0.02 | -0.02 | -0.03 |
| | 76-78년 | -0.01 | -0.01 | 0.03** | 0.01 | -0.04* | 0.00 | -0.09*** | -0.05** | 0.09*** | 0.08** | 0.01 | -0.00 | -0.00 | -0.02 |
| | 79-81년 | -0.01 | -0.00 | 0.02 | 0.02 | -0.01 | 0.05 | -0.13*** | -0.05** | 0.13*** | 0.06* | 0.02 | -0.05 | -0.02 | -0.03 |
| | 82-84년 | -0.03 | -0.04 | 0.02 | 0.01 | 0.04 | 0.12*** | -0.13*** | -0.06*** | 0.12*** | 0.08** | 0.03 | -0.04 | -0.05 | -0.06 |
| 교육 수준 | (고졸이하) | | | | | | | | | | | | | | |
| | 전문대졸 | 0.06*** | 0.06*** | 0.03*** | 0.03** | 0.02 | 0.03 | -0.04** | -0.03** | 0.13*** | 0.13*** | -0.06*** | -0.07*** | -0.14*** | -0.14*** |
| | 대졸이상 | 0.14*** | 0.14*** | 0.05*** | 0.05*** | 0.03* | 0.04** | -0.07*** | -0.07*** | 0.08*** | 0.08*** | -0.07*** | -0.08*** | -0.16*** | -0.16*** |
| 가족배경 | | 0.01* | 0.01* | 0.00 | 0.00 | 0.01 | 0.01 | 0.00 | 0.00 | -0.02*** | -0.02*** | -0.01 | -0.01 | 0.01 | 0.01 |
| 성별* 코호트 | 여성#73-75년 | | -0.03 | | 0.01 | | -0.07* | | -0.01 | | 0.03 | | 0.04 | | 0.02 |
| | 여성#76-78년 | | 0.00 | | 0.05* | | -0.08* | | -0.07 | | 0.02 | | 0.03 | | 0.03 |
| | 여성#79-81년 | | -0.01 | | -0.01 | | -0.13*** | | -0.15*** | | 0.13*** | | 0.14*** | | 0.02 |
| | 여성#82-84년 | | 0.03 | | 0.04 | | -0.17*** | | -0.15*** | | 0.08 | | 0.15*** | | 0.02 |
| Constant | | 0.10*** | 0.10*** | 0.02** | 0.03** | 0.12*** | 0.08*** | 0.18*** | 0.14*** | 0.04** | 0.07*** | 0.24*** | 0.27*** | 0.30*** | 0.31*** |
| N | | 3,705 | 3,705 | 3,705 | 3,705 | 3,705 | 3,705 | 3,705 | 3,705 | 3,705 | 3,705 | 3,705 | 3,705 | 3,705 | 3,705 |
| R-squared | | 0.06 | 0.06 | 0.01 | 0.02 | 0.01 | 0.02 | 0.07 | 0.08 | 0.04 | 0.04 | 0.03 | 0.04 | 0.05 | 0.05 |

*** p<0.01, ** p<0.05, * p<0.1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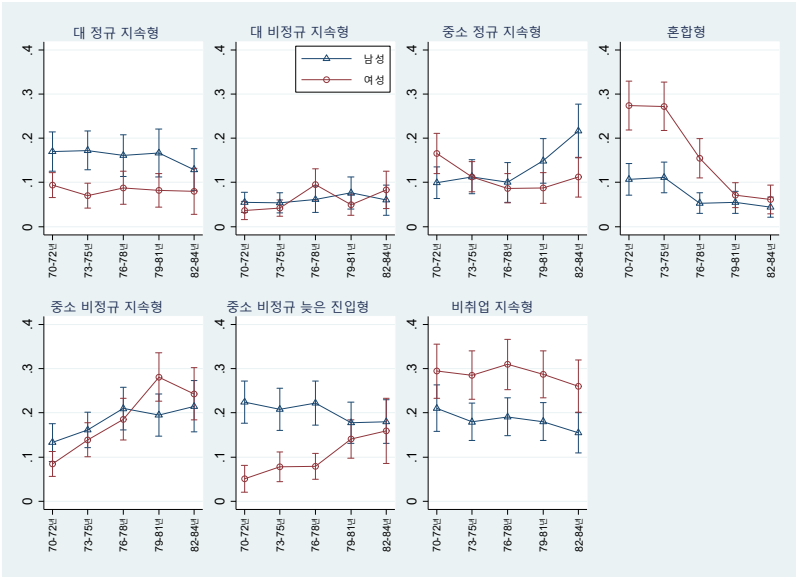
여성은 ‘대기업 비정규직 지속형’에 속할 가능성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속형’에 속할 가능성, ‘중소기업 비정규직 늦은 진입형’에 속할 가능성이 늘고 ‘혼합형’에 속할 가능성이 줄었다. 퇴장하지 않은 대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셈이다.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에 속할 가능성에서 코호트 간 차이는 없고,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형’에 속할 가능성은 오히려 일부 코호트에서 줄었다. <그림 4-18>에서 확인한 주된 변화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다만 앞에서 늘었다고 봤던 여성의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이나 줄었다고 봤던 여성의 ‘비취업 지속형’의 경우 코호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평균적으로 볼 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수준 증가는 주로 퇴장 이력의 감소로 설명되고, 증가한 노동시장 참여는 전적으로 (대기업/중소기업) 비정규직 이력으로 나타난 것이 된다.

교육 수준이 높으면 ‘비취업 지속형’이나 단속적 노동시장 참여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고 노동이력 지속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남성은 지속 이력을 구성하는 상태가 대기업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으로 다양한 반면, 여성은 대기업 정규직과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으로 한정되어 있다.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형’에 속할 가능성은 대졸자가 고졸자보다 낮다.

가족배경은 교육 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효과가 있다. 가족배경이 좋을수록 안정 이력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 불안정 이력에 속할 가능성이 낮다. 남성의 경우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속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고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에 속할 가능성이나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흥미로운 점은 ‘비취업 지속형’에 속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부모의 지원을 받아 장기간 취업 준비를 하는 이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여성의 경우 가족배경이 좋을수록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속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은 것은 남성과 같지만 남성과 달리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형’에 속할 가능성만 높다. 남성은 가족배경이 좋을수록 ‘중소기업 비정규직 늦은 집입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지만, 여성에서는 그런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종합하면, 코호트에 따른 변화의 수준은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고, 교육 수준이나 가족배경의 영향력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볼 때 각 노동이력 유형에 속할 가능성의 남녀 차이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림 4-21>은 교육 수준과 가족배경을 통제한 상태에서 코호트 효과와 성별 효과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보여준다. <표 4-4>의 모형 중 성별과 코호트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형[(2), (4), (6), (8), (10), (12), (14)]의 분석 결과에 기초한 것이다.

<그림 4-21> 각 노동이력 유형에 속할 기대 확률 변화(성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표 4-4>에서 확인했듯이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에 속할 가능성의 남녀 차이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다만 1976-78년생부터 성별 차이가 다소 줄어드는 경향이 보인다. 남성의 귀속 가능성이 낮아지면서다. '비취업 지속형'에 속할 가능성의 차이도 유지된다. '대기업 비정규직 지속형'에 속할 가능성에서는 남녀 차이가 크지 않고, 코호트별 차이도 크지 않다. 남녀 차이가 크게 줄어든 유형은 '혼합형'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늦은 집입형'이다. '혼합형'의 경우 여성의 귀속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면서 1979-81년생부터는 남녀 차이가 없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늦은 진입형'에서는 여성의 귀속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남녀 수렴 경향이 나타난다. 반면 남녀 차이가 커지는 경향이 나타난 유형은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형'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속형'이다.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형'에서는 남성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속형'에서는 여성의 가능성이 높아져, 최근에 와 차이가 커졌다.

이것은 노동경험에서 남녀가 갈라지는 지점이 변했다는 점을 나타낸다. 과거에는 노동시장 참여 여부로 남녀가 구분되었다면, 최근에는 중소기업 정규직이력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이력으로 구분되는 경향이 보인다. 노동시장 참여라는 형식적 측면에서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장 경험은 비슷해졌다. 그러나 고용형태라는 실질적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의 경험이 분화한 것이다.

<표 4-5> 각 노동이력 유형에 대한 선형확률모형 결과(남성, 교육수준*코호트)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
| | | 대 정규 지속형 | | 대 비정규 지속형 | | 중소 정규 지속형 | | 혼합형 | | 중소 비정규 지속형 | | 늦은 진입형 | | 비취업 지속형 | |
| | (70-72년) | | | | | | | | | | | | | | |
| | 73-75년 | -0.00 | -0.01 | -0.00 | 0.01 | 0.01 | -0.05 | 0.00 | 0.04 | 0.03 | 0.03 | -0.01 | -0.02 | -0.02 | -0.01 |
| 코호트 | 76-78년 | -0.02 | -0.06** | 0.00 | 0.02 | -0.01 | -0.05 | -0.05** | -0.09** | 0.07** | 0.04 | 0.01 | 0.10 | -0.01 | 0.03 |
| | 79-81년 | -0.01 | -0.02 | 0.02 | 0.04 | 0.04 | -0.06* | -0.06** | -0.09** | 0.06* | 0.19*** | -0.03 | -0.04 | -0.02 | -0.01 |
| | 82-84년 | -0.05 | -0.01 | 0.00 | 0.02 | 0.11*** | -0.06* | -0.06*** | -0.10*** | 0.08* | 0.17*** | -0.02 | -0.02 | -0.05 | 0.01 |
| | (고졸이하) | | | | | | | | | | | | | | |
| 교육수준 | 전문대졸 | 0.08*** | 0.05 | 0.02 | 0.06* | 0.08*** | -0.01 | -0.02 | -0.01 | 0.15*** | 0.18*** | -0.10*** | -0.10 | -0.21*** | -0.18*** |
| | 대졸이상 | 0.18*** | 0.20*** | 0.06*** | 0.08*** | 0.11*** | -0.02 | -0.04** | -0.07* | 0.10*** | 0.17*** | -0.16*** | -0.13** | -0.26*** | -0.22*** |
| 가족배경 | | 0.02* | 0.02** | 0.01 | 0.01 | -0.00 | 0.00 | -0.01 | -0.01 | -0.02* | -0.02* | -0.02* | -0.02* | 0.02* | 0.02* |
| | 전문대졸#73-75년 | | 0.06 | | -0.05 | | 0.10 | | -0.13** | | -0.02 | | 0.03 | | 0.02 |
| | 전문대졸#76-78년 | | 0.04 | | -0.04 | | 0.06 | | 0.01 | | 0.07 | | -0.04 | | -0.09 |
| | 전문대졸#79-81년 | | 0.09 | | -0.04 | | 0.10 | | 0.02 | | -0.17* | | 0.00 | | -0.01 |
| 교육수준 | 전문대졸#82-84년 | | -0.05 | | -0.07* | | 0.24*** | | 0.06 | | -0.06 | | -0.03 | | -0.10 |
| *코호트 | 대졸이상#73-75년 | | -0.01 | | -0.01 | | 0.09* | | -0.01 | | -0.02 | | 0.02 | | -0.06 |
| | 대졸이상#76-78년 | | 0.06 | | -0.03 | | 0.10 | | 0.08* | | 0.01 | | -0.17** | | -0.06 |
| | 대졸이상#79-81년 | | -0.04 | | -0.04 | | 0.21*** | | 0.07 | | -0.20** | | 0.02 | | -0.02 |
| | 대졸이상#82-84년 | | -0.07 | | 0.00 | | 0.27*** | | 0.06 | | -0.18** | | -0.01 | | -0.07 |
| Constant | | 0.08*** | 0.08*** | 0.03** | 0.01 | 0.04 | 0.10*** | 0.13*** | 0.14*** | 0.06** | 0.03 | 0.31*** | 0.29*** | 0.37*** | 0.34*** |
| N | | 1,879 | 1,879 | 1,879 | 1,879 | 1,879 | 1,879 | 1,879 | 1,879 | 1,879 | 1,879 | 1,879 | 1,879 | 1,879 | 1,879 |
| R-squared | | 0.06 | 0.06 | 0.02 | 0.02 | 0.04 | 0.05 | 0.02 | 0.03 | 0.03 | 0.04 | 0.04 | 0.05 | 0.09 | 0.09 |

*** p<0.01, ** p<0.05, * p<0.1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표 4-6> 각 노동이력 유형에 대한 선형확률모형 결과(여성, 교육수준*코호트)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
| | | 대 정규 지속형 | | 대 비정규 지속형 | | 중소 정규 지속형 | | 혼합형 | | 중소 비정규 지속형 | | 늦은 진입형 | | 비취업 지속형 | |
| | (70-72년) | | | | | | | | | | | | | | |
| | 73-75년 | -0.01 | -0.03* | 0.01 | 0.02* | -0.04 | -0.02 | 0.00 | 0.01 | 0.06** | 0.10*** | 0.01 | -0.02 | -0.02 | -0.05 |
| 코호트 | 76-78년 | 0.01 | -0.02 | 0.06*** | 0.07*** | -0.06** | -0.07 | -0.12*** | -0.15** | 0.11*** | 0.14*** | -0.00 | 0.02 | -0.01 | 0.00 |
| | 79-81년 | 0.01 | -0.02 | 0.02 | 0.04* | -0.06** | -0.13*** | -0.20*** | -0.29*** | 0.21*** | 0.23*** | 0.06** | 0.10** | -0.03 | 0.08 |
| | 82-84년 | 0.01 | -0.05** | 0.05** | 0.04 | -0.03 | -0.13*** | -0.21*** | -0.29*** | 0.17*** | 0.21*** | 0.07* | 0.12* | -0.06 | 0.10 |
| | (고졸이하) | | | | | | | | | | | | | | |
| 교육수준 | 전문대졸 | 0.03* | -0.00 | 0.03** | 0.00 | -0.03 | 0.03 | -0.05* | -0.12* | 0.11*** | 0.17*** | -0.03 | -0.02 | -0.07** | -0.05 |
| | 대졸이상 | 0.10*** | 0.04 | 0.03** | 0.08* | -0.05** | -0.19*** | -0.10*** | -0.17** | 0.07** | 0.13*** | 0.01 | 0.03 | -0.05 | 0.08 |
| 가족배경 | | 0.01 | 0.01 | 0.00 | 0.00 | 0.02* | 0.02* | 0.01 | 0.01 | -0.03** | -0.03** | -0.00 | -0.00 | -0.01 | -0.01 |
| | 전문대졸#73-75년 | | 0.02 | | 0.01 | | -0.13 | | 0.06 | | -0.10 | | 0.05 | | 0.09 |
| | 전문대졸#76-78년 | | 0.07 | | 0.04 | | -0.10 | | 0.11 | | -0.10 | | 0.03 | | -0.04 |
| | 전문대졸#79-81년 | | 0.06 | | 0.03 | | 0.01 | | 0.14* | | -0.07 | | -0.08 | | -0.09 |
| 교육수준 | 전문대졸#82-84년 | | 0.06 | | 0.06 | | 0.03 | | 0.09 | | -0.01 | | -0.06 | | -0.17 |
| *코호트 | 대졸이상#73-75년 | | 0.07 | | -0.05 | | 0.07 | | -0.03 | | -0.09 | | 0.06 | | -0.03 |
| | 대졸이상#76-78년 | | 0.05 | | -0.06 | | 0.15*** | | 0.06 | | -0.05 | | -0.08 | | -0.08 |
| | 대졸이상#79-81년 | | 0.07 | | -0.09* | | 0.22*** | | 0.17** | | -0.05 | | -0.05 | | -0.27*** |
| | 대졸이상#82-84년 | | 0.12* | | -0.03 | | 0.25*** | | 0.16** | | -0.12 | | -0.08 | | -0.30*** |
| Constant | | 0.03** | 0.05*** | 0.01 | 0.01 | 0.17*** | 0.19*** | 0.32*** | 0.35*** | 0.02 | 0.00 | 0.08*** | 0.07*** | 0.36*** | 0.32*** |
| N | | 1,826 | 1,826 | 1,826 | 1,826 | 1,826 | 1,826 | 1,826 | 1,826 | 1,826 | 1,826 | 1,826 | 1,826 | 1,826 | 1,826 |
| R-squared | | 0.03 | 0.03 | 0.02 | 0.02 | 0.01 | 0.03 | 0.08 | 0.09 | 0.06 | 0.06 | 0.01 | 0.02 | 0.01 | 0.02 |

*** p<0.01, ** p<0.05, * p<0.1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다음으로, 노동이력에 속할 가능성의 교육 수준별 차이의 변화를 확인하자. <표 4-5>와 <표 4-6>은 각 노동이력 유형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선형확률모형의 결과를 남녀로 구분해 보여준다. 특히 교육 수준과 코호트의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낸다.

<그림 4-22>는 각 노동이력 유형에 속할 가능성에 교육 수준과 코호트가 미치는 효과를 남녀로 구분해 보여준다. <표 4-5>와 <표 4-6>에서 교육수준과 코호트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형들의 결과에 기초한다. 그림을 알아보기 쉽도록 신뢰구간을 표시하지 않았다.[124)]

남녀 각각에서 나타난 교육 수준 효과의 변화 양상은 앞에서 본 성별 효과의 변화 양상과 유사하다. 특정 지점에서는 교육 수준별 차이가 줄어들고 특정 지점에서는 교육 수준별 차이가 생겨나면서 그 경계가 이동했다. 남성부터 보면, 1970-72년생이나 1973-75년생의 경우 교육 수준별 차이가 노동 지속형(전문대졸 이상)과 비취업 지속형·간헐 참여형(고졸)의 차이로 나타났다면, 최근 코호트에서는 그 차이가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형'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속형'의 차이로 나타난다. 여성도 마찬가지다.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았던 고학력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 교육 수준별 차이가 줄었다. 노동이력의 성격에서는 교육 수준별 차이가 커졌다.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에 속할 가능성에서 교육 수준별 차이가 커지는 추이나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형'에 속할 가능성에서 교육 수준별 차이가 최근 들어 역전되는 추이가 예다. 최근 코호트로 오면 '비취업 지속형'에 속할 가능성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종합하면 임금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교육 수준별 차이의 지점이 이동했다.

124) 따라서 이하에서 기술하는 경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향이 아닌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림 4-22> 각 노동이력 유형에 속할 기대 확률 변화(교육 수준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 3) 가족배경 영향력 변화로 본 계층화의 양상

지금까지 특정 노동이력에 속할 가능성의 남녀 차이가 코호트별로 달라졌는지 확인했다. 또 특정 노동이력에 속할 가능성의 교육 수준별 차이가 코호트별로 달라졌는가도 확인했다. 여기에서는 특정 노동이력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가족배경 효과가 코호트별로 달라졌는가를 확인한다.

<그림 4-23>은 가족배경 변수와 코호트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여준다. 가족배경의 효과가 코호트에 따라 커졌는지 줄었는지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족배경 효과의 성격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확인할 수 있다. x축은 코호트를 나타낸다. y축은 한계 효과(marginal effect)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0'이면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음수이면 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양수이면 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읽으면 된다. y축 값은 코호트별로 가족배경 변수 값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각 이력에 속할 가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나타낸다(Brambor et al., 2006).[125]

남성부터 보자. 신뢰구간으로 볼 때 코호트별 차이가 유의미한 경우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속형'에 대한 효과뿐이다. 초기 코호트에서는 가족배경이 좋을수록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속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최근 코호트에서는 해당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다. 유의미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일정한 변화 경향이 나타난 유형은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과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형', '혼합형'이다.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1970-72년생의 경우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에 대한 가족배경의 한계 효과는 0에 가까웠고, 유의미하지도 않았다.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영향력의 크기가 커졌고 경제위기 이후에 노동시장에 나온 1976-78년생부터는 신뢰구간도 0을 포함하지 않는 등 영향력이 유의미해졌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형'에서 나타나는 경향도 유사하다. 종합하면,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좋은 가족배경과 안정적인 이력에 진입할 가능성과 맺는 관계가 강해졌다.

---

125) <표 4-5>와 <표 4-6>에서 제시한 가족배경 변수의 회귀계수 값과 유의도는 <그림 4-23>에서 코호트가 3일 때의 값 및 신뢰구간 정보와 같다. 일례로 남성에서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가족배경 회귀계수값은 0.2이고 유의미하다. 이 그림에서 직선으로 표시한 값이 대략 0.2이고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그 값은 유의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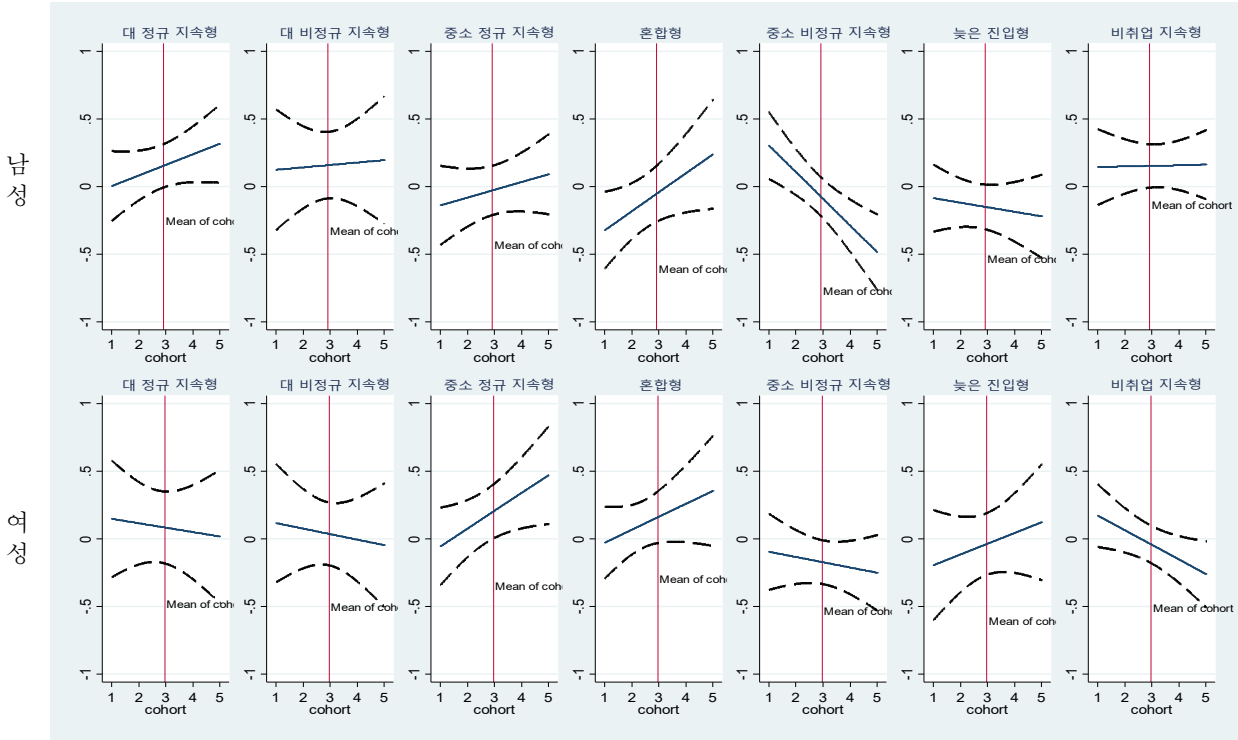
<표 4-7> 각 노동이력 유형에 대한 선형확률모형 결과(성별, 코호트*가족배경)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
| | | | | | 남성 | | | | | | | 여성 | | | |
| | | 대 정규 | 대 비정규 | 중소 정규 | 혼합 | 중소 비정규 | 늦은 진입 | 비취업 | 대 정규 | 대 비정규 | 중소 정규 | 혼합 | 중소 비정규 | 늦은 진입 | 비취업 |
| | (70-72년) | | | | | | | | | | | | | | |
| | 73-75년 | -0.00 | -0.00 | 0.02 | 0.01 | 0.00 | -0.01 | -0.03 | -0.01 | 0.01 | -0.03 | 0.01 | 0.05** | 0.01 | -0.04 |
| 코호트 | 76-78년 | -0.01 | 0.00 | 0.01 | -0.04** | 0.05 | 0.01 | -0.01 | 0.01 | 0.06*** | -0.05 | -0.10*** | 0.10*** | 0.00 | -0.03 |
| | 79-81년 | -0.01 | 0.02 | 0.05* | -0.04** | 0.03 | -0.04 | -0.01 | 0.00 | 0.02 | -0.06** | -0.19*** | 0.19*** | 0.06** | -0.03 |
| | 82-84년 | -0.06* | 0.00 | 0.11*** | -0.05*** | 0.07 | -0.03 | -0.04 | 0.02 | 0.05** | -0.04 | -0.21*** | 0.19*** | 0.06* | -0.06 |
| | (고졸이하) | | | | | | | | | | | | | | |
| 교육수준 | 전문대졸 | 0.08*** | 0.02 | 0.09*** | -0.01 | 0.14*** | -0.11*** | -0.21*** | 0.03** | 0.03** | -0.02 | -0.05* | 0.11*** | -0.03 | -0.08** |
| | 대졸이상 | 0.18*** | 0.06*** | 0.12*** | -0.03* | 0.09*** | -0.16*** | -0.26*** | 0.10*** | 0.03** | -0.05** | -0.10*** | 0.07** | 0.01 | -0.05 |
| 가족배경 | | 0.01 | 0.01 | -0.05*** | -0.04** | 0.05** | 0.00 | 0.02 | 0.00 | 0.00 | -0.01 | -0.02 | -0.01 | -0.01 | 0.05 |
| | 73-75년#가족배경 | 0.01 | -0.00 | 0.08*** | 0.03 | -0.05 | -0.04 | -0.02 | -0.01 | -0.01 | 0.04 | 0.05 | -0.02 | -0.00 | -0.04 |
| 코호트* | 76-78년#가족배경 | -0.00 | 0.01 | 0.07*** | 0.05*** | -0.09*** | -0.03 | -0.00 | 0.01 | 0.00 | 0.01 | 0.01 | -0.01 | 0.01 | -0.04 |
| 가족배경 | 79-81년#가족배경 | -0.00 | 0.01 | 0.02 | 0.06*** | -0.11*** | -0.01 | 0.03 | 0.02 | -0.02 | 0.05* | 0.04 | 0.01 | -0.00 | -0.10** |
| | 82-84년#가족배경 | 0.04 | 0.00 | 0.08** | 0.04** | -0.11*** | -0.03 | -0.02 | -0.02 | 0.01 | 0.06* | 0.05 | -0.06* | 0.04 | -0.08* |
| Constant | | 0.08*** | 0.02* | 0.02 | 0.11*** | 0.09*** | 0.32*** | 0.37*** | 0.03* | 0.01 | 0.16*** | 0.31*** | 0.03* | 0.08*** | 0.37*** |
| N | | 1,879 | 1,879 | 1,879 | 1,879 | 1,879 | 1,879 | 1,879 | 1,826 | 1,826 | 1,826 | 1,826 | 1,826 | 1,826 | 1,826 |
| R-squared | | 0.06 | 0.02 | 0.05 | 0.03 | 0.04 | 0.04 | 0.09 | 0.03 | 0.02 | 0.01 | 0.09 | 0.06 | 0.01 | 0.01 |

*** p<0.01, ** p<0.05, * p<0.1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그림 4-23> 각 노동이력 유형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가족배경 한계 효과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같은 추이가 여성에게서 나타난다. 가족배경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추이를 보이는 유형은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형'과 '비취업 지속형'이다. 가족배경이 좋을수록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 '비취업 지속형'에 속할 가능성은 낮다. 대기업 이력에 속할 가능성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대기업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가족배경이 비교적 동질적인 점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남성은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속형'에서 가족배경 효과가 나타난다. 여성은 한 단계 낮은 수준인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형'과 '비취업 지속형'에서 가족배경 효과가 나타난다.

## 4. 소결

노동시장 이행 패턴의 역사적 변화라는 맥락에서 1970-84년생의 경험을 자리매김하면, 이들은 근대적 노동시장이 변화·해체하는 상황에서 이행했다. 물론 그 변화 양상은 한국 특유의 조립형 공업화 전략이라는 경로에 어느 정도 구속된 것이었다. 1970-84년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때는 한국의 고용체제가 이른바 '87년 체제'에서 '97년 체제'로 전환하던 시기였다. 1990년대 중반 이래 노동시장은 외부노동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식으로 기존의 노동시장 분절을 강화했다.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 비중이 줄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었다. 노동시장의 분절 구도가 심화되면서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가 커졌다.

노동시장의 분절 심화와 유연화는 노동이행 국면의 불안정화와 연결된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진행된 급격한 서비스업화와 분절 노동시장 구조 심화는 전후 최초로 성인 이행기를 '문제화'했다. 더 많은 이들이 더 오래 공식 교육 기관에서 교육받으면서 더 많은 이들이 공식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특히 여성의 참여가 크게 늘었다. 이런 점에서 학교-노동시장의 연계는 표준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 경험과 그에 따른 기대에 맞는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학교-노동시장의 연계는 느슨해졌다. 그에 따라 이행의 경계가 불분명해졌다.

이들의 노동이력에는 이러한 전환기적 성격이 또렷하게 드러난다. 통념과 달리 남녀 모두 임금 노동시장 참여 수준이 증가했다. 남녀 모두 '비취업 지속형'이 줄었다. 남성은 자영업 이력도 줄었다. 여성은 노동시장 퇴장 이력도 대폭 줄었다. 이런 의미에서 남녀의 노동시장 경험은 유사해졌다. 다만, 늘어난 노동시장 참여가 노동이력으로 전개된 양상은 남녀가 달랐다. 남성은 중소기업, 그 중에서도 정규직 이력 비중이 커졌고, 대기업 이력 비중은 유지되었다. 여성은 대기업 이력과 중소기업 비

정규직 이력 비중이 커졌다. 즉 상대적으로 남성의 변화 수준이 낮으며, 변화 성격도 동질적이다. 각 집단 내 이질화의 가능성은 여성이 크다. 그것은 교육 수준이나 가족배경에 따른 차이로 나타난다.

교육 수준별 차이는 남녀 모두에서 커졌다. 고졸자는 노동시장 참여수준이 낮아졌다. 특히 여성 고졸자가 그러했다. 참여한 이력의 지위 하락 경향도 나타난다. 전문대졸자는 노동시장 참여수준이 늘어났다. 특히 여성의 참여가 크게 늘었다. 이력의 지위는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지만 2000년대 후반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최근 코호트로 오면 또렷한 하락세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졸자도 노동시장 참여수준이 높아졌다. 여기에서도 여성의 참가 증가 폭이 크다. 이력 지위 면에서는 남성은 '중소기업화' 경향이 나타났고, 여성은 대기업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이력이 동시에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대졸자 여성 노동시장이 확장되는 한편, 분화되는 것을 반영한다. 이런 변화를 종합하면, 교육 수준별 노동시장 경험 차이는 커진 반면, 남녀 차이는 줄어들었다.

각 노동이력 유형에 속할 가능성의 남녀 차이가 코호트별로 변화한 모습에서는 노동경험에서의 성별 수렴 추이와 성별 분화 추이가 함께 드러난다. 과거에는 노동시장 참여 여부로 남녀가 구분되었다면, 최근에는 중소기업 정규직 이력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이력으로 구분되는 경향이 보인다. 노동시장 참여 측면에서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장 경험은 비슷해졌다. 그러나 고용형태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의 경험이 분화하고 있다. 다시 말해, 남녀 차이가 나타나는 경계가 이동했다.

남녀 각각에서 나타난 교육 수준 효과의 변화 양상은 성별 효과의 변화 양상과 유사하다. 남성의 경우 초기 코호트에서는 교육 수준별 차이가 노동 지속형(전문대졸이상)과 비취업 지속형·간헐 참여형(고졸)의 차이로 나타났다면, 최근 코호트에서는 그 차이가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형'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속형'의 차이로 나타난다. 여성도 마찬가지다.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았던 고학력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 노동시장 참여 수준에서는 교육 수준별 차이가 줄었다. 그러나 노동이력의 성격 측면에서는 교육 수준별 차이가 커지는 추이가 확인된다.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이나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형'에서 교육 수준별 차이가 커졌다.

가족배경의 영향력은 전반적으로 강화되었다.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좋은 가족배경과 안정적인 이력에 진입할 가능성의 관계가 강해졌다. 그러나 효과가 나타나는 지점의 남녀 차이가 있다. 남성은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속형'에서 가족배경 효과가 나타난다. 여성은 가족배경이 좋을수록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 '비취업 지속형'에 속할 가능성은 낮다. 대기업 이력에 속할 가능성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여성은 한 단계 낮은 수준

인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형’과 ‘비취업 지속형’에서 가족배경 효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 양상을 교육경험의 변화와 연결시켜보자. 임금노동시장 참여 수준의 증가는 교육 수준 증가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더 많은 사람이 공식 교육 기관을 거쳐서 임금노동시장으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교육제도와 노동시장의 연계가 공식화·표준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자리에 배치하는 고리로서 연계성을 말하면, 연계성은 오히려 낮아졌다. 노동시장 참여 증가의 대부분이 중소기업 비정규직 이력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남성 대졸자의 경우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형’ 비중이 상당하고, 일부 대졸자 여성의 경우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에 속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거칠게 말하면 남성은 비교적 동질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위 하락의 폭이 크지는 않았다고 말할 수 있고, 여성은 노동시장 참여라는 점에서는 비슷해졌지만 그 내용에서는 이질성이 점차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성별 차이의 변화 추이에서도, 교육 수준별 차이의 추이에서도, 가족배경에 따른 차이의 추에서도 나타난다.

평균적으로 볼 때 노동지위가 과거보다 낮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교육이행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동이행에서도 경쟁 구도가 일원화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결과는 보다 철저한 위계화이다. 경쟁의 일원화는 한편으로는 기존의 차이를 축소시켰다. 성별 차이가 대표적이다. 동시에 경쟁의 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그것이 교육 수준에 따른 것이든 가족배경에 따른 것이든) ‘차이’가 가시화되었다. 물론 성별 차이 축소 또한 탈성별화를 뜻한다기보다 재성별화에 가깝다. 이 모든 추이를 종합하면, 노동시장의 불안정화에 주목하기보다는 노동시장 참여의 보편화가 갖는 효과와 함의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생산 영역 이행 국면의 표준화와 위계화가 가족이행 국면 변화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본다.

# 제5장 가족이행 국면의 시장화와 이중화

4장에서는 학교-노동시장 이행 측면에서 1970-84년생의 노동이력을 확인했다. 이 장에서는 성인기 이행 국면을 규정하는 또 다른 차원인 가족이행 이력(이하 '가족이력')[126]의 변화를 확인한다. 고학력화와 재학기간 연장으로 학교에 머무르는 기간이 연장되었다. 임금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가운데 노동이력 자체는 불안정해졌다. 이들 추이는 가족이행 경로의 성격 변화와 어떻게 맞물려 있을까?

1절에서는 1970-84년생의 가족이행 패턴을 역사적 맥락에 자리매김하기 위해 1960년대 이래 가족이행 패턴의 변화를 분가와 결혼을 중심으로 개괄한다. 2절에서는 1970-84년생이 28-33세에 밟은 가족이력을 확인한다. 남녀 차이의 평균과 코호트별 변화 양상을 확인한다. 교육 수준별 차이의 평균과 코호트별 변화 양상을 확인한다. 이어서 노동이력 유형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가족배경의 영향력을 확인한다. 3절에서는 교육-노동시장-가족 제도가 연계되는 방식의 변화와 그와 연동해 성인기 이행 경로가 변화한 방식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함의를 도출해 볼 것이다.

## 1. 가족이행 패턴의 역사적 변화

가족이행 국면은 분가와 결혼을 매개로 구성된다. 분가는 원가족으로부터의 물리적·사회적 분리를 뜻하고, 결혼은 새가족으로의 물리적·사회적 통합을 뜻한다.[127] 이 절에서는 1970-84년생의 가족이행 패턴을 역사적 맥락에 자리매김하기 위해 1960년대 이래 가족이행 패턴의 변화를 분가와 결혼을 중심으로 개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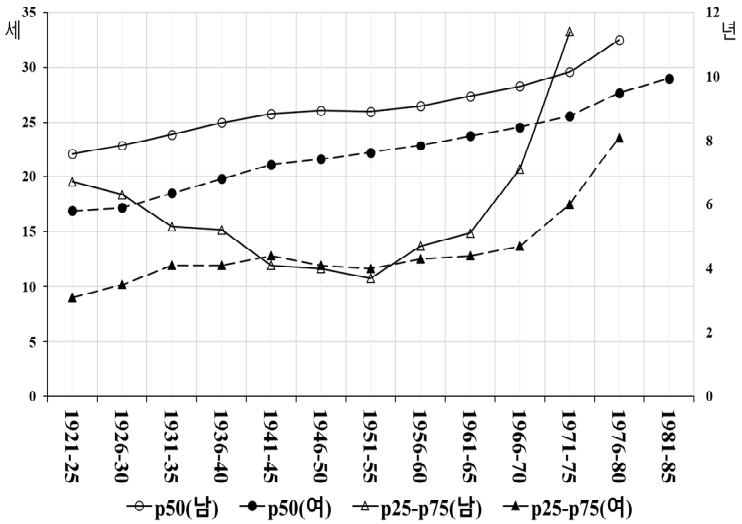
결혼 패턴을 출생 코호트별로 나타낸 <그림 5-1>을 보자. 가로축은 출생 코호트를

126) 영어로는 "family trajectories"(Aisenbrey and Fasang, 2017)라고 표현한다. 한국어로는 "가족경로"(이순미, 2017)라고 쓰기도 한다. 보통 '누구와 살고 있는가'로 측정한다. 거주형태(living arrangement) 배열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Elzinga and Liefboroer, 2007; Billari and Liefbroer, 2010).

127) 재생산의 의미를 고려하면 출산도 주요 사건이지만 여기서 출산은 다루지 않는다. 자료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한국에서 출산은 결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별도로 다룰 필요가 적기 때문이다. 한국은 분가와 결혼, 출산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결혼할 때까지 부모 집에서 머무르다가 결혼하면서 분가하는 가족이행 경로가 일반적이다(이병희 외, 2010: 172). 특히 결혼과 출산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서구에서는 높은 혼외출산율이 시사하듯이 결혼과 출산의 연계가 약하다.

표시하고, 세로축은 초혼 연령 중위값(왼쪽 축)과 결혼 이행기간(오른쪽 축)을 나타낸다. ○ 표식이 있는 선 두 개는 남성과 여성의 50%가 결혼했을 때의 연령을 표시한다. △ 표식이 있는 선 두 개는 동일 코호트의 25%가 결혼한 연령과 동일 코호트의 75%가 결혼한 연령의 차이를 표시한다. 초혼 연령 중위값은 결혼 시점의 평균 추이를 보여주고, 이행기간은 이행 구간의 압축 정도를 나타낸다.

<그림 5-1> 코호트별 결혼이행 패턴(1921-1985)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출처: 최선영(2020: 56-61)의 <표 2-3>과 <표 2-4>의 값으로 재구성

결혼 패턴의 변화로 구분할 수 있는 국면은 네 개다. 첫 번째 국면은 초혼 연령은 높아지고 이행기간은 좁혀지는 시기다. 1920-30년대생이 결혼했을 1940-50년대다. 두 번째 국면은 초혼 연령 상승세가 둔화되고 이행기간 감소세도 약해지는 시기다. 1940-50년대 초반생이 결혼했을 1960-70년대 중반이다. 세 번째 국면은 초혼 연령과 이행기간이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는 시기다. 1950년대 중반생-1960년대생이 결혼했을 197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이다. 네 번째 국면은 초혼 연령이 크게 높아지고 이행기간도 길어지는 시기다. 1970-80년대생이 결혼했을 1990년대 중반-2010년대다. 여기에서는 첫 번째 국면은 제외하고 전후 세 국면을 개괄한다.

### 1) 1960-1970년대 중반: 분가와 결혼의 결합

1960-70년대 중반 가족이행 패턴의 특징은 평균 이행 시점의 완만한 상승과 이행기간의 축소다. 이 시기에 '가족이행'을 경험한 코호트는 1940-50년대 초반생이다. 1960년대 초중반에 남성은 26세를 전후로, 여성은 23세를 전후로 분가하고 결혼했다.

분가 패턴부터 보자. 1960년대 한국인의 분가 패턴을 분석한 연구(Yi et al., 1994: 69)[128]는 1960-66년에 남성 25%가 분가한 시점을 20.9세로, 50%가 분가한 시점을 26.4세로, 75%가 분가한 시점을 30.2세로 보고한다. 75% 시점과 25% 시점의 차이는 9.3년이다. 여성은 각각 20.0세, 23.3세, 27.4세이고, 이행기간은 7.4년이다. 이 시기에는 16세 무렵에 분가한 남성이 상당수 확인(전체의 약 3%)된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 도시로 이주하면서 분가한 이들이다. 같은 모습이 여성에게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때만 해도 10대 중반 여성의 분가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혼 패턴에서도 평균 연령의 완만한 상승세와 이행기간의 축소 추이가 나타난다. 최선영(2020: 56)에 따르면, 1941-45년생 남성의 25%가 결혼한 시점은 23.8세였고, 50%가 결혼한 시점은 25.8세였으며, 75%가 결혼한 시점은 27.9세였다. 75%가 결혼한 시점에서 25%가 결혼한 시점을 뺀 결혼이행기간은 4.1년이었다. 이것은 1936-40년생의 5.2년보다 대폭 줄어든 것이다. 만 50세까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0.8%에 불과했다. 이런 패턴은 1951-55년생에서도 유지된다.

여성도 마찬가지다(최선영, 2020: 61). 1941-45년생의 25%가 결혼한 시점은 18.9세였고, 중위값은 21.1세였으며, 75%가 결혼한 시점은 23.3세였다. 75%가 결혼한 시점에서 25%가 결혼한 시점을 뺀 결혼이행기간은 4.4년이었다. 1951-55년생의 경우 각각 18.3세, 22.2세, 24.2세였고, 결혼 이행기간은 4.0년이었다. <그림 5-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행기간으로 보면, 여성은 남성과 달리 이전 출생 코호트와 큰 차이가 없다. 1960년대에만 해도 여성은 근대 교육제도와 노동시장에 편입되지 않았다.

그 전 시기와 비교할 때 1960년대의 특징은 분가와 결혼의 결합이다. 1960년대 이전에는 "결혼한 부부가 남편의 부모 및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한 후 일정 기간 이후 분가하는"(최선영, 2020: 109) 패턴이 적지 않았다. 물론 다수는 결혼하면서 분가했으나 원리상으로 장남 부부는 부모와 동거할 것이 기대되었다. 최선영(2020: 109)

128) 해당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과 미국, 프랑스, 스웨덴을 대상으로 1960-80년대 분가 패턴을 비교한다. 동아시아 국가와 서양 국가의 차이에 주목한다. 한국 사례에서는 1960-66년과 1975-80년의 분가 패턴을 보고한다.

은 자립하지 않고 결혼할 수 있었던 이 원리가 당시에 조혼과 보편혼의 결합을 가능하게 한 조건이었다고 평가한다. 결혼 후 부부가 신부 집에서 함께 살거나, 부부가 따로 살면서 신랑이 신부의 집을 비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노동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되기 시작한 1960년대로 오면 원리상으로도 결혼과 분가는 결합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1960-66년의 남성 분가 시점 중간값인 26.4세는 1960-1966년 평균 초혼 연령인 26.1세와 거의 같다. 여성의 분가 연령 중간값 23.3세와 같은 기간 평균초혼연령 22.2세도 큰 차이는 아니다. 분가와 결혼의 결합은 '자립'이 결혼의 전제라는, 결혼은 곧 자립이라는 의미가 이 시기에 자리잡았음을 시사한다.

### 2) 197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분가와 결혼 관계의 다양화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중후반은 근대적 의미에서의 보편혼이 자리 잡은 시기였다. 평균 결혼 연령의 상승도 멈추고, 이행기간도 더욱 단축된다. 그러나 1990년대로 오면 변화의 조짐 또한 나타난다.

1975-80년에 남성의 25%가 분가한 시점은 23.9세였고, 50%가 분가한 시점은 26.6세였으며, 75%가 분가한 시점은 29.4세였다. 75% 시점과 25% 시점의 차이는 5.5년이다(Yi et al., 1994). 1960년대 초중반과 비교했을 때 25% 시점이 약 3세 상승하고 75% 시점이 1세 하락하면서 이행기간이 대폭 단축되었다(9.3년→5.5년). 중간값은 거의 같다. 여성은 각각 20.4세와 23.5세, 26.5세로, 이행기간은 6.1년이다. 이행기간이 압축되었지만 여성은 75% 시점만 약간 당겨져, 압축 정도가 남성보다는 낮다(7.4년→6.1년). Yi et al(1994)은 1970년대에 분가이행기간이 압축된 것은 10대 중후반의 분가율이 현저하게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재학기간이 연장되고, 그러면서 10대 중후반의 취업이 줄어들어 분가율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 오면 여성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 도시로 이주한다. 그에 따라 10대 후반에 분가한 사례가 나타난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는 분가율 감소 추이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결혼 시점에서도 1970년대 중반-1980년대 후반은 전후 상승하던 결혼 연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드문 기간이었다. 1920-30년대에 완만하게 상승하던 결혼 연령은 1950년대에 와서 크게 상승한다(Kwon, 2007: 228).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 완만하게 상승한다.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중반에는 상승세가 멈춘다. 1980년대 초반에는 약간 낮아지기까지 한다. 여성의 결혼 연령은 이 시기에도 완만하게 상승한다. 그렇지만 남성의 결혼 연령 증가세가 멈추었다는 것은 1970년대 중반-1980년대

중반이 결혼의 규범성·가능성이 최고조에 이른 시기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시기에는 모두가 결혼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실제로 거의 대부분이 비교적 정해진 시기에 결혼했다. 결혼 연령은 1980년대 후반부터 다시 완만하게 증가했고 2000년대에 와서 가파르게 증가했다(KOSIS).

1970년대 후반-1990년대 중반은 보편혼 체제가 자리 잡은 시기였다. 결혼율은 1970년대 초반부터 증가해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초반에 정점에 이른다.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를 계기로 급감한다. 이혼율 또한 1990년대 중반까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KOSIS).

모두가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면서도 결혼 시점은 일정 기간 연장되면서 등장한 것이 '미혼기'이다(최선영, 2020: 135). 1970-80년대는 생물학적으로 성인이 되었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기간, 또는 부모로부터 독립은 했지만 결혼은 하지 않은 기간이 의미 있는 생애 단계로 형성된 시기였다. 미혼기가 형성되려면 결혼 시점이 어느 정도 늦어야 하고, 결혼 시기는 어느 정도 압축(표준화)되어야 한다. 근대 교육제도와 노동시장의 형성은 농업사회에서 이루어지던 '조혼' 경향을 크게 제약했다. 취학률이 높아지면서 10대 중후반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었다. 1960년대 중반 이래 미혼 여성 노동시장이 형성되면서 학교를 졸업하고도 일정 기간 결혼하지 않은 기간을 보냈다(최선영, 2020: 142). 여성은 처음으로 10대 후반을 학생이나 임금노동자로 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그 전의 이력이 어떠했든 이 시기 여성 다수는 20대 초중반에 결혼했다. 이런 의미에서 10대 후반-20대 초반은 "결혼을 예비하는 기간"(최선영, 2020: 169)이었다.

미혼기가 형성되면서 결혼 관념도 변화했다. 연애가 미혼기를 구성하는 핵심 의미로 자리 잡았다(최선영, 2020: 173). 부모의 의사와 지원이 자녀의 결혼 선택에 여전히 영향을 미쳤지만 당사자의 선택이 강조되었고, 사랑이 중요시되었다. '교제 기간'이 등장했다. 대다수 여성에게는 비현실적인 경로였지만, 결혼하지 않는 삶이 가능성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맥락도 '선택론'이었다.

이 시기에 발달한 교육제도와 노동시장 제도에 따라 여성의 교육경험과 노동경험이 분화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결혼으로 수렴되었다. 취업기회 제약으로 대졸 여성도 졸업 후 곧 결혼했다(최선영, 2020: 171). 노동시장에 진입했더라도 결혼으로 탈출을 꿈꾸었다(최선영, 2020: 162). 여전히 다수가 결혼을 규범으로 내면화했다. 출산 행위 또한 표준화되었다(최선영, 2020: 231). 1975-84년에 결혼한 코호트는 첫 출산에서 마지막 출산을 평균 3.5년에 끝냈다. 1965-74년 결혼 코호트의 출산 기간보다 2년 줄어든 것이다. 결혼에서 마지막 출산까지의 기간도 7.2년에서 4.9년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이 추이가 199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다.

1990년대 초로 오면 변화의 조짐도 나타난다. 도시화와 산업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1980년대 후반으로 오면 보편혼 체제가 균열을 보이기 시작한다. 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이 시기에 결혼이행시기가 완만하게 확대되었다. 이행 시기의 앞쪽 구간(동일 코호트의 50%가 결혼한 시점에서 동일 코호트의 10%가 이행한 시점을 뺀 간격)이 늘어난 결과였다. 이전 시기에서 표준화된 형식의 보편혼을 가능하게 했던 도시 노동시장의 영향력이 보편혼을 약화시키는 힘으로 전환되었다(최선영, 2020: 174).

보편혼 체제의 균열은 '노총각' 문제에서 드러났다. 특히 '농촌총각' 문제가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에 크게 이슈화되었다.[129] 정부는 '결혼 주선' 계획을 추진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이후 나온 사회적 대책이 '국제결혼'이었다. 1990년대 중반에 본격화된 국제결혼은 1997년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주춤해졌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급증했다(KOSIS).[130] 남성의 고령 미혼이 경제적 취약성을 상징했다면, 1990년대에 들어 여성의 고령 미혼은 '능력'의 표시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 오면 새로운 결혼관과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담론이 증가하고 결혼관에 대한 변화도 나타난다(김소라, 2007).

결혼한 집단에서도 분화 현상이 관찰되었다. 분가와 결혼의 관계가 다양해졌다. 부계와 모계 양쪽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른바 '양계화' 현상이 한 예다. 산업화와 가족구조 변화에 대한 기존의 '핵가족화론'에 대한 반박으로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연구들은 중산층 가구를 중심으로 부부가족과 양쪽의 조부모 가족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위를 재생산하는 경향을 보고하기 시작했다(이재경, 2003; 박경숙·김영혜, 2005). 특히 이러한 관계의 주체가 중산층 부부 가구의 '고학력 여성'이라는 점이 주목받았다. 이런 현상은 분가와 결혼의 관계가 다차원적으로 결합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

129)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에서 "농촌 총각"으로 검색한 결과다. 꾸준하게 나온 기사 유형은 농촌 총각의 자살 보도였다. 농촌 남성의 결혼 문제는 예견된 것이었다. 개발 중심 경제는 농촌을 주변화했고 농촌 가족에서 큰 역할을 부여받지 못한 미혼 여성들은 도시로 떠났다(장경섭, 2018: 153-156). 농촌 여성의 이농을 추동한 것은 구조적인 요인이었다. 농촌 여성에게 농민 가족의 삶은 여성의 희생과 등식화되었다. 더욱이 1970-80년대에는 농촌 여성의 가사·생산 노동 부담이 뚜렷하게 늘어났다. 자녀 교육과 노인 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생산 노동력 부족으로 생산 노동 강도도 세졌기 때문이다. 이런 부담을 덜어줄 지역적 제도나 자원도 부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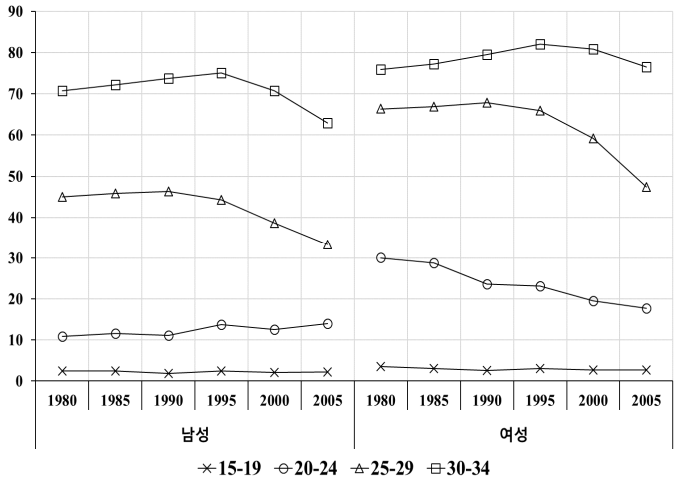
130) 국제결혼의 부작용이 사회문제화되면서 2000년대 후반에 관련 규제가 엄격해졌고, 이를 반영해 2010년대에 와서는 감소세를 보였다. 농촌가족의 생활주기 복원이라는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장경섭, 2018: 167). 그러나 최근에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 3) 1990년대 중반-2010년대: 분가와 결혼의 분리

1990년대 초중반에 나타난 결혼 행위 변화는 19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가속화된다. 경제위기는 가족의 물질적 자원을 공급하는 노동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듦으로써 결혼 제도를 흔들었다. 그러한 현실에 대한 대응으로 담론 수준에서는 '정상가족'에 대한 이념이 더욱 강화되었다. 가장으로서의 아버지 지위 상실에 대한 전 사회적인 위로 담론이 등장한 것이 한 예이다. 이러한 담론은 1990년대 초중반에 잠시 등장했던 '다양한 가족', '자유로운 개인' 이념을 위축시켰다(김소라, 2007).

청년층의 분가율은 남성과 여성 모두 1990년대 중후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그림 5-2>). 남녀 모두 2000년에 25-29세(1971-75년생)였던 이들부터다.

<그림 5-2> 연령대별 부모 비동거자 비중 추이(1980-2005)




자료: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출처: 이병희 외(2010: 157)의 <표 V-7>과 <표 V-8>

결혼 패턴에서 변화가 나타난 시점도 1970년대 초중반생이었다. 미혼율은 2000년과 2005년 사이에 가장 크게 상승했다. 남성은 2005년에 30-34세였던 이들(1970-74년생)에서, 여성은 2005년에 25-29세였던 이들(1975-79년생)에서 변화가 컸다. 2000년에는 40대 초반을 미혼으로 지내는 남성이 20명 가운데 1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5명 중 1명꼴로 늘어났다. 30대 초반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이들이 과반을 넘었다. 여성은 2000년에는 40대 초반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10명 중 1명이 되지 않았는데, 2015년에는 1명을 넘었다. 30대 초반에도 10명 중 4명은 결혼하지 않았다

(KOSIS). 2015년에 40-44세가 1970년대 초중반생이다. 1985년부터 완만하게 증가한 초혼 연령도 1997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가파르게 증가했다. 출산율도 가파르게 낮아졌다. 합계출산율이 1.5 밑으로 떨어진 것이 1998년이었는데, 초저출산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1.3 밑으로 떨어진 것은 불과 3년 후인 2002년이었다.

이 같은 변화는 가족이행 국면의 이질화를 낳았다. 이질화의 한 축은 성별이다. 보편혼 체제에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 결혼해 대략 30대에 오면 유배우자로서의 시간을 살았다. 2000년까지만 해도 30대 중후반에는 남녀 대부분이 결혼한 상태였다. 1960년대 초중반생까지다. 보편혼 체제가 깨지자 결혼 경험에서 남녀 차이가 나타났다. 2015년으로 오면 40대 초반에서도 남녀의 경험 차이가 상당하다. 여성은 9명 가까이 결혼을 했지만, 남성은 결혼한 이가 8명이 채 되지 않는다.

다른 한 축은 계층이다. 많은 이들이 가족 이행 경로의 이질화를 계층화로 이해한다. 그러나 계층화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연구를 검토하면, 남성은 교육 수준이나 직업, 가구 소득과 결혼 가능성이 맺는 정적 관계가 최근에 와서 더 강해졌다(이성용, 2013; Part et al., 2013). 그러나 여성은 교육 수준이나 직업, 가구 소득과 결혼 가능성의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고, 이것은 최근으로 와서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같은 서구 국가들에서는 결혼을 매개로 한 계층화 현상이 보고(Carbonne and Cahn, 2016[2014])되는 것에 반해 한국에서는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는 계층화가 심화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한국에서는 고학력, 상층 노동지위 여성의 결혼 가능성이 다른 학력과 직업 수준의 여성보다 높지 않다. 이것은 사회, 문화적 성차별 수준이 높아 고학력 여성이 결혼할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Bertrand, Cortés, Olivetti, and Pan, 2016). 물론 일부 연구들은 최근에는 여성에서도 학력과 결혼 가능성이 정적 관계로 전환되는 추이가 나타난다고(이성용, 2013; Part et al., 2013), 고용 지위와 결혼 가능성에서도 정적 관계로 전환되는 추이가 나타난다고 보고한다(Kim, 2017). 그러나 이들 연구는 추이 변화의 조짐을 보고하는 것으로, 그 결과를 잠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계층화의 추이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관찰해야겠지만, 결혼 시점 연장과 결혼율 감소가 '미혼기'의 의미를 재구성한 것은 분명하다. 결혼이라는 전제가 약해지면서 결혼을 예비하지 않는 '미혼기'가 '비혼기'로 전환된다.

결혼이행 과정이 가족배경과 더욱 밀접해지고, 결혼 이후 생활에서도 원가족 관계가 긴밀하게 작동한다는 최근의 보고를 감안하면, 분가(독립)와 결혼의 관계도 변화하고 있다(이재경·김보화, 2015). 상층에서는 결혼이 꼭 분가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층에서는 분가가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분가와 결혼의 연계가 약해진 것이다.

1970-84년생의 가족 이행은 이처럼 가족이행 경로의 재편이란 맥락에 놓여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행에 대한 관심이 생겨난 2000년대 중반 이래 이 변화를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한 시각은 비혼과 저출산을 사회재생산의 위기로 보는 시각이다. “가족자유주의적 개인과 가족들의 사회재생산에 관한 일종의 자기 부과적인 구조조정의 결과”(장경섭, 2018: 241)라는 진단이 대표적이다. 이 관점에서 비혼은 결혼을 ‘못한 것’이다. 남성에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결혼 가능성의 상관관계를 보면 이런 시각도 설득력이 있다. 다른 한 시각은 비혼 현상을 일종의 “조용한 혁명”(Goldin, 2006)의 한국식 버전(최선영, 2020)으로 본다.[131] 이 관점에서 비혼은 결혼을 ‘안한 것’이다. 고학력 여성의 비혼 경향은 이 시각에 설명된다.[132]

그러나 강제냐 의지냐를 구분하고, 각각을 ‘가족화’와 ‘개인화’ 경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한국의 변동을 이해하는 틀로 적절하지 않다. 두 시각이 서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는 둘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개인화 현상으로 보이는 것도 실은 가족관계의 맥락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김혜경, 2013; 김이선·박경숙, 2019). 가족화 현상으로 보이는 것도 실은 개인의 욕구 및 지위 추구 행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이재경, 2003; 박경숙·김영혜, 2005). 중요한 것은 변화의 추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변화의 시점과 성격을 좀 더 분명하게 파악하는 일이다. 그러려면 내부의 차이가 역사적으로, 또는 비교 사회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기술하고 해석하는 연구(박경숙, 2017b)가 필요하다. 코호트 간, 코호트 내 차이를 연결하는 틀이 필요하다(박경숙·김영혜·김현숙, 2005). 다음 절에서는 1970-84년생의 가족이력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

---

131) 최선영은 결혼 행위의 코호트 비교 연구에서 1970년대 출생 코호트를 ‘젠더 혁명’의 담지자로 규정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결혼적령기가 늦추어지기는 했지만 대다수 여성이 특정 연령대에서 결혼하는 적령기 자체는 1960년대생까지 유지되었다. 비혼 여성이 의미 있는 규모로 등장한 때는 1956-60년 출생 코호트다. 그럼에도 이들은 예외적이었다. 1970년생부터는 초혼 연령이 크게 높아지고 비혼 인구(50세 무렵 비혼 인구 비율로 비중을 측정)도 상당 수준으로 증가했다. 결혼하는 시기도 확장되었다. 이때부터는 특수 집단이 아닌 집단 전반의 행위 변화가 나타났다. “정상적인 결혼 지연 추세에서 이탈하여 결혼 이행 소요기간을 대폭 연장시킨 구간은 25.6세에서 38.7세였으며, 해당 시기는 1997-2001년에서 2010-2014년이었다(최선영, 2020: 191). 변화 시점은 1997년 경제위기 시점과 일치한다. 이러한 지연 추이는 2000년대 초반 이후에도 지속된다. 최선영은 이런 추이를 여성들이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징후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최선영, 2020: 195).

132) 각 진단에 대한 평가는 또 조금씩 다르다. 넓게 보면 ‘안 한다’는 입장에 있더라도 그 행위자를 “패러사이트 싱글”(야마다 마사히로, 2004[1999])로 볼 수도 있고, “개인화”(홍찬숙, 2015)하는 주체로 볼 수도 있다.

## 2. 1970-1984년생의 가족이력

### 1) 가족이력 구성

#### (1) 가족지위 구성

가족이력을 구성할 가족지위는 두 종류 가족관계의 조합으로 조작화된다. 하나는 부모와의 관계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관계이고 주어진 관계다. 같은 맥락에서 형제자매 관계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다. 배우자 관계와 자녀 관계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다른 관계지만 여기서는 같은 것으로 본다. 일정 부분 만든 관계, 선택한 관계라는 의미에서다.

가족관계 측정은 이 두 관계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서구에서는 자녀가 비교적 일찍 분가해 부모 관계가 가족이력에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는 반면,[133]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부모와 함께 지내는 기간이 길어 부모 관계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134] 서구에서는 동거나 혼외출산 등으로 배우자·자녀 관계가 공식과 비공식으로 구분될 수 있는 반면,[135]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그런 구별이 크게 의미가 없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관계와 배우자·자녀 관계를 고려해 <표 5-1>과 같이 7개 범주로 가족지위를 구성했다.

여기서 부모는 자신의 부모다. 범주 구분의 기준은 동거 여부다. 배우자/자녀 범주는 결혼 유무와 출산 유무로 판단한다. 동거 여부는 관계 없다. 자녀와 따로 사는 경우가 있지만 청년층에서는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136]

---

133) Aisenbrey와 Fasang(2017: 1458)은 미국인과 독일인의 가족이력(22-42세의 20년)을 비교하는 연구에서 파트너와 함께 사는지 여부(싱글/파트너)와 자녀가 있는지 여부(0, 1, 2 3+)를 조합해 가족지위 범주를 6개 만들었다. 이 범주 체계에서 부모 관계는 고려되지 않는다.

134) 한국인의 가족이력을 구성한 사례로는 이순미 연구(2017: 193)가 있다. 부모를 자신과 배우자로 구분하고, 조부모나 형제자매도 포함하는 등 상세히 구분해 총 9개 범주를 구성했다.

135) Sirnio 외(2017)는 1972년-1975년에 핀란드에서 태어난 남녀 23,915명의 20년치(16-37세) "가족형성경로"(family formation pathways)를 구성했다. 경로를 구성한 지위는 6개다. ① 부모 집에 거주, ② 싱글(홀로 살거나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경우), ③ 자녀 없이 동거하거나 결혼해 사는 경우, ④ 자녀가 있고 동거하거나 결혼해 사는 경우, ⑤ 편부모와 그의 자녀가 사는 경우, ⑥ 기타(시설 거주자 등 포함). 동거와 결혼을 묶었지만 일차적으로는 구별한다. 앞의 예(Aisenbrey and Fasang, 2017)와 달리 여기에서는 부모 관계도 고려했다.

136) 부모와의 관계는 생물학적 관계여서 '동거' 여부가 실질적인 의미 차이를 낳는다.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는 사회적 관계의 의미가 강해, 동거 여부가 중요한 차이를 낳지는 않는다. 서로 떨어져 살고 있더라도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더라도 배우자나 자녀의 존재가 한 사람의 라이프코스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표 5-1> 가족지위 구성 틀

| | | 배우자/자녀 | | | |
|---|---|---|---|---|---|
| | | 비혼 | 배우자 | 배우자+자녀 | 자녀 |
| 부모 (동거기준) | 혼자 | ② | ③ | ④ | ⑦ |
| | 부나 모 부모 | ① | ⑤ | ⑥ | |

① '부모'는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부모와 동거하는 상태를 뜻한다. ② '혼자'는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배우자나 자녀도 없이 혼자 생활하는 상태를 뜻한다. ③ '배우자'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를 뜻한다. 조사 당시 가구원에 포함되어 있으면 되고, 꼭 동거할 필요는 없다. ④ '배우자+자녀'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를 뜻한다. 조사 당시 가구원에 포함되어 있으면 되고, 꼭 동거할 필요는 없다. ⑤ '부모+배우자'는 배우자가 있으면서 부모와 동거하는 상태를 뜻한다. ⑥ '부모+배우자+자녀'는 배우자·자녀가 있으면서 부모와 동거하는 상태를 뜻한다. 배우자가 동거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⑦ '자녀'는 자녀와만 생활하는 경우를 뜻한다. 조사 당시 가구원에 포함되어 있으면 되고, 꼭 동거할 필요는 없다. 이 7가지 상태가 가족이력을 구성하는 가족지위다.[137)]

<표 5-2> 연령별 가족지위 분포

| | 28세 | 29세 | 30세 | 31세 | 32세 | 33세 | 평균 |
|---|---|---|---|---|---|---|---|
| ① 부모 | 29.4 | 25.7 | 22.5 | 19.7 | 17.3 | 15.3 | 21.7 |
| ② 혼자 | 14.2 | 14.5 | 14.5 | 13.9 | 14.1 | 12.9 | 14.0 |
| ③ 배우자 | 21.3 | 20.6 | 19.3 | 17.0 | 14.7 | 13.8 | 17.8 |
| ④ 배우자+자녀 | 28.7 | 33.7 | 38.3 | 44.4 | 49.3 | 53.4 | 41.3 |
| ⑤ 부모+배우자 | 1.4 | 1.0 | 1.0 | 0.6 | 0.6 | 0.5 | 0.8 |
| ⑥ 부모+배우자+자녀 | 4.8 | 4.3 | 4.1 | 4.1 | 3.6 | 3.6 | 4.1 |
| ⑦ 자녀 | 0.2 | 0.2 | 0.3 | 0.3 | 0.4 | 0.6 | 0.3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3,705) |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표 5-2>는 연령별로 각 가족지위의 비중을 나타낸다. 6년 평균을 보면, '배우자+자녀'와 함께 있는 경우가 41.3%로 가장 많다. 다음이 '부모'와 함께 있는 상태다(21.7%). '배우자'와 함께 있는 상태는 17.8%이고, '혼자' 있는 상태가 14.0%다. 예상

137) 가족지위 변수를 만들기 위한 자료 조직 절차의 상세 내용은 <부록 4>를 참조.

하듯이 ‘부모’와 함께 있는 상태의 비중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줄어들고(29.4%→15.3%), ‘배우자+자녀’와 함께 있는 비중이 늘어난다(28.7%→53.4%). 결혼하고도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상태 비중은 약 5%다.

### (2) 가족이력 유형화

가족이력의 시간 축은 연령이다.[138] 단위는 연이다. 이상적으로는 1970-1984년생의 20-35세까지 20년 이력을 개월 단위로 비교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분가 가구의 분가 시점만 개월 단위로 입력되어 있을 뿐 가족이력을 개월 단위로 확인할 정보가 없다. 가구번호와 가족구성원 변화로 간접적으로 측정한 가족형태, 그리고 가구주와의 관계 정보는 모두 연 단위로 측정되었다.

이들을 같은 연령대로 비교하려면 만 28-33세로 한정해야 한다. 1998년부터 조사했기 때문이다. 1970년생은 1998년에 만 27세였거나 28세였고, 2017년에는 만 46-47세였다. 1984년생은 1998년에 만 13-14세였고 2017년에는 32-33세였다. 이들을 모두 포괄하려면 27·28세-32·33세(한국식 나이로는 29-34세)로 한정할 수밖에 없다. 즉 좌측절단 문제와 우측절단 문제가 모두 있다. 이것이 노동이력 정보와 다른 점이다. 노동이력 정보에는,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회고정보가 있어, 좌측절단 문제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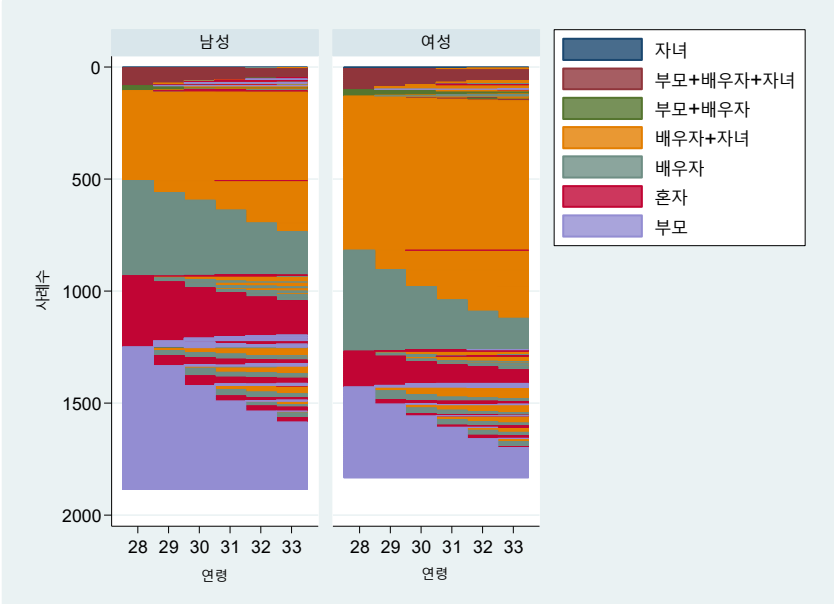
요약하면, 이 장에서는 만 28세-33세의 6년 가족이력을 코호트별로 비교한다. 6년은 그리 긴 시간은 아니다. 그러나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은 가족이력에서 주요 변화가 나타나는, 성인기 구조가 형성되는 핵심 국면이다(Levinson, Darrow and Klein, 2003[1978]). 따라서 가족 차원에서 성인기 이행 국면의 변화 양상을 포착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림 5-3>은 가족이력을 남녀로 구분해 나타낸다. 가로 선 하나하나가 개인의 가족이력이다. 가장 아래쪽에 연보라색으로만 구성된 선은 6년 내내 ‘부모’와 함께 있었던 이력이고, 위쪽에 주황색으로만 구성된 선은 6년 내내 ‘배우자+자녀’와 함께 있었던 이력이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전반적으로 ‘부모’나 ‘혼자’ 지위에서 ‘배우자+(자녀)’ 지위로 전환되는 패턴을 보인다. 남성에 ‘부모’·‘혼자’ 지위가 많고, 여성에 유배우자 지위가 많다. 이들 이력이 이 장의 분석 단위다.

---

138) 노동패널조사가 20년차 이뤄진 만큼, 연도를 축으로 하면 20년 이력을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연도를 기준으로 삼으면 누구는 20-40세 이력이 될 것이고, 누구는 30-50세 이력이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 관심 있는 것은 사회적 시간표의 변화다. 2000년에 30세인 것의 의미와 2010년에 30세인 것의 의미를 비교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연령을 준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림 5-3> 가족이력(성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이력을 비교하기 위해 각 이력을 유형화한 결과가 <표 5-3>이다.[139] ① '부모형'은 해당 기간에 줄곧 부모와 함께 지낸 이력이 주가 되는 유형이다(20.4%). ② '혼자형'은 해당 기간에 줄곧 혼자 지낸 이력이 주가 되는 유형이다(12.6%). ③ '배우자+자녀형'은 해당 기간 내내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지낸 이력이 주가 되는 유형이다(34.9%). ④ '배우자+(자녀) 이행형'은 해당 기간에 결혼 및 출산으로 상태가 변하는 이력이 주가 되는 유형이다(32.1%). '비혼→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이행의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행'이라고 이름 붙였다. 유형 ③과 유형 ④가 다른 점은 결혼·출산 이행 타이밍이다. 28세 시점에 이미 출산까지 마친 이력이 유형 ③에 포함된다면, 해당 기간 내내 결혼상태에만 있거나 해당 기간에 결혼·출산 상태로 이행한 이력이 유형 ④에 포함된다.

139) 먼저 최적일치법(OM)으로 이력 간 거리를 계산했다. 전환 비용은 자료에서 나타난 상태 간 전환 확률에 따라 부여했으며, 삽입/삭제 비용으로 0.9를 부여했다. 배열의 길이가 길지 않아 다이나믹 해밍 계산법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계산된 거리를 기준으로 ward 방법으로 군집 분석을 했고, 그 결과 4개 유형을 도출했다(2장 3절 '자료와 분석기법' 참조).

<표 5-3> 가족이력 유형별 비중(성별)

| | 남성 | | 여성 | | 전체 | |
|---|---|---|---|---|---|---|
| | 사례수 | 퍼센트 | 사례수 | 퍼센트 | 사례수 | 퍼센트 |
| ① 부모 | 496 | 26.7 | 260 | 14.1 | 757 | 20.4 |
| ② 혼자 | 330 | 17.7 | 137 | 7.4 | 466 | 12.6 |
| ③ 배우자+자녀 | 451 | 24.2 | 842 | 45.7 | 1,292 | 34.9 |
| ④ 배우자+(자녀) 이행 | 585 | 31.4 | 605 | 32.8 | 1,189 | 32.1 |
| 합계 | 1,861 | 100.0 | 1,844 | 100.0 | 3,705 | 100.0 |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각 유형의 비중은 남녀가 다르다. 남성은 '부모형'(26.7%)과 '혼자형'(17.7%)의 비중이 크고, 여성은 '배우자+자녀형'(45.7%)의 비중이 크다. 이 차이는 여성의 결혼 시점이 이른 것에서 비롯된다.

<그림 5-4> 가족이력 유형별 특징(이력 단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그림 5-4>는 각 가족이력 유형이 어떤 이력으로 구성되는지를 보여준다. 같은 유형이라도 세부 이력 구성에서 남녀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부모형'에 속하는 이력의 대다수는 6년 내내 부모와 동거한 이력이다. 일부는 '혼자→부모' 전환 이력이고, 일부는 '부모→혼자' 전환 이력이다. 소수이지만 32세부터 '부모+배우자'나 '배우자' 상태로 전환한 이력도 있다. 이러한 전환 이력은 여성에게서 조금 더 많다. '혼자형'에 속하는 이력의 다수는 6년 내내 혼자 있는 이력이다. 일부는 '부모→혼자' 이력이고, 일부는 '부모→혼자→부모' 이력이다. '부모→혼자' 이력이 남성에게서 좀 더 많이 나타나지만, 남녀 구성이 유사하다. '배우자+자녀형'에 속하는 이력의 다수는 6년 내내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생활한 이력이다. 이들 이력은 적어도 28세 이전에 결혼과 출산을 완료했다. 눈에 띄는 것은 '부모+배우자+자녀' 상태로 구성된 이력이다. 남녀 모두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이력도 '배우자+자녀형'에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남녀 차이는 없다. '배우자+(자녀) 이행형'에는 여러 성격의 이력이 섞여 있다. 1/3은 배우자 상태 지속 이력이고, 다른 1/3은 '배우자→배우자+자녀' 이력이다. '출산 이행' 이력이다. 남은 1/3은 '혼자→배우자+(자녀)', '부모→배우자+(자녀)' 이력 등 이른바 '결혼 이행' 이력이다. 정리하면, 이 유형은 결혼 이행 이력과 배우자 동거 이력, 출산 이행 이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점에서 가족이력 구성의 남녀 차이는 거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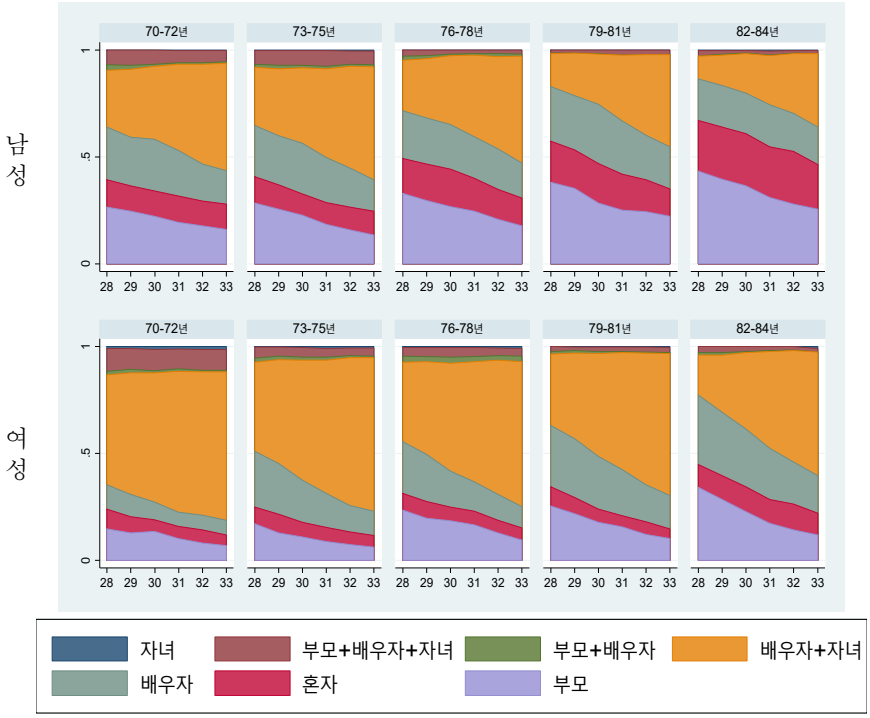
## 2) 가족이력 변화

이제 가족이력의 변화 모습을 살펴보자. <그림 5-5>는 연령별 가족지위 분포를 코호트와 성별로 구분해 나타낸 것이다. 남녀 모두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부모' 지위와 '혼자' 지위 비중이 늘었고, '배우자+자녀' 지위는 줄었다. '부모+배우자+자녀' 지위 비중도 꾸준히 줄었다.

### (1) 만혼화와 혼자 이력의 증가

1970-72년생 남성의 28세 지위 분포를 보면, '부모'와 함께가 28%, '혼자'가 13%, 그 외 결혼 지위가 59%였다. 이런 상태가 33세로 오면, '부모' 19%, '혼자' 14%, 결혼 지위 67%로 바뀐다. 여성은 28세 시점에서 '부모'와 함께가 10%, '혼자'가 7%, 그 외 결혼 지위가 83%였다. 33세로 오면 '부모' 6%, '혼자' 4%, 결혼 지위가 90%로 바뀐다. 33세 무렵에 남성은 10명 중 6.7명이, 여성은 9명이 결혼했다. 결혼한 경우의 다수는 자녀도 있다.

<그림 5-5> 가족지위별 비중 변화(성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1982-84년생으로 오면 이런 양상이 극적으로 바뀐다. 남성의 경우, 28세 시점에 '부모'와 함께 비중은 45%에 이른다. '혼자' 비중도 31%다. '배우자+(자녀)'와 함께 지위 비중은 24%에 불과하다. 33세에 오면, '부모'와 함께 비중이 28%로 줄지만 '혼자' 비중은 30%로 유지된다. '배우자+(자녀)'와 함께 지위 비중은 42%다. 여전히 60%에 가까운 이들이 결혼하지 않았다. 1970-72년생의 '배우자+(자녀)'와 함께 비중 67%에서 35%p가 줄어든 것이다. 결혼했더라도 자녀가 있는 지위 비중이 크지 않다. 여성도 1982-84년생으로 오면 '부모'와 함께나 '혼자' 비중이 크게 늘어난다. 28세 시점에서 '부모' 비중이 35%에 이른다. 1970-72년생에 비하면 25%p가 늘어났다. '혼자' 비중도 15%로, 8%p 늘었다. 대신 '배우자+(자녀)'와 함께 비중은 그만큼 줄었다. 결혼 지위에서도 자녀가 있는 경우의 비중이 대폭 줄었다. 33세로 오면 '배우자+(자녀)'와 함께 비중이 상당 수준으로 늘지만 여전히 30%는 비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 절반은 부모와 함께 있고, 절반은 혼자 있다. 1970-72년생의 경우 33세 시점에 오면 10명 중 1명만이 비혼이었으나 1982-84년생은 3명으로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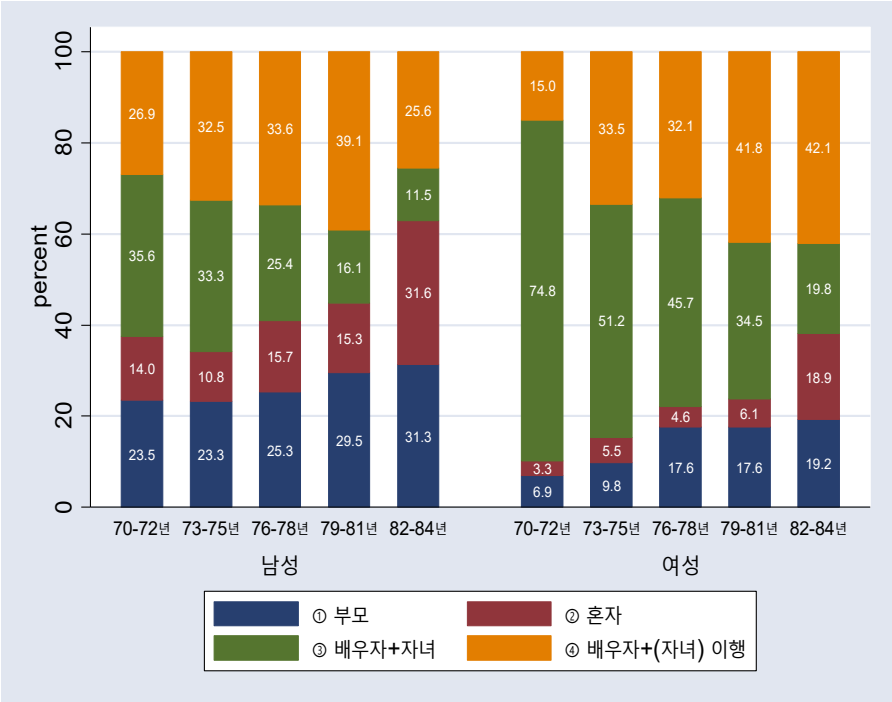
남녀가 다른 지점도 있다. 여성은 ‘혼자’ 지위가 남성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 ‘배우자’ 지위가 점차 증가한 것도 특징이다. ‘부모’와 ‘혼자’를 비혼 지위로 묶고, ‘배우자’와 ‘배우자+자녀’를 결혼 지위로 묶는다면 여성은 비혼 지위 상승 폭이 크지 않다. 비혼 지위에서도 혼자 지위 상승 폭은 매우 적다. 그러나 결혼 지위에서 ‘배우자’ 지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한 폭으로 늘어났다. 이런 경향은 결혼 시점이 뒤로 늦추어진 것을 반영한다.

남성은 1970-72년생에서도 비혼 비중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증가 폭이 적지 않다. 비혼 지위 증가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혼자 지위의 증가다. 결혼 지위 비중이 줄어드는 가운데 배우자 지위가 일정하다. 그만큼 ‘배우자+자녀’ 지위는 줄어들었다.

변화 양상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가족이력 단위로 성별·코호트별 비중을 살펴보자(<그림 5-6>). 남녀 모두 만혼화 추이가 나타나지만 이는 남성에게서 더 또렷하다. 남녀 모두 첫 번째 2개 코호트와 그 다음 2개 코호트, 그리고 마지막 1개 코호트로 변화가 나타나는 패턴이 확인된다. 1970-72년생과 1973-75년생이 유사하고, 1976-78년생과 1979-81년생이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1982-84년생이 구별된다. 1970-72년생과 1973-75년생의 묶음과 1976-78년생과 1979-81년생의 묶음을 비교하면, 후자에서 결혼 이력 비중이 작다. 1970-72년생과 1973-75년생을 비교하면, 후자에서 20대 초중반에 결혼한 이력 비중이 작다. 1982-84년생의 경우 ‘혼자’ 이력의 증가가 눈에 띈다. 이런 변화 추이는 여성에게서도 나타난다.

1970-72년생 남성은 ‘부모 동거형’ 비중이 23.5%이고, 혼자형 비중이 14%다. ‘배우자+자녀 동거형’ 비중은 35.5%이고, ‘배우자+자녀 동거 이행형’ 비중은 26.9%다. 10명 중 3.5명은 결혼하지 않았고, 3.5명은 결혼하고 출산했으며, 3명은 이 시기에 결혼했다. 이런 구도는 다음 코호트에서도 이어진다. 1976-78년생으로 오면 변화가 나타난다. 비혼 이력 비중이 커졌다. ‘부모와 함께형’과 ‘혼자형’ 모두 약간 증가했다. 결혼 이력에서는 ‘배우자+자녀 동거형’ 비중이 낮아졌다. 이런 추이는 1979-81년생에서도 나타난다. 1982-84년생에 오면 큰 변화가 나타난다. 결혼한 이들은 10명 중 4명으로 줄었다. 완만하게 증가한 ‘부모 동거형’ 비중은 30%에 이른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혼자형’ 비중 증가다. 이전 코호트의 15.3%에서 31.6%로 2배 늘어났다.

<그림 5-6> 가족이력 유형별 비중 변화(성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1970-72년생 여성의 비혼 이력은 10%가 되지 않는다. 75%가 28세 전에 결혼과 출산을 완료한 이력이다. 나머지 15%는 28세-33세 사이에 결혼, 또는 출산을 한 '배우자+자녀 이행' 이력이다. 1973-75년생으로 오면 비혼 이력 비중이 약간 늘어나고, 결혼 이력 내에서 '이행' 이력의 비중이 커진다. 1976-78년생에서는 비혼 이력이 확연히 커진다. 비혼 이력 증가분의 다수는 '부모'와 함께 이력이다. 이 구도가 1979-81년생에서도 나타난다. 여성에서도 1982-84년생의 변화가 상당하다. 비혼 이력이 40%에 이른다. 1970-72년생에 비하면 30%p 증가한 것이다. 특히 '혼자' 이력이 이전 코호트의 6.1%에서 18.9%로, 12.8%p 늘어났다. 1982-84년생에는 28세 이전에 결혼과 출산을 끝낸 이력 비중이 20%에 불과하다. 1970-72년생의 75%에 비하면, 55%p 줄어든 것이다.

이 변화가 나타내는 것은 만혼과 비혼 경향이다. 그러나 33세 시점에서 비혼 지위에 있는, 남성은 62.9%에 이르고 여성은 38.1%에 이르는, 이들의 성격을 단정할 수는 없다.[140] 33세까지만 관찰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28-33세

시점에서의 가족이력이고, 이 시간대에 경험한 이력의 성별·코호트별 차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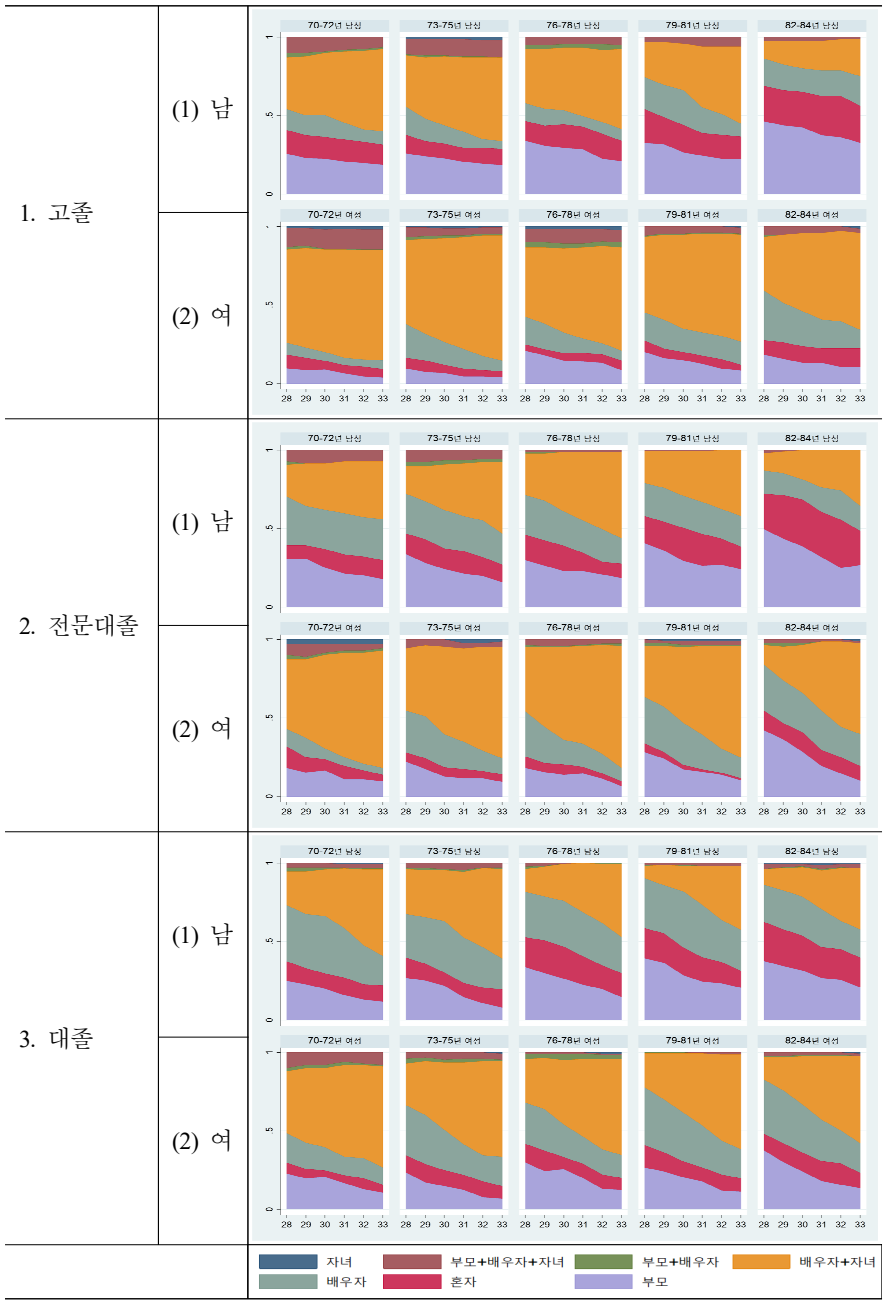
### (2) 교육 수준별 차이

이런 변화를 교육 수준으로 구분하면 상당한 차이가 드러난다(<그림 5-7>). 고졸자는 6년간 지위 변화가 크지 않다. 특히 초기 코호트에서 그렇다. 20대 초중반에 가족이력의 성격이 결정된다는 뜻이다. 또 다른 특징은 결혼한 상태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지위 비중이 초기 코호트(1970-72년생, 1973-75년생, 1976-78년생)에서 높았다는 것이다. 남녀를 구분해서 보면, 1970-72년생 남성은 10명 중 6명이, 여성은 10명 중 9명이 결혼했다[<그림 5-7>의 1-(1)]. 1982-84년생으로 오면 남성은 33세 시점에서도 결혼 지위 비중이 40% 이하다. 여성은 여전히 8명은 결혼했다[<그림 5-7>의 1-(2)]. 남성의 변화는 특히 1979-81년생과 1982-84년생에서 컸다. 결혼 지위 비중이 대폭 줄었다. 1979-81년생은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자' 지위가 '배우자+자녀' 지위로 전환되는 반면 1982-84년생은 두 지위 비중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또 혼자 지위 비중이 1982-84년생에서 크게 커진다. 혼자 지위 비중 증가의 상당 부분을 고졸자가 추동했다. 남성의 변화폭에 비하면 여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

140) 1971년생이 25세 무렵인 1995년에 여성의 초혼 연령은 25.3세였고, 남성의 초혼 연령은 28.4세였다. 1995년에 결혼한 여성의 다수는 20대 중반이었다. 결혼 건수는 25세에 정점에 이른 후 27세에 한 차례, 29세 시점에 또 한 차례 크게 감소한다. 30대 결혼 건수는 매우 적다. 평균 3년의 차이로 남성도 유사한 모습이다. 결혼 건수는 27세에 정점에 이른다. 다수는 20대 후반에 결혼했고, 30세부터 큰 폭으로 줄어 30대 중반에 오면 크게 준다. 이를 감안하면 1970-72년생의 경우 33세에 비혼이면 이후에도 비혼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1984년생이 30세 무렵인 2015년에 여성의 초혼연령은 30세였고, 남성은 32.6세였다. 2015년에 오면 여성도 29-30세 결혼 건수 비중이 가장 크고, 30대 초반의 결혼 건수가 20대 후반 건수를 넘어선다. 남성은 30대 후반에도 상당수가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 건수 자체는 크게 줄었다. 이렇게 보면 33세 무렵 비혼자라도 이후에 결혼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결혼 가능성 자체가 줄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그림 5-7> 가족지위별 비중 변화(성별·교육 수준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전문대졸자는 고졸자보다 비혼 지위 비중이 높다. 특히 여성이 그렇다. 여기서도 1979-81년생과 1982-84년생의, 특히 1982-84년생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남성은 고졸자의 패턴과 유사하다[<그림 5-7>의 2-(1)]. 부모와 사는 비중과 혼자 사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 그래도 모든 코호트에서 33세 시점의 결혼 상태 비중이 고졸자보다 크다. 여기에서도 1982-84년생의 혼자 지위 비중 증가가 두드러진다. 여성은 고졸자와 상당히 다르다[<그림 5-7>의 2-(2)]. 코호트에 따른 결혼 지위 감속 폭이 고졸자보다 크다. 결혼 지위 내에서도 '배우자+자녀' 지위 감소폭이 고졸자보다 크다. 특히 1982-84년생에서 변화가 두드러진다. 대신 부모 지위가 크게 늘었다. 종합하면 코호트별 변화 폭이 가장 큰 집단이 여성에게서는 전문대졸자였다.

대졸자의 경우 남성은 1976-78년생부터 변화가 두드러진다[<그림 5-7>의 3-(1)]. 2000년대 초반에 졸업한 이들이다. 비혼 지위의 비중이 커졌고, 결혼 지위 중 배우자 지위 비중도 커졌다. 1982-84년생에서 확인되는 혼자 지위 증가 경향이 대졸자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주로 저학력자가 혼자 지위 증가를 추동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대졸 여성은 고졸 여성이나 전문대졸 여성에 비해 코호트별 차이가 크지 않다[<그림 5-7>의 3-(2)]. 결혼 시점은 상당히 뒤로 밀려났지만 33세 시점에서의 결혼 지위 비중은 1970-72년생이나 1982-84년생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결혼 지위 가운데 배우자 지위 비중이 커진 것은 변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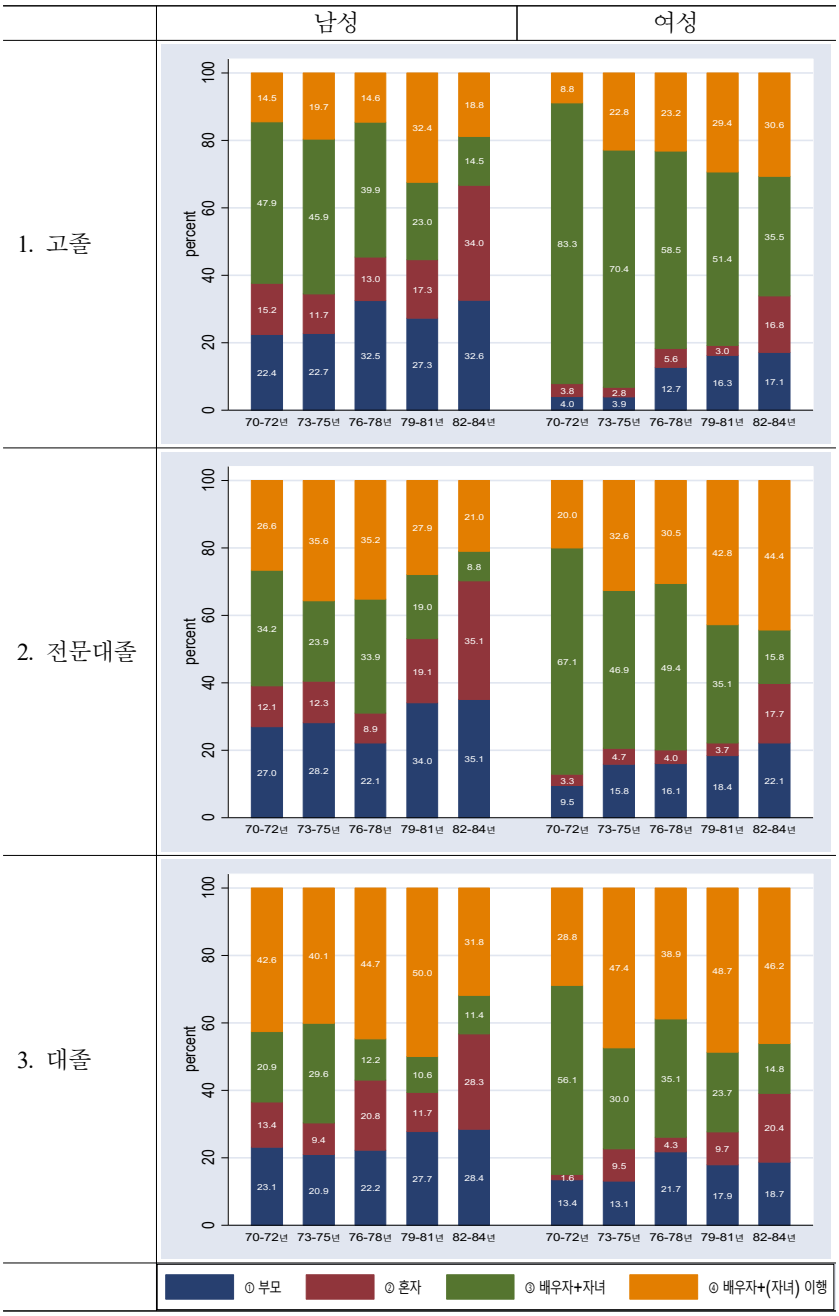
종합하면 노동이력과는 달리 가족이력에서는 코호트에 따른 변화 폭이 남성에게서 컸다.[141] 고졸자의 변화가 컸다는 점은 노동이력과 같다. 결혼 지위 비중이 대폭 줄었다. 결혼 지위 감소 향은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약화된다. 여성은 전문대졸자의 변화가 가장 컸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모든 교육 수준에서 점진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변화의 성격도 남성이 '비혼'에 가깝다면, 여성은 '만혼'에 가깝다.

변화를 가족이력 단위로도 살펴보자(<그림 5-8>). 교육 수준별 차이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남성부터 보면, 1970-72년생에서는 교육 수준별 차이가 크지 않다. 결혼 이력 비중이 유사하다. 고졸자에서는 이른 이행 이력이 많고, 대졸자에서는 늦은 이행 이력이 많은 것 정도가 차이다. 그러나 최근 코호트로 오면 교육 수준별 차이가 나타난다. 비혼 이력의 비중이 전문대졸과 고졸자에서 높다. 최근 코호트로 오면서 이 두 집단의 비혼 이력 증가폭이 대졸자보다 컸기 때문이다. 전문대졸자와 고졸자는 최근 코호트로 오면서 오히려 비슷해졌다. 여성은 교육 수준별 차이가 크지 않고, 최근 코호트로 와서도 그 차이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된다.

---

141) 결혼을 종속변수로 한 연구들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코호트 간 차이가 또렷하다고 보고한다(우해봉, 2009: 47).

<그림 5-8> 가족이력 유형별 비중 변화(성별·교육 수준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여성에게서 주목할 점은 비혼 이력 비중의 코호트별 변화다. 1970-72년생에서는 비혼 이력 비중이 대졸자(15.0%) > 전문대졸자(12.8%) > 고졸자(7.8%) 순으로 컸다. 1982-84년생으로 오면 대졸자(39.1%)와 전문대졸(39.8%)·고졸자(33.9%)의 비혼 이력 비중 차이가 좁혀졌다. 전문대졸자와 고졸자의 차이는 유지되었다. 이는 비혼/만혼화 경향이 전문대졸 이하 저학력자에게서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경향은 최근으로 올수록 남녀 모두 교육 수준별 결혼 가능성 차이가 커진다는 연구 결과(이성용, 2013; Park et al., 2013)와 일치한다. 비혼 이력에서 '부모'와 '혼자' 비중의 교육 수준별 차이도 좁혀졌다. 여성의 경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혼자' 비중이 컸지만 최근 코호트로 오면 모든 교육 수준에서 '혼자' 비중이 늘어나면서 교육 수준별 차이가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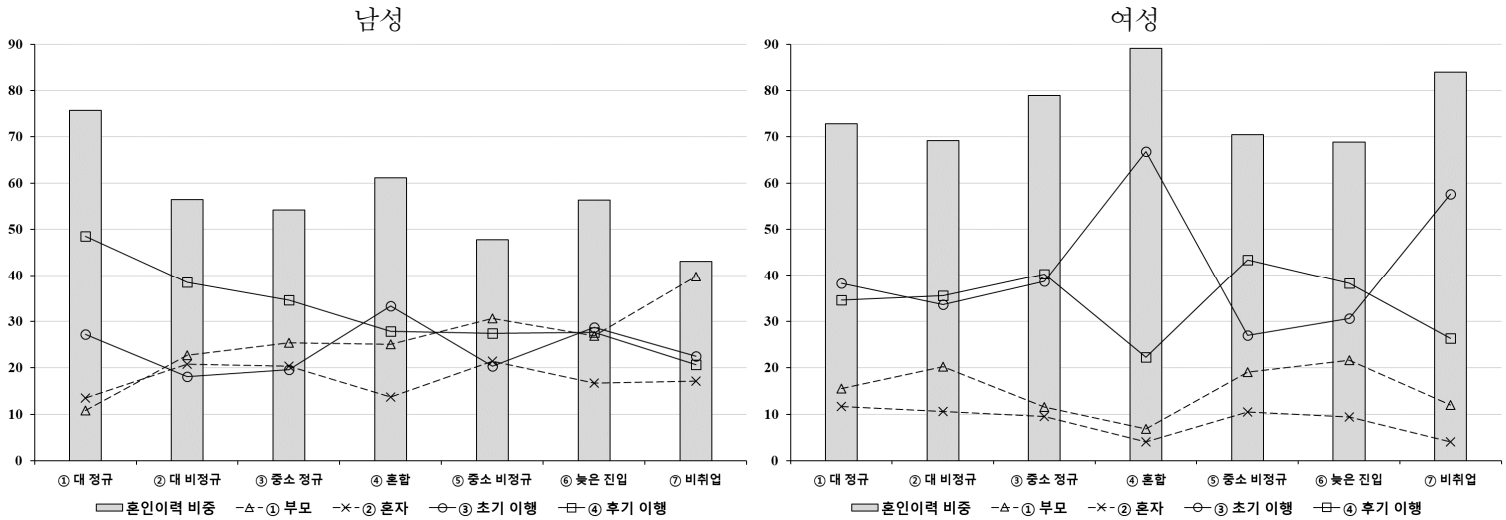
### (3) 노동이력과 가족이력

지금까지 가족이력의 코호트별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4장에서 확인한 노동이력의 변화 양상과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생산 영역과 재생산 영역의 주요 생애 사건들의 관계를 보는 연구가 많지만 다수는 특정 시점에서 측정된 상태 관계를 검토한다. 노동이력을 보는 연구는 결혼 여부만 확인하고, 가족이력을 보는 연구는 취업 여부나 종사상지위만 확인한다. 이 절에서는 노동이력과 가족이력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기존 연구를 검토하면 남성은 노동지위와 가족지위의 상관관계가 높다. 노동지위가 안정적일수록 결혼·출산한다(조귀동, 2020). 여성에서는 그런 일관된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특정 지위와 결혼 이행 가능성이 관계있는지, 각 지위별로 두 갈래의 길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림 5-9>는 노동이력 유형과 가족이력 유형의 관계를 남녀로 구분해 나타낸다. 선 그래프는 노동이력 유형별 가족이력 유형 비중을, 막대그래프는 '배우자+자녀형'(초기 이행형)과 '배우자+(자녀) 이행형'(후기 이행형)을 합친 결혼 이력의 비중을 나타낸다.

<그림 5-9> 노동이력 유형과 가족이력 유형의 관계(성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남성에서는 노동이력과 가족이력이 일정하게 연결된 모습을 보인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결혼 이력 비중이 낮아지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노동이력의 지위가 불안정하다고 볼 때, 노동이력 지위와 결혼 이력 비중 간에 정적 상관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의 결혼 이력 비중이 가장 높고, 나머지 이력들과 차이도 크다. 임금노동이력으로 한정하면 '대기업 비정규직 지속형'과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형'의 결혼 이력 비중이 거의 같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속형'의 결혼 이력 비중은 낮다.

흥미로운 지점은 '혼합형'과 '종소기업 비정규직 늦은 집입형'의 위치다.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을 제외하면 이 두 유형의 결혼 이력 비중이 다른 노동이력 유형 비중보다 높다. 남성의 경우 혼합형은 자영업 이력의 성격이 강하다. 자영업 이력과 결혼 이력의 관계가 강한 것은 임금 노동이력에 비해 자영업 이력을 밟는 이들의 가정형편이 좋은 것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럼에도 늦은 진입형의 높은 비중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결혼 이력 비중으로 본 추이와 연동되어 나타나는 추이는 '배우자+(자녀) 이행형'(후기 이행형)과 '부모형'의 비중 변화 추이다. 결혼 이력 비중이 높을수록 '배우자+(자녀) 이행형' 비중이 높고, 반대로 '부모형' 비중은 낮다.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의 '부모형'의 비중은 10.8%이고, '혼자형' 비중은 13.5%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속형'의 경우 '부모형' 비중은 30.7%이고, '혼자형' 비중은 21.5%이다. 예외는 앞에서 언급한 '혼합형'과 '늦은 진입형'이다. 결혼 이력 중에 '배우자+자녀형'(초기 이행형) 비중이 높다.

여성은 노동이력 유형과 가족이력 유형이 일관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결혼 이력 비중이 가장 큰 이력은 '혼합형'과 '비취업 지속형'이다. 결혼 이력 중에서는 '배우자+자녀형'(초기 이행형)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 두 유형은 결혼·출산과 밀접하게 연결된 이력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이 두 이력을 제외하고 결혼 이력 비중이 가장 큰 노동이력은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형'이다. 그 다음이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이고, '대기업 비정규직 지속형'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속형'은 결혼 이력 비중이 거의 같다. 흥미로운 점은 여성은 '혼합형'과 '비취업 지속형'을 제외한 모든 노동이력 유형에서 '배우자+자녀형' 비중과 '배우자+(자녀) 이행형' 비중이 거의 같다는 점이다. 동일 노동이력 유형에서 결혼 이력과 맺는 관계가 두 종류로 구분되어 있을 수 있다. 비혼 이력으로 한정하면 지위가 낮은 노동이력에 속한 이들이 부모와 함께 지내는 경우가 많고, 지위가 높은 노동이력에 속한 이들은 혼자 지낸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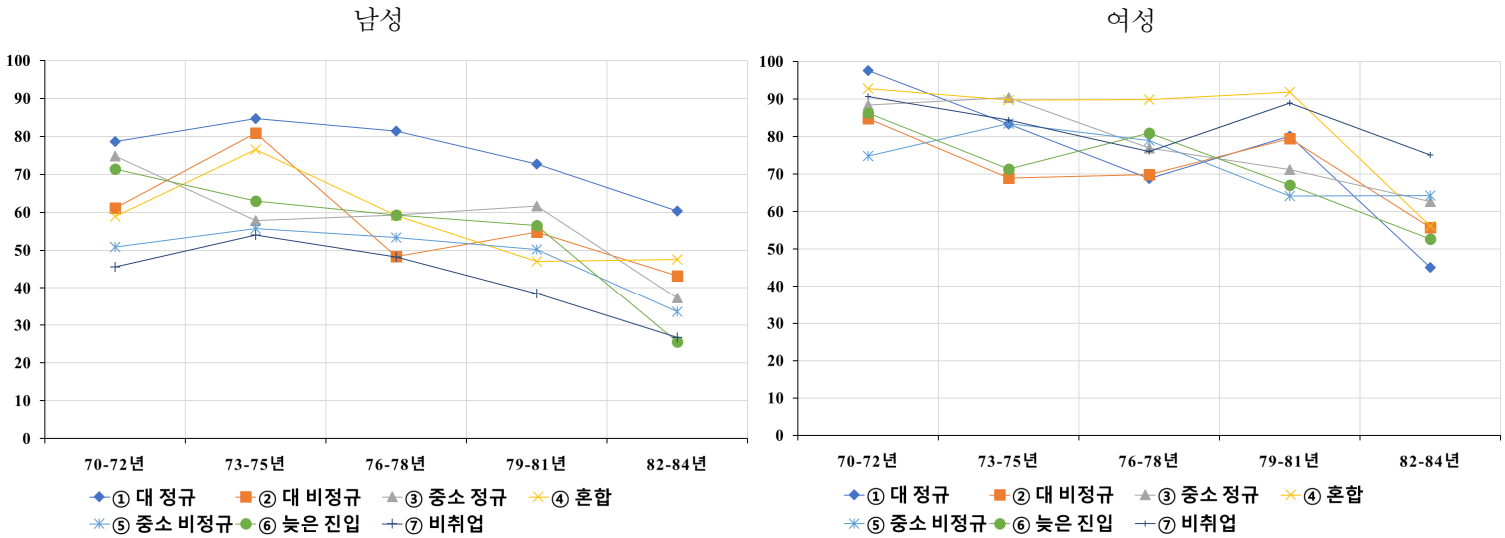
정리하면, 남성은 노동이력의 지위가 높을수록 비혼 이력 비중이 적고, 유배우자 이력 비중이 크다. 비혼 이력으로 한정하면, 노동이력의 지위가 높으면 혼자 생활하

는 이력 비중이 크다. ‘부모형’ 비중은 노동이력 상층에서 가장 적다. 유배우자 이력에서는 노동이력 지위가 높으면 늦게 결혼하고 출산한다. 여성은 일관된 패턴을 보이지 않는다. 노동 지속 이력으로 한정하면 여성은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형’일 때 가장 많이 결혼한다.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의 비중은 그보다 낮다. 일찍 결혼하고 늦게 결혼하는 이력의 비중은 대부분의 노동이력 유형에서 거의 같다. ‘혼합형’과 ‘비취업 지속형’은 결혼 이력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이력의 지위가 높으면 혼자 생활한다. 이 점은 남성과 같다.

다음으로 노동이력과 가족이력의 관계가 코호트별로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자. <그림 5-10>는 노동이력 유형별로 결혼 이력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성별·코호트별로 표시한다. 그림을 단순화하기 위해 ‘배우자+자녀형’과 ‘배우자+(자녀) 이행형’을 결혼 이력으로 묶었다.

먼저 남성이다. 1973-75년생에서 결혼 이력 비중이 약간 늘어난다. 교육 수준으로 보면 대졸자에서 나타난 변화다. <그림 5-10>에서도 주요 노동이력에서 결혼 이력 비중이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기업 비정규직 지속형’과 ‘혼합형’에서 결혼 이력 비중이 큰 폭으로 커졌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노동이력 유형에서도 결혼 이력 비중이 커졌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늦은 진입형’과 ‘비취업 지속형’만 결혼 이력 비중이 줄어들었다. 즉 전반적으로 결혼 이력 비중이 커진 추이가 나타난다. 이런 추이는 1976-78년생으로 오면 극적으로 바뀐다. 모든 노동이력 유형에서 결혼 이력 비중이 줄어드는 가운데 ‘대기업 비정규직 지속형’과 ‘혼합형’에서 감소폭이 컸다. 이후 두 코호트에서는 이런 감소 추이가 지속된다. 1982-84년생으로 오면 노동이력 지위와 결혼 이력 비중이 정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과 나머지 노동이력, 그리고 비취업 이력으로 삼분 된다.

<그림 5-10> 노동이력 유형별 결혼 이력 비중 변화(성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1970-72년생 여성은 결혼 이력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노동이력 유형별 차이가 크지 않다.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의 결혼 이력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혼합형’과 ‘비취업 지속형’이며, 그 다음이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형’, ‘중소기업 비정규직 늦은 진입형’, ‘대기업 비정규직 지속형’이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속형’의 비중이 가장 낮다. 이후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지만 일관된 추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1979-81년생만 해도 ‘혼합형’과 ‘비취업 지속형’을 제외하면,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과 ‘대기업 비정규직 지속형’에서 결혼 이력 비중이 높았다. 중소기업 이력에서는 결혼 이력 비중이 적었다. 그런데 1982-84년생으로 오면 대기업 지속형 이력의 결혼 이력 비중이 중소기업 지속형의 결혼 이력 비중보다 적어진다. 대기업 지속형 이력의 결혼 이력 비중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가 일정한 추이를 나타내는 것인지, 일시적인 것인지를 확인할 수는 없다. 한 가지 가능성은 대기업 지속형 이력에서 만혼화 추이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 3) 가족이력 유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지금까지 기술 통계를 살펴보았다. 남녀 모두 최근 코호트로 오면서 만혼화 추이를 보였다. 남성의 변화 정도가 컸다. 교육 수준으로 보면 고졸자나 전문대졸자 등 저학력자의 변화가 컸다. 노동이력과의 관계에서는 남성은 일관된 추이를 보이는 반면, 여성에게서는 그런 추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변화들이 무엇을 함의하는지 확인해보자.

<표 5-4>와 <표 5-5>는 각 가족이력 유형에 속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효과를 남녀로 구분해 나타낸다.

남녀 모두 모형은 총 8개다. 가족이력 유형별로 2개씩이다. 코호트와 교육 수준, 가족배경 변수를 투입한 모형이 첫 번째이고, 여기에 노동이력 유형 변수를 투입한 것이 두 번째이다. 노동이력 유형 변수를 투입해 교육 수준이나 가족배경 변수의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모든 모형은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으로 회귀계수는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화할 때 각 가족이력 유형에 속할 한계 확률을 나타낸다.

남성부터 보자(<표 5-4>). ‘부모 동거형’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회귀분석(모형 1)에서 코호트 효과는 1982-84년생에서만 나타난다. 1970-72년생보다 1982-84년생에서 부모 이력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 수준과 가족배경 효과는 없다. 노동이력 유형을 포함한 모형 (2)에서는 교육 수준 효과가 나타난다. 고졸에 비해 전문대졸이나 대졸이 부모 이력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노동이력 유형의 경우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속형'에 비해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은 '부모 동거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고, '비취업 지속형'은 '부모 동거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가족배경 효과는 여전히 없다. 노동이력 유형을 통제한 경우 교육 수준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은 '부모 동거형'에 속할 가능성이 학업과 관련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혼자형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회귀분석(모형 3)에서도 코호트 효과는 1982-84년생에서만 나타난다. 1970-72년생보다 1982-84년생에서 부모 이력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 수준 효과는 없으나 가족배경 효과는 있다. 가족배경이 좋을수록 혼자 이력에 속할 가능성이 낮다. 노동이력 유형 변수를 투입한 모형 (4)에서도 코호트 효과와 가족배경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교육 수준 효과는 여전히 없다. 노동이력 유형 효과도 없다.

'배우자+자녀 동거형'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회귀분석(모형 5)에서 코호트 효과는 1973-75년생을 제외한 모든 코호트에서 나타난다.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배우자+자녀 동거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다. 교육 수준 효과도 있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해당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가족배경이 좋을수록 해당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노동이력 유형을 포함한 모형 (6)에서도 기존 변수의 효과가 유지된다. 노동이력 유형을 통제하면 교육 수준 효과가 커진다. 노동이력 유형의 경우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속형'보다 '배우자+자녀 동거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노동이력 유형은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이고, 가능성이 낮은 유형은 '비취업 지속형'이다. 다른 유형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배우자+(자녀) 동거 이행형'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회귀분석(7)에서 코호트 효과는 1979-81년생과 1982-84년생에서 나타난다. 1979-81년생은 1970-72년생보다 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지만, 1982-84년생에서는 반대로 1970-72년생보다 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다. 만혼화에서 비혼화로 전환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 수준은 높을수록 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가족배경이 좋을수록 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노동이력 유형을 투입한 모형(8)에서도 기존 효과가 대부분 유지된다. 다만, 1970-72년생과 1982-84년생의 차이는 사라진다. 이 모형에서도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이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속형'보다 '배우자+(자녀) 이행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노동이력 유형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표 5-4> 가족이력 유형에 대한 선형확률모형 결과(남성)

| | | (1) | (2) | (3) | (4) | (5) | (6) | (7) | (8) |
|---|---|---|---|---|---|---|---|---|---|
| | | 부모 | | 혼자 | | 배우자+자녀 | | 배우자+(자녀) 이행 | |
| 코호트 | (70-72년) | | | | | | | | |
| | 73-75년 | 0.00 | 0.00 | -0.02 | -0.03 | -0.01 | -0.01 | 0.03 | 0.03 |
| | 76-78년 | 0.03 | 0.02 | 0.03 | 0.02 | -0.08** | -0.08** | 0.03 | 0.03 |
| | 79-81년 | 0.06 | 0.06 | 0.02 | 0.01 | -0.17*** | -0.17*** | 0.09** | 0.09** |
| | 82-84년 | 0.09** | 0.09** | 0.20*** | 0.19*** | -0.22*** | -0.22*** | -0.06* | -0.06 |
| 교육수준 | (고졸) | | | | | | | | |
| | 전문대졸 | 0.03 | 0.08** | 0.01 | 0.01 | -0.12*** | -0.15*** | 0.08*** | 0.06* |
| | 대졸 | -0.01 | 0.07* | 0.01 | 0.01 | -0.19*** | -0.23*** | 0.20*** | 0.16*** |
| 노동이력 유형 |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속) | | | | | | | | |
| | 대기업 정규직 지속 | | -0.19*** | | -0.06 | | 0.07* | | 0.17*** |
| | 대기업 비정규직 지속 | | -0.07 | | 0.01 | | -0.01 | | 0.07 |
| |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 | | -0.06 | | -0.02 | | 0.02 | | 0.06 |
| | 혼합 | | -0.02 | | -0.05 | | 0.04 | | 0.04 |
| | 중소기업 비정규직 늦은 진입 | | -0.01 | | -0.04 | | 0.01 | | 0.04 |
| | 비취업 | | 0.13*** | | -0.03 | | -0.08** | | -0.02 |
| 가족배경 | | -0.02 | -0.02 | -0.03*** | -0.03*** | 0.02** | 0.02** | 0.03** | 0.03** |
| Constant | | 0.22*** | 0.20*** | 0.12*** | 0.16*** | 0.46*** | 0.47*** | 0.19*** | 0.16*** |
| | N | 1,879 | 1,879 | 1,879 | 1,879 | 1,879 | 1,879 | 1,879 | 1,879 |
| | R-squared | 0.01 | 0.05 | 0.04 | 0.05 | 0.08 | 0.09 | 0.06 | 0.07 |

*** p<0.01, ** p<0.05, * p<0.1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종합하면, 코호트 효과는 1976-78년생에서 한 차례 나타나고 1982-84년생에서 한 차례 나타난다. 두 효과는 성격이 다르다. 전자가 만혼화 효과에 가깝다면 후자는 비혼화 효과에 가깝다. 1976-78년생에서 이른 이행 이력에 속할 가능성의 차이가 나타난다. 1982-84년생에서는 '부모형'이나 '혼자형'에 속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커졌고, '배우자+(자녀) 이행형'에 속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교육 수준은 결혼 이력에 속할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 교육 수준이 높으면 늦게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족배경의 효과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지위가 높을수록 결혼 이력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비혼 이력에서는 '혼자형'에 속할 가능성을 낮춘다. 즉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집에서는 비혼 상태 내에서는 혼자보다는 부모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노동이력 유형에서 일관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이다.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형'이나 '혼합형'도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속형'에 비해 결혼 이력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유의미하지는 않다. 즉 남성은 노동지위가 최상층이고 가족배경이 좋으면 결혼할 가능성이 높다. 위 두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교육 수준은 타이밍을 가르는 변수일뿐 결혼 여부를 가르는 변수가 되지는 않는다. 고졸은 일찍 결혼하고 전문대졸 이상은 늦게 결혼한다.

<표 5-5>는 여성의 분석 결과다. '부모형'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회귀분석(모형 1)에서 코호트 효과는 1976-78년생부터 일관되게 나타난다. 코호트 효과의 크기는 유지된다. 교육 수준이 높으면 이 이력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가족배경 효과는 크기도 작을뿐더러 유의미하지 않다. 노동이력 유형 변수를 추가한 모형 (2)에서도 기존 변수 효과는 유지된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속형'과 비교해 유의미한 유형은 '혼합형'이 유일하다. '혼합형'이면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속형'보다 이 이력에 속할 가능성이 낮다.

'혼자형'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회귀분석(모형 3)에서 코호트 효과는 1982-84년생에서만 나타난다. 1982-84년생이 1970-72년생보다 이 이력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고졸에 비해 대졸자가 이 이력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가족배경 효과는 없다. 노동이력 유형을 추가한 모형 (4)에서도 코호트 효과는 유지된다. 그런데 교육 수준 효과는 사라진다. '혼자형'에 속할 가능성이 교육 수준 자체보다는 노동지위와 관련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비취업 지속형'이면 '혼자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다. 가족배경 효과는 없다.

<표 5-5> 가족이력 유형에 대한 선형확률모형 결과(여성)

| | | (1) | (2) | (3) | (4) | (5) | (6) | (7) | (8) |
|---|---|---|---|---|---|---|---|---|---|
| | | 부모 | | 혼자 | | 배우자+자녀 | | 배우자+(자녀) 이행 | |
| 코호트 | (70-72년) | | | | | | | | |
| | 73-75년 | 0.02 | 0.01 | 0.02 | 0.02 | -0.19*** | -0.18*** | 0.15*** | 0.15*** |
| | 76-78년 | 0.09*** | 0.08*** | 0.01 | 0.00 | -0.21*** | -0.19*** | 0.11*** | 0.11*** |
| | 79-81년 | 0.09*** | 0.07** | 0.02 | 0.02 | -0.32*** | -0.27*** | 0.20*** | 0.19*** |
| | 82-84년 | 0.10*** | 0.08** | 0.15*** | 0.14*** | -0.45*** | -0.40*** | 0.19*** | 0.17*** |
| 교육수준 | (고졸) | | | | | | | | |
| | 전문대졸 | 0.06** | 0.06** | 0.00 | -0.00 | -0.17*** | -0.15*** | 0.11*** | 0.10*** |
| | 대졸 | 0.07*** | 0.06** | 0.04* | 0.03 | -0.28*** | -0.26*** | 0.17*** | 0.17*** |
| 노동이력 유형 |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속) | | | | | | | | |
| | 대기업 정규직 지속 | | -0.03 | | 0.01 | | 0.13** | | -0.10* |
| | 대기업 비정규직 지속 | | 0.01 | | -0.00 | | 0.08 | | -0.08 |
| |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 | | -0.04 | | 0.00 | | 0.01 | | 0.03 |
| | 혼합 | | -0.07** | | -0.04 | | 0.22*** | | -0.11** |
| | 중소기업 비정규직 늦은 진입 | | 0.04 | | -0.01 | | 0.01 | | -0.03 |
| | 비취업 | | -0.05 | | -0.05** | | 0.21*** | | -0.11*** |
| 가족배경 | | -0.01 | -0.01 | -0.01 | -0.01 | -0.00 | -0.00 | 0.02 | 0.02 |
| Constant | | 0.04*** | 0.09** | 0.02* | 0.05** | 0.84*** | 0.69*** | 0.10*** | 0.18*** |
| N | | 1,826 | 1,826 | 1,826 | 1,826 | 1,826 | 1,826 | 1,826 | 1,826 |
| R-squared | | 0.03 | 0.04 | 0.05 | 0.05 | 0.19 | 0.23 | 0.08 | 0.09 |

*** p<0.01, ** p<0.05, * p<0.1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배우자+자녀형’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회귀분석 모형 (5)에서 코호트 효과는 모든 코호트에서 나타난다.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이 이력에 속할 가능성이 낮다. 교육 수준 효과도 강하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이 이력에 속할 가능성이 낮다. 가족배경 효과는 없다. 노동이력 유형 변수를 추가한 모형 (6)에서도 기존 변수의 효과가 유지된다. 노동이력 유형의 경우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속형’보다 이 이력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은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과 ‘혼합형’, ‘비취업 지속형’이다. ‘혼합형’과 ‘비취업 지속형’은 결혼·출산과 연결된 이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미있는 유형은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이다. 흥미로운 점은 비록 둘 다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형보다 대기업 비정규직 지속형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배우자+(자녀) 이행형’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회귀분석(모형 7)에서도 코호트 효과는 모든 코호트에서 나타난다. 최근 코호트로 오면 이 이력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준거 집단인 1970-72년생과 1979-81년생의 차이와 1970-72년생과 1982-84년생의 차이는 같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노동이력 유형을 추가한 모형 (8)에서도 기존 효과가 유지된다. 노동이력 유형 효과는 ‘배우자+자녀형’에 대한 모형 (6)에서 나타난 결과와 반대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속형’에 비해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과 ‘혼합형’, ‘비취업 지속형’이 이 이력에 속할 가능성이 낮다. ‘혼합형’과 ‘비취업 지속형’의 경우 이른 시점에 결혼한 이력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 또한 낮은 가능성을 보인다는 점은 다소 의외다.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과 결혼 가능성이 시점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일찍 결혼하거나 아예 하지 않거나의 두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코호트 효과는 남성보다 강한 수준으로, 일관되게 나타난다. 만혼화 추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1982-84년생에서 혼자 이력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눈에 띄는 변화다. 교육 수준 효과는 남성과 비슷하다. 결혼 이력에 속할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 교육 수준이 높으면 늦게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족배경 효과는 일관되게 없다. 이 점이 남성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이다. ‘혼합형’이나 ‘비취업 지속형’을 제외하면 노동이력 유형에서 일관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이다. 이 점은 남성과 같다. 다만 남성과는 달리 ‘배우자+(자녀) 이행형’의 가능성은 낮춘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리하면 여성은 가족이력을 결정하는 데에 가족배경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 남성과 마찬가지로 교육 수준은 타이밍을 가르는 변수일 뿐 결혼 여부를 가르는 변수가 되지는 않는다. 고졸은 일찍 결혼하고 전문대졸 이상은 늦게 결혼한다. 노동지위의 경우 남성은 최상층 지

위와 결혼 이력에 속할 가능성이 타이밍과 관계 없이 정적 관계를 보이는 반면 여성은 상층 지위가 '배우자+자녀형'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

## 3. 가족이력 변화의 맥락

지금까지 각 가족이력 유형에 속할 가능성에 주요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들 변수의 영향력이 코호트별로는 어떻게 변했을까? 그 결과 남녀의 가족이력의 성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 1) 성별 효과

먼저 각 가족이력 유형에 속할 가능성의 남녀 차이가 코호트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해보자. <표 5-6>은 교육 수준, 가족배경, 노동이력 유형을 통제한 상태에서 성별과 코호트 변수의 효과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보여준다.

<그림 5-11>은 <표 5-6>에서 성별과 코호트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형의 분석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표 5-6> 각 가족이력 유형에 대한 선형확률모형 결과(성별*코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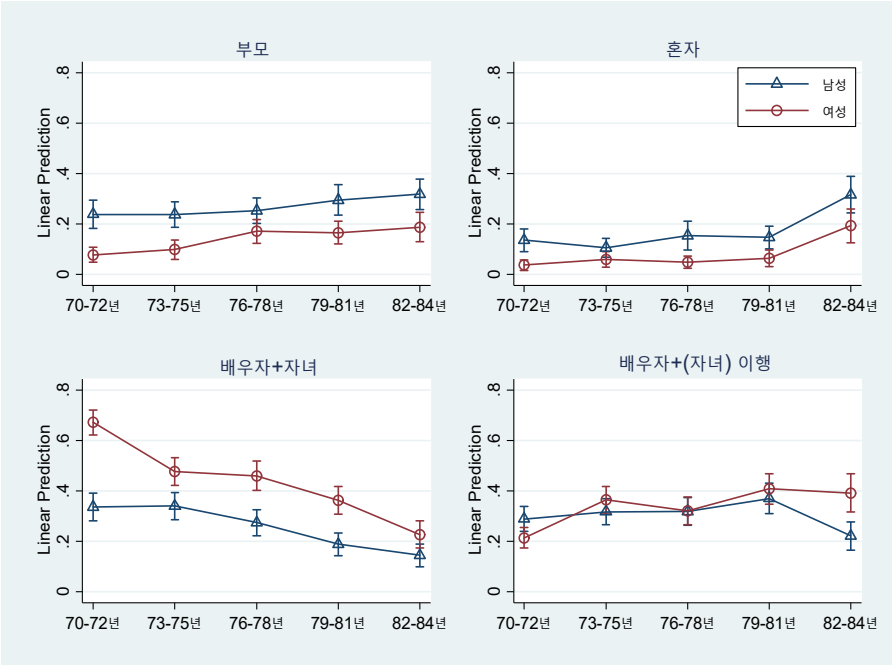
| | | (1) | (2) | (3) | (4) | (5) | (6) | (7) | (8) |
|---|---|---|---|---|---|---|---|---|---|
| | | 부모 | | 혼자 | | 배우자+자녀 | | 배우자+(자녀) 이행 | |
| 성별 | (남성) | | | | | | | | |
| | 여성 | -0.13*** | -0.16*** | -0.09*** | -0.10*** | 0.18*** | 0.33*** | 0.04** | -0.07** |
| 코호트 | (70-72년) | | | | | | | | |
| | 73-75년 | 0.01 | -0.00 | -0.00 | -0.03 | -0.10*** | 0.00 | 0.09*** | 0.03 |
| | 76-78년 | 0.05** | 0.01 | 0.02 | 0.02 | -0.13*** | -0.06 | 0.07** | 0.03 |
| | 79-81년 | 0.07*** | 0.06 | 0.02 | 0.01 | -0.23*** | -0.15*** | 0.13*** | 0.08** |
| | 82-84년 | 0.09*** | 0.08* | 0.17*** | 0.18*** | -0.31*** | -0.19*** | 0.05 | -0.07* |
| 교육수준 | (고졸이하) | | | | | | | | |
| | 전문대졸 | 0.06*** | 0.06*** | 0.00 | 0.00 | -0.14*** | -0.14*** | 0.08*** | 0.08*** |
| | 대졸이상 | 0.05** | 0.05** | 0.01 | 0.02 | -0.24*** | -0.23*** | 0.17*** | 0.16*** |
| 노동이력 유형 | (중소 비정규) | | | | | | | | |
| | 대 정규 | -0.14*** | -0.14*** | -0.04 | -0.04 | 0.11*** | 0.11*** | 0.07* | 0.07* |
| | 대 비정규 | -0.03 | -0.04 | -0.00 | -0.00 | 0.04 | 0.04 | -0.00 | -0.00 |
| | 중소 정규 | -0.05 | -0.05 | -0.01 | -0.01 | 0.03 | 0.02 | 0.03 | 0.04 |
| | 혼합 | -0.06* | -0.05* | -0.04 | -0.04* | 0.15*** | 0.14*** | -0.05* | -0.04 |
| | 늦은 진입 | 0.00 | 0.00 | -0.03 | -0.03 | 0.02 | 0.02 | 0.01 | 0.00 |
| | 비취업 | 0.02 | 0.02 | -0.04* | -0.04* | 0.09*** | 0.09*** | -0.07** | -0.06** |
| 가족배경 | | -0.01 | -0.01 | -0.02** | -0.02** | 0.01 | 0.01 | 0.02** | 0.02** |
| 성별* 코호트 | 여성#73-75년 | | 0.02 | | 0.05 | | -0.20*** | | 0.12*** |
| | 여성#76-78년 | | 0.08* | | -0.01 | | -0.15*** | | 0.08 |
| | 여성#79-81년 | | 0.03 | | 0.02 | | -0.16*** | | 0.11** |
| | 여성#82-84년 | | 0.03 | | -0.02 | | -0.25*** | | 0.25*** |
| Constant | | 0.21*** | 0.23*** | 0.15*** | 0.15*** | 0.48*** | 0.41*** | 0.15*** | 0.21*** |
| N | | 3,705 | 3,705 | 3,705 | 3,705 | 3,705 | 3,705 | 3,705 | 3,705 |
| R-squared | | 0.05 | 0.05 | 0.07 | 0.07 | 0.19 | 0.20 | 0.07 | 0.07 |

*** p<0.01, ** p<0.05, * p<0.1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1970-72년생의 경우 남녀 차이가 뚜렷하다. 남성은 '부모형'에 속할 가능성과 '혼자형'에 속할 가능성이 여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던 반면 '배우자+자녀형'에 속할 가능성은 유의미하게 낮았다. '배우자+(자녀) 이행형'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코호트로 오면 '부모형', '혼자형', '배우자+자녀형' 모두에서 남녀 차이가 줄었다. 그 시점은 대략 1976-78년생부터이지만 유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반면 차이가 없었던 '배우자+(자녀) 이행형'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1982-84년생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배우자+(자녀) 이행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 차이가 다른 세 유형에서 차이가 좁혀진 만큼 크지는 않다. 그만큼 20대 후반까지의 가족이력이 유사해졌다.

<그림 5-11> 각 가족이력 유형에 속할 기대 확률(성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 2) 교육 수준 효과

다음은 교육 수준 효과가 코호트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해보자(<표 5-7>과 <그림 5-12>).

<표 5-7> 각 가족이력 유형에 대한 선형확률모형 결과(성별, 교육수준*코호트)

| | | (1) | (2) | (3) | (4) | (5) | (6) | (7) | (8) |
|---|---|---|---|---|---|---|---|---|---|
| | | 남성 | | | | 여성 | | | |
| | | 부모 | 혼자 | 배우자+자녀 | 배우자+(자녀)이행 | 부모 | 혼자 | 배우자+자녀 | 배우자+(자녀)이행 |
| 코호트 | (70-72년) | | | | | | | | |
| | 73-75년 | 0.01 | -0.02 | -0.03 | 0.04 | -0.00 | -0.01 | -0.12*** | 0.13*** |
| | 76-78년 | 0.10 | -0.01 | -0.08 | -0.00 | 0.07** | 0.01 | -0.22*** | 0.13*** |
| | 79-81년 | 0.05 | 0.02 | -0.25*** | 0.18*** | 0.10** | -0.01 | -0.27*** | 0.18*** |
| | 82-84년 | 0.11 | 0.20** | -0.35*** | 0.03 | 0.11** | 0.13** | -0.43*** | 0.20*** |
| 교육수준 | (고졸이하) | | | | | | | | |
| | 전문대졸 | 0.10 | -0.01 | -0.17** | 0.09 | 0.05 | -0.01 | -0.12* | 0.08 |
| | 대졸이상 | 0.10 | 0.01 | -0.33*** | 0.22*** | 0.09** | -0.02 | -0.26*** | 0.19*** |
| 가족배경 | | -0.02 | -0.03*** | 0.02** | 0.03** | -0.01 | -0.01 | -0.01 | 0.02 |
| 노동이력 유형 | (중소 비정규) | | | | | | | | |
| | 대 정규 | -0.19*** | -0.06 | 0.07* | 0.18*** | -0.03 | 0.01 | 0.13** | -0.10* |
| | 대 비정규 | -0.08 | 0.01 | -0.02 | 0.08 | 0.01 | -0.00 | 0.08 | -0.08 |
| | 중소 정규 | -0.06 | -0.02 | 0.00 | 0.07 | -0.04 | -0.00 | 0.00 | 0.04 |
| | 혼합 | -0.02 | -0.05 | 0.02 | 0.05 | -0.07** | -0.04 | 0.21*** | -0.10** |
| | 늦은 진입 | -0.01 | -0.03 | -0.00 | 0.05 | 0.04 | -0.02 | 0.01 | -0.03 |
| | 비취업 | 0.12*** | -0.03 | -0.09** | -0.01 | -0.05 | -0.05** | 0.21*** | -0.11*** |
| 교육수준 *코호트 | 전문대졸#73-75년 | 0.01 | 0.02 | -0.07 | 0.05 | 0.06 | 0.03 | -0.11 | 0.02 |
| | 전문대졸#76-78년 | -0.14 | -0.02 | 0.07 | 0.09 | -0.02 | -0.01 | 0.04 | -0.01 |
| | 전문대졸#79-81년 | 0.03 | 0.05 | 0.10 | -0.18* | -0.03 | 0.01 | -0.02 | 0.04 |
| | 전문대졸#82-84년 | -0.01 | 0.04 | 0.08 | -0.10 | -0.01 | 0.01 | -0.03 | 0.03 |
| | 대졸#73-75년 | -0.02 | -0.02 | 0.11 | -0.07 | -0.01 | 0.09** | -0.13 | 0.04 |
| | 대졸#76-78년 | -0.10 | 0.09 | -0.01 | 0.02 | 0.01 | 0.01 | 0.04 | -0.05 |
| | 대졸#79-81년 | -0.00 | -0.04 | 0.15* | -0.10 | -0.06 | 0.08** | 0.01 | -0.03 |
| | 대졸#82-84년 | -0.04 | -0.05 | 0.24*** | -0.15* | -0.06 | 0.05 | 0.08 | -0.07 |
| Constant | | 0.19*** | 0.16*** | 0.52*** | 0.13*** | 0.08** | 0.07** | 0.68*** | 0.17*** |
| N | | 1,879 | 1,879 | 1,879 | 1,879 | 1,826 | 1,826 | 1,826 | 1,826 |
| R-squared | | 0.05 | 0.05 | 0.11 | 0.08 | 0.04 | 0.06 | 0.23 | 0.0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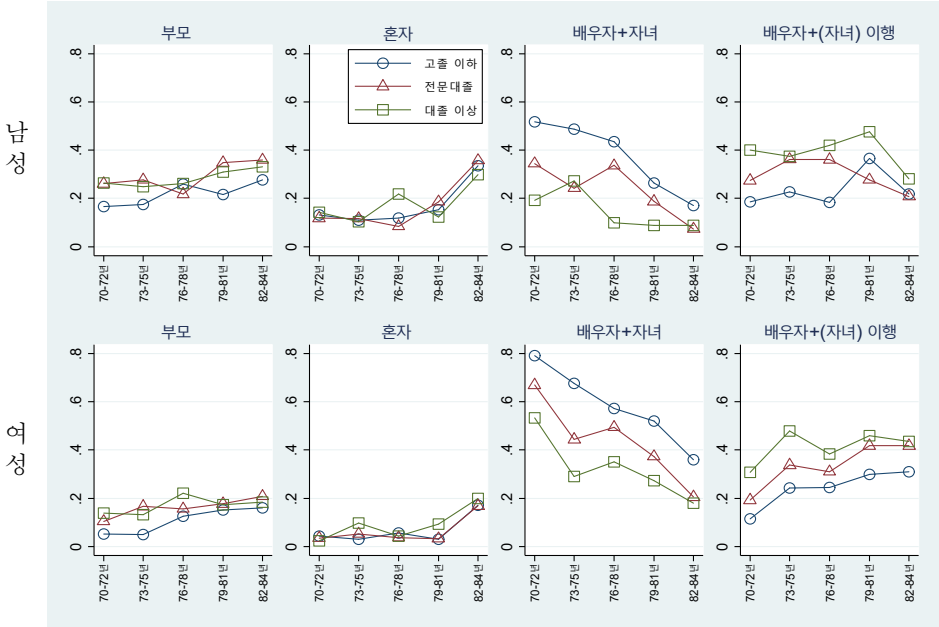
*** p<0.01, ** p<0.05, * p<0.1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앞서 확인한 회귀분석 모형에서 교육 수준은 '부모형'에 속할 가능성과 '배우자+자녀형'에 속할 가능성, '배우자+(자녀) 이행형'에 속할 가능성과 관련 있었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 '배우자+자녀형'에 속할 가능성은 낮으며, '배우자+(자녀) 이행형'에 속할 가능성은 높다. 이런 패턴은 남녀가 같았다.

<표 5-7>은 교육수준과 코호트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모형의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5-12>는 이 표의 분석 결과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다. 다시 말해 <그림 5-12>는 교육 수준별 기대 확률값이 코호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나타낸다.142)

<그림 5-12> 각 가족이력 유형에 속할 기대 확률(교육 수준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초기 두 코호트에서 '부모 동거형'에 속할 가능성은 전문대졸자와 대졸자가 고졸자보다 높다. 1976-78년생에서 그 차이가 줄어드는데 고졸자들이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무렵이 경제위기 직후였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두 코호트

142) 그림을 알아보기 쉽도록 신뢰구간은 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엄밀한 차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에서는 대졸·전문대졸자와 고졸자의 차이가 다시 나타난다. ‘혼자형’에 속할 가능성의 교육 수준별 차이는 없다. ‘배우자+자녀 동거형’에 속할 가능성은 1970-72년생을 기준으로 하면 고졸, 전문대졸, 대졸 순으로 높다. 이 차이가 1976-78년생까지는 유지되나 이후 두 코호트에서는 차이의 폭이 상당 수준으로 줄어든다. 고졸자와 전문대졸자의 가능성이 대폭 낮아졌기 때문이다. ‘배우자+(자녀) 이행형’에 속할 가능성에서도 앞의 세 코호트에서는 교육 수준별 차이가 유지, 확대되었으나 최근 두 코호트에서 교육 수준별 차이가 좁혀지는 추이가 나타난다.

여성은 결혼 이력에 속할 가능성에서는 교육 수준별 차이가 유지되는 추이가 나타난다. ‘배우자+자녀 동거형’에 속할 가능성은 ‘고졸 이하’가 가장 높고, ‘전문대졸’, ‘대졸자’ 순으로 낮다. 최근 코호트에서는 전문대졸자와 대졸자의 차이가 좁혀졌으나 이 둘과 고졸자의 차이는 유지되었다. ‘배우자+(자녀) 동거 이행형’에 속할 가능성에서도 대졸과 전문대졸의 차이는 좁혀지는 추이가 나타나지만 이 둘과 고졸의 차이는 유지된다. 대졸과 전문대졸 차이 감소는 전문대졸자에게서 만혼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남성의 경우 교육 수준별 기대 확률 차이가 좁혀진 것은 저학력자에게서 비혼 추이가 더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1970년대 초반생만 해도 고졸자는 20대 초중반에 결혼했고, 대졸자는 30대 초반에 결혼했으나 1980년대생으로 오면 고졸자도 20대 초중반에 결혼하지 않게 되었다. 30대 초반 결혼 시점에서의 교육 수준별 차이는 유지되었다. 혼인 이력에 속할 가능성에서 교육 수준별 차이가 커졌다. 반면, 여성에게서 교육 수준별 기대 확률 차이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과 같이 저학력자의 하락 폭이 크기는 하지만 20대 초중반 혼인 이력에 속할 가능성은 전 교육 수준에서 하락했다. 30대 초반 결혼 이력에 속할 가능성도 일정 부분 유지되고 있다.

### 3) 노동이력 유형 효과

앞에서 확인한 회귀분석의 결과 결혼 이력에 속할 가능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낳는 유형은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이었다. 남성은 초기 이행형에 속할 가능성과 후기 이행형에 속할 가능성을 모두 높였던 반면, 여성은 초기 이행형에 속할 가능성만을 높였다. 남성은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이 ‘부모형’에 속할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도 나타났다. 이런 평균적인 효과가 코호트별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보자.

<표 5-8>은 노동이력 유형 변수와 코호트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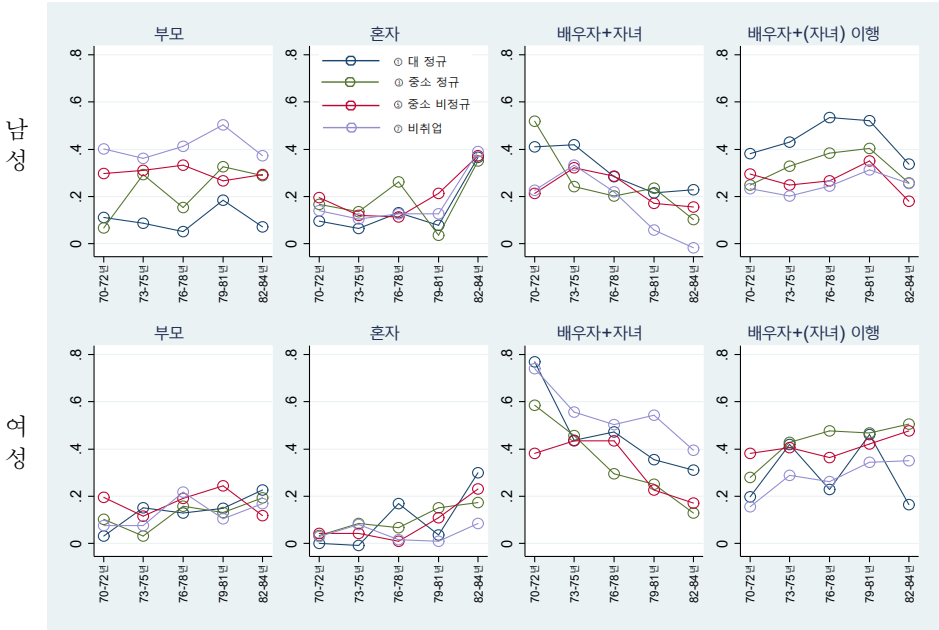
<표 5-8> 각 가족이력 유형에 대한 선형확률모형(성별, 노동이력유형*코호트)

| | | (1) | (2) | (3) | (4) | (5) | (6) | (7) | (8) |
|---|---|---|---|---|---|---|---|---|---|
| | | 남성 | | | | 여성 | | | |
| | | 부모 | 혼자 | 배우자+자녀 | 배우자+(자녀) 이행 | 부모 | 혼자 | 배우자+자녀 | 배우자+(자녀) 이행 |
| 코호트 | (70-72년) | | | | | | | | |
| | 73-75년 | 0.01 | -0.08 | 0.11 | -0.05 | -0.08 | 0.00 | 0.05 | 0.02 |
| | 76-78년 | 0.03 | -0.08 | 0.07 | -0.03 | -0.00 | -0.03 | 0.05 | -0.02 |
| | 79-81년 | -0.03 | 0.02 | -0.04 | 0.05 | 0.05 | 0.07 | -0.15 | 0.04 |
| | 82-84년 | -0.00 | 0.18* | -0.06 | -0.12 | -0.08 | 0.19*** | -0.21* | 0.10 |
| 교육수준 | (고졸이하) | | | | | | | | |
| | 전문대졸 | 0.07* | 0.01 | -0.14*** | 0.06* | 0.06** | -0.01 | -0.15*** | 0.09*** |
| | 대졸이상 | 0.05 | 0.01 | -0.22*** | 0.15*** | 0.06** | 0.02 | -0.25*** | 0.17*** |
| 가족배경 | | -0.02 | -0.04*** | 0.03** | 0.03** | -0.01 | -0.01 | -0.00 | 0.02 |
| 노동이력유형 | (중소 비정규) | | | | | | | | |
| | 대 정규 | -0.19* | -0.10 | 0.20** | 0.09 | -0.16** | -0.04 | 0.39*** | -0.18 |
| | 대 비정규 | -0.13 | 0.01 | 0.05 | 0.07 | -0.15 | 0.04 | 0.34 | -0.23 |
| | 중소 정규 | -0.23** | -0.03 | 0.31*** | -0.05 | -0.09 | -0.01 | 0.20 | -0.10 |
| | 혼합 | 0.03 | -0.13 | 0.20* | -0.09 | -0.14* | -0.00 | 0.36*** | -0.21** |
| | 늦은 진입 | -0.13 | -0.09 | 0.17** | 0.04 | -0.09 | -0.01 | 0.34*** | -0.24** |
| | 비취업 | 0.10 | -0.05 | 0.01 | -0.06 | -0.12 | -0.01 | 0.36*** | -0.23** |
| 노동이력유형*코호트 | 대정규#73-75년 | -0.04 | 0.04 | -0.10 | 0.09 | 0.20 | -0.01 | -0.39** | 0.20 |
| | 대정규#76-78년 | -0.09 | 0.12 | -0.20 | 0.18 | 0.10 | 0.20** | -0.35* | 0.05 |
| | 대정규#79-81년 | 0.11 | -0.04 | -0.16 | 0.08 | 0.07 | -0.03 | -0.26 | 0.22 |
| | 대정규#82-84년 | -0.03 | 0.09 | -0.13 | 0.07 | 0.27* | 0.11 | -0.25 | -0.13 |
| | 대비정규#73-75년 | -0.05 | -0.07 | -0.07 | 0.19 | 0.28* | -0.03 | -0.39 | 0.14 |
| | 대비정규#76-78년 | 0.11 | 0.09 | -0.17 | -0.03 | 0.17 | 0.04 | -0.39 | 0.19 |
| | 대비정규#79-81년 | -0.03 | 0.13 | -0.04 | -0.05 | 0.10 | -0.14 | -0.16 | 0.20 |
| | 대비정규#82-84년 | 0.24 | -0.20 | 0.02 | -0.07 | 0.22 | -0.03 | -0.29 | 0.10 |
| | 중소정규#73-75년 | 0.21 | 0.05 | -0.39*** | 0.13 | 0.01 | 0.05 | -0.18 | 0.12 |
| | 중소정규#76-78년 | 0.05 | 0.18 | -0.39*** | 0.16 | 0.06 | 0.07 | -0.34** | 0.22 |
| | 중소정규#79-81년 | 0.29* | -0.15 | -0.24* | 0.10 | -0.02 | 0.05 | -0.18 | 0.15 |
| | 중소정규#82-84년 | 0.23 | 0.01 | -0.36*** | 0.12 | 0.17 | -0.05 | -0.24* | 0.13 |
| | 혼합#73-75년 | -0.21 | 0.12 | -0.11 | 0.19 | 0.13 | -0.03 | -0.20 | 0.10 |
| | 혼합#76-78년 | -0.23 | 0.31** | -0.24 | 0.16 | 0.02 | 0.03 | -0.08 | 0.03 |
| | 혼합#79-81년 | 0.05 | 0.11 | -0.23* | 0.07 | -0.09 | -0.03 | -0.23 | 0.36** |
| | 혼합#82-84년 | 0.08 | -0.11 | -0.28** | 0.31* | 0.26 | -0.02 | -0.20 | -0.03 |
| | 늦은진입#73-75년 | 0.05 | 0.09 | -0.20* | 0.06 | 0.09 | 0.11 | -0.53*** | 0.32* |
| | 늦은진입#76-78년 | 0.05 | 0.13 | -0.16 | -0.02 | 0.06 | 0.02 | -0.45*** | 0.36** |
| | 늦은진입#79-81년 | 0.12 | 0.04 | -0.14 | -0.02 | 0.13 | -0.06 | -0.21 | 0.14 |
| | 늦은진입#82-84년 | 0.33** | -0.02 | -0.26** | -0.05 | 0.26* | -0.04 | -0.46*** | 0.24 |
| | 비취업#73-75년 | -0.05 | 0.04 | -0.00 | 0.02 | 0.08 | 0.05 | -0.24 | 0.11 |
| | 비취업#76-78년 | -0.02 | 0.07 | -0.08 | 0.04 | 0.15 | 0.02 | -0.29** | 0.13 |
| | 비취업#79-81년 | 0.14 | -0.03 | -0.13 | 0.02 | -0.02 | -0.09 | -0.04 | 0.15 |
| | 비취업#82-84년 | -0.02 | 0.07 | -0.19* | 0.14 | 0.17 | -0.13 | -0.14 | 0.10 |
| Constant | | 0.26*** | 0.18*** | 0.34*** | 0.21*** | 0.16* | 0.04 | 0.51*** | 0.29*** |
| N | | 1,879 | 1,879 | 1,879 | 1,879 | 1,826 | 1,826 | 1,826 | 1,826 |
| R-squared | | 0.07 | 0.07 | 0.11 | 0.08 | 0.05 | 0.08 | 0.24 | 0.11 |

*** p<0.01, ** p<0.05, * p<0.1 자료: 한국노동패널자료(1-20차)

<그림 5-13>은 노동이력 유형 변수와 코호트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낸다. 그림을 단순화하기 위해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과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형',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속형', '비취업 지속형'의 추이만 제시했다.

<그림 5-13> 각 가족이력 유형에 속할 기대 확률(노동이력 유형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남성부터 보자. 앞의 회귀분석에서 노동이력 유형이 의미가 있었던 곳은 '부모형'과 '배우자+자녀형', '배우자+(자녀) 이행형'이었다. 준거 집단은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속형'이었고, 대개는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과의 차이었다. '부모형'에 속할 가능성의 코호트별 차이를 보면,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의 기대 확률이 일관되게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혼자형'에서는 특별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배우자+자녀형'에 대한 기대 확률을 보면 일정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1970-72년생에서는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과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형'의 가능성이 높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속형'과 '비취업 지속형'의 가능성이 낮다. 두 집단의 차이가 확연하다. 그러나 최근 코호트로 오면, 노동이력 유형과 비취업 지속형의 차이는 유지·확대되었지만, 노동이력 유형 간 차이가 줄어들었다(다만, 1982-84년생에서는 다시 차이가 생겼

다). ‘배우자+(자녀) 이행형’에서는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과 나머지 유형의 차이가 유지·확대되지만 나머지 유형들 간의 차이는 크지 않다. 종합하면,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과 나머지 유형의 차이가 유지되는 경향이다. 다만 그 차이의 의미는 달라졌다. 초기 코호트에서는 ‘배우자+자녀 동거형’(초기 이행형)에 속할 가능성을 높였던 반면, 최근 코호트로 오면 그 차이가 ‘배우자+(자녀) 동거 이행형’(후기 이행형)에서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부모형’과 ‘혼자형’에서 나타난 코호트별 변화 양상에서 노동이력 유형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결혼 이력에 속할 가능성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의 경우 ‘배우자+자녀형’에 속할 가능성은 초기 코호트에서나 후기 코호트에서나 높다. 반면 ‘배우자+(자녀) 이행형’에 속할 가능성에서는 일관된 추이를 보이지 않는다.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형’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속형’은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유사해진다. ‘배우자+자녀 이행형’에 속할 가능성은 1976-78년생부터 크게 낮아졌다. ‘배우자+(자녀) 이행형’에 속할 가능성은 완만하게 증가했다.

정리하면, 남녀 모두 안정적인 이력에 속하는 것과 혼인 이력에 속하는 것이 관계가 있었다. 남자는 ‘배우자+자녀형’에 속할 가능성에서는 노동이력 유형별 차이가 좁혀진 반면, ‘배우자+(자녀) 이행형’에 속할 가능성에서는 차이가 유지·확대되었다. 여성은 여전히 ‘배우자+자녀형’에 속할 가능성에서 노동이력 유형의 효과가 유지된다. ‘배우자+(자녀) 이행형’에 속할 가능성에서는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의 위치가 일정하지 않다. 이것은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에 속하는 이들이 혼인 이력과 비혼 이력 모두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남성은 결혼 시점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노동지위가 결혼의 조건이 되지만 여성은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여성 또한 20대 중반에는 지위가 높은 배우자와 결혼하는 식으로 결혼과 안정적인 노동지위가 긍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그 시점을 지나면 ‘결혼’이 안정적인 노동지위와 긴장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143)]

### 4) 가족배경 효과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가족배경 효과의 코호트별 차이다.

---

143) 그 시점에서 찾을 수 있는 비슷한 수준의 배우자 집단의 규모가 축소되는 한편, 결혼이 노동이력 유지에 부과하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30대에 접어들면서 가치관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표 5-9> 각 가족이력 유형에 대한 선형확률모형(성별, 가족배경*코호트)

| | | (1) | (2) | (3) | (4) | (5) | (6) | (7) | (8) |
|---|---|---|---|---|---|---|---|---|---|
| | | 남성 | | | | 여성 | | | |
| | | 부모 | 혼자 | 배우자+ 자녀 | 배우자+ (자녀) 이행 | 부모 | 혼자 | 배우자+ 자녀 | 배우자+ (자녀) 이행 |
| 코호트 | (70-72년) | | | | | | | | |
| | 73-75년 | -0.01 | -0.03 | 0.02 | 0.03 | 0.01 | 0.02 | -0.19*** | 0.16*** |
| | 76-78년 | 0.01 | 0.02 | -0.05 | 0.03 | 0.08*** | 0.00 | -0.19*** | 0.11*** |
| | 79-81년 | 0.05 | 0.01 | -0.14*** | 0.08* | 0.06** | 0.02 | -0.28*** | 0.20*** |
| | 82-84년 | 0.07 | 0.19*** | -0.21*** | -0.05 | 0.09** | 0.13*** | -0.41*** | 0.18*** |
| 교육수준 | (고졸이하) | | | | | | | | |
| | 전문대졸 | 0.07** | 0.01 | -0.14*** | 0.06* | 0.06** | -0.00 | -0.16*** | 0.10*** |
| | 대졸이상 | 0.06* | 0.00 | -0.22*** | 0.16*** | 0.06** | 0.03 | -0.26*** | 0.17*** |
| 가족배경 | | 0.04 | -0.02 | -0.07*** | 0.05* | -0.01 | -0.01 | 0.02 | 0.00 |
| 노동이력 유형 | (중소 비정규) | | | | | | | | |
| | 대 정규 | -0.19*** | -0.06 | 0.06 | 0.18*** | -0.03 | 0.01 | 0.13** | -0.10* |
| | 대 비정규 | -0.07 | 0.01 | -0.02 | 0.08 | 0.01 | -0.01 | 0.08 | -0.08 |
| | 중소 정규 | -0.05 | -0.02 | 0.00 | 0.07 | -0.04 | -0.00 | 0.01 | 0.03 |
| | 혼합 | -0.01 | -0.05 | 0.01 | 0.05 | -0.07** | -0.04 | 0.22*** | -0.11** |
| | 늦은 진입 | -0.01 | -0.04 | -0.00 | 0.05 | 0.04 | -0.02 | 0.01 | -0.03 |
| | 비취업 | 0.13*** | -0.03 | -0.09** | -0.01 | -0.04 | -0.05** | 0.21*** | -0.11*** |
| 가족배경 *코호트 | 73-75년#가족배경 | -0.06* | -0.04 | 0.08** | 0.01 | -0.00 | 0.00 | -0.06 | 0.05* |
| | 76-78년#가족배경 | -0.10*** | -0.00 | 0.09*** | 0.01 | -0.00 | 0.01 | -0.04 | 0.03 |
| | 79-81년#가족배경 | -0.09** | -0.01 | 0.16*** | -0.05 | 0.01 | 0.01 | -0.01 | -0.01 |
| | 82-84년#가족배경 | -0.03 | -0.01 | 0.12*** | -0.07* | -0.02 | 0.03 | -0.02 | 0.01 |
| Constant | | 0.22*** | 0.16*** | 0.45*** | 0.16*** | 0.08** | 0.05** | 0.69*** | 0.17*** |
| N | | 1,879 | 1,879 | 1,879 | 1,879 | 1,826 | 1,826 | 1,826 | 1,826 |
| R-squared | | 0.06 | 0.05 | 0.11 | 0.08 | 0.04 | 0.05 | 0.23 | 0.0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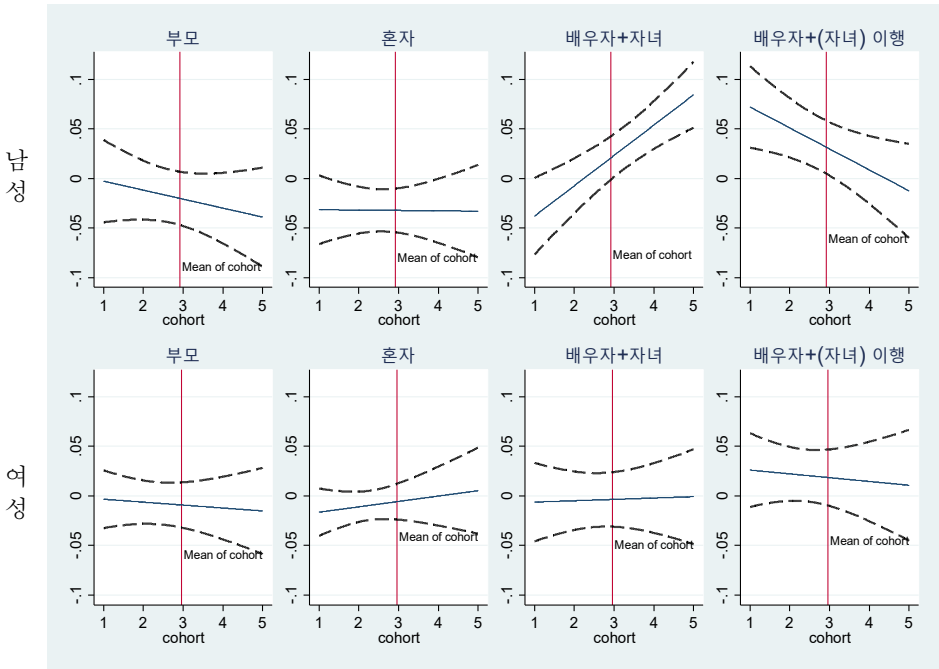
*** p<0.01, ** p<0.05, * p<0.1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앞의 회귀모형(<표 5-4>와 <표 5-5>)에서 확인한 것은 가족배경 효과의 남녀 차이였다. 남성은 가족배경이 좋을수록 결혼 이력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여성은 그런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효과가 코호트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보자.

<표 5-9>는 가족배경과 코호트의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내는 모형의 분석 결과다. 나타낸다. <표 5-4>와 <표 5-5>의 기본 모형들에 가족배경과 코호트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모형들이다. 남성은 '부모형'에 속할 가능성과 '배우자+자녀형'에 속할 가능성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고 '배우자+(자녀) 이행형'에 속할 가능성에서 일부 유의미하다. 반면, 여성은 '배우자+(자녀) 이행형'에 속할 가능성에서 일부 유의미한 것을 제외하면 모든 가족이력 유형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다.

<그림 5-14> 각 가족이력 유형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가족배경 한계 효과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그림 5-14>는, <표 5-9>의 분석 결과에 기초해, 각 가족이력 유형에 속할 가능성에 가족배경이 미치는 한계 효과를 코호트별로 표시한 것이다. 앞의 회귀분석 모형

에서 확인한 가족배경의 회귀계수는 이 그림에서 가로선으로 표시한 평균값이다. 0을 기준으로 값이 양수이면 정적 관계에 있음을, 값이 음수이면 부적 관계에 있음을 나타낸다. 0이면 효과가 없다. 또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면 회귀계수의 값이 유의미하지 않다고 본다.

남성의 경우 '부모형'에 속할 가능성에서는 최근 코호트로 오면서 가족배경이 부적 효과를 갖는 추이를 보인다. 그러나 유의미하지는 않다. '혼자형'에 속할 가능성과는 부적 관계를 맺고 있고, 이것이 일관되게 지속된다. '배우자+자녀형'에 속할 가능성에 가족배경이 미치는 효과는 크게 변했다. 1970-72년생의 경우 가족배경이 좋을수록 '배우자+자녀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으나 효과의 방향이 점차 바뀌어서 1979-81년생에서는 정적 관계로 전환되고, 1982-84년생에 오면 또렷한 정적 효과를 보인다. 즉 코호트 차이가 또렷하다. '배우자+(자녀) 이행형'에 속할 가능성에서는 반대 추이가 나타난다. 1970-72년생의 경우 가족배경이 높을수록 '배우자+(자녀) 이행'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1982-84년생에 오면 효과가 사라진다. 회귀분석 모형에서는 '배우자+자녀형'에 속할 가능성과 '배우자+(자녀) 이행형'에 속할 가능성에 비슷한 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추이는 정반대였던 것이다. 이것은 가족배경 효과를 나타내는 시점이, 다시 말하면 계층화가 진행되는 지점이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부모의 자산이 남성의 결혼 시점만을 앞당긴다는 연구 결과(권오재, 2017)와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20대 중반에 결혼할지 여부에서는 가족배경이 중요해졌다. 반면 20대 후반-30대 초반에 결혼하는 데에 있어서 가족배경의 영향력은 약해졌다.

여성은 모든 유형에서 가족배경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대부분 0을 포함하고 있고 코호트별 차이도 거의 없다. 특히 '배우자+자녀형'과 '배우자+(자녀) 이행형' 등 결혼 이력에 속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거의 효과가 없다. 여성의 경우 결혼 가능성에 대해 가족배경이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가 많다(Oh, Lee, and Woo, 2020). 위의 결과도 이를 지지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설명은 그리 충분하지 않다. 결혼 비용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경제적 측면보다는 가치관의 측면에 주목하는 해석도 있다. 성차별 수준이 높은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여성이 결혼 시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경향으로 해석해볼 수도 있다(김영미·계봉오, 2015; Bertrand et al., 2016). 이러한 경향은 한국에서 남성과 여성의 생애 전망이 서로 어긋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남성은 여전히 기존의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을 암묵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반면 여성의 생애 전망은 크게 변화하고 있고, 사회적 지위에 따라 크게 분화하고 있다(배은경, 2009). 이런 변화에 주목하면 가족이력의 변화 양상을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주

장에도 귀를 기울이게 된다. 어쨌든 높은 지위의 여성이 결혼 시장에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결혼을 매개로 한 계층화가 일정 부분 억제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 다만 최근 추이를 관찰한 연구들에서는 고학력 여성의 결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보고된다. 이 점에서 향후 결혼을 매개로 한 계층화가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 4. 소결

가족이행 패턴의 역사적 변화 맥락에서 1970-84년생의 위치는 "라이프코스에서의 혁신"(Giele, 1998: 231)을 본격화한 집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1960년대 중반 코호트에서 보였던 변화의 징후가 1970년대 중반 코호트에서 확연해진다. 평균 결혼 연령이 크게 증가했고, 이행기간은 대폭 늘어났다. 특히 남성의 이행기간 변화폭이 컸다. 그와 더불어 분가율도 이 코호트에서부터 확연하게 감소한다. 이들의 부모 세대가 형성했던 결혼이행의 패턴(평균 초혼 연령의 유지·축소와 이행기간의 압축)과는 질적으로 달라졌다.

이러한 변화의 한 가지 함의는 분가와 결혼 관계의 다양화, 또는 분리다. 근대적 노동시장의 형성은 1970-80년대에 분가와 결혼을 한 데 묶는 요인이 되었다. 결혼은 곧 분가(자립)이었고, 분가(자립)은 곧 결혼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래 진행된 노동시장의 재편은 둘의 연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다수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면서 꼭 결혼 관계를 맺어야 할 유인이 약해진 측면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시장 참여 보편화로 인한 결혼 비용 상승에 따라 결혼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대와 연동된 남성 노동시장 지위의 불안정화는 가족이행 국면에서 남성의 위치를 위계화하는 조건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가족이행 국면 변화의 양상을 1970-84년생의 가족이력 변화로 드러내 보고자 했다. 교육 경험 및 노동시장 경험과 마찬가지로 1970-84년생의 가족이력은 15년간 크게 변했다. 코호트별 이력 변화 양상은 '만혼화'로 요약된다. 남녀 모두 결혼 이력 비중이 줄었다. 주로 20대 초중반에 결혼·출산한 이력의 감소에서 기인한다. 뚜렷한 변화는 경제위기 이후에 노동시장에 나온 코호트에서 나타났다. 비교적 일찍 결혼한 이력 비중이 줄었고, 부모와 함께 사는 이력 비중이 늘었다. 1980년대생에 오면 성격이 다른 변화가 한 차례 더 나타난다. 늦게 결혼하는 이력 비중도 줄었고, 혼자 생활하는 이력 비중이 늘었다.

결혼 이력의 감소 추이는 남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여성은 그렇게 큰 변

화는 없었다. 비혼 이력 비중 증가 경향에서도 남녀 차이가 있다. 남성은 상대적으로 '혼자형'의 증가폭이 크다. 결혼 이력 비중 감소 추이는 저학력자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고학력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여성은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다. 오히려 최근으로 오면 대졸자의 결혼 이력 감소폭이 크다. 저학력자와 고학력자 모두에서 비혼/만혼화 경향이 나타난다. 교육 수준별 차이가 줄어들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의 시점에서 관측한 가족이력에서 남녀의 위치 차이는 크게 줄었다. 1970년대 초중반생은 결혼 시점과 관계없이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 이력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1970년대 후반생부터는 초기에 결혼할 가능성에서만 남녀 차이가 있을 뿐, 후기에 결혼할 가능성에서는 차이가 없다. 1980년대 초반생으로 오면 다시 초기에 결혼할 가능성에서의 차이는 사라지고, 후기에 결혼할 가능성에서 남녀 차이가 나타난다. 혼자 이력의 경우 남성이 혼자 이력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한때 성별 차이가 나타났으나 최근 코호트에서는 여성도 혼자 이력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남녀 차이가 사라졌다.

노동이력과 가족이력 관계는 코호트별로 달랐다. 남녀 모두 노동이력이 안정적일수록 혼인 이력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남성은 '배우자+자녀형'에 속할 가능성에서는 노동이력 유형별 차이가 좁혀진 반면, '배우자+(자녀) 이행형'에 속할 가능성에서는 노동이력 유형별 차이가 유지·확대되었다. 여성은 여전히 '배우자+자녀형'에 속할 가능성에서 노동이력 유형의 효과가 유지된다. 주목할 점은 '배우자+(자녀) 이행형'에 속할 가능성에서는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의 위치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의 회귀분석 결과와 같이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에 속하는 이들이 혼인 이력과 비혼 이력 모두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남성은 안정적인 노동지위가 일관되게 결혼 이행의 긍정적 조건이 되지만 여성은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여성의 경우 20대 중반에는 노동지위가 높은 배우자와 결혼하는 방식으로 결혼과 안정적인 노동지위가 긍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그 시점을 지나면 여러 측면에서 '결혼'이 안정적인 노동지위와 긴장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족배경 효과에서는 남녀 차이가 나타난다. 남성은 가족배경이 좋을수록 결혼 이력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여성은 그런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코호트별 차이도 흥미롭다. 남성의 경우 회귀분석 모형에서는 '배우자+자녀형'에 속할 가능성과 '배우자+(자녀) 이행형'에 속할 가능성에 비슷한 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추이는 정반대였다. 1970-72년생의 경우 가족배경이 좋을수록 '배우자+자녀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으나 효과의 방향이 점차 바뀌어서 1979-81년생에서는 정적 관계로 전환되고, 1982-84년생에 오면 또렷한 정적 효과를 보인다. '배우자+(자녀) 이행형'에 속할 가능성에서는 반대 추이가 나타난다. 1970-72년생은 가족배경이 좋

을수록 ‘배우자+(자녀) 이행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으나 1982-84년생에 오면 그 효과가 사라진다. 이것은 가족배경이 효과를 나타내는 시점이, 다시 말하면 계층화가 진행되는 지점이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부모의 자산이 남성의 결혼 시점만을 앞당긴다는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20대 중반에 결혼하는지 여부에서는 가족배경이 중요해졌다. 반면 20대 후반-30대 초반에 결혼하는 데에 있어서 가족배경의 영향력은 약해졌다.

여성은 모든 유형에서 가족배경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코호트별 차이도 거의 없다. 결혼 비용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성차별 수준이 높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여성이 결혼 시장에 들어가지 않는 경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높은 지위의 여성이 결혼 시장에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결혼을 매개로 한 계층화가 억제되는 측면이 있다. 남성의 경우 계층화 추이가 또렷하고, 이것이 만혼화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 제6장 결론

> 기회 균등이란 사회의 계층 사다리를 올라갈 기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자 타고난 덕과 재능, 인간 경험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모든 능력, 삶의 잠재력을 '지능'에 상관없이 최대한 발전시킬 기회를 균등하게 만드는 일이다.
>
> - 영(2020[1994]: 269-270)

이 연구는 길게는 지난 40년의, 짧게는 지난 20년의 한국 사회 변동의 성격을 성인 이행 경로 변화라는 차원에서 포착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보려는 시도였다. 분석 과제는 1970-84년에 태어난 한국인이 20대-30대 초중반(1990년대-2010년대 중반)에 밟은 생애 이력을 규명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 생애 이력은 학교를 졸업한 이래 84개월간 밟은 '노동이력'과 만 28-33세에 밟은 '가족이력'으로 포착하고자 했다. 두 이력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교육이행 과정도 검토했다.

연구의 1차 목표는 이 이력들이 출생시점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1970-84년생을 5개 출생코호트(1970-72년, 1973-75년, 1976-78년, 1979-81년, 1982-84년)로 구분했다. 2차 목표는 출생시점에 따른 이력 변화 양상이 젠더와 계층이라는 주요 사회 범주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특히 코호트에 따른 이력 변화의 동학을 젠더와 계층 축의 상호작용 효과로 구체화해 보고자 했다. 궁극적인 목표는 코호트별 변화라는 일반적인 변화 추이와 젠더와 계층에 따른 구체적인 변화 양상을 한국 사회에서 성인기 이행을 규정하는 제도적 맥락(학교-노동시장 연계, 가족 제도)과 역사적 배경(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이었다.

연구 질문은 세 가지였다. 첫째, 어떤 변화가 언제부터 나타나는가? 성인 이행을 구성하는 교육, 노동, 가족 측면에서 주된 행태 변화가 나타난 시점(코호트)은 어디인가? 둘째, 성별이나 계층과 같은 성인 이행 경로를 규정하는 주요 차원의 영향력은 어떻게 변했는가? 셋째, 각 지점의 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관통하는 변화의 성격은 무엇인가?

이하에서는 논문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결과가 갖는 함의를 세 차원에서 검토한다.

## 1. 요약

### 1) 성별화된 보편 이행에서 탈성별화된 특수 이행으로

3장에서 확인한 1970-84년생의 교육경험 변화 성격은 고학력화와 졸업 시점의 지연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고학력화를 추동한 것은 1990년대 초중반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1970년대 초중반생이었다. 특히 2000년대 초중반에 두드러진 4년제 대학 진학률 증가는 여성이 추동했다. 그 결과 남녀의 교육경험이 비슷해졌다. 경제위기 이후 학교에 머무르는 기간도 연장되었다. 연장 경향은 1976-78년생부터 나타나고, 1979-81년생부터 강하게 나타난다. 이 연장 추이를 추동한 것은 고졸자와 전문대졸자 남성이었다. 이는 저학력자의 학교-노동시장 이행 경로가 불안정해진 것을 반영한다.

급격한 교육 팽창에도 불구하고 교육기회 측면에서 가족배경의 영향력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고졸자에 속할 가능성에 가족배경이 미치는 영향력은 줄었다. 그러나 4년제 대학졸업자에 속할 가능성에서는 가족배경의 효과가 줄었다고 볼 수 없다. 남성은 영향력이 줄어드는 추이를 보이지만, 여성은 영향력이 늘어나는 추이를 보인다. 졸업 연령에 대한 가족배경 효과에서도 남녀가 다르다. 남성은 가족배경이 좋을수록 졸업 연령이 높지만, 여성은 가족배경이 좋을수록 졸업 연령이 낮다. 여전히 남녀 차이는 있지만 교육참여 기회의 측면에서는 남녀 경험이 유사해졌다.

4장에서 확인한 노동시장 경험 변화 성격은 임금노동자화와 노동이력의 위계화로 요약된다. 통념과 달리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 참여 수준이 높아졌다. 졸업 후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수준이 높아진 결과이면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경우가 적어진 결과다. 특히 여성이 퇴장하는 경향이 크게 약화되었다. 노동시장 참여 수준 증가 추이는 노동시장의 불안정화 경향과 함께 나타났다. 불안정화 경향은 중소기업화와 비정규직화로 구성된다. 두 하위 경향은 학력 수준과 연계된다. 저학력자에서는 비정규직화 경향이, 고학력자에서는 중소기업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가장 큰 변화를 겪은, 변화에 가장 취약했을 집단은 여성 고졸자였을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는 성별 차이와 학력 차이가 지속되었으나 변화 조짐도 확인된다.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에 속할 가능성의 성별 차이는 점차 좁혀졌다. 퇴장형 이력에 속할 가능성의 성별 차이도 점차 좁혀졌다. 특히 1976-78년생부터 크게 좁혀졌다.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형’에 속할 가능성의 성별 차이는 사라졌다. 경제위기 이전에 노동시장에 나온 두 코호트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으나 이후 세 코호트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사라졌다. 남녀 차이는 여전히 크

지만, 격차의 폭 자체는 줄어들었다.

노동시장 참여 측면에서 남녀의 경험은 유사해졌다. 다만, 최근에는 중소기업 정규직 이력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이력으로 남녀 차이가 드러난다. 남녀 각각에서 나타난 교육 수준 효과의 변화 양상도 성별 효과의 변화 양상과 유사하다. 남성의 경우 노동시장 비참여 이력(저학력자)과 노동시장 참여 이력(고학력자)의 차이가 비정규직 이력과 정규직 이력의 차이로 전환되었다.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 비참여 이력(고학력자)과 참여 이력(저학력자)의 차이가 정규직 이력과 비정규직 이력의 차이로 전환되었다. 남성의 경우 저학력자가 비참여 이력에 속했다면 여성의 경우 고학력자가 비참여 이력에 속했고, 따라서 변화의 성격이 다르다.

가족배경의 영향력은 전반적으로 강화되었다.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좋은 가족배경과 안정적인 이력에 진입할 가능성의 관계가 강해졌다. 그 정도는 남성이 강하다. 효과가 나타나는 지점도 다르다. 남성은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속형'에서 가족배경 효과가 나타난다. 여성은 가족배경이 좋을수록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 '비취업 지속형'에 속할 가능성은 낮다. 즉 여성은 한 단계 낮은 수준인 '중소기업 정규직 지속형'과 '비취업 지속형'에서 가족배경 효과가 나타난다.

5장에서는 가족이력의 변화를 확인했다. 가족이력의 변화는 '만혼화'로 요약된다. 거꾸로 말하면 '부모 동거화'와 '독신화' 경향이다. 결혼이력 비중 감소는 남녀 모두 20대 초중반에 결혼·출산한 이력의 감소에서 기인한다. 경제위기 이후에 노동시장에 나온 코호트에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1976-78년생부터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1982-84년생에게서 확연해진다. 1982-84년생의 특징은 혼자 이력 비중 급증이다. 남성은 결혼이력 비중 감소 추이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비혼 이력 증가 추이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혼자 이력 증가 폭이 크다. 1970년대 중반생부터 1차 변화가 나타나고 1982-84년생에서 변화 추이가 좀 더 또렷해진다. 여성은 부모와 함께 있는 이력이 늘어났다. 대략 1976-78년생을 기점으로 그 전과 그 후로 구분할 수 있다. 변화 폭은 저학력자에게서 더 컸다. 저학력 남성에게서는 비혼 경향이, 고학력 남성에게서는 만혼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 결과 교육 수준별 차이가 더 커졌다. 반대로 여성은 교육 수준별 차이가 줄어들었다. 저학력자에게서 혼인 이력이 더 많이 줄고 고학력자에게서 '혼자형' 이력 비중이 늘어나면서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의 시점에서 관측한 가족이력에서 남녀의 위치 차이는 크게 줄었다. 1970년대 초중반생은 결혼 시점과 관계없이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이력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1970년대 후반생부터는 초기에 결혼할 가능성에서만 남녀 차이가 있을 뿐, 후기에 결혼할 가능성에서는 차이가 없다. 1980년대 초반

생으로 오면 다시 초기에 결혼할 가능성에서의 차이는 사라지고, 후기에 결혼할 가능성에서 남녀 차이가 나타난다. 혼자 이력의 경우 남성이 혼자 이력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한때 성별 차이가 나타났으나 최근 코호트에서는 여성도 혼자 이력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남녀 차이가 사라졌다.

남녀 모두 노동이력이 안정적일수록 혼인 이력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남성은 '배우자+자녀형'에 속할 가능성에서는 노동이력 유형별 차이가 좁혀진 반면, '배우자+(자녀) 이행형'에 속할 가능성에서는 노동이력 유형별 차이가 유지·확대되었다. 여성은 여전히 '배우자+자녀형'에 속할 가능성에서 노동이력 유형의 효과가 유지된다. 주목할 점은 '배우자+(자녀) 이행형'에 속할 가능성에서는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의 위치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기업 정규직 지속형'에 속하는 이들이 혼인 이력과 비혼 이력 모두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가족배경 효과에서는 남녀 차이가 나타난다. 남성은 가족배경이 좋을수록 결혼 이력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가족배경이 효과를 나타내는 지점은 이동했다. 20대 중반에 결혼하는지 여부에서는 가족배경이 중요해졌다. 반면 20대 후반-30대 초반에 결혼하는 데에 있어서 가족배경의 영향력은 약해졌다. 여성은 모든 유형에서 가족배경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코호트별 차이도 거의 없다. 결혼 비용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지만 성차별 수준이 높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여성이 결혼 시장에 들어가지 않는 경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높은 지위의 여성이 결혼 시장에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결혼을 매개로 한 계층화가 억제되는 측면이 있다. 남성의 경우 계층화 추이가 또렷하고, 이것이 만혼화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세 영역 모두에서 확인된 변화의 시점은 대략 경제위기와 조응한다. 1976-78년생을 기준으로 전과 후의 이력이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변화의 성격을 단절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변화의 추이 또한 단선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학교-노동시장 이행 국면에서 나타난 30년 변화의 성격은 '지속 내 변화'로 보인다.

변화의 성격을 평균적으로 말하면 젠더 차이의 축소와 교육 수준이나 가족배경에 따른 차이의 증가로 요약할 수 있다. 교육이행 국면에서 1970-84년생은 교육경험의 성별 격차가 축소된 과정의 정점을 지났다. 노동이행 국면의 경우 경제위기 이전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코호트만 해도 노동이력의 교육 수준별 차이보다는 성별 차이가 컸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에 진입한 코호트는 성별 차이보다 교육 수준별 차이나 가정배경에 따른 차이가 커졌다. 물론 성별 차이는 여전히 남아있다.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변화는 노동시장 참여의 보편화와 제한된 탈성별화, 또는 재성별화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경향의 한 결과는 여성 내부의 이질성 증가다. 그것의 간접 효과로

남성 사이의 이질성 또한 커졌다. 그것이 결혼을 매개로 '층화'되면서 뚜렷해진 것이 계층 차이다. 즉 이들이 성인으로 이행했던 시기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축이 젠더에서 계층으로 전환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성인기 이행 경로 변화의 성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별화된 보편 이행'에서 '탈성별화된 특수 이행'으로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

### 2) 급격한 형식적 기회 균등화의 결과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은 별로 절로 구분해 답하고자 한다. 앞에서 규정한 변화를 꼭 근대적 라이프코스에서 탈근대적 라이프코스로의 변동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한국에서 근대적 라이프코스는 생애 전반에 걸쳐 구현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세대별로 특정 국면에서 그렇게 살았을 뿐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 성인기 이행의 지체와 계층화 현상이 탈표준화가 아닌 표준화의 결과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성인 이행 경로를 규정한 핵심 요인은 교육의 팽창이었다. 고등교육의 보편화는 결과적으로 경쟁의 일원화·전면화를 낳았고, 학교를 떠나는 시점을 대폭 뒤로 이동시켰다. 교육기회의 팽창과 자녀 수 감소 등은 교육기회 획득의 가족배경 차이를 줄인 배경이었다. 교육팽창은 노동시장의 형성과 맞물려 진행된다. 노동시장 참여수준 증가는 공식 교육의 확대로 설명할 수 있다. 1970년대에 노동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되면서 학교-노동시장 이행 경로가 공식화된다. 1980년대 중후반에 오면 공식화 수준이 매우 높아진다. 교육기회의 균등화는 일정 수준까지는 성인기 이행을 '스무스'하게 한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 임계를 지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수준은 평등화할 기회가 남아 있을 때까지다. 그러나 이 수준을 넘어서면 성인기 이행은 급격하게 '울퉁불퉁'해진다. 교육팽창 속도가 노동시장 구조 변화를 앞질러 가면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1970-84년생이 노동시장에 이행했던 시기가 그러한 경우였다.

이 국면에서 특징적인 것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수준 증가인데, 이것은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한다. 경제위기 이전에도 여성의 교육 수준은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낮지 않았다. 다만, 여성의 교육은 주로 결혼시장 (또는 자녀 교육시장) 가치로 평가되었다. 남성의 교육 수준이 높았던 상황에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조건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남성의 지위를 흔들면서 사회적으로, 여성 스스로도 교육의 가치를 재평가하기에 이른다. 즉 여성이 교육을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교육 참여 수준과 노동시장 참여 수준이 동시에 높아졌다. 물론 남녀 모두의 불안정화 경향 또한 1997년의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는 그 전보다 상층 화이트칼라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여성의 급격한 진학률 상승이 가능했던 것은 그 전에도 어느 정도 교육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갖춰진 조건에서 논리가 변하면서 여성의 참여가 급격히 늘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학교-노동시장의 연계를 거쳐가는 이들을 늘이는 한편 연계의 실질적인 의미는 약화시켰다. 성별 차이는 일정 부분 축소되었지만, 노동 지위가 더욱 위계화되었다.

생산 영역 이행 경로의 표준화는 재생산 영역 이행 경로의 분화를 낳았다. 가족 이행 이력의 변화는 1차적으로는 학교 졸업 시점의 연장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한편으로 노동이력의 변화와도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남성은 본인의 노동이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모두가 노동시장에 속하게 된 것의 함의는 양가적이다. 누구나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되면서 한 명의 소비자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든 '혼자' 살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동시에 모두가 시장이라는 단일의 위계 공간에 자리하게 되었다. 생활의 많은 부분이 시장화되었고, 많은 관계가 시장화되었기 때문이다. 모두가 시장에 참여하면서 결혼을 통한 '분업' 관계를 맺기도 어려워졌다. 그 결과 과거에 결혼이 생존을 가능하게 할 비시장적인 관계(수단)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생존의 결과(지위 이동의 수단으로)로 여겨진다. 개인(가족) 단위의 사회 결합이 시장화와 만나면서 더욱 공식화된 결과가 만혼, 비혼화 현상일 수 있다. 사회가 덜 공식화, 덜 시장화되어 있던 사회에서 일종의 최적의 노동분업 관계로 작동했던 결혼 제도가 흔들리게 된 것이다.

동시에 가정배경의 영향력도 커졌다. 본인의 시장지위와 본인이 속한 가구의 시장지위 모두의 영향력이 커졌다. 남성의 경우 가족영역에서 계층화 현상이 확인된다. 물론 여성은 자신의 노동이력과 결혼 이행 가능성의 관계가 제한적이다. 또한 가족배경의 영향력도 약하다. 남녀 차이가 지속되는 것은 여전히 성별 규범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역설적으로 남성 사이의 계층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남성에서의 계층화 현상과 여성에서의 비계층화 현상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맞물려 있다.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경쟁의 전면화, 학교-노동시장 이행의 공식화, 결과적으로 시장화의 강화 등은 가정배경 변수의 영향력을 일정 부분 약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것은 역설적으로 결혼시장의 시장화를 초래했고, 결과적으로 가족 이행 영역에서의 계층화 가능성을 넓혔다. 한편, 졸업 시점의 연장, 노동시장 참여 경험의 보편화 등에 따른 결혼 이행 시점의 지연도 결혼 비용의 상승을 초래했다. 결국 생산 영역의 이행 경로에서 진행된 남녀 이력의 수렴 현상은 경쟁의 평등화를, 사회적 지위의 시장화를 의미한다. 그것은 나아가 결혼 시장의 계층화로 이어진 것

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계층화가 심화되었다고 느끼는 감정은 상당 부분(남성의 시각에서 볼 때) 결혼 이행의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일 수 있다.

교육·노동·가족 영역에서의 이행 패턴의 일반적인 변화 추이와 성별·교육 수준별 차이, 그리고 가정배경 영향력의 변화 추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결론은 교육 기회의 형식적 평등화가 단기간에 철저하게 진행된 결과가 성인기 이행의 전반적인 지체와 계층화라는 것이다. 그것은 '교육기회의 철저한 평등화'를 사회자원 분배의 제1원칙으로 삼은 한국 사회 특유의 사회자원 분배 원리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그 결과가 교육-노동시장 연계의 약화와 생산영역과 재생산영역 연계의 부분적 강화다.

이런 의미에서 성인기 이행 지체는 과거와 비교해 물질적 조건이 악화되어서, 또는 불평등이 심화되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기회 평등화에 따른 경쟁의 전면화, 격화를 또 다른 기회 확대로 완화하지 못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가족이행 경로의 분화 또한 결국 각자의 생애전망이 서로 달라서, 그와 맞물려 서로(남녀)에 대한 기대가 질서 잡히지 않은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즉 불평등이 문제라기보다는 불확실성이 문제일 수 있다. 거꾸로 말하면, 이제 불평등의 중요한 축은 물질적 차이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성의 수준이 될 수 있다(김석호 외, 2017).

성인 이행의 지체와 이행 경로의 계층화 추이는 꼭 한국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산업사회의 원리에 따라 조직된 사회라면 어느 정도는 겪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산업사회는 기본적으로 계층사회이며, 교육체제의 팽창은 필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모든 나라에서 고등교육이수율이 높아졌다. 학력 가치가 하락하면, 더욱 교육 투자가 일어나고 그 결과 학력 가치가 더욱 낮아진다. 학력 가치 하락은 일정 수준까지는 더욱 많은 교육 투자를 낳는다. 교육팽창으로 인한 교육제도와 노동시장 제도의 연계 약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대, 그로 인한 가족 이행에서의 계층화 등은 논리적으로 예상해볼 수 있는 결과들이다.

그러나 교육팽창의 증가의 폭과 속도는 다르다. 팽창 속도로 보면 일본과 스웨덴이 높은 수준이고, 미국과 영국이 그 다음 수준이며, 독일과 이탈리아 등이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이들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교육이 팽창했다.[144] 그런 만큼 급속하게, 또 철저하게 학력주의 논리가 관철되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근대 산업사회에의 핵심 전제인 교육 기회의 평등화를 뜻한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은 산업사회의 논리가 가장 철저하게 구현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근대적 라이프코스는 노동시장의 형성과 뒤이은 교육제도와 복지제도의 형성의 맥락에서 조직되었다. 한국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추세를 따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노동

144) https://data.oecd.org/eduatt/population-with-tertiary-education.htm

시장의 발달에 따라 교육제도가 점진적으로 팽창한 주요 산업국가와 달리 교육제도가 노동시장 형성을 앞질러 팽창한 특징을 갖는다. 그 결과가 이행 국면에서의 긴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 검토한 1970-84년생의 위치를 말해 보면, 기만당한 세대로 이름 붙여 볼 수 있다. 여기서 기만이란 이들의 처지가 그 전 세대보다 열약해졌다는 뜻만은 아니다. 이들은 그 전 세대보다 더 교육받았고, 더 공식화된 노동지위를 갖게 되었다.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뜻만도 아니다. 교육기회와 노동기회에서 가정배경이 미친 영향력은 최근으로 올수록 줄어들었다. 달리 말해 이들에 와서 좀 더 '성과' 위주의 사회가 되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바랐던 세상이다. 여기서 기만이란 근대화라는 것을 통해 한국 사회가 막연하게 꿈꾸었던 어떤 이미지가 깨졌다는 것이다. 그것은 좀 더 자유롭고, 다양한 삶의 경로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희망이 깨어졌다는 데서 비롯된다. 단일 차원에서 모두가 참여하는 경쟁체제 자체가 낳은 긴장과 획일화가 기만의 실체다. 생산 영역의 표준화, 공식화가 낳은 그 결과가 친밀성 영역에서의 이질(계층)화다.

교육 열망으로 치면 그 전 코호트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그 열망을 실제 구현한 여전히 소수였다. 다수는 그 소수가 누리는 혜택을 옆에서 보면서 그러한 약속의 힘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1970-84년생은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체험한, 그리하여 그것이 기만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의 경험으로 드러낸 세대다. 대학 진학률로 치면 1980년대 중후반 코호트가 더 높다. 그러나 이들은 적어도 어느 정도 관성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러한 교육 투자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실제로 진학률이 낮아지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후 코호트는 교육제도가 주는 약속이 어느 정도는 '기만'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아차렸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후 코호트는 내부 위계에서 상위로 올라가려고 더욱 철저하게 애쓰는 이들과 아예 관심을 돌린 이들로 분화되어 있을 수 있다.

'희망과 현실의 괴리'는 한국의 1970-84년생만을 규정할 수 있는 말도 아니다. 부르디외는 근대 사회의 교육 시스템이 갖는 계층 재생산 기능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현대의 교육시스템이 "사회가 보장하지 않는 아이들의 희망을 북돋아 놓았다"(Bourdieu, 2004[1984]: 162)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이라는 맥락에서 1970-84년생은 일종의 '세대'로서 그러한 괴리를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경험했다. 그것은 '현실'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희망'의 문제이기도 했다. 기회의 평등화는 기회의 차원을 점차 단일 축으로 수렴하는 경쟁의 전면화를 낳았다. 이런 의미에서 이들의 라이프코스는 '탈표준화'를 전망한 서구의 많은 전망과는 달리 더욱 표준화되었다.

물론 이 세대에서도 그러한 약속이 헛된 것이 아닌 수많은 사람이 존재한다. 여

기서 말하는 것은 집합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경향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기만은 특정 계층 지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하층의 좌절을 부각하지만, 전면화된 경쟁의 체감 수준은 중간계층이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다. 다시 말해 상층에 있는 이들이건 하층에 있는 이들이건 부모 세대가 제시했던 (또는 함께 믿었던) 약속에 비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기만당했다고 볼 수 있다.[145]

## 2. 함의

### 1) 라이프코스 연구 시각의 필요성

이 연구는 그동안 특정 시점에서 따로 봐 왔던 삶의 여러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종적으로 검토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담론 분석에 기반한 세대론과 계량 분석에 기반한 계층론의 맹점을 채우는 의미를 갖는다. 이를 통해 변화 양상이 생각했던 것만큼 극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그러니까 보다 장기적인 사회변동의 시간표 내에서의 변화라는 점을 의식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변화의 원인을 경제위기로 환원하려는 경향이 있다. 경제위기가 초래한 노동시장 불안정성을 성인기 이행 지연의 원인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가족구조의 변화가 노동시장 참여 양태에 미친 영향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집합적 행위 양식이 한국 사회 특유의 제도적 맥락에 배태되어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맥락이기도 하지만,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맥락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굳이 (열악한) 노동시장에 나가지 않아도, 굳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될 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가족경제에서 부모 역할이 중심에 놓이고 비중이 커진 것도, 경제적 의무로부터 청년이 해방된 것도 최근 현상이다. 먼저, 지난 한 세기 동안 자녀의 경제적 기여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가구가 부유해졌다. 한편으로는 여성의 임금 노동의 중요성이 커졌다. 그 결과 청년은 좀 더 오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감수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부모에게 자녀는

145) 물론 이러한 규정은 추정에 가깝다. 이 연구는 이들을 사회 변동을 드러내는 창으로 자리매김했기에 상대적으로 내부 차이에 주목했다. 기존의 세대론에서도 이들은 하나의 '세대'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들을 하나의 '세대'로 볼 수도 있다. 내부의 차이를 아우르는 구조적 동질성이 있을 수도 있고, 내부의 차이 자체가 이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속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하나의 '세대'로 볼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문화론적인 세대 연구의 관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도 연구의 초점은 담론 분석이 아닌 체계적인 생애사 연구에 맞출 필요가 있다. 이 작업은 후속연구과제로 남겨 둔다.

‘사랑’의 대상이라는 근대적 관념이 더욱 강화된 측면도 있다. 자녀가 제대로 된 자리를 잡기까지는 지원한다는 생각을 가진 부모가 많아졌다(Irwin, 1995: 3). 준 자율적인 시기인 청년기가 등장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이행 지연’ 현상은 장기 추세의 일부이고, 예상 가능한 것이었다.

한국도 이러한 장기 변화의 추이를 따른 사례로 볼 수 있다. 1970-84년생의 부모는 전후에 비로소 처음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모 세대가 되었다. 전후 한국 사회에서 근대 가족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형성된 맥락에서 자녀의 의미가 생산재에서 소비재로 전환된 것도 1970-84년생에 와서였다. 성인 이행 경로의 표준화 및 연장은 이러한 가족관계의 변화가 낳은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둘 모두를 통합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려면 고용시스템의 변화는 무조건 경제적인 변화로, 가족제도의 변화는 무조건 문화적인 (가치관의) 변화로 보는 시각도 깨야 한다.

### 2) 성인 이행 규범 재고의 필요성

이 연구는 오늘날 어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는 데에 시사점을 준다. 1980년대에는 청년이라는 삶의 국면이 정교하게 정의되면서 성인 이행 국면도 점차 표준화되었다. 비교적 단기간에, 눈에 띄는 형태로, 예측 가능한 형태로 이행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성인으로의 이행은 일종의 불연속의 표지였다(Buchmann, 1989: 83). 그러나 오늘날에는 잘 정의된 삶의 국면으로서의 청년 개념의 퇴색되고 있다. 학습·노동·여가(소비)가 특정 생애 국면에 한정되지 않는다. 한편 복지제도가 점차 확대되면서 ‘개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확대되고 있다. 역설은 표준화된 이행 경로의 형성과 맞물려 있었던 청년 개념이 이행 경로가 더욱 표준화되면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어른=독립’이라는 도식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이행의 본질이 ‘독립’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성립하기 어렵다. 그것은 사회적 지위 재생산, 또는 상승을 뜻할 뿐 독립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종속된 재생산 전략(“부모로부터의 미분리를 통한 성인기 이행 유형”(김은정, 2015: 106))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한 전략을 택하지 못하는 이들은 일찌감치 ‘독립’하거나 취직이나 결혼을 미룬 채 ‘미분리’된 채 살아간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패러사이트 싱글”(야마다 마사히로, 2004[1999])보다 ‘패러사이트 커플’이 오늘날의 이행 관계를 더 적절하게 표현한다. 몇 가지 사건의 비경험을 이행의 ‘유예’로 보는 시각도 유지되기 어렵다. 한편 남성 중심의 라이프코스 상을 전제로 한 위기론에 대해서도 재고(배은경, 2015)하게 한다.

우리는 성인기 이행이 지연되었다고 말하고, 이를 청년기 연장으로 이해하곤 한다. 청년기는 성인기와의 또렷한 구별이라는 전제에서 형성된 시각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사라진 것은 성인기가 아니라, 거꾸로, 적어도 동시에, 청년기일 수도 있다(허드슨, 2017[2000]: 99). 우리는 모두가 어른이 되지 못하는, 다시 말해 어린아이로 남는 사회를 우려(이승욱·김은산, 2013; 우치다 타츠루, 2013)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모두가 어른이 되어야 하는, 다시 말해 어린아이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회를 우려해야 할지도 모른다. 유예기간의 연장이 아니라 유예기간의 소멸이다.[146] 연령 규범과 그것을 떠받치는 조건의 해체는 추상적 시간을 언제든지 조직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것은 근대 초기 시간 체제가 형성될 당시의 시간 압박(정근식, 2000; 2005)과는 다른 맥락에서 부여되는 시간 압박이다. 이러한 변화에 직면해 한국 사회가 기존 연령 규범에 따라 짜인 제도를 고수할지 연령 통합적인 방식으로 제도를 재편할지는 열려 있다.

### 3) 사회 불평등에 대한 관점 전환의 필요성

이 연구는 사회 불평등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한국 사회는 근본적으로 비계층사회다. 지위 위계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중간집단 수준에서 조직된 어떤 사회적 범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러한 사회조직의 특징은 각 개인에게 사회이동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켰다. 조립형 공업화 전략에 따라 기술 교육에 대한 진득한 투자는 요구되지 않았고, 대신 모두의 열망을 품을 수 있는 일반 교육 제도가 아래에서부터 제도화되었다. 바로 앞 단계 교육제도를 거쳐온 이들의 열망을 담기 위해 다음 단계의 제도가 순차적으로 형성·확장되었다. 궁극적으로 모두가 한 곳을 보면서 대학 진학을 꿈꿨다. 학교제도는 학생들로 하여금 일찌감

146) 모든 활동이 취업 가능성의 잣대로 기획되고 평가되는 상황이, 대학입학과 동시에, 아니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의 모습이 그 실례가 아닐까. 이들은 청소년기에 있는 것일까, 성인기에 있는 것일까. 이들은 '미숙'한 것일까 '조숙'한 것일까. 이것은 부르디외가 말한 "비생산적인 시간"(2004[1984]: 159)의 소멸을 뜻한다. 비생산적인 시간은 생산적인 시간을 전제한다. 조만간 생산적인 시간을 살게 될 테니 지금은 자유를 경험해보자는 식이다. 생산적인 시간을 살아간다는 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비생산적인 시간의 의미가 사라진다. 생산적인 시간을 직접적으로 준비하는 시간만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 비생산적인 시간의 소멸, 아니, 생산/비생산 시간(시기) 경계의 소멸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른이 되지 못하는 사회인가, 아이가 되지 못하는 사회인가. 오늘날 청년의 집합심성을 "생존주의"(김홍중, 2015a)라고 명명한 맥락도 전자보다는 후자에 맞닿아 있다. 역설은 "중간지대"의, "청춘"(부르디외, 2004[1984])의 소멸이 동일 연령대의 다수가 "중간지대"에 들어선, 다수가 "청춘"을 보낼 수 있게 된 결과라는 점이다.

치 한계를 분명하게 내면화하게 하기보다는 보편적인 열망을 불러일으켰다. 이들을 관리한 것은 대규모 공개시험이었다. 그러나 노동시장은 급증한 대졸자를 수용하지 못했다. 경제위기의 충격은 이런 체제를 더욱 강화했다. 교육체제의 일극화가 강해졌다. 학교-노동시장 이행 경로는 더욱 표준화되고 일원화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가족배경의 영향력은 특정 국면·시점에서는 약해질 수 있지만, 특정 국면·시점에서는 강해질 개연성이 크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경제위기 이후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른바 청년 문제의 원인도 불평등의 심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맞는 말이다. 예컨대 입시 영역에서 노동시장 진입 영역에서 기회의 평등을 말하고, 공정을 말한다. 그러나 각기 다른 경쟁과 발달 단계가 사슬처럼 연결된 상황에서 어떤 한 영역을 떼어놓고 무엇이 기회균등인가, 무엇이 계층화인가를 정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따른다.

종합적으로 말해 한국 청년의 성인기 이행 지체는 과거와 비교해 물질적 조건이 악화되어서, 또는 불평등이 심화되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추구했던 기회 평등화 열망과 그것을 이루고자 한 실천은 경쟁의 차원을 단일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회 평등화에 따른 경쟁의 전면화·격화를 또 다른 기회 확대로 완화하지 못하면서 경쟁의 긴장이 극심해졌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불평등'은 어떤 의미에서는 비계층사회로서의 한국 사회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기회의) 평등화'의 결과다. 이 코호트의 위치가 특징적인 것은 급속한 평등화와 급속한 불평등화가 서로 포개진 국면에서 성인으로 이행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족 단위에서는 일종의 "문화 지체"(Ogburn, 1922) 현상을, 사회 단위에서는 "구조 지체"(Riley, Kahn and Foner, 1994) 현상을 낳았다.[147]

오늘날 청년 세대의 위치를 설명하는 두 가지 시각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세대론에서 말하는 것은 "가해자성을 인식"하고 '대승적 결단'에 따라 중장년 세대가 잉여분을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는 청년 정치세력화를 통해 청년 세대가 자기 몫을 쟁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세대론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서지만, 적어도 이 문제가 누가 더 많이 갖고 누가 더 적게 가져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더 많이 가졌다는 이들과 더 적게 가졌다는 이들이 사실은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물론 '386세대'의 양보도

147) 구조 지체란 사람들의 삶은 빠른 속도로 변하는데 이들의 삶을 둘러싼 사회구조와 연령 규정은 그렇게 빨리 변화지 않아서 생긴 격차를 뜻한다. 반면 문화 지체란 비물질문화(관습, 사회조직)의 변화 속도가 물질문화(기술)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생긴 격차를 뜻한다.

중요하다. 자신들의 것을 가져오는 청년 정치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자원 분배의 근본 원리로서의 '교육 자격'에 대한, '기회의 평등'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최근에는 세대론의 허구성을 주장하면서 계층 격차가 강조된다. 그런데 그 해법으로 다시 교육 기회의 평등을 말한다. 최근의 일련의 사태로 교육 기회의 평등에 대한 관심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다. "세습"사회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결론에서는 기회의 평등을 말한다(조귀동, 2020). 그러나 과연 오늘날 불평등을 더 많은 기회의 평등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인가.

흥미롭게도 최근 사회학계에서 주목받는 연구들은 적어도 기회의 측면에서는 불평등 악화 추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오히려 개방성이 강화된 측면도 있다고 지적한다(최성수·이수빈, 2018; Chung and Park, 2019). 이 연구는 이러한 인식과 실증 연구 결과의 괴리를 연결하는 고리가 될 수 있다. 사회이동성으로 측정한 지위의 세습성이 약화되는 것, 또는 상향이동성이 증가하는 것과 격차 의식의 강화는 함께 갈 수 있다. 그 동학은 '지위경쟁'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마강래, 2016). 이렇게 보면 기회의 확대와 경쟁의 강화는 함께 가는 현상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면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에 좀 더 눈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 묻게 된다.

피시킨(2016[2014]: 12-13)은 "기회 다원주의" 개념을 도입해 평등에 대한 사고를 전환할 것을 주장한다. 주어진 기회 구조 내에서 경쟁의 평등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우리 사회에서 기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분배되고 통제되는지를 좀 더 구조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누가 누구나 바라는 희소한 지위를 얻는가에 관한 공정성 문제만이 아니라, 애초에 기회 구조의 어떤 특성 때문에 이런 정도로 경쟁과 희소성이 생겨나는가"라는 문제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로 말하고 싶은 것은 여성이 차별 받았다거나 계층에 따른 격차가 커졌다는 것이, 여성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하고 하층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 연구의 기본 관심사는 "기회 구조의 어떤 특성 때문에 이런 정도로 경쟁과 희소성이 생겨나는가"라는 문제다.

이런 쪽을 눈을 돌리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최근에 부쩍 관심이 높아진 '기본소득'과 같은 것들이다. 이 안에 대한 의견이 많지만, 이 안의 핵심은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같은 양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지급하자거나 같은 조건에서 일하게 하자는 방안 등도 큰 틀에서는 같은 성격의 제언이다. 어떻게 선발되었든, 100대 1의 정규직 트랙으로 들어왔든 10대 1의 비정규직 트랙으로 들어왔든, 결과적으로 같은 일을 하면 같은 보상을 주자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기본소득과 같은 결과 평등화 방식의 효과가 가장 선순환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 생각한다. 형식적인 수준에서나마 기회의 문이 가장 열려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한국은 '신분사회'보다는 '계층사회'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기회의 평등화에 관심이 쏠려 있어서 결과의 평등화를 말하기가 어려웠다. 어떤 의미에서 기회 평등론은 결과의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역할(영, 2020[1994])을 했다. 경쟁의 장을 일원화하고 전면화함으로써 경쟁의 성격을 '고위험, 고수익'의 것으로 만들고, 그에 따라 결과의 격차를 더욱 키우는 한편, 그것을 정당화해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는) 기회를 불평등화하는 효과를 낳았다. 이런 부정적 효과는 이제 더 이상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의 여지가 없기에 앞으로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의식적으로라도 결과의 평등화를 위한 방안들이 도입한다면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기본소득을 통한 결과의 평등화는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기회의 평등화 효과를 낳으면서 동시에 일원적인 경쟁의 범위를 좁히고 강도를 낮추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것은 기회의 평등화를 그만 추구하자는 말이 아니다. 사회가 변하고 사람들도 변한 만큼, 기회의 평등화가 실질적으로 결과의 평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고리를 더 많은 기회의 평등에서 찾지 말고, 더 많은 결과의 평등으로 찾자는 말이다. "능력주의"라는 말을 고안한 마이클 영(2020[1994]: 20)이 일찍이 말한 기회균등 개념이 한 방향을 가리킨다. 아주 얇게 찌그러진 공정성 개념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

## <부록 1> 가족배경 변수 구성 절차

가족배경 지수 변수를 만드는 데 사용한 변수는 ① '아버지 교육 수준', ② '어머니 교육 수준', ③ '14세 무렵 아버지(어머니) 종사상지위', ④ '14세 무렵 가정의 경제형편'이다. 먼저 이들 변수의 정보를 차례로 살펴보자.

KLIPS에서 아버지 교육 수준 변수와 어머니 교육 수준 변수는 교육 수준을 묻는 문항과 졸업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교육 수준을 묻는 문항의 값은 7개('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이상')다. 졸업 여부를 묻는 문항의 값은 6개('졸업', '중퇴', '휴학', '재학 중', '수료', '잘 모르겠다')이다. 이 두 문항을 종합해 교육 수준 변수를 확정했다. 특정 교육 수준을 '졸업'했으면 그 교육 수준이 최종 교육 수준이 되고, 특정 교육 수준을 졸업하지 않았으면, 즉 '졸업' 이외의 값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한 단계 아래 교육 수준이 최종 교육 수준이 된다. 일례로, '대학'을 '졸업'했다면 '대학'이 교육 수준이 되지만,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면, '고등학교'가 교육 수준이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 수준을 코딩한 다음 '전문대학'과 '대학', '대학원 이상' 범주를 '전문대졸 이상'으로 묶었다.

아버지 교육 수준은 1차 조사부터 측정되었다. 전체 3,705 사례의 약 2%인 결측 사례는 '무학'으로 분류했다. 어머니 교육 수준은 4차 조사부터 측정되었다. 따라서 결측 사례가 전체 사례 중 약 10%(405개)로 더 많다. 이들의 경우 아버지 교육 수준에 따라 값을 대체했다. 아버지 교육 수준이 '무학'이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이면, 아버지 교육 수준과 같은 수준으로 어머니 교육 수준 값을 대체했고, 아버지 교육 수준이 '전문대학 졸업'과 '대학 졸업'이면 어머니 교육 수준 값을 '고등학교 졸업'으로 대체했다. 아버지 교육 수준이 '대학원 졸업'일 경우 어머니 교육 수준 값을 '대학 졸업'으로 대체했다.

다음은 종사상지위다. 종사상지위 변수는 응답자가 14세일 무렵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를 측정하는 변수 중 하나다. 6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종업원 있는 고용주,'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무직/주부'). 여기서 '가족종사자'를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에 포함시켰다. 변수 값은 지위의 위계가 드러나도록 역코딩했다. 그 결과 1이 '무직/주부'이고, 5가 '정규직 임금근로자'이다. 종사상지위는 1차 조사부터 측정되었다. 1차적으로는 아버지의 정보가 담겨 있고, 아버지가 없거나 무직일 경우 어머니 정보가 담겨 있다. 아버지 정보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기에 사실상 아버지의 종사상지위로 봐도 무방하다. 이 변수의 결측 사례는 140개로 전체의 3.8%다. 이들은 '무직'으로 분류했다. 전체 사례의

1.5% 비중을 차지하는 '가족종사자'는 '자영업자'에 포함시켰다. 대부분이 여성인 '가족종사자' 지위를 가족 단위 자영업을 보조하는 역할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경제형편이다. 이 변수는 5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평균보다 약간 높았다.', '평균 수준이었다.', '평균보다 약간 낮았다.', '평균보다 훨씬 낮았다.'). 변수 값이 클수록 경제 수준이 높도록 역코딩했다. 가정경제형편 변수는 8차 조사부터 측정되었다. 이런 이유를 포함한 여러 이유로 확인된 결측 사례는 495개로 전체의 약 13.4%를 차지한다. 이들의 경우 아버지 교육 수준과 어머니 교육 수준, 부(모)의 종사상지위 변수 정보의 조합에 따라 값을 채워 넣었다.[148)]

<부표 1-1> 가족배경 관련 변수

| 변수이름 | 변수값 | 사례수 | 퍼센트 |
|---|---|---|---|
| 아버지 교육수준 | 1. 무학 | 438 | 11.8 |
| | 2. 초등학교 졸업 | 728 | 19.7 |
| | 3. 중학교 졸업 | 931 | 25.1 |
| | 4. 고등학교 졸업 | 1,100 | 29.7 |
| | 5. 전문대 이상 | 507 | 13.7 |
| 어머니 교육수준 | 1. 무학 | 721 | 19.5 |
| | 2. 초등학교 졸업 | 1,082 | 29.2 |
| | 3. 중학교 졸업 | 921 | 24.9 |
| | 4. 고등학교 졸업 | 847 | 22.9 |
| | 5. 전문대 이상 | 133 | 3.6 |
| 아버지(어머니) 종사상지위 | 1. 무직 | 152 | 4.1 |
| | 2. 비정규직 | 315 | 8.5 |
| | 3. 자영업자 | 1,465 | 39.6 |
| | 4. 정규직 | 1,378 | 37.2 |
| | 5. 고용주 | 394 | 10.6 |
| 가정경제형편 | 1. 평균 하회 | 246 | 6.7 |
| | 2. 평균 이하 | 895 | 24.2 |
| | 3. 평균 | 1,947 | 52.6 |
| | 4. 평균 이상 | 560 | 15.1 |
| | 5. 평균 상회 | 55 | 1.5 |
| 합계 | | 3,705 | 100.0 |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부표 1-1>은 이들 4개 변수의 분포를 나타낸다. 아버지 교육 수준의 경우 약

148) 결측치를 대체하기 전 분포는 다음과 같다. 1. 평균 하회(6.0%), 2. 평균 이하(24.2%), 3. 평균(55.8%), 4. 평균 이상(12.3%), 5. 평균 상회(1.7%).

30%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자이다. 중학교 졸업자가 25%, 고등학교 졸업자가 30%다. 전문대학 졸업 이상인 자는 14%다. 어머니 교육 수준의 경우 약 50%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자이다. 중학교 졸업자가 25%이고, 고등학교 졸업자가 23%이다. 전문대학 졸업 이상인 자는 4%다. 그만큼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 수준 차이가 크다. 아버지 종사상지위의 경우 40%가 자영업자다. 약 11%인 고용주를 포함하면 약 절반이 비임금노동자였다. 정규직 임금노동자 비중은 37%이고, 비정규직 임금노동자 비중은 9%다. 가정경제형편의 경우 약 53%가 평균 수준이라고 답했으며, 31%가 평균 이하라고 답했고, 17%가 평균 이상이라고 답했다. 평균을 상회한다고 답한 이들의 비중은 2%가 되지 않는다.

<부표 1-2> 가족배경 관련 변수 간 상관관계

| | 부 교육수준 | 모 교육수준 | 종사상지위 | 경제형편 |
|---|---|---|---|---|
| 부 교육수준 | 1 | | | |
| 모 교육수준 | 0.7021 | 1 | | |
| 종사상지위 | 0.3443 | 0.2436 | 1 | |
| 경제형편 | 0.3478 | 0.2921 | 0.3419 | 1 |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부표 1-2>는 이들 네 변수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아버지 교육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어머니 교육 수준과의 상관계수가 0.70으로 상당히 높다. 아버지 교육 수준과 부(모) 종사상지위의 상관계수는 0.34로 보통 수준이다. 아버지 교육 수준과 가정경제형편의 상관계수도 0.35로 보통 수준이다. 어머니 교육 수준과 비교하면 부(모)의 종사상지위(0.24)보다는 가정경제형편(0.29)과의 상관관계가 좀 더 강하다. 종사상지위와 가정경제형편의 상관계수는 0.34이다. 모든 관계는 99%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하다.

이들 네 변수를 통합하는 데 활용한 방식은 요인 분석(factor analysis)의 한 종류인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PCA)이다. 요인 분석의 주요 목적은 상관관계가 있는 여러 변수들을, 원 자료의 정보를 최대한 담은 서로 관련이 없는 소수의 변수로 대체하는 것이다. 복잡한 상호 연관 관계로 엮여 있는 다수의 변수를 서로 관련이 없는 2-3개의 요인(components)로 축약해 자료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Bartholomew et al., 2008: 117). 이 작업의 맥락에서는 4개 변수의 정보를 한 차원으로 축약해 단일 척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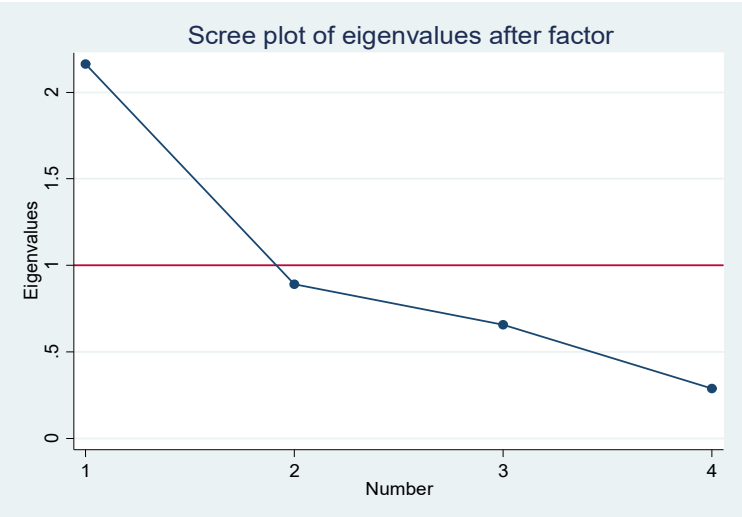
<부표 1-3> 가족배경 척도 변수 도출을 위한 주성분 분석 결과

| 요인 | 고유값 (Eigenvalue) | 차이 | 비중 | 누적 비중 |
|---|---|---|---|---|
| 요인1 | 2.16 | 1.27 | 0.54 | 0.54 |
| 요인2 | 0.89 | 0.23 | 0.22 | 0.76 |
| 요인3 | 0.66 | 0.37 | 0.16 | 0.93 |
| 요인4 | 0.29 | . | 0.07 | 1.00 |

주: 사례수는 3,705,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부표 1-3>은 주성분 분석의 결과다. 고유값을 기준으로 적정 요인은 1개로 확인된다.[149] 이 요인은 4개 항목 변수 전체 분산의 54%를 설명한다.

<부록 그림 1-1> 주성분 분석 결과에 기초한 적정 요인 수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적정 요인 수가 1개라는 점은 스크리 도표(<부록 그림 1-1>)로도 확인된다. 요인

149) 적정 요인 수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값이 고유값(eigenvalue)다. 각 요인이 기존 변수들의 분산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 나타내는 값이다. <부표 1-4>에서 제시한 요인 적재값의 제곱을 더한 값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요인 1의 고유값 2.16은 <부표 1-4>에서 제시된 요인 1의 적재값 0.86, 0.81, 0.61, 0.64를 각각 제곱하고 합한 값과 같다. 적정 요인 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보통 1이다. 주성분 분석에서는 고유값의 합이 항목 변수의 개수(4)와 같다.

수가 2개인 지점부터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이것은 요인 수로 1개가 적절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부표 1-4>는 도출한 요인으로 각 변수의 분산이 설명되는 정도(loadings)와 설명되지 않는 정도(uniqueness)로 구별해 나타낸다. 둘의 합이 1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보통 요인 적재값이 0.4 이상이면 그 항목 변수와 요인이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본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요인 1은 네 변수를 적절하게 요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모 교육 수준과의 관계가 다른 변수들에 비해 긴밀하다.

<부표 1-4> 요인 적재값(factor loadings)과 설명되지 않는 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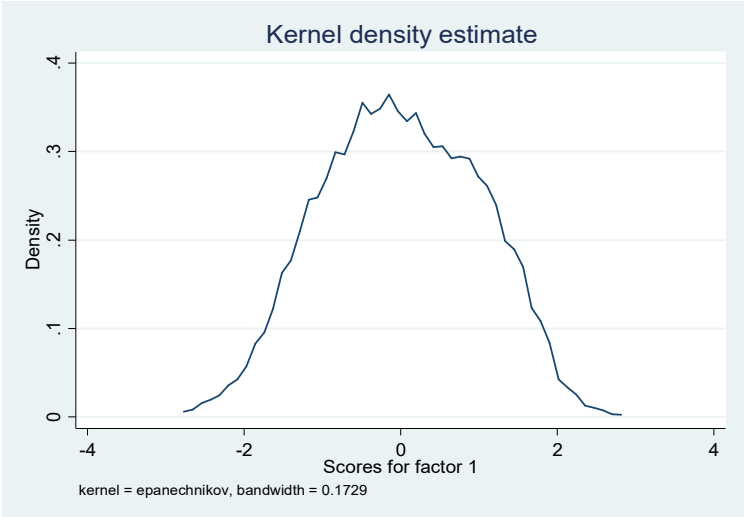
| | 요인 1 | Uniqueness |
|---|---|---|
| 부 교육수준 | 0.86 | 0.26 |
| 모 교육수준 | 0.81 | 0.35 |
| 종사상지위 | 0.61 | 0.63 |
| 경제형편 | 0.64 | 0.59 |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가족배경 변수의 값은 위 '요인 1'의 점수(factor score)가 된다. 요인 점수는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값으로 표준화되어 있다.[150] <부표 1-4>에서 요인 적재값은 이 요인 점수와 기존 변수의 상관계수이기도 하다. <부록 그림 1-2>는 요인 1 점수의, 즉 가족배경 변수의 분포를 나타낸다.

150) 요인 점수의 장점은 요인을 도출하는 데 활용한 항목 변수들의 비중을 다르게 반영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첫 번째 요인과 관련성이 높은 변수의 비중을 낮은 변수의 비중보다 크게 고려한다. 이런 점에서 단순 합계나 평균으로 척도를 도출하는 방식보다 원 개념에 가까운 값이 구성된다(Acock, 2016: 398).

<부록 그림 1-2> 가족배경 변수의 분포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 <부록 2> 노동지위 변수 구성 절차

여기에서는 노동이력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노동지위' 변수를 구성한 절차를 소개한다. 먼저, 기존 연구에서 노동이력을 구성한 사례를 검토해 한계를 확인하고, 이 연구에서 노동지위를 구성한 두 축(고용형태와 기업규모)을 소개한다. 다음으로 노동지위 변수를 조직한 절차를 소개하고 각 노동지위의 특징을 확인한다.

### 1. 기존 사례 검토

<부표 2-1>은 노동이력을 분석한 국내 주요 연구물의 이력 구성 방식을 정리한 것이다.[151] 노동이력 구성·분석 방식 측면에서 기존 연구는 다섯 가지 항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어떤 측면(고용형태, 직종 등)에서 이력을 구성하는가. 둘째, 시점 기준이 졸업 시점인가, 연령인가. 넷째, 단위가 연인가, 월인가. 다섯째, 배열 길이가 같은가. 이들 다섯 가지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노동이력을 구성하는 지위는 크게 고용형태와 직종으로 측정되었다. 고용형태는 비취업, 자영(고용주, 가족종사자),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을 기본으로 삼는 가운데 기업규모를 고려해 피고용지위를 다시 구분하거나, 비취업 상태를 세분화하는 경우가 있다. 그 외 임금수준이나 직업수준을 고려한 경우도 있고, 직장 이동 횟수 등을 고려한 경우도 있다.

이들 정보를 차원별로 구분해 별개의 이력을 구성할 수도 있고, 통합적으로 고려해 단일 이력을 구성할 수도 있다. 여러 이력을 구성할 경우 각 이력을 따로 보는 경우도 있고, 통합 이력을 구성해 보는 경우도 있다.

노동이력을 구성하는 방식이 곧 분석 방식을 결정한다. 단일 이력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명목척도로 구성할 수도 있고 서열척도로 구성할 수도 있는데, 명목척도로 구성한 경우에는 최적일치법(optimal matching methods)에 기초한 배열분석(sequence analysis)으로 분석하고, 서열척도로 구성한 경우에는 집단기반궤적분석(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을 활용한다.

---

151) 인용횟수를 고려하되 시기와 분석 방식에서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로 선택했다. 노동이력 연구는 패널자료가 수집된 2000년대 초반에 시작(한준·장지연, 2000; 한준, 2001)해, 자료가 본격적으로 쌓이기 시작한 2010년대에 본격화되었다(문혜진, 2013; 박미희·홍백의, 2014; 이순미, 2017; 최지원·정진철, 2017; 변금선, 2018; 이상직·김이선·권현지, 2018).

<부표 2-1> 노동이력 구성 사례

| 저자 | 자료 | 대상 | 이력형식 | 이력길이 | 상태변수 | 방식 | 기법 | 유형 | |
|---|---|---|---|---|---|---|---|---|---|
| 한준·장지연 (2000) | 노동 패널 | 비정규직을 경험한 10년 이력 이상자 | 15-60세 (단위: 연) | 같음 | 재학,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가족종사), 실업, 비해당 | - | 배열 분석 | 3개 | 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직 지속, 비정규직→실업 |
| 한준(2001) | 노동 패널 | 1999년 기준 40대, 60대 남녀 | 18-60세 (단위: 연) | 다름 | 직업종류(9개) | - | 배열 분석 | 5-9개 | 크게 지속, 혼합으로 구분(세부 유형은 집단별로 다름) |
| 최수정(2010) | 자체 설문 | 학령기 자녀를 둔 기혼 여성(35-49세) 519명 | 20세-현시점 (단위: 연) | 다름 (15-29년) | 직업종류(한국고용직업분류-12개)<br>직업수준(5개) | 통합 배열 | 배열 분석 | 11개 | 상향이동(사업가, 전문직, 준전문직), 정체(준전문직, 생산직, 사무직), 전환(준전문직, 자영업, 떠돌이), 하향이동(경력단절, 비근로) |
| 문혜진(2013) | 노동 패널 | 1990-91년, 2000-01년에 졸업한 당시 15-34세 | 졸업 시점부터 (단위: 월) | 같음 (72개월) | 직장 이동 누적 횟수<br>직업종류(한국표준직업분류-11개)<br>기업체 규모(대, 중, 영세)<br>고용형태(정규, 비정규, 자영·고용주, 가족종사자) | 통합 배열 | 배열 분석 | 12개 | 주요 3개: 비대기업 전문직 지속, 대기업 사무직 지속, 중소기업 기술직 지속 |
| 박미화·홍백의 (2014) | 청년 패널 | 2007-08년 졸업자 793명(상급학교진학자 제외) | 졸업 시점부터 (단위: 월) | 같음 (48개월) | 노동시장진입여부와 종사상지위로 서열 척도 구성(순수 비경활, 비경활-학생, 실업자 및 준 실업자, 비임금근로, 임시일용직임금, 상용직임금) | - | 집단 기반 궤적 분석 | 7개 | 노동시장 미진입, 상급학교 진학, 장기준비, 단기준비, 불안정노동, 상용이탈, 상용지속 |
| 이순미(2017) | 노동 패널 | 1970-1989년생 | 20세-현시점 (단위: 연) | 다름 (7-17년) | 취업 여부, 평소 주된 활동, 기업형태, 기업규모, 고용형태, 종사상지위를 조합한 10개 범주<br>임금수준(없음, 100만원 미만, 100만원대, 200만원대, 300만원 이상) | - | 배열 분석 | 7/8개 (남/여)<br>4/6개 (남/여) | 남성: 중소·정규직 지속, 중소·정규직 전환, 공공/대기업 정규직, 자영업, 무응답, 중소기업 비정규직, 학생, NEET<br>남성: 고소득, 중위소득, 저소득, 장기소득없음 |
| 최지원·정진철 (2017) | 노동 패널 | 1998-2003년에 졸업한 당시 19-29세 | 졸업 시점부터 (단위: 월) | 같음 (120개월) | 직업종류(한국표준직업분류-11개)<br>고용형태(정규, 비정규, 고용주·자영, 가족종사자), 기업규모(대/중소), 비취업(실업, 학업, 병역, 미상) | 통합 배열 | 배열 분석 | 6개 | 안정적 사무직, 진입유예, 니트, 서비스직/생산직 혼재, 안정적 준전문(기술)직, 안정적 전문직 |
| 변금선(2018) | 노동 패널 | 1969-1985년생 | 19세-29세 (단위: 월) | 같음 (132개월) | 임금수준, 종사상지위로 서열 척도 구성(미취업, 저임금, 저임금-중위임금, 중위임금 이상 임시일용, 중위임금이상 상용) | - | 집단 기반 궤적 분석 | 6개 | 저임금 진입 이탈, 저임금 유지, 진입지체 저임금 상승, 조기진입 저임금 가교, 장기교육 임금상승, 중간진입 임금상승 |
| 이상직·김이선·권현지(2018) | 노동 패널 | 1993-95년, 1998-2000년, 2003-05년 4년제 대졸자 | 졸업 시점부터 (단위: 월) | 같음 (120개월) | 고용형태와 기업규모 조합(자영, 대기업 정규, 중소기업 정규, 비정규/기타) | - | 배열 분석 | 8개 | 대기업 지속, 중소기업 지속, 단기 지연 중소기업 진입, 장기 지연 중소기업 진입, 중소기업 단기 유지, 비정규직, 자영업, 비취업 |

시점은 특정 시점(보통 졸업 시점)을 기준으로 하거나 연령을 기준으로 삼는다. 졸업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에는 보통 개월 단위로 이력을 구성하고 연령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에는 연 단위로 이력을 구성한다. 전자의 경우 대개 이력의 길이가 같고, 후자는 이력의 길이가 다르다. 졸업 시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보통 순수한 노동 상태만으로 이력을 구성하고, 연령을 기준으로 삼으면 학업 등 다른 차원의 상태도 포함된다.

이 연구에서는 고용형태 차원의 단일 노동이력을 구성한다. 여기에는 고용형태와 기업규모가 고려된다. 노동 이외 상태는 '비취업'으로 통일한다. 노동지위는 명목 범주로 구성된다. 시점은 최종학교 졸업 후 7년이고, 단위는 개월이다. 따라서 모든 이력의 길이는 같다. 그에 따라 최적일치법에 기반한 배열분석으로 이력을 유형화한다. 각각의 판단에 대한 근거는 차후 필요한 곳에서 상술할 것이다. 여기서는 기본 원칙만 언급한다.

이 연구는 각 차원을 별도 이력으로 만들어 통합배열 분석(Pollock, 2007)을 하기보다는 중심이 되는 이력 하나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 이력의 특징을 보여주는 맥락에서 다른 정보(직종, 산업, 임금, 노조 유무 등)를 제시한다. 통합배열 분석이 더 그럴듯해 보이지만 차원이 많아지면 유형화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고, 그것을 해석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대신 중심이 되는 이력 하나를 구성할 때 기존 연구보다 체계적으로 노동지위를 구성했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다른 자료와 비교 가능성, 또는 대표성이었다. 고용형태를 고려한 많은 연구는 기존 변수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썼다. 노동패널을 예로 들면, '종사상지위' 변수나 '(자기기입식) 정규직/비정규직' 변수다. 이 변수의 응답을 기준으로 구분할 경우 비정규직 규모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기업규모를 언급할 때도 사업체와 기업체의 구별을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는 고용형태와 기업규모와 관련된 기존 논의를 반영해 노동지위를 구성했다. 그리고 다른 정보를 교차해 이 지위의 성격을 더 뚜렷하게 밝혔다.

## 2. 노동지위 구성 기준

노동지위를 시장 기회의 지표로 본다면, 지위 구성을 적절하게 했다는 것은 지위별로 시장 기회의 차이가 또렷하다는 뜻일 것이다. 시장 기회의 차이는 한 사회의 노동시장 구조에 의해 1차로 규정된다. 1970-84년생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시기의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를 검토한 기존 연구를 종합하면, 분절 구조를 구성하는 핵심 축은 고용형태와 기업규모다(정이환, 2007: 335; 전병유, 2018: 21).

정이환은 한국 “고용체제”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파악, 평가하는 저서에서 한국 고용체제의 성격을 “기업 중심성이 강한 고용체제”(2013a: 98), 또는 “신자유주의적 분절 고용체제”(p. 90)라고 규정한다. 기업 울타리를 경계로 내부자와 외부자 사이에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p. 80). 그 격차는 속한 기업의 규모와 고용형태로 측정된다(전병유, 2018). 대기업 정규직 남성과 그 외 사람들의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학력이나 노동시장 경력 등 인적자본 요소의 영향력은 낮다고 평가된다. 이런 평가를 고려해 고용형태와 기업규모를 교차해 노동지위를 구성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노동지위는 7개 범주로 구성된다. 대기업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취업이다. 이하에서는 노동지위 구성 절차를 간략히 소개한다.

### 1) 고용 형태: 정규직/비정규직

먼저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를 구분했다. 이 구분은 종사상지위 변수로 쉽게 분류할 수 있다.

문제는 정규직/비정규직 구분이다. 1997년 경제위기 이래 비정규직 규모가 커지고 관심도 커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분을 노동시장 지위를 가늠하는 기본 잣대로 삼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해 이 연구에서도 이 구분을 사용했다. 통념상 정규직은 전일제(full-time)의 상용(permanent)으로 직접 고용된 일자리를 뜻한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은 이 세 측면에서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도로, 조사상으로도 둘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고, 구별 기준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다. 위의 정의와 같이 고용형태로만 정의하지 않고 고용지위(상당한 수준의 임금, 훈련, 보험 등)도 고려하기 때문이고, 고용형태로만 정의하더라도 측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정이환, 2003).

비정규직을 추정하는 데 활용하는 자료는 같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이하 ‘경활조사’로 약칭) 결과다. 그러나 분류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전통적인 방식으로 통계청 경활조사의 ‘종사상지위’ 변수에서 임시적과 일용직으로 분류된 사례를 합쳐 부르는 경우다.[152] 경제위기 직후 비정규직 규모 추정에 활용된 기준이다. 둘

152) 1963년부터 적용한 기준으로,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상용(1년 이상), 임시(1년 미만), 일용(1개월 미만)으로 구분한다. 임시·일용직 비중은 1990년에 45.8%, 1995년에 41.9%였다. 즉 경제위기 이전에도 상당한 비중이었다. 그러나 경제위기 직후인 1999년에 51.%로 절반을 넘었다는 사실이 크게 주목받았다. 이때부터 2002년까지 50%를 넘었다. 주의할 점은 상용, 임시, 일용이 단순히 고용계약 기간만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용계약기간에 따라 분류한 후 상용직 중에서 사내 규범 적용 여부, 퇴직

째, 첫 번째 방식에 따른 비정규직 규모 추정을 둘러싼 논란[153]이 커지자 2001년에 발족한 노사정위원회가 2002년 7월에 권고해 2002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154]부터 반영된 방식으로, 한시적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비전형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부르는 경우다. 이 기준에 따르면 '상용직' 중에도 '비정형직'이 있을 수 있고 '임시직', '일용직' 중에서도 '정형직'이 있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비정규직 범위가 가장 좁다. 2003년부터 공포하는 정부 공식 추정치는 이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155] 셋째, 첫 번째 기준과 두 번째 기준 하나라도 만족하는 경우를 포괄하는 방식(김유선, 2001a)으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하 '한노사연'으로 약칭)에서 이 기준에 따라 매년 비정규직 규모를 발표한다.

정리하면 고용형태로 보느냐, 근로조건으로 보느냐, 또는 둘 모두로 보느냐의 차이다. <부표 2-2>는 세 방식의 관계를 나타낸다. 첫 번째 방식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경활조사에서 확인한 '임시·일용직'으로, 31.2%다. 두 번째 방식에 따르면 부가조사에서 확인한 '비정형직'으로, 33.0%다. 세 번째 방식을 따르면 '상용직'이면서 '비정형직'이 아닌 범주 ①을 제외한 전체로, 40.9%다. 참고로, 노동패널자료 추정치는 두 번째 방식을 따른 것으로, 10차(2007년) 조사 때부터 적용되었다.[156]

---

금 및 상여금 수령 여부, 부가급여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해 차별적 대우를 받는 노동자를 임시·일용직으로 재분류한다.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상 고용계약기간이 불명확한 노동자가 많기 때문이다(최경수, 2001: 116-117; 정이환, 2003: 86). 문제는 이 부차 기준이 원 기준보다 더 주된 기준이 된다는 점(정이환, 2011: 241)이고, 이 점으로 인해 첫 번째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생겼다.

153) 어떤 연구자는 정규직으로 간주되는 '상용직'에 비정규직이 상당수 포함된다고 봤다(김유선, 2001a; 2001b). 파견, 용역, 시간제, 계약근로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어떤 연구자는 반대로 '임시직', '일용직'에 정규직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봤다(최경수, 2001). '고용의 지속성', '노무제공 방식', '근로시간제'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임시·일용직 비중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훨씬 적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 차이에 따라 2001년 8월 부가조사 자료를 두고 나온 비정규직 규모는 55.7%(김유선, 2001b: 128)와 24.3%(최경수, 2001: 115)로 크게 달랐다.

154)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매달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설문 문항인 종사상지위(상용·임시·일용) 이외에, 계약근로, 파트타임, 호출, 독립도급, 파견, 용역, 가내근로 여부 등을 추가로 질문함에 따라,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에 접근할 수 있는 최초의 조사다(김유선, 2001a: 98-99). 김유선(2001a: 98)에 따르면 2000년 8월에 처음 실시되었다. 그러나 공식 자료(20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보도자료)상에는 시험조사가 2001년 3월에 실시된 것으로, 본조사는 2001년 8월에 실시된 것으로 나온다("근로형태 및 인력이동 실태 관련 부가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라는 이름으로는 2002년 3월에 실시되었다. 이 해에는 8월에도 실시했고, 이후 2003-06년에는 매년 8월에, 2007-16년에는 3월과 8월에, 2017-19년에는 8월에 실시했다. 참고로, KOSIS에 공개된 표에는 2003년 8월 자료부터 수록되어 있다.

155) 노동부(2005년까지)와 통계청(2006년부터)이 매년 8월에 비정규직 규모를 발표한다.

<부표 2-2> 비정규직 규모 추계 방식 비교 (2018년 8월, 단위: 천 명, %)

| | | | 본 조사 | | 소계 |
|---|---|---|---|---|---|
| | | | 상용 | 임시·일용 | |
| 부가조사 | 설문문항 없음 | (정형) | ①<br>11,838(59.1) | ③<br>1,593(7.9) | ①+③<br>13,431(67.0) |
| | 한시, 시간제, 파견, 용역, 가내,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 (비정형) | ②<br>1,957(9.8) | ④<br>4,657(23.2) | ②+④<br>6,614(33.0) |
| 소계 | | | ①+②<br>13,795(68.8) | ③+④<br>6,250(31.2) | 20,045(100.0) |

주: 통계청(임시일용)=③+④, 통계청(비정규)=②+④, 한노사연(비정규)=②+③+④
출처: 김유선(2018: 34)의 <표 24>를 수정

정이환(2003)은 비정규직 규정 논쟁을 리뷰하면서 논쟁의 핵심이 고용형태와 근로조건이라는 기준을 혼용·혼동하는 것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둘을 구분하기 쉽지 않지만 분석상으로는 구분해서 보자고 제안했다(p. 89). 고용형태에 따라 (비)정형노동자로, 고용조건에 따라 정규노동자로 구분하자는 것이다. 꼭 어느 한 쪽을 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봤다. 그에 따르면, 통계청의 '임시·일용' 개념은 고용조건상의 차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기업내외의 차별이 심한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여전히 유용한 기준이다. 그렇지만 외국과 비교하기 위한 기준이나 비정규노동에 대한 정책 마련 필요성을 감안하면 고용형태에 의한 분류도 필요하다.

어떤 기준에 따라 분류했는지를 정확히 밝힌다는 전제하에 정이환의 제안처럼 고용형태와 고용지위를 구분해 측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이 연구의 맥락에서는 김유선의 정의가 실제 비정규직을 가장 적절하게 측정하는 기준이라고 본다. 비정규직이 과소 추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후 노동지위를 조작화할 때 이 틀을 최대한 따르려고 할 것이다. 다만, 노동패널조사자료는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5차와 10차 조사 당시에만 포함되어 모든 차수의 자료에 일관되게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 점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는 차후에 다시 언급할 것이다.

156) 이전까지 비정규직 규모 추정에 활용된 변수는 '종사상지위'와 '비정규직 유무(자기선언적 규정)'였고, 2002년 기준 22.5%와 22.2%로 나타났다. 종사상지위는 경활조사와 달리 고용계약기간만을 고려해 정의되고, 비정규직 유무는 응답자가 판단해 답한다. 이처럼 경활조사 자료에 근거한 추정치와 규모 차이가 상당해 논란이 있었고, 이를 반영해 5차(2002년)와 10차(2007년) 조사 두 차례에 걸쳐 문항을 보완했다(이상호, 2005; 2008).

### 2) 기업규모: 대기업과 중소기업

두 번째 축은 기업규모다. 이 연구에서는 기업체를 단위로 종사자 수 300인을 기준으로 2개 범주－대기업과 중소기업－로 구분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노동시장 불평등을 구조화하는 축으로 가장 주목받은 것이 기업규모였다. 1987년 이후 생산직에서도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면서 내부/외부 분절에 따른 불평등이 주목받았기 때문이다. 분절선은 기업규모에 따라 그어진 것으로 여겨졌다(정이환, 2013a: 220). 이 분절선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짙고, 이것이 한국 고용체제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평가된다(정이환, 2007; 전병유, 2018).[157]

다만 기업규모를 구분하는 기준은 생각보다 명확하지 않다. 전국사업체조사에서는 9개 범주로 구분하는데, 보통 종사자 수 300인을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한다.[158] 300인 기준으로 기업규모를 분류하는 다수 연구와의 비교가능성을 고려해 이 연구에서도 이 기준을 따랐다.[159]

기업규모를 말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규모의 단위다. 특히 주의가 필요한 지점은 기업규모를 측정하는 지표의 혼용에서 기인하는 혼란이다. 핵심은 기업체와 사업체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유선, 2014a; 2014b). 많은 조사 자료가 사업체 단위로 종사자 수를 제시한다. 통계청이 실시하는 전국사업체조사가 대표적이다. 2016년 결과를 보면, 사업체 수로는 300인 이상 사업체가 전체 사업체의 0.1%를 차지하며, 종사자 수로는 전체 종사자의 14.3%를 차지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사업체노동실태현황[160]에 따르면, 같은 해에 각각 0.2%와 15.2%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같은 해에 전체 취업자 대비 9.4%가, 임금노동자 대비 12.4%가 300인 이상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다.[161] 이를 근거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전체의 99%를 차지하

---

157) 그럼에도 최근에 기업규모보다 고용형태가 주목받는 이유로 정이환은 세 가지를 든다(2013a: 240-241). 첫째, 비정규직이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급증했기 때문이다. 둘째, 기업규모별 격차보다 정규/비정규직 격차가 더 불공평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셋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직화되면서 문제가 더 가시화되었기 때문이다.

158) 명시적인 논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해 온 경제학자 전병유도 최근의 글에서 이 기준이 “다소 자의적”이라고 밝히고 있다(전병유, 2018: 23). 최근에는 법적 맥락이나 정책적 논의 맥락에서 자산이나 매출액을 기업규모 구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159) 이전 연구에서는 500인을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눈 바 있다(이상직·김이선·권현지, 2018; 김이선·이상직·권현지, 2019). 연구대상자가 4년제 졸업자인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대기업’의 모습에 더 부합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60)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자료 중 ‘자영업자’,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로만 구성된 사업체, 공무원 재직기관을 제외하고 작성하는 통계다.

161) 세 자료 모두 KOSI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 88%를 고용하고 있다고들 말한다.[162)]

사업체를 단위로 한 조사의 문제는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대기업/중소기업 구별 기준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전국에 지점 100개를 가진 은행이 있다고 치자. 각 지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속한 '기업체'는 당연히 300인 이상 대기업으로 분류될 것이다. 그러나 조사에서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그가 근무하는 지점(사업체)을 단위로 종사자 수를 집계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기업체 단위로 집계한 통계도 나오고 있어 비교가 가능해졌다. 한 보고서는 2012년부터 조사한 기업생멸행정통계(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2013년 기준 기업체 기준으로 300인 이상 기업이 0.1%이고, 종사자 수로는 약 23%를 차지한다고 보고한다(한지영, 2015). 고용노동부가 2014년부터 발표하는 고용형태공시제 자료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체'에 일하는 이는 같은 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300인 이상 '사업체'에 일하는 이 223만명의 두 배인 436만명이었다(김유선, 2014a). 비중으로는 전체 취업자 기준으로 20% 정도 된다.

이 점을 고려해 이 연구에서는 기업체 단위로 측정한 종사자 수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했다.

### 3) 기타

위에서 언급한 축 외에도 여러 축을 고려할 수 있다. 노동지위를 구성하는 축이 다양해지는 경향을 반영해 고용형태나 기업규모 이외에 임금, 사회보험 가입 유무, 노동조합 유무 같은 요인을 고려해 복합적으로 지위를 구성하려는 시도가 있다. 고용형태와 임금, 사회보험 유무를 결합해 "노동의 불안정성"(이승윤·백승호·김미경·김윤영, 2017)을 측정한다든지, 고용형태와 기업규모, 노동조합 유무를 묶어서 "결합노동시장지위"(이철승, 2017)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작업이 예다. 이들은 고용형태보다 고용지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시도다. 가령 '노동의 불안정성'으로 규정한 고용지위를 기준으로 삼으면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를 분리해서 보는 기존 틀의 한계를 일정 부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세 축(임금/비임금,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외의 축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섯 코호트의 장기 이력을 일관된 틀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노동이력을 최대한 단순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162) "대기업 지점 직원이 중소기업 고용으로 분류되는 '마법'."(프레시안, 2017년 2월 13일자), "대선주자들의 '9988 경제구조'는 사기다."(프레시안, 2017년 3월 20일).

## 3. 노동지위 구성 절차

노동패널 20차 직업력 자료에서 노동지위를 구성할 때 활용한 변수는 <부표 2-3>과 같다. 변수는 크게 세 종류로 분류된다. 임금/비임금을 포괄하는 '종사상지위' 변수가 있고, 임금노동자에 한정해 고용형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변수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소속된 기업체의 규모(임금노동)나 고용한 사람이 있는지(비임금노동)를 확인할 수 있는 종사자 관련 변수들이 있다.

노동지위 구성 절차는 대략 네 단계로 구분된다. 첫째, 직업력 자료에서 회고 사례 정보를 확인하고 별도로 분류한다. 직업력 자료에서 사례 단위는 일자리다. 회고 일자리 사례의 경우 정보 자체의 신뢰도가 낮기도 하지만, 있는 정보도 한정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할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회고 사례의 비중이 적지 않고 이 또한 가용 정보이기에 분류 대상에 포함했다. 20차 직업력 자료에서 관측 사례 수는 191,694개다. 그 가운데 회고 일자리 사례는 21,422개(11.2%)다.

회고 일자리 사례는 종사상지위 변수에 기업규모만 고려해서 별도로 분류했다. 종사상지위 변수는 응답률이 100%다. 확인해야 할 것은 기업규모와 업종 변수의 응답률이다. 처음 시작한 일자리부터 첫 조사시점 직전까지 한 일자리 사례를 포괄한다. 이것은 직업력 자료에서 일자리번호 변수로 식별할 수 있다. 회고 일자리 사례 21,422개에서 이 사례의 비중은 9,433개로 약 44%다. 즉 이 사례에는 '종사자 수' 정보가 있다.[163] 실제로는 이 가운데 78.7%인 7,423개이고, 이것은 "모르겠다"고 답한 695개 사례를 제외한 숫자다. 종합하면, 분모를 21,422개로 잡으면, 응답율은 34.7%가 된다. 이것은 비회고 사례 응답률의 65.3%보다 낮지만,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니다. 이것을 보완할 업종 변수의 결측치 비중을 보면, 응답율은 93.3%다. 이러한 한계를 감안해 98년 표본에서 1998년 이전 정보이거나 통합표본에만 해당하는 사례의 2009년 이전 정보를 해석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하에서 설명하는 분류 절차와 중간 결과는 비회고 사례에 적용된다.

---

163) 회고 자료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15세 이후 조사시점 전까지 경험한 모든 직업에 관한 정보다. 여기에는 입직시기와 퇴직시기, 종사상지위(비회고적 정보와는 다른 범주체계), 산업, 직종 정보만 있다. 둘째, 첫 번째 조사 당시 가지고 있는 직업 바로 직전 직업에 관한 정보다. 이 경우는 앞의 정보에 더해 종업원 수, 구체적 퇴직 사유, 월평균 임금 등 더 많은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1차 조사(98년 1차 조사 당시 98표본 신규조사대상자와 09년 조사 당시 통합패널 신규조사대상자)에서만 수집되었다. 이후에 진입한 신규 조사자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황수경·양정승, 2002: 11).

<부표 2-3> 노동지위 구성에 활용한 변수(직업력 자료)

| 변수명 | 변수 설명 | 변수값 설명 | 원변수 | | 비고 |
|---|---|---|---|---|---|
| | | | 개인 | 직업력 | |
| wagework | 일자리형태 | 0: 비임금<br>1: 임금 | jobtype | jobtype | |
| status | 종사상지위[164] | 1: 상용직<br>2: 임시직<br>3: 일용직<br>4: 고용주/자영업자<br>5: 가족종사자 | p**0314 | j150 | |
| w_regular | 정규/비정규여부<br>(임금) | 0: 비정규직<br>1: 정규직 | p**0317 | j145 | 3차 조사에서는 제외 |
| fixed_con | 노동계약기간<br>유무(임금) | 0: 정해져있지않다<br>1: 정해져있다 | p**0501 | j156 | |
| fulltime | 시간제/전일제<br>(임금) | 0: 시간제<br>1: 전일제 | p**0315 | j155 | |
| t_regular | 노동시간규칙성 | 0: 불규칙적<br>1: 규칙적 | p**1002 | j201 | |
| t_standard | 정규노동시간<br>유무(임금) | 0: 비정규<br>1: 정규 | p**1003 | j202 | |
| wtime | 주당노동시간 | | p**1004<br>p**1006<br>p**1011<br>p**1012<br>p**1019<br>p**1031 | j202<br>j203<br>j205<br>j207<br>j208<br>j213 | 노동패널<br>유저가이드<br>Q24 참조 |
| wage | 월평균임금유무<br>(임금) | 0: 안 받고 일한다<br>1: 받고 일한다 | p**1641 | j315 | |
| public | 기업형태-공공부문<br>여부(임금) | 0: 비공공<br>1: 공공 | p**0401 | j501 | |
| n_staff | 종업원수-범주 | 1: 소(1-29인)<br>2: 중(30-299인)<br>3: 대(300인 이상) | p**0402<br>p**0403 | j503<br>j504 | |
| staff | 종업원유무<br>(비임금) | 0: 없다<br>1: 있다 | p**0409 | j502 | |

주: 변수 설명에서 괄호 안에 별도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임금/비임금 모두 해당

둘째, ‘일자리형태’와 ‘종사상지위’ 변수를 교차해 임금노동자와 고용주·자영업자, 가족종사자를 구분한다.

164) 회고 자료의 경우 다음과 같이 변수 값이 다르다. 1. 정규직 임금 근로자, 2.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 3. 종업원 있는 고용주, 4.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5. 가족종사자.

셋째, 임금노동자로 한정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한다. 이때 활용되는 변수가 '종사상지위', '노동계약기간', '전일제', '노동시간규칙성', '정규노동시간', '임금수령유무'다. 각 변수에서 상용직이면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전일제이며, 노동시간이 규칙적이고, 정규노동시간이 있으며,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경우가 정규직에 해당한다. 여기서 주당노동시간이 36시간 이상인 경우가 조건에 추가된다.[165] 마지막으로 '정규/비정규 유무' 변수도 추가된다.[166] 이렇게 정의한 정규직 사례를 제외한 사례(특정 변수에서의 결측치도 포함)가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167] 세부 기준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런 방식은 앞서 소개한 김유선의 정의를 따른 것이다(<부표 2-2>를 참조). 고용형태 측면에서 최대한 포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의해보려고 한 것이다. 그 기준은 1-20차 조사에서 일관되게 조사된 문항 중 고용형태를 구체화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고려하는 것이었다.

넷째, '종업원 유무' 및 '종사자 수' 변수를 활용해 비임금노동자를 고용주(유급 종업원을 둔 경우)와 자영업자(유급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로 나누고, 임금노동자(정규직/비정규직)를 대기업 소속과 중소기업 소속으로 나눈다. 고용주과 자영업자는 '종업원유무' 변수로 간단히 구분할 수 있다. 임금노동자의 경우 기업체 기준으로 300인 이상인 경우 대기업 소속으로,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 소속으로 분류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단위는 사업체가 아니라 기업체다.

고용형태와 기업규모를 확정하기 위해 여러 조작을 거친 만큼 상세 내용을 밝혀둔다. <부표 2-4>는 종사상지위 변수와 여타 고용형태에 관한 변수들의 관계를 보여

165) 여기에는 초과근무시간도 포함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시간제 노동자'를 규정하는 기준이 주당 노동시간 36시간 미만이다.

166) 3차 조사에서는 해당 정보가 조사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차 조사에서 조사된 일자리 사례의 경우 결측값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체했다. <부표 1-4>에서 '정규/비정규' 변수를 제외한 6개 변수 모두에서 각각 정규직 특성을 나타내는 값으로 기록된 경우만 '정규직'으로 코딩했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으로 코딩했다.

167) 이전 연구에서는 비정규직을 먼저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를 정규직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취했다(이상직·김이선·권현지, 2018: 151). 그러나 일반 사회조사에서 비정규직이 일반적으로 과소 추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규직을 먼저 규정하는 것이, 다시 말해 비정규직을 최대한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리라고 판단했다. 특히 그동안 노동패널조사에서 집계되는 비정규직 비중이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로 집계한 비정규직 비중(앞에서 소개한 두 가지 방식 모두)보다 적다는 점이 지적되어왔다. 노동패널조사에서는 근로계약만을 기준으로 분류하거나 응답자의 판단에 따라 분류하는데, 그에 따른 비정규직 비중이 2000년대 초반까지 22-23%로 상당히 적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측정 방식의 한계를 고려해 노동패널조사에서도 상세한 고용형태 정보를 묻는 문항을 두 차례(5차와 10차)에 걸쳐 추가한 바 있다(이상호, 2005; 2008; 성재민, 2011). 그 결과 최근 조사에서는 그 비중이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분류한 비정규직 비중과 비슷해졌다. 이번 작업에서는 이 추가된 문항을 활용하지는 못했다.

준다.[168] 전체 사례 수는 비회고 일자리 사례 170,272개 중 비임금 일자리 사례 52,482개를 제외한 117,790개이다.

<부표 2-4> 정규/비정규직 분류에 활용된 변수 관계
(소수점 한 자리에서 반올림, 단위: %)

| | | 종사상지위 | | | 합계 | |
|---|---|---|---|---|---|---|
| | |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 | |
| 계약기간 | 안정해져있다 | 81.6 | 56.6 | 76.4 | 76.8 | (90,484) |
| | 정해져있다 | 5.1 | 23.1 | 7.1 | 8.4 | (9,843) |
| | 결측 | 13.3 | 20.0 | 16.5 | 14.8 | (17,463) |
| 전일제 | 시간제 | 2.3 | 34.8 | 24.5 | 10.3 | (12,135) |
| | 전일제 | 96.7 | 63.6 | 73.2 | 88.4 | (104,160) |
| | 결측 | 1.0 | 1.6 | 2.4 | 1.3 | (1,495) |
| 노동시간 | 불규칙적 | 2.1 | 12.2 | 61.0 | 10.5 | (12,410) |
| | 규칙적 | 97.0 | 86.7 | 37.6 | 88.4 | (104,143) |
| | 결측 | 1.0 | 1.2 | 1.5 | 1.1 | (1,237) |
| 정규노동시간 | 비정규 | 9.5 | 21.1 | 51.9 | 16.3 | (19,194) |
| | 정규 | 89.7 | 77.9 | 46.7 | 82.8 | (97,466) |
| | 결측 | 0.9 | 1.1 | 1.4 | 1.0 | (1,130) |
| 주 36시간 | 미만 | 4.9 | 30.4 | 38.6 | 13.0 | (15,335) |
| | 이상 | 95.1 | 69.6 | 61.4 | 87.0 | (102,455) |
| | 결측 | - | - | - | - | - |
| 임금 | 안받는다 | 0.2 | 0.4 | 0.4 | 0.3 | (313) |
| | 받는다 | 99.7 | 99.5 | 99.5 | 99.7 | (117,408) |
| | 결측 | 0.1 | 0.1 | 0.1 | 0.1 | (69) |
| 정규/비정규 | 비정규직 | 12.7 | 90.5 | 91.9 | 34.8 | (40,936) |
| | 정규직 | 86.3 | 5.2 | 3.2 | 63.2 | (74,427) |
| | 결측 | 1.1 | 4.3 | 4.9 | 2.1 | (2,427) |
| 합계 | | 100.0 (84,585) | 100.0 (19,669) | 100.0 (13,536) | 100.0 | (117,790) |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종사상지위’에서 “상용직” 사례 상당수가 다른 변수에서는 비정규직을 시사하는 범주로 분류된다. 일례로 “상용직”의 5.1%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 결측 범주인 13.3%를 더하면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례 비중은 더 줄어든다. 응답자가 판단해 답하도록 되어있는 ‘정규/비정규’ 문항에서는 “상용직”의 12.7%가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 요컨대, 이 표는 상용직 상당 사례가 비정규직으로 분류될 수

168) 원래 행렬을 바꿔서 그려야 하지만 지면 제약으로 지금과 같이 구성했다.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표 2-5> 정규직 정의 조건에 따른 정규직 비중(1998-2017년 누적)

| 조건 | 사례수 | 비중 | 비고 |
|---|---|---|---|
| + 종사사지위 '상용직' | 84,585 | 71.81 | |
| + 계약기간 '정해져 있지 않음' | 69,015 | 58.59 | 결측치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 |
| + 노동형태 '전일제' | 66,831 | 56.74 | |
| + 노동시간 '규칙적' | 65,555 | 55.65 | |
| + 정규노동시간 '있음' | 60,129 | 51.05 | |
| + 주당노동시간 '36시간 이상' | 58,935 | 50.03 | |
| + 임금 '받고 일함' | 58,853 | 49.96 | |
| + 정규/비정규 여부 '정규' | 54,470 | 46.24 | |

주: 비회고자료, 임금노동직 한정(n: 117,790)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이 점을 고려해 종사상지위 "상용직"을 기본 범주로 삼되,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정규직으로 분류했다. 조건을 추가할 때마다 정규직 비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한 것이 <부표 2-5>다. '계약기간 유무'와 '정규노동시간 유무', '정규/비정규' 변수에서 정규직 비중이 상당히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임금노동 사례 117,790개 중 46.24%가 '정규직'으로 분류된다. 새롭게 구성한 변수의 정규직 비중과 기존 변수(종사상지위, 정규/비정규)의 정규직 비중을 비교한 것이 <부표 2-6>이다. '종사상지위'의 "상용직" 35.6%가 새 변수에서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었으며, '정규/비정규'의 "정규직" 26.8%가 새 변수에서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었다.

<부표 2-6> 새로 구성한 고용형태 변수와 기존 변수의 관계

| | | 종사상지위 | | | 정규/비정규 | | | 합계 |
|---|---|---|---|---|---|---|---|---|
| | |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 비정규 | 정규 | 결측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35.6 | 100.0 | 100.0 | 100.0 | 26.8 | 100.0 | 53.8 (63,320) |
| | 정규직 | 64.4 | - | - | - | 73.2 | - | 46.2 (54,470) |
| 합계 | | 100.0 (84,585) | 100.0 (19,669) | 100.0 (13,536) | 100.0 (40,936) | 100.0 (74,427) | 100.0 (2,427) | 100.0 (117,790) |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다음은 기업규모 구분이다. 앞에서 소개했듯이 보통 300인을 기준으로 그 이상을

대기업으로, 그 미만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한다. 노동패널조사는 사업체와 기업체를 구분해 종사자 수를 묻는다. 직업력에 포함된 종사자 수 정보는 '기업체' 단위다.[169)]

'종사자 수' 변수는 결측치가 34.7%에 달한다. 임금노동직으로 한정하면 18.4%다. 이 결측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다. 이것을 기업형태와 교차해보면, <부표 2-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약 46%가 공공부문에 해당되는 일자리다. '공공'은 다니는 기업이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이거나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공사합동기업'에 속하는 경우다. 즉 공공부문 일자리이면서 기업규모가 결측치인 사례는 전체 117,790 사례 중 8.5%다. 이 사례들을 300인 이상 기업(대기업)으로 분류하고, 기업형태가 결측치인 경우를 포함한 나머지는 중소기업으로 분류했다. 분류결과 대기업은 25.9%, 중소기업은 74.1%였다.

<부표 2-7> 기업규모와 기업형태의 관계 (단위: %)

| | | 기업형태 | | | | 합계 |
|---|---|---|---|---|---|---|
| | | 비소속 | 민간 | 공공 | 결측 | |
| 기업규모 | 중소 | 0.2 | 97.2 | 2.5 | 0.1 | 100.0 (75,540) |
| | 대 | 0.1 | 88.6 | 11.3 | 0.1 | 100.0 (20,601) |
| | 결측 | 22.5 | 30.8 | 46.0 | 0.7 | 100.0 (21,649) |
| 합계 | | 4.29 (5,050) | 83.5 (98,359) | 12.0 (14,126) | 0.2 (255) | 100.0 (117,790) |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앞서 소개한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 기준 사업체 수로는 300인 이상 사업체가 0.1%를, 종사자 수로는 300인 이상 사업체가 14%를 차지한다. 위의 결과는 약 12%p 큰 것이다.

169) 각 문항의 정확한 표현을 '유형 1' 조사표를 예로 들어 적으면 다음과 같다. "문 4-1. 본사, 지사, 지점, 공장, 현장 등을 모두 합해서 전체 종업원은 몇 명입니까? (그룹사의 경우에는 해당 계열사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 4-2. 그렇다면, _____님께서 실제로 근무하고 계시는 사업장의 종업원은 몇 명입니까?"

## 4. 노동지위 구성 결과

앞의 방식으로 20차 직업력 자료에 등록된 일자리 사례 191,694개에 노동지위를 부여한 결과가 <부표 2-8>이다.

<부표 2-8> 노동지위 부여 결과

| 노동지위 범주 | | 회고 | | 비회고 | | 합계 | | |
|---|---|---|---|---|---|---|---|---|
| | | 사례 수 | 퍼센트 (전체) | 사례 수 | 퍼센트 (전체) | 사례 수 | 퍼센트 (부문) | 퍼센트 (전체) |
| 임금 | 대_정규 | 1,272 | 5.9 | 19,442 | 11.4 | 20,714 | 15.4 | 10.8 |
| | 대_비정규 | 205 | 1.0 | 11,108 | 6.5 | 11,313 | 8.4 | 5.9 |
| | 중소_정규 | 11,478 | 53.6 | 35,028 | 20.6 | 46,506 | 34.6 | 24.3 |
| | 중소_비정규 | 3,736 | 17.4 | 52,212 | 30.7 | 55,948 | 41.6 | 29.2 |
| | 합계 | 16,691 | 77.9 | 117,790 | 69.2 | 134,481 | 100.0 | 70.2 |
| 비임금 | 자영_고용원 | 0 | - | 10,626 | 6.2 | 10,626 | 18.6 | 5.5 |
| | 자영_비고용원 | 2,137 | 10.0 | 30,796 | 18.1 | 32,933 | 57.6 | 17.2 |
| | 가족종사자 | 2,594 | 12.1 | 11,060 | 6.5 | 13,654 | 23.9 | 7.1 |
| | 합계 | 4,731 | 22.1 | 52,482 | 30.8 | 57,213 | 100.0 | 29.8 |
| 총합계 | | 21,422 | 100.0 | 170,272 | 100.0 | 191,694 | | 100.0 |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노동지위가 실제 노동시장 지위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업종, 직종, 노동시간, 임금(소득), 노조유무, 4대 보험 가입 여부 정보를 노동지위별로 확인했다.[170]

먼저 업종 분포를 살펴보자(<부표 2-9>).[171] '대기업 정규직'은 2차 산업과 사회서

170) 가용 정보의 한계로 회고 사례는 제외했다. 또 일관성을 위해 업종, 직종, 노동시간, 임금(소득)(이상 임금/비임금 공통), 노조유무(임금) 변수에서 어느 하나라도 결측치가 있는 사례(9.6%)는 제외하고 표를 구성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 변수는 별도로 취급한다.

171) 업종 정보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8차와 9차 두 종류로 구분)에 따라 입력되어 있다. 여기서는 8차 기준을 따랐다. 대분류 수준에서 총 18개 범주다. 1, 2, 3차산업 분류 틀에서 3차(서비스) 산업의 하위 영역을 분류하고자 했던 논의(Elfring, 1989: 411-412; 신광영, 2013: 100-101)를 따라 18개 범주를 6개로 축약했다. 1차(농업·임업·어업), 2차(광업·제조업·건설업), 3차산업으로 나누고, 3차산업을 다시 사업서비스(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금융 및 보험, 사업)와 유통서비스(도소매, 운수, 통신), 개인서비스(숙박 및 음식점, 부동산 및 임대,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 사회서비스(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오락·문화 및 운동, 국제 및 외국기관)로 나누는 틀이다. 다만, 조금 수정했다. 예컨대 Elfring은 개인서비스에 "recreation and amusement"를 포함(p. 412)하는데,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이 아마도 이에 대응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를 사회서비스에 포함시켰다. 이 점은 신광영(2013: 101)도 마찬가지다. 신광영과 다른 점은

비스업에 주로 속한다. 2차 산업에는 남성이, 사회서비스업에는 여성이 많다. ‘대기업 비정규직’은 사회서비스업과 유통서비스업에 주로 속한다. 사회서비스업이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중소기업 정규직’은 2차 산업과 유통서비스업에 주로 속한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2차 산업과 개인서비스업에 몰려 있다. ‘고용주’는 개인서비스업과 유통서비스업에 많다. ‘자영업’은 유통서비스업와 1차 산업에 주로 몰려 있다. 유통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것은 특수고용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부표 2-9> 노동지위별 산업 분포

| | 1차 | 2차 | 3차(서비스) | | | | 합계 |
|---|---|---|---|---|---|---|---|
| | | | 사업 | 유통 | 개인 | 사회 | |
| 대_정규 | 39 | 5,846 | 3,172 | 2,802 | 774 | 6,809 | 19,442 |
| | 0.2 | 30.1 | 16.3 | 14.4 | 4.0 | 35.0 | 100.0 |
| 대_비정규 | 49 | 1,774 | 1,847 | 2,047 | 672 | 4,531 | 10,920 |
| | 0.5 | 16.3 | 16.9 | 18.8 | 6.2 | 41.5 | 100.0 |
| 중소_정규 | 105 | 13,792 | 4,401 | 6,667 | 4,727 | 5,336 | 35,028 |
| | 0.3 | 39.4 | 12.6 | 19.0 | 13.5 | 15.2 | 100.0 |
| 중소_비정규 | 1,220 | 16,779 | 4,874 | 7,930 | 11,986 | 7,969 | 50,758 |
| | 2.4 | 33.1 | 9.6 | 15.6 | 23.6 | 15.7 | 100.0 |
| 자영_유종업원 | 474 | 2,151 | 701 | 2,447 | 2,830 | 1,182 | 9,785 |
| | 4.8 | 22.0 | 7.2 | 25.0 | 28.9 | 12.1 | 100.0 |
| 자영_무종업원 | 6,615 | 3,170 | 1,707 | 8,885 | 5,452 | 2,138 | 27,967 |
| | 23.7 | 11.3 | 6.1 | 31.8 | 19.5 | 7.6 | 100.0 |
| 가족종사자 | 23 | 9 | 2 | 22 | 24 | 3 | 83 |
| | 27.7 | 10.8 | 2.4 | 26.5 | 28.9 | 3.6 | 100.0 |
| 합계 | 8,525 | 43,521 | 16,704 | 30,800 | 26,465 | 27,968 | 153,983 |
| | 5.5 | 28.3 | 10.9 | 20.0 | 17.2 | 18.2 | 100.0 |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다음은 직종이다(<부표 2-10>).[172] ‘대기업 정규직’은 주로 사무직과 전문직이다.

건설업을 3차산업의 독립 하위 범주로 두지 않고 2차산업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어느 한 쪽으로 분류하기 애매한 “부동산 및 임대업”을 개인서비스에 포함시킨 것은 산업별 평균 임금(소득)을 고려해 유사한 것끼리 묶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Elfring은 “real estate”를 사업서비스(producer service)에 포함(1989: 412)시켰고, 신광영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172) 직종 정보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체계(5차와 6차)에 따라 입력되어 있다. 여기서는 5차를 따랐다. 총 10개 대범주를 7개로 축약했다. 묶은 것만 나열하면, 전문직(의회의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판매서비스직(서비스, 판매), 단순노무직(농임어업 숙련 종사, 단순노무 종사, 군인)이다.

‘대기업 비정규직’은 단순노무직과 사무직이 많다. ‘중소기업 정규직’은 사무직과 장치관리직이 많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단순노무직과 판매서비스직이 많다. ‘고용주’는 판매서비스직과 전문직에 많다. ‘자영업’은 판매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에 몰려 있다.

<부표 2-10> 노동지위별 직종 분포

| | 전문 | 기술·준전문 | 사무 | 판매·서비스 | 기능 | 장치관리 | 단순노무 | 합계 |
|---|---|---|---|---|---|---|---|---|
| 대_정규 | 5,135 | 1,655 | 6,107 | 1,734 | 1,189 | 2,582 | 1,040 | 19,442 |
| | 26.4 | 8.5 | 31.4 | 8.9 | 6.1 | 13.3 | 5.4 | 100.0 |
| 대_비정규 | 1,537 | 1,060 | 2,224 | 2,116 | 576 | 817 | 2,590 | 10,920 |
| | 14.1 | 9.7 | 20.4 | 19.4 | 5.3 | 7.5 | 23.7 | 100.0 |
| 중소_정규 | 5,823 | 4,195 | 8,203 | 3,681 | 4,185 | 6,391 | 2,550 | 35,028 |
| | 16.6 | 12.0 | 23.4 | 10.5 | 12.0 | 18.3 | 7.3 | 100.0 |
| 중소_비정규 | 4,493 | 4,170 | 5,014 | 10,496 | 8,566 | 5,225 | 12,794 | 50,758 |
| | 8.9 | 8.2 | 9.9 | 20.7 | 16.9 | 10.3 | 25.2 | 100.0 |
| 자영_유종업원 | 1,539 | 979 | 802 | 3,770 | 1,155 | 753 | 787 | 9,785 |
| | 15.7 | 10.0 | 8.2 | 38.5 | 11.8 | 7.7 | 8.0 | 100.0 |
| 자영_무종업원 | 1,332 | 2,385 | 493 | 9,434 | 2,762 | 3,457 | 8,104 | 27,967 |
| | 4.8 | 8.5 | 1.8 | 33.7 | 9.9 | 12.4 | 29.0 | 100.0 |
| 가족종사자 | 4 | 3 | 2 | 29 | 7 | 4 | 34 | 83 |
| | 4.8 | 3.6 | 2.4 | 34.9 | 8.4 | 4.8 | 41.0 | 100.0 |
| 합계 | 19,863 | 14,447 | 22,845 | 31,260 | 18,440 | 19,229 | 27,899 | 153,983 |
| | 12.9 | 9.4 | 14.8 | 20.3 | 12.0 | 12.5 | 18.1 | 100.0 |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업종과 직종 정보를 종합하면, 대기업 정규직은 주로 2차 산업의 사무직이나 사회서비스업의 전문·사무직이다. 대기업 비정규직은 주로 사회서비스업이나 유통서비스업의 단순노무직이나 사무직, 판매서비스직이다. 중소기업 정규직은 2차 산업이나 유통서비스업의 사무직이나 장치관리직이다. 고용주는 주로 유통서비스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의 전문직이나 판매서비스직이다. 자영업자는 유통서비스업이나 1차 산업의 판매서비스직이나 단순노무직이다. 특수고용을 매개로 유통서비스업과 판매서비스직이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단순노무직의 비중이 큰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를 단순노무직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상층과 하층은 산업별로가 아닌 산업 내 직종으로 나뉜다.

‘노동시간’과 ‘임금’, ‘노조 유무’, ‘4대 보험 가입 유무’는 각 노동지위의 노동조건을 보여준다.

<부표 2-11> 노동지위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

| 노동지위 | 사례수 | 평균 | 중앙값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 대_정규직 | 19,442 | 44.3 | 40 | 7.6 | 36 | 105 |
| 대_비정규직 | 10,920 | 40.2 | 40 | 15.1 | 1 | 105 |
| 중소_정규직 | 35,028 | 48.8 | 45 | 10.8 | 36 | 105 |
| 중소_비정규직 | 50,758 | 44.8 | 44 | 16.8 | 1 | 105 |
| 자영_고용원 | 9,785 | 55.2 | 54 | 17.2 | 1 | 105 |
| 자영_비고용원 | 27,967 | 50.1 | 50 | 21.1 | 1 | 105 |
| 가족종사자 | 83 | 48.2 | 50 | 24.9 | 2 | 105 |
| 합계 | 153,983 | 46.9 | 44 | 16.0 | 1 | 105 |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노동지위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살펴보자(<부표 2-11>). 고용주가 주당 노동시간[173]이 가장 길고, 대기업 비정규직이 가장 짧다. 전반적으로 비임금노동의 평균 노동시간이 임금노동보다 길다. 임금노동으로 한정하면 중소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 대기업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순으로 노동시간이 길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대기업의 노동시간은 중소기업 노동시간보다 약 4시간 짧다.

<부표 2-12> 노동지위별 월 평균 임금(소득)(단위: 만원)

| 노동지위 | 사례수 | 평균 | 중앙값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 대_정규직 | 19,442 | 329.8 | 301.5 | 169.9 | 0 | 3,000 |
| 대_비정규직 | 10,920 | 183.6 | 144.3 | 149.6 | 0 | 2,000 |
| 중소_정규직 | 35,028 | 216.7 | 194.3 | 120.1 | 0 | 3,000 |
| 중소_비정규직 | 50,758 | 146.9 | 127.5 | 95.1 | 0 | 2,417 |
| 자영_고용원 | 9,785 | 422.8 | 339.2 | 354.5 | 0 | 3,000 |
| 자영_비고용원 | 27,967 | 191.4 | 150.2 | 186.3 | 0 | 3,000 |
| 가족종사자 | 83 | 135.1 | 107.5 | 166.0 | 0 | 1,275 |
| 합계 | 153,983 | 214.1 | 173.2 | 178.6 | 0 | 3,000 |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월평균 임금[174]은 고용주가 423만원으로 가장 높다(<부표 2-12>). 다음이 대기업 정규직으로 330만원이다. 중소기업 정규직은 217만원이다. 1위와 2위의 차이는 90만

173) '주당 노동시간'은 식사시간을 제외한 노동시간으로, 초과근무시간을 포함한다. 최대값은 105 시간이다. 하루 15시간, 주 7일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시간으로, 이는 연구자가 임의로 부여한 값이다. 이 이상의 값은, 현실적으로 너무 많다고 판단해, 105시간으로 대체(495개 사례로 0.3%)했다.

174) 3,000만원 초과 사례(66개, 0.04%)는 3,000만원으로 대체했다. 그에 따라 3,000만원이 최대값이 된다. 각 값은 2015년을 기준으로 한 물가지수로 표준화했다.

원이고, 2위와 3위의 차이는 110만원이다. 그 뒤를 자영업과 대기업 비정규직이 따른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이 150만원으로 가장 낮다. 고용주와는 273만원, 대기업 정규직과는 180만원 차이난다.

이것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결과가 <부표 2-13>이다. 고용주가 2만 2천원, 대기업 정규직이 1만 9천원으로 둘의 차이가 좁혀졌다. 다음으로는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자영업 순이다. 절대액수로는 중소기업 정규직이 대기업 비정규직보다 많았지만, 시간당 임금은 대기업 비정규직이 높다. 표준편차는 이질성을 나타낸다. 임금노동이 비임금노동보다 동질성이 높고,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동질성이 높다.

<부표 2-13> 노동지위별 시간당 평균 임금(소득)(단위: 만원)

| 노동지위 | 사례수 | 평균 | 중앙값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 대_정규직 | 19,442 | 1.9 | 1.7 | 1.1 | 0 | 19 |
| 대_비정규직 | 10,920 | 1.3 | 0.9 | 1.6 | 0 | 63 |
| 중소_정규직 | 35,028 | 1.2 | 1.0 | 0.7 | 0 | 19 |
| 중소_비정규직 | 50,758 | 0.9 | 0.7 | 1.0 | 0 | 96 |
| 자영_고용원 | 9,785 | 2.2 | 1.6 | 3.0 | 0 | 117 |
| 자영_비고용원 | 27,967 | 1.1 | 0.8 | 2.0 | 0 | 170 |
| 가족종사자 | 83 | 0.9 | 0.6 | 1.0 | 0 | 8 |
| 합계 | 153,983 | 1.3 | 0.9 | 1.5 | 0 | 170 |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마지막으로 임금노동으로 한정해 노동조합 유무와 4대 보험 가입 유무와의 관계를 살펴본다.

대기업 정규직은 54.2%가 노조가 있고, 대기업 비정규직은 27.1%가 노조가 있다. 중소기업 정규직은 10.5%,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4%다. 즉 노조 비중은 기업규모에 따라 1차적으로 구분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도 상당하다.

노동지위별로 4대 보험 가입 수준을 나타낸 것이 <부표 2-14>다.[175] 대기업 정규직은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거의 100%, 산재보험은 83%, 고용보험은 72% 가입해, 평균 87.4%의 가입율을 보인다. 반면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넷 모두 30%대 후반의 가입율을 보인다. 앞의 노조가입 유무와는 달리 여기서는 중소기업 정규직의 여건이 대기업 비정규직보다 나은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정규직은 평균 가입율이 80%에

175) 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다. 이 중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고용보험은 2차부터 조사되었으며, 직역연금과 산재보험은 3차부터 조사되었다. 이를 감안해 4대 보험 가입 여부와의 관계를 볼 때 1차와 2차 조사 사례는 제외했다.

이르는 반면, 대기업 비정규직은 54%에 불과하다.

<부표 2-14> 노동지위별(임금노동)와 4대 보험 가입 수준

| | 국민 | 의료 | 고용 | 산재 | 합계 |
|---|---|---|---|---|---|
| 대_정규 | 97.3 | 96.5 | 72.3 | 83.4 | 87.4 (17,574) |
| 대_비정규 | 59.9 | 63.0 | 56.1 | 56.6 | 58.9 (10,147) |
| 중소_정규 | 80.4 | 82.5 | 79.2 | 77.9 | 80.0 (32,095) |
| 중소_비정규 | 35.1 | 39.0 | 37.4 | 37.1 | 37.2 (47,859) |
| 합계 | 61.1 | 63.6 | 57.3 | 58.6 | 60.2 (107,675) |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지금까지 제시한 검토 결과에 따르면 노동 상태 범주가 적절하게 구분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지위는 대략 세 개 그룹으로 나뉜다. ‘대기업 정규직/고용주’가 상층이고, ‘중소기업 비정규직/자영업/가족종사자’가 하층이다. ‘대기업 비정규직/중소기업 정규직’은 그 중간에 있다.

## <부록 3> 직업력 데이터셋을 활용한 시퀀스 자료 조직 절차

최근 들어 배열분석을 활용한 연구가 국내에 다수 발표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집된 자료를 배열 분석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조직하는 절차가 상세하게 소개된 적은 없다. 영어로 출간된 논문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점을 아쉽게 생각해 어떤 절차로 자료를 조직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내렸는지, 본문에 소개한 내용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간략하게 정리했다.[176]

시퀀스 자료에 필요한 정보는 두 가지다. 첫째는 시간 정보다. 둘째는 상태정보다. 이 두 정보를 합치면, 특정 시점에서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시간 변화에 따른 상태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시간 단위는 개월이고, 상태는 7개 범주로 구성된 '노동지위'이다. 즉, 몇 년 몇 월에 어떤 노동지위에 있었는지가 자료의 기본 정보이다.

노동지위 변수 구성 절차는 <부록 2>에서 언급했다. 중요한 것은 시점 변수다. 시점 변수를 만들기 위해 밟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입/퇴직 시점 결측 사례 확인(특히 입직년 정보): 노동패널 직업력 자료에는 일자리별로 입직 시점과 퇴직 시점이 일 단위까지 입력되어 있다. 필요한 정보는 월 단위까지이다. 먼저 이 정보가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체 170,272개 사례 가운데 네 변수 모두 값이 있는 사례는 약 16.3%이고, 입직년월 정보만 있는 사례가 약 83.6%이다. 조사 시점에서 퇴직하지 않은 일자리는 퇴직년월 정보를 입력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약 99.9%의 사례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가 되는 사례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비교적 작은 문제로, 입퇴직 관계없이 년 정보는 있지만 월 정보가 없는 경우이다. 확인해보면, 퇴직 시점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었다. 입직 시점의 경우 자료로 확인한 최빈월인 3월로 대체(6개 사례)했다. 다른 하나가 좀 큰 문제로 입직 년도 정보가 없는 경우인데, 56개 사례가 있다. 이 가운데 퇴직 년도 정보가 있는 경우가 33개이고, 퇴직 년도 정보도 없는 사례가 23개이다.

이 사례들의 종사상지위를 확인하면 다수가 일용직이거나 가족종사자로 되어 있고, 또 주된 일자리가 아닌 경우가 많았다. 즉 단기 일자리이거나 시작과 끝을 획정하기 애매한 일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을 고려해 퇴직 년도 정보가 있는 경우 입직 연도를 퇴직 연도로 대체했다(33개). 그리고 입직 년도도 퇴직 년도도 알 수 없

176) 노동패널 직업력 자료의 구조를 어느 정도 아는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작성했다. 사용한 데이터셋은 20차 직업력 자료(무응답대체)다. 회고적 일자리 사례는 제외했다.

는 나머지 23개 사례는 삭제했다.

최종적으로 입직년도를 다른 값으로 대체할 수 없는 23개 사례를 제외한 170,249개가 분석 사례가 된다.

② 입/퇴직 시점 변수 만들기(날짜 변수): 년 변수와 월 변수를 합쳐 월 단위의 날짜 변수를 만든다. 비회고 사례만 있기에 퇴직 시점이 조사 시점인 1998년 6월 이전일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사례가 16개 있다(1988년 1월-1998년 5월). 이 사례는 삭제했다. 결과 입직 시점은 1914년 6월-2017년 10월까지의 값을 가지며, 퇴직 시점은 1998년 6월-2017년 12월까지의 값을 갖는다.

③ 개인 단위로 입직 시기 순으로 일자리를 정렬한다.

④ 중복 일자리 정보 삭제: 직업력 자료에는 개인 단위가 아니라 일자리 단위로 정보가 입력되어 있다. 따라서 일자리 정보의 변경이 없더라도 매 차수 관측될 때마다 정보가 입력되어 있다. 가령 같은 일을 2년 간 하고 있는 사람이 두 차례 조사에 응답했을 경우 동일한 일자리의 정보가 두 번 입력된다. 따라서 개별 일자리 당 하나의 행만 차지하도록 중복 행은 지울 필요가 있다(123,917개 사례 삭제). 이제는 한 사례가 한 일자리를 나타낸다. 사례 수는 46,316개다.

⑤ 개인 단위로 입직 시기 순으로 일자리를 정렬한다.

⑥ 마지막 일자리가 아님에도 퇴직 시점이 없는 경우 다음 일자리 입직 시점으로 대체: 앞서 조사 시점 전에 끝낸 일자리가 아닌 경우 퇴직 시점 정보가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는 보통 조사 시점으로 보면 가장 최근 일자리이고, 응답자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 일자리에 해당한다. 이런 일자리가 아님에도 퇴직 시점이 없는 사례가 5,865개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일자리의 입직 시점으로 퇴직 시점을 대체하였다.[177)]

⑦ 이전 일자리 퇴직 시점이 다음 일자리 입직 시점보다 늦는 경우 다음 일자리

177) 같은 시기에 2개 이상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무작위로 30개 사례를 뽑아 검토해 본 결과 그런 경우로 보이는 것은 많지 않았다. 설령 그런 경우라고 해도 배열 분석을 위해서는 한 시점에 하나의 일자리 정보만 남길 필요가 있었다. 이 점을 단계 ⑥에서도 적용했다.

입직 시점으로 대체: 2,203개 사례를 대체했다.

⑧ 오기입 사례 확인(퇴직 시점이 입직 시점보다 이른 경우) 및 대체: 같은 일자리인데 퇴직 시점이 입직 시점보다 이른 사례가 8개 있다. 이 가운데 그 일자리가 마지막 일자리일 경우 퇴직 시점을 입직 시점으로 대체하였다(4개 사례). 다음으로 해당 일자리의 입직시점과 다음 일자리의 입직 시점 간 간격이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일자리의 퇴직 시점을 입직 시점으로 대체하였다(3개 사례). 마지막으로 해당 일자리의 입직 시점과 다음 일자리의 입직 시점 간 간격이 1년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일자리의 퇴직 시점을 그 다음 일자리의 입직 시점으로 대체했다(1개 사례).[178]

⑨ 앞서 문제가 된 사례가 위 작업으로 모두 제거되었는지 검산한다.

⑩ 마지막 일자리의 퇴직 시점(결측값)을 조사 당해 12월로 대체: 이 작업은 분석의 편의를 위한 한 것이다. 마지막 일자리이고 퇴직 시점이 비어있는 경우는 조사 시점(예: 2015년 3~11월)까지(이지은, 2017: 48) 그 일자리를 지속하는 것으로 보고, 퇴직시점을 해당 년도의 12월로 채워 넣었다. 합계, 12,638개 사례의 퇴직시점을 대체했다(<부표 3-1>).[179]

⑪ 노동기간이 0개월인 438개 사례는 삭제했다. 마지막으로, 개인 단위로 다시 일자리 번호를 매겼다.

178) 8개 사례를 확인한 후 나름대로 세운, 정보 왜곡이 가장 적을 것으로 판단한 기준이다.
179) 이상적으로라면 마지막 조사년도인 2015년 12월 값을 채워 넣는 게 좋다. 그러나 조사에서 이탈한 사례들도 있다(36.7%). 이들의 경우 마지막 관측 연도의 값을 채우는 것이 적절하다.

<부표 3-1> 조사연도별 퇴직 시점 대체 사례 수

| 조사연도 | 사례수 | 퍼센트 | 비고 |
|---|---|---|---|
| 1998 | 416 | 3.3 | 1차 조사 |
| 1999 | 224 | 1.8 | |
| 2000 | 248 | 2.0 | |
| 2001 | 209 | 1.7 | |
| 2002 | 202 | 1.6 | |
| 2003 | 202 | 1.6 | |
| 2004 | 217 | 1.7 | |
| 2005 | 212 | 1.7 | |
| 2006 | 188 | 1.5 | |
| 2007 | 239 | 1.9 | |
| 2008 | 253 | 2.0 | |
| 2009 | 360 | 2.9 | 12차 조사(추가 표집) |
| 2010 | 264 | 2.1 | |
| 2011 | 217 | 1.7 | |
| 2012 | 266 | 2.1 | |
| 2013 | 198 | 1.6 | |
| 2014 | 175 | 1.4 | |
| 2015 | 238 | 1.9 | |
| 2016 | 307 | 2.4 | |
| 2017 | 8,003 | 63.3 | 20차 조사 |
| Total | 12,638 | 100.0 | |

여기까지가 직업력 자료를 다듬기 위해 밟은 기본 절차다. 최종 45,878개 일자리 사례가 남는다. 사람으로 치면 17,155명이다. 한 사람당 1-20개의 일자리를 가졌으며, 평균은 약 2.7개이다. 근속기간은 1-870개월까지이며, 일자리 당 평균은 59.1개월이다.

지금까지 소개한 절차를 관통하는 기준은 동일 시점에 2개 이상의 일자리 정보가 있을 경우 앞의 일자리 정보를 우선시 해 구획한다는 것이다. 자료를 이렇게 정리하면 특정 시점(예: 최종학교 졸업 연월)을 기준으로 각 일자리의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의 시간 간격을 구할 수 있고, 이 간격을 지표로 삼아 월별로 노동지위 상태 정보를 채워 배열 분석에 적합한 시퀀스 형태의 자료를 만들 수 있다.

## <부록 4> 가족지위 변수 구성 절차

가족이력을 구성하는 상태인 '가족지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가구자료의 '가구주와의 관계' 변수와 '동거 여부', '비동거 이유' 변수다.[180] 이 변수를 활용해 각 가구의 가구형태 변수를 연도별로 만든다.[181] 다음으로, 가구형태 정보와 '가구주와의 관계' 정보와 '동거 여부' 정보를 결합해 최종적으로 해당연도의 가족상태 범주를 확정한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이 속한 가구형태가 '부부+비혼자녀 가구'이고, 가구주와의 관계에서 그 개인의 위치가 '자녀'이고, '동거'라면, 가족지위는 '부부+비혼자녀 자녀 동거'가 된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가구형태를 구성, 확인하고, 이 맥락에서 가구원 관계가 어떤지를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동거 여부를 고려해 가족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 결과 가족지위 범주를 7개로 확정했다. ① 부모, ② 혼자, ③ 배우자, ④ 부모+배우자, ⑤ 배우자+자녀, ⑥ 부모+배우자+자녀, ⑦ 자녀. 각 범주의 이름은 동거하는 이를 나타낸다. '부모'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를, '혼자'는 혼자 사는 경우를 뜻하는 식이다.

20차 가구자료를 기준으로 가구 수는 7,340개이고, 개인 수는 18,828명이다. 가구형태를 단위로 하면 사례 수는 40,325개다. 개인당 평균 1.4회 가구형태 변화가 있었다.

---

180) 가구 단위로 보면 가구원 수만큼 변수(최대 15개)가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 코드북 참조. h**0261-h**0275(가구주와의 관계1-가구주와의 관계15).

181) '가구주와의 관계' 정보는 가구자료에도 있고 개인자료에도 있다. 가구자료에 있는 정보를 개인자료에 붙여둔 것이다. 개인별로 정보가 붙어 있어 활용하기에는 수월하지만 가구형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꼭 가구자료에 있는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두 자료에 포함된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구자료에는 모든 가구구성원의 정보가 기록된다. 그러나 개인자료에는 만 15세 이상의 가구구성원만 포함된다. 따라서 개인자료에 있는 정보로 가구형태를 확정할 수 없다. 예컨대 개인자료에서 id 1번인 사람이 '가구주'로 기록되어 있다고 치자. 이 사람이 혼자 사는지, 자녀와 함께 사는지를 확인하려면 이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가구자료의 정보를 활용한다.

<부표 4-1> 가구형태 변화 횟수

| 횟수 | 빈도 | 퍼센트 | 누적 퍼센트 |
|---|---|---|---|
| 0 | 8,527 | 45.3 | 45.3 |
| 1 | 4,600 | 24.4 | 69.7 |
| 2 | 2,796 | 14.9 | 84.6 |
| 3 | 1,410 | 7.5 | 92.1 |
| 4 | 825 | 4.4 | 96.4 |
| 5 | 395 | 2.1 | 98.5 |
| 6 | 178 | 1.0 | 99.5 |
| 7 | 59 | 0.3 | 99.8 |
| 8 | 29 | 0.2 | 100.0 |
| 9 | 6 | 0.0 | 100.0 |
| 10 | 2 | 0.0 | 100.0 |
| 13 | 1 | 0.0 | 100.0 |
| 합계 | 18,828 | 100.0 | |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가족지위를 구성하기 위해 먼저 가구자료의 '가구주와의 관계' 정보로 각 가구의 가구형태를 구성·분류했다. 가구자료에는 다음 표와 같이 가구별로 가구원 정보가 입력되어 있다.

<부표 4-2> 가구자료의 구조

| hhid01 | pid1 | pid2 | … | sex1 | sex2 | … | relation1 | relation2 | … |
|---|---|---|---|---|---|---|---|---|---|
| 1 | 101 | 102 | … | 여 | 여 | … | 가구주 | 자녀 | … |
| 2 | 201 | 202 | | 남 | 여 | | 가구주 | 배우자 | |
| | | | | | … | | | | |
| 5000 | 50001 | 50002 | … | 여 | 남 | … | 가구주 | 부 | … |

'가구주와의 관계' 변수의 값은 11개다.[182] 이 중에서 가구형태를 결정하는 관계는 8개다. '가구주',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부모', '손자녀', '손자녀의 배우자'다. '형제자매', '조카', '기타'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 관계가 조합되는 방식에 따라 가구형태를 구성했다. 가짓수는 10개다.[183] <부표 4-3>이 작업 결과다.

182) ① 가구주,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 ⑧ 손자녀의 배우자, ⑨ 형제자매, ⑩ 조카, ⑪ 기타. 노동패널 자료에서 '가구주와의 관계' 변수의 값은 73개다. 이것을 11개로 묶은 것이다. '기타'에는 가구주를 기준으로 '기타 친인척'과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증손자녀,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포함된다.

183)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가족형태를 핵가족과 직계가족, 기타가족으로 구분한다.

① ‘단독’은 가구주 혼자 있는 경우다. 형제자매가 있거나 기타 누군가가 있더라도 혼자 있는 것으로 본다. ② ‘편부모+비혼자녀’는 가구주인 부나 모와 자녀가 있는 경우다. 배우자가 없기에 편부모라고 이름 붙였다. ③ ‘자녀+부모’는 가구주인 자녀와 부모가 있는 경우다. ‘부모’는 아버지만일 수도, 어머니만일수도, 부모일수도 있다. 배우자의 부모가 있는 경우가 한 사례 있으나 자녀는 대부분의 경우 비혼일 것으로 추정한다. 배우자나 자녀 등이 없기 때문이다.[184] ④ ‘부부’는 가구주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다. 이 경우에도 자녀가 있을 수 있으나 자녀는 별도의 가구를 꾸리고 있다. 이 연구의 맥락에서는 거의 없을 것으로 짐작한다. ⑤ ‘부부+비혼자녀’는 부부(가구주와 배우자)와 그 자녀가 있는 경우다. 우리가 핵가족이라고 할 때 전형적으로 떠올리는 2세대 가구다. 자녀 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⑥ ‘부부+양(편)친’은 가구주와 배우자, 그리고 가구주의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가 있는 경우다. ⑦ ‘양(편)친+부부’는 가구주(또는 가구주와 배우자)와 결혼한 자녀와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다. ⑧ ‘부부+양(편)친+자녀’는 가구주와 그 배우자, 그리고 그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다. 우리가 직계 3세대 가족이라고 할 때 전형적으로 떠올리는 가구형태다. ⑨ ‘양(편)친+부부+자녀’는 가구주(또는 가구주와 배우자)와 결혼한 자녀와 그 배우자, 그리고 손자녀가 있는 경우다. 앞 유형은 두 번째 세대가 가구주이고, 이 유형은 첫 번째 세대가 가구주다. ⑩ ‘양(편)친+[부부]+자녀’는 두 번째 세대가 빠진, 그러니까 조부모와 손자녀만으로 구성된 가구다. <부표 4-2>에 있는 정보만으로 가구형태를 분류하면, 1번 가구는 ② ‘편부모-비혼자녀’에, 2번 가구는 ④ ‘부부’에, 5000번 가구는 ③ ‘자녀+부모’에 속한다.

---

핵가족은 부부, 부부와 미혼자녀, 편부모와 미혼자녀로 구분되고, 직계가족은 부부와 양(편)친, 부부와 양(편)친과 자녀로 구분한다. 기타가족에는 3세대, 4세대, 기타 혈연 가구가 포함된다. 비혈연 가구 및 1인 가구는 제외된다.

184) 과거에 있었을 수도 있으나 이 연구의 대상인 청년층으로 한정하면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다.

<부표 4-3> 가족형태와 가구원 관계[단위: 사례, (%)]

| | | | 가구주와의 관계 | | | | | | | | | | |
|---|---|---|---|---|---|---|---|---|---|---|---|---|---|
| | 수준 1 | 수준 2 | 가구주 | 배우자 | 자녀 | 자녀 배우자 | 부모 | 배우자 부모 | 손자녀 | 손자녀 배우자 | 형제 자매 | 기타 | 합계 |
| 가족형태 | 1. 단독 | ① 단독(6.9) | 2,650<br>(95.1) | | | | | | | | 112<br>(4.0) | 25<br>(0.9) | 2,787<br>(100.0) |
| | 2. 부(편)모-자녀 (7.8) | ② 편부모+비혼자녀(7.0) | 908<br>(32.0) | | 1,916<br>(67.6) | | | | | | 2<br>(0.1) | 9<br>(0.3) | 2,835<br>(100.0) |
| | | ③ 자녀+부모(0.8) | 157<br>(50.5) | | | | 123<br>(39.6) | | | | 29<br>(9.3) | 2<br>(0.6) | 311<br>(100.0) |
| | 3. 부부 | ④ 부부(14.3) | 2,769<br>(48.1) | 2,961<br>(51.4) | | | | | | | 18<br>(0.3) | 11<br>(0.2) | 5,759<br>(100.0) |
| | 4. 부부+비혼자녀 | ⑤ 부부+비혼자녀(55.4) | 5,050<br>(22.6) | 4,895<br>(21.9) | 12,306<br>(55.1) | | | | | | 26<br>(0.1) | 42<br>(0.2) | 22,319<br>(100.0) |
| | 5. 부부-부모 (2.0) | ⑥ 부(부)+양(편)친(1.1) | 178<br>(40.4) | 173<br>(39.2) | | | 72<br>(16.3) | 12<br>(2.7) | | | 6<br>(1.4) | | 441<br>(100.0) |
| | | ⑦ 양(편)친+부(부)(0.9) | 98<br>(26.3) | 56<br>(15.1) | 129<br>(34.7) | 88<br>(23.7) | | | | | 1<br>(0.3) | | 372<br>(100.0) |
| | 6. 3대 이상 (13.7) | ⑧ 부(부)+양(편)친+자녀(8.3) | 677<br>(20.4) | 584<br>(17.6) | 1,639<br>(49.3) | 5<br>(0.2) | 324<br>(9.7) | 50<br>(1.5) | | | 34<br>(1.0) | 12<br>(0.4) | 3,325<br>(100.0) |
| | | ⑨ 양(편)친+(부)부+손자녀(4.4) | 302<br>(17.0) | 218<br>(12.3) | 495<br>(27.8) | 206<br>(11.6) | 3<br>(0.2) | | 542<br>(30.5) | 7<br>(0.4) | | 7<br>(0.4) | 1,780<br>(100.0) |
| | | ⑩ 양(편)친+[부부]+손자녀 (1.0) | 114<br>(28.8) | 70<br>(17.7) | | | 1<br>(0.3) | | 206<br>(52.0) | 3<br>(0.8) | | 2<br>(0.5) | 396<br>(100.0) |
| | 합계 | | 12,903<br>(32.0) | 8,957<br>(22.2) | 16,485<br>(40.9) | 299<br>(0.7) | 523<br>(1.3) | 62<br>(0.2) | 748<br>(1.9) | 10<br>(0.0) | 228<br>(0.6) | 110<br>(0.3) | 40,325<br>(100.0) |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총 10개로 구분했지만 구조로만 보면, 더 축약할 수 있다. 예컨대 ② '편부모+비혼자녀'와 ③ '자녀+부모'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라는 점에서 같다. <부표 4-3>에서 수준 1은 이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비중을 보면, '부부+비혼자녀'로 구성된 유형 ⑤가 약 50%로 비중이 가장 크다. 다음으로는 '부(모)와 자녀 부부'로 구성된 유형 ⑦이 약 13%다. 이어서 ④ '부부' 가구가 약 10%, 3대 이상 가구가 16% 정도 된다. 그럼에도 구분한 것은 가구주가 다르기 때문이다. ② '편부모+비혼자녀'에서는 부/모가 가구주이고, ③ '자녀+부모'에서는 자녀가 가구주다. 이것은 누구와 살고 있는가의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정보다. ②에서는 자녀와 살고 있는 셈이고, ③에서는 부모와 살고 있는 셈이다.

가구형태와 가구원 관계를 조합하면 각 개인의 '관계' 정보가 만들어진다. 논리적 경우의 수는 가구형태 범주 수인 10과 가구원 관계 범주 수인 11을 곱한 110가지다. 실제 자료에서 확인된 범주는 54가지다. 여기서 동거여부를 고려하면 경우의 수가 108개가 된다. 그러나 연구 대상인 1970-1984년생이 28-32세에서 경험한 관계의 수는 53가지다.

<부표 4-4>는 그 가운데 29세 시점에서 확인된 49가지 상태와 각 상태에 부여한 '관계' 지위를 나타낸다. 비중이 2% 이상인 상태는 음영으로 표시했다. 이 상태들을 <부표 4-3>의 틀을 따라 분류했다. 형제자매, 기타 등의 지위는 고려하지 않았다. 8번 사례에서처럼 형제자매는 모두 '혼자'로 분류된다. 다음으로, 비동거가 의미 있는 경우는 7번과 18번 사례에서처럼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다. 그 외 경우에서 비동거는 동거와 같은 것으로 간주했다. 재분류 결과 가족지위 범주를 다음과 같이 7개로 확정했다. ① 부모, ② 혼자, ③ 배우자, ④ 부모+배우자, ⑤ 배우자+자녀, ⑥ 부모+배우자+자녀, ⑦ 자녀.

<부표 4-4> 가족상태 코딩 방식(29세 시점)

| 번호 | 상태 | 빈도 | % | 관계 |
|---|---|---|---|---|
| 1 | 단독 가구주 동거 | 340 | 8.2 | 혼자 |
| 2 | 단독 형제자매 동거 | 24 | 0.6 | 혼자 |
| 3 | 단독 형제자매 비동거 | 1 | 0.0 | 혼자 |
| 4 | 단독 기타 동거 | 1 | 0.0 | 혼자 |
| 5 | 편(부)모+비혼자녀 가구주 동거 | 12 | 0.3 | 자녀 |
| 6 | 편(부)모+비혼자녀 자녀 동거 | 177 | 4.2 | 부모 |
| 7 | 편(부)모+비혼자녀 자녀 비동거 | 18 | 0.4 | 혼자 |
| 8 | 자녀+부모 가구주 동거 | 15 | 0.4 | 부모 |
| 9 | 자녀+부모 형제자매 동거 | 7 | 0.2 | 혼자 |
| 10 | 자녀+부모 형제자매 비동거 | 1 | 0.0 | 혼자 |
| 11 | 부부 가구주 동거 | 408 | 9.8 | 배우자 |
| 12 | 부부 가구주 비동거 | 4 | 0.1 | 배우자 |
| 13 | 부부 배우자 동거 | 497 | 11.9 | 배우자 |
| 14 | 부부 배우자 비동거 | 7 | 0.2 | 배우자 |
| 15 | 부부 형제자매 동거 | 2 | 0.1 | 혼자 |
| 16 | 부부+비혼자녀 가구주 동거 | 489 | 11.7 | 배우자+자녀 |
| 17 | 부부+비혼자녀 가구주 비동거 | 8 | 0.2 | 배우자+자녀 |
| 18 | 부부+비혼자녀 배우자 동거 | 924 | 22.1 | 배우자+자녀 |
| 19 | 부부+비혼자녀 배우자 비동거 | 5 | 0.1 | 배우자+자녀 |
| 20 | 부부+비혼자녀 자녀 동거 | 741 | 17.8 | 부모 |
| 21 | 부부+비혼자녀 자녀 비동거 | 109 | 2.6 | 혼자 |
| 22 | 부부+비혼자녀 형제자매 동거 | 6 | 0.1 | 혼자 |
| 23 | 부부+비혼자녀 형제자매 비동거 | 1 | 0.0 | 혼자 |
| 24 | 부부+비혼자녀 기타 동거 | 4 | 0.1 | 혼자 |
| 25 | 부부+비혼자녀 기타 비동거 | 1 | 0.0 | 혼자 |
| 26 | 부(부)+양(편)친 가구주 동거 | 6 | 0.1 | 부모+배우자 |
| 27 | 부(부)+양(편)친 배우자 동거 | 11 | 0.3 | 부모+배우자 |
| 28 | 부(부)+양(편)친 형제자매 비동거 | 1 | 0.0 | 혼자 |
| 29 | 양(편)친+부(부) 자녀 동거 | 14 | 0.3 | 부모+배우자 |
| 30 | 양(편)친+부(부) 자녀 비동거 | 2 | 0.1 | 부모+배우자 |
| 31 | 양(편)친+부(부) 자녀의 배우자 동거 | 17 | 0.4 | 부모+배우자 |
| 32 | 양(편)친+부(부) 자녀의 배우자 비동거 | 1 | 0.0 | 부모+배우자 |
| 33 | 부(부)+양(편)친+자녀 가구주 동거 | 19 | 0.5 | 부모+배우자+자녀 |
| 34 | 부(부)+양(편)친+자녀 배우자 동거 | 28 | 0.7 | 부모+배우자+자녀 |
| 35 | 부(부)+양(편)친+자녀 자녀 동거 | 90 | 2.2 | 부모 |
| 36 | 부(부)+양(편)친+자녀 자녀 비동거 | 15 | 0.4 | 혼자 |
| 37 | 부(부)+양(편)친+자녀 자녀의 배우자 동거 | 1 | 0.0 | 부모+배우자 |
| 38 | 부(부)+양(편)친+자녀 형제자매 동거 | 3 | 0.1 | 혼자 |
| 39 | 부(부)+양(편)친+자녀 형제자매 비동거 | 2 | 0.1 | 혼자 |
| 40 | 양(편)친+부(부)+손자녀 자녀 동거 | 83 | 2.0 | 부모+배우자+자녀 |
| 41 | 양(편)친+부(부)+손자녀 자녀 비동거 | 6 | 0.1 | 부모+배우자+자녀 |
| 42 | 양(편)친+부(부)+손자녀 자녀의 배우자 동거 | 45 | 1.1 | 부모+배우자+자녀 |
| 43 | 양(편)친+부(부)+손자녀 자녀의 배우자 비동거 | 1 | 0.0 | 부모+배우자+자녀 |
| 44 | 양(편)친+부(부)+손자녀 손자녀 동거 | 11 | 0.3 | 부모 |
| 45 | 양(편)친+부(부)+손자녀 손자녀 비동거 | 1 | 0.0 | 혼자 |
| 46 | 양(편)친+부(부)+손자녀 손자녀의 배우자 동거 | 1 | 0.0 | 부모+배우자 |
| 47 | 양(편)친+[부부]+손자녀 손자녀 동거 | 10 | 0.2 | 부모 |
| 48 | 양(편)친+[부부]+손자녀 손자녀 비동거 | 2 | 0.1 | 혼자 |
| 49 | 양(편)친+[부부]+손자녀 손자녀의 배우자 동거 | 1 | 0.0 | 부모+배우자 |
| 합계 | | 4,173 | 100.0 | |

<부표 4-5>는 가족지위 구성 결과다. 29세 시점을 예로 제시했다. 부모와 함께 있는 경우가 25%이고, 혼자 있는 경우가 13%다. 배우자와 함께 있는 경우가 22%이고, 배우자+자녀와 함께 있는 경우가 34%이다. 나머지는 주로 기혼 상태에 있으면서 부모와 함께 지내는 경우다.

<부표 4-5> 가족지위별 비중(29세 시점)

| 가족지위 | 사례 수 | 퍼센트 |
|---|---|---|
| 부모 | 1,044 | 25.0 |
| 혼자 | 539 | 12.9 |
| 배우자 | 916 | 22.0 |
| 배우자+자녀 | 1,426 | 34.2 |
| 부모+배우자 | 54 | 1.3 |
| 부모+배우자+자녀 | 182 | 4.4 |
| 자녀 | 12 | 0.3 |
| 합계 | 4,173 | 100.0 |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20차)

# 참고문헌


가와이 노리코(河合紀子). 2011.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왜 계속 상승하는가?: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교육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강성국·이광현·박현정·김기석. 2005.『한국 교육 60년 성장에 대한 교육지표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강이수. 2009. “노동시장의 변화와 일-가족 관계.” 강이수 외.『일·가족·젠더: 한국의 산업화와 일-가족 딜레마』. 한울아카데미. (pp. 52-82)

강준만. 2009.『입시전쟁 잔혹사』. 인물과사상사.

계봉오·김영미. 2014. “한국 여성의 결혼, 출산 및 경제활동 참가 형태에 대한 연구: 다중상태 생명표(Multi-state life table) 적용.”『사회연구』15(1):79-113.

구인회. 2019.『21세기 한국의 불평등: 급변하는 시장과 가족, 지체된 사회정책』. 사회평론아카데미.

구해근. 2002[2001].『한국 노동계급의 형성』(Korean Workers: The Culture and Politics of Class Formation). 신광영 옮김. 창작과비평사.

_____. 2008. “세계화 시대의 한국 계급 연구를 위한 이론적 모색.”『경제와사회』76:255-289.

_____. 2012. “한국의 중산층을 다시 생각한다.”『창작과비평』40(1):403-421.

권숙인. 2011. “소토코모리, 일본 밖을 떠나는 젊은이들: 시대의 폐색으로부터의 탈출, 혹은 신자유주의의 희생양?”『일본비평』5:22-49.

권오재. 2017. “결혼의 계층화와 전통적 성 정체성의 고착: 부모 자산이 성인 자녀의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태환·박영진. 1995. “가구 및 가족유형.” 권태환·김태헌·최진호 편.『한국의 인구와 가족』. 일신사. (pp. 237-368)

권현지. 2008.『금융 서비스 산업의 고용관계 변화: 비정규 대고객 서비스직의 고용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_____. 2015. “산업화 이후 한국 노동 체제 변동과 노동자 의식 변화.” 장덕진 외.『압축성장의 고고학: 사회조사로 본 한국 사회의 변화, 1965-2015』. 한울. (pp. 220-264)

_____. 2017. “외환위기 후 20년, 노동시장은 어떻게 변했나?” 김두섭 외.『한국의 사회동향 2017』. 통계청. (pp. 157-164)

_____. 2018. “노동시장의 변화와 청년세대 젠더 갈등.” 강원택 외.『사회적 갈등과

불평등』. 푸른길. (pp. 133-170)
길혜지·최윤미. 2014. “대졸자의 고용형태 결정요인 분석 연구.” 『직업교육연구』 33(6):1-26.
길혜지·박성호·박미현. 2018. “4년제 대학의 졸업 소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과 대학교육 특성 분석.” 『한국교육』 45(2):57-80.
김경근. 2003. 『한국의 사회변동과 교육』. 문음사.
김기헌. 2003.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이행: 제도적 요인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3(2):65-93.
_____. 2018. 『청년프레임』. 한국학술정보.
김기헌·방하남. 2005. “고등교육 진학에 있어 가족배경의 영향과 성별 격차: 한국과 일본의 경우.” 『한국사회학』 39(5):119-151.
김난도. 2010. 『아프니까 청춘이다』. 쌤앤파커스.
김두환. 2015. “한국 고등교육 팽창의 한계: 대학교육성과의 양극화.” 『사회사상과문화』 18(3):139-186.
김명수. 2020. 『내 집에 갇힌 사회: 생존과 투기 사이에서』. 창비.
김보민·조대연·최형재. 2018. “졸업 유예의 취업 및 임금효과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21(2):119-156.
김복순·정현상. 2016. 『2016 KLI 비정규직 통계』. 한국노동연구원.
김석호. 2018. “한국 사회의 세대 간 공정성.” 『지식의 지평』 25:6-23.
김석호·주윤정·성연주·김지애·김은지·이상규·김홍중. 2017. “한국 청년세대의 꿈-자본 측정.” 『문화와 사회』 24:289-331.
김선기. 2019. 『청년팔이 사회』. 오월의봄.
김소라. 2007. “고학력 비혼여성의 독신문화에 관한 연구: 새로운 생애단계의 사회적 구성.”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김영·황정미. 2013. ““요요 이행”과 “DIY 일대기”: 이행기 청년들의 노동경험과 생애서사에 대한 질적 분석.” 『한국사회』 14(1):215-260.
김영미. 2010. “자본주의 다양성 관점에서 본 젠더와 계급의 교차성.” 『한국여성학』 26(3):65-89.
_____. 2012. “동아시아 가구고용형태의 다양성: 한국, 일본, 대만 비교 연구.” 『여성학논집』 29(2):107-137.
_____. 2016. “계층화된 젊음: 일, 가족형성에서 나타나는 청년기 기회불평등.” 『사회과학논집』 47(2): 27-52.
김영미·계봉오. 2015. “이행의 계곡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여성의 고용과 출산에

관한 성평등적 접근.”『한국여성학』31(3):1-30.
김영미·한준. 2008. “내부노동시장의 해체인가 축소인가: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분해를 통해 본 한국노동시장의 구조 변동, 1982-2004.”『한국사회학』42(7):111-145.
김영화. 1993.『한국의 교육불평등: 고등교육 팽창의 과정과 결과』. 교육과학사.
_____. 2000.『한국의 교육과 사회』. 교육과학사.
_____. 2015.『한국 산업화 시기의 교육과 경제성장』. 교육과학사.
김유선. 2001a.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와 실태.”『노동사회』54:98-102.
_____. 2001b.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결과.”『노동사회』59:127-159.
_____. 2014a. “노동통계와 노동정책: 사업체 규모와 기업체 규모별 고용비중 차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2014-16호). pp. 1-4.
_____. 2014b.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14년 3월 현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2014-19호). pp. 1-14.
_____. 2018.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8.8) 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101:1-34.
김은정. 2015. “부모 자녀 관계를 통해서 본 20대 청년층의 성인기 이행 과정 연구.”『가족과 문화』27(1):69-116.
김은지·송효진·배호중·선보영·최진희·황정미. 2019.『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 연구(Ⅰ): 청년층의 젠더화된 생애전망과 정책정합도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이선·박경숙. 2019. “한국 여성의 생애: 갈등적 성별화와 계층화.”『경제와사회』122:138-170.
김이선·한신갑. 2014. “나이테 다시 그리기: 사회적 역할에 따른 연령구분의 재설정.”『한국사회학』48(4):1-22.
김이선·이상직·권현지. 2019. “위기 속 노동시장 진입 세대의 노동이동을 통해 본 위기 후 한국 여성노동시장.”『한국여성학』35(1):1-37.
김정훈·심나리·김항기. 2019.『386 세대유감』. 웅진지식하우스.
김종엽. 2003. “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경제와사회』59:55-77.
_____. 2007, “우리에게 해체할 평준화가 남아 있는가?”『사회비평』37:190-203.
_____. 2009. “교육에서의 87년체제: 민주화와 신자유주의 사이에서.”『경제와사회』84:40-69.
김진주·조민효. 2016. “대졸 미취업자의 노동시장 이행유형 분석.”『현대사회와 행정』26(4):35-65.

김현주. 2013.『입시가족: 중산층 가족의 입시 사용법』. 새물결.
김혜경. 2013. “부계 가족주의의 실패?: IMF 경제위기 세대의 가족주의와 개인화.” 『한국사회학』 47(2):101-141.
김홍중. 2009. “진정성의 기원과 구조.” 『한국사회학』 43(5):1-29.
_____. 2015a.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마음의 사회학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49(1):179-212.
_____. 2015b. “꿈에 대한 사회학적 성찰: 부르디외와 벤야민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08: 32-72.
_____. 2016.『사회학적 파상력』. 문학동네.
나임윤경. 2005.『여자의 탄생』. 웅진지식하우스.
나카무라 타카야스(中村高康). 2005. “일본의 교육시스템과 교육열.” 이종각 편.『한국의 교육열, 세계의 교육열: 해부와 대책』. 도서출판 하우. (pp. 401-426)
남재량·김세움. 2013.『우리나라의 청년 니트(NEET)의 특징 및 노동시장 성과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남찬섭. 2002.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에 대한 경험적 연구: 에스핑-앤더슨의 기준을 중심으로.” 『상황과복지』 11:163-202.
남춘호·남궁명희. 2012. “생애과정의 탈표준화 경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 성인기 이행의 구조변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0(2):91-128.
도어, 도날드(Dore, Ronald). 1992[1976]. 『졸업장 열병』(The Diploma Disease: Education Qualification and Development). 이건만·김성한 옮김. 양서원.
도재형. 2016.『노동법의 회생: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한국 노동법』.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라이시, 로버트(Reich, Robert B.) 2001[2000].『부유한 노예』(The Future of Success). 오성호 옮김. 김영사.
레빈슨, 대니얼·샤롯 다로우·에드워드 클레인(Levinson, Daniel J., Charlotte N. Darrow, and Edward B. Klein). 2003[1978].『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The Seasons of a Man’s Life). 김애순 옮김.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류기락. 2009. “일자리 이동과 내부노동시장: 한국노동패널(1998~2005)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3(4):37-76.
마강래. 2016.『지위경쟁사회: 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불행해지는가?』. 개마고원.
만하임, 칼(Mannheim, Karl). 2013[1928].『세대 문제』(Das Problem der Generationen). 이남석 옮김. 책세상.
문정주·최율. 2019. “배제의 법칙으로서의 입시제도: 사회적 계층 수준에 따른 대학

입시제도 인식 분석.”『한국사회학』53(3):175-215.
문혜진. 2010. “생애과정 관점에 대한 고찰과 적용: 성인으로의 이행과정에 대한 탐색적 분석.”『사회복지연구』41(3):349-378.
_____. 2013. “외환위기 전후 청년 코호트의 노동경력 비교.”『한국사회복지학』65(1):201-226.
민현주. 2008. “여성 취업의 두 갈래 길: 상위와 하위 수준 일자리 진입 결정 요인을 중심으로.”『경제와사회』78:223-255.
박경숙·김영혜. 2003. “한국 여성의 생애 유형: 저출산과 M자형 취업곡선에의 함의.”『한국인구학』26(2):63-90.
_____. 2005. “생애를 통해서 본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역할의 의미: 부산지역 여성의 구술 분석을 중심으로.”『경제와사회』68:133-160.
박경숙·김영혜·김현숙. 2005. “남녀 결혼시기 연장의 주요 원인: 계층혼, 성역할분리 규범, 경제조정의 우발적 결합.”『한국인구학』28(2):33-62.
박동열·이무근·마상진. 2016.『광복 70년의 직업교육 정책 변동과 전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미희·홍백의. 2014.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과 그 결정요인.”『사회복지정책』41(4):21-49.
박병영·김미란·김기헌·류기락. 2010.『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 연구(Ⅲ): 교육계층화와 사회이동 추이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_____. 2011.『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 연구(Ⅳ): 1976-1986년 출생집단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박성재. 2014.『고졸자 초기 경력형성에 관한 연구: 1965~79년생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박재현. 2015. “1차 가족계획.” 박재현·김형재 편.『확률가족』. 마티. (pp. 57-78)
박재흥. 2005.『한국의 세대문제: 차이와 갈등을 넘어서』. 나남출판.
박준식. 2001.『세계화와 노동체제』. 한울.
박찬임. 2008. “소득과 소비 부문의 주요 변화.”『한국의 사회동향 2008』. 통계청. (pp. 114-122)
박찬종. 2014. “한국 부채경제의 정치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박천수. 2009. “대학생의 해외 어학연수가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직업능력개발연구』12(1):117-139.
박해천. 2013.『아파트 게임: 그들이 중산층이 될 수 있었던 이유』. 휴머니스트.

_____. 2015. “아파트-중산층-핵가족, 그 이후의 세계.” 박재현·김형재 편. 『확률가족』. 마티. (pp. 4-9)
박현준·김경근. 2011. “한국 사회의 교육적 동질혼 : 시계열 추세 및 그 함의.” 『교육사회학연구』 21(3):51-76.
_____.. 2012. “한국 사회의 교육적 동질혼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2(4):113-139.
박환보·김성식. 2011. “개인배경, 취업준비노력, 대학서열유형이 대졸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1(3):77-98.
방하남·김기헌. 2002. “기회와 불평등: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한국사회학』 36(4):193-222.
배은경. 2009. “‘경제 위기’와 한국 여성: 여성의 생애전망과 젠더 계급의 교차.” 『페미니즘 연구』 9(2):39-82.
_____. 2015. “‘청년 세대’ 담론의 젠더화를 위한 시론: 남성성 개념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8(1):7-41.
백욱인. 2008. “한국 소비사회 형성과 정보사회의 성격에 관한 연구.” 『경제와사회』 77:199-225.
베커, 게리(Becker, Gary S). 1994[1981]. 『가족경제학』(A Treatise on the Family). 생활경제연구모임 옮김. 한터.
벡, 울리히(Beck, Ulrich). 1997[1986].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Risikogesellschaft: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홍성태 옮김. 새물결.
_____. 1999[1999]. 『아름답고 새로운 노동세계』(Schone neue Arbeitswelt). 홍윤기 옮김. 생각의 나무.
벡, 울리히·엘리자베트 벡-게른스하임(Beck, Ulrich and Elisabeth Beck-Gernsheim). 1997[1990].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Das ganz normale Chaos der Liebe). 강수영·권기돈·배은경 옮김. 새물결.
_____. 2002. Individualization: Institutionalized Individualism and Its Social and Political Consequences. Sage.
벡-게른스하임, 엘리자베트(Beck-Gernsheim, Elisabeth). 2005[2001]. 『가족 이후에 무엇이 오는가?』(Was kommt nach der Familie?). 박은주 옮김. 새물결.
변금선. 2018.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계층화: 1970-80년대 출생코호트의 청년기 노동궤적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70(3):113-137.
부동, 레이몬드(Boudon, Raymond). 1983[1977]. “교육과 사회이동: 구조적 모델.” J. 카라벨·A. H. 할제이 편. 『교육과 사회구조: 교육사회학의 이론과 실제』(Power and Ideology in Education). 강순원 옮김. 한울. (pp. 181-200)

부르디외, 삐에르(Bourdieu, Pierre). 1995[1979].『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La Distinction: Critique Sociale de Jugement). 최종철 옮김. 새물결.

_____. 2004[1984].『사회학의 문제들』(Questions de Sociologie). 신미경 옮김. 동문선.

사사노 미사에(笹野美佐恵). 2017. “전후 일본 청년 세대 담론과 생애 변화의 세대별 분석: 삶의 제도화, 표준화, 그리고 다양화.”『일본연구』72:37-64.

서동진. 2009.『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신자유주의 한국사회에서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탄생』. 돌베개.

세넷, 리차드(Sennett, Richard). 2001[1998].『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The Corrosion of Character: The Personal Consequences of Work in the New Capitalism). 조용 옮김. 문예출판사.

성재민. 2011. “근로형태 부가조사를 통해 본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추이(Ⅱ).”『노동리뷰』81:52-70.

_____. 2015.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나타난 비정규직 현황과 추세: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교를 중심으로.” 홍민기 외.『노동패널자료 연구(Ⅰ): 패널자료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pp. 33-45)

손준종. 1995. “한국 고등교육팽창에 대한 교육사회학적 분석.”『교육사회학연구』5(1):37-52.

송제숙(Song, Jesook). 2016[2009].『복지의 배신』(South Koreans in the Debt Crisis: The Creation of a Neoliberal Welfare Society). 추선영 옮김. 이후.

송호근. 1990. “머리말.” 송호근 편.『노동과 불평등: 노동시장의 사회학 2』. 나남.

스콧, 조앤·루이스 틸리(Scott, J. W. and L. A. Tilly). 2008[1987].『여성, 노동, 가족』(Women, Work and Family). 장경선·박기남·김영 옮김. 후마니타스.

신광영. 2013.『한국 사회 불평등 연구』. 후마니타스.

신윤정·박신아. 2018. “배우자 간 학력 격차 변화와 결혼 선택: 출생코호트별 중심으로.”『보건사회연구』38(4):431-464.

심재휘·김경근. 2015. “대졸 청년층의 초기 노동시장 성과 영향요인 분석: 대학 재학기간을 중심으로.”『한국교육학연구』21(1):113-138.

아리타 신(有田伸). 2005. “직업의식과 교육열의 한일 비교연구.” 이종각 편.『한국의 교육열, 세계의 교육열: 해부와 대책』. 도서출판 하우. (pp. 427-451)

_____. 2007. “지위 달성과 선발 시스템의 한일 비교.”『수행인문학』37(2): 73-93.

아마노 이쿠오(天野郁夫). 1992[1982].『교육과 선발』(教育と選抜). 석태종·차갑부 옮김. 양서원.

안선영·김희진. 2012. “성인의 기준에 대한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성인의 인식 비교.” 『미래청소년학회지』 9(4):75-97.

야마다 마사히로(山田昌弘). 2004[1999]. 『패러사이트 싱글의 시대』(パラサイト・シングルの時代). 김주희 옮김.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양재진. 2003. “노동시장 유연화와 한국 복지국가의 선택: 노동시장과 복지제도의 비정합성 극복을 위하여.” 『한국정치학보』 37(3):403-428.

양종민. 2017. “신사회적 위험과 복지국가 재구조화 연구, 1985-2010.”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엄기호. 2014. 『단속사회』. 창비.

에릭슨, 에릭(Erikson, Erik H). 2014[1950]. 『유년기와 사회』(Childhood and Society). 송제훈 옮김. 연암서가.

에스핑-안데르센, 요스타(Esping-Andersen, G). 2007[1990]. 『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박시종 옮김. 성균관대학교출판부.

_____. 2007[1999]. 『복지체제의 위기와 대응: 포스트 산업경제의 사회적 토대』(Social Foundation of Postindustrial Economies). 박시종 옮김. 성균관대학교출판부.

_____. 2014[2009]. 『끝나지 않은 혁명: 성 역할의 혁명, 고령화에 대응하는 복지국가의 도전』(Incomplete Revolution: Adapting to Women’s New Roles). 주은선·김영미 옮김. 나눔의집.

에이블먼, 낸시(Abelmann, Nancy). 2014[2003]. 『사회이동과 계급, 그 멜로드라마: 미국 인류학자가 만난 한국 여성들의 이야기』(The Melodrama of Mobility: Women, Talk, and Class in Contemporary South Korea). 강신표·박찬희 옮김. 일조각.

영, 마이클(Young, Michael). 2020[1994]. 『능력주의』(Meritocracy). 유강은 옮김. 이매진.

우석훈·박권일. 2007. 『88만원 세대』. 레디앙.

우선영. 2016. “4년제 대학생의 졸업 소요기간에 대한 영향 요인 검증.” 『교육행정학연구』 34(4):73-97.

우치다 타츠루(內田樹). 2013. 『하류지향』(下流志向). 김경옥 옮김. 민들레.

우해봉. 2009. “교육이 초혼 형성에 미치는 영향: 결혼 연기 혹은 독신?” 『한국인구학』 32(1):25-50.

우해봉·윤인진. 2008. “경쟁리스크 생존모형을 통한 청년층의 첫 일자리 획득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9(2):225-250.

유형근. 2012.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과 변형: 울산지역 대기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1987-2010.”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윤택림. 1996. “생활문화 속의 일상성의 의미: 도시 중산층 전업주부의 일상생활과 모성 이데올로기.”『한국여성학』12(2):79-117.
오욱환. 2000.『한국사회의 교육열: 기원과 심화』. 교육과학사.
오찬호. 2013.『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괴물이 된 이십대의 자화상』. 개마고원.
오치아이 에미코(落合惠美子). 2004[1994].『21세기 가족에게』. 이동원 옮김. 양서원.
은기수·박건·권영인·정수남. 2011.『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Ⅱ: 취약 위기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경숙. 2017.『시험국민의 탄생』. 푸른역사.
이광석·윤자형. 2018. “청년 대중서로 본 동시대 청년 담론의 전개 양상.”『언론과사회』26(2):77-127.
이동원·김문조·박영진·한인숙·박춘호·안병철·조성남·이시형·김재은. 1996.『대학입시와 한국가족』. 다산출판사.
이민경. 2020. “정시 확대를 둘러싼 대학입시 담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동향과전망』108:9-45.
이민아. 2013. “계획적 무자녀 가족: 한국 사회에서 아이 갖기의 의미와 가족주의의 역설.”『한국사회학』47(2):143-176.
이병희·장지연·윤자영·성재민·안선영. 2010.『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Ⅰ: 우리나라의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실태』. 한국노동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상직·김이선·권현지. 2018.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남녀 대졸자 노동이력으로 본 위기 전후 한국 청년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경제와사회』118:139-181.
이상호. 2005. “한국노동패널 5차년도 조사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한국노동패널 리서치브리프』1:1-8.
_____. 2008. “노동패널 10차년도 고용형태 부가조사의 개요 및 주요 결과.”『노동리뷰』43:60-76.
이성용. 2013. “교육수준에 따른 차별적 비혼구성비와 이혼구성비 분석: 1995~2010.”『한국인구학』36(4):1-24.
이수빈·최성수. 2020. “한국 대학들의 사회이동 성적표: 경제적 지위의 세대 간 이동과 유지에서 대학이 하는 역할.”『한국사회학』54(1):181-240.
이순미. 2014. “생애과정의 복합적 탈근대화와 가족화와 개인화의 이중적 과정: 1955-1974년 성인기 이행 배열분석을 중심으로.”『한국사회학』48(2):67-106.

_____. 2017. “노동경력과 가족경로 분석을 통해 본 청년기 연장의 젠더 차이.” 『한국여성학』 33(2):181-244.
이승욱·김은산. 2013. 『애완의 시대』. 문학동네.
이승윤·백승호·김미경·김윤영. 2017. “한국 청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비판사회정책』 54:487-521.
이왕원·김문조·최율. 2016. “한국사회의 계층귀속감과 상향이동의식 변화: 연령, 기간 및 코호트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50(5):247-284.
이왕원·최지은·최율. 2017. “대입시기 대학 및 전공에 대한 선택이 노동시장 진입에 미치는 영향.”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20(1):57-94.
이재경. 2003. 『가족의 이름으로: 한국 근대 가족과 페미니즘』. 또 하나의 문화.
이재경·나성은·조인경. 2012. “동아시아 기혼 여성의 성별분업에 관한 태도와 실천: 한국, 일본, 대만 비교 연구.” 『여성학논집』 29(2):139-173.
이재열. 1996. “여성의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의 상호연관성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인구학』 19(1):5-44.
이전이·유지현·강영민·박주호. 2017. “대학 졸업유예가 취업 및 임금에 미친 효과.” 『교육재정경제연구』 26(4):93-117.
이제민. 2017. 『외환위기와 그 후의 한국 경제』. 한울아카데미.
이지은. 2017. “한국노동패널조사: 직업력을 중심으로.” 제3회 KOSSDA 데이터페어(생애주기별 패널데이터) 발표문(9월 22일). (pp. 43-61) https://kossda.snu.ac.kr/component/lecture/datafair
이철승. 2017. “결합노동시장지위와 임금불평등의 확대(2004-2015).” 『경제와사회』 115:103-144.
_____. 2019. 『불평등의 세대』. 문학과지성사.
이필남. 2016. “대학생의 졸업 소요기간 분석: 개인, 대학, 노동시장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비교』 34(5):223-246.
_____. 2019. “대학생의 졸업 유예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교육재정경제연구』 28(3):1-27.
이희길. 2008. “국내 패널조사의 현황 분석.” 이희길 외. 『통계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 제고방안: 현장조사 및 표본추출을 중심으로』. 통계개발원. (pp. 7-89)
임홍택. 2018. 『90년생이 온다』. 웨일북.
장경섭. 2009. 『가족·생애·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창비.
_____. 2018. 『내일의 종언(終焉)?: 가족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 집문당.
장미혜·정해숙·마경희·김여진. 2011. 『성인기 이행의 성별차이 연구』. 한국청소년정

책연구원.
장상수. 1999a. “한국 사회의 교육수준별 혼인유형과 그 변화.” 『한국사회학』 33(2):417-448.
_____. 1999b. “학력이 노동시장 진입에 미치는 영향: 학교에서 첫 계급으로의 이행.” 『한국사회학』 33(4):751-787.
_____. 2000. “교육 기회의 불평등: 가족 배경이 학력 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4(3):671-708.
_____. 2001. 『한국의 사회이동』. 서울대학교출판부.
_____. 2008. “청년층의 학교-직장 이행.” 『한국사회학』 42(6):106-139.
_____. 2009. 『교육과 사회이동』. 도서출판 그린.
_____. 2015. “한국의 교육과 사회이동: 여성과 남성의 차이.” 『여성연구』 88(1):491-541.
장석준. 2011. 『신자유주의의 탄생』. 책세상.
장세훈. 2002. “도시화.” 김두섭·박상태·은기수 편. 『한국의 인구 1』. 통계청. (pp. 495-523)
장수명. 2009. “5.31 대학정책 분석: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77:9-47.
장지연. 1997. “출산을 전후한 시기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과 진입: 미국 기혼여성의 경우.” 『한국인구학』 20(2):5-42.
_____. 1998. “여성인구변동과 노동시장.” 『한국인구학』 21(2):5-36.
_____. 2001.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와 쟁점: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51:68-96.
_____. 2007. “중·고령자 노동시장의 구조와 노동이동.”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1:62-86.
장지연·이병희. 2013. “소득불평등 심화의 메커니즘과 정책 선택.”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3:71-109.
장지연·이혜정. 2008. “중·고령자의 근로생애 유형: 사건 계열분석기법을 이용한 취업력 분석.” 『노동리뷰』 6:76-86.
전광희. 2002. “출산력.” 김두섭·박상태·은기수 편. 『한국의 인구 1』. 통계청. (pp. 81-113)
전병유. 2018. “우리나라 노동시장 분절화의 구조와 시사점.” 『노동리뷰』 10:21-35.
전병유·신진욱 편. 2016. 『다중격차: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페이퍼로드.
전상진. 2018. 『세대 게임: ‘세대 프레임’을 넘어서』. 문학과지성사.
전순옥. 2004. 『끝나지 않은 시다의 노래』. 한겨레출판.

전희경. 2013. “1960~80년대 젠더-나이체제와 ‘여성’ 범주의 생산.” 『한국여성학』 29(3):41-79.
정근식. 2000. “한국의 근대적 시간 체제의 형성과 일상 생활의 변화 Ⅰ.” 『사회와역사』 58:161-197.
_____. 2005. “시간체제와 식민지적 근대성.” 『문화과학』 41:146-169.
정민우·이나영. 2011. “가족의 경계에 선 청년: 성별화된 독립과 규범적 시공간성.” 『경제와사회』 89:105-145.
정수남·권영인·박건·은기수. 2012. “‘청춘’ 밖의 청춘, 그들의 성인기 이행과 자아정체성: 빈곤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와사회』 12:35-103.
정수남·김정환. 2017. “‘잠재적 청년실업자’들의 방황과 계급적 실천.” 『문화와사회』 23:195-264.
정이환. 2003. “비정규 노동의 개념정의 및 규모추정에 대한 하나의 접근.” 정이환 외.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비정규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인간과복지. (pp. 67-104)
_____. 2007. “기업규모인가 고용형태인가: 노동시장 불평등의 요인 분석.” 『경제와사회』 73:332-441.
_____. 2011. 『경제위기와 고용체제: 한국과 일본의 비교』. 한울아카데미.
_____. 2013a. 『한국 고용체제론』. 후마니타스.
_____. 2013b. “기업내부노동시장의 변화, 1982~2007: 직종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7(5):209-240.
정이환·김영미·권현지. 2012. “동아시아 신흥 선진국의 여성고용: 한국과 대만 비교.” 『한국여성학』 34(2):147-181.
정준호. 2016. “한국 산업화의 특성과 글로벌 가치사슬.” 이병천·유철규·전창환·정준호 편.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불화와 공존』. 돌베개. (pp. 70-111)
정찬일. 2019. 『삼순이: 식모, 버스안내양, 여공』. 책과함께.
조귀동. 2020. 『세습 중산층 사회: 90년대생이 경험하는 불평등은 어떻게 다른가』. 생각의힘.
조영훈. 2001. “유교주의, 보수주의, 또는 자유주의?: 한국의 복지유형 검토.” 『한국사회학』 35(6):169-191.
조성재·이병훈·홍장표·임상훈·김용현. 2004. 『자동차산업의 도급구조와 고용관계의 계층성』. 한국노동연구원.
조순경. 1998. “경제 위기와 여성 고용 정치.” 『한국여성학』 14(2):5-33.
조원광. 2014. “한국 소비사회의 등장과 미시권력의 변화.” 『한국사회학』

48(1):133-172.
지주형. 2011.『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책세상.
최경수. 2001. “고용구조 파악을 위한 고용형태의 분류와 규모 추정.”『노동경제논집』24(2):95-123.
최규남. 2003.『한국 직업교육정책 연구』. 문음사.
최문한. 1974. “의무교육상의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일연구.”『교육논총』5:1-18.
최샛별. 2018.『문화사회학으로 바라본 한국의 세대 연대기』.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최선영. 2020. “한국 여성의 생애과정 재편과 혼인행동의 변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최선영·장경섭. 2004. “성 분업의 근대적 재구성: 한국 여성의 ‘가족형성기 탈취업’ 경향의 변화를 중심으로.”『사회연구』8:173-203.
_____. 2012. “압축산업화 시대 노동계급가족 가부장제의 물질적 모순: 남성생계부양자 노동생애 불안정성의 가족 전이.”『한국사회학』46(2):203-230.
최성수·이수빈. 2018. “한국에서 교육 기회는 점점 더 불평등해져 왔는가?: 부모 학력에 따른 자녀 최종학력 격차의 출생 코호트 추세.” 『한국사회학』52(4):77-113.
최수정. 2010. “기혼여성의 경력 패턴 유형 연구.”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박사학위논문.
최율·이왕원. 2015. “청년층 취업선호도와 노동시장 진입의 관계: 잠재집단분석과 생존분석을 통한 접근.”『한국사회학』49(5):1-44.
최종렬. 2017. “‘복학왕’의 사회학: 지방대생의 이야기에 대한 서사분석.”『한국사회학』51(1):243-293.
최지원·정진철. 2017. “청년층의 경력 유형 연구: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코호트의 비교.”『직업능력개발연구』20(2):25-60.
최태섭. 2013.『잉여사회』. 웅진지식하우스.
최효미. 2005. “KLIPS에 나타난 혼인상태 측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노동리뷰』10:92-104.
카르본, 준·나오미 칸(Carbonne, June and Naomi Cahn). 2016[2014].『결혼시장: 계급, 젠더, 불평등, 그리고 결혼의 사회학』(Marriage Markets: How Inequality is Remaking the American Family). 시대의창.
통계청. 2017a. “교육수준별 출생·사망·혼인·이혼 분석: 2000-2015년.” 통계청 보도자료 .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bSeq=&aSeq=360756&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접속일: 2018년 3월 16일)

통계청. 2017b.『통계로 본 광복 70년 한국사회의 변화: 해설편』. 진한엠앤비.

퍼롱, 앤디·프레드 카트멜(Furlong, Andy and Fred Cartmel). 2008[1997].『현대사회와 청소년(제2판)』(Young People and Social Change: New Perspectives). 강영배·손의숙·전명호·정철상 옮김. 박학사.

피시킨, 조지프(Fishkin, Joseph). 2016[2014].『병목사회: 기회의 불평등을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대안』(Bottlenecks: A New Theory of Equal Opportunity). 문예출판사.

하라 준스케(原純輔)·세이야마 가즈오(盛山和夫). 2000[1999].『일본의 사회계층』(社会階層: 豊かさの中の不平等). 한울.

하비, 데이비드(Harvey, David). 2007[2006].『신자유주의』(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최병두 옮김. 한울아카데미.

한경혜. 1993. "한국 남성의 성인기로의 전이 유형 변화."『사회와역사』39:121-171.

한국노동연구원. 2019a. "한국노동패널 1~20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9b. "2019 KLI 노동통계." 한국노동연구원.

한윤형·최태섭·김정근. 2011.『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 웅진지식하우스.

한준. 2001. "최적일치법을 이용한 남녀간 직업 배열의 분석."『노동경제논집』24(1):149-176.

한준·장지연. 2000. "정규/비정규 전환을 중심으로 본 취업력과 생애과정."『노동경제논집』23(특별호):33-53.

한지영. 2015. "우리나라 기업생태계: 대기업·중소기업 비중 분석."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슈페이퍼 통권 제214호.

함인희. 1999. "가족주기의 변화와 주부역할의 딜레마: 여성잡지 광고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가족과문화』11(2):47-72.

함인희. 2012. "사회경제적 위기와 중산층 가족의 품위 하락(Falling from Grace)."『한국학연구』43:531-569.

핫토리 다미오(服部民夫). 2007[2005].『개발의 경제사회학: 한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변동』(開発の経済社会学: 韓国の経済発展と社会変容). 유석춘·이사리 옮김. 전통과현대.

_____. 2006. "1980년대 한국의 사회경제적 변화: 한국에 있어 80년대는 어떤 시대

였나?" 김문조·핫토리 다미오 편. 『한국사회와 일본사회의 변용』. 아연출판부. (pp. 11-42)

_____. 2007. "한국과 일본의 노동시장구조 비교 연구: 1997년 경제위기 전후의 한국과 버블 붕괴 이후의 일본을 중심으로." 장달중·핫토리 다미오 편. 『한일 정치사회의 비교 분석』. 아연출판부. (pp. 299-327)

허드슨, 프레데릭(Hudson, Frederic M.). 2017[2000]. 『인생은 어떻게 작동되는가』(The Adult Years: Mastering the Art of Self-renewal). 김경숙 옮김. 사이.

헨더슨, 그레고리(Henderson, Gregory). 2000[1968]. 『소용돌이의 한국정치』(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박행웅·이종삼 옮김. 한울아카데미.

홍두승. 2005. 『한국의 중산층』. 서울대학교출판부.

홍찬숙. 2015. 『개인화: 해방과 위험의 양면성』.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황수경·양정승. 2002. "직업력 자료의 구성과 활용 가능성." 한국노동패널연구 워킹 페이퍼.

Abbott, Andrew. 1995. "Sequence Analysis: New Methods for Old Idea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1:93-113.

_____. 2016. *Processual Sociology*. Chicago University Press.

Abbott, A. and J. Forrest. 1986. "Optimal Matching Methods for Historical Sequences."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16:471-94.

Abbott, A. and A. Hrycak. 1990. "Measuring Resemblance in Sequence Data: An Optimal Matching Analysis of Musicians' Career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6:144-185.

Abbott, A. and A. Tsay. 2000. "Sequence Analysis and Optimal Matching Methods in Sociology: Review and Prospec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9:3-33.

Acock, Alan C. 2016. *A Gentle Introduction to Stata* (Fith edition). Stata Press.

Aisenbrey, S. and A. E. Fasang. 2010. "New Life for Old Ideas: The "Second Wave" of Sequence Analysis Bringing the "Course" Back Into the Life Course."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38(3):420-462.

_____. 2017. "The Interplay of Work and Family Trajectories over the Life Course: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in Comparis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22(5):1448-1484.

Aldenderfer, M. S. and R. K. Blashfield. 1984. *Cluster Analysis*. Sage University Papers Series. Quantitative Ap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

Allmendinger, Jutta. 1989. "Educational Systems and Labor Market Outcom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5(3):231-250.

Alon, Sigal. 2009. "The Evolution of Class Inequality in Higher Education Competition, Exclusion and Adapt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4(5): 731-755.

Anderson, Michael. 1985. "The Emergence of the Modern Life Cycle in Britain." *Social History* 10(1):69-87.

Andres, Lesley and Johanna Wyn. 2010. *The Making of a Generation: The Children of the 1970s in Adulthood*. University of Toronto Press.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469-480.

Bartholomew, D. J., F. Steele, J. Galbraith and I. Moustaki. 2008. *Analysis of Multivariate Social Science Data* (2nd ed.). CRC Press.

Becker, Gary S. 1962.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0(5):9-49.

Becker, H. 1997[1963]. *Outsiders*. Free Press.

Berger, Peter A., Peter Steinmuller, and Peter Sopp. 1993. "Differentiation of Life-Course?: Changing Patterns of Labour-Market Sequences in West Germany."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9(1):43-65.

Bertrand, Marianne, Patricia Cortes, Claudia Olivetti, and Jessica Pan. 2016. "Social Norms, Labor Market Opportunities, and The Marriage Gap for Skilled Women."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22015. http://www.nber.org/papers/w22015

Bertaux, Daniel (ed.). 1981. *Biography and Society: The Life History Approach in the Social Sciences*. Sage.

Bertaux, Daniel and Paul Thompson. 1997. "Introduction," Pp. 1-31 in *Pathways to Social Class: A Qualitative Approach to Social Mobility*, edited by Daniel Bertaux and Paul Thompson. Oxford University Press.

Billari, Francesco C. and Aart C. Liefbroer. 2010. "Toward a New Pattern of Transition to Adulthood."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15:59-75.

Blau, Peter M. and Otis Dudley Duncan. 1967.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John Wiley & Sons.

Brambor, Thomas, William Roberts Clark and Matt Golder. 2006. "Understanding Interaction Models: Improving Empirical Analyses." *Political Analysis* 14(1):63-82.

Breen, R. and M. Buchmann. 2002. “Institutional Variation and the Position of Young People: A Comparative Perspective.”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80(1):288-305.

Breen, Richard, Kristian Bernt Karlson, and Anders Holm. 2018. “Interpreting and Understanding Logits, Probits and Other Non-Linear Probability Models.” *Annual Review of Sociology* 44:1-16.

Brinton, Mary C. 2010. *Lost in Transition: Youth, Work, and Instability in Postindustrial Jap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Brinton, Mary C. and Lee Sun-haw. 2001. “Women’s Education and the Labor Market in Japan and South Korea.” Pp. 125-150 in *Women’s Working Lives in East Asia*, edited by Mary C. Brinton. Stanford University Press.

Bruckner, Hannah and Karl Ulrich Mayer. 2005. “De-Standardization of the Life Course: What It Might Mean? And If It Means Anything, Whether It Actually Took Place?”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9:27-53.

Brzinsky-Fay, C. and U. Kohler. 2010. “New Developments in Sequence Analysi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38(3):359-364.

Brzinsky-Fay, C., U. Kohler and M. Luniak. 2006. “Sequence Analysis with STATA.” *Stata Journal* 6(4):435-460.

Buchmann, M. C. 1989. *The Script of Life in Modern Society: Entry into Adulthood in a Changing Worl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Buchmann, M. and Irene Kriesi. 2011. “Transition to Adulthood in Europe.” *Annual Review of Sociology* 37:481-503.

Chang, Kyung-Sup and Song Min-Young. 2010. “The Stranded Individualizer under Compressed Modernity: South Korean Women in Individualization without Individualism.”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1(3):539-564.

Cho, Sungik and Choi Yool. 2017. “Convergent or Divergent? The Hiiden Dynamics of Institutional Changes in the Labor Markets and Social Welfare Systems in South Korea and Japan.” *Politics and Policy* 45(4):594-625.

Choi, Yool. 2015. “The Effects of English Training Abroad on Labor Market Outcomes in Korea.”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41:11-24.

_____. 2018. “Student Employment and Persistence: Evidence of Effect Heterogeneity of Student Employment on College Dropout.”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41:11-24

Chung, Inkwan and Park Hyunjoon. 2019. "Educational Expansion and Trends in Intergenerational Social Mobility among Korean Men." *Social Science Research* 83:1-15.

Colman, James. 1961. *The Adolescent Society*. Free Press.

Colman, Janmes et al. 1966.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https://eric.ed.gov/?id=ED012275

Cook, Julia Anne. 2018. "Gendered Expectations of the Biographical and Social Future: Young Adults' Approaches to Short and Long-term Thinking." *Journal of Youth Studies* 21(10):1376-1391.

Corcoran, Mary and Jordan Matsudaira. 2005. "Is It Getting Harder to Get Ahead? Economic Attainment in Early Adulthood for Two Cohorts." Pp. 356-395 in *On the Frontier of Adulthood: Theory, Research, and Public Policy*, edited by Richard A. Settersten Jr., Frank F. Fursttenberg Jr., and Ruben G. Rumbau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orijn, M. and E. Klijzing (eds.). 2001. *Transitions to Adulthood in Europe*. Springer.

Cornwell, B. 2015. *Social Sequence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Demos, John. 1986. *Past, Present, and Personal: The Family and Life Course in American History*. Oxford University Press.

Dijkstra, W. and T. Taris. 1995. "Measuring the Agreement between Sequence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4:214-231.

DiPrete, Thomas A. 2002. "Life Course Risks, Mobility Regimes, and Mobility Consequences: A Comparison of Swede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8(2):267-309.

Doherty, Elaine Eggleston, John H. Laub and Robert J. Sampson. 2009. "Group-Based Trajectories in Life Course Criminology." Pp. 187-210 in *The Craft of Life Course Research*, edited by Glen H. Elder, Jr. and Janet Z. Giel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Elder, Glen H., Jr. 1998[1974]. *Children of Great Depression: Social Change in Life Experience* (25th Anniversary Edition). Westview Press.

_____. 1985. "Perspectives on the Life Course." Pp. 23-50 in *Life Course Dynamics: Trajectories and Transitions, 1968-1980*, edited by Glen H. Elder, Jr.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_____. 1994. “Time, Human Agency, and Social Change: Perspectives on the Life Cours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7(1):4-15.

_____. 1998. “The Life Course as Developmental Theory.” *Child Development* 69(1):1-12.

Elder, Glen H., Jr., Monika Kirkpatrick Johnson, and Robert Crosnoe. 2003.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Life Course Theory.” Pp. 3-19 in *Handbook of the Life Course*, edited by Jeylan T. Mortimer and Michael J. Shanahan.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Elfring, Tom. 1989. “New Evidence of the Expansion of Service Sector in Advanced Economie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35(4):409-440.

Elzinga, C. H. and A. C. Liefbroer. 2007. “De-standardization of Family-Life Trajectories of Young Adults: A Cross-National Comparison using Sequence Analysi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3:225-250.

Eurofound. 2014. *Mapping Youth Transitions in Europe*.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Furlong, Andy, Dan Woodman, and Johanna Wyn. 2011. “Changing Time, Changing Perspectives: Reconciling ‘Transition’ and ‘Cultural’ Perspectives on Youth and Young Adulthood.” *Journal of Sociology* 47(4):355-370.

Furstenberg, Frank F. Jr. 2003. “The Future of the Life Course: On a Path toward Inequality,” Pp. 661-670 in *Handbook of the Life Course*, edited by J. T. Mortimer and M. J. Shanahan. New York: Plenum.

Furstenberg, Frank F. Jr., Ruben G. Rumbaut, and Richard A. Settersten Jr. 2005. “On the Frontier of Adulthood: Emerging Themes and New Directions.” Pp. 3-25 in *On the Frontier of Adulthood: Theory, Research, and Public Policy*, edited by Richard A. Settersten Jr., Frank F. Furstenberg, and Ruben G. Rumbau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George, L. K. 2003. “The Future of the Life Course: Late Modernity and Life Course Risks,” Pp. 671-680 in *Handbook of the Life Course*, edited by J. T. Mortimer and M. J. Shanahan. New York: Plenum.

Giele, Janet Z. 1998. “Innovation in the Typical Life Course.” Pp. 231-263 in *Methods of Life Course Researc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edited by Janet Z. Giele and Glen H. Elder Jr. Sage.

Gerson, Kathleen. 2010. *The Unfinished Revolution: Coming of Age in a New Era of*

*Gender, Work, and Family*. Oxford University Press.

Goldin, Claudia. 2006. "The Quiet Revolution That Transformed Women's Employment, Education, and Family." *American Economic Review* 96(2):1-21.

Halpin, B. 2017. "SADI: Sequence Analysis Tools for Stata." *Stata Journal* 17(3):546-572.

Hamilton, Stephen F. 1990. *Apprenticeship for Adulthood: Preparing Youth for the Future*. New York: Free Press.

Han, Shin-Kap and Phyllis Moen. 1999. "Clocking Out: Temporal Patterning of Retire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1):191-236.

Hareven, Tamara K. 1975. "Family Time and Industrial Time: Family and Work in a Planned Corporation Town, 1900-1924." *Journal of Urban History* 1(3):365-389.

Hill, Martha S. and W. Jean Yeung. 1999. "How has the Chnaging Structure of Opportunities Affected Transitions to Adulthood?" Pp. 3-39 in *Transitions to Adulthood in a Changing Economy: No Work, No Family, No Future?*, edited by A. Booth, Ann C. Crouter, and Michael J. Shanahan. Praeger.

Hogan, Dennis P. 1981. *Transitions and Social Change: The Early Lives of American Men*. Academic Press.

Hogan, Dennis P. and Nan Marie Astone. 1986. "The Transition to Adulthood." *Annual Review of Sociology* 12:109-130.

Hollister, M. 2009. "Is Optimal Matching Suboptimal?"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38:235-264.

Iannelli, C. and E. Smyth. 2008. "Mapping Gender and Social Background Differences in Education and Youth Transitions across Europe." *Journal of Youth Studies* 11(2):213-232.

Irwin, Sarah. 1995. *Rights of Passage: Social Change and the Transition from Youth to Adulthood*. Routledge.

Jones, Catherine. 1993. "The Pacific Challenge: Confucian Welfare States," Pp. 198-217 in *New Perspectives on the Welfare State in Europe*, edited by C. Jones. Routledge.

Kerckhoff, Alan C. 1995.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Stratification Processes in Industrial Societi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15:323-347.

Kertzer, David I. 1983. "Generation as a Sociological Problem." *Annual Review of Sociology* 9(1):125-149.

Kim, Doo Hwan and Choi Yool. 2015. “The Irony of the Unchecked Growth of Higher Education in South Korea: Crystallization of Class Cleavages and Intensifying Status Competition.” *Development and Society* 44(3):435-463.

Kim, Keuntae. 2017. “The Changing Role of Employment Status in Marriage Formation among Young Korean Adults.” *Demographic Research* 36(5):145-172.

Kim, Seokho, Kim Hongjung, Lee Sangkyu, Kim Eunji, Gowen Ohjae. 2018. “Lack of Dream-Capital among Korean Youths: Rationally Chosen or Culturally Forbidden?” *Development and Society* 47(3):347-370.

Kwon, Tai-Hwan. 2007. “Trends and Implications of Delayed and Non-Marriage in Korea.” *Asian Population Studies* 3(3):223-241.

Kohli, Martin. 2009[1986]. “The World We Forgot: A Historical Review of the Life Course.” Pp. 64-90 in *The Life Course Reader: Individuals and Societies across Time*, edited by Walter R. Heinz, Johannes Huinink, and Ansgar Weymann. Campus Verlag, GmbH, Frankfurt/Main.

Lee, Byoung-Hoon and Kwon Hyunji. 2007. “Non-regular work in Korea,” Pp. 249-274 in *Globalisation and Work in Asia*, edited by John Burgess and Julia Connell. Elsevier Science & Technology.

Lesnard, L. 2010. “Cost Setting in Optimal Matching to Uncover Contemporaneous Socio-Temporal Pattern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38(3):389-419.

Lesthaeghe, Ron. 2014.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A Concise Overview of its Development.” *PNAS* 111(51):18112-18115.

Liefbroer, Aart C. 2009[1999]. “From Youth to Adulthood: Understanding Changing Patterns of Family Formation From a Life Course Perspective.” Pp. 311-337 in *The Life Course Reader: Individuals and Societies across Time*, edited by Walter R. Heinz, Johannes Huinink, and Ansgar Weymann. Frankfurt, Campus-Verlag.

Lucas, Samuel R. 2001. “Effectively Maintained Inequality: Education Transitions, Track Mobility, and Social Background Effec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6(6):1642-1690.

MacDonald, R. 2011. “Youth Transitions, Unemployment and Underemployment: Plus ca change, plus c’est la meme chose?” *Journal of Sociology* 47(4):427-444.

McRobbie, A. 2007. “Top Girls?” *Cultural Studies* 21(4):718-737.

McVicar, D., and M. Anyadike-Danes. 2002. “Predicting Successful and Unsuccessful Transitions from School to Work Using Sequence Method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A)* 165:317-334.

Macmillan, Ross. 2005. "The Structure of the Life Course: Classic Issues and Current Controversies."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9:3-24.

Marteau, P. F. 2009. "Time Warp Edit Distance with Stiffness Adjustment for Time Series Matching."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31(2):306-318.

Matza, David. 1969. *Becoming Deviant*. Prentice Hall.

Mayer, K. U. 2004. "Whose Lives? How History, Societies, and Institutions Define and Shape Life Courses." *Research in Human Development* 1(3):161-187.

_____. 2005. "Life Courses and Life Chances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Pp. 17-55 in *Analyzing Inequality: Life Chances and Social Mobility in Comparative Perspective*, edited by Stefan Svallfors. Stanford University Press.

Modell, John. 1989. *Into One's Own: From Youth to Adulthood in the United States 1920-1975*.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Modell, John, Frank F. Furstenberg, Jr., and Theodore Hershberg. 1976. "Social Change and Transitions to Adulthood in Historical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History* 1:7-31.

Muller, Walter and Yossi Shavit. 1998. "The Institutional Embeddedness of Stratification Process: A Comparative Study of Qualifications and Occupations in Thirteen Countries," Pp. 1-48 in *From School to Work: A Comparative Study of Educational Qualifications and Occupational Destinations*, edited by Yossi Shavit and Walter Muller. Oxford; Clarendon Press.

Musgrove, Frank. 1965. *Youth and the Social Order*.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12. "Improving the Measurement of Socioeconomic Status for the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A Theoretical Foundation." National Assessment Governing Board.

Nishimura, Junko and Kwon Hyunji. 2016. "Divergence in Women's Employment in Korea and Japan: What Shapes the Different Patterns around Childbirth?" *Development and Society* 45(3):467-502.

Ogburn, William. 1922. *Social Change with respect to Culture and Original Nature*. Viking.

Oh, Jihye, Lee Jae Kyung, and Woo Heyyoung. 2020. "Who gets Married?: Parents'

Household Income, Individual's Education, and Entry into Marriage in South Korea." Pp. 243-270 in *Korean Families Yesterday and Today*, edited by Park Hyunjoon and Woo Hyeoyung.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Park, Hyunjoon, Lee Jaekyung, and Jo Inkyung. 2013. "Changing Relationships between Education and Marriage among Korean Women."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7(3):51-76.

Pollock, Gary. 2007. "Holistic Trajectories: A Study of Combined Employment, Housing and Family Careers by Using Multiple-sequence Analysis." *Journal of Royal Statistics Society A* 170(part1):167-183.

Raffe, David. 2008. "The Concept of Transition System." *Journal of Education and Work* 21:277-296.

Raftery, Adrian E. and Michael Hout. 1993. "Maximally Maintained Inequality: Expansion, Reform, and Opportunity in Irish Education, 1921-75." *Sociology of Education* 66(1):41-62.

Raudenbush, Stephen W. 2001. "Comparing Personal Trajectories and Drawing Causal Inferences from Longitudinal Data."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501-525.

Riley, Matilda White. 1987. "On the Significance of Age in Sociolog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1):1-14.

Riley, Matilda White, Robert L. Kahn, and Anne Foner (eds.). 1994. *Age and Structural Lag: Society's Failure to Provide Meaningful Opportunities in Work, Family, and Leisure*. John Wiley & Sons.

Ryder, Norman B. 1965. "The Cohort as a Concept in the Study of Social Chan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0(6):843-861.

Sandefur, Gary D. and Park Hyunjoon. 2007. "Educational Expansion and Changes in Occupational Returns to Education in Korea."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25(4):306-322.

Schoon, Ingrid, Andy Ross, and Peter Martin. 2009. "Sequences, Patterns, and Variations in the Assumption of Work and Family-Related Roles: Evidence from Two British Birth Cohorts." Pp. 219-242 in *Transitions from School to Work: Globalization, Individualizaion, and Patterns of Diversity*, edited by Ingrid Schoon and Rainer K. Silbereisen. Cambridge University Press.

Seth, Michael J. 2002. *Education Fever: Society, Politics, and the Pursuit of Schooling in South Korea*. University of Hawai'i Press.

Shanahan, Micheal J. 2000. “Pathways to Adulthood in Changing Societies: Variability and Mechanisms in Life Course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667-692.

Shavit, Yossi and Hans-Peter Blossfeld. 1993. “Persistent Inequality: Changing Educational Attainment in Thirteen Countries,” Pp. 1-23 in *Persistent Inequality: Changing Educational Attainment in Thirteen Countries*, edited by Yossi Shavit and Hans-Peter Blossfeld. Boulder: Westview Press.

Sirnio, Outi, Timo M. Kauppinen, and Pekka Martikainen. 2017. “Intergenerational Determinants of Joint Labor Market and Family Formation Pathways in Early Adulthood.”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34:10-21.

Smith, C. 2011. *Lost in Transition: The Dark Side of Emerging Adulthood*. Oxford University Press.

Studer, Matthias. 2013. “WeightedCluster Library Manual: A Practical Guide to Creating Typologies of Trajectories in the Social Sciences with R.” *LIVES Working Papers* 24:1-32.

Tremmel, Joerg Chet (ed.). 2010. *A Young Generation Under Pressure?: The Financial Situation and the “Rush Hour” of the Cohorts 1970-1985 in a Generational Comparison*. Springer-Verlag Berlin Heidelberg.

Trow, M. 1974. “Problems in Transition from Elite to Mass Higher Education.” Policies for Higher Education. OECD.

Walther, Andreas. 2006. “Regimes of Youth Transitions: Choice, Flexibility and Security in Young People’s Experiences across European Contexts.” *Young* 14(2):119-139.

Warren, John Robert, Liying Luo, Andrew Halpern-Manners, James M. Raymo and Albert Palloni. 2015. “Do Different Methods for Modeling Age-Graded Trajectories Yield Consistent and Valid Resul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26(6):1809-1856.

Woo, Haebong and Yoon In-jin. 2010.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before and after the ’97 Korean Economic Crisis: Macroeconomic Context and Differential Impacts of Education.”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4(6):87-109

Woodman, Dan. 2009. “The Mysterious Case of the Pervasive Choice Biography: Ulrich Beck, Structure/Agency, and the Middling State of Theory in the Sociology of Youth.” *Journal of Youth Studies* 12(3):243-256.

_____. 2010. “Class, Individualisation and Tracing Processes of Inequality in a

Changing World: a reply to Steven Roberts." *Journal of Youth Studies* 13(6):737-746.

Wu, Lawrence L. 2000. "Some Comments on "Sequence Analysis and Optimal Matching Methods in Sociology: Review and Prospec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9(1):41-64.

Wyn, Johanna and Rob White. 1997. *Rethinking Youth*. Sage.

Yi, Zeng, Ansley Coale, Minja Kim Choe, Liang Zhiwu, and Liu Li. 1994. "Leaving the Parental Home: Census-based Estimates for China, Japan, South Korea, United States, France, and Sweden." *Population Studies* 48(1):65-80.

<Abstract>

# Transitions to Adulthood among Korean Youth Born 1970-1984: Education, Employment, and Relationships

Lee, Sang-Jic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Youth has attracted attention in South Korean (hereafter, Korean) society since the 2000s. Although there are various perspectives, they converge on the perception that the timing of transition to adulthood has been delayed and the transition process has become uncertain and arduous for the youth. There are two perspectives that explain these trends: generation theory and class theory. Generation theory emphasizes birth timing and focuses on the difference between generations. Youth had experienced school to work transition, as well as family transition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the late 1990s. They were unable to have a smooth transition as in the past. Class theory emphasizes the family background and focuses on the differences within a generation. These two perspectives briefly explain the lag of their transition. Both perspectives, however, need to be specified.

As class theory shows, not everyone has had difficulties during the transitions to adulthood. As generation theory shows, there should be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birth timing regardless of the socioeconomic status (SES). The important thing is to identify the context in which differences by birth cohort and socioeconomic status interact, such as how the influence of socioeconomic status differs depending on the birth timing, or how the influence of birth timing differs according to the socioeconomic status.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identify how the pattern in transitions to adulthood differs depending on gender. This study analyzes how gender and socioeconomic status, which define the path to adulthood, interconnect and how their interaction differs by

birth cohort.

This study has three research questions. Where are the major changes in the aspects of education, labor and family transitions that formulate the path to adulthood? The first research question examines the differences between sub-cohorts. How does the change differ by gender and socioeconomic status?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examines the differences within a cohort. How do these changes relate to the institutional context (school-work linkage and linkage of the production-reproduction system) and historical background (economic crisis in the late 1990s)?

To answer the first and second research questions, I developed a strategy to identify the differences between and within cohorts simultaneously. In order to identify the cohort differences, the present study examines the 1970-1984 birth cohort's path to adulthood. They transitioned to adulthood during the 1990-2010s, a period in which Korean society had rapidly changed. Within this cohort, we can see patterns in their transitions to adulthood with reliable data. To identify the changes, I compared the life course of five sub-cohorts (i.e., 1970-1972, 1973-1975, 1976-1978, 1979-1981, and 1982-1984). The axes set to identify the nature of change in transitions to adulthood among the sub-cohorts are gender and family background. The concept introduced to answer the third research question is the life course perspective. Borrowing the concept of transitions to adulthood, I identify the nature of the transition at key points (i.e., school, labor market, and family relationship) that define this phase and confirm its nature. The unit of analysis is the life history of a 1970-1984 cohort in their early twenties to mid-twenties (the mid-1990s to mid-2010s), which is comprised of work history and family history. The work history consists of a combination of the work status for 84 months (7 years) since graduating from high school, and the family history consists of a combination of living arrangements for six years from the ages of 28-33.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KLIPS) (1-20th waves) was used. The reason why the work history was composed of seven years (84 months) after graduation, and the family history for 28-33 years of age was largely due to data limitations. This time period was the maximum length that can be compared among the five sub-cohorts' transition history at a consistent point in tim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xperiences of the 1970-1984 cohort in terms of the education system are summarized as the univers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and the extension of school leaving age. In the 1970-1972 cohort, the

proportion of high school graduates was 50%. Similarly, in the 1982-1984 cohort, the proportion of college graduates was 50%. The group driving these changes was women born in the mid-to-late 1970s. As a result of the change, the experiences of men and women in education became similar. The differences in educational opportunities by socioeconomic status are maintained. However, there are changes. The school leaving age was led by men, mainly due to the instability of the educational experience of less educated men. There are also gender differences in terms of socioeconomic status' effects. In the case of high school graduation, the family background effect of both men and women has weakened. However, there is a difference maintained in the possibility of being a college graduate. For college graduation, men tend to have a weaker family background effect and women tend to have a stronger family background effect. In terms of graduation age, the family background effect has been linked to the delay in graduation since the 1979-1981 cohort graduated from high school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the late 1990s.

Second, in terms of the labor market, an important phenomenon during the 1990s-2010s was an increase of non-regular workers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with an increase in the labor force. The main changes occurred since the 1976-1978 cohort. This change consists of several sub-changes. The type of self-employment for men decreased, and *the type of labor market exit* for women decreased. The main changes are a decrease of *the type of labor market exit* for women of lower educational attainment and a decrease of *the type of non-employment career* in women of higher educational attainment. Instead, the type of regular and non-regular work in SMEs had increased. The former mainly appeared for men of lower educational attaintment and the latter for women of lower educational attaintment. The differences by education level increased and gender differences decreased. As a result, the gender differences appeared to shift from whether one would or would not participate in the labor market to which socioeconomic status one would achieve in the labor market. The differences by education level have also been maintained. The influence of the family background has increased overall. In the 1970-1972 cohort, family background had little influence. In the most recent cohort (1982-1984), however, the family background increases the likelihood of having a regular job career in a large company and lowers the likelihood of having a non-regular job career in a small company for men. Results for women are somewhat different. The family background lowers the likelihood of

having a non-employment career and increases the likelihood of having a regular job career in a small company. Although not significant, privileged background lowers the likelihood of having a regular job career in a large company.

Third, in terms of family transition, the proportion of the type of living with spouses and children decreased for those in their late 20s and early 30s. As the degree of change appeared greater in men, the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decreased overall. In the 1970-1972 cohort, men were more likely to be living with their parents or living alone, and less likely to be living with spouses and children. In the 1982-1984 cohort, however, men and women only differed in the possibility of marriage. The differences by education level is decreased for men and maintained for women. In terms of the work history, there is a tendency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upper group of work history type (type of a regular job career in a large company) and the rest groups of work history type increased. Women do not show consistent patterns. There are distinct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influence of family background. For men, the influence of the family background has strengthened in the possibility of living with spouses and children. For women, the influence of the family background is rather weak in all types of family history.

The following paragraphs are answers to the third research question, which integrates all of the results. First, the point of change in education, labor and family transition was found in the 1976-1978 cohort. Graduation was delayed, labor market status was unstable, and marriage was delayed after the 1976-1978 cohort. The details of the change, however, are not so simple. Second, the change pattern is largely summarized as the reduction in the gender differences and the persistence and reinforcement in differences with other aspects. It is appropriate, however, to view the difference in the effect of socioeconomic status not as a weakening or strengthening of inequality, but as a changing the characteristics of inequality. Third, the timing and characteristic of change in each transition phase can be interpreted as the result of the weakening of the link among education, labor and family systems. The equalization of formal opportunities in education due to the rapid expansion of education has met the trend of stratification in the labor market. Late graduation and unstable work positions have led to delays in the timing of marriage and stratification of the marital status. However, this is not necessarily seen as a stratification phenomenon. The reason why the influence of family background has been only increased for men is that the norm of gender role is still

very strong. In this regard, the change in the family transition path has both aspects of delaying the stratification among women and promoting stratification among men.

The present research has three implications. First, by describing the life history of the same cohort group in the fields of education, labor, and marriage, this study diverts the limited interest of existing research in each area (i.e., education, labor market, and family) to the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linkage of each area. This study focuses on the question, "What kind of relationship does the change in the level of education inequality have with the changes of opportunity in the labor market?" In this context, generation theory and class theory can be more concretely articulated. There are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birth timing. It does not, however, overpower all of the other factors. Gender differences weakened and socioeconomic differences became apparent. At the same time, the interconnecting points of gender and socioeconomic status continue to move.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interconnection of generation theory and class theory.

Second, this study can motivate us to reconsider the norms of adulthood. The transition to adulthood no longer means independence, but rather means social status reproduction. The transition process can even be considered as a field in which a subordinate reproduction strategy (i.e., transition to adulthood but unseparated from parents) works. In this context, the term "parasite couple" may be more appropriate for today's youth transition than that of "parasite single".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maintain the view of inexperience of some of the events as a "deferral" of transitions. Meanwhile, on the premise of 'transition = independence', previous studies tend to describe changes in the pattern of transition to adulthood in South Korea as a de-standardization of life course. The changes can be seen, however, as a result of intensified standardization.

Third, this study can motivate us to reconsider the perspective on the social inequality in South Korea. Although the interest in comprehensive and whole life opportunities is growing, researches still tend to analyze changes in the formal opportunity level in specific areas and with specific aspects. This study shows that formal opportunity equalization in a certain area can lead to strengthening inequality in another area. Not with the nature of inequality with changes in the average level, but with changes in arrangement of opportunity structures, we can ident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various bottlenecks of opportunities. Going beyond a one-dimensional assessment of

whether inequality has been intensified or not, this study looks at the link between institutional contexts, which defines the opportunity structure itself.

Key Words: life course, transition to adulthood, work history, familial history, KLIPS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social sequence analysis, social inequality, educational expansion, economic crisis (IMF), delayed marriage

Student Number: 2013-30045